

발간등록번호  
36-1580317-000432-10

강한 친구 대한민국 육군

第 122 輯

# 軍事研究

陸軍本部



# 軍事研究

陸軍本部





# 發 刊 辭



육군 발전과 영관급 이상 간부들의 전문지식 함양 및 능력 계발에 많은 기여를 해왔던 「軍事研究」誌는 1951년 「戰史」로 창간 이후 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훌륭한 선배전우들과 뜻있는 군사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나날이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軍事學術誌로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금번 第122輯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군사문제에 대하여 '05년(121집)부터 군사연구추진계획에 따라 사계 전문가들과 예비역 등 폭넓은 집필자들의 정성어린 玉稿로 전사분야를 增面하였으며 군사정책·전략·사상, 무기체계, 기타 군 관련 분야를 망라하여 전·후방지역 야전부대,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알차고 權威있는 軍事誌가 되고자 渾身の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軍事研究」誌가 육군 최고의 군사전문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投稿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육군의 軍事研究, 특히 戰史研究의 畚을 조성하고 간부들로 하여금 將次戰에 대비할 수 있는 잠재력 開發과 戰略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집필자 여러분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2006. 12.

軍史研究所長                      李                      雄                      熙

## ● 화 보

- 설맞이 “장병 및 어려운 이웃 격려행사” / 6
- 해외 파병부대 환송 및 격려 / 7
- 「육군 주요 지휘관 혁신 워크숍」 개최 / 8
- 「육군 정책자문회의」 개최 / 정책발전 도모 / 9
- 「계룡대 환경전시회」 개최 / 10
-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계룡대에서 / 11
- 주한 미군 주요직위자 초청행사 / 군사동맹 우의돈독 / 12
- 58주년 국군의 날 행사 / 강한 친구 대한민국 육군 / 13
- 지상군 페스티벌 2006 / 14
- Defense Asia 2006 / 15

## ● 군사동향

국제정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 19

## ● 특 집

- 육군 군사연구소의 개편과 전사연구 발전방향 / 37
- 조선시대 의병활동 연구와 군사연구소의 역할 / 59

## ● 전 사

- 6·25전쟁시 미 제24사단의 초기 지연작전 재조명 / 75
- 한국전쟁시 중공군의 제1·2차 공세 전역에 관한 재조명 / 102
- 6·25전쟁 초기 중국의 군사적 대응 / 136
- 한국전쟁시 공수부대작전 전례 / 165
- 임진왜란기 제2차 진주성전투와 조선관군의 전술 / 185
- 고려 강화천도기 향몽사적 교훈 분석 / 210

전투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본 2차 동학농민전역의 패인분석 / 238  
프랑스 전역시 구데리안 군단의 초기 작전 분석 / 271  
현대전쟁에 있어서 제한전 연구 / 298

## ● 군사정책/전략/사상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한반도 통일 / 325  
디지털 정보전 양상과 대응태세 방향에 대한 제언 / 349  
남북한 관계변화에 따른 대주변국 군사협력 방안 / 373  
선제공격전략의 이론적 고찰 / 398  
지상전술 C4체계(ATCIS) / 426  
「동국병감」에 나타난 전투현황과 전술형태분석 / 452  
한국 군사사상의 중요성과 연구 활성화 방안 / 476

## ● 무기체계

무기체계 분석평가 내실화 방안 / 499  
이라크 파병을 통해 얻은 교훈과 발전방향 제언 / 527

## ● 기 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국가안보 / 547  
동북공정에 대한 역사북벌론의 시의적절성에 대한 연구 / 571  
K-1전차는 과연 교량을 통과할 수 있나? / 595

## 01 설맞이 “장병 및 어려운 이웃 격려행사”



- ▶▶ 설을 맞이하여 인근 3개 보육원생 154명을 대상으로 의장대·군악대시범, 오찬 및 선물증정을 하고, 명예의 전당과 부대 내무실 견학, 민속놀이 등 보육원생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였으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은 격의 없이 동참함으로써 보육원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또한 장애인 및 희귀·난치병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간부들 중 신분별 대표자들을 육군본부로 초청하여 “사랑하는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묵묵히 함께하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라고 노고를 치하하며 가족의 쾌유를 기원하였다.



## 02 해외 파병부대 환송 및 격려



- ▶▶ 다산·동의부대 및 자이툰부대의 차질 없는 임무교대를 위해 현지 적응을 위한 파병 전 실무교육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 가능상황에 대한 대응요령과 행동절차를 숙달하는 등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문화와 관습 및 언어습관 등 현지작전에 차질 없도록 준비한 다산·동의부대 파병장병에게는 “자유와 평화의 사도”로서, 이라크 파병장병에게는 현지인 및 아르빌 지역정부와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통한 정성어린 “민사재건작전 수행”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현지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파병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 장병들을 격려했다.

## 03 「육군 주요 지휘관 혁신 워크숍」 개최



- ▶▶ 육군은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을 대상으로 육군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육군 주요 지휘관 혁신 워크숍」을 주관하였다. 그동안 국민에게 육군의 올바른 모습을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육군 브랜드 창출을 위해 연구해 왔으며, 「육군 혁신 아카데미」를 실시한 결과 전 간부의 혁신 마인드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04 「육군 정책자문회의」 개최 / 정책발전 도모



- ▶▶ 육군은 5월 16일 역대 육군참모총장들을 육군본부로 초청하여 최근 軍개혁 및 육군 혁신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공감대 형성 및 발전적 의견 청취를 위한 전반기 「육군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육군 정책자문회의의 목적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들어 정책발전을 도모하고자, 전·현직 총장 18명, 육본 일반참모부·실장, 인사 관련관 등 13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 이를 참고하여 육군 정책발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05 「계룡대 환경전시회」 개최



- ▶▶ 육군은 6월 7일 육군본부에서 주최하는 「계룡대 환경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이치범 환경부장관을 접견하고, 정부의 환경정책 및 육군의 환경보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육군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 환경 국가건설”이라는 국가 환경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하에 그동안 환경 기초시설을 보강하고 전문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등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특히 올해 4월 1일부로 각 군사령부 환경담당관실에 환경실무자 5명을 별도로 편성하여 환경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하였다.



## 06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계룡대에서



- ▶▶ 육군은 9월 6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 주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대회를 개최하여 국방부 및 각 軍의 혁신 우수사례 발표를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을 시작으로 특허청, 정통부 등 혁신 부처들간의 혁신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청와대 혁신수석실과 행정자치부의 지원에 의해 추진되는 행사로서, 정부의 혁신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토론회 및 행사, 혁신교육 등 육군 혁신활동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혁신과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07 주한 미군 주요직위자 초청행사/군사동맹 우의 돈독



- ▶▶ 참모총장은 9월 23일 발코트(David P. Valcourt) 신임 미8군 사령관을 비롯한 주한 미군 장성급 주요직위자 7명을 초청, 본관 1층 통로에 설치한 「육군 명예의 전당」을 참관하고, 韓·美간 군사동맹 및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양국軍 주요직위자들의 만남을 통해 전환기적 안보상황하에 자칫 소원해질 수 있는 한·미간의 혈맹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주한 미군 주요직위자로서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08 58주년 국군의 날 행사/강한 친구 대한민국 육군



- ▶▶ 10월 1일 국군의 날 58주년을 맞이하여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대통령님 주관으로 실시된 국군의 날 행사병력 열병을 마치고 기념식에 참석한 주요인사들과 함께 행사를 관람하였다.

계룡대지역 행사 후에는 대전시장, 충남지사 및 육본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대전시청에서 대전 EXPO에 이르는 3km 구간에서 거행된 국군의 장한 모습의 시가행진을 사열하면서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09 지상군 페스티벌 2006



- ▶▶ 국민과 육군이 함께하는 최대 규모의 병영축제인 「지상군 페스티벌 2006」이 10월 18~22일간 계룡대 활주로 일대에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여 벤처국방마트에서는 국내·외 126개의 우수 벤처업체들이 개발한 군 관련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들을 전시함으로써 군사장비 및 관련 기술의 발전추세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군 역사관 및 군복 전시관, 병영생활관 등을 설치 국민적인 축제의 하나로 육군 훈련체험, 경연대회, 시범·공연 등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10 Defense Asia 2006



- ▶▶ DA 2006 행사는 우리 軍과 세계 각국의 주요 군사직위자간의 만남을 통해 군사 외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산업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 육군 주관으로 마련하여, 기간 중 33개국 43개 군사대표단 128명의 외국 귀빈이 참석 뜻 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총 188개의 국내·외 유명 방산업체들이 참여해 질과 양적인 면에서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행사로 각국의 필요한 장비 구매계약 등이 이루어졌으며, 방산무기 화력시범을 통해 첨단무기의 우수성과 자주 방위력을 대외에 과시하였다.

# 군사동향

- 국 제 정 세
- 미 국
- 중 국
- 일 본
- 러 시 아
- 북 한

## 軍 事 動 向

### ■ 국제정세

오늘날 세계정세는 냉전 종식 이후 공존(共存)과 공영(共榮)의 질서가 도래할 것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시각과는 달리 9·11테러사태로부터 아프간전, 이라크전·중동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제질서가 미국주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가간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가운데 지역별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중심의 안보개념이 경제·외교·사회 등을 망라하는 안보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이라크전, 체첸사태·중동전 등에서 보았듯이 군사력은 여전히 국익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냉전시 잠재되어 있던 영토·종교·자원·민족갈등 등 다양한 분쟁요인의 표출로 국지분쟁의 가능성이 증대하였으며,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상호 의존성 심화에 따라 국제테러, 환경오염, 자연재난, 해적행위, 불법난민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다양화되었다.

더욱이 일부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및 생산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8월 13일 런던 항공기 테러 미수 용의자들은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시도했으나 영국 경찰은 사전에 테러 용의자 23명을 체포하였고, 영국 보안 소식통에 의하면 영국에만 약 1,200명의 테러리즘이 적극 가담중이라고 말함으로써 영국은 여전히 잠재적 테러 위협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국 경찰은 이번 테러계획이 미국행 비행기뿐만 아니라 영국 자체를 목표로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손실과 영국 본토가 위협에서 탈출했고 최대 규모의 작전 돌입으로 차단했으며, 이로 인해 유럽지역을 통과하는 항공여객들은 여행스케줄이 지연·취소되기도 했다.

특히, 영국 경찰은 용의자 중 1명이 영국 내 '알 카에다'와 연계된 핵심인물로 지목함으로써 추가 테러 용의자 검거와 수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중동지역은 정치·종교·민족 등 여러 측면에서 테러요인이 항시 내재된 가운데 2006년 6월 25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군 초소(哨所) 기습공격과 병사(兵士) 2명을 납치함으로써 촉발된 군사작전으로 이스라엘 공군과 육군이 동원되어 가자지구 교량·발전소를 파괴하였고, 공항을 점령하는 등 이스라엘은 납치병사 석방을

조속히 요구한 반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여성·미성년자 470여명과 맞교환하자고 요구했다.

이러한 전투에서 이스라엘군 헬기 1대가 헤즈볼라(레바논 이슬람 시아파 정치·무장 조직)의 미사일공격에 추락하는 등 개전 후 최대의 피해를 입었으며, 양국간의 전쟁으로 레바논인 1,000여명 이상과 이스라엘인 167명(군인 114명, 민간인 5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할라트다리의 처참한 현장

이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긴급히 2006년 8월 11일 레바논 무장·정치조직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에게 상호 공격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 제1706호를 채택했고,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의 중재로 8월 14일, 34일간의 전투를 휴전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향후 중동지역은 휴전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 충돌의 재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불안한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세계의 전략적 중심축으로 부상한 동북아지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域內) 다양한 분쟁요인의 잠재와 국가간 이해 상충 및 영향력 확대경쟁으로 인한 안보정세의 유동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일·러간 북방 4개 도서문제, 일·중간 센카쿠(중국어명, 釣魚島)열도 문제 등 영유권문제와 함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확정문제, 환경오염문제, 대만문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쟁요인이 산재하여 역내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결렬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발표로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한 가운데 10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문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엔헌장 제7장의 포괄적인 적용 대신 비(非)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제7장 41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본 결의문은 회원국들에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지원자금은 물론 공격용 재래식 무기의 북한 유입을 봉쇄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들이 북한을 오가는 화물을 검색하는 협력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동북아의 안정유지 및 균형자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은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및 정보·항공·우주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태평양지역 안정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전진배치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탈냉전 후 보수·우경화 경향에 편승하여 개헌(改憲) 찬성여론이 급증한 가운데 ‘자위대의 군대화 및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는 등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 자세에서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함으로써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2006년 9월 25일에는 임기가 만료된 ‘고이즈미’ 총리가 퇴진하고 제90대 일본 총리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선출되었으나 향후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역사가 어느 정도 정립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중국은 경제력에 상응한 전력증강 및 군 정예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미사일 및 해·공군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중국 위협론’에 따른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미국의 다자적 접근을 위한 중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차 관련국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지속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러시아는 국익중심의 실용적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군사력 현대화 및 외교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및 북 핵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역할 강화에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정세의 흐름이다.

## ■ 미 국

미 국방부는 ‘2006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 4년 주기 국방 검토보고서)’을 발표하여 주요 안보위협 요소로서 전통적 위협으로 재래식무기에 의한 분쟁·전쟁을, 비정규적 위협은 테러·폭동·내전으로, 재난적 위협에 대량파괴무기 공격을, 파괴적 위협에는 하이테크무기 공격 등을 분류하여 21세기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4개 유형을 제시했다.

현재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은 1개 항모전투단과 8개 전투비행대대 및 공중조기경보기(AWACS) 등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성능 정보수집체계와 수집된 첩보를 융합하여 작전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전력체계 및 이와 연계된 정밀타격 전력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GPR)'에 따라 동북아와 중동지역에 병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한 기존 군사전략을 유사시 언제, 어디서든지 전투력을 투입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해외 해·공군기지를 중추기지로 확보하여 유사시 분쟁지역에 신속 투입하는 방향으로 기지체계(基地體系)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 국방전략 목표는 테러분자 네트워크 격퇴, 본토 방호 강화, 미래의 도전세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WMD 확산 저지에 중점을 두고 테러와의 전쟁수행을 장기전으로 규정, 향후 미국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였으며, QDR의 성공을 위해서는 NATO·호주·일본·한국 등 동맹국의 전략적 유대강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동맹국은 미국이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략목표로 대테러전 수행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수작전부대를 15% 증강시키고, 미 본토 방호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생물학테러에 대비한 의료체계 개선에 향후 5년간 15억\$을 배정하였고, 미래 도전세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중국·러시아·인도를 미래 도전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특히 동맹국 관계강화 및 우세한 군사력으로 억제능력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WMD 확산 저지를 위해 전략사령부를 중심으로 대응능력 통합, 탐지·확인·추적체계 개발과 북한을 핵·생물학·화학무기 개발 및 장거리미사일 수출국으로 분석하였고, 이란은 핵개발 및 테러지원국으로 미국·동맹국에 위협요소로 판단하였으며, 미국은 대테러전 수행능력 강화와 WMD 저지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5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남아 해역에서 미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무인정찰기 프레데터

본 훈련은 말라카해협, 남중국해, 보르네오해 등 동남아 해역에서 미국과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6개국이 참가했다.

미 태평양사는 상륙함, 구축함, 프리깃함, 구조함 등 10여척 P-3C, SH-60 헬기부대, 병력 1,400여명과 동남아 6개국에서는 국가별로 상륙함, 소해함 등이 참가했다.

특히, 동남아 해역훈련(CARAT 2006)은 연합작전능력 향상 및 해상안전확보와 해상 테러위협 및 초국가적 해상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미국은 동남아 국가와 연합 훈련을 통하여 전략적 요충지인 말라카해협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대중국 전략적 우위 확보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은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를 즉각 규탄하면서 모든 행동 중단을 요구하였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상품 및 기술거래를 금지하도록 192개 유엔 회원국에 요청하였으며, 북한에게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하였다.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우방과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동맹국들과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계획 등 방위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유엔·우방국들과 북한이 현재와 같은 길을 고집할 경우 초래될 결과를 이해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은 21세기 안보위협을 4가지 유형으로 판단하고 북한·이란을 WMD 확산 위협국으로 명시하여 중국을 미래 도전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미국은 동맹 강화 및 군사력 우위로 전략적 대응을 표명, 동북아 긴장고조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수행을 장기전으로 규정하고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력증강에 중점을 둔 가운데 향후 WMD 확산저지와 테러와의 전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미국은 군사변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면서 동맹국과 전략적 유대강화를 통하여 범세계적 전쟁억제를 달성하고, 대테러전 지속발전 및 군사강국(軍事強國)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중 국

현재 국내·외에서 새롭게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향후 어떠한 국가로 변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중국은 과연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국가전략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위 ‘계산된 친절’인가?

상반된 두 시각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최근의 중국 위협론 논의가 “경제적인 위협”에서 “군사적인 위협”으로 전이(轉移)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중국의 군사위협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가?

미 국방부는 중국이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방군 군사역량의 질(質)과 양(量)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중국의 국방예산의 규모와 세부항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군사 현대화 3대요소인 국방비 증강, 무기도입, 방위산업육성 등 2006년 중국 국방비가 약 700~1,050억\$로 추정되나 중국 공식 발표에 의하면 351억\$로 미국(4,108억\$)의 8.5%수준이라고 보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이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상당한 양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력과 비교한다면 결코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다.

특히, 중국군 현대화 동향은 중국내 장기전을 위한 보병위주로 운용되고 국경 밖의 제한된 지역과 첨단화된 적을 단기간 내에 대적 가능한 현대화된 군으로 전환하면서 지상군 정보화에 주력한 가운데 해군의 원거리 투사력을 강화하고 공군 방어 및 공격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등 지난 걸프전을 교훈삼아 연합작전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국방예산의 증대로 첨단무기와 관련기술을 도입해 군사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밀성을 제고하면서,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여전히 중국의 이러한 노력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첫째, 중국군의 첨단무기 개발·연구능력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미사일,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타분야에서 기술능력은 아직 세계수준과 격차가 있어 자체무기 생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첨단무기의 자체개발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됨으로써 그 비용이 큰 만큼 새로운 무기 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첨단무기 수입과 많은 제한으로 수출국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러시아는 중국에게 필요한 첨단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대중(對中) 견제심리와 역내 군사균형 등 다목적 고려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첨단무기나 관련 기술을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현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의문이 있다. 중국은 유사시에 중국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필리핀-오키나와-규슈 인근을 잇는 방어선 밖으로 미군을 밀어내야 한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으로부터 함재기, 수상함정이나 잠수함으로부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사정거리(1,250~2,500km)를 감안한다면 그보다 더 멀리 방어선을 밀어내야 하겠지만 현재 중국 해군은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 또한 공군력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해군이 외양(外洋)으로 진출한다 해도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다면 제해권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본토에 근접한 적 함정을 격퇴할 장거리 폭격기와 공격기,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해상초계기의 역량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제공권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군 현대화 방침은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으로 군사 선진국들이 기계화단계를 거쳐 정보화를 실현한 것과는 달리 후발주자로서의 중국이 군 현대화과정에서 기계화와 정보화를 동시 달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대전 특징에 따라 무기장비 현대화, 체제개편, 교육훈련방법 개선과 군 구조 개편으로 적절한 규모·합리적 구조·간결한 지휘체계의 군 구조를 확립시키고, 전쟁수행능력 향상으로 무기개발 및 합동·연합작전 능력 강화로 군사력의 전체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해군 구축함 광저우함이 미사일 발사

그리고 2006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와 산둥(山東)반도에서 사상 첫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평화사명(平和使命)’으로 명명된 이번 합동군사훈련에서 양국의 육·해·공군과 해병, 공수부대, 상륙부대 등이 모두 참가했다. 이번 합동훈련에서 러시아의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통제기, TU-22MS와 TU-95MS 전략폭격기, 수호이-278M 전투기, 상륙선 등 첨단무기들이 다양하게 지원되었다. 이번

훈련에 중국군은 5천여명, 러시아군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국 합동훈련과 관련하여 중국 국방부는 훈련목적은 “특정 대상국을 겨냥한 훈련이 아니며, 양국군의 연합작전능력 제고에 목적이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중국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에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막판 이견을 조율한 뒤 10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가결하는데 동의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는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지 및 미사일 발사 유예 복귀 등을 요구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군사패권(軍事霸權) 추구 여부이다.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사혁신의 기본은 선진 군사력 보유국가와 군사 후진국간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며, 특히 “경제발전과 국방건설의 동시 건설” 선언 이래 국방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견지하며, 타국을 침범하지 않는 가운데 일단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는 반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적극적 방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 ■ 일 본

일본 방위청은 2006년 3월 27일부로 통합막료감부(統合幕僚監部)를 신설하고 신안보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자위대의 통합 운용능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통합막료감부(統合幕僚監部)를 신설함으로써 현 통합막료회의(통합막료의장)는 폐지되고, J-6(지휘통신시스템부)을 신설하여 각 막료감부 작전과를 J-3(운용부)으로 통합시켰다.

따라서 군령권 행사시 방위청장관의 자위대 운용·지휘는 통합막료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존에는 자위대 운용·지휘는 각 자위대 막료장을 통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통합막료감부 신설로 의사결정·명령의 신속화, 신속·효과적 대응능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 정보본부 방위청장관 직할화로 현 통합막료의장 예하 기관에서 방위청장관 직할기관으로 개편하였고, 통합정보본부 신설로 현 긴급동태부(緊急動態部)를 보장하는 한편, 작전실시를 위한 현용 정보지원을 도모하고 정보본부장 예하부서로 본부장 통제를 받도록 했다.

따라서 통합정보부 담당 정보관 계급을 격상(대령→소장)시켜 J-2장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고, 일부 정보관(4명)은 정보본부장을 특별보좌토록 개편하였다. 또한 2006년 4월에 통합교육체계를 개편하여 현재 각 자위대 간부학교 고급과정(1년), 통합막료학교 고급과정(1년)은 별도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개편으로 각 자위대 간부학교 고급과정(6개월, 각 15명), 통합막료학교 고급과정(6개월, 총 45명)에 입교 조치하는 등 통합관련 교육을 강화시켰다.

한편, 일본은 통합연습과 훈련강화를 위해 2006년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미·일 연합 통합지휘소연습(Keen Edge)을 실시한 가운데 최초로 통합막료장이 군령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통합운용태세를 이행했고, 또한 정보통신기반의 공유 및 장비·물자의 공동화 추진을 도모하였다.



위성발사용 H2A 로켓

따라서 일본 통합막료감부 창설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조직개편 및 통합운용기반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통합막료장에 의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일본 자위대 장거리 타격능력은 항모, 전략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순항미사일 등 적 기지 공격을

위한 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위대는 평화헌법(제9조 2항) 및 전수방위개념에 따라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 전력범위를 벗어나는 무기체계는 보유할 수 없으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일본을 조준할 경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집단적 자위권', '방위청 성(省) 승격'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전투기 항속거리 연장 및 폭탄 탑재능력, 호위 함장거리 미사일(토마호크)발사능력 등 전력확보 노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본 집권자민당은 자위대를 자위군(軍)으로 격상시키고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8월 1일 일본 총리 경험자들로 구성된 간부회의를 열어 창당 제50주년이 되는 2006년 11월에 발표할 헌법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일본 정당에서 개헌안이 구체적인 법조문 형태로 윤곽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이 초안은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고 국가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군을 보유한다"라고 명시해 명실상부한 군사전력을 갖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자위군의 임무로 일본열도 방위 외에 "국제평화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활동"을 규정해 전수(戰守) 방위 원칙을 포기하고, 해외파병을 중시하는 노선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만 자위군의 출동과 파병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0월 9일 일본 정부는 북 핵실험과 관련하여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초고강도 제재조치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금지 등 독단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추가 제재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현재 일본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리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직접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활동과 미군의 검색작전을 후방지원하는 등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 구체적인 확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적 판단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2006년도 발간예정인 방위백서에서 자위대의 국제활동 범위 확대 및 방위청 성(省) 승격 추진에 따른 대내·외의 우려 불식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固有領土)로 표기하면서 한국의 독도관련 활동을 상세히 기술한 것은 일본 정부의 '영토문제 양보 불가' 의지와 추가적 상황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향후 일본 자위대는 주일 미군과의 효과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과 관련, 성능 개선에 공동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작전운용과 장비기술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양통제권 및 작전반경을

확대시키면서 활발한 해외 파병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러시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외부로부터 압력이 감소된다”라고 역설하면서 “러시아 병력이 비록 140만명에 이르지만 정작 싸울 수 있는 군인은 없다”고 진단한 가운데 3대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장비 현대화로 신형 ICBM 탄두, 신형 핵잠함 건조 등을 통한 핵전력 강화 및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시킨다.

둘째, 병력충원제도 완비로 러시아군은 세계대전이나 지역분쟁 수행능력 및 국지전 수행능력 겸비로 전문화·기동화된 군을 건설한다.

셋째, 군 복지 향상책으로 군인 주택부족 및 사회적 향상을 추구하면서 “2010년까지 군인 개인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2012년까지 주택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2006년 3월 30일 연방군사기술협력청에서 방산수출회의를 주관하는 가운데 자국의 무기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청에서는 대외 무기수출을 통제·감독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이 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방·외교장관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역사적으로 구소련 경제는 민수산업과 군수산업이 혼합된 군산복합경제체제(軍産複合經濟體制)로 즉, ‘군산복합체’란 장갑차와 일반승용차를 동일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구소련 붕괴 후 시장경제로 전환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했다. 현재도 민간생활용품 40% 정도를 군산복합체에서 생산중이며, 특히 탈냉전 후 대규모 감군(300만명→120만명)으로 러시아군의 소요감소로 무기수출 증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 무기수출 확대 동향은 푸틴 대통령이 2006년 3월에 알제리를 방문하여 약 75억 \$ 무기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무기는 MIG-29 36대, SU-30 28대, S-300 대공미사일, T-90 전차 등이며, 특히 반미(反美) 성향인 베네주엘라에 소총 10만정, MI-17/35 헬기 33대를 공급 체결하였고, KILO급 잠수함 및 MIG-29를 수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러시아 ‘푸라디코프’ 총리는 2006년 4월 1일~9일까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무기판매 협상을 벌이고, 러시아와 브라질간에 우주항공합작회사 설립 등을 논의하였다.





SS-27 Topol-M(대륙간 탄도미사일)

한편 러시아는 멕시코·칠레·콜롬비아·볼리비아에 방산수출 촉진단을 파견하여 해당국 무관부(武官部)를 증편하였고, 방산수출 기능을 확대시키면서 시장개척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과 40억 \$, 시리아와 20억 \$, 수단과 4천만 \$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TORM-1/SA-18 미사일을 판매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무기수출 동향은 기존 대중국·인도에 80%의 판매중심에서 중동·중남미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란·시리아·팔레스타인·수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가에 대해서도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강력한 방산수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북한에 대해서도 현금 지불시 한반도 전략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기수출 가능성이 내포된 가운데 러시아는 방산협력을 한·러 군사교류의 중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아국에 대해서도 방산수출 압력을 증대할 전망으로 특히, 중동·중남미 및 동남아시아의 고등훈련기·차세대 전차·자주포 등 소형무기·재래식 무기 시장에서 아국(我國)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6월, 러시아는 병역제도 개선 법률안이 상·하원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방부는 충분한 징집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2008년부터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격오지근무 의사나 교사의 병역면제 혜택 폐지는 동 지역 의사나 교사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방산업체 종사자들의 자질도 격하되는 등 후유증이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 국방부는 군 구조를 군관구체제에서 지역사령부체제로 개선하려는 의도를 밝혔고, 한편 2006년 6월 30일 춘계(春季) 징집시 12만 5천명을 징집하여 그중 8만 2천명은 국방부로 나머지는 다른 무력부처로 배치하였다.

한편, 러-벨라루시간 대규모 연합훈련은 연합지휘소를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재 양측이 상대국 정부 승인 없이 군용기의 영공진입을 허용토록 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간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연합 해군훈련, 극동지역 전략지휘 참모훈련 등 활발한 동향을 보였고, 각 군종별(軍種別), 군관구별로 자체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6월 23일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벨라루시 민스크에서 개최된 CIS 집단안보 체제 회담에 참석하여 주 의제로 중앙아시아 신속전개군의 작전 전개, 운용 및 지원에 관한 협정체결 토의와 연합훈련을 2006년 9월에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앙골라 참모총장 방문시 러시아 참모총장, 군사기술협력청장 및 국영 무기수출공사 대표 등 방문과정에서 앙골라 참모총장은 러시아 전투기 정비공장 등을 방문결과 앙골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기 80%가 소련제이기 때문에 무기 노후화 및 장비개량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이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편, 2006년 6월 28일 현재 러-우크라이나 관계가 지속적으로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학생 10여명이 러시아 흑해함대 영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따라서 이러한 돌출행동을 놓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흑해함대 진입사건은 인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또한 6월 30일 러시아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중국 및 이란에 국제적으로 이전이 금지된 미사일 기술을 판매한 증거가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두 나라간 입장 차이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는 2006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서해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 긴급상황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성격으로 판단되어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을 긴장시켰다.

한편, 러시아는 금번 합동훈련에 육군 제76공정사단과 해군 제55상륙사단, 공군 제37원정공정대, 태평양함대 상륙부대 등 4개 정예부대원 1,800여명을 산둥 칭다오(靑島)와 웨이팡에 상륙시켰다.

그리고 본 훈련에 러시아는 TU-22M, TU-160, TU-952MC 등 중장거리 전략폭격기와 최신 잠수함 10여척, 구축함 등을 대거 파견함으로써 군사전문가들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패권을 위한 첫 단계 포석이라고 분석한 가운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합동훈련은 미 연합군의 이동을 억제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10월 9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막판 진통 끝에 대북 군사적 조치를 배제한 제재 결의안에 동의했다. 이번 제재안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완강한 반대로 비록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긴 했지만 북한에 대한 여러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조치가 담겨 있어 향후 복잡한 상황전개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이사국과 일본은 논의 끝에 당초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라는 포괄적 규정에서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며, 제7장 41조 아래 제재조치를 강구한다”는 문안으로 조정되었으나 무엇보다 이 결의안은 지난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첫 대북 제재 결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 ■ 북 한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려 반세기 이전부터 지금 이시각 현재까지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남북한의 지상군 병력과 각종 무기를 될수록 빨리 대폭 감축해야 한다.

북한은 스커드미사일 600여발, 노동미사일 200여발, 장사정포 1,000여문, 세계 5위의 화학무기 보유 등 북한이 실전배치한 무기들이다. 버튼만 누르면 남한 어느 곳이든 불바다로 만들 수 있고 파멸(破滅)을 몰고 올 수 있다.

북한이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은 선군정치체제(先軍政治體制)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는 군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재래식 전력 외에 핵 및 화학무기, 그리고 미사일로 이어지는 비대칭적 대량파괴무기(WMD)를 앞세운 가운데 위협과 억제, 폭력외교를 통한 위협 등 상대의 양보를 강요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적의 깊숙한 후방지역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긴 대포(大砲)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시 남한의 목표제압은 물론, 주일미군의 조기 증원을 차단하고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미사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1975년 중국으로부터 DF-61 미사일을 구입하여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1981년에는 이집트로부터 SCUD-B 24기를 도입했다. 1984년에는 사거리 280km인 SCUD-A를 실험했으며, 이듬해 사거리 320~340km인 SCUD-B를 개발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사거리 500~600km인 SCUD-C를 발사했고, 1993년에는 일본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는 사거리 1,300km인 노동 1호를 발사했다.



北 미사일 발사 상황도

그리고 1998년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사거리 1,700~2,500km에 이르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고, 급기야 북한은 2006년 7월 5일 새벽 3시 32분경 함북 화대군 대포동과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기지 발사장에서 대포동 2호와 스커드를 포함, 노동급 미사일을 총 14시간에 걸쳐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대포동 2호 미사일은 40초 만

에 동해상공에서 공중폭발했고, 또 다른 미사일들은 400~800km의 거리를 지나 북한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중간쯤 되는 동해에 떨어진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북한은 제3국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그리고 제3국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국제관행과 절차를 무시하고 기습·도발적으로 미사일 발사 시점을 ‘미국 독립기념일’로 선택, 예측치 못한 돌출행동을 자행함으로써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은 긴급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다자(多者)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초로 중국이 대북제재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미·일이 주도 하던 국제사회 압박에서 중·러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연대’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은 운신(運身)의 폭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2006년 7월 16일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유엔 안보리이사국에서 결의문 제1695호 핵심내용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미사일관련 물자, 자재, 상품, 기술의 대북 인도 및 북한 미사일 금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 협조 요청, 북한의 긴장고조 행동 자제 요청,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촉구, 북한 미사일문제의 안보리 계류사실 확인 등을 담아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동북아시아와 주변지역 평화·안정·안보위협을 명시하였다. 또한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시 유엔안보리 본격 제재조치 등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7월 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서 8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문 준수를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통하여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과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미사일정책을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남한에 3만 2천명, 일본에 4만 7천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결코 좌시(坐視)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한반도 안보불안 요인을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기 때문에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이 부당하게 대북 적대정책 강화로 인해 관계정상화가 어렵다고 언급함으로써 “서로 마주 앉아도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풀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미간 신뢰수준은 상호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에 이어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및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평화적인 해결노력,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요청한 가운데 급기야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0시 35분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과학연구부에서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체제 내부의 문제점을 타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접적·지·해·공역에서 의도적 또는 우발적인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를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이미 탈퇴했고,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도 받지 않은 우리가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조종해 압력적 결의를 조작해 뉘으로써 우리에게 집단적 제재를 가하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천명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우리가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 위협과 제재압력 책동 때문”이며, “우리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진정한 염원으로부터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북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월 14일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담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따라서 대북 결의는 유엔헌장 제7장(강제조치)에 근거해 유엔 192개국 회원국들이 의심되는 북한 화물검색,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상품·장비·기술의 이전금지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투명한 방법”으로 제거해야 된다고 결의함에 따라 북 핵 폐기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사항이 되었다.

한편, 합참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경직 및 남북대화 채널 유지가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 미사일 또는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모든 대북 경제 지원 재검토와 우리 군의 핵 대비태세 보완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특 집

- 육군 군사연구소의 개편과 전사연구 발전방향□…………… 대령 정명복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전쟁연구과장)
  
- 조선시대 의병활동 연구와 군사연구소의 역할□…………… 이해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 육군 군사연구소의 개편과 전사연구 발전방향

## 목 차

- I. 서 론
- II. 군사연구소 개편과 외국의 전사 연구기관
  - 1. 군사연구소의 설립과 개편과정
  - 2. 외국 전사연구기관의 사례와 특징
- III. 전사연구의 발전방향
  - 1. 전사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전사연구의 현 실태와 발전방향
- IV. 결 론



대령 정명복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전쟁연구과장)

## I. 서 론

모든 집단이나 조직은 생존을 위해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육군도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자성과 함께 국방개혁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연구실도 전문인력의 확보와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지휘관계만을 육본 건제에서 육본 예속으로 전환하여 「군사연구소」로 개편하게 되었다.

이에 다른 사안은 차치(且置)하고 군사 전문 학술지인 「군사연구」를 발간하고 있는 「군사연구소」로서 조직개편의 결과와 향후 전사연구 방향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현재의 「군사연구소」는, 2003년부터 육군 「전사연구소」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건립(안)이 육본 정책회의 의결과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설립이 추진되다가, 조직 감축에 대한 지나친 요구로 인해 축소 개편된 상황이다. 물론 현재의 「군사연구소」는 지금의 상황에서 편성될 수 있는 최선의 조직으로 여겨지지만, 군사

자료의 수집·관리, 부대 역사 및 국내·외 전사편찬 등 본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립(안) 원안대로의 증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육군 「전사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한 지금 육군본부 「군사연구소」의 현 상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의 관계 및 차별성 등을 함께 조명해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군사연구소」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직이었던 군사관리과 및 역사편찬과 업무에 대한 언급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신설된 전사연구부서(한국전쟁연구과 및 세계전쟁연구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전사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군사연구소」 개편 과정과 함께 외국 전사연구기관의 사례와 특징 등을 살펴보고, 전사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되새기면서 현재 전쟁사 연구 및 교육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서술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Ⅱ. 군사연구소 개편과 외국의 전사연구기관

### 1. 군사연구소의 설립과 개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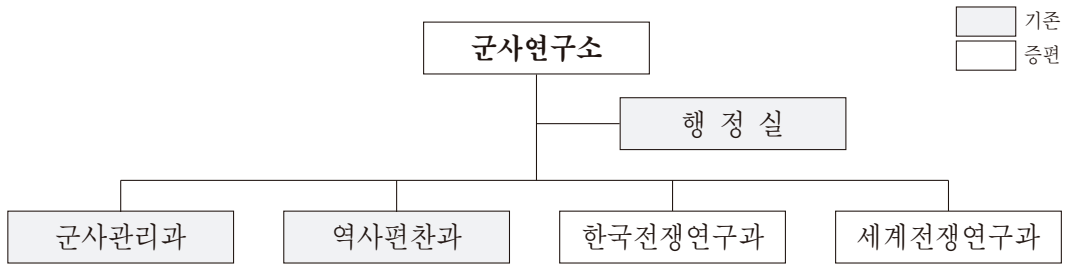
육군 「군사연구소」는 과거 작전사 편찬위원회(1949년 12월 1일)와 전사감실이 창설(1951년 2월 16일)되어 전사를 연구·편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태동하였다. 이후 1953년 11월 10일에 「군사감실」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55년 2월 1일에는 행정과, 운영과, 전사과, 연구과, 편집과 등으로 증편하였으며, 1961년 10월 1일에는 부대역사과와 전사편찬과로 부서를 통·폐합하여 작전참모부 「군사처」로 편입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다가 1971년 1월 1일에 「군사연구실」로 독립한 이후에는 소규모의 증·감편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 없이 참모총장의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10여권의 전사 및 전례집을 자체 연구 편찬하였다.

그러나 1995년도 군사연구실 전사연구기능이 교육사령부로 이관되면서 창군 이래 육군본부에서 지속되었던 전사연구 편찬업무가 단절되었다가, 2000년 6월 1일부로 전사연구장교 1명만 복귀되면서<sup>1)</sup> 전사업무가 일단 환원되었다. 그 후 2004년 4월에는 전사연

주 1) 교육사령부로 전환되었던 인원 중 3명은 편제가 삭감되었으며 장교 1명만 복귀하였다.

구과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된 '전사연구과'가 신편되고 「육군전사연구소 설립(안)」<sup>2)</sup>이 수립되어 육본 정책회의 의결 및 승인(2005년 2월)을 받아 추진하던 중, 2005년 9월에 설립 방향이 바뀌면서 육본 조직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내부조직인 육본 직할 「군사연구소」로 축소 편성하게 되었다.

현재 「군사연구소」는 기본 임무인 군사자료의 수집 및 관리, 부대역사 및 국내·외 전사편찬을 통해 육군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최초 전사연구소 설립계획(안)과 연계성을 유지한 가운데 육본 직할부대로서의 위상에 맞는 직위로 대폭 수정하고, 하부조직도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었다. 즉 2006년 4월 1일부로 <그림 1>과 같이 2개 과에서 4개 과로 증편된 것이다. 그리고 현역 및 군무원을 적절히 편성하였으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전문인력 편성을 확대하였다.



<그림 1> 「군사연구소」 편성

「군사연구소」의 업무로는 ① 군사업무 계획 및 시행, 지원 ② 육군 역사 관리 및 통제 ③ 군사 및 전사자료 수집, 보존, 관리 ④ 국내·외 전사 기록 및 연구 편찬 ⑤ 전·평시 전훈분석반 운용 및 통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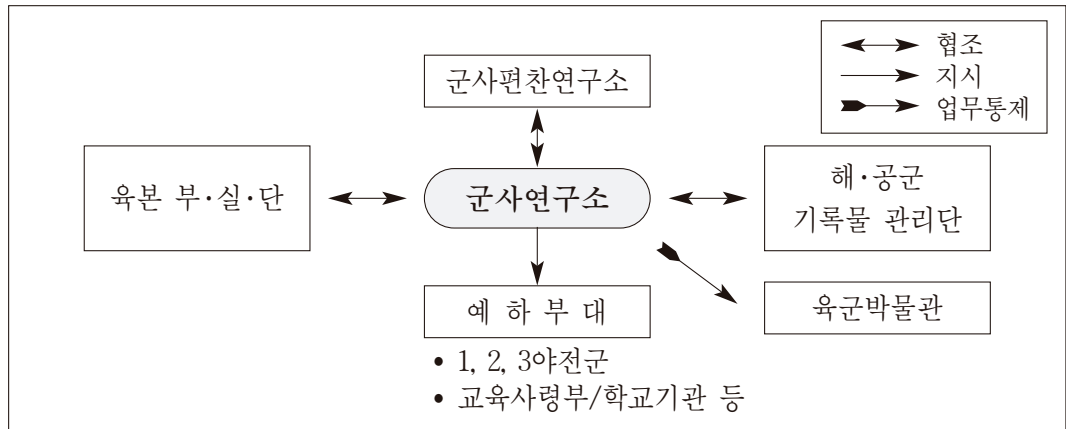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군사연구소」는 정보작전 지원 참모부와 부대역사 및 전훈분석과 교육훈련 관련 업무 등을 협조하고, 자료수집 및 존안, 자료실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기록정보관리단」<sup>3)</sup>, 전사편찬 및 각 참모부사 작성·자료 수집 등은 기타 육본 부·실·단과 각각 협조하고 있다.

또한, 부대사 및 부대계보 작성, 군사재와 전적기념물 업무 및 전사연구를 포함한 군

주 2) 군사연구소 전사연구과를 모체로 하여 한국전쟁연구과, 세계전쟁연구과, 지역전쟁연구과, 번역과 등 4개 과와 33명(계약직 12명 포함)으로 하는 육본 직속의 전사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3)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은 1951년 5월 20일, 기록물 보존 전문기구인 「중앙문서보존소」로 창설되었으며, 1968년 11월 20일에는 「육군중앙문서관리단(육본 예속)」으로 변경되었고, 2004년 4월 1일부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증편되어 운영되다가, 2006년 4월 1일에는 육본 예속에서 인사사령부 예속으로 전환되었다.

사업부는 예하부대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편찬연구소 및 타 군과는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의 공동참여와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 출판물, 정보 등을 상호교환하고 부대역사 관련 업무 및 전시장비 운영 협조, 전쟁사 연구자료 등을 상호지원하고 있다. 특히, 「육군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 편성 및 지원과 군사재 관리업무 등을 「군사연구소」가 통제하고 있다.<sup>4)</sup> 이상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상호관계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유관기관 및 상호관계

## 2. 외국 전사연구기관의 사례와 특징

세계 여러 나라는 일찍부터 전쟁에 대해 정리해 왔으며, 특히 현대에는 국가안보 보장을 위해 전문적인 전쟁사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이를 연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의 연구기관들도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를 축적하였고, 상호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외국의 전사연구기관들을 살펴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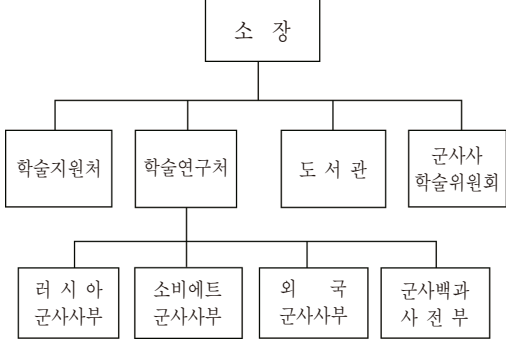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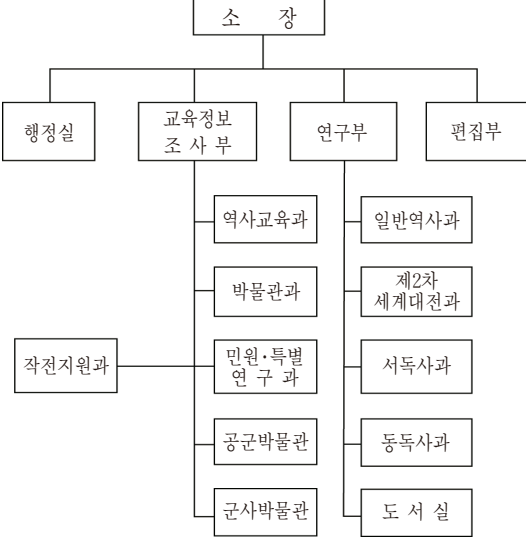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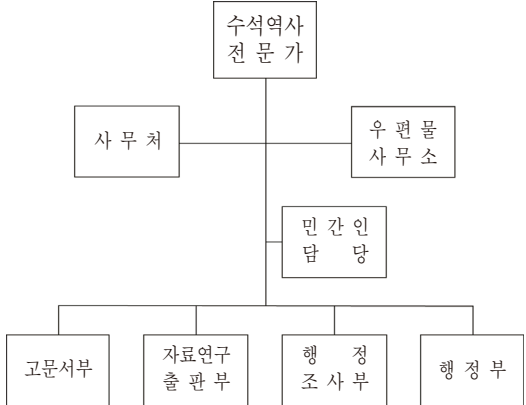
주 4) 「육군박물관」은 1956년 10월 3일에 「육군사관학교기념관」으로 개관되었으며, 1966년 10월 4일 「육군사관학교군사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1985년 5월 1일 「육군박물관」으로 개관되었으며, 2001년 3월 19일에는 문화관광부에 박물관 등록을 하였다. 군사유물의 수집·전시·보존 관리와 군사유적의 조사·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다수의 보물과 12,000여점의 군사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외국인, 사관생도 및 장병에게 군사문화재에 대한 교육, 홍보, 학술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이 절은 「외국 군사사 연구기관의 조직과 활동(조성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에서 인용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다만, 프랑스 육군 전사연구소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4년도의 정책보고서를 활용하였다.



〈표 1〉 외국의 전사연구기관

구 분 (소속인원)	편 성	임 무 / 특 징
<p>미국 육군 군사사 연구센터 (15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 전사 대부분을 편찬</li> <li>• 군사자료 수집/관리</li> <li>• 육군 역사/부대사 편찬</li> <li>• 정책관련문서 정리 및 자료조사</li> <li>• 전사과견대(NHD) 관리</li> <li>• 주요국가 군사연구기관과 국제교류</li> <li>• 구술사(증언/칭취록)작성</li> <li>• 육군내 박물관 및 역사관 감독/지원</li> <li>• 교육지원/군사연구 장학사업</li> </ul>
<p>일본 방위연구소 (13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위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연구</li> <li>• 국제관계 및 외국 정세에 관한 조사연구</li> <li>• 전사연구편찬 및 자료관리</li> <li>• 교육 훈련 및 교육지원</li> </ul>
<p>중국 군사과학원 (7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이론, 국방건설관련 연구</li> <li>• 정책결정에 전략적 건의/자문</li> <li>• 군사연구, 논문, 사례, 교범발간</li> <li>• 전군 군사과학 학술 연구 회의를 통한 교류</li> </ul>

구 분 (소속인원)	편 성	임 무 / 특 징
러시아 군사사 연구소 (3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사이론, 전투사, 국방정책 연구</li> <li>• 군사사 관련 저작물 관리</li> <li>• 학술연구자 양성</li> <li>• 국내·외 학술활동 참여</li> <li>• 외국 군사사 및 백과사전 편찬</li> </ul>
독일 군사사 연구소 (10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역사 연구</li> <li>• 교육지원 및 자료제공</li> <li>• 전쟁사 교재 및 자료집 발간</li> <li>• 군 관련 주요 문제 조언</li> <li>• 자문위원회 운용 및 학술지 발간</li> <li>• 전사교관 훈련 및 교육</li> <li>• 박물관 협조/지원</li> <li>• 현행작전에 대한 역사교육 및 조사 지원</li> </ul>
프랑스 육군전사 연구소 (14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사에 관한 고문서 관리, 열람 지원</li> <li>• 문헌수집, 연구, 근거관리, 군 전승품 유지 보관</li> <li>• 육군사관학교의 전사교육 협조</li> <li>• 군에서 발간되는 역사잡지 편집</li> <li>• 군 및 민간 연구기관과 교류협력/군 관련 자료 제공</li> </ul>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연구기관은 각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역사프로그램을 구축한 후 사료수집, 공간사 편찬, 전사 연구 및 유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육군 군사사연구센터**는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사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장은 장관, 육군참모총장, 참모 등에게 군 역사에 관해 조언하고 육군 역사프로그램(Army historical Program)을 운용한다. 연구센터의 주요 부서로는 '역사부', '야전 및 역사 근무부(Field Programs & Historical Service Division)', '박물관부' 및 '출판부' 등이 있다. 특히, 육군 전사 및 역사, 그리고 부대사를 편찬하고, 전사과견대를 관리하며, 육군 내 박물관과 역사관을 감독 및 지원함은 물론, 군사연구 장학사업까지 실시하고 있다.

**일본 방위연구소**는 1952년 8월 1일 창설되었으며, 당시 임무는 방위청 설치법에 따라 "자위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대위 이상의 자위관과 그밖의 간부 직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연구소의 주요부서 중 제1연구부는 자위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조사·연구하고, 제2연구부는 국제관계 및 외국의 정세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전사부'는 2개의 연구실이 편성되어, 편찬업무는 물론 조사·연구 기능까지 수행하는데, 연구원은 현역과 역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현역의 경우는 7년까지도 근무가 가능토록 하여 전문화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간부 자위관과 타 기관 간부 직원에 대해 안전보장에 관한 교육훈련을 매년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국 군사과학원**은 1958년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으로 창설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고 군사학술 연구기관이며 전군의 군사과학연구의 중심센터로서, 군 내의 연구사업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기구이다. '계획조직부'는 군사과학원의 학술활동을 계획하고 감독을 하는 동시에 전군의 연구활동 조직과 협조를 책임지고 있다. '전략연구부'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연구하고, '전역전술연구부'는 군대 작전과 지휘의 이론을 연구하며 군작전교범 및 조례를 편찬한다. '군제연구부'는 군대의 체제, 편제, 장비, 군사법류 및 군사제도를 연구하여 군의 공동교범을 편찬하고, '군사역사연구부'는 중국군과 세계 군사역사를 연구하여 편찬하면서 「군사역사」지를 간행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군사연구부'는 국제 군사정세와 외국 군사학술을 연구하고, '군사백과사전연구부'는 「중국군사백과」 전서를 편찬하는 사업을 담당하며, '모택동 사상 연구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군사이론과 모택동 군사사상을, 군사작전연구소는 군사계통 분석이론을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군사과학원은 군사역사와 전략연구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기관이다.

러시아 국방부 군사사연구소는 1966년에 창설되었는데, 주요부서로는 학술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추부서인 '학술연구처'를 중심으로 '학술지원처', '군사사학술 위원회', '도서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학술연구처'는 주제별로 세분화되어, 고대로부터 1920년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사부', 1920년대부터 현대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에트군사사부', 세계전쟁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외국 군사사부', 그리고 전쟁과 정치, 군사지리학, 인물, 군사사상, 지도 등의 분야에 관한 연구편집을 맡고 있는 '군사백과사전부' 등 4개 부서가 있다. 특히, '군사사학술위원회'는 학술연구자 양성사업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맡고 있다. 이외에도 '군사사연구소'는 군사사 일반이론 및 방법론을 연구하고, 군사 통계를 편찬하는 독립된 분과를 두고 있으며 연구원들의 국내·외 대외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독일의 군사사연구소는 1957년에 창설되어 현재는 '교육정보조사부', '연구부', '편집부'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정보조사부'는 군내 역사교육을 위해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세미나 개최와 박물관에 대한 통제업무를 비롯해 군 및 행정부 부서 혹은 일반인으로부터 군 역사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등을 담당하며 2002년부터는 역사교육을 위한 계간지 「군사역사」를 발간하고 있다. '연구부'는 창설할 때부터 설치된 부서로서 '일반역사과', '제2차 세계대전과', '서독사과'로 편성되었고, 통일 후 '동독사과'가 새로 생겼다. 각 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사를 비롯한 전쟁사와 동·서독 군대사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편집부'는 창설 이래 군 내·외에서 필요한 저서와 자료집을 편집, 발간해왔는데 군 내부는 물론,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40개 이상의 일반 출판사와 협력하여 출판하며 군사사 관련 학위 논문이나 국제회의 세미나 논문집도 간행하고 있다.

프랑스 육군 전사연구소도 1919년에 창설되어 '고문서부', '자료연구출판부', '행정조사부', '행정부' 등으로 편성되어 육군사에 관한 고문서 관리 및 열람 지원, 문헌수집과 군전승품을 유지 보관하고 있으며, 아울러 군에서 발간되는 역사잡지를 편집하고 군 및 민간 연구기관과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Ⅲ. 전사연구의 발전방향

#### 1. 전사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전쟁론에서 “전쟁의 불확실성(Fog of war)을 극복하고, 전장상황을 직시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는 ‘군사적 천재’로서 이

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교육에 의해 양성된다.”라고 하였으며, 군사적 천재 양성 방법에는, ① 직접 전쟁을 통한 경험 축적 ② 제3국의 전쟁에 파병하여 경험 축적 ③ 전쟁 관찰단 파견 ④ 전사연구를 통한 간접경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6)</sup>

전사(戰史)연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투 경험자가 전무(全無)한 현세대 군간부에게 전쟁의 간접경험을 통하여 감각을 익히고 전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때로는 실전보다 과거 전쟁을 통해서 교훈과 값진 지식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국의 전쟁사에 정통해야 하는 것은 군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도리이자 본분이다. 전사 속에는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전쟁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으므로, 전사는 전쟁을 공부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디딤돌과 같으며 군사학 입문(入門)에 필요한 기본 교과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사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먼저, 1차대전시 「캉 프레 전투」에서 폴러의 「마비이론」이 수립되고<sup>7)</sup>, 「아미앵 전투」 때 전차의 집중적인 운용이 2차대전 당시에는 독일군의 「전격전」으로<sup>8)</sup> 탄생되었듯이, 전쟁의 본질과 양상을 이해하여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프랑스의 「방어선 사상」이 마지노선을 구축하고<sup>9)</sup> 화포를 대구경화시켰으며, 독일의 「전격전」이 등장함으로써 전차·장갑차, 급강하 폭격기·자주포 근접 보급 등의 군사전략이 발전되었고, 「겔프전」이 효과중심의 작전(Effects-based-operation)과 정밀 타격능력(유도미사일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과 같이 군사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다면 효과적인 군사력 건설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주 6)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저·김만수 옮김, 『전쟁론』, 2006, 제1편 제3장.

7) 마비이론은 영국의 “폴러” 장군이 주장한 것으로, 전쟁은 전투의지가 있을 때 지속되기 때문에 이 전투의지를 말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마비를 달성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전쟁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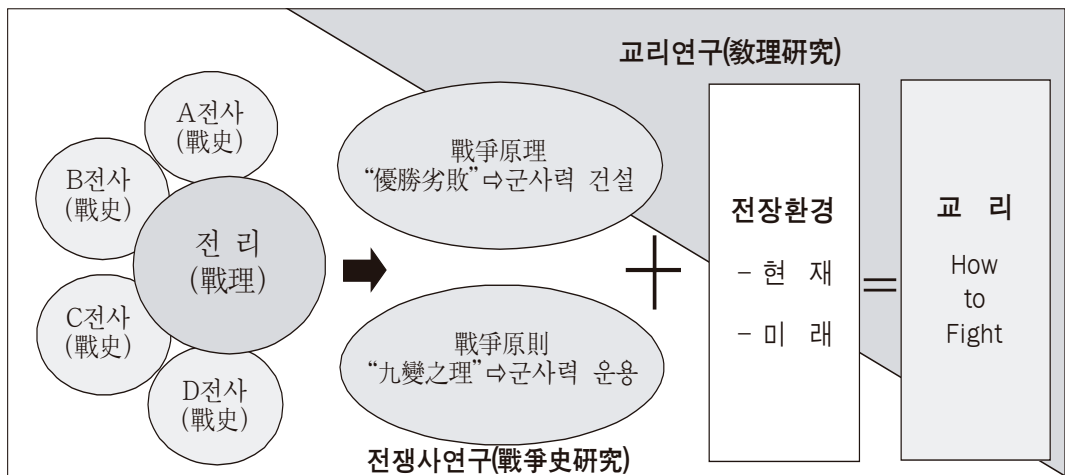
8) 전격전이란 우세한 화력으로 적을 신속히 기습공격하여 적진을 교란시키고 적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군사작전이다. 전차, 급강하 폭격기, 자주포 등으로 편성된 전투부대가 좁은 전방지역을 신속히 공격함과 동시에 적의 주요 전투형태를 무너뜨리는 것이 특징이며, 2차대전 당시 독일은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침공시와 북아프리카 사막전에서 사용하였고, 1944년에는 미국의 G·S 패튼 장군도 유럽전에서 채택한 바가 있다.

9) 마지노선은 프랑스의 방어선이며 당시의 육군 장관인 A마지노(1877~1932)의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으로, 총 연장은 약 750km로서, 북서부 벨기에 국경에서 남동부 스위스의 국경까지 이르고, 중심부는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을 따라 이어진 영구 요새선이였다. 1927년에 착수하여 10년 뒤인 1936년에 완성하였는데, 총 공사비는 160억프랑이나 들여 난공불락의 요새로 생각하였으나, 1940년 5월, 독일의 기습 및 전격작전으로 함락되고 말았다.



셋째, 프러시아 프레드릭 대왕의<sup>10)</sup> 「7년 전쟁」을 연구한 결과 나폴레옹의 천재성이 나왔듯이, 전술 전기를 꾸준히 분석 및 연구한다면 미래의 다양한 전장상황에서도 조치를 탁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투제원을 DB화하여 전투실험 등을 통해 신교리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고대사로부터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사에서 동일유형을 분석하여 DB화하는 노력은 전투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쟁에서의 무모한 모험 위험성을 감소시키며, 계산된 모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참고적으로 전사연구를 통한 신교리 연구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전사연구를 통한 신교리 연구 지원체계

끝으로, 전사연구는 전투실상을 이해하고 교수의 방편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군인의 단순한 기본소양이 아니라 필수 과업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전사연구의 현 실태와 발전방향

### 가. 전사연구의 현실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명장 롬멜(Rommel)은 미군(美軍)을 “세계에서 가장 잘 배우는 군대”라고 평했다. 미군이 북아프리카에 처음 상륙했을 때 그들은 오합지졸(烏合之卒)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편제는 산만하였고, 협동작전(協同作戰,

주 10) Frederick the Great(1712~1786) : 프러시아(독일의 전신)의 2대 황제로서 프러시아 공국을 훗날 통일 독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함.

Cooperating Operation)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도 못했다. 그러나 미군은 짧은 기간의 북 아프리카 전투를 거치는 동안 우수한 군대로 급성장하였다.

노르망디에 상륙한 이후부터 미군은 가장 정예화(精銳化)된 군대가 되어 있었다. 이는 미국이 서부 개척시대부터 가져온 역사적 사명을 새롭게 되새기며 전쟁에 대한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대한 명장들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투현장(戰鬪現場)과 일상생활 속에서 늘 공부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堅持)해 왔다. 따라서 군 간부들은 역사를 통해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전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므로<sup>11)</sup> 전사연구의 현 실태를 냉철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 1) 사회의 역사교육 현상

먼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의 『탈무드』와 같은 우리 고유의 민족사상 유지 노력이 없다는 사실과 우리 장병들이 군입대 전에 사회에서 받는 역사교육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표 2〉 역사교육 현황

구 분	교 육 과 목 · 시 간
학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학교(1~3H/주, 필수) : 향토사, 문화사, 생활사</li> <li>고등학교(4H/주, 선택) : 한국근현대사, 세계사</li> </ul>
대학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과목으로 편성 - 수험생 기피현상</li> <li>※ 36개 선택과목 중 3과목 편성 : 국사, 한국현대근대사, 세계사</li> </ul>
국가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법고시에 역사과목 미편성(행정고시에 한국사 편성)</li> </ul>

또한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친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 교육은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아이들 미래를 국가에 맡길 수 없어 조기유학 보내는 국민들이 급증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건전한 역사의식 및 국가관 확립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및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같은 역사 침략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역사 및 전사교육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주 11) 육군본부,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길』(육군본부, 2004).

### 2) 육군 내 교육기관의 전사교육실태

일본은 군사교육의 5~10%를 반드시 전사를 교육하는데<sup>12)</sup> 반하여 우리 육군은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전사교육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육사, 3사관학교 및 육대 외에는 전사전문 교관이 없으며 유경험자가 부족하므로, 타 과목을 담당하는 교관이 전쟁사를 2~3개월 연구 후에 과목을 겸직할 수밖에 없어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표 3> 양성교육과정

구 분	시 간(%)	교 관	비 고
육 사	96H(6.2)	전 담	전공(4년), 세계/한국전쟁사, 전략
3사교	16H(2.4)	전 담	학사/여군, 간부/특수, 전쟁개관
학군교	20H(3.7)	겸 직	후보생(3/4년), 전쟁개관
간호교	32H(6.7)	겸 직	후보생(4년), 전쟁개관

<표 4> 보수교육과정

구 분	시 간(%)	교 관	비 고
육군대학	152H(8.6)	전 담	한국/세계전쟁사
포병학교	16H(1.6)	겸 직	병과전투사
화학학교	14H(1.5)	겸 직	병과전투사
중 행 교	20H(1.6)	겸 직	부관, 헌병, 경리, 정훈

그러므로 피교육생들이 전사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물론 전사교육의 목표달성에 제한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 때 전사교육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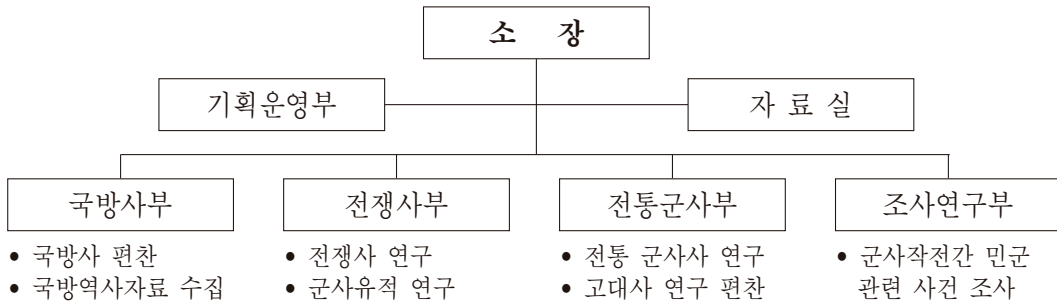
### 3) 정책자문과 신교리 연구를 위한 전사연구기능 미흡

전사연구를 통한 신교리 연구지원체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그동안 군 내 전사를 연구하는 기관은 육군 「군사연구소」 외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밖에 없는데, 그것도 선진국의 전사연구기관에 비하면 많은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주 12) 황성철, 「전사교육 절실하다」, 『국방저널』, 2005년 4월호, p.91.

인원은 두 기관을 합하여 석·박사급 연구원이 11명 정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로 정책 및 전략적 관점에서 전쟁사를 연구하는데, 6·25전쟁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뿐 세계전쟁사 및 현대전 분야는 거의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육군 간부들이 필요한 전투전사 위주의 연구는 미흡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는 ① 국방사, 군사사, 전쟁사의 연구 및 편찬 ② 군사작전 자료의 군사연구 ③ 군사관련 자료 수집, 보존, 관리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사」, 「한국전쟁사」, 「군사」, 「전사」, 「군사전략」 등을 편찬·발간하고 있으며, 국방 및 정책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전쟁경과를 기록하고 있다.<sup>13)</sup> 따라서 군사소양 제고를 위한 전쟁의 경과 이해에는 용이하나 교리 발전을 위한 전사연구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편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그 편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편성 : 38명

#### 4) 전사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앞의 <표 2>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 각국의 전사연구기관에 비하여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육군간부(현역·군무원) 중 전사연구 경험자는 극

<표 5> 전사연구원/교관 현황

( ) 전문인력

구 분	인 원	내 용	비 고
계	46(22)명	전문인력 : 교수, 3년 이상 경력자	
국방부 군편소	12(12)명	전문연구원 12명	박사급
육군 군사연구소	10(1)명	전문연구원 1명	석사급
육사/3사교	16(8)명	군교수 8, 순환직 8	석·박사
육대 전사과	8(1)명	군교수 1, 순환직 7	군교수 3급

주 13) 「군사편찬연구소」의 조직과 임무에 대해서는 조성훈의 앞의 글(p.259) 참조.

소수여서 각 병과학교 전사 교관은 타 과목 교관이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내에 편성되어 있는 전사연구원 및 교관의 현황은 앞의 표와 같다.

특히, 우리 육군의 심각한 전사연구 전문인력 부족의 원인 중의 하나는 인사의 대원칙인 “적재적소” 원칙을 간과하고 무조건 순환보직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구 직위에 행정직이나 기술직 자원들이 보직되어 있어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연구 직위는 2~3년 근무해서는 겨우 기초를 닦는 단계에 불과한데 장교들도 무조건 2~3년 만에 교류를 시켜버리므로 업무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육군 「군사연구소」 개편시 현역 및 군무원 대신 편성해주기로 결정하고 약속되었던 용역연구원 운용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걸프전 종료 후 인민무력부 예하에 「걸프전연구소」를 잠정 편성하여 연합군 평가와 이라크 패전 및 긍정적 요인을 분석한 후에 “온 나라 요새화”를 지시하고, 대비 책자를 발간하여 전군에 배포하였으며 중대급까지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쟁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 나. 전사연구 발전 방향

선진국에서는 정책부서와 학교기관, 그리고 민간연구기관에서 100~700여명 규모의 전문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분석을 통한 군사전략 및 전략개발, 신교리 개발 등 체계적인 전사연구를 활발히 함으로써 전투력을 발전시키고 있다.<sup>14)</sup> 우리 육군도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리라 기대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각 학교의 전사교육시간 확대 및 활성화

장병들의 건전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정립하고, 간부들의 창의적이며 전투적인 사고력 견지를 위해서는 우선 전사교육시간을 필요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사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첫째, 전사교육시간 확대 및 방법 개선면에서는, 현재 군 간부 양성 및 초급간부들의 보수과정에 대한 각 학교의 전사교육시간이 총 교육시간의 2~7% 미만이므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군사교육의 5~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전사교육을 군사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여 교육시간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교육방법은 교육사령부에서 연구하여 교육지침을 하달하겠지만, 양성 과정은

주 14) 황성철, 앞의 글.



전쟁개관을 이해하고, 보수과정은 병과전사 및 교리연구를 위한 전사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의 및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토의식 교육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전담교관을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 각 병과학교장 책임하에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병과 및 기능별로 지속적으로 전사자료를 발굴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사, 육대 및 각 병과학교는 전투발전업무의 수행기관이다. 전사는 교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전투실험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병과학교별로 병과교리 발전의 책임을 견지하고 관련 전사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육군 「군사연구소」는 육군대학과 육군포병학교 및 포병전우회의 관련 전사자료 제공과 연구지원하에 병과전사 제1호인 『포병과 6·25전쟁』을 발간하였고<sup>15)</sup>, 현재는 정보통신, 기갑, 공병 병과 전사가 작성중에 있다. 그리고 「군사연구소」 한국전쟁연구과에서는 육군의 야전 군 간부들이 항상 쉽게 휴대하여 전사를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사 작성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읽기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맞춤형 전사」를 연구·작성하고 있다.

앞으로 기타 간부들의 전사탐독 생활화 및 전사연구 방법 교육을 위한 각 병과 및 제대별로 전사독후감 및 논문경연대회 등을 실시하고 각 학교기관에 전사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전사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며 고대 및 현대 전쟁, 국지분쟁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전략 및 전술이론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육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사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2) 전사연구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군내(軍內) 부족한 전사연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역사관련 전공자를 확보하고 영관장교는 '전쟁사 부특기'를 부여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먼저, 그동안 육사·3사 교수 요원만 3년에 1명씩 전사연구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던 것을, 현재는 중·대위급 장교를 매년 2명씩 선발하여 역사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영관장교 중에 인문사회계열이나 역사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희망자 중 심의를 거쳐 부특기(790)를 부여하여 주·부특기 분야 반복보직과, 지휘관 보직기간의 단축, 계획인사 연기, 잠재역량 우대평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 관련 직위는 특성상 전문성이 필수적이므로 반복·장기 보직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주 15) 육군본부, 『포병과 6·25전쟁』, 2006월 3월 31일. 이 책은 최초의 병과 전사로서 2,000부를 발간하여 야전 및 학교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군내 전쟁사 관련 직위는 57개(연구원 19, 교관 38) 직위로서 <표 6>과 같으며 단계별로 보직을 부여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 6> 군내 전쟁사 관련 직위(57개)

현역/군무원

계 급	계	연구원	교 관	비 고
대령/2급	8	4/3	1/-	• 육군 「군사연구소」, 육대, 군사편찬연구소
중·소령/3~6급	36	6/6	23/1	• 육군 「군사연구소」, 육대, 3사교, 병과학교
중·대위	13	-/-	13/-	• 육사, 3사교, 병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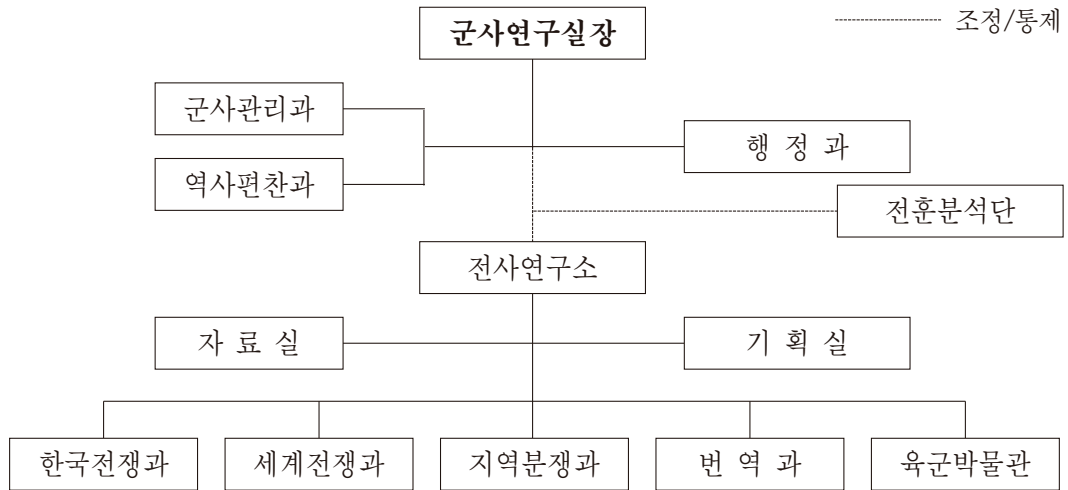
위관장교 때에는 전문인력으로 선발되어 역사학위 교육을 받은 다음 양성과정 교관 임무를 하며 중·소령 때에는 연구직과 전훈분석단 및 보수과정 교관을, 대령 때에는 연구직과 교수 및 교환교관 등의 임무를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쟁사 관련 군무원 직위 임용시에도 인사사령부에 자격요건을 제시한 대로 반드시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군사연구소」의 경우, 군사 관련 전문 연구인력의 확보는 군사연구의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군사연구소」 중에서도 특히 전사연구부서인 한국전쟁연구과·세계전쟁연구과, 그리고 장차 창설될 ‘지역분쟁연구과’는 반드시 전사연구를 위한 자질을 갖춘 인원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연구 여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육군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 및 군무원 중에서 전사 관련 학과, 예를 들어 한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국사학과, 사학과, 한국학과, 전사학과, 역사교육과 등을 전공한 인원 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단 「군사연구소」 전사연구부서에 소속된 인원의 경우, 외국과 같이 장교는 5년 이상, 군무원은 10년 이상 연구소에 소속시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보직 교체시에도 부특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같은 직군이나 연구소·학교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대 개편 때 확정된 2명의 군무원 보충과 11명에 대한 용역연구관 예산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정되어 정상적인 「군사연구소」로서의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전사연구소의 신설

「전사연구소」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연구소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과 연구소 설립 후 기대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금년 4월 1일부로 개편된 「군사연구소」는 인원감축의 대명제하에 부대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선진국과 같은 전쟁사 연구를 하는 데는 편성과 체계상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① 전쟁사

연구를 통한 정책자문, 교리 연구지원 및 자료 DB 구축 ② 육군의 공간사 편찬, 사료 수집, 전사자료 지원·관리 ③ 군 및 민간연구기관과 교류협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림 5>와 같이 편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5> 조직도

또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sup>16)</sup>, 전사는 기관별 특정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육군도 육군의 관점에서 관련 전사를 연구·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정책 및 전략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전사연구는 국방부에서, 전투사 분야는 육군에서 연구하여 상호 업무분장을 통한 보완관계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세계전쟁사 분야는 「군사편찬연구소」에서도 연구가 미흡하므로 육군에서 추진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군사편찬연구소」는 증편·인력보강이 불가능하므로, 육군 내 전사분야에 대한 지원업무는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사연구소의 지휘체제 및 운용은 2005년 2월 3일 정책회의에서 의결된 것처럼 육군차원의 전사연구 및 편찬을 위해 「군사연구실」의 예속기관으로 편성하여 「군사연구실」에서 관련 업무를 조정·통제하여야겠다. 그리고 업무영역의 확장을 고려하여 군사연구실장의 계급을 상향조정하며, 인력절약, 업무조정 및 통제의 효율성을 고려, 소요인원을 증편하되 단계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따라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육본 정책회의에서 의결되고 승인된 것과 같이 육군 「전사연구소」를 신설하여 <표 7>과 같이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 16) 2004년 12월 17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군사업무 관계관 회의시에 논의하였음.

〈표 7〉 업무영역 구분

구분	육본 군사연구실	육군 전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연구 계획/통제</li> <li>• 부대역사/군사재 관리</li> <li>※ 전사업무 조정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 정책과제/전사연구</li> <li>• 교리연구/교육 지원</li> <li>※ 육군정책/전투사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사 연구</li> <li>• 군사자료 수집, 보존, 관리</li> <li>※ 국방사 중심의 전사연구</li> </ul>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훈분석/전례연구</li> <li>• 부대역사 계보관리</li> <li>• 군사재/전적기념물 관리</li> <li>• 역사/군사자료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사연구를 통한 정책 조언</li> <li>• 역사/전사(公刊史) 편찬</li> <li>• 병과, 기능별 전사연구</li> <li>• 전사자료 DB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사(公刊史) 편찬</li> <li>•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li> <li>• 수집 보존 및 관리</li> <li>• 전쟁지원사 편찬</li> </ul>
비고	• 육본의 참모부	• 육본 직할 연구기관	• 국방부 직할 연구기관

또 국방부의 군사편찬연구소는 군사전략, 작전술 위주의 전사연구가 되어야 하고 육군 「군사연구소」는 주로 연대급 이하 제대에서 활용 가능한 소부대 전투, 기능, 병과별 전사 편찬 및 교훈을 도출하며 야전과 학교기관의 수요충족을 위한 전술적인 차원의 맞춤형 전사·전례집을 집중하여 연구하고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육군역사관 건립 및 육군박물관 활용과 자료실 운영체제의 개선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의 전사연구기관들은 모두 역사관(박물관)과 도서관·자료실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있다. 육군본부 「군사연구소」에도 외형상으로는 「육군박물관」과 자료실이 편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군사연구소」에 소속된 「육군박물관」과 자료실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군사연구소」는 육군 내 군사 관련 유물을 관리·전시하는 「육군박물관」을 예하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군사 관련 유물이 군사연구의 기초자료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편성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군사연구소」는 「육군박물관」에 대해 명목상으로 업무 통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활용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원래 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그 개선 방안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육군박물관」의 공식명칭 문제이다. 현재 「육군박물관」은 이전과 같이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육군본부) 육군박물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육군박물관」 내에 연구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육군박물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연구공간 및 자료실 등 실질적인 연구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육군박물관」 내 공간이 부족하면 육군사관학교에 협조를 통해서라도 「육군박물관」 소속 인원은 물론, 「군사연구소」에서 「육군박물관」의 유물을 연구할 때 필요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차 「육군박물관」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료 및 인적 교류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연구소」는 「육군박물관」을 통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각종 자료나 세미나·학회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부 인원의 파견 등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 계룡대에는 「계룡대 역사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계룡대 역사관」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육·해·공군본부가 이전하여 군 중심지로 변화한 계룡대지역에 군의 역사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군의 해외파병활동, 군 정보화, 과학화 등 발전된 모습을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과 연계하여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계룡대 역사관」의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참여가 필요한 점, 그리고 5,400여평의 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57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계룡대 역사관」이 건립되면 육·해·공군의 홍보관 역할은 물론 군사연구의 실질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계룡대 역사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현재 「군사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육군박물관」을 적극 활용하여 군사연구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군사연구소」에는 원래 도서관 및 자료실이 편성되어 있어, 일반도서 및 군사자료, 부대사, 육군 생산 문서 등이 관리되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육군 ‘일반자료실’이 ‘기록관리정보단’으로 전환되면서 자료실 운영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육군 ‘일반도서관’과 ‘군사자료실’ 소장 자료가 모호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더구나 통합 검색이 불가능하여 자료 열람에 불편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자료실이 2004년 이전과 같이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통합한 후에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자료실은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하는 「군사연구소」가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육군 ‘일반도서관’과 ‘군사자료실’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정의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현재 「군사연구소」 소속의 ‘군사자료실’ 및 역사자료실의 운영에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먼저 인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군사자료 수집을 담당할 인원이 편제되어 있지 않아 연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자료실'에 교범 등 일반자료가 비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출과 반납에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자료실 운영 여건도 매우 미비하다. 우선 자료실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장차 소장 자료가 늘어날 경우 이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되어, 다양한 자료를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에서 현재 「군사연구소」 소속의 「육군박물관」과 자료실 운영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제시한 개선 방안 중에는 단시간에 개선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도 있다. 현재 실현 가능한 것부터 꾸준히 개선하여 군사연구의 내실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5) 전사연구 업무체계 정립

끝으로 전사연구에 대한 핵심적인 업무체계를 정립하는 문제다. 먼저, 육군의 공간사(公刊史) 편찬을 위해서는 자체 연구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사, 전례, 병서, 전사부도(附圖)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담당관별로 1~2년 단위로 연구 및 편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군사연구지」는 전사연구 전문지답게 정책·전략·사상분야는 축소하고 전사분야 논문을 확대하며 각 병과 및 기능별 전쟁사 등 야전을 위한 기획논문을 많이 게재하여 「육군」·「군사평론」·「군사」·「전사」지와 차별화함은 물론 명실공히 전투사 중심의 전문지로서 공간사를 편찬하기 위한 자료 축적의 연구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둘째는, 전사연구에 대한 유관기관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2006년 4월 1일부로 「군사연구소」로 개편되면서 전사연구부서는 창설되다시피하였으므로 중기 계획에 반영한대로 선진국 전사 연구기관에 대한 견학이 조속히 승인되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도 위탁교육, 연수, 교환 교관 등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사업, 군 교육기관 및 민간대학 군사분야 교육지원, 자료공유 등 연구 및 교육업무 협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주대학교와는 금년 4월 5일 「공동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계속하여 군 및 민간 역사연구소 등 교류 가능한 군사사 연구기관과 상호 방문 및 협조를 강화하고 군사사학회, 전쟁학회, 역사학회(동·서양 사학회) 등과도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는, 용역사업 내실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관 자격 요건도 “중령 이상 현역과 예비역은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 유경험자”, “해당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으로 강화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연구과제도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명실공히, 육군본부 발간물에 대한 권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군사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연구 휴가와 학술연구지 게재료 지원 등이 있다. 연구 휴가는 소속 연구원들이 군내·외 학술연구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저서를 집필할 경우 적절한 기간의 휴가를 주어 연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술연구지 게재료 지원이란 군내·외 학술연구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게재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사연구소」에서 이러한 게재료를 지원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연구원들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등을 통해 연구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사항으로는 외국 자료 번역은 국가별 공식 연구기관의 공간사와 국내 미공개자료로서 양·질적으로 번역시 활용가치가 높은 것을 엄선하여 필요시 학술용역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참전자 증언 청취도 외국군을 포함한 6·25전쟁, 대침투작전, 월남전, 해외파병(PKF, 이라크전) 등을 대상으로 고려 요소를 충분히 망라하여 명부를 제작·관리(DB화 Program 개발)함으로써 공간사 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카메라, 캠코더, 녹음기, 노트북 등 증언 청취 소요장비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또한, Homepage에 전사연구에 관한 내용을 탑재하고 전쟁사 자료 CD를 제작하여 야전·학교 기관에 전사자료를 꾸준히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V. 결 론

지금까지 「군사연구소」의 설립과 개편 과정 및 대표적인 외국 전사연구 기관의 사례를 들어 특징을 확인하면서, 우리 육군 「군사연구소」와 전사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연혁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군사연구소」는 우리 군의 창군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그 기능과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역사가 변천하고 사회가 급변하는 등 개혁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그동안 군사연구에 대한 내용은 필자가 한국전쟁연구과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전임자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를 나름대로 현 실정에 맞게 정리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군 내의 각 학교 교육시간 확대 및 활성화, 전사연구 전문인력 육성·관리, 「전사연구소」 신설, 육군 역사관 건립 및 「육군박물관」 활용과 자료실 운영체제의 개선, 전사연구 업무체계 정립면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필자가 제시한 방향은 일종의 제안이라 할 수 있으며 더 좋은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좋은 안을 수렴하여 강력히 실천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하여 이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육군군사연구소의 일원으로서 여러 제현들의 지도 편달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나은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1. 박휘락, 『한국군사전략연구』, 법문사, 1989. 4.
2. 박휘락, 『현대군사연구』, 법문사, 1998. 2.
3. 백석주, 『우리나라 전란사』, 원민, 2006. 6.
4. 승영조, 『전쟁의 역사』, 책세상, 2004. 4.
5.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 집문당, 2001. 4.
6. 육군 군사연구실, 「육군 전사연구소 설립 정책회의록」, 2005. 2.
7. 육군본부, 「육군지」 제280호 26~29쪽, 2006.
8. 육군본부, 『위국헌신의 길』, 육군인쇄창, 2004. 7.
9. 육군본부, 『포병과 6·25전쟁』, 육군인쇄창 2006. 3.
10. 이종학, 『한국 군사사 서설』, 서라벌 군사연구소, 1991. 7.
11. 임용한, 『전쟁의 역사』, 해안, 2001. 4.
12. 정명복, 「포병연대 전술훈련평가」, 「전투발전」 제111호, 2003. 3.
13. 정명복, 「호국훈련 발전방안」, 「전투발전」 제105호, 2001. 9.
14. 조성훈, 『외국 군사사 연구기관의 조직과 활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15. 조영갑, 『한국 위기관리론』, 팔복원, 2000. 1.
16. 조정, 『전쟁의 교훈』, 양서각, 2005. 11.
17. 조지연, 『민족생존전략』, 병학사, 1983. 7.
18. 조지연, 『작전전략』, 을지서적, 1988. 2.
19. 주시후, 『전쟁사』, 홍익재, 2006. 8.
20. 클라우제비츠 저·김만수 역, 『전쟁론』, 갈무리, 2006.
21. 황성칠, 「전사교육 절실하다」, 『국방저널』, 2005. 2.

## 조선시대 의병활동 연구와 군사연구소의 역할

### 목 차

1. 머 리 말
2. 의병연구의 정신사적 전통
3. 기록자료의 철저한 수집, 보완
4. 인접자료의 광범한 동원과 활용
5. 연구성과의 종합, 전산화 필요성
6. 의병연구 활성화를 위한 군사연구소의 역할
7. 맺 음 말



이 해 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 1. 머 리 말

본고는 조선시대 의병사적에 대한 연구 경향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극복할 연구방향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대개 조선시대 지역 의병활동은 연대기적 서술이나 인물 및 정신사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이러한 인물중심의 연구를 통해 의병정신과 그를 기리려는 교육적 목적, 선양의 기능은 달성된 셈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의병사 연구를 살펴보면 대개 대상과 목적, 연구자의 의식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개략적으로 분류하여 본다면 대개 다음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앞선 형태이자 아직도 기본적인 연구 형태가 바로 인물중심의 전기적 연구이다. 전기적 연구는 주로 인물의 성장과정이나 사상 기반, 충절의 행적, 영웅적 일화들이 중심을 이룬다. 둘째는, 의병유적에 대한 연구로 의병전투의 사적이 남아 전하는 유적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의병의 정신과 사적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대개 이 연구는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유적 정비와 보존, 활용을 겸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다. 그리



고 셋째로는, 전투사적 접근이다. 이는 주요 의병전투에 대한 전술적 성과와 동원 무기, 의병 조직, 전과 등이 주된 관심이 된다.

물론 이들 세 유형의 연구 경향은 독특한 목적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완성도나 종합적인 목표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입장에 서면 아쉬움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즉 관념적인 인물 행적 중심(특히 후손의 추송관념)의 서술, 그리고 생활사 관련 주변 자료의 정리 미흡, 나아가 전사적 관점의 자료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성과의 토대 위에서 보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향후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기록자료의 철저한 발굴과 정리, 인접자료의 광범한 동원(군사지리, 유적, 일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연구소에 기대하는 사업으로 의병사 연구성과의 종합(전산화) 필요성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 2. 의병연구의 정신사적 전통

의병사 연구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선시기의 의병장이 장군이기 이전에 선생이었다는 점이다. 위국충절의 정신력과 기개의 싸움이 본질이었음을 결코 무시해서는 아니된다. 오늘날 일부 문화비평가들 중에는 유교문화를 부정적으로 매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전근대적, 보수적, 공리공론, 비실용적, 당파성, 추상적, 관념적 등 극복대상으로 간주되면서 부정적 의식이 팽배하였던 탓이다.

그러나 이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할 점은 만약 유교문화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었다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신 사조로서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겠나 하는 점이다. 또 충절의 행적에서 보듯 과연 목숨을 내어 던지며 환란을 자초한다든지, 도끼를 등에 지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행적은 결코 보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천가이자 현실개혁의 이론가들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특권세력의 사회경제적 독점에 반기를 들고, 향촌의 자율성을 추구하던 양심세력이기도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시대 수백 년이 양반 중심의 시대가 될 수 있었다.

이들 선비정신은 결코 보수적·관념적이라고 평가되기보다 오히려 개혁·혁신적이고 강경하였으며, 특히 의병활동에서 보여지듯 목숨까지 버리는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었다. 의병의 중심인물인 조선의 선비들은 王道, 道學, 聖賢 政治를 추구했던 도덕집단이었다. <君子와 小人>의 격을 가르고, 비판과 공론(여론)을 통한 민의의 대변자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 실천을 중시하였다. 과거 조선시대 선비의 삶은 어쩌면 오늘의 지식들에게 오히려 귀감이 될 만하다. 그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 사회문화적 삶, 개성과 자존심의 삶 등 제 부면에서 현대인들이 귀감을 삼고 부러워해야 할 모델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박약한 의식이나 지도력이 상실된 오늘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들 충절인물들의 사상과 인맥은 분명 조선시대보다도 오히려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더욱 재조명되고 재인식될 가치임에 틀림없다. 또 다른 한편에서 살펴보면 이같은 대부분의 충절인물들은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지켰지만 그 후손은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모두를 오늘에 되새기고 기리는 일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도 할 만하다.

의병사 연구나 충절 논의는 선비정신이나 양반사족(가문)과 관련되고 있다. 그런데 의병이나 의병사적에서 가문의 성장배경이나, 지역적 정서는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 즉 이들 충절인물과 충절가문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보급 정착 및 사족중심의 향촌지배체제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그 역사적인 의미가 부각되어져 왔다. 주지하듯이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은 그 정착시기부터 두문동 72현, 사육신과 생육신, 사화기의 사림정신으로 이어지면서 절의와 도의를 배경하는 사림세력이 향촌사회에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장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지방 사람들은 小學과 사창, 향약의 보급, 유향소 등을 통해 향촌지배와 자율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그들의 권위와 이념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자체 결속을 다져갔던 것이다. 대부분의 조선 전기 지방세력들이 서로 인척관계로 얽혀있고 道學的인 분위기로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은 이같은 사회배경에 연유된 것이었다.<sup>1)</sup>

그리고 이같이 절의와 충절이 최대의 덕목으로 지방사회에 확산, 정착되어가던 상황에서 왜란과 호란은 발발하였던 것이고 이에 각 지역에서는 국난을 구하겠다는 의병과 전투에서 순절하는 인물들이 수없이 배출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몸을 던지고, 혹은 가솔과 재산을 총동원하여 국가의 환란을 구하고자 나설 수 있었던 데는 대체로

- 가. 성리학의 기본정신(선비정신과 사상)
- 나. 향촌사회의 지도력(책임)
- 다. 의병활동이 가능한 사회경제적 토대(물적인 기반)

주 1) 이해준, 1997, 「중원지역 인물·성씨 연구의 현황과 과제」, 『중원문화 논총』 1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를 동시에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좀 더 부연하면 수많은 의병과 그들의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서 가문의 선양이나 충성을 전제한 국가윤리적인 차원과는 별도로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설명하고 이해하는 의식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즉 한 의병장의 공적만을 설명하는 일에 못지않게 그들의 사상적인 성격이나 학연, 혹은 지연과 혈연을 바탕으로 한 의병활동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 그들이 의병을 일으켰었는가, 혹은 어떠한 배경과 인연으로 의병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내는 일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 3. 기록자료의 철저한 수집, 보완

의병사 연구에서 기초적인 기록자료(사료)의 수집은 최우선의 작업이며, 대체로 모든 연구가 이 부면에서 일정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 정사나, 의병관련 기록자료(일기, 충절기록), 문집자료 등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조선왕조실록이나 전투과정을 현장에서 보고 기록한 난중일기류 자료들은 당대의 자료이면서 비교적 객관성과 전후의 큰 흐름을 증빙하고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최근 각종 기록자료의 전산화와 검색방법의 개발로 추가될 자료의 양이 몇 배로 증대되고 있으며, 연구의 진전에 따라 검색용어도 매우 다양해졌다. 그런가하면 관련 시기, 관련 인물의 문집 자료 및 기록물에서 의병관련 기록의 검출사례도 많이 조사되고 있다. 문집의 경우 해당 의병 사적에 직접 관련된 인물의 실기나 유집은 당연히 검출되었겠으나, 관련 사적을 기록하거나 보았을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의 문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당시 그 지역에서 생존했던 인물이나, 지방 관리, 혹은 직접 연관 인물(처가, 외가, 서원·사우 제향인, 유배자 등)의 문집이 모두 검색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문집에서 전체 내용을 샅샅이 뒤져볼 필요가 있으며, 詩文, 記文類나 편지글, 혹은 일기나 年譜에서 의병사적과 해당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할 자료를 얼마든지 보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문집류 자료 이외에 지리지, 읍지나 고문서, 금석문 자료도 이들 기록자료를 보완하는 주요 자료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원의 창건과 제향에 관련된 고문서라든가, 충절포상이나 증직과 관련되는 문서에서 또 다른 의병관련 사료를 수집할 수가 있는 것이다.<sup>3)</sup>

주 2) 아세아문화사의 기획으로 출간된 「임진왜란관계문헌 총간」(전 3책, 1984)이나, 각 지역별로 사료집의 형태로 임진왜란 사료집이 편간되기도 하였다. 전남 영광의 경우는 향토사료집 제13집으로 『영광임란사료집』(1991)에 망라하고 있다.

3) 이해준, 1996 「한말~일제시기 “생활일기”를 통해 본 촌락사회상」, 『정신문화연구』 5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그런데 기록자의 경우 후대, 후손의 추송자료 정리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광범한 자료수집은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분석을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충절인물의 선양작업은 특별히 당시에 선양과 포장을 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은 3~4대 이후나 그보다도 훨씬 이후(전라도의 경우 『湖南節義錄』이 편찬되던 정조 말년에 집중)에 이루어지고 있다.<sup>4)</sup> 따라서 200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세월이 흐른 뒤에 이루어지는 포장사업에 관련되어 각 가문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미묘하게 나타나기도 하였고, 시비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포장되던 당시의 후손들이 지녔던 사회적 지위여부에 따라 사실이 과장, 혹은 축소된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되어진다. 결국 충절의 사적이 당시가 아닌 후대에 재평가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같은 충절인물인데도 어떤 사람은 임란 직후에 배향되어 사적이 기려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200년 후 어떤 사람은 400년 후에야 제향을 받고 있다. 물론 이는 사적이 불명확하여 그리된 경우도 있지만 각 시대의 가문 지위, 경제력과 상관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이에 따른 자료의 순도 분석(비판)과 추송의 사회적 성격을 철저히 고려하는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의병 충절행적은 후대에 추앙·포장되는 경우(증직, 서원추배 제향, 정려포장, 유허비 등)라면 그 시기가 언제이고, 그 과정상 지방사족 및 관련 가문의 사회적인 지위와 노력을 읽어내려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사실 충절의 사적 그 자체보다도 포장의 결과가 더욱 중요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문중적인 기반의 마련과 그 성장과정, 문중인물의 배출과 그 영향력 등은 충절사적을 밝혀내는 일과 함께 부수된 각 시대 지역사를 복원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의병 행적은 의병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 혹은 학연·혈연의 연대일 경우, 즉 義旅의 문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병사적의 기록 확인과정에서 해당 지역 각 가문이나 인물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간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가깝고, 혹은 同志의이거나 姻戚일 수도 있고, 師弟관계나 同學일 수도 있다.<sup>5)</sup> 결국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의 생각을 가진다. 아무리 충절의 정신이 마음속에 고여있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누구와 함께라든가

주 4) 이해준, 「죽어야만 의병이라」, 『역사 속의 전라도』, 다지리, 2001.

5) 예컨대 전남 화순지역의 지역출신 의병장 김천일을 연구하면서, 관련 義旅와 의병활동을 망라하는 구도로 연구서를 간행한 바 있어 좋은 예시가 된다.(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지방의 임란의병활동』, 1988)



평소 믿고 신뢰하던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더욱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충절의 행적이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역민의 협조와 참여하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당시 조상들의 상호관계가 밝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지역의 정신사적인 지주와 역사 실상까지 동시에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참여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도 눈여겨봐야 한다. 물론 당 시대의 지도층으로서 사족이나 명망인이 충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같은 행적도 많은 수의 민중 참여가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 영웅같은 몇 인물의 역사만으로는 현대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충절이 지배신분층만의 행적인 것처럼 서술되던 방식은 오늘에 와서는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조직과 물자와 행적이 충절의 정신과 함께 종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실제의 모습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위상도 함께 확인하게 될 것이다.

#### 4. 인접자료의 광범한 동원과 활용

지난 10여년에 비해, 최근 한국사학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사’나 ‘민중생활사’, ‘역사의 대중화’ 등에 대한 이해에 많은 관심이 두어져 있다. “정치사보다는 문화사, 제도사보다는 생활사, 영웅사보다는 민중사, 변혁사보다는 구조사, 남성사보다는 여성사”로 보완, 확대되어 가는 변화 추세는 바로 그러한 예들이다.

역사적 사실이 골동화되고 박제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했던 당 시대의 생활사가 보다 면밀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지리적 조건이나 교통로와 무관하게 전쟁사가 戰果중심으로 기술된다거나, 의병의 수가 부풀려져 의혹의 대상이 되거나, 의병장은 많으나 그를 도운 의병 장졸의 명목은 보이지 않는 의병사는 문제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식과 사료의 정리를 염두에 두었을 때 마지막으로 주목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인접자료들에 대한 관심이다.

흔히 역사연구는 자료에서 출발하여 자료에서 끝난다고 하는 말이 있다. 이는 자료의 뒷받침 없는 역사연구는 생명력과 객관성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역사학에서 자료를 떠난 의식이나 방향성은 항상 불안스럽고, 그 결과 연구자들도 ‘논리의 유연성’보다는 ‘자료의 축적량’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물론 이는 매우 타당한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소위 역사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자료’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쓰여지지 않은 부분의 자료를 다른 연구분야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수집·정리하여 보완하고 있다. 그러

나 역사학은 그동안 구체성과 현장성에 비교적 둔감하면서도 학문적 권위를 잘 지탱해 온 행운을 누려왔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그런 현장자료와 정리에 대한 폄하를 일삼아 왔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그리고 실은 아직도 역사연구의 큰 과제가 바로 이점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아는 역사 연구자는 그리 많지 않다. 말로는 역사학의 종합 구조 틀을 가지고 보다 높은 곳에서 관조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예컨대 민속학·인류학·사회학·구비문학 등의 제 분야에서 확보한 수많은 생활사 자료들을 해석할 만한 기본체제와 인식이 수립되지 못한 역사학의 의식수준 상태에서 그런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의병사가 단순히 전투사, 국지전사의 기록, 그리고 저명 의병장의 행적 기록으로 일관될 경우 우리에게 의병의 충절행적이 보여줄 많은 부분이 제한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후손들의 추송자료는 대개 행장이나 전기, 유희비 같은 후대의 추송 유적이 그 주요 대상이다. 이들 추송기록은 대개가 인물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모두가 대장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한 사람의 공적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며 전후문제나 상대적인 관계가 모호한 것이 많다. 역사적 사실이란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가 일관되게 설명되어야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소위 6하원칙으로 설명되어져야 확실한 사실로서 분석자료가 된다.<sup>7)</sup>

또한 이 경우 반드시 기록된 역사기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역전투의 경우라면 지형이나 지명, 또는 기록 이외의 구비(구전)자료를 통한 의병행적의 구체화, 일화와 전승담을 정리 검토하는 작업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sup>8)</sup> 기록되지 않은 자료까지를 망라하면 당시 지역의 분위기나 서로 연관되는 지역민의 협조관계, 전투나 행적의 실상(혹은 당 시대의 지역 사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전투사와 관련된 지형과 교통로는 의병활동 이전, 그리고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진도의 울돌목은 충무공의 명량대첩으로 유명하지만, 그

주 6) 이해준, 2001 「생활사연구의 역사민속학적 모색」, 『역사민속학』 13, 한국역사민속학회.

7) 최효식, 『경주부의 임진항쟁사』(경주시 문화원, 1993)는 지역 의병사의 정리연구서로 이러한 전·후, 좌·우의 흐름을 잘 정리하였다. 그런가하면 최영희, 최근목, 조원래 등의 『임진왜란과 이치대첩』(충남대와 금산군, 1999)도 지역 의병사를 종합 조명한 점에서 참조가 된다.

8)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 석주관 칠의사』(1990, 목포대 박물관)의 경우는 구례 석주관 칠의사 사적을 정리하면서 (1) 석주관의 영사지리, (2) 성의 축조방법, (3) 의병항쟁사, (4) 각종 고문서와 사적기록의 일괄 정리, (5) 관련 인물일화와 지명 등을 망라하는 구도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한편 『임란·정유재란과 진도』(진도군, 1992)도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무명용사 묘역을 조사하면서 구전 및 일화, 그리고 주변의 역사상황을 정리하여 유적의 의미를 정리한 사례이다.

이전 시대에 왕건과 견훤이 자웅을 겨루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몽연합군과 삼별초가 싸운 전적지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공주의 역사도 차령과 금강을 논외로 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역사의 길목마다 비슷한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침입로와 방어선이 만들어진다. 그런가하면 그런 곳에는 어김없이 지명 전설이나 지명 유래가 있게 마련이다.<sup>9)</sup>

단 이러한 인접자료는 수집과 함께 철저한 분석과 비판, 종합과정이 이루어져야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전인수식의 무리한 해석이나, 결과에 맞춘 일화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시되거나 자료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관련 전설이나 지명, 일화 등은 일단 수집되어 정리되어야 한다. 한편 필자는 이들 유래나 전설 등등이 중요한 자료 제시어(지침) 역할을 하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는 키워드로서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더욱 유의하고 있다.

## 5. 연구성과의 종합, 전산화 필요성

한국 군사연구, 특히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의병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필자는 이제까지의 연구성과와 자료가

[지역별]

[인물별]

[시기별]

[자료유형별]

로 하나의 콘텐츠(원형자료)로서 데이터-베이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데이터가 확보되고 분류되어 연구자나 이용자에게 공급될 때, 의병사 연구의 수준과 심도는 증대될 것이고, 우리가 목적하는 의병사적의 현대적 계승도 올바르게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풍부한 콘텐츠는 군사문화 축제와 이벤트가 기획되거나 특별한 충절사적의 정비나 복원과정에서도 필수불가결의 재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전시자료·교육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그런가하면 의병사의 지역간 자료 교류나 비교, 연관성 검토를 통한 연구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000여개의 콘텐츠가 조사·정리된 뒤, 그중 단편·분산적인 콘텐츠를 제한 2~300개의 콘텐츠가 5~6종류의 내용과 특색있는 묶음으로 조합(소프트웨어)될 때

주9) 김정호, 이명현의 『전남의 옛 鎭·營』(번역, 향토문화진흥원)은 전투의 현장이자 유적으로 군사 성지와 영성을 자료로 확보한 사례이며, 이해준, 「성터유적과 향토사연구」(『향토문화』 9집, 1997, 한국향토사 전국협의회)도 그러한 가능성을 연 글이다.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교육과 계승의 가치가 생성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객관성, 상징성, 정체성, 경쟁력이 있는 하나, 둘이 바로 하드웨어로 집중 육성되어 ‘대표’가 되어야 한다.<sup>10)</sup>

현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의병사적과 연구물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사장되어 있다. 이들 자료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작업이 바로 종합 전산화이다. 우선 다양한 의병사 자료(기초데이터, 콘텐츠)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배열하여 전산화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또 다른 자료의 발굴, 연구 아이디어와 자료의 공유, 나아가 연구자간의 네트워크와 사후 보완방식 논의도 가능해질 것이다.<sup>11)</sup>

이를 통하여 각 지역의 의병사, 그리고 다양한 연구자의 논문과 기록자료, 일화들이 종합적 차원에서 자료화되면 연구의 수준향상은 물론 지역별, 층위별 연구의 종합이라는 이상적인 연구로 승화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 6. 의병연구 활성화를 위한 군사연구소의 역할

지금까지 조선시대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성과와 자료는 물론 현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의병사적과 유물 및 자료를 발굴하여 정리하고 전산화하는 것은 방대한 양의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 군사연구소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육군본부 군사연구소는 군사자료의 수집 및 관리, 부대 역사 및 국내·외 전사편찬을 담당한 기관이다. 군사연구소는 1949년 ‘작전사 편찬위원회’와 1951년 ‘전사감실’을 모태로 한다. 그 후 1953년 ‘군사감실’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71년 ‘군사연구실’로 독립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으며, 결국 2006년 ‘군사연구소’로 확대·개편되었다. 그리고 현재 군사연구소는 ① 군사업무 계획 및 시행, 지원 ② 육군 역사 관리 및 통제 ③ 군사 및 전사자료 수집, 보존, 관리 ④ 국내·외 전사 기록 및 연구 편찬 ⑤ 전·평시 전훈분석반 운용 및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사 및 자료 정리는 군사연구소 본연의 임무라

주 10) 이해준, 1998, 「한국지역문화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98 세계문화엑스포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1) 이해준, 1998, 「지역문화 연구의 과제와 자료활용 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집, 역사와 문화학회 ; 2001, 「지역기록물 관리기관 설립과 운영방향」, 『호서사학』 30, 호서사학회.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군사연구소는 전국적으로 치밀하게 분포되어 있는 육군이라는 체계화된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사 및 자료정리 작업을 군사연구소보다 더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는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 군사연구소에 약간의 인원과 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조선시대 의병활동 연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의병관련 자료들을 정리·연구하는 작업이다. 이는 육군 예하부대를 활용한다면 각 지역의 의병 사적을 조사 및 정리하는 작업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향토방위사나 전략·전투사를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위에서 언급한 사적·자료 정리 및 연구 작업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각급 부대를 단위로 향토방위사나 전략·전투사가 정리된다면 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셋째, 각종 기록자료집의 간행과 교육자료의 개발, 충절 사적지의 전시와 홍보자료화 작업이다. 의병활동 연구의 최종적 목표는 연구성과를 교육·홍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교육에 이용한다면 지역사회에서 군의 위상도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시관, 자료관, 유물관, 기록관의 운영이다.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기관의 설립에는 많은 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 의병활동 연구와 관련하여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사업들을 군사연구소에서 추진한다면 의병사 연구는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군사연구소의 위상 역시 제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7. 맺 음 말

이상에서 조선시대 의병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경향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의병사를 연구할 때는 의병활동의 사상적 배경이 유교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병의 중심인물인 선비들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신 사조였던 유교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왕도·도학·성현 정치를 추구하였고, 비판과 공론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였으며, 향촌의 자율성을 추구하였다. 특히 이들은 의병활동에서 보듯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의병사를 연구할 때에는 충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문의 배경이나 지역적 정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조선시대 유학의 정착 과정 및 의병활동의 토대,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 유학은 절의와 도의를 중시하는 사림세력이 향촌사회에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정착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왜란과 호란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의병이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성리학의 기본정신으로 무장하였으며, 향촌사회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의병활동이 가능한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서 활약하였다. 따라서 의병활동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병의 사상적 배경이나 가문의 성장 배경, 그리고 지역적 기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의병사 연구에서 최우선되는 작업은 기초적인 사료의 수집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료인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사료와 함께, 전투과정에서 현장을 보고 기록한 일기류, 사상적 배경 등이 나타나 있는 문집 자료 등이 있다. 이렇게 해당 의병활동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사료 이외에도, 관련 인물들의 문집이나 일기 등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기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는 지리지·읍지·고문서·금석문 자료 등이 있다.

이러한 수집과 함께 자료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분석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충절 인물에 대한 선양작업은 특별히 당시에 선양과 포장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3~4대 이후나 그보다 훨씬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충절의 사적은 당시가 아닌 후대의 재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가문의 지위 및 경제력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충절 사적은 후손들이 지녔던 사회적 지위 여부에 따라 과장, 혹은 축소된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수집된 사료에 대한 철저한 비판은 사실을 복원하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의병의 행적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역민의 협조를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리 충절의 정신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위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절 사적에는 충절의 정신과 함께 그것이 가능했던 조직과 물자가 종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지역의 정신사적 지주와 사회·경제적인 배경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의병사 연구자료 수집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인접자료에 대한

관심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순히 전투사, 국지전사, 그리고 저명 의병장의 기록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그 대상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병활동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 전투의 경우 지형이나 지명에 대한 기록, 또는 일화와 전승담 등 기록 이외의 구전자료를 검토·정리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당시 지역의 분위기나 서로 연관되는 지역민의 협조관계, 전투나 의병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와 축적된 연구 성과는 하나의 콘텐츠로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화된 후에는 자료들을 하나로 묶는 종합전산화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병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배열하여 전산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의병사 연구의 수준과 심도는 증대되고, 의병 사적의 현대적 계승도 달성될 뿐 아니라, 군사문화 축제 및 이벤트, 충절사적의 정비나 복원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육군본부 군사연구소는 육군의 전사 및 부대사를 편찬하는 기관으로서 의병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의병사 연구와 관련하여 군사연구소에 대해서는 향후 향토방위사나 전략·전투사를 정리하고, 각종 기록자료집의 간행과 교육자료의 개발, 충절 사적지 전시와 홍보자료화, 전시관·자료관·유물관·기록관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별 의병사적을 망라하고 연구하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李海濬, 1992, 「地方史研究에 있어서 古文書資料의 活用」, 『정신문화연구』 1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해준, 1993,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공저).
- 이해준, 1997, 「한말 일기에 나타난 의병 자료」, 『韓國民族運動史研究』, 于松 趙東杰 先生 停年紀念 論叢刊行委員會.
- 이해준, 1997, 「중원지역 인물·성씨 연구의 현황과 과제」, 『중원문화 논총』 1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 이해준, 1997, 「성터유적과 향토사연구」, 『향토문화』 9집, 한국향토사 전국협의회.
- 이해준, 1997, 「지역박물관과 지역사자료 정리」, 『박물관학연구』 2집, 대전보건대 박물관학연구소.
- 이해준, 1998, 「지역문화연구의 과제와 자료활용 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집, 역사와 문화학회.
- 이해준, 1998, 「한국지역문화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98 세계문화엑스포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이해준, 2001, 「생활사연구의 역사민속학적 모색」, 『역사민속학』 13, 한국역사민속학회.
- 이해준, 2001, 「지역사연구의 이론과 체계시론」, 『한국사론』 32, 국사편찬위원회.
- 이해준, 2001, 「지역기록물 관리기관 설립과 운영방향」, 『호서사학』 30, 호서사학회.

# 전 사

- 6·25전쟁시 미 제24사단의 초기지연작전 재조명 ..... 중령 서규화  
(군사편찬연구소)
- 한국전쟁시 중공군의 제1·2차 공세 전역에 관한 재조명 .....대령 황성철  
(학생중앙군사학교 연구관)
- 6·25전쟁 초기 중국의 군사적 대응 ..... 서 상 문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한국전쟁시 공수부대작전 전례 ..... 3급 문병장  
(육군본부 동원전력실)
- 임진왜란기 제2차 진주성전투와 조선관군의 전술 ..... 제 장 명  
(해군총무공 리더십센터)
- 고려 강화천도기 항몽사적 교훈 분석 ..... 예) 대령 신재현  
(교육사 BCTP단 지휘통제분석관)
- 전투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본 2차 동학농민전역의 패인 분석..... 중령 김유석  
(육군대학 군수과장)
- 프랑스 전역시 구데리안 군단의 초기작전 분석 ..... 중령 김규빈  
(육대 세계전쟁사 교관)
- 현대전쟁에 있어서 제한전 연구 ..... 소령 조상현  
(군사연구소 세계현대전사 연구장교)

## 6·25전쟁시 미 제24사단의 초기 지연작전 재조명

### 목 차

- I. 머리말
- II. 미 제24사단의 한국전쟁 투입 과정
- III. 미 제24사단의 초기지연작전 경과
- IV. 미 제24사단의 작전분석 및 평가
- V. 결 론



중령 서규화  
(군사편찬연구소)

### I. 머리말

미 제24보병사단은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최초의 미 지상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부대이다. 1950년 6월 30일 미 국가안보회의에서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었을 때, 당시 극동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24보병사단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은 맥아더 장군의 지시에 의해 우선 선발대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sup>1)</sup>를 편성하여 7월 1일 한국 부산으로 공중 이동시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한국전쟁에 최초로 투입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7월 5일 새벽 오산 북방 죽미령에 배치되어 08:00경 북한군 제107전차연대와 제4보병사단을 상대로 전투가 개시

주 1)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June-November 1950)*(Washing, D.C.,1986), p.59, 미 제24사단 제21연대 1대대(대대장 : 스미스 중령) 본부요원 일부와 B, C 중대, 연대본부 42" 박격포 소대, 그리고 제52포병대대(대대장 : 페리 중령) A포대로 구성된 부대이다.



된 후 약 6시간 이상 진지를 지탱했으나, 결국 많은 피해를 입고 14:30경 철수했다. 스미스 부대에 후속하여 전개된 제24사단 예하부대들은 평택, 천안, 전의 및 조치원, 대평리 및 공주, 대전전투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7월 20일 대전에서 철수한 후, 7월 22일 영동에 배치된 미 제1기병사단에게 경부국도축선에서의 방어임무를 인계하고 재정비를 위해 전선 후방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미 제24사단은 오산에서 대전까지 약 100km에 달하는 공간을 내어 주면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장비 손실을 입었고, 그 대신에 7월 5일부터 20일까지 약 15일이란 시간을 벌었다. 약 2주 동안 제24사단은 한국의 경부국도가 포함된 서부축선에서 강력한 북한군 주공군단<sup>2)</sup>에 맞서 지연임무를 수행했으나 역부족임을 실감했다.

그러나 미 제24사단의 초기작전은 군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 제24보병사단의 한국전 투입 및 전투는 단순히 사단급 제대의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 전구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의 작전구상에 따른 작전술적 차원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전개되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전쟁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sup>3)</sup> 아울러 극동군사령부에서는 한반도를 상정한 작전계획도 없었고 한국방위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었다.<sup>4)</sup> 따라서 맥아더 장군은 워싱턴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지시된 내용에 한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마찬가지로 미 제24사단도 미 합참이나 극동군사령부의 사전 준비된 작전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맥아더의 작전구상에 따른 지시에 의거 행동하였다.

맥아더 장군의 작전구상은 북한군의 남침을 한반도 남쪽의 어딘가에서 저지한 후 인천으로 상륙하여 적을 일거에 격멸시킨다는 작전개념을 갖고 있었다.<sup>5)</sup> 그가 구상한 인천상륙작전에 기초를 두고, 주일 미 제24사단에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는 임무를 부여한 후

주 2)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2], p.9, 북한군은 최초부터 서부축선에 제1군단, 동부축선에 제2군단을 투입했으며, 이때 제1군단이 주공이었다.

3)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New York : The Free Press), p.128, 1950년 6월 25일 한국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던 존슨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는 한국중심의 전쟁계획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구체적 결론을 내린 적도 없다”고 트루만 대통령에게 말했다.

4) UNC/FEC, INTELLIGENCE DIGEST & COMMAND REPORT, SN. 1-3, pp.14~15.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주한미대사관 및 군사고문단에 대한 군수지원과 유사시 비전투원인 주한외국인 철수계획(Chow Chow Plan)시행 이외에 한반도 작전에 관한 아무런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5) 육군본부, 『정책과 지도』 유엔군 전사 제3권(1973), p.192;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이원복 역, 『한국전쟁』 1권(1991), pp.151~152,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의 1개 연대전투단으로 적의 남침을 저지하고, 미 해병대와 제1기병사단을 7월 22일경 인천에 상륙시켜 북한군을 양쪽에서 공격한다는 구상이다.

한반도로 긴급 투입하였다. 그러나 전쟁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축차적으로 투입된 미 제24사단 예하부대들은 북한군 최정예부대를 상대로 한 전투에서 무참히 패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는 전술적 패배에 대한 원인을 분석 및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 대해 국내·외에서 시도된 기존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지연전에서의 실패 원인을 한국전쟁 참전 이전의 전쟁준비 부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북한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사단 병력을 소규모 단위로 축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상대적인 전투력 열세로 인해 전투에서 패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미 제24사단의 값비싼 희생으로 확보된 2주간의 시간 덕분에 후속 투입 사단들의 전방진개를 보장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미 제24사단이 수행한 초기 지연전에서의 패배는 미군의 재래식 전쟁에 대비한 전투준비태세 유지 미비와 소규모 부대의 축차적 조기투입에 원인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면서<sup>6)</sup>, 전구사령관인 맥아더 입장에서 볼 때 「미 제24사단의 초기 지연작전은 인천상륙작전과 총반격작전의 성공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작전술적 차원에서는 성공했다」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Ⅱ항은 미 제24사단의 한국전쟁에 투입과정이다. 즉, 맥아더 장군이 지상군 투입을 건의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결정하는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미 제24사단이 최초로 투입되는 배경과 경과를 기술하였다. 제Ⅲ항은 미 제24사단의 작전경과이다. 선발대로 투입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실시한 오산 북방의 죽미령전투로부터 대전전투까지 주요 작전경과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Ⅳ항은 제Ⅱ·Ⅲ항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미 제24사단의 작전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하였다. 이 항은 본 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전투준비태세로부터 한국군 및 북한군에 미친 영향, 그리고 차후 작전에 미친 영향 등을 맥아더의 작전구상과 연계하여 작전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한국전쟁 참전 전의 미 제24사단의 전쟁준비가 한국전쟁에 참가 후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존의 분석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를 위해 미군이 일본에서의 부대 편성, 교육훈련 및 군기, 장병전투능력 등에 대해서 먼저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준비 미비가 실제 전투에 참가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상호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둘째, 미 제24사단이 전투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실시된 소규모 부대씩 축차적 투입과 작전의 성패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즉, 맥아더 사령부가 당시 긴박한 상황

주 6) Marcus A. Kuiper, "Return of the hollow Army", in *Military Review*(August, 1993) : Flint, "TF Smith and 24th Division : Delay and Withdrawal,(5-19July 1950)".

속에서 전투준비가 미흡한 미 제24사단을 신속히 투입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보다 북쪽에서부터 지연시켜 후속사단의 전방진개를 보장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셋째, 미 제24사단 전투행위의 결과가 작전적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전체 작전에 미친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즉, 당시 파죽지세로 남진하던 북한군과 붕괴 직전의 한국군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차후 작전에 기여한 정도를 전투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 참고한 주요자료는 미국의 대외문서를 비롯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맥아더 청문회 기록, 그리고 단 장군의 회고록 및 전기 등과 기존의 연구 성과물<sup>7)</sup>들이다.

## II. 미 제24사단의 한국전쟁 투입 과정

### 1. 미 지상군 투입 결정 과정

6월 27일부로 한국전쟁에 대한 작전권을 부여받은 맥아더 장군은 6월 29일 06:10에 한국 전선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 하네다 공항을 이륙했다.<sup>8)</sup> 맥아더 장군 일행은 수원에 도착하여 처치 장군으로부터 전쟁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직접 전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강방어선지역을 시찰했다. 여기서 맥아더 장군은 “미 지상군전투부대가 투입되어야만 대한민국을 침략군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워싱턴에 미 지상군 투입을 긴급히 요청했다.<sup>9)</sup>

한국문제 관련 세 번째 미 국가 안보회의가 6월 30일 06:00(미국 시각 6월 29일 17:00)에 소집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 7) 남정욱, 「6·25전쟁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 『6·25전쟁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 한·일 군사사 워크숍(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11. 8) ; 서주석, 「6·25전쟁의 초기 전개과정」, 하영선 편 『6·25전쟁의 새로운 접근』(서울;나남출판, 1990) ; Flint, “TF Smith and 24th Division : Delay and Withdrawal,(5-19July 1950)”, ; Kuiper, “Return of the hollow Army” ;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등.

8)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229-230, 이때 맥아더 장군을 수행한 참모 들로는 참모장 알몬드 장군, 작전참모부장 라이트 장군, 정보참모부장 윌로비 소장, SCAP의 정치국장 휘트니 준장,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래트메이어 장군 등 15명이었다.

9)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236~237, 이때 워싱턴 당국에 요청한 주요내용은 “현 전선을 유지하고 실지를 회복하는 길은 미 지상군을 투입하는 일이다. 허락만 해준다면 이 지역에 1개 연대전투단을 지원군으로 보내고, 이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 2개 사단을 증강시켜 반격작전에 투입할 것이다”이다.

“① 맥아더 장군은 남한 군대가 남한 전역으로부터 북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극동군사령관 휘하의 공군과 해군 병력으로 북한의 군사목표를 공격하여 남한군을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육군병력의 투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대규모에 한한다. 그러나 부산·진해 근해 내역에 있는 항구와 공군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서 제외한다. ③ 적의 공군기지, 병기창, 전차, 군대 그리고 순수한 군사목표를 공격하는 군사활동을 북한지역까지 확대한다.” 즉, 주요내용은 남한지역에 국한된 공군과 해군의 활동을 북한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상군의 투입은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맥아더 장군의 「미 지상군 투입 건의」에 관한 전문보고서가 6월 30일 16:00경에 국방부에 도착했다. 이 전문을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페이스 육군 장관은 17:57에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대통령은 맥아더가 건의한 내용 중 1개 연대 전투병력 투입은 즉각 승인했지만, 2개 사단 증강 문제는 참모들과 협의한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sup>10)</sup>

트루먼 대통령은 6월 30일 22:30(미국 시각 6월 30일 09:30)에 백악관에서 국무장관·국방차관·합참의장 등과 맥아더 장군이 요구한 2개 사단 투입 안에 대해 토의했다. 여기서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에게 그의 휘하에 있는 병력을 사용할 전권(full authority to use the troops under his command)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sup>11)</sup>, 합참의장은 동경의 극동군사령부에 “1950년 6월 30일자로 6월 29일에 취해졌던 육군병력의 투입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sup>12)</sup>”라는 간결한 지시전문을 발송했다.

맥아더에게 주어진 전권이란 휘하부대 병력을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권한은 그가 건의한 2개 사단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았다. 맥아더 장군은 이 결정에 따라 휘하의 주일미군을 한국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받았다.

## 2. 미 제24보병사단의 한반도 전개 과정

맥아더 장군은 1950년 6월 30일 밤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자 지체 없이 제8군사령관에게 주일미군 중 규슈에 주둔한 제24사단을 파견하도록 명령했다. 이때는 초기전투에서 거의 붕괴된 한국군만으로 한강방어선에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개시간의 단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한국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던 이 사단이

주 10)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p.238~239.

11) Harry S. Truman, *Memoirs*, II, p.343.

12)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260에서 재인용.

제일 먼저 투입명령을 내렸다.<sup>13)</sup>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제24사단 투입을 전문으로 지시받은 즉시 딘 소장에게 “① 대대장이 지휘하는 소총 2개 중대에 4.2”박격포 2개 소대와 75밀리 무반동총 1개 소대로 증강한 지연부대를 공수로 부산에 파견하여 처치 장군의 지휘를 받도록 하라. ② 사단사령부와 보병 1개 대대는 즉시 공수로 부산을 향해 출동하라. ③ 사단의 잔여부대는 해상으로 수송한다. ④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격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기지를 설치하라. ⑤ 제1항의 부대임무는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복진을 개시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울에서 수원을 향해 남진 중인 적과 접촉하여 이를 지연시키는 일이다. ⑥ 딘 소장은 한국에 도착하면 주한미군(USAFIK) 지휘관으로 임명된다”라는 요지의 이동명령을 하달했다.<sup>14)</sup>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선발대로 제21연대 제1대대(대대장 Charles B. Smith 중령)를 지명하고, 이에 대대장 스미스 중령은 B·C중대를 포함하여 상급부대 지시대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했다. 한편 제52포병대대 A포대도 특수임무부대로 편성되었다. 제21보병연대와 52야전포병대대는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일본 점령부대라고 할 수 있었다. 제21연대 장병들은 일본 가장 남쪽에 있는 규슈 섬의 인구 10만명 정도의 도시인 구마모토에 자리잡은 작은 전초기지인 우드 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제52야전포병대대는 역시 규슈 섬에 있는 후쿠오카 근처의 하가다 기지에서 생활했다.

스미스 부대는 밤새도록 부대편성 작업을 실시한 후, 7월 1일 03:00 비가 쏟아지고 있는 속에 트럭으로 구마모토를 출발하여 08:05에 이다쓰게(板付) 공항에 도착했다. 여기서 스미스 중령은 사단장 딘 소장으로부터 “부산에 도착하면 대전으로 향하라. 우리는 가능한 부산에서 먼 북쪽에서 적을 지연하려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보다 북쪽으로 올라가 주 도로를 차단하라. 처치 장군을 만나라. 그 외에 더 이상의 정보는 없다”라는 지침을 받았다. 스미스 부대는 08:45에 C-54수송기 4대로 이다쓰게 공항을 출발했다. 그러나 부산 수영비행장의 상공은 짙은 안개로 착륙할 수가 없어서 복귀했다가 이날 14:00~15:00 사이에 겨우 착륙하여 부산에 도착하였다.<sup>15)</sup>

이들은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20:00에 기차로 부산을 출발하여 7월 2일 08:00에 대전에 도착했다. 스미스 중령은 전방지휘소(ADCOM)에 도착하여 처치 장군에게 신고하고 전방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오산 북방 죽미령까지 지형정찰을 실시하고 대전으로 복귀했다. 그는 처치 장군으로부터 평택·오산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날 밤 기차로 부대이동을 실시하여 평택과 안성에 1개 중대씩 배치하고 대대지휘소는

주 13)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 上, 1995, p.196.

14)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e*, p.59.

15)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e*, p.60.



평택에 설치했다.

그리고 제52포병대대<sup>16)</sup> A포대는 7월 2일 대대장 페리(Millero Perry) 중령이 직접 인솔하여 하카다(博多)항에서 승선하여 이날 저녁 부산에 도착하였다. 7월 3일은 선박 하역작업과 철도 적재작업으로 보내고 4일에 복상하여 스미스 부대와 합류함으로써 특수임무부대가 완성되었다.

사단장 딘 소장은 7월 3일 10:30에 항공기로 대전에 도착하였다. 처치 준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상황 설명과 스미스 부대를 평택과 안성에 배치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평택-안성선의 중요성에 비해 각각 1개 중대만 배치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취약해 보였다. 따라서 딘 소장은 당시 부산에서 승차 중에 있는 미 제34연대를 빨리 복상시켜 배치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독려하기 위해 이날 밤 부산으로 내려갔다.

미 제24사단에서 두 번째로 한국으로 이동한 제34연대는 7월 2일 밤 부산에 상륙하여 4일에 열차로 복상하여, 7월 5일 오전에 평택 및 안성지역에 각각 1개 대대씩 전개시켰다. 그리고 이곳에 배치되었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전날 죽미령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구마모또에 주둔하고 있던 제21연대는 3일 모지(門司)와 사세보에서 승선하여 4일 아침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열차로 복상하여 전의-조치원 일대에 전개했다. 마지막으로 쓰지도우(堂) 해안에서 상륙작전 훈련을 하고 있던 미 제19연대는 7월 4일 해상으로 부산에 도착하여 열차로 대구로 이동하여 제24사단 예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6월 30일 밤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된 지 4일 만에 주일 미 제24보병사단의 한반도 도착이 완료되었다.<sup>17)</sup>

### Ⅲ. 미 제24사단 초기지연작전 경과

최초의 미 지상군 부대로서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 제24사단은 선발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1950년 7월 5일에 오산 죽미령에서 최초의 지상전투를 실시했다. 이로부터 7월 20일까지 15일 동안 평택-천안, 전의-조치원, 금강(공주-대평리), 대전에서 북한군 최정예부대 제3·4보병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을 상대로 지연작전을 실시하였으나 그 전투 결과는 예상외로 참담하였다. 이들이 치른 전투경과를 전투 순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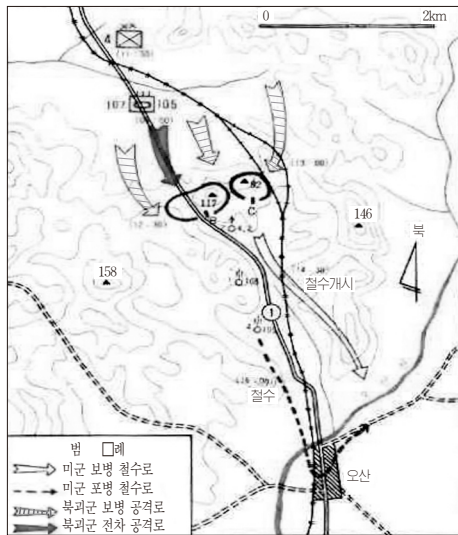
주 16) 미 제21연대를 직접 지원하는 포병대대이다.

17)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e*, pp.113~116, 사단장 딘 소장은 7월 4일부로 처치 준장을 부사령관으로, 그리고 전방사령부 요원을 참모요원으로 하여 주한미 육군사령부(USAFIK)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날 부산에는 가빈(Crump Garvin) 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제8군의 부산기지사령부가 창설되어 주한미군의 군수지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 1. 오산 북방 죽미령전투<sup>18)</sup>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7월 2일에 처치 장군의 지침을 받아 평택과 안성에 각각 1개 중대씩 배치하였으나, 7월 4일 사단 주력인 제34연대가 부산에 도착하면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지연진지를 죽미령으로 이동시켰다.<sup>19)</sup> 대대는 7월 5일 03:00에 방어진지에 도착하여 B, C중대로 1번 국도와 경부철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4.2"박격포는 진지 후사면 360m 지점에, 105밀리 곡사포는 1.8km 뒤에 위치시켰다. 죽미령 진지는 관측과 사계가 양호하여 당시 비가 조금 내리는 등 날씨가 흐렸으나 수원까지 약 12km 거리를 관측이 가능했었다.

스미스 중령은 07:00경에 북한군 전차 8대가 수원에서 남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들이 08:00경 진지 전방 1.8km까지 접근했을 때 포병사격을 요청하여 실시함으로써 최초의 미 지상군 전투가 개시되었다. 북한군 전차들은 미군의 포병사격에도 꿈적



하지 않고 빠르게 방어진지로 접근하였다. 스미스 부대의 75밀리 무반동총반은 북한군 전차가 진지 전방 630m에 도착했을 때 명중시켰으나 역시 적 전차를 격파할 수 없었다. 이어서 진지 내로 접근한 적 전차에 대해 2.36"로켓포로 사격했으나 이 또한 적 전차를 격파할 수 없었다.<sup>20)</sup>

북한군 전차대는 스미스 부대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지 중앙의 경부국도를 따라 통과했다. 적 전차가 능선 꼭대기를 넘어 반대 경사를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추진 배치된 105밀리 곡사포 1문이 대전차고폭탄으로 직접조준사격을 실시하여 2대를 격파했다. 그러나 다른 적 전차

주 18) 국방군사연구소, 『오산 - 대전전투』(서부지역지연전)(1993), pp.27~48.

1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지연작전기)(1979), p.66, 딘 소장은 그의 회고록에서 본인이 지시한 바는 없다고 했고, 처치 장군은 딘 소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묵인하였다고 했다. 스미스 중령은 명확히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스미스 부대가 평택에서 죽미령으로 이동한 것은 스미스 중령이 딘 소장으로부터 최초 이즈다케 공항에서 출발시 “최대한 북쪽으로 이동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라”는 지시와 당시의 상황(제34연대 북상)을 고려하여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전방인 죽미령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June - November 1950)*, p.69;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이원복 역, 『한국전쟁』 1권(1991), p.169, 당시 75mm 무반동총의 유효사거리가 700야드(630m)였다.

가 대전차 곡사포를 파괴하고 계속해서 포병진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포병진지를 유린하였다. 이때 대대장 페리 중령의 용감한 지휘력으로 2.36"로켓포반은 적 전차를 공격하여 2대를 멈추게 하고, 공포 속에 도망친 병사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다. 그러나 적 전차 33대는 죽미령 진지를 완전히 통과하여 오산방향으로 내려갔고, 통신선은 적 전차에 의해 끊어지고 무전기는 고장이 나서 보병부대와 연락이 불가하였다.

스미스 부대원들은 적 전차들이 후방으로 지나간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군 보병의 공격을 기다려야 했다. 계속 내리는 빗속에서 병사들은 열심히 그들의 참호를 보완하는 등 전투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10:00경에 스미스 부대원들은 북한군들이 3대의 전차를 선두로 내려오는 트럭 행렬을 목격했다. 이에 스미스 부대원들은 북한군이 진지 전방 1km에 접근했을 때 박격포와 직사화기로 집중 사격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보병은 즉시 하차하여 전개한 후 공격하기 시작했다. 북한군은 정면접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양 측방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군의 야포와 박격포는 점점 더 참호 속의 스미스 부대원을 맹포격했고, 후속하는 적 보병들은 추가 투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가 14:30경이었다. 스미스부대는 날씨 관계로 근접항공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포병화력지원도 받을 수 없었으며, 소화기 탄약은 부족했다. 또한 후방이 차단되어 병력 증원이나 보급품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스미스 중령은 진지를 사수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철수를하기로 결심했다. 따라서 스미스 부대는 북한군 최정에 부대를 맞이하여 6시간의 사투 끝에 철수를 개시한 것이다. 이 전투 결과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피해는 전사, 부상, 실종 등 181명이었다. 한편 북한군 피해는 사상 42명, 부상 85명이었던 것으로 훗날 파악되었다.

## 2. 평택 - 천안전투<sup>21)</sup>

러브레스(Jay B. Loveless) 대령이 지휘하는 제34보병연대는 7월 4일 부산에서 열차로 북상하여 7월 5일 오전에 제1대대를 평택에, 제3대대를 안성에 배치하고 연대본부는 성환에 위치시켰다. 사단장 딘 소장은 평택 - 안성에 이르는 방어선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연대에 내렸다.<sup>22)</sup>

주 21) 국방군사연구소, 『오산 - 대전전투』(서부지역지연전), pp.61~96.

22)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이원복 역, 『한국전쟁』 1권, p.164., 딘 소장은 미 군정기에 한국에서 군장장관을 역임하여 한반도의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에서 평택 - 안성선이 서쪽은 아산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동쪽은 높은 산악지형으로 적 기동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에 가장 용이한 지형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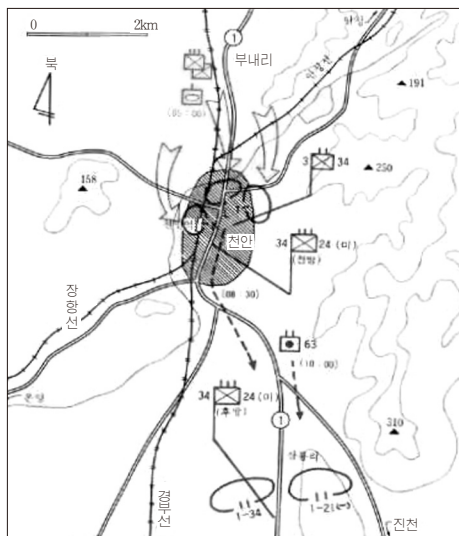
그러나 연대는 정신적 해이로 사단장의 명령을 건성으로 이해하고 방어준비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와는 통신망 미구성으로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때 스미스 부대의 전투를 참관한 부사단장 바스 장군은 제34연대 1대대 지휘소를 들러 스미스 부대의 전투 상황을 알려주면서 지휘관들에게 “최대한 버티되 고립 위험시 스미스 부대와 같이 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연대 본부에 들러 평택과 안성은 방어하기에 불리하니 천안에서 방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34연대의 장병들은 이때까지도 북한군을 경시하여 금번 작전은 국지적 군사행동으로 금방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sup>23)</sup>

제34연대 제1대대 장병들은 7월 6일 동이 트자마자 평택 북쪽 방어진지에서 북한군 전차 13대와 보병들이 방어진지로 접근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북한군들은 방어 전방에 있는 폭파된 철교까지 이르자, 포병사격 지원하에 보병들은 철교를 우회하여 측방을 공격하였고, 전차들은 지원사격을 실시했다.

이때 제1대대 장병들은 북한군의 공격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대대장 에이어스 중령(Harold B. Ayers)은 연대본부와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부사단장 바스 장군의 지시를 상기하면서 철수명령을 내렸다. 마침 연대작전과장이 연대장의 명령을 갖고 제1대대 지휘소에 도착했는데, 요지는 “대대를 위협에 처하지 않게 하면서

가능한 오래도록 지연시킨 다음 천안 근처에 있는 진지로 철수하라”는 것이었다.<sup>24)</sup> 대대장은 이미 철수를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천안으로 철수를 하였다. 또한 안성에 배치되었던 제3대대는 접적도 없이 연대명령에 따라 천안으로 철수하였다.

딘 소장이 가장 중요시한 평택-안성선은 전투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철수했던 것이다. 사단장은 몹시 노여워했으나 야간이라 어쩔 수 없었다. 그 대신 다음날(7월 7일)에 접적 없이 안성에서 철수한 제3대대는 천안 북쪽으로 접적 전진하여 적과의 접촉을 유지한 후 천안까지



주 23) 국방군사연구소, 『오산-대전전투』(서부지역지연전), p.62,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죽미령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당한 것과 북한군은 소련제 신형 T-34전차를 보유하고 잘 훈련된 부대라는 것을 주시시키고, 철저한 전투준비를 강조하지 않았다.

24) 국방군사연구소, 『오산-대전전투』(서부지역지연전), p.72.

지연작전을 펴도록 명령했다. 제3대대는 접적전진 중에 적 매복조의 기습 공격을 받아 혼란에 빠져 다시 천안으로 철수하였다.

연대장은 철수하는 제3대대 병력들을 명령하여 천안외곽 북서쪽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안성에서 천안에 이르는 도로를 통제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천안방어에 들어갔다.<sup>25)</sup>

이에 딘 사단장은 제34연대의 능력에 크게 실망하여 연대장을 마틴(Robert R. Martin) 대령으로 교체하였다. 신임 연대장 마틴 대령은 천안 남쪽에 위치한 연대 주지휘소는 부연대장이 위치하도록 하고, 본인은 직접 소수의 연대본부 병력을 이끌고 시내로 들어가 예하 대대병력들을 독려했다.

7월 8일 06:00에 북한군은 천안 시가지 공격을 감행하였다. 천안 외곽방어선은 조기에 붕괴되고, 적 전차가 천안 시내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을 본 연대장은 직접 2.36" 로켓포로 적 전차를 공격하는 등 적극적인 전투지휘를 실시했으나, 08:00경 적 전차 사격에 의해 전사했다. 보직된 지 만 하루만이였다. 연대장이 전사한 제34연대 병사들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하대대들은 천안에 많은 장비를 유기하고 철수했다. 제34연대 요원들은 죽미령에서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와는 달리 전투다운 전투 제대로 한번 수행하지 못하고 철수하기 바빴다.

### 3. 전의 - 조치원전투<sup>26)</sup>

딘 소장은 제34연대가 천안전투에서 패배하자, 금강선을 연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결심을 하고, 제34연대는 공주방향의 도로에서, 제21연대는 조치원 방향의 도로에서 지연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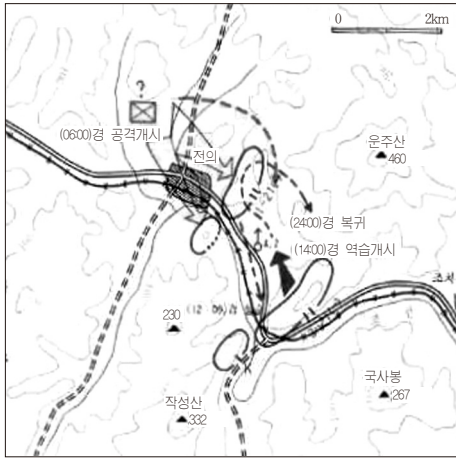
이에 따라 후속하여 도착한 제21보병연대가 7월 8일에 전의 마을에 도착하여 경부국도상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연대는 제1대대(-)<sup>27)</sup>를 전의 남쪽 1km 지점에, 제3대대를 전의 남쪽 2km 지점에 종(縱)으로 배치하여 경부국도 및 철로를 통제케 했다. 사단장 딘 소장은 스티븐스 대령에게 전의 - 조치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절대 사수하라고 2번이나 확인시켰다. 제34연대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었다. 연대장은 대대장이 없는 제1대대를 직접 지휘하여 화력계획을 수립하고 공병

주 25) 전계서, p.82.

26) 국방군사연구소, 『오산 - 대전전투』(서부지역지연전), pp.109~130.

27) 위의 책, p.11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지연작전기), p.92, 제1대대 A,D중대와 본부중대1/2로 편성된 부대를 말한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로 대대장과 대대본부1/2, B, C중대를 제외한 병력이다.





들로 하여금 진의 마을 북쪽의 철교와 교량을 폭파토록 하는 등 방어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공중공격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근접항공 지원팀을 요청해서 배속받았다.

7월 9일 16:45에 제1대대(-)는 진지 전방에 나타난 11대의 적 전차와 수백 명의 보병을 목격하고 포병사격과 공중공격을 요청하여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다음날인 7월 10일 06:00에 적은 전방의 계곡과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제1대대(-) 진지를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하였

으나 4.2" 박격포 차단사격으로 잘 저지하였다. 그러나 11:30경에 박격포 진지가 유린당하고 포병사격망은 두절되어 사격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측방과 후방이 차단당하자 연대장은 철수명령을 내렸다. 이어서 14:00에 제3대대로 하여금 역습을 실시하여 제1대대(-)진지를 회복하였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제4사단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제3보병사단으로 교체되었다.<sup>28)</sup>

7월 11일 새벽 북한군 제3보병사단은 제34연대 제3대대 진지를 공격했다. 사전 침투한 적 후방 침투조들은 지휘소 및 박격포 진지에 대한 포사격 유도과 후방 차단활동으로 제3대대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sup>29)</sup> 그 결과 대대장 쟈슨 중령을 포함하여 병력의 60% 가량이 손실을 입고 조치원으로 철수하였다.

7월 12일, 북한군 제3사단은 공격기세를 몰아 조치원 북방에 배치된 제21연대 제1대대<sup>30)</sup> 방어지역을 동·북·서 3면에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죽미령전투와 전의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은 제1대대(대대장, Charles B. Smith 중령)는 북한군 제3사단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Stephens 대령은 전날 제3대대와 같이 후방이 차단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제1대대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제21연대는 전의-조치원전투에서 북한군 제3, 제4사단을 상대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4일간 지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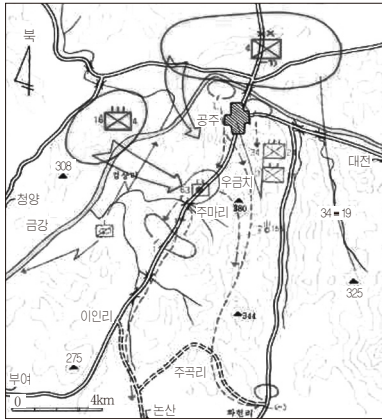
주 28) 지금까지 미 제24사단을 공격한 부대는 북한군 제4사단이었으나 계속된 공격에서 미군의 공중공격과 포병사격 및 보병들의 저항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제3사단으로 교대되었다. 제3사단은 7월 5일 이후 전투에 직접 투입되지 않아 전투력이 많이 보강되어 있었다.

29) 전날 제3대대가 제1대대(-)진지에 대한 역습시, 적 후방 침투조들이 제3대대 진지를 점령했었다. 제3대대 장병들이 원진지로 북귀하여 이들을 구축하였지만 이들은 이날 공격시에 제3대대 후방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30) 제1대대(-)는 철수하여 조치원 북방 진지에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원들과 합류하여 제1대대는 처음으로 완편 모습을 보였다.

#### 4. 금강방어선전투<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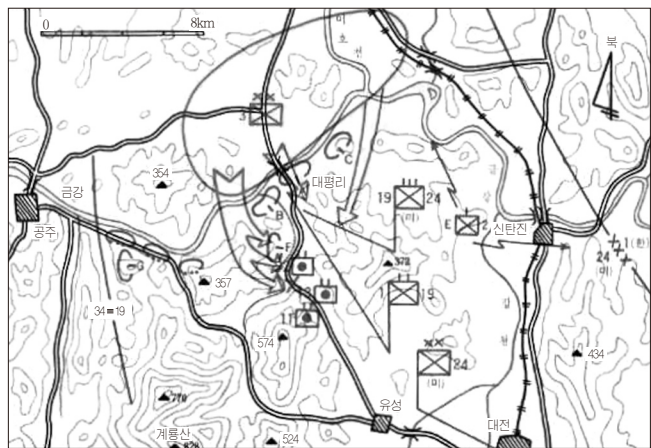
미 제24사단은 금강방어선에서 처음으로 사단 전체가 통합된 방어에 임하게 된다. 금강선의 사수를 위해 딘 소장은 적의 주공격축선으로 예상되는 대평리 정면에는 아직 전투에 참가한 적이 없는 제19연대를, 적의 보조공격축선으로 예상되는 공주정면에는 제34연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전의-조치원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제21보병연대는 대전에서 경부국도를 따라 16km 떨어진 옥천으로 이동시켜 동쪽의 북한군 제2사단에 의한 돌파에 대비케 하였다.



이에 제34보병연대는 제3대대를 공주 북쪽 파괴된 교량을 강제할 수 있는 곳에 배치시키고 제1대대는 남쪽에 예비로 보유하여 적이 교두보 확보시 역습으로 격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7월 14일 북한군 제4보병사단의 측후방 공격을 받고 후방의 포병진지 및 지휘소 등이 유린되었다. 17:00경에 제1대대로 역습을 실시했으나 실패하고 21:30에 연대는 금강선에서 철수했다. 하루를 버티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제19연대는 약 48km정면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광정면에 전부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1번 국도를 좌우로 한 도하지점에 중점을 두고 방어 편성하였다. 정면의 북한군 제3사단은 이들간의 탐색전을 실시한 후, 7월 16일 03:00경에 전면적으로 공격해 왔다. 적은 포병사격 엄호 하에 보트, 뗏목을 이용하여 도하에 성공하였다. 여기서도 북한군은 측후방으로 침투하여 도로의 주요 목을 장악함으로써 전방진지와 후방지원부대의 유일한 통로를 차단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 역습을 실시하는 등 공세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나 실패하였다. 따라서 전방진지의 장병들은 적군을 피해 대전으로 가는 안전한 통로를 찾아



주 31) 국방군사연구소, 『오산-대전전투』(서부지역지연전), pp.131~194.

소규모 부대 단위로 탈출했다. 낙오자들은 7월 16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각자 길을 찾아 복귀했다. 제19연대도 하루를 못 버티고 패퇴함으로써 사단장이 믿었던 금강방어선마저 붕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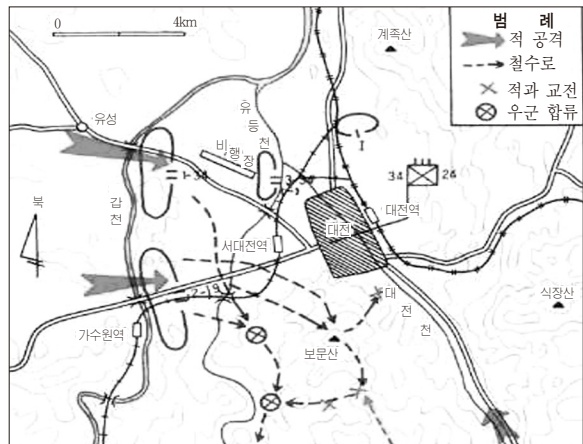
## 5. 대전전투<sup>32)</sup>

제8군사령관 위커 장군은 7월 13일부로 주한 미군사령관으로서 작전지휘를 맡아 미 제25사단을 그동안 한국군이 담당했던 상주 일대를 담당케 하고, 7월 18일 포항으로 상륙 예정인 제1기병사단으로 제24사단을 증원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 제24사단은 제1기병사단이 영동지역에 전개하도록 7월 20일까지 대전에서 지연하도록 지시했다.<sup>33)</sup>

딘 소장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예하 3개 연대는 전투력이 거의 소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및 공주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만신창이가 된 제34연대에게 대전방어 임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sup>34)</sup> 다행히 대전전투에 북한군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서면 전차와 미국에서 공수되어온 3.5"로켓포가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제34연대는 예하 2개 대대와 배속된 제19연대 2대대로 방어편성을 하여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용감하게 싸웠지만 포위해 오는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제34연대 본부는 전투의 혼란 속에서 통신이 두절되어 전반적인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시 중심에서 적의 정면공격은 막아내고 있었으나 후방으로 포위를 시도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다.<sup>35)</sup>

사단장 딘 소장도 3.5"로켓포 반을 지휘하면서 부하들에게 용기를 불어



주 32) 국방군사연구소, 『오산-대전전투』(서부지역지연전), pp.195~228.

33)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이원복 역, 『한국전쟁』 1권, p.222. 위커 장군은 7월 6일 한국에 도착하였으나, 7월 13일 미 제25사단이 부산으로 한국에 도착하여 전방에 전개함으로써 주한 미군사령관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위커 장군은 딘 소장과 함께 천안, 전의, 조치원 전투와 금강방어선전투에서 미군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34) 제19연대는 7월 16일 대평리 전투에서 후방이 차단당하여 탈출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반면 제34연대는 7월 14일 공주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2일 정도 재정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35) 북한군 제4사단 예하연대가 보문산 방향으로 기동하여 대전-금산도로를 차단하였다.

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7월 20일 오후 철수 명령을 내렸다. 본인은 철수시 길을 잘못 들어 36일 동안 방황하다가 적에게 생포되었다.

결국 대전전투에서 제24사단은 사단장이 포로되는 등 많은 인명과 장비를 잃었지만 워커 장군이 필요로 했던 이들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7월 22일 제1기병사단으로 교체되고 나서 마침내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 IV. 미 제24사단의 작전 분석 및 평가

본 항에서는 제Ⅱ·Ⅲ항에서 살펴본 미 제24사단의 한국전쟁 투입과정과 작전경과를 토대로 한국전쟁 참전 전의 전쟁준비, 제24사단의 축차적 조기 투입, 전체작전에 미친 영향 측면순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1. 한국전쟁 참전 전의 전쟁준비

미 제24보병사단의 전투 실패 원인은 작전지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쟁 전 전투준비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전투준비태세의 미비 사항을 부대편성 및 주요장비, 교육훈련, 장병전투능력 및 군 기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이 전투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가. 부대 편성 및 주요장비 확보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은 군 감축이 진행되면서 해외파병 병력이 줄어들게 되었고, 더 나아가 충분치 못한 재정적 지원으로 군 현대화는 미뤄야 했다. 주일 미 지상군의 모든 사단들도 병력 부족 상태에 있었다. 각 사단은 전시(戰時) 병력인 18,900명의 66% 수준으로 인가된 평시(平時) 병력인 12,500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제24사단은 10,700명을, 제1기병사단은 11,300명을, 제7사단은 10,600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25사단만이 13,000명으로 평시 인가병력을 초과했다.<sup>36)</sup>

이는 각 사단의 연대는 2개 대대만을 보유하게 되었고<sup>37)</sup>, 인가된 전차중대는 어느 연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사단의 중형 전차부대는 M-24경전차로 무장되었으며, 또한

주 36) Flint, "TF Smith and 24th Division : Delay and Withdrawal, (5-19 July 1950)"

37) 유일하게 제25사단의 제24보병연대는 3개 대대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포병대대는 2개 포대만 운용되어 정상적인 전투력 발휘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는 전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첫째, 제24사단의 연대들이 2개 대대로만 편성되어 강력한 예비대를 사용할 수 없었다. 즉, 2개 대대 전방으로 배치하고 1개 대대는 예비로 보유하여 전방부대가 돌파를 당하거나 후방으로 적이 침투하여 유린하더라도 예비대를 투입하여 구축하여야 하나, 예비대의 미확보로 전방의 병사들은 집중력을 상실하고 탈출만을 생각했다. 특히, 제34보병연대는 평택, 천안, 공주전투 등에서 측·후방이 노출되자 제대로 전투를 하지 못하고 조기에 붕괴되었다. 제19보병연대도 대평리 전투에서 후방이 차단되기 전까지는 잘 싸웠지만, 그 후론 다른 연대와 똑같은 운명으로 고통을 당했다.

위와 같은 취약한 편성은 상대적인 적의 우세함에 더욱더 악화되었다. 북한군은 일점양면전술과 같은 효과적인 기동계획을 가지고 공격했다.<sup>38)</sup> 그들은 미군의 방어정면을 보병 및 전차부대에 의한 공격으로 고착시키고, 침투조에 의해 후방의 지휘소와 곡사화기부대를 유린하였으며,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이들을 구축할 수 있는 예비대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철수한 경우가 많다.

둘째, 북한군 T-34전차에 대한 대항 수단이 전혀 없었다. M-24경전차는 T-34전차를 격파할 수 없었다.<sup>39)</sup> 그리고 75mm무반동총과 2.36" 로켓발사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신형 장갑으로 보강된 T-34 소련제 전차를 파괴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전차 방어가 불가능했다.<sup>40)</sup> 초기 전투에서 적 전차만 격파할 수 있었더라도 미 지상군의 전체 전쟁양상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셋째, 통신장비는 녹슬고 건전지는 대부분 방전되어 작동이 잘 되지 않았다. 이는 상급부대 본부와 그의 배속 포병부대, 그리고 예하부대까지도 연락을 취하지 못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보·포병의 전투력을 통합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상급 및 인접부대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조기 철수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최초 투입된 스미스 부대뿐 아니라 제24사단 예하부대들 모두가 겪은 상황이다.

넷째, CAL30기관총, 예비기관총 총열, 기관총 삼각대, 박격포 구성품, 57mm무반동총, 90mm대전차포, 그리고 다수의 무전기 등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주 38) 소련군사고문단에 의해 지도되고 훈련되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39) 제8군의 모든 사단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 사용하던 중(重)전차는 일본지형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없애고 경(輕)전차만 보유하고 있었다.

4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지연작전기), p.51 ; 육군본부, 『정책과 지도』 유엔군 전사 제3권, p.121, 당시 유일하게 적 전차 파괴가 가능한 포병의 대전차고폭탄은 제24사단 전체에 단지 18발밖에 없었고, 52포병대대는 그중에서 6발을 휴대하고 전투에 참가하였다.



한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집합했을 때, 제21연대의 다른 부대들은 제1대대를 채우기 위해 무기와 장비를 끌어 모아야 했다. 제3대대는 1주 후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81mm박격포 포관과 포신은 2개씩 있었지만 양각대나 가늠장치는 하나도 없었다. 전반적인 부대의 현상이었다.

이와 같이 부대편성의 미비와 주요장비의 미보유, 평소 관리 부실은 전투의 실패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나. 교육훈련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전투준비태세보다 군 경찰 역할이 훨씬 중요하게 요구되었다. 불과 수 년 만에 미 제8군은 철저한 전투부대에서 식민지군으로 변해버렸다. 미 제8군은 1946년 후반에 장교와 부사관들의 가족들이 일본에 도착하면서 전통적인 “식민지군”의 생활형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막사에서 일본인의 시중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냈다.

그리고 젊은 사병들의 일본 생활은 하나의 모험이었다. 기지 바로 앞에는 새롭고 이상한 문화에 유혹되었고, 이곳의 일본 여자들과 살며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적은 성병이었고, 이는 대부분의 부대에서 이해심 깊은 군의관과 의무병들에 의해 몰래 치료되었다.

그러나 1949년 워커(General Walker)<sup>41)</sup> 장군이 지휘를 맡고 나서 제8군은 더 이상 팔자 좋은 식민지군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했다. 그의 목표는 보병, 기갑, 포병 부대가 중대와 대대급 수준에서 제병협동 팀으로서 함께 밀접히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워커의 바람직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훈련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제병협동 훈련의 가장 큰 장애는 부대들이 사격, 기동할 수 있는 훈련장소의 부족이었다. 일본은 인구가 너무 많아 이런 목적을 위해 귀중한 땅을 내줄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제8군은 연대, 사단, 군 훈련을 할 수 없었다. 규슈의 모리와 같은 좁은 지역에서는 제한된 보병대대의 기동과 포병 실사격을 허용하였지만 동시에 두 가지는 할 수가 없었다.

대대급에서의 훈련부족의 결과는 심각했다. 제21보병연대는 포병 실사격 하에서 기동한 적이 없었고 전차와의 협동훈련 경험도 없었다. 전술훈련은 구마모토 외곽의 좁은 훈련지역에서 분대, 소대 그리고 약간의 중대 수준에서만 이루어졌다. 제52포병대대의 사격포대는 105mm곡사포 실사격 훈련은 1년에 단 한번만 모리 지역에서 할 수 있었다.

주 41) Flint, “TF Smith and 24th Division : Delay and Withdrawal(5-19 July 1950)”, 그는 유럽에서 조지 패튼(George Patton) 장군의 예하 군단에서 성공적으로 지휘한 경험이 있었으며, 군대를 전쟁에 대비해 훈련시킬 줄 아는 노련하고 적극적인 전투지휘관이었다.

그리고 75mm 무반동총과 60mm, 81mm, 4.2' 박격포 사격훈련 여건도 나빠서 포반훈련 등 비사격 훈련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제34연대의 훈련장 여건은 제21연대보다 훨씬 더 나빴다.

위커 장군은 더 큰 규모의 부대훈련을 지시했고, 제8군 예하 대부분의 대대들은 전쟁이 발발할 당시 육군 훈련시험까지 진전해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로 많은 부대가 시험에 불합격하였다. 그리고 대대급 이상 부대 훈련을 통해 숙달할 수 있는 참모업무 협조, 표준운용절차, 재보급기술, 화력지원, 탄약취급 등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무수한 것들을 준비할 기회가 매우 부족했다. 이러한 훈련기회 상실로 인해 실제 전투에서 효과적인 화력운용을 하지 못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 다. 장병전투능력 및 군기

제24사단의 장병들의 전투능력은 신분별로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고급간부와 부사관들은 제2차 세계대전 노장들로서 전투지휘가 훌륭했지만, 초급간부는 개인별 능력의 차이가 많았다.<sup>42)</sup> 그리고 병사(GI Bill)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렸으며, 전투경험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복무 후의 교육과 저 이자 대출을 주요 입대동기로 삼았으며 전투를 준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 중에는 불량배들도 있었다. 이들은 영창을 수시로 들락날락했다. 또한 이들의 전투능력은 부대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제21, 제34보병연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제21연대는 처음엔 존 대브니(John A. Dabney) 대령의 지휘 하에서, 그리고 6·25전쟁 발발 바로 전에는 의욕적이고 아버지 같은 스티븐슨(Richard W. Stephens) 대령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스티븐슨 대령은 강한 지휘관으로 상식과 건전한 정신으로 엄격한 군기를 세웠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는 최선을 다해 훈련시켰고, 운동경기를 통한 경쟁을 특히 좋아했다. 제1대대는 스미스 중령이 지휘했고, 제3대대는 젠슨(Carl C. Jensen) 중령이 지휘하는 등 최고 지휘관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 결과 육군훈련시험에서 예하 2개 대대가 모두 합격하였다.

반면 제34연대는 군기가 엉망이었다. 연대장이 직접 성병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장병들은 점점 더 부대 내로 활동이 제한되었다. 군인이라기보다는 포로처럼 취급받았다. 이로 인하여 제34연대의 사기는 뚝 떨어졌고, 연대의 실적은 저하되었으며, 연대장은 결국 보직해임을 당하였다. 러브레스스(Jay B. Loveless) 대령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몇 달 전에

주 42) 제21연대 제1대대 빅슬러 소위와 같이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였지만, 제34연대 제3대대 dd 대위는 접적 전진 중 적과 교전하자 적의 규모를 확실히 모르고 부상자를 남겨둔 채 철수를 지시했다.

부대를 인수하여 부대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제1대대장 에이레스 중령도 대전에서 대대장으로 부임하여 대대원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리고 부대훈련도 제대로 못시켜 연대 2개 대대는 육군훈련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하였다.

위의 양개 연대는 같은 제24사단 예하부대이면서도 전쟁에 참가하기 전 훈련상태와 부대균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평시 전투준비태세의 차이는 전투현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제21연대 예하부대로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부여된 임무를 나름대로 잘 수행하였다. 스미스 중령은 작전지역을 잘 선택했고 그의 능력껏 최대한 북한군을 지연시켰으며, 통신이 두절되기 전까지 포병대대장인 페리와 원활하게 작전을 펼쳐왔다. 그리고 후방이 차단당한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철수시켰다. 그리고 전의-조치원전투에서도 효과적인 공중공격 요청과 포병화력 운영, 장애물 설치를 운영하였고, 제1대대가 진지를 빼앗겼을 때는 제3대대로 역습을 실시하여 회복하는 등 과감한 공세행동 등으로 북한군에게도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제34연대는 이와는 대조적이었다. 제34연대는 전쟁 전 교육훈련의 미비와 균기 이완 등이 전투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입증하였다. 왜냐하면 바스 장군, 러브리스 대령, 에이어스 중령은 모두 자신들의 임무에 생소하였기 때문에 제34연대의 지휘는 실패하였다. 제1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심각한 교전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에서 너무 일찍 철수하였다. 천안전투에서 병사들은 장비를 유기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리고 러브리스 대령은 아산만 동쪽의 전선을 사수하려는 딘 소장의 작전개념을 적극적으로 이행치 못하였다. 중대장, 초급장교 그리고 부사관들은 대체로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연대의 가장 용맹스런 장교<sup>43)</sup>들은 북한군과의 초기 교전에서 전사했으며, 생존자들은 결국 육체적, 정신적 붕괴로 전투보다는 탈출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를 제21연대와 비교해 보면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지휘통솔력과 부대의 단결력이 결여된 데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 2. 미 제24사단의 축차적 조기 투입

미 제24사단의 한국전쟁 투입 결정 과정 연구를 통해 당시의 신속한 전장 투입의 작전 성패와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즉, 당시 맥아더 사령부에서 북한군을 과소평가하여 소규모 부대씩 축차 투입한 것이 초기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주장과 당시의

주 43) 연대작전과장 딘(Dunn) 소령, 제3대대작전장교 시거(Seegars) 소령 등.

긴박한 상황 하에 전투준비는 미흡했지만 소규모 부대씩 신속히 투입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미 제24사단의 측차 투입은 북한군에 대한 과소평가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전투에서 상대적 전투력 열세를 초래하여 패배하는 원인이 되었다.**

맥아더 장군이 한강변을 시찰한 직후의 판단은 「북한군의 남침병력은 6개 보병사단과 3개 경비여단, 그리고 200대에 가까운 소련제 전차이다.<sup>44)</sup>」로 규모면에서는 실제에 가깝게 판단했으나, 북한군의 실제 전투능력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했었다. 이 당시 맥아더 사령부 및 미 제24보병사단 장병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북한군은 보잘 것 없는 장비로 무장된 오합지졸의 전근대적인 군대로 미 지상군이 나타나기만 하면 철수하고, 반면 한국군의 사기는 절로 올라 갈 것으로 믿고 있었다.(뉴욕 해럴드 트리뷴지에 게재)」<sup>45)</sup>

또 다른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7월 6일 맥아더 장군은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을 도쿄(東京)로 불러 블루하트(Blue Heart)계획<sup>46)</sup>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맥아더 사령부의 정보참모인 윌러비 소장은 게이 소장에게 “당신은 최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천 상륙이 늦어지면 서울을 점령하여 북상하는 딘 소장이 지휘하는 제24보병사단의 후미에 상륙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오”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즉, 제24사단으로 충분히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sup>47)</sup>

맥아더 장군은 위와 같은 북한군에 대한 과소평가를 기초로 소규모 부대씩 측차적인 투입을 지시하게 된다. 즉 최초 미 지상군을 투입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대대 규모)를

주 44) 일본육전사보급회, 『한국전쟁 1권』(38선 초기전투와 지연작전),(李元馥 역, 명성출판사, 1991), p.150.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한 직후 맥아더 사령부의 정보판단은 북한군의 남침병력은 4개 보병사단과 3개 경비여단, 도합 7만명, 전차 70대로 되어 있었다(1950년 6월 25일, 맥아더 사령부 발표).

45) 위의 책, pp.150~151. 맥아더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지상군 부대가 전장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적 사령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완만한 행동을 취하게 한다는 책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술회하였다. 이는 북한군에 대한 과소평가한 잘못이라기보다 한국군이 급격히 붕괴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이 그것 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46) 육군본부, 『정책과 지도』(유엔군전사 제3집), (온창일 역, 1973), p.192. 맥아더 작전구상에 따라 극동군사령부에 설치되었던 『합동전략계획수립단(JSPOG)』에서 최초 수립한 인천 상륙작전계획이다. 핵심내용은 미 제24사단으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제1기병사단과 해병전투단을 인천으로 상륙시켜 서울을 포위하여 북한군을 격멸하고 북으로 진격할 발판을 점령한다는 계획이다.

47)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이원복 역, 『한국전쟁』 1권, pp.15~25. 당시의 북한군은 10만 규모였고, 경부국도 축선에만 정예사단인 제3, 4, 6보병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이 집중 공격하였다. 그리고 북한군은 소련제 전차와 야포 등으로 무장되었고, 소련군사교문단에 의해 잘 훈련되었으며, 중국 국공내전에서 많은 전투경험이 있는 병력으로 편성된 군대였다. 그리고 T-34전차는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장갑 보호기능을 강화한 최신형 전차였다.

선발대로, 이후에 34연대, 21연대, 19연대순으로 축차적으로 투입하였다. 이는 각각의 전투지역에서 상대적인 전투력의 심한 열세로 연속적인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축차 투입된 부대의 연속적인 패배는 유엔군의 사기침체와 많은 병력 및 장비 손실을 초래하였다. 계속된 패배와 철수에 익숙한 장병들은 제공·제해권을 장악하고 피·아의 전력이 대등한 수준까지 증강된 7월 말경에도 주도권을 상당기간 확보하지 못하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힘겨운 작전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초기 상황오판으로 초기대응을 느슨하게 부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초에 발생한 전술적 패배가 계속 확산적으로 작용하여 불리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당시 한국군은 붕괴되어 전투력 발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때 소규모 부대씩 축차적 투입은 불가피했다.**

맥아더 장군이 미 지상군 투입을 건의할 당시의 전쟁 상황은 한강변 시찰 후 미 지상군 투입을 건의하기 위해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전문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sup>48)</sup> 여기서 “한국에는 이제 아무런 방어력도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한국군은 거의 붕괴되어 북한군을 맞서 저항할 전투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맥아더 장군이 한강변 시찰 당시 한국군은 수도사단과 제2·7사단으로 시흥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김홍일 소장)를 편성하여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이때의 한국군 사단(師團)은 초기전투에서 붕괴되어 무질서하게 퇴각하였으며, 더욱이 한강교 조기 폭파로 많은 병력과 주요화기 및 장비를 서울에 유기하였던 관계로 소총만 휴대하고 있었으며, 먼저 철수하는 병력을 부대 구분없이 편성한 혼성부대였기에 정상적인 부대로서 전투력 발휘는 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 지상군 투입은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사단 전체가 전투준비를 갖춘 다음에 전선에 투입하는 것은 시기를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평시 전투준비태세가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점령군 부대가 충분히 전투준비를 갖춘 다음에 투입하였다면 한국은 공산화된 이후가 되었을 것이다.<sup>49)</sup>

그리고 당시 한국의 항만 및 부대수송능력 때문에도 축차적 투입은 불가피했다. 부산항은 1개 연대 병력 정도만을 하역할 수 있었다.

주 48) 육군본부, 『정책과 지도』(유엔군전사 제3집), (온창일 역, 1973), pp.108~110; 일본육전사 보급회, 『한국전쟁 1권』(38선 초기전투와 지연작전), (李元馥 역, 명성출판사, 1991), p.137.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전체를 공산 측에 넘기지 않으려면 이 지역에 즉각 미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e(June - November 1950)*, pp.57~58;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이원복 역, 『한국전쟁』 제1권, pp.146~150, 북한군은 7월 4일 하루 만에 30km나 남진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그들의 전차대는 거칠 것 없이 부산까지 진격할 태세였다. 반면 서부지역의 한국군은 거의 붕괴되어 저지능력을 상실했다.



결론적으로 미 지상군의 축차적 조기 투입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군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당시의 상황에서 축차적이지만 신속한 투입이 있었기에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한국군은 재편성과 재정비를 하여 중부전선에서 지연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 3. 전체작전에 미친 영향

미 제24사단은 초기 지연전에서 많은 인명 및 장비손실을 입고 100km 이상의 공간을 내어 주었다. 다른 한편 신속히 한국전쟁에 투입됨으로써 가장 긴급한 시기에 2주간이나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켰다. 따라서 미 제24사단의 작전결과를 작전적 성공이란 측면에서 북한군 및 한국군, 그리고 차후작전에 미친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가. 북한군에 미친 영향

북한군은 남침계획을 수립시 미 지상군이 참전한다 하더라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미군이 증원되기 전에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항구를 장악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미 지상군 참전 사실은 북한군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

##### 첫째, 미 지상군이 참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북한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북한군은 7월 초에 예상을 뒤엎은 미 지상군의 신속한 전투개입을 확인하게 되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서두르게 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0)</sup> “① 전선총사령부를 신설하여 제1·2군단의 작전지휘를 담당케 한다. 전선사령관에 김책 대장, 군사위원에 김일, 참모장에 강 건을 임명한다. ② 인민군의 병력을 증강하고 해안봉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경비여단과 청년훈련대를 주체로 제 7·8·9·10사단을 창설한다. ③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부대 내에 군사위원 제도를 채택한다. ④ 전시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민개병의 내실을 거두기 위해 군사훈련을 강화한다” 등이다. 즉, 미 지상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휘체계를 보장하고, 병력·증강과 전시 총동원체제 확립 등 장기전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후에 포로가 된 제2군단 작전참모 이학구 대좌는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 지상군이 개입한 사실은 북한 당국으로서도 천만 뜻밖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sup>51)</sup>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북한군 수뇌

주 50)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이원복 역, 『한국전쟁』 제1권, p.21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112.

51) 위의 책, p.178.

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둘째, 오산 죽미령전투 결과 북한군이 수원 이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과감한 전진을 할 수 없었다.** 북한군은 한강선을 돌파한 뒤로 죽미령전투에서 가장 큰 저항을 받았고, 미군의 참전을 확인하게 된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죽미령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지만, 북한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당시 극동군 정보담당자의 판단이었다.<sup>52)</sup> 그들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공격의 선두에 섰던 제105전차사단의 문화부사단장 안동수(安東洙) 대좌를 비롯한 42명의 전사자와 85명의 부상자를 내었고, 전차 4대가 격파되는 등의 손실을 보았다고 할 정도로, 6시간에 걸쳐 격렬한 전투를 치렀다.

따라서 북한군은 참전미군의 병력규모와 그 활동전망에 대하여 부심하게 됨으로써 종전과 같은 전차 단독의 과감한 정면 돌파를 단념하고 전반적인 전선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정석대로의 보전협동공격으로 전환하여 공격속도는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7월 5일 14:30에 스미스 부대가 죽미령에서 철수한 뒤에도 먼저 통과한 적 전차가 오산을 지나 낮 중으로 서정리(평택 북쪽 6km)까지 남하한 바 있으나, 그들의 당면한 목표인 평택을 목전에 두고도 다시 오산으로 되돌아가는 신중함을 보였고, 평택전투에서 제34연대 제1대대가 큰 접적 없이 철수한 후에도 하룻동안 충분히 전투준비를 실시한 후에 천안공격에 임했다.

궁극적으로 북한군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작전지속능력을 감소시켰고, 낙동강방어선에서 조기에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나. 한국군에 미친 영향

미 지상군의 투입은 한국군에게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첫째, 한국군의 사기 양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초기전투에서 패배하고 한강방어선으로 철수한 한국군은 소총 외에 아무런 장비가 없을 정도로 붕괴되었지만, 미 지상군이 곧 증원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정신력으로 한강방어선을 잘 버티었다.

한편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한강방어선의 지탱이 어렵게 되자 7월 2일 아침에 수원의 육군본부로 복귀하여 즉시로 Church 준장과 합의한 작전구상을 토대로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에게 “군은 미군의 전투참가를 위한 시간 여유를 얻기 위하여 별 명이 있을 때까지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평택 부근에 집결할 준비를 하라”라는 준비명령과 함께 5개의 저지진지를 명시한 육본작명 제18호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각각의 지연진지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미 지상군 투입이라는 희망이

주 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지연작전기)』 p.70.

있었기에 가능했다.

둘째, 국군 제1군단 창설과 부대정비를 위한 여건을 제공하였다. 미 지상군이 한창 부산으로 입항하여 북쪽으로 이동 중에 있던 7월 3일 오후에, 총참모장은 대전의 국방 본부로부터 “미 제24사단의 주력이 평택-안성선에 배치될 것이며, 그 선발대는 더욱 북쪽으로 전진할 것이니 미군과 협조를 유지하라”는 통보를 받고, 7월 1일 한·미간에 합의한 방침에 따라 전선을 정리키로 하였다. 즉, 경부국도 축선의 서부지역은 미군에게 인계하고 국군은 평택에서 제1군단을 창설<sup>53)</sup>하여 진천, 음성, 증평 일대로 이동하여 방어 편성하고, 6사단은 제1군단에 방어지역을 인계 후 충주-문경 축선을 담당토록 하였다. 위와 같이 한국군의 군단창설 및 부대정비는 미 지상군이 증원된다는 조건하에 추진되었다.

결론적으로 미 지상군의 신속한 투입으로 한국군의 사기양양과 제1군단 창설 여건을 조성했다. 즉 초기전투 서부지역에서 붕괴되었던 한국군은 제1군단으로 재창설되어 진천, 음성, 증평 등 중부지역의 방어를 담당함으로써 중동부지역의 제6·8사단과 연결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함으로써 전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미 지상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가 있었다.

#### 다. 차후 작전에 미친 영향

첫째, 최초 전투에서의 연속적인 패배는 미군 장병들에게 패배의식을 갖게 했다. 전투경험이 부족한 미군 초급간부 및 병사들은 북한군의 측후방 공격만 있으면 단결력을 상실하고 탈출만을 생각하게 했다. 이는 전장에서의 주도권 상실로 차후 작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 유엔군의 병력이 우세했던 상황인 8월 초에도 북한군에게 주도권을 상실하여 소극적인 작전을 실시했었다.

둘째, 맥아더 장군이 구상한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선에서의 총반격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비록 미 제24사단이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했어야 하나 실패함으로써 인천상륙부대 및 일본 방어부대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제25사단과 제1기병사단을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최초 맥아더 장군이 구상한 인천상륙작전계획<sup>54)</sup>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 제24사단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북한군의 남진을 15일 간 지연하여 후속부대인 미 제25보병사단, 제1기병사단의 전개

주 5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지연작전기), pp.117~122, 1950년 7월 4일 발표한 군단편성 계획안은 7월 5일 00:01부로 제1군단을 평택에서 창설하되 수도, 제1, 제2의 3개 사단을 개편하여 군단 예하에 두고, 제3, 제5, 제7의 3개 사단은 이날로 해체하여 앞의 3개 사단에 편입하는 내용이다.

54) 육군본부, 『정책과 지도』 유엔군 전사 제3권, p.192.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낙동강선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궁극적으로 맥아더 장군의 작전적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작전적 성공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 V. 결 론

지금까지 6·25전쟁시 최초의 미 지상군으로 투입된 미 제24사단의 초기 지연작전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24사단이 최초로 투입된 배경은 주일미군 4개 사단 중에서 한반도에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신속한 투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단장던 소장은 미 군정 시절 군정장관으로 한국 지리 및 사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맥아더 장군의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제24사단은 선발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7월 5일 새벽 오산 북방 죽미령에서 최초의 전투가 개시된 이래, 평택, 천안, 전의 및 조치원, 대평리 및 공주, 대전전투에서 패배하고 철수하였다. 7월 22일 영동에 배치된 미 제1기병사단에게 방어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약 100km에 달하는 공간을 내어 주고, 많은 인명 피해와 장비 손실을 당한 반면 약 2주간의 시간을 획득하였다.

당시 미국은 핵 및 전략폭격 위주의 군사전략개념에 의거 재래전에 대한 전쟁준비는 지극히 미흡했고, 더구나 한반도에 대한 전쟁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제24사단은 전쟁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전쟁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또한 소규모 부대씩 축차적으로 투입하여 각각의 전투에서 상대적 전투력 열세를 가져와 전술적 패배를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 제24보병사단이 수행한 초기 지연전투에서의 전술적 패배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맥아더 장군 차원의 작전술적 차원에서의 성공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 제24사단이 투입될 당시 한국군은 붕괴되어 전투력 발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때 소규모 부대씩 축차적 투입은 불가피했다. 평시 전투준비태세가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점령군 부대가 전투태세를 완전히 갖춘 다음에 전선에 투입하는 것은 투입시기를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즉, 맥아더 장군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공산화된 이후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부대씩 축차적 투입이 미 제24사단의 전술적 패배 원인이었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다. 한국군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당시의 상황에서 신속한 미 지상군의 축차적 투입이 있었기에 북한군의 남진을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15일간 지연시킬 수 있었다.

둘째, 미 지상군이 북한군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투입됨으로써 북한군의 작전에 차질을 받게 하였다. 먼저 미 지상군이 참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북한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미군 참전 이후 북한군은 수원 이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과감한 전진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북한군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작전지속능력을 감소시켰고 궁극적으로 낙동강방어선에서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는데 기여했다.

셋째, 한국군의 사기 앙양과 재편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 지상군이 곧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북한군의 남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미 제24사단이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을 담당함으로써 재창설된 한국군 제1군단은 진천, 음성, 증평 등 중부지역의 방어를 담당할 수 있었다. 이는 중동부지역의 제6·8사단과 연결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함으로써 전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미 지상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가 있었다.

넷째, 후속부대인 미 제25보병사단, 제1기병사단의 전개시간을 보장함으로써 낙동강선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궁극적으로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선에서의 총반격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즉, 맥아더 장군의 작전적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작전적 성공을 가져왔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 제24사단은 평시 재래전을 위한 전쟁준비가 미흡한데다, 최소한의 전투준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규모 부대씩 축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각각의 전투에서 북한군에게 패배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장비 손실을 입었다. 그렇지만 한국군이 붕괴되다시피 한 위급한 시기 신속히 투입되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에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했기 때문에 맥아더 장군 차원에서는 성공한 작전이라 하겠다. 즉, 북한군에게는 충격과 피해를 주고, 한국군에게는 사기 앙양과 재편성 기회를 주었고, 후속 미 증원사단들의 전개시간을 보장하였다. 이는 차후 낙동강선 방어작전과 인천상륙작전 및 총반격작전의 성공에 기여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과거의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터득하기 위해 전사를 많이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적 사고를 갖고 읽을 때 자신의 간접체험이 되리라 믿는다. 이러한 점에서 제24사단이 수행한 초기 지연작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는 전사연구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아울러 야전에서 작전계획 수립과 대부대훈련을 담당하는 많은 군인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참 고 문 헌〉

1.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제2권(遲延作戰期)(1979).
2.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上(1995).
3. 육군본부. 『政策과 指導』 유엔군 전사 제3권(1973).
4.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2(2005).
5. 국방군사연구소. 『烏山 - 大田戰鬪』(西部地域遲延戰)(1993).
6.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이원복 역, 『韓國戰爭』 제1권(38선초기전투와 지연작전), (명성출판사, 1991).
7.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1981).
8.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권(2001).
9.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June - November 1950)* (Washing, D.C., 1986).
10. Roy K. Flint, "TF Smith and 24th Division : Delay and Withdrawal, (5 - 19 July 1950)", *America's First Battles 1776 - 1965*(Univ. Press of Kansas, 1986).
11.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 - 30, 1950*(New York : The Free Press).
12. Marcus A. Kuiper, "Return of the hollow Army", in *Military Review*(August, 1993).

# 한국전쟁시 중공군의 제1·2차 공세 전역에 관한 재조명

## 목 차

- I. 서 론
- II. 한국전쟁시 중국의 정세와 참전 결정과정
  - 1. 한국전쟁전 중국의 정세
  - 2.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외교정책
  - 3.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문제의 내부 분쟁과 최종 정책의 형성
- III. 중공군의 전략적 반격의 제1·2차 전역
  - 1. 유엔군의 반격 작전
  - 2. 중공군의 침공
- IV. 결 론



대령 황성철  
(학생중앙군사학교 연구관)

## I. 서 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오십년 하고 중반이 넘어갔다. 지금 학계에서는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가끔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6·25전쟁에 대하여 참전 용사들을 제외하고는 기억에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6·25전쟁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쟁의 위험성과 전쟁에 대비하는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다. 지난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구어낸 것이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과 맞서 북한군과 동맹군으로 함께 싸웠다. 지금은 세계 강국들이 중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계의 눈빛과 함께 대응

책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 쉽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한국전쟁과 세계전쟁을 연구하고 나아가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장기적인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중국은 1977년 1월, 주은래 1주기에 발표된 외교부 이론 학습조 「주총리의 빛나는 본보기로 배우고, 모주석의 혁명적 외교노선을 관철·실행하기 위해 분투하려는 것」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이 「국내·국외·당내외의 방해와 반대」를 누르고 모택동에 의해 결정된 사실을 비로소 분명히 하였다.<sup>1)</sup> 또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의 결정에 대해서는, Allen, S. Whiting 「중국 압록강을 건넌다」의 연구가 있었다.<sup>2)</sup>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참전의 결정과정에 대한 중앙지도부내에서의 정치적 확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그 후 중국측의 공간사(公刊史)로써 『中華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軍事科學院軍歷史研究所, 軍事科學出版社, 1988), 2000년 발간된 『抗美援朝戰爭史 全 3卷』이 번역되었고, 중국의 오소경(吳少京)이 지은 『抗美援朝戰爭史 畫卷』이 공개되면서 모든 의문의 실마리가 해결되기 시작되었다.

이 논문은 신정부를 수립한 모택동이 그 당시 국내정세의 불안정 속에서도 한국전쟁에서 왜? 어떻게? UN군과 대적하여 싸웠는가를 최신자료로 재조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독자들에게는 최근 동북공정에 전력하고 있는 중국의 속내를 간파하여 우리나라 안보에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한국전쟁에 왜 참가를 했는지? 그리고 유엔군에 대응해서 초기 제1·2차 공세작전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국방부에서 발행한 “한국전쟁” 공간사를 기준으로 하고, 최근에 밝혀진 자료들과 그리고 필자가 편집하고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을 참고하여 중공군의 참전 당시 정황과 초기 전투인 제1·2차 공세 전역을 재조명하였다.

(※ 일러두기 : 전역별 전투는 국방부에서 발행한 『한국전쟁』과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단어 표기 : 국명표기는 중국으로 하되 초기 정권수립시는 장개석(蔣介石) 정부와 구분하기 위해 중공으로, 중국군은 중공군으로, 등장인물과 일반 단어는 한국식 또는 중국식 표현을 혼용하였다)

주 1) 『인민일보』 1977년 1월 11일.

2)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1960, Stanford Univ, Press.

## II. 한국전쟁시 중국의 정세와 참전 결정과정

### 1. 한국전쟁전 중국의 정세

1937년 노구교 사건(7월 7일 22:30경) 발단으로 8년간에 걸친 중·일전쟁이 종식되자 또 다시 중국 대륙에는 4년간(1946~1949년) 내전이 일어났다.<sup>3)</sup> 내전 초기의 국부군(國府軍) 병력은 약 300만이었으며 공산군(共產軍)은 약 100만이었다. 1945년 8월부터 1948년 초까지 미국이 중국에 원조한 액수는 약 29억불이었으며 그간 국부군은 우수한 병력을 바탕으로 대도시와 지방도시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만주지역까지 석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 전세는 역전되어 장개석 휘하의 군대는 민간경제 통제 밖에 있었기 때문에 건설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내전의 결정적 대결은 준하(淮河)지역의 념(捻)지방에서 벌어진 2개월간의 전투이다. 장개석은 200개 사단중에서 50개 사단으로 서주(西州) 주위의 평원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1949년 1월 포위된 상태에서 항복(공산측은 55만명중 327,000명이 투항했다고 주장)하고 말았다. 이 내전에서 국부군은 서로 시기하는 황포파(黃埔派) 지휘관들 사이의 비협조, 국부군측이 가졌던 제공권 활용의 실패 그리고 무기활용의 실패 등으로 1949년 1월에는 천진(天津)과 북경도 함락당하였다.<sup>4)</sup>

4월에는 양자강, 5월에는 상해, 10월에는 광둥, 11월에는 중경을 점령하고 마침내 1949년 10월 1일 중공정권 탄생의 예포가 천안문 광장에서 울렸다. 그러나 중공은 오랜 내전(1840년 아편전쟁 이래 백여년)으로 폐허로 변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정비와 휴식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당시 친국민당 성향의 세력들이 각 지방에서 중공정권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타이완, 하이난(海南), 시짱(西藏) 및 시난·시베이(西南·西北) 지역 대부분이 아직 국민당의 영향하에 있었다. 계속되는 대규모의 전쟁으로 인하여 생산력 역시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1840년 아편전쟁 이래 중국은 백여년이 넘는 전쟁을 겪었고, 특히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의 결과 국토가 폐허화되고 국력도 거의 다 소모되었다. 중공정권 성립당시의 농·공업 총 생산량은 1945~1948년간의 평균수준에 비하여 거의 1/2로 감소되었다.<sup>5)</sup> 따라서 경제문제를 해결하여 민중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중공정권의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경제측면에서 물가의 안정과 재정의 호전은 중공정권 지도부가 해

주 3) 박은봉, 『세계사 100장면』, (서울: 가람, 1992), p.320.

4) 육군본부, 『韓國戰爭史』, (육군본부, 1985), p.164.

5) 1952년 농·공업 총생산이 중공정권 수립 직전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액수로는 834억 위안(1955년 신화폐 기준)에 달했다. 靳德行, 『中華人民共和國史』, (河南大學, pp.61~63)

결해야 할 가장 긴박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1949년 이래 전국범위에서 네 차례를 걸쳐 물가폭동이 있었다. 한 통계는 전국적으로 물가 상승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즉 1948년 12월을 100으로 계산한 전국 12개 대도시의 도매물가지수는 1949년 11월에 들어 5,376에 달해 무려 53배나 폭등하였다.<sup>6)</sup> 동시에 제국주의의 장기적인 침략과 약탈, 국민당정권의 부패정치, 장기적인 전쟁의 파괴 등으로 인해 1949년의 재정은 극히 어려웠다. 게다가 중공정권이 성립될 때 국내외 적대세력의 군사·경제 봉쇄가 시장의 파동과 자금의 결핍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내전으로 인한 중공군과 국가 행정부서의 증가, 구 정부 공무원들의 승계, 재해와 실업구제 등의 원인들로 인해 중공정권은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sup>7)</sup>

1950년 5월 중공은 시짱과 타이완을 제외한 전체 대륙을 장악했다. 그러나 대륙에서는 비적 무장세력들이 많이 잠재해 있었고 비적 문제가 여전히 매우 심각했다. 이 비적들은 타이완에 있는 국민당정부의 책동과 조종 지휘를 받고 있었고, 중공정권을 뒤엎고 '중화민국'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여러 지방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켰고 중공 군대와 지방 각급 관청을 포위하여 습격하였다. 또 지방간부, 공무원과 중공군 간부, 병사들을 살해하였다.<sup>8)</sup>

군사적으로 중공은 국토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시난, 시베이 지역으로 진군하는 동시에 타이완 완수 작전의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중공지도부는 양자강 도강작전처럼 타이완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해군과 공군이 없는 상황에서 바다에서의 상륙작전을 벌이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구하기 위해 1949년 6월 류샤오치를 모스크바로 파견하였다. 회담에서 류샤오치는 1950년에 중공이 타이완을 진공할 계획을 스탈린에게 설명하고,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200대 작전비행기의 제공과 비행사의 훈련을 요구했다. 스탈린은 이러한 중공측의 요구에 동의했으나, 타이완 공격시 소련의 공군과 해군의 직접지원 요구는 거부했다.

모택동(毛澤東)도 소련의 직접지원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공이 1949년 10월 하순부터 해안 도서작전, 특히 금문도(金門島) 상륙작전에서 많은 병력손실을 입게 되면서부터, 모택동은 소련 방문 동안 타이완의 해방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다시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스탈린은 중공의 요구를 거절하지는 않았으나 소련의 해·공군 지원 작전으로 미국이 개입할 위험을 염려해서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다.

주 6) 孫健, 『中華人民共和國經濟史 1949~1990』,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p.58).

7) 위의 책, p.60. 중공정권 수립 당시 국가재정은 쌀로 환산해서 수입은 303억 근인데 비해 지출은 570억 근에 달해, 무려 270억 근에 해당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8) 광시(廣西) 지역에서만 해도 1950년에 발생한 수십차례의 비적 폭동으로 인해 간부와 민중 7,219명이 살해당하였다. 참조: 靳德行 위의 책, p.40.



즉 그는 작전 지휘관 또는 군사고문이 필요하면 우리는 즉각 제공해 주겠지만, 다른 방식의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sup>9)</sup> 결국 스탈린은 김일성을 지지하여 남한을 공격하거나 또는 중공을 지지하여 타이완을 공격하는 것 모두 미국의 간섭을 야기할 수 있고 미·소의 충돌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sup>10)</sup>

한편 중국공산군이 대륙을 석권한 이후 중국에 친미정권을 세워 극동지역을 지배하려고 했던 미국의 정책은 완전히 좌절되었다. 미국은 다시 장개석(蔣介石) 정권에 군사원조를 하더라도 타이완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이완이 중공 수중에 떨어지는 것은 이미 시간문제라고 파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1월 5일 트루먼 대통령은 타이완문제에 관한 성명에서 “미국은 타이완이나 중공의 기타 영토에 대해 어떠한 야심도 없다”, “현재 미국은 타이완에서 특별한 권리나 특권을 획득하거나 군사기지를 건설할 의사가 없다”, “미국은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해 무력을 통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sup>11)</sup>

1월 12일 애치슨은 연설을 통해 미국의 극동 도서방어권을 확정했으며 타이완과 한 반도를 이 방어선에서 제외시켰다. 미국의 타이완 정책의 변화는 중공이 타이완을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중공이 북한을 지지하여 남한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한다면, 미군이 이 침공을 공산주의 세력 확장으로 간주하여 전쟁에 개입하게 되어 반도통일이 성취되기는커녕 중공의 타이완 통일마저 좌절될 가능성이 높았다. 중공은 당시의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타이완 진공작전 준비를 가속화시켰다. 중공은 소련으로부터 받은 3억\$ 차관의 1/2로 해군 장비를 구입했다.<sup>12)</sup> 1950년 4월 중공은 공군부대를 창설하여 타이완에 대한 공격훈련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주은래는 소련부장회의 부주석 불가닌에게 보내는 전문을 통해서 일부 함정과 전투기, 해안포 등이 급히 필요하며, 소련이 1950년 여름, 늦어도 1951년 봄 전까지는 이들 무기들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하였다.<sup>13)</sup> 현재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중공군사위는 3야전군의 보고에 근거하여 전투 계획을 다시 수정하여 타이완에 공격하는 병력을 16개 군 이상으로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sup>14)</sup>

주 9) 靑石, “金日成阻止了 毛澤東攻臺灣的計劃”, 『明報月刊』, 제7기, (1994), p.46.

10) 畢穎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원인과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pp.10~12.

1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출판, 2002), p.41.

12) 靑石, “金日成阻止了 毛澤東攻臺灣的計劃”, p.80.

1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周恩來軍事文選 4卷』, (中央文獻出版社, 1993), p.97.

14) 周軍, “新中國初期人民解放軍未陵遂行攻臺計劃原因初探”, 『黨史研究資料 1期』, (中央黨史出版社, 1991), p.28.

이 당시 중공의 주요 임무는 국가 경제를 회복하는 것과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당시 모택동의 비서 호교목(胡乔木)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내전은 이제 막 끝났다. 우리는 결코 한반도 지역에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였다.”** - 『胡乔木의 毛澤東 回想』, 제87항(人民出版社, 1994)<sup>15)</sup>

중공의 주장에 따르면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은 미국에 의해 촉진되었다는 것이다.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중공과 북한의 국경선인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때 유엔군의 북진을 중공 자신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음이 분명하고, 중공이 국내적인 문제로 정국이 혼란하여 참전 결정에 신중은 기했으나 사전에 참전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이다.

## 2.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외교정책

### 가. 소련의 외교정책

제2차 세계대전 후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하던 미·소의 관계가 1948년 말을 고비로 급격히 냉각되었다. 냉전이 표면화되면서 소련의 대외(對外)정책도 1920년대로 회귀했다. 소련 내에서 소위 “적에게 포위된 신생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일대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총력 국방사상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전과의 차이는 그 범위가 종전 소련 일국에서 동 유럽과 중국, 몽골, 북한을 포함하는 신생 사회주의 진영으로 확대되었을 뿐이었다. 소련은 세계대전 후 전후복구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군비를 대규모로 감축시켰으나 다시 재무장으로 급선회하였다.<sup>16)</sup> 이미 1946년 1월부터 2월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군사정책 계획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으며, 정치국 특별위원회는 군의 재조직과 군사력의 지속적 증강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소련에서는 독일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11월에 이미 소련 과학아카데미로 하여금 원자력에 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1943년 초부터는 학자인 쿠르차토프(I. V. Kurchatov)의 지휘하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과학 실험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 결과 소련은 1946년 말 우라늄 흑연반응기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우라늄의 대량생산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정부가 1947년에 이미 **“핵 폭탄에 대한 비밀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sup>17)</sup>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주 15) 육군본부,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 (육군본부, 편집 : 황성철/김광수, 2005), p.3.

1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전쟁의 배경과 원인, 6·25전쟁사 1』, (2004), pp.139~140.

17) 국방군사연구소,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349.

소련은 결국 1949년 8월 최초로 핵실험을 행하였고, 그 실험 결과는 동년 9월 25일 타스통신에 의해 성공적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즉, 타스통신은 소련이 핵무기와 핵무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이후 소련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핵폭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신형 핵무기들이 속속 생산되었다.<sup>18)</sup> 1949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동서진영은 소련의 원폭 보유, 중국공산당정부 수립, 중·소회담 등의 문제로 큰 변화를 맞는다. 미국은 심각한 대공 위기감을 갖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급격히 재무장정책과 대소 강경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군사원조 계획으로서 상호방위 원조안을 확정한다. 이 시점 미소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 때문이었다. 미국은 1949년 9월 3일 미 공군정찰 편대가 일본에서 알래스카까지 정찰하여 소련의 방사능실험 흔적을 탐지하였고, 그 실험은 8월 29일 무렵 실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9)</sup> 소련의 핵 개발은 미국이 더 이상 핵무기의 독점국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소련과 동북아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미국은 전반적인 대외전략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 속에서 소련은 북한이 스탈린의 방침과 무관하게 1949년 10월 14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옹진을 공격하자, 이 사태처리에 대해서 미국보다 훨씬 더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다. 즉 소련 중앙인민위원회는 스티코프에게 옹진공격의 사전계획과 행동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주의를 하달하였다.<sup>20)</sup> 질책을 받은 스티코프는 “내무상 박일의 지령에 따라 제3국경 경비여단장이 남한이 점령하고 있는 38도 이북에 위치한 주요 두 개의 고지를 탈취할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보자긴 대령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설명하였으며, 또 10월 31일 보자긴 대령이 감제고지이며 38선으로의 유일한 연락로인 은파산을 탈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는 내용을 아울러 보고하였다. 그러나 소련 중앙위는 11월 20일 재차 스티코프에게 **“38선상의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는 본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삼 강조하였다.<sup>21)</sup> 1949년 말의 시점의 미국과 소련이 각기 유럽과 아시아에서뿐 아니라 세계전략의 구도를 재편하고 있었던 중요한 시기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소련의 대북한 방침은 성급한 북한의 국지적인 공세로 인하여 사태를 그릇 치지 않으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소련은 내부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장차 다가올 수 있는 전쟁에 대

주 18) 스탈린은 1951년 10월 6일 프라우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방계획에 의거하여 앞으로 도 다양한 폭발력을 지니는 핵폭탄 실험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프라우다」(1951년 10월 6일자), 국방군사연구소,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349.

19) Richard G Hewlett & Francis Duncan, 『A History of Atomic Energy Commission』, vol. 2, The Pennsylvania State Univ., 1969, pp.362~363.

20) 「모스크바가 스티코프에게」(1949. 10. 26.), 『소련외교문서』 제3권, p.54; 「그로미코가 스티코프에게」(1949. 11. 20.), 『소련외교문서』 제3권, p.57.

21) 「그로미코가 스티코프에게」(1949. 11. 20.), 『소련외교문서』 제3권, p.57.

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될 경우에 대비해 북조선에 있는 해군기지와 공군부대를 폐쇄할 것, 우리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또한 적을 심리적으로 무장 해제 시키며 전쟁이 시작될 경우 우리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sup>22)</sup>

소련은 전쟁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외적 명분상 소련의 개입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부적으로 소련은 전쟁에 대비하여 대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른 한편, 중국과도 그 문제를 협의하였다. 스탈린은 1949년 12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국 모택동과 1950년 2월 17일까지 2개월 동안 회담을 가지고 ‘중소우호동맹상호조약’, ‘장춘철도, 여순 및 대련에 관한 협정’, ‘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sup>23)</sup>

스탈린, 모택동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발표한 바와 같이 ‘중·소’ 양국간 문제에 국한된 것 같으나, 당시 국제 및 동아시아 정세로 보아 냉전체제하의 양국간 결속 다짐은 물론 세계 공산혁명을 위한 역할 분담이 협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소련외교문서에 나타난 선제공격에 관한 김일성의 발언으로 미루어 북한의 전쟁지원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스탈린, 모택동 회담은 소련의 핵실험 성공과 중국 공산정부 수립에 따른 세계전략 재편과 깊은 관련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 나. 중국의 외교정책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중국문제는 아시아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극동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중국을 세계 4대강국의 위치로 끌어올려 전후 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다. 전쟁 직후만 해도, 미국은 그들의 군사적 개입 없이 장개석 정부가 공산세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에 가장 만족스런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sup>24)</sup>

1945년 8월 당시, 중국은 하나의 통일정부라고 할 수 없었다. 국민당 정부의 권한은 일본이 점령했던 남부 중국과 동부, 서남지역에 한정되었다. 북부 중국지역은 공산당이, 동북지역은 소련이 장악하고 있어서 양자강 이북으로는 중앙 정부의 거점이랄 것이 없었다.<sup>25)</sup>

1949년 10월 1일 소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것은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승리였다. 4억 5,000만명이라는 방대한 인구와 대지가 모택동의 손에 들어갔다. 소련은 이러한 변

주 22) 「모스크바 새 증언」, (1), 『서울신문』, 1995. 5. 15.

23)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1994, p.93.

24) 해리 S 트루만(손세일 역), 『시련과 희망의 세월』 하, 지문각, 1968, p.72, 91.; 이완범, 「중국군의 참전 이전 미중관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415~416.

25) 위의 책, p.63, 70.

화에 대하여 실제로 중국의 거대한 전략적 제반요구를 침략정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택동을 스탈린의 제70회 생일에 초청하였다. 모택동은 1949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였고 1950년 1월 21일에는 주은래 일행이 합세하여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약 1개월간에 걸친 회의 끝에 1950년 2월 14일 중·소 30년간의 우호동맹과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크레믈린은 발표하였다. 이로써 중·소 양국은 “일본 또는 그와 협력하는(미국을 지칭) 직접 또는 직접적인 침략에 있어 그 침략의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산투쟁의 첫 포석으로 중·소의 동맹을 평가함에 있어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조선인민은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위대한 우호에 의해서 용기를 얻었고, 더욱 이승만 도당의 전멸과 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세력을 국외로 축출하는데 승리할 자신을 얻었다”고 대담한침략에서의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다음은 2월 14일 발표된 공동코뮌iqué에 의하면, 중·소 양국은 소련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 장춘철도, 여순 및 대련에 관한 협정, 소련정부가 소련에서의 공업 및 철도시설여부에 대한 대가지불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장기경제차관을 부여하는 협정 등이 체결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중·소 동맹에 의하면 아시아에서의 공산세력 확대에 있어 주요한 장애가 될 일본, 한국 및 그의 배후자인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동방위란 미명하에 침략의도를 은폐한 조약이었다.

### 3.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문제의 내부 분쟁과 최종 정책의 형성

1950년 9월 15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북한의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중국은 북한 파병문제가 긴급 현안문제로 중국 지도부의 앞에 등장했다. 미군의 인천상륙 성공은 미국 군대가 이미 38도선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미군이 이 분계선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미국의 연합국 대사 오스틴의 성명에 의하면 미국의 목표는 38도선 이남에서 공격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북상하여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로부터 적극적인 참전준비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으며, 여러 측면의 불리한 영향들을 모두 고려해야만 했다. 중국이 직면한 상대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참전 결정과정에서 중국 내부의 의견의 불일치, 또 중·소 사이의 불협조 등 어려움이 있었다. 모택동을 위시한 중국 지도부는 여러 번에 걸쳐 상세한 분석을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 참전 결정을 내렸다.

모택동이 중국 중앙군위윈회의 수석으로서 항미원조 출병을 확정된 것은 미국과 ‘UN 16개국’을 상대로 한 쉽지 않은 결심이었으며, 전 세계가 놀란 결정이었다. 이 때



문에 모택동은 많은 날들을 잠 못 이루었다고 하였다.

호요방(胡耀邦)의 기억은 “조선에 출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모택동은 말없이 고민하였고 일주일간 깎지 않은 수염은 너무 길었다. 이후 회의를 열어 모두의 의견에 통일을 볼 것이고 모 주석은 바로 수염을 깎을 것이었다.”

1950년 10월 1일부로 중국 중앙군위원회 핵심 지도자들은 모택동이 있는 중남해에서 연속적인 회의를 가졌고 정치국 구성원과 관련된 지도자들과도 한국전쟁을 논의하였다. 10월 2일 모택동은 중국 중앙군위원회에서 초안을 잡은 것을 스탈린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지원군 명의로 일부 군대를 조선 국경에 미국과 이승만의 군대와 전쟁하는 조선원조를 결정한다.” 전보를 다 적은 후 발송하지 않았다. 그때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핵심내부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계속 토론했으며 동시에 중국과 미국 쌍방이 교전을 피할 수 있는 최후 방법까지도 토론했다.

10월 3일 새벽 주은래는 긴급히 인도 주·중대사 파니카(潘尼迦)에게 인도 총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중지시키는 것을 희망하고 만약 미군이 38도 선을 넘어오면 우리는 수수방관하며 앉아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관여할 것이다”라며 미국과 영국 정부에게 전했다. 그날 미국 국무원은 인도 총리에게서 온 경고를 받았다. 트루먼과 맥아더는 이것은 “위협일 뿐이다”라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sup>26)</sup>

1950년 통계를 근거해 중국과 미국 쌍방의 경제와 군사기술 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표 1〉 중국과 미국의 국력 비교

구 분	중 국(세계순위)	미 국(세계순위)
인 구	5.7억(1)	1.5억(4)
군 대 수	550만(1)	150만(30)
광 산 량	60만톤(26)	8,785만톤(1)
원 유 생 산 량	20만톤(27)	2.6억톤(1)
발 전 량	45억도(度)(25)	3,880억도(1)
군 합 수	4만	300만(1)
군 용 비 행 기	60대	3.1만대(1)
국 민 수 입	426억 인민폐(150억 \$)(13)	2,400억 \$ (1)
G N P	78원 인민폐(24 \$)	1,600억 \$
국 방 지 출	28억 인민폐(10억 \$)	150억 \$ (1)

출처 : 육군본부,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 p.18.

주 26) 육군본부,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 pp.17~18.

모택동은 동지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출병문제는 미국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 주둔군과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긴 전선(戰線)을 형성하는 것은 역사상 아직 없었다. 그 전략의 중점은 유럽이며, 주요 적수는 소련으로 한반도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은 제한적이었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며 사기는 높지 않다. 우리들은 넓은 국토와 많은 인민을 보유하고,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한반도는 중국의 인접 국가로서 중국의 장점을 발휘하기에 유리하다.

10월 4일 팡덕회(彭德懷)는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후 서안에서 북경으로 중앙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는 회의에서 모택동의 출병 의견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출병 원조는 필요한 것이며, 뒤늦은 해방전쟁의 승리와도 같다.”** 차후 팡덕회는 한국전쟁을 수행하는 임무를 받게 되었다.

10월 7일 미국은 UN을 조종하여 ‘통일한국’ 결의를 통과시켰다. 10월 8일 모택동은 **“동북 변방군을 중국 지원군으로 전환하고 신속히 조선 국경내에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중국 중앙군위원회는 모택동의 출병에 대한 결심 후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시 공중엄호를 하겠다는 약속을 소련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참전이 두 번이나 연기되었다. 섭영진(聶英臻)은 후에 회의록에서 **“등화(鄧華) 동지의 선발대는 강을 건널 준비가 이미 되었고 모택동 동지는 등화에게 전보를 보내라고 했다. 전보를 보낼 때 그는 나(등화)를 보고 천천히 그리고 멈추었다가 다시 세 번을 헤아리고 난 후 결심하라”**고 지시하였다. 모택동 동지는 결심에 있어 세 번을 생각하고 힘들게 결정하였다.<sup>27)</sup>

10월 13일 모택동은 소련에 있는 주은래에게 전보를 보냈다.

**“정치국 동지와 토론의 결과이다. 중공군이 조선으로 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압록강변까지 적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전세는 매우 불리해지고 있다. 먼저 동북 변방군 쪽이 더 불리해져 모든 동북 국경은 흡수되거나 남쪽에 제압당할 것이다. 결론지어 우리들은 반드시 참전해야 하며 참전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참전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극대화될 것이다.”**

10월 16일 저녁 제42군 선두 정찰부대의 안내로 집안(輯安)의 철교를 이용하여 강을 건넜다. 10월 17일 압록강을 넘어가는 중공군을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소련 비행기가 소련의 통제로 압록강을 통과하지 못하자 **“전진을 멈추고 명령을 기다려라”**하는 명령을 받았다. 주은래(周恩來)가 모스크바에서 돌아와 10월 18일 모택동이 주관한 출병문제 연구에 관한 중앙회의는 당일 결정되고 다음날 출병을 확정지었다.

주 27) 위의 책 pp.19~20.

중국 중앙군위원회에서 마오쩌둥은 참전을 결정시 참전시기와 확정된 방법을 선택하여 오랜 혁명투쟁 중에서 형성된 “유리(有理), 유리(有利), 유절(有節)”<sup>28)</sup>의 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였다.<sup>29)</sup>

### Ⅲ. 중공군의 전략적 반격의 제1·2차 전역

#### 1. 유엔군의 반격 작전

##### 가. 유엔군의 낙동강선 돌파 및 추격 작전<sup>30)</sup>

1950년 9월 15일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자 낙동강선에 있는 미 제8군은 그보다 하루 뒤인 9월 16일 일제히 반격을 개시하였다. 주공인 제1군단(미 제1기병사단, 미 제24사단, 국군 제1사단, 미 제5연대전투단 및 영 연방 제27여단)은 경부국도를 따라 김천-대전-수원으로 진격을 개시하고, 그 좌측의 남서부전선에서는 미 제8군 직할사단인 미 제25 및 미 제2보병사단이 영산-창녕선으로부터 합천-거창으로, 그리고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2 및 제1군단은 안강-기계선으로부터 중부 산악지대와 동해안을 따라 각각 진격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인천상륙작전의 고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 제8군은 9월 19일까지도 낙동강을 도하하지 못하였다. 예기치 않던 상황에 직면한 맥아더 원수는 한때 군산에 대한 제2의 상륙작전을 고려하는 등, 사태의 전망을 크게 우려하였으나 9월 20일 미 제8군이 낙동강 도하에 성공하자 전세는 역전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미 제8군의 진격은 계속되었다.

주공인 미 제1군단은 9월 24일 성주와 김천을 탈환한데 이어 26일에는 영동-옥천을 거쳐, 9월 27일에는 대전을 탈환하고, 선두의 미 제1기병사단은 보은-청주-천안-오산으로 진격하여, 9월 26일(22시 26분)에는 그의 린치(Lynch) 특수임무부대가 오산에서 미 제7사단의 제31연대와 연결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9월 10일 창설되었으나 23일부터 작전에 참가하게 되어 미 제2 및 제25사단을

주 28) 유리(有理)는 전쟁의 명분으로 미국이 중공 동북 국경선에 쳐들어오면 참전하여 방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명분이 있는 것이며, 유리(有利)는 군사적으로 이로운 것으로 충분한 준비와 적당한 전장(戰場)을 선택한 후 갑자기 반격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유리하고, 유절(有節)은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쟁규모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 “지원군(志願軍)” 이름으로 미군을 공격하는 것에 절차가 있어야 한다.

29) 육군본부,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 pp.20~21.

30)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合同參謀本部, 1984), pp.441~443.

배속받은 남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9월 25일 진주를 탈환한 후 좌측의 미 제25사단이 하동-구례-남원-김제-전주-군산으로 진출하고, 우측의 미 제2사단이 협천을 거쳐 9월 28일 거창을 탈환, 강경을 향하여 진격함으로써 9월 30일에는 군산-강경-논산선으로 진출하였다.

이 무렵 중·동부전선의 국군도 순조롭게 진격을 계속하여 중부전선의 국군 제2군단은 9월 28일 충주-원주선으로,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은 동해안을 따라 큰 저항없이 9월 30일에는 38도선 남쪽 서림리-인구리선까지 진출하였다.

이렇듯 미 제8군의 전격적인 진격으로 포위되어 퇴로마저 잃은 북한군은 대부분 사살되었거나 포로가 되었으며, 겨우 그 일부가 편의(便衣)로 무기를 버린 채 북쪽으로 패주하였거나 또는 구사일생(九死一生) 산악지대로 도주하였다. 9월 15~30일 기간중 유엔군에게 생포되거나 투항해 온 북한군의 수가 무려 23,600명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10월 초에는 전 전선에서 38도선까지 진출한 미 제8군은 차후 명령을 기다리며, 부대를 정비하였다.

북한군은 제8군의 해머와 미 제10군단의 모루 사이에 협격되어 문자 그대로 분쇄당한 것이다. 침공당시 13만 5천명을 헤아렸던 북한군 가운데 38선 이북으로 도망친 자는 2만 5천~3만명에 불과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유엔군은 '한국에 침입한 북한군을 격퇴한다'고 하는 임무를 완수한 셈이다. 그리하여 전쟁이 여기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승세를 잡은 한국군은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과 미국에서는 북진에 대한 시비가 일기 시작하였으며, 세계의 이목들도 여기에 쏠렸다.<sup>31)</sup>

#### 나. 유엔군의 북한 진격<sup>32)</sup>

미국은 참전 초부터 소련 및 중국과의 전면대결의 회피를 부동의 전제로 삼았던 미국은 유엔군의 작전을 주도함에 있어 그 목표를 전선회복에 둬으로써 38도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주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50년 8월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낙동강 전선이 안정을 되찾는 가운데 인천상륙 계획이 구체화되자 미국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즉 1950년 9월 1일 미 국가안보회의는 그의 정책건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일 한반도에서 소련에 대하여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고 국가이익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된다면 미국은 결코 이러한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의 북진을 위한 기본방침이 수립되고 재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38도선 돌파 이후의 유엔군의 작전 목표를 북한군의 격멸에 두었다.

주 31)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 李元馥 譯, 『韓國戰爭』, (서울: 明成 出版社, 1996), pp.15~16.

32)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pp.444~445.

9월 11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그와 같은 안보회의의 정책건의안을 재가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던 9월 15일에는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북한 점령계획을 준비하여 차후에 별도 승인을 얻어 수행하라는 예비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의 경이적인 성공에 의하여 조성된 한반도의 새로운 군사적 상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와 북한으로의 진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였고, 유엔내의 다수 국가들도 38도선 돌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으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미 합참본부는 9월 27일 마침내 맥아더 원수에게 유엔군의 북한진격을 승인하는 정식 훈령을 시달하였다.

그러나 38도선 이북 지역에 대한 작전은 유엔군의 38도선 돌파가 개시될 때까지 중공이나 소련이 한국전쟁에 대하여 개입의사의 표명이나 실제적 개인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와, 만주 또는 소령(蘇領)에 대하여는 일체의 작전을 금지하는 동시에 중·소 접경지대의 작전은 정책적으로 한국군에게 전담하게 한다는 작전상의 제한하에서 승인된 것이었다.

미 합참본부의 '작전 제2호'로서 10월 2일 유엔군 산하 전 부대에 하달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미 제8군은 주공으로서 38도선을 돌파, 개성-사리원-평양의 축선을 따라 공격하고,

② 미 제10군단은 주공이 공격을 개시하면 1주일 이내에 동해안의 원산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원산-평양 축선을 따라 서부로 진출하여 미 제8군과 연결, 적의 퇴로를 차단 및 포위한다.

③ 정주-군우리-영월-함흥-홍남을 잇는 선까지 진격하면, 그 이북지역에 대한 작전은 한국군에게 전담케 한다.

즉, 맥아더 원수가 미 합참본부의 9·27 훈령을 토대로 수립한 유엔군의 북진계획은 미 제8군이 서부전선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평양을 탈환하는 사이에 미 제10군단은 원산에 상륙하며, 그 후 양군은 평양-원산을 연결하는 최협소부(最狹小部)에서 전선을 형성하여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유엔군이 정주-영월-함흥선에 도달하면 그 이북의 주·소 접경지대에 대한 작전은 한국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이때에 맥아더 원수는 작전 부대의 지휘권을 분리하여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으로 하여금 각각 독립 작전을 수행토록 하였다. 그는 태백산맥이 종단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세에 비추어 전선의 횡적 연결이 어렵고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부산항의 보급기능이 감소되는 반면, 인천항의 보급능력이 매우 제한되고 있어 유엔군 전부대의 작전지원이 곤란하리라는 판단하에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으로 하여금 인천과 원산의 2개 항을 동시에 사용하게 하여 작전을 조기에 종결하려 했던 것이다.<sup>33)</sup>

주 33)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 李元馥 譯, 『韓國戰爭』, pp.20~30.



## 2. 중공군의 침공

### 가. 중공군의 작전개념 및 기동계획<sup>34)</sup>

#### 1) 작전개념

##### 가) 작전목표

중공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엔군을 한반도로부터 축출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처한 국제적 지위와 그들의 군사력을 감안하여 최초부터 작전목표를 상당히 제한하였다. 즉 유엔군의 국경으로의 급속한 진격을 일단 저지한 다음 상황의 진전에 따라 반격으로 전환하되 북한의 허리인 평양-원산선까지만 진출함으로써 국경너머에 완충지대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유엔군의 반응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하되 그들은 작전목표를 한반도로부터 외국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유엔에 가입케 될 정치적 목표와 연계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초를 두고 설정하였다. 중공군의 침략이 유엔군의 확전조치로 실패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북한이 남침할 당시에 입증되었듯이 유엔군은 구주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한계성과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하지 않으려는 서방 열강의 전략 때문에 확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 나) 작전단계

제1차 공세 : 유엔군의 국경진출을 저지

제2차 공세 : 총반격으로 38도선 이북을 회복

제3차 공세 : 38도선 이남으로 침공하여 서울을 재점령하고,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할 다음 단계 작전을 준비

제1·2차 공세는 그 목표가 뚜렷하였지만 제3차 공세는 38도선 침공이라는 중대한 문제성 때문에 그의 실시 여부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었다. 중공군은 참전 이래 이 세 차례의 공세 외에도 1951년 2월의 제4차 공세와 같은 해 4~5월의 제5차 공세를 실시하였는데, 이 마지막 두 차례의 공세는 유엔군의 반격이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역반격을 실시한 것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즉응하여 취해진 공세였다.

##### 다) 전투편성

1927년 8월 1일의 남창봉기를 계기로 창설된 중공군은 1937년에 8로군, 1946년에 인민해방군으로 개편을 거치면서 계속 그 세력을 확장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는 정규군도 5개 야전군 217개 사단에 병력은 총 165만명에 달하게 되었다. 여기에 지방군 22개 사단의 100만명을 합쳐 지상군 병력은 239개 사단에 265만명, 그 외 민병 550만명

주 34)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pp.466~472.

의 예비 병력을 합하면 총 822만명이나 되었다. 이 가운데 83만명이 한반도 침공에 대비하여 만주를 중심으로 한 동북지방에 집결하였다. 그 중에도 유엔군의 정보계통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중공 정규군이 40여만명이 한·만 국경너머에 포진하고 있었다.

1950년 10월의 제1차 공세 때 투입된 최초의 중공군은 임표(林彪)가 지휘하는 제4야전군의 일부로서 이천우(李天佑)를 병단장으로 하는 제13병단의 6개군 18만명이었다. 이들 6개 군은 6·25 이전부터 만주에 계속 주둔해 있던 제42군, 중국본토를 석권한 후 화남과 화중으로부터 만주로 이동한 제38, 제39, 제40 및 제50군, 그리고 투입 직전야 산동지방의 황하부근에서 복상한 제66군 등이었다. 그리고 1950년 11월의 제2차 공세 때에는 이미 투입된 제13병단을 증강하기 위하여 대만 해방 임무를 띠고 복건성 일원에 전개해 있다가 제4야전군의 뒤를 이어 산동반도를 거쳐 만주로 이동한 제3야전군의 일부인 송시수(宋時輸) 휘하 제9병단의 3개 군 12만명을 추가로 투입하였던 것이다. 중공군의 편제상 1개 군은 그 규모가 미군의 군단급에 해당되며 병단은 군급과 동격인 것이다. 1개 군은 통상 3개 사군으로 편성되지만 투입한 중공군 중 장진호 지역에 투입된 제9병단의 경우처럼 4개 사단으로 증강되기도 한다. 전형적인 3각 편제로 되어 있는 중공군의 1개 사단 병력은 약 7,000명이며, 연대는 3,242명, 대대는 852명이다. 중공군은 한국 전쟁을 계기로 소련전술을 도입하여 사단 병력규모를 10,000~11,000명 선으로 증강하였다. 중국 편제의 특성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거의 전원이 전투 요원이며 식량 등의 보급을 현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야전근무 지원병력이 거의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투입된 중공군을 통합지휘하기 위하여 심양에 중국-북한 연합사령부(抗美援朝 支援司令部)를 설치하여 한반도에서의 모든 작전을 총지휘하였다. 초대 사령관은 당시의 중공군 총참모부장 팡덕회(彭德懷)가 임명되었다. 이들 중국-북한 연합군의 공세 단계별 전투편성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공세 : 중공군 6개 군(군단) 및 북한군 4개 군단, 30만명

사령관 겸 정치위원 : 팡덕회(彭德懷)

부사령관 : 등화(鄧華), 홍학지(洪學智), 한선초(韓先楚), 박일우(朴一禹)

부정치위원 : 등화(鄧華), 박일우(朴一禹)(조선내무장관 겸)

투입부대 :

서부전선 - 중공군 제38, 39, 40, 50(예비), 66군과 북한군 제1군단, 포병 4개 연대와 1개 대대, 고사포병 1개 연대

동부전선 - 중공군 제42군 및 북한군 제3, 4, 5군단, 포병 2개 연대

예비대 - 중공군 제20, 26, 27군 및 북한군(신편중) 제6, 7, 8군단과 직할부대

제2전선 - 북한군 제2군단

제2차 공세 : 중공군 9개 군 및 북한군 4개 군단, 42만명

사령관 겸 정치위원 : 팡덕회(彭德懷)

부사령관 : 등화(鄧華), 홍학지(洪學智), 한선초(韓先楚)

부정치위원 : 등화(鄧華), 박일우(朴一禹)(조선내무장관 겸)

참모장 : 해방(解方)

정치부 주임 : 두평(杜平)

투입부대 :

서부전선 - 중공군 제38, 39, 40, 42(동부에서 복귀), 50, 66군 및 북한군 제1군단,  
포병 1개 대대 및 8개 포대

동부전선 - 중공군 제20, 26, 27군 및 북한군 제3, 4, 5군단(사령관 겸 정치위원 송시륜)

예비대 - 북한군 제6, 7, 8군단 및 직할대

제2전선 - 북한군 제2군단

## 2) 기동계획

기동계획은 8월에 입안하여 9월에 완성된 원래의 기동계획은 중공군 제13 및 제 9의 병단을 동원하며, 제13병단은 서부전선의 미 제8군 정면으로, 제9병단은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 정면으로 동시에 기동시킬 계획이었다. 이는 6개 군으로 편성된 제13병단은 4개 군을 수퐁댐 서쪽으로 투입시켜 화수령산맥에서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나머지 2개 군을 수퐁댐 동쪽으로 투입시켜 청천강 계곡을 타고 우회기동, 미 제8군의 후방으로 진출시킴으로써 청천강 북안으로 진출한 미 제8군을 포위 섬멸한 다음, 일거에 평양을 탈취하려는 계획이었다. 이와 동시에 3개 군으로 편성된 제9병단을 중강진으로 지향, 함흥으로 진격시켜 미 제10군단의 후방을 차단하여 동 군단을 포위 섬멸한 다음 원산을 탈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진격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데다가 제9병단의 주력부대가 미처 산동지방에서 만주로 이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입을 서둘러 된 중공군은 우선 가용한 제13병단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제13병단의 6개 군을 투입하되 1개 군을 동부전선으로 기동시켜 미 제10군단의 진격을 견제하고, 서부전선에는 나머지 5개 군만 전개하여도 미 제8군의 북진공세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같이 보였다.

### 가) 공격축선

중공군의 공격축선은 압록강을 도하할 때까지의 투입경로와 도하 이후 공격 대기진지로의 기동경로를 살펴보면, 수송수단이라고는 철로 수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중공군은 2개의 철로 수송로를 이용하여 투입하였다. 그 하나는 봉천에서 직선으로 남하하여 안동에 이르는 북선철로이고, 다른 하나는 봉천에서 멀리 길림성의 매하(梅河)로 우회하여 만포진 대안의 집안(輯安)에 이르는 단선철로이다. 신의주를 거쳐 경부선과

연결되는 봉천-안동 접근로에는 도중에서 수풍댐의 청성진으로 갈라져 나간 지선이 있다. 또한 만포진을 거쳐 만포선과 연결된 봉천-집안 접근로에도 역시 도중에서 갈라져 중강진 대안의 입강에 이르는 지선이 있다. 따라서 중공군은 각각 1개씩의 지선을 갖고 이 2개의 간선철로를 한·만국경선으로 이동하는 접근로로 사용하였다.

중공군이 북한에 투입된 후 기동수단은 도보 행군이였다. 맥아더 원수가 북한의 척추(脊椎)를 이루고 있는 험준한 낭림산맥 지대를 버리고 한국전선을 동부와 서부로 분할하여 기동하였듯이 중공군 역시 이 험준한 지형을 버리고 그 양편으로 기동하였다. 최초로 북한에 투입된 제13병단의 6개 군은 1차에 4개 군이, 2차에 2개 군이 압록강을 도하하였다. 제1차 투입부대 중 주공으로서 서부전선으로 기동하게 된 3개 군 가운데 제39 및 제40 양개 군은 신의주로부터 산악접근로로 접어들어 대령강 상류-운산 및 온정으로 진출하고, 다른 1개 군(제38군)은 만포진-강계-희천을 잇는 청천강 계곡접근로로 진군하였다. 그리고 제1차 투입부대 중 조공 임무를 띤 1개 군(제42군)은 만포진-강계-장진호를 잇는 산악접근로로 이동하도록 계획하였다. 예비로서 제1차 투입부대보다 약 10일 후에 안동으로 도하한 2개군 가운데 제50군은 경의선을 따라 신의주-안주 축선으로, 제66군은 신의주-귀성-태주-용산동 축선으로 후속시킬 계획이였다. 중공군의 제1차 공세 때 그들이 선정한 서부전선의 기동경로는 마치 역삼각형의 양정점인 신의주와 만포진에서 하정점인 군우리 한곳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 작전지역내에 있는 유엔군을 포위, 격파하려는 데 있었다.

제2차 공세 때는 늦게 만주에 집결한 제9병단을 중강진으로 북한에 투입시켜 개마고원(蓋馬高原)을 남쪽으로 가로질러 장진호로 진출하는 새로운 기동로를 이용하였다. 이 때에 서부전선에서는 변동이 없었고 다만 조공으로서 동부전선에 투입되었던 제42군이 전선을 제9병단에 인계한 다음 서부전선으로 복귀하여 미 제8군의 우단인 덕천으로 서진하였다.

#### 나) 부대전개

서부전선으로 진격한 중공군의 3개 군은 좌로부터 국군 제1사단 정면인 운산에 제39군, 국군 제6사단 정면인 온정에 제40군, 그리고 국군 제8사단 정면인 희천에 제38군순으로 전개하였다. 즉, 비교적 화력이 약한 국군 정면에만 투입되었다. 그 서쪽인 서해안의 미 제24사단 정면에는 북한군 제1군단이 지연전을 전개하였으며, 이곳으로 진출하도록 계획된 제50 및 제66군은 미 제24사단이 10월 말에 철수하지 않았다면 11월 1일쯤 의천-귀성선에서 미군과 조우하였을 것이다. 전개 임무를 띤 동부전선으로 진출한 제42군은 장진호부근에서 차단진지를 구축하였다. 예하 3개 사단중 전초부대로서 하갈우리 남쪽으로 진격한 제124사단만이 제1차 공세 때 국군 제26연대와 조우하였을 뿐

주 저항선인 장진호-부전호(赴戰湖)선에 배치된 제126사단과 장진호 서쪽 사창리(社倉里)에 배치된 제125사단(-)은 제1차 공세 때 접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동쪽의 북동부 해안에는 북한군 제4군단이 지연전을 전개하였다. 이들 4개 군 가운데 희천에 제38군단이 하루 늦은 10월 26일 전투에 가담하고 나머지 제39, 40 및 42군은 10월 25일에 유엔군과 접촉하였다.

제1차 공세가 끝난 다음 3차로 북한에 투입한 제9병단의 3개 군은 동부전선으로 전개하여 서부전선의 제13병단과 함께 제2차 공세를 감행하였다. 제9병단은 제42군과 교대하여 제42군을 제13병단 지휘하로 복귀시킨 다음, 그동안 장진호로 진격한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할 수 있도록 좌로부터 제20, 26 및 27군순으로 전개하였다.

서부전선에서는 후속하던 제50 및 제66군이 서해안 일선부대로 진출하였다. 제2차 공세 때에 투입된 중공군의 규모는 총 30개 사단에 30만명으로서 미 제8군 정면에 18개 사단이, 미 제10군단 정면에 12개 사단이 각각 투입되었다.

〈표 2〉 미군과 중공군의 쌍방 육군 비교

구 분	미군 1개군(3개 사단)	중공군 1개군
병 력	6만명	4.5~5만명
화 포	1,428정	198정
차 량	9,000대	120대
탱 크	430대	없음
로켓발사기	1,600구	81구
무선통신기	5,000대	70대

출처 : 육군본부,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 p.27.

## 나. 작전경과 및 주요 전투

### 1) 중공군의 제1차 공세(1950. 10. 25~11. 8)<sup>35)</sup>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은 정식으로 출병하였다. 평터화이는 대유동(大兪洞) 근처에서 김일성과 회견을 갖고 쌍방의 공동작전을 논의하였다. 논의 후 평터화이는, 중공의 계획은 부대를 한반도에 진입 후 평양, 원산 이북에서 진지를 준비하여 방어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북한군은 조직적으로 계속 저항하며 최대한 유엔군의 전진을 늦춤으로써 지원군을 전개시키겠다고 설명하였다. 10월 19일 미군은 이미 평양을 점령하였다. 북한군 주력은 남에서 북으로 철수 중이었고 북한지역의 인민군은 각지로 분산되어 가용

주 35) 육군본부,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 pp.24~28.



한 3개 사단의 병력으로는 유엔군의 진격에 대한 지연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한 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택동과 팡덕회는 최초 계획하였던 작전방침을 바꾸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돌진하는 유엔군이 기동 중에 섬멸하기로 확정하고, 동시에 모택동은 “최초 공격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공군은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공격방향을 바꾸는 고도의 민첩한 기동적 전략전술을 적용하였다.

이번 전역에서 양측은 이동 중에 예상하지 못한 전투를 하게 되었다. 팡덕회는 그것을 “조우전에서 공세이전 전역”이라고 불렀다. 중공군은 전략상의 상대가 먼저 공격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제압하였고 전역상의 돌연성으로 압록강변으로 돌진해 오는 유엔군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여 초전에 승리를 거두었다.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중공군 제38, 39, 40, 42군 모두는 한반도로 은폐하여 진입하고 동시에 중앙군위원회는 제50, 66군을 예비대로 선발하여 10월 말 한반도 진입을 준비시켰다. 11월 초에 한반도로 투입될 중공군은 모두 6개 군, 18개 보병사단, 3개 포병사단 등 총 병력 약 30만명이었다.

당시 한국전쟁지역의 유엔군은 한국군을 포함해 총 42만명이었다. 이중 지상군은 약 21만명이고 그 중 일부는 후방의 북한군을 견제하였고, 북으로 공격중인 제1선의 부대는 약 13만명밖에 없었다.(미군 4개 사단, 영국군 1개 여단, 한국군 6개 사단)

한반도에서 미군은 1,100대의 전투기와 300대의 군함이 있었지만 중공군은 공군, 해군의 그 어떤 지원도 없었다.

위 내용의 중공군은 최첨단장비를 가진 전(前) 인민해방군 제4야전부대 중공군의 자료이며 제66군의 장비는 위에 서술된 표보다 낙후된 수준이었다. 중공군의 장비는 일반적으로 미군보다 많이 낙후되었고 화포의 구경은 대략 75mm이었고 미군 화포의 구경은 대부분 105mm와 155mm이었다.

중국은 항미원조를 출병하면서 먼저 미국에게 “공격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제압할 것이다”라고 정식으로 경고하였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출병하여 공격하는지 엄격한 비밀로 하여 출병의 소식은 알리지 않았다. 모택동은 중공군에게 “유엔군이 생각지도 못하는 기습”을 매우 강조하였다. 중공군의 각 부대는 한반도 진입시 야행주숙(夜行晝宿)으로 낮에는 엄격하게 은폐하여 적기가 밤낮으로 정찰 및 탐색하여도 몇 십만의 부대들은 일사분란하게 행군하여 적군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10월 19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한 후 맥아더는 추수감사절까지는 전쟁이 끝날 것이며, 크리스마스는 본국에 돌아가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전세를 낙관하였다. 따라서 대대, 연대 단위 부대에게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을 향해 신속히 전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된 부대 운용은 중공군에게 기습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온정-초산전투<sup>36)</sup>: 미 제8군의 우익 군단으로서 중부의 내륙지역을 진격중이던 국군 제2군단은 국군 제6사단을 좌, 국군 제8사단을 우로 하여 초산과 만포진을 목표로 각각 진격을 계속하였다. 그중 미 제8군의 최선봉사단으로서 돌파구를 형성하면서 10월 23일 희천에 진출한 국군 제6사단은, 제7연대가 사단의 우일선 연대로서 희천-회목-풍장-고장을 거쳐 벽동으로 진격하며, 제19연대는 사단예비로서 희천에 잔류하여 그곳을 초월공격하여 청천강 계곡을 따라 강계로 진격하는 국군 제8사단을 엄호한 다음 온정으로서 진할 계획이었다. 이 작전은 적의 경미한 저항이 예상될 뿐이어서 사단으로서는 빠른 속도의 진격이 강조된 작전이었다.

그 다음날인 10월 24일 아침 진격을 재개한 제7연대는 도중 양강동에서 북한군 제8사단 소속 패잔병들의 경미한 저항이 있었을 뿐 큰 접적없이 관하동으로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연대는 적의 무전을 도청하여 남하하는 북한군 30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때에 포로들의 진술을 통하여 연대는 중공군이 북한으로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날(10월 25일) 고장(古場)을 진출한 연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예비대까지 투입하는 격전을 벌인 끝에 이를 격퇴하고 이날(10. 25. 20:30)에야 고장을 점령하였다.

그 다음날(10월 26일)은 국군이 압록강 남안에 태극기를 꽂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날 날이 밝자 제7연대는 제1대대로 하여금 초산으로 진격케 하고 연대 주력은 고장에 잔류토록 하였다. 차량에 분승한 제1대대(07:50)는 고장인민학교 교정을 출발하였다. 초산 남쪽 6km 지점에서 수미상의 적으로부터 기관총 사격을 받았으나 81mm 박격포 사격으로 제압한 다음 진격을 재개한 대대는 인기척이 없는 초산시가를 통과하였다. 그곳에서 압록강 남안까지 불과 6km의 거리였으나 산에 가려 압록강이 보이지 않았다. 제1중대를 선두로 진공을 계속한 대대는 이날(10월 26일 14:15) 드디어 압록강변인 신도장(新道場)에 도착하여 그곳에 태극기를 꽂았다. 그 후 대대는 3개 소대를 강변에 배치하여 국경을 경비토록 조치하고 대대 주력은 이날(16시) 초산으로 철수하였다.

다음날 중공군의 온정리 공격이 시작되었다. 흡사 장송곡과도 같은 팽과리와 나팔 및 피리소리가 울려 퍼진 가운데 격전이 전개되었으나, 얼마 후 연대는 온정리 남서쪽 외곽으로 물리기 시작하였으며, 06시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연대는 온정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초산으로 진격한 제7연대의 유일한 후보급로이며 퇴로이기도 한 온정-초산간의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다. 급보에 접한 국군 제2군단은 희천에 있는 국군 제6사단의 제19연대(-)와 국군 제8사단의 제16연대에게 온정을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무렵 초산에서 완전 고립된 제7연대는 사단으로부터 온정리의 불행한 사태 소식과 함께 즉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식량, 연료 및 탄약이 완전히 바닥이

주 36)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pp.474~479.

나 있었으므로 기동할 수가 없었다. 곧 보내겠다는 공수보급도 다음날까지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한편 10월 28일 온정리 탈환 및 제7연대의 퇴로 개통에 나선 제19연대 및 16연대는 이날 오후 귀두령까지 진격하여 중공군의 차단진지를 격파하고 온정리가 눈앞에 내려다보이는 지점까지 진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한 채 날이 저물었다. 이날 밤 중공군의 야간공격을 받은 연대는 소규모(3~4명)로 분산되어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후일 중공군 포로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날의 적은 중공군 제125사단 제373연대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후 제7연대는 군우리에 집결하여 재편성되었는데 연대 총 병력 3,552명중 사선을 넘어온 생존자의 수는 불과 875명으로서, 연대는 75%이 병력손실을 보게 됨으로써 연대로서의 전투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다.

운산(雲山)전투<sup>37)</sup> : 청천강을 도하(10월 25일)한 미 제8군의 좌익군단인 미 제1군단은 미 제24사단(영 연방 제27여단 배속)을 좌측사단으로서 귀성-신의주 방면으로, 국군 제1사단을 우측사단으로서 안주-운산-수풍을 향하여 각각 진격케 하고 미 제1기병사단을 평양에 잔류시켜 경비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좌측의 미 제24사단은 박천-봉천-귀성-의천을 돌파(11월 1일)하여 신의주까지 불과 40km 거리인 정차동에 진출하고 우측의 국군 제1사단은 개천을 지나(10월 22일) 운산에 진출(10월 25일)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날 미 제8군은 새로운 적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승리를 목전에 둔 전국은 또다시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날 국군 제1사단은 아침 일찍이 용산동을 출발하여 운산을 향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선두의 제15연대는 여기저기 분산되어 패주하는 북한병을 소탕하며 적의 저항없이 운산에 진출하였다. 제15연대는 사단의 우일선에서 삼난천(운산 북쪽 1km) 계곡을 따라 북서진하고 제12연대가 사단의 좌일선에서 남면천 계곡에 연하여 서진하며, 제11연대는 사단예비가 되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미 제6전차대대 D중대의 전차를 앞세운 우일선의 제15연대의 선두제대가 막 삼난천을 건너 조양동으로 들어서는 순간 연대는 북쪽 고지로부터 치열한 적의 집중사격을 받았다(10월 25일 11:00). 급히 도로 양쪽으로 산개하여 공격을 개시한 연대는 그 후 약 40여분이 지났을 때, 낮은 군복차림에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1명의 적을 생포하였다. 중공군이었다. 그가 한국전쟁에서 최초로 잡힌 중공군 포로 제1호였다(10월 25일 11:44). 이 포로의 진술에 따라 “운산 북서 및 북쪽에는 물론, 그 북동쪽인 희천방면에 다수의 중공군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첩보가 입수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당시 미 제8군의 정보판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어서 인식했던 지휘관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의 계급으로

주 37) 위의 책, pp.479~482.

보아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그의 진술이 의문스럽기는 하였으나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한 사단의 미 고문관은 즉시 이를 상급사령부에 보고하였다.

이날 오후에 벌어진 격전에서 제15연대는 또 다른 중공군 포로 3명을 생포하여 평양으로 후송하였다. 좌일선의 제12연대도 운산 서쪽에서 진격이 저지되고 사단예비인 제11연대는 운산 남쪽으로 전진하여 후방을 경계하였다. 중공군 제40군 예하 제115, 116, 117사단이 운산 주변 양산에 불을 질러 그들의 기도를 은폐하면서 국군 제1사단 정면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날이 밝자(10월 27일) 상황이 약간 호전되었다. 10대의 C-119 수송기에 의해 탄약을 공중보급받은 사단은 영산 북쪽과 서쪽에서 제15 및 12연대가 각각 2~3km씩 진출하였고, 사단 예비인 제11연대도 운산-용산동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중공군을 격퇴시킨 것이다. 다음날(10월 28일) 운산 정면은 소강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2명의 중공군을 생포하였다. 그러나 미 제8군은 좀처럼 중국 정규군의 전면개입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북한군을 증원하기 위한 소규모의 중공군이 투입되었을 뿐이라는 그들의 최초판단을 수정하려 하지 않았다.

한국전쟁의 특징 중의 하나는 유엔군이 절대적인 제공, 제해권을 장악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시종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지상군의 위기와 함께 하늘에도 이변이 생겼다. 10월 24일의 추격명령에 비행제한이 해제되어 유엔군의 F-15기가 신의주 부근에서 근접 항공지원에 임하자, 만주의 기지로부터 발진한 소련 공군의 최신예기인 MIG-15기가 신의주 상공으로 진입하여 무스탕기에 일격을 가해 왔던 것이다.<sup>38)</sup> 그러자 역전의 무스탕기 조종사들은 이를 회피하면서 몇 대의 적기에 피해를 주면서 격퇴시켰지만, MIG 조종사의 국적이 문제가 되었다. 만약 조종사가 북한군이라면 소련의 군사원조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고, 만약 중공군이라면 중공의 개입이 본격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소련군이라면 정말 귀찮은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동안의 공중전으로 그들의 국적을 알아낼 수도 없었다. 미 제5공군은 물론이고, 도쿄와 워싱턴에서도 사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sup>39)</sup>

중공 공군의 항공기나 소련제의 MIG-15가 한국전쟁의 전장으로 비로소 나타난 시기가 중공군의 지상부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한국전쟁의 전장에 나타난 시기와 같았다는 사실이다. 왜 이 점을 강조하느냐 하면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당시 스탈린과 모택

주 38) 平松茂雄 著, 黃仁模 譯, 『中共과 韓國戰爭』, (서울 : 병학사, 1989), pp.112~114에 의하면 1950년 11월1일 13:45에 MIG-15 제트 전투기 처음 출현.

39)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 李元馥 譯, 『韓國戰爭』, p.74.

동 사이에 중대한 정치적 모략이 존재하였다라기 보다, 오히려 중공정부나 모택동의 주체적인 결정에 의하는 바가 컸었다라고 보는 경향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유력하였다. 그러나 MIG-15는 소련제로 더구나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최신행 제트 전투기이다. 그 비행기가 중공군 지상부대의 참전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전장에 출현하였다는 사실은 중공군의 참전이 중·소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시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것은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한 MIG-15의 역할을 안다면 한층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당시 중공군의 참모장 대리였던 섭영진의 회상록에 의하면 중공군에게 출동명령이 내려진 것은 10월 18일이었다. 이미 8월 초, 출동의 대기 명령을 받았던 등화(登華) 지휘하의 전략 예비부대와 제42군은 다음날 19일 압록강을 건넜으며 25일 소규모이지만 유엔군과 최초의 전투를 하였다(제1차 공세). 이어서 11월 말부터 12월에 걸친 제2차 공세에서 중공군은 유엔군을 북한으로부터 소탕한 중요한 전과를 거두었다. 제2차 공세의 개시 당시 압록강을 건넌 중공군은 10개 사단과 1개 여단 총계 13만명이었다.<sup>40)</sup>

중공군은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산맥 속에서 수십군데의 숲에 불을 질러 운산을 목표로 하는 공격을 개시했다. 이렇게 연기를 피움으로써 전선으로 이동하는 동안 공중정찰을 피해보자는 속셈이었다. 어둠이 내리자 공격이 치열해졌다. 한밤중에 한국군 15연대는 압도당하여, 병력의 대부분이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었다. 중공군의 밥이 된 다음 부대는 중공군이 둔산 남동쪽 퇴주로를 차단한 11월 2일 아침 일찍이 걸려든 제8기갑연대 소속 제3보병대대였다. 그러나 제1·2보병대대는 노상 장애물을 가까스로 돌파했다. 막대한 희생자 수와 중공군의 전력에 마주친 제3보병대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부의 구원군이였다. 그러나 구원군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제5기갑연대 잔류병들은 11월 2일 대낮 밝은 시간을 이용하여 탈주를 시도했으나, 장교들은 곧 중공군의 봉쇄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포의 부족과 전투지역을 뒤덮고 있는 짙은 연기 때문에 구출을 시도한 2개 보병대대는 단 하루 백주에 벌인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350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날 늦게서야 군단 사령관 밀번 장군은 전선에서 900미터 떨어진 조용한 공동(空洞)에서 제1기갑사단장 게이 장군을 만났다. 군사 명령에서 잔혹하기 짝이 없는 요구 중에 하나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사석(捨石)작전이었다. 밀번은 게이와 여타 장교들에게 말했다. “이거야말로 내 군생활에 있어서 가장 쓰라린 결정이다. 이들 병력을 포기하는 것은 아메리카 합중국 육군의 전통에 반한다. 나는 이 결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제군들도 이 결정을 좋아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결정은 이미 내렸다.” 위와 같은 내용이 밀번

주 40) 平松茂雄 著, 黃仁模 譯, 『中共과 韓國戰爭』, pp.113~114, 섭영진, 『섭영진 회고록 하』 (1984년, 북경 해방출판사), pp.737~738.



이 부하들에게 준 전갈의 골자였다. 이리하여 명령이 급히 하달되었고 구출시도는 포기되었다. 포위된 제3보병대대는 제 갈 길을 가야 하고 살아 남으려면 외부의 지원없이 살아 남아야 한다.<sup>41)</sup>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은 비교적 순탄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서부전선은 미 제8군이 중공군의 침공으로 진격이 저지되어 혼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1950년 10월 10일 원산을 탈환한 국군 수도사단은 동해안을 따라 문천(10월 31일), 영흥-함흥-북청-서천-성진을 거쳐 청진으로 진격(11월 25일), 그 선두부대가 부령으로 진출(11월 30일)하여 최종목표인 회령-웅기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었다.

군단 예비이던 국군 제3사단의 제26연대가 장진호를 향하여(10월 25일) 진격 중 수동부근에서 예기치 못한 완강한 적의 저항에 부딪쳐 진격이 저지되고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날 밤 전투에서 연대는 낮선 차림새의 적 1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는 중공군 제8군 예하 제5연대 소속으로서 그 북방에 4~5천명의 중공군이 잠복하고 있음이 그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졌다. 그러나 미 제10군단 정보처에서는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포로가 진술한 중공군 제8군은 서부전선으로 잠입한 제1야전군 소속이며, 제5연대는 중공군 제1군 예하의 제2사단 소속이므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연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이것을 국군 제26연대가 그들의 진격이 계획보다 늦어진 것을 변명하기 위한 조작극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을 연결하여 북한의 허리(평양-원산)를 잇는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경계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맥아더 원수는 미 제10군단을 북한의 북동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투입함으로써 미 제10군단의 작전 지휘권을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ker) 중장 산하고 통합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분리, 지휘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의 부사령관 겸 참모장의 직책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미 제10군단까지 겸하고 있던 알몬드(Almond) 소장은 맥아더 원수와 개인적으로 매우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 있었으며, 워커 중장과는 서로 경쟁상대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맥아더 원수는 미 제10군단을 독립군단으로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결국 이 같은 미 지상군의 작전권 분리는 양군간의 진격속도에 큰 차이를 빚게 함으로써 서부전선과 동부전선간에는 광대한 공간이 생기게 하였다. 맥아더 원수는 양군 사이의 지형이 매우 험준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작전상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진격도중 이 지역에서 많은 적의 유격대가 준동하여 미 제8군 및 미 제10군단의 측방을 위협하였다. 다행히 이 공간지대를 통하여 중공군의 집단적 침공이 없었던 것은 맥아더 원수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다.

주 41) Joseph C. Goulden, 김쾌상 역, 『한국전쟁』, (서울 : 일월서각, 1982), pp.306~307.

그러나 이무렵 동부전선에도 이미 중공군은 침공하고 있었다. 미 제1해병사단 정면에는 고토리에서 제7해병연대가 중공군과 교전(11월 5~10일)하여 중공군 포로 58명을 잡았는데 이들은 모두가 중공군 제124사단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고, 미 제7사단 제32연대가 장진호 부근에서 획득(11월 8일)한 포로 또한 북한군이 아닌 중공군 제126사단 소속의 중공군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sup>42)</sup>

## 2) 중공군의 제2차 공세(1950. 11. 25~12. 24)

제1차 전역 종결 전 팽택회는 중공군이 유엔군의 주력군을 잡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11월 4일 중앙군위원회에게 건의했다. “만약 적(유엔군)이 다시 들어오면 적(유엔군)을 깊게 들어오게 한 후 섬멸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익일 모택동은 답장으로 “적(유엔군)들이 깊게 들어오는 기회를 기다려 적(유엔군)군을 섬멸하는 방침”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11월 9일 모택동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전역의 목적은 “이달 내에서 12월 초까지 동~서 전선에서 각각 한번의 전투로 7~8개 연대를 섬멸시키고 평양까지 진출하여 평양-원산 간의 경원선을 탈환한다.” 11월 13일 중공군은 당위원회를 열어 “아군(중공군)의 공군, 포병은 아직 적절히 배치되지 않았으므로 운동전, 진지전, 유격전을 상호 결합하여 내선과 외선을 결합하는 방침을 채택할 것이다”라고 확정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중공군은 제1차 전역 종결 후 중공군 각 부대는 11월 6일부로 유엔군의 정찰대 공격을 저지하며 일면 후퇴를 시작하였다. 중공군은 철수하면서 길을 따라 낡고 오래된 무기와 장비를 계획에 따라 유기(遺棄)하였다. 이러한 유엔군을 유인하는 조치들은 연합군의 정치수뇌들은 중공군의 전략의도를 판단하는데 커다란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은 중공의 참전 가능성은 상징적이며 6~7만명의 병력으로 압록강의 수력발전소를 점령하는 것 정도로만 인식하였다.<sup>43)</sup>

제2차 전역은 소련의 공군 지원, 전술의 변화, 미군 포로에 대한 대응, 지휘체계 변화라는 몇가지 점에서 앞의 전역과 구별할 수 있다. 우선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소련은 11월 1일을 전후로 전투기를 투입하였으며 소련측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소련 공군이 격추시킨 미군기는 1,309대였고, 격추당한 소련기는 351대였다고 한다.<sup>44)</sup> 이때부터 북한과 중국, 소련이 연합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엔군의 최종 공세면에서 보면, 제1차 공세의 목표를 달성한 중공군은 11월 6일 새벽에 전 전선에 걸쳐 약간의 전초와 잔류접촉 분견대만 남겨 놓고 그 주력은 재편성 및 재보급을 위하여 북쪽의 산간지역으로 잠적하였다.

주 42)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pp.485~488.

43) 육군본부,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 p.34.

44) 조선일보, “이것이 한국전 내막이다”, 1994년 6월 3일자.

한편 중공군은 제9병단의 12개 사단을 동부전선에 추가 투입하여 유엔군의 반격작전에 대비하였다. 중공군의 전략적인 후퇴를 알 수 없던 맥아더 원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공격을 재개하여 공산군을 격멸하고 신속하게 국경으로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준비로서 극동 공군에게 압록강상에 모든 교량을 폭격, 이를 절단하라고 명령하고는 지난달에 중단하였던 병력과 탄약의 수송재개를 요청하였다. 이때 미 행정부는 중공군의 출현에 충격을 받아 비등하기 시작한 국내와 우방국의 여론을 의식하여 유엔군을 안전한 선에 정지시킨 다음 완충지대를 설정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맥아더 원수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하였다. 결국 만주 폭격을 제외하고는 맥아더 원수는 그의 뜻대로 모든 군사적 제 방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목표는 압록강 선까지 진격이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엔군의 최종 공세는 무엇보다도 미 제8군의 우익이 안정되고 공격을 위한 병력의 증강 및 소요 보급품의 확보가 우선되어야만 하였다.

12월 4일에 이르러 북한에는 조중연합사령부(朝中聯合司令部)가 설치되면서 작전 지휘권이 통일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사령관 겸 정치위원은 팽덕회가, 부사령관은 중국의 등화와 북한의 김응이, 부정치위원은 북한의 박일우가 임명되었다. 이로써 사실상의 전쟁 지휘권은 남한과 북한이 유엔군과 연합군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중공군의 2차 공세를 맞아 유엔군은 서부전선의 청천강 교두보를 포기하고 철수한데 이어 동부전선에서도 함흥으로 철수하고 있을 무렵인 12월 초순(4~8일) 유엔군측에서는 현재의 전황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이 공세에서 방어로 전환하였으나 공산군에 비하여 병력이 열세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병력의 증원 없이는 강요에 의한 철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하여 유엔군을 통제하는 미 합참본부는 방어전략의 채택은 승인하였지만, 일정한 선에서의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 제8군과 제10군단을 통합하여 평양-원산을 연결하는 선을 점령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의 양개 부대를 통합하더라도 평양-원산 선의 노상거리가 약 250km에 달해 전선이 신장되고 중심이 얇아 중공군에게 돌파 포위될 위험이 높으며, 태백산맥으로 인하여 양개 군의 협동작전과 군수지원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별개의 해상 병참선이 갖는 이점마저 상실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제10군단을 함흥에 계속 둬으로써, 적의 측방을 위협함은 물론 이 간격을 통한 대부대의 후방 진출을 저지할 수 있어 더 좋은 선택이나 이러한 상황도 근본적인 병력의 증강 없이는 일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합동참모본부는 제10군단 운용에 관한 맥아더 장군의 견해와 달리 산악기동력의 우수함이 입증된 중공군에게 도리어 넓은 기동공간만 제공할 따름이라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미 합참과 유엔군사령부간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표출되자 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12월 4일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이 도쿄를 급히 방문하여 맥아더 장군과 1차 전략회담을 가졌다. 그는 맥아더 장군에게 현재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부대의 증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통보하였고, 합동참모본부는 현 상황에서 유엔군의 병력보존이 최우선 고려 요소이므로 유엔군 해안교두보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맥아더 장군의 전략에 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 계획에는 9개의 방어선이 설정되었는데 서울을 중점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서울 북쪽에 4개의 방어선이 설정되었고 최종 방어선은 개전 초기의 낙동강 방어선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이 계획을 12월 8일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5호로 하달하였고, 제8군은 평양에서 38도선으로,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은 흥남에서 남동해안 지역으로 철수하게 되었다.<sup>45)</sup>

서부전선은 공격 제2일째인 다음날이 되자 전 전선에 걸쳐 중공군과 조우하면서 격전이 벌어졌다. 중공군의 제2차 공세가 개시된 것이다. 서부전선에 전개한 중공군 6개군 가운데 서해안 쪽에 배치된 제50 및 66군은 현 전선에서 미 제1군단의 진격을 저지 또는 지연하고 나머지 4개 군은 2개 공격집단을 구성하되 그중 제38 및 42군으로 구성된 집단은 미 제8군의 우익 쪽으로 우회 기동하여 미 제8군의 후방으로 진출하고 한편으로 제39 및 40군으로 구성된 집단은 청천강 북안에 남진하였다. 이는 유엔군의 주력을 청천강 일대에서 포위 섬멸하려는 기도였다.

최초의 접전은 25일(10:30)에 일어났다. 청천강 계곡을 따라 진격하던 미 제2사단의 좌일선 제9연대의 선봉으로 신흥동 부근에 219고지로 올라가던 B중대가 지형의 이점을 최대로 살려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의 기습을 받고 진출이 저지되었다.

이날 밤 미 제8군의 우익에서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미 제2사단과 우측방의 국군 제2군단 우익인 덕천지구의 국군 제7사단이 26일 02시에 중공군 제38군의 야간 습격을 받아 격전이 벌어졌고 2시간 후에는 전선의 일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군단 예비로 있던 국군 제6사단 2연대를 투입하였으나 이미 예비진지와 연대지휘소가 중공군의 침투 부대에 의해 유린되고 이와 동시에 덕천에 위치한 사단사령부도 습격을 받아 사령부의 일부 병력과 1개 포대만 순천으로 철수하였을 뿐 사단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 우측의 국군 제8사단도 거의 같은 시각에 중공군 제42군의 중압을 견디지 못해 후방 가창선에 급거 배치된 미 제1기병사단의 제2방어선을 통과하여 철수하였다. 27일 날이 밝았을 때는 덕천 이동지역이 이미 중공군의 수중에 들어갔음이 항공정찰로 확인되었다.

이때 중공군은 덕천전투 승리 후 중공군 총사령부는 제38군과 제42군에게 서부전선을 향해 이증으로 우회하라고 명령하였다. 제38군은 안쪽으로 우회하여 개천, 삼소리 방향

주 45) 國防軍史研究所, 『韓國戰爭(中)』, (國防軍史研究所, 1996), pp.238~239.

으로 돌진해 미 제9군단의 후방을 공격하였다. 제42군은 외부로 우회하여 순천, 숙천을 향해 돌진하였다. 11월 27일 저녁 제38군 113사단은 단독군장으로 전진하여 날이 밝은 후 유엔군 중심에 진입하였다. 미군 비행기의 정찰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 무기를 버리고 위장하여 전진하였다. 유엔군의 비행기 조종사는 이러한 중공군을 덕천에서 패퇴한 한국군으로 오인하였다. 11월 28일(08:00)에 그 사단은 14시간 동안 72.5km를 행군하여 평양으로 개천도로의 교차점인 삼소리까지 돌진하여 청천강 북쪽에서 유엔군을 3면에서 포위하였다.

이 무렵 미 제1군단 정면에서는 상황의 큰 변동이 없었으나 미 제9군단 정면에서는 중공군의 증압으로 몇 km씩 밀리기 시작하였다. 이날 동부전선의 미 제1해병사단이 무평리 진격을 개시하였으나 중공군의 역습을 받고 방어로 전환하였다.

동부전선(長津湖 전투)은 27일 아침 하갈우리(下礪隅里)를 출발한 미 제5해병연대가 유담리(柳潭里)에 진출하여 이곳에 전개한 미 제7해병연대 진지를 초월하여 무대리(武埋里)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한 지 얼마 후의 일이었다. 날이 어둡기 시작할 무렵 유담리 서쪽 외곽을 벗어나려던 미 제5해병연대가 사방에서 치열한 사격을 받게 되었다. 중공군 제89 및 79사단이 이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미 해병을 기습공격하여 집요한 파상적인 돌격을 계속하였다.

미 제7해병연대와 합세한 미 제5해병연대는 밀고 밀리는 근접전을 전개하면서 유담리 북서쪽 6km인 덕동산으로 후퇴하였다. 이 무렵 장진호 동쪽 기슭에서 공격중이던 미 제7사단의 2개 대대 역시 중공군 제80사단의 역습을 받고 하갈우리 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밤 중공군 제9병단 산하 제79, 89, 59의 3개 사단이 장진호 일대를 포위하고 이어 그 후방을 차단하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 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이 장진호 호반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을 때 다른 중공군 2개 사단(제58, 76사단)이 고토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장진호와 흥남 사이의 후보급로마저 차단되자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Smith) 소장은 사단 예비인 미 제1해병연대를 투입하여 도로를 개통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때 날씨는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혼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사자가 속출하고 탄약은 점점 고갈되어 갔다.

그 후 약 2주일 동안을 공수보급에 의존하면서 악전고투를 계속한 끝에 유담리와 장진호 동쪽 호반, 그리고 하갈우리에서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한 미 해병대와 미 제7사단의 2개 대대는 또 한번 고토리와 황초령에 구축된 중공군의 차단선을 격전 끝에 돌파한 다음에야 진흥리(眞興里)로 남하하여 미 제1해병연대와 합류하였으며, 이날(11월 11일)로 흥남의 집결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미 해병대와 항공대의 막강한 화력에 직면하여 극심한 손실(살상 37,500명)을 났으므로 유엔군의 흥남교두보를 계속 공격할 전투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3개월 동안 전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반면, 미 해병사단의 손실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10월 26일 원산에 상륙한 이래 총 전투력 손실은 4418명에 달하였고 그밖에 비전투손실의 수(7,313명)의 대부분은 동상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공군의 입장에서 제2차 전역은 유엔군을 38도선 이남까지 몰아 승리로 종결되었다며 중국과 북한의 통계에 의하면 전역 중 중공군이 3.6만명의 유엔군을 섬멸하였고 그 중 미군이 2.4만명(미국 통계는 전투원 손실은 1.7만명)이었다. 미 제8군 위커 중장은 철수 중에 차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미군은 10일내 300km 이상을 후퇴하였고 미 국무장관에 치슨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퇴각 노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역 중에서 중공군은 전쟁 사상자가 3.07만명이었으며 동상으로 5만 여명의 인원이 감소하여 전투근무지원의 어려움은 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sup>46)</sup>

#### IV. 결 론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내용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로 발표를 하고 있다. 중공군은 국내 정세로 한국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며, 지도자 역시 북한을 도와 줄 수 있는 여력과 특히 미국을 상대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전쟁 발발 직전까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한편은 김일성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전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얻었고 이러한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없었다. 그리고 스탈린이 강조한 중국의 동의 없이는 전쟁이 불가능하고 또한 중국의 병력지원 약속 없이는 김일성이 단독으로 남침을 할 수 없었다는 두 가지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중국과 소련의 자료와 전쟁에 참전하고 전쟁계획을 준비하였던 중국과 소련 정책 입안자들의 자서전을 분석하고 미국과 한국의 1950년 6월 25일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후자의 견해가 확실시 된다. 또한 북한 김일성은 스탈린의 사주, 그리고 모택동의 동의와 병력지원 약속하에 남침한 것이 근거 있는 사실이다.

중공군의 참전에 관한 유엔군의 오판은 ‘리델하트’의 말이 생각난다.

“자기가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하여 적도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할 수 없다. 윤리관이 나 가치관이 다르면, 합리성의 척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적정판단이 맞지 않는 것은 자기의 척도로 적을 헤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주 46) 육군본부,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 pp.44~45.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과 1·2차 공세 전역을 살펴보면 당시의 미국과 한국 정부 정책 입안자들과 군 수뇌부들의 정보수집과 정보판단 능력 부족, 전투 지휘관들의 현장 지휘감독과 병력운용 능력의 부족, 연합군 상호간의 협동작전 할 수 있는 정보교환 부족 등의 결함 사항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관한 정보다. 중공군의 대규모 침공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었는데 유엔군사령부는 끝까지 중공군의 참전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중공군의 침공과 같은 전쟁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적의 동향에 관한 정보는 이를 수집, 평가함에 있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원수는 이를 그의 직관력에 의하여 판단하려 함으로써, 중공군의 제1차 공세가 있는 직후까지도 중공군의 침공을 붕괴 직전에 있는 북한을 증원하고자 잠입한 소수의 지원병에 불과한 것으로 오판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그의 참모들까지도 중공군의 제1차 공세가 끝났을 때 북한에 잠입한 중공군의 병력을 고작 27,000명 정도로 보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그릇된 정보판단의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최후의 승리를 목전에 둔 유엔군의 철수작전은 한반도 분단의 영구화를 재촉하였다.

둘째, 적의 전술과 적정에 관한 정보 부재이다. 중공군 전술에 대한 무지는 국군을 위시한 유엔군 장병들의 전의를 크게 위축시켰다. 미군은 중공군을 아시아의 보잘것없는 농민군 정도로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50년 10월 말 중공군의 제1차 공세에서 그들의 특이한 포위전술 즉, ‘V자 전법’을 체험하면서 유엔군 장병들은 중공군의 호각, 피리, 나팔 또는 징소리가 나기만 하면 공포에 사로잡혀 앞을 다투어 후방으로 도망을 하는 우를 범하였다. 이는 중공군의 기만에 의한 포위전술을 연상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피아간 식별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 국군, 북한군, 중공군은 같은 동양인이어서 피부의 색이나 외모의 생김새만으로 서로를 식별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를 기화로 중공군과 북한군이 국군을 가장하고 유엔군(주로 백인부대)에 접근, 기습을 가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1950년 11월 2일 운산 남서쪽 4km 지점인 구룡강 강변 상초동에서 주보급로상의 중요한 교량을 경계중이던 미 제8기병연대 소속 1개 전차소대 및 2개 보병 분대가 국군을 가장한 1개 중대 규모의 중공군을 국군으로 오인, 통과시킴으로써 동 연대 제3대대가 이들의 기습을 받고 거의 전멸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밖에도 1952년 2월에는 중·동부전선의 황성에서 역시 국군을 가장한 중공군의 기습으로 네덜란드 대대가 대대장을 잃는 불행한 사태를 빚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넷째, 전쟁중에도 끊임없는 전훈(戰訓)을 도출하여 신속하게 인접부대에 전파하는 것은 차후작전에 크게 기여한다. 중공군은 운산전투를 치른 지 3주일도 채 못된 1950년 11월 20일자로 “운산전투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소책자를 발행하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미군과의 전투경험을 토대로 미군의 강점과 약점을 낱알이 분석,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응

책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장차 작전에 대비하였다.

만일 유엔군 및 국군도 중공군과의 전투경험을 토대로 그때그때 그들의 전술상의 특징을 분석, 평가하여 일선 전 장병들에게 전훈으로써 제시하였더라면 정신전력과 전술 운용 측면에서 크게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다섯째, 약탈은 파멸의 주요 원인이다.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는 중국본토를 적화한 지 불과 9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급이나 장비는 보잘것이 없었다. 전투병이 소총마저 없는 자가 많았으며, 이들은 전우나 사상자를 발견하면 비로소 무기를 손에 질 수 있었다. 여기에 이른바 모택동의 “食而飢之(식이기지 : 적으로부터 식량을 구한다)”는 교시를 받드는 그들이기 때문에 미군진지에 침입할 기회만 있으면 당장에 도적단으로 돌변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중공군은 보급의 부족으로 미군진지를 점령하거나 사상자를 발견하기만 하면 굶주린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알몸이 나올 때까지 약탈했다. 이로 말미암아 군기는 문란해지고 지휘체계가 마비되는 사태가 빈번히 야기된 것이다.

여섯째, 전승불복(戰勝不復)이란 뜻은 ‘한번 사용한 방법은 다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격이 실패한 후에 동일한 형태의 재공격은 기피하는 것이 전장에서의 상례이다. 왜냐하면 적도 그간에 대비책을 세워놓기 때문이다. 사마법(司馬法)에도 ‘먼저 사용한 전술은 다시 반복하지 말라(無復先術…嚴位第四)’라고 되어 있다. 하갈우리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은 약 1개 사단이 투입되었음이 포로의 진술에서 확인되었다. 중공군의 전투력은 11월 28일에 있었던 공격에 비하여 공격횟수가 거듭될수록 병력의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보다 조직적이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하갈우리 일대를 감제할 수 있는 비약산을 점령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주공을 가장 진지 보강이 잘되어 있는 동일한 정면(1중대)으로 계속 지향하여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현대 과학기술이 빠르게 진보하며 장기간 전쟁을 하지 않는 상황하에 제한전쟁의 교전국 또는 지지국은 언제나 모든 최첨단 군사기술 성과를 전장에서 응용한다. 한국전쟁 중에서 중국, 소련의 공군은 최첨단 전투기를 사용하였고, 미국은 최근 연구 제작된 대량의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전장에 투입하였다.

한국전쟁에서 중국과 북한은 인력과 정신상의 우세함이 있었고 유엔군은 절대적인 기술 우세로 인하여 군사역량의 균형이 형성되었다. 전쟁의 규모가 유한하고 전장이 비교적 협소하여 구체적인 전투가 전략의 국면에 항상 영향을 준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리하여 신기술 장비와 신기술 수단은 전쟁에서 보면 이전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은 유한목표, 유한공간, 유한시간, 유한수단으로 특색적인 제한전쟁이었다. 각국은 국방체제, 군대편제, 병력배치, 무기 및 장비개발 등 다방면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어 세계 냉전체제하의 군비경쟁에 또다시 화력을 점화시켰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國防軍史研究所, 『韓國戰爭(中)』, 國防軍史研究所, 199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의 배경과 원인, 6·25전쟁사 1』, 200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中共軍 鴨綠江을 건너다』, 서울:해동문화인쇄사, 1989.
- 김경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서울:논형, 2005.
- 박은봉, 『세계사 100장면』, 서울:가람, 1992.
- 申相楚, 『中國共產主義運動史』, 서울:輯文堂, 1987.
- 육군대학, 『6·25전쟁사』, 육군대학, 2004.
- 육군본부,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 육군본부(편집, 황성칠/김광수), 2005.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 육군본부, 1985.
-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서울:백사서당, 2000.
- 日本陸戰史研究普及會, 李元馥 譯, 『韓國戰爭』, 서울:明成 出版社, 1996.
- 韓國戰略問題研究所,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서울:世經社, 1991.
- 合同參謀本部, 『韓國戰爭』, 合同參謀本部, 1984.

〈국외문헌〉

-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1960, Stanford Univ, Press.
- Richard G Hewlett & Francis Duncan, 『A History of Atomic Energy Commission』, vol. 2, The Pennsylvania State Univ., 1969.
- Joseph C. Goulden, 김쾌상 역, 『한국전쟁』, 서울:일월서각, 1982.
- William Stueck, 서은경 역, 『한국전쟁과 미국의 외교정책』, 서울:나남, 2005.
- 孫健, 『中華人民共和國經濟史 1949~1990』,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 周軍, “新中國初期人民解放軍未陵遂行攻臺計劃原因初探,” 『黨史研究資料 1期』, 中央黨史出版社, 1991.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周恩來軍事文選 4卷』, 中央文獻出版社, 1993.
- 靑石, “金日成阻止了 毛澤東攻臺灣的計劃,” 『明報月刊』, 제7기, 1994.
- 靳德行, 『中華人民共和國史』, 河南大學, 1994.
- 平松茂雄 著, 黃仁模 譯, 『中共과 韓國戰爭』, 서울:병학사, 1989.
- 해리 S 트루만, 손세일 역, 『시련과 희망의 세월』 하, 지문각, 1968.

## 〈논문 및 기타〉

- 이완범, “중국군의 참전 이전 미중관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 군사편찬연구소, 2001.
- 畢穎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원인과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현종민,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정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 「모스크바가 스티코프에게」(1949. 10. 26), 『소련외교문서』 제3권 ; 「그로미코가 스티코프에게」(1949. 11. 20), 『소련외교문서』 제3권.
- 『서울신문』, 「모스크바 새 증언」, (1), 1995. 5. 15.
- 『인민일보』 1977. 1. 11.



## 6·25전쟁 초기 중국의 군사적 대응

- 군대이동과 배치를 중심으로 -

### 목 차

#### I. 서 론

#### II. 본 론

1. 신 중국의 국방 군사배치 조감도
2. 방어와 개입을 위한 이중적 군사 예비조치
3. 개입을 위한 후속병력의 편성과 이동

#### III. 결 론



서 상 문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I. 서 론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정부는 이와 무관한 듯이 침묵을 지켰다. 중국 정부가 6·25전쟁에 대한 자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하게 된 것은 3일 뒤인 1950년 6월 28일 정무원 총리이자 외교부장인 周恩來(1898~1976)의 논평이었다. 그는 한반도 파병과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진주를 명령한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 대통령과 그 정부를 겨냥해 6·25전쟁은 미국이 “이승만 괴뢰정부”를 교사해 일으킨 전쟁이자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음모라고 단정했다.<sup>1)</sup> 周恩來의 논평은 같은 날 소집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으로 약함)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미국의 군사행위에 대응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었다. 그로부터 중국정부가 1950년 10월 중순 중국군을 입북시켜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기까지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실제적인 대응은 크게 일곱 가닥으로 정리된다.

주 1) 「外交部周恩來部長關於反對美國總統杜魯門六月二十七日聲明和美國武裝侵略我國的聲明」(1950年 6月 28日),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宣傳部編, 『偉大的抗美援朝運動』(北京:人民出版社, 1954年), 4쪽.

첫째, 미군의 한반도전개와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출동을 중국의 통일문제, 즉 대만 해방에 대한 무력간섭으로 인식하면서 대만해협과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의 철수와 6·25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 것이었다. 그것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미군이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환기로 나타났는데, 일정 부분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 1879~1953)과의 의견조율을 거친 공조의 결과였다. 소련과의 공조는 이외에도 북한을 지원하는 소련 군수물자의 중국 영공 및 육상 통과 등의 군사 협조까지 포함된다. 둘째, 북한에 대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기능을 정상화하면서 북한 지도부와의 공조를 모색했다. 그것은 주로 북한의 전쟁수행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각종 군사 지원의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일부 병력의 북한이송, 북한 지도부와의 연계를 통한 정세파악 및 정보수집과 북한지역의 지형정찰 등이었다. 셋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방어와 한반도 군사개입의 동시 준비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이른바 ‘東北邊防軍’을 급거 편성하고, 관련 사전 준비를 진행시켰다. 넷째, 그 과정에서 한반도 전황변화에 대응해 대만해방작전의 연기를 당론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다섯째, 이에 따라 중국국민당군과 미군의 공격 예상지역으로 간주한 華東지역과 수도 北京-華北일대의 중국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방공체제를 구축했다. 여섯째, 군수, 병참, 수송 등의 후방지원체제 수립과 단위 부대별 군사훈련 등의 각종 전투준비였다. 일곱째, 국내정치 수준에서 반미의식의 고양을 위한 군중집회의 유도, 그리고 이를 통한 전자동원체제로의 전환준비에 착수한 것이었다.

본고는 이 가운데 세 번째 주제인 중국의 군사적 방어조치와 한반도 군사개입의 동시 준비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특히 毛澤東(1893~1976)이 파병을 결심하기 이전의 군사적 예비조치 가운데서도 중국군의 이동 및 배치에 대해서 현미경의 조리개를 열어봤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학계에서도 그다지 세밀하게 조명된 바가 없다. 이 작업은 이 영역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서 중국군의 한반도 파병을 신 중국의 국가안보 내지 국가 방위계획과의 비단절적 연장선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이 작업은 6·25전쟁 당시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을 총체적, 계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I. 본 론

### 1. 신 중국의 국방 군사배치 조감도

중국은 군대를 한반도에 파병해 군사적으로 개입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행로를 밟았을까? 먼저 전쟁초기 중국 지도부가 취한 군사적 예비조치를 살펴보자. 6·25전쟁 발생 직후부터 10월 중순 한반도 군사개입에 이르는 약 4개월 동안 초기 중국 지도부가 취한

군사조치 중 가장 두드러진 동선은 두 방향이었다. 첫째, 대만해방을 위한 군사준비의 계속적 추진과 그리고 미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어와 개입을 동시에 고려한 이중적 군사준비의 조기 착수였다. 군사이동 배치가 방어준비에 해당됐든, 파병개입을 위한 사전 이동이 됐든 군 병력을 동북지역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예비조치였다. 둘째는 대만해방 작전을 연기함으로써 그때까지 대만공격을 계획, 준비해온 공세적 입장을 버리고 미군의 동북아 군사진출에 대한 영토방어 및 한반도 파병으로 선회한 것이다.

상기 조치를 주도한 것은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毛澤東이었다. 군사문제는 외교문제와 같이 毛澤東이 사단급 부대의 전술지휘까지 내리면서 직접 주관한 그의 전문 영역이었다. 중국군의 참전을 당론으로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군사배치의 재조정과 이동, 준비 등에 관한 조치들은 전적으로 毛澤東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의 참모들과 주요 야전 지휘관들의 건의를 종합해 내린 결정이었다. 따라서 중국군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려면 우리는 먼저 毛澤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수뇌부가 조치한 중국군의 병력이동과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쫓아가 볼 필요가 있다.

핵심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사항에 관해 개념을 정리해보고 넘어 가기로 하자. 하나는 전쟁 초기 중국군의 중북 국경지대로의 군사이동 배치를 어떤 성격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毛澤東의 對한반도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전통 중국의 唇亡齒寒 개념의 발전적 형태인 신 중국 수립 후 毛澤東의 지정학적 안보개념을 짚어본 후 그것을 토대로 그가 짜놓은 신 중국의 군사상황과 군사배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국군의 중북국경지역 이동과 배치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먼저 전자와 관련해 중국관내의 군 병력을 동북지역으로 이동, 배치시킨 목적이 파병개입을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미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 목적이었는지 그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6·25전쟁 개입 결정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학계의 徐澤榮은 毛澤東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작정한 것은 1950년 1월부터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1950년 초 毛澤東과 스탈린이 중소동맹 체결시 김일성(1912~1994)의 남침문제를 논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毛澤東은 한국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미리 연초부터 이에 대한 전쟁준비에 착수했는데, 군대이동 배치는 그 일환이었다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주장은 그가 毛澤東과 스탈린의 사

주 2) 徐澤榮에 따르면 毛澤東은 먼저 전쟁개입의 사전준비로서 1950년 2월에 7개 사단을 동북으로 이동시켰고, 그리고 소련의 군사지원을 득하자 동북지역의 비행장 31개소를 수리한 후에 다시 9개 사단을 동북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徐澤榮, 「“中國介入朝鮮戰爭之始末與目標”分章摘要」, 『傳記文學』, 第77卷 第4期(2000年 10月號), 47쪽.

전 밀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중국내 군대이동까지 참전의 범주 안에 넣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이종석은 1950년 7월에서 9월에 걸친 중국 지도부의 군사이동 배치를 6·25전쟁에 참전하기 위한 출병준비로 파악하면서 중국이 참전을 준비한 것은 7월초부터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3)</sup>

이 점과 관련해 나는 중국이 파병준비를 착수된 한 것은 전쟁 발발 직후부터였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정책차원에서 파병을 결정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쳤다고 본다. 첫째 단계는 1950년 6월 28일의 중앙인민정부위원회 회의에서, 즉 중국 수뇌부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참전을 배제하지 않고 그에 관한 당론은 사태추이에 따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毛澤東이 7월 중순부터 군 병력을 동북지역으로 이동 배치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준비에 착수한 후부터 한반도의 전황이 역전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8월 중순까지 사전 중북 국경방어 준비에 치중한 기간이었다. 물론 이 조치는 순전히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북한진입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둘째 단계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연이어 전개된 전황반전 시점부터 9월 말 기간동안 毛澤東이 번민어린 심사숙고 끝에 최종적으로 파병을 결심하게 된 시기다. 이것은 중공 차원에서 최종적인 당론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毛澤東 개인의 생각이었다. 셋째 단계는 毛澤東이 자신의 결심을 중공 당 지도부에 공론화함으로써 국가정책 차원에서 파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10월 초부터 10월 19일 사이의 단계였다. 이 마지막 셋째 단계는 소련의 군사지원 범위, 즉 파병조건을 둘러싼 스탈린과의 조율문제로 파병 결정을 미루기도 하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몇 차례의 반전을 거친다.

후자인 毛澤東의 대한반도 지정학적 인식과 관련해서 당시 신 중국의 국가 방위에 관한 그의 구상과 실체는 어떠했는가?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국영토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핵심(혹은 중핵)지대, 변경(邊疆)지대, 완충지대(buffer zone), 전략적 영토경계지대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해왔다. 핵심지대는 長江, 黃河江 중하류 유역과 남방의 珠江 유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중화문명의 발상지이자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腹地)이다. 변경지대는 핵심지대를 보호하는 바깥외연지역으로서 핵심지대와는 唇亡齒寒, 唇齒相依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핵심지대를 에워싼 內蒙古, 위구르(新疆), 青海, 廣西, 東北地域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완충지대는 국경 너머 바깥 지역의 동북아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지역들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체로 과거 중국과 '조공 책봉'의 宗藩관계에 있던 지역이었다. 전략적 영토경계지대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아의 말라카 해협 연안

주 3)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 중심, 2000년), 129쪽.

국가들과 같이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실제로 미치는 지역이다.<sup>4)</sup> 위에서 열거한 東北, 內蒙古, 위구르, 靑海, 廣西 등의 변경지역은 핵심지대를 보호하는 바깥 외연지역으로서 핵심지역과 순망치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동시에 각기 한반도,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이들 바깥지역과도 순망치한 관계에 있다.

신 중국 건국 후 毛澤東이 전국 차원의 국방군사력 배치를 조정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도 상기 지정학적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1949년 10월 하순 중국인민해방군 제3야전군이 대만 점령의 일환으로 대만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전술적 요충지로 부상한 金門島에 대해 감행한 공격이 실패하자 그 직후인 같은 달 31일 毛澤東은 바로 신 중국의 군 병력 배치를 새롭게 했다. 이에 관한 毛澤東의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天津-북경, 上海, 廣州를 중심으로 한 세 지역을 중국 국방의 중점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 세 지역은 모두 연해지역으로서 근대공업이 가장 발달한 수도 북경과 화북, 화동-화중지역, 화남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의 역사에서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 침략시 진입해온 통로였다.

천진은 수도 북경과 화북으로 직입이 가능한 중국북방의 관문이다. 20세기 벽두 중국의 북경과 화북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義和團의 난을 평정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으로 군대를 진주시킨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국 군대가 북경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 천진의 塘沽항이었다. 상해는 주지하다시피 신 중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대중국무역 혹은 침략을 위해 끊임없이 드나들거나 파리를 뜬 곳이었고, 長江을 통해 南京, 武漢 등의 중부 중국지역은 물론 重慶, 成都 등 서부내륙의 四川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중동부 지역의 문호이다. 광주는 중국의 문호개방을 강제하기 위해 아편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중국인에게 피침의 역사를 안겨준 영국이 대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삼은 굴욕의 상징으로서 광동성 뿐만 아니라 광서, 호남, 강서, 복건성을 통해 중국의 중부와 서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남방의 길목이다.

따라서 상기 세 지역은 제각각 長江, 黃河江 중하류 유역과 광동성의 珠江 유역의 중심도시로서 중국의 안보개념상 전략적 중핵(핵심)지대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요컨대 毛澤東이 연해지역의 주요 거점도시들을 잇는 북경, 천진, 山海關, 상해, 杭州, 南京, 廣東, 廣西지역을 중국 안보의 중점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필요성에서 고려된 구상이었다. 毛澤東은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계획을 수립했고,

주 4) 이것은 일본이 明治維新 후 상정한 '이익선' 개념, 혹은 전진 교두보 개념과 유사하다. 이곳은 현재 미국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 즉 예상되는 적의 공격력을 단독으로 혹은 동맹국과 연합해 국외에서 무력화해 외침에 대한 자국의 본토방어 능력을 제고하려 하듯이 향후 중국도 그와 유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군대배치와 운용도 그에 부합되도록 조치했다.

중국은 국공 내전이 끝나가는 당시 총 병력 390만명의 중국인민해방군을 4개의 야전군으로 편제해 운용해 왔었다. 1개 야전군은 대략 3~4개 병단이 소속돼 있고, 1개 병단은 3~4개 군단을 예하에 두고 있었다.<sup>5)</sup> 이 병력은 공안 사단 등 여타 무장병력을 제외한 정규군 숫자였다. 이 가운데 지상군이 거의 100%를 차지했고, 공군과 해군은 각기 7,500명과 7,700명으로서 둘을 합쳐도 전체 병력수의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공내전이 끝나기 전인 1949년 7월 현재 병력분포를 보면 4개 야전군 가운데 중국국민당군의 잔여 저항세력을 진압하고 있는 제4야전군에 전체 정규군 병력 390만명의 약 70%에 가까운 240만명을 배속했다. 나머지 150만명이 각 군구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부 직할부대에 소속돼 있었다.<sup>6)</sup>

신 중국 건설 초기 중국인민해방군 주력부대는 주로 西北, 西南, 中南, 華東 지역에 배치돼 있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중국국민당 군벌의 잔여 세력과 비적(土匪)토벌에다 중국국민당 계열 간첩의 색출, 반당분자들의 숙청과 함께 농촌토지개혁 및 건설사업에 투입돼 새로 탄생된 중공정권을 공고히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만과 티벳을 해방시킬 준비를 병행하고 있었다. 각 야전군의 배치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민해방군 제1야전군(제1·제2·제18·제19병단)은 內蒙古, 山西, 陝西, 甘肅, 寧夏, 青海, 新疆 등지의 서북을 '해방'한 후 주로 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점령지의 혁명공고화 작업에 투입돼 있었다. 일부분의 병력은 제2야전군의 작전에 투입돼 서남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야전군(제3·제4·제5병단)은 雲南, 貴州, 四川, 西康지역, 즉 이른바 서남지역에 들어가 중국국민당 잔류 부대를 소탕하고 있었다. 제3야전군(제7·제8·제10병단)은 대만의 대안지역인 화동지역의 上海, 杭州, 南京일대를 중점적으로 방어하고 있었다. 제4야전군(제12·제13·제14·제15병단)은 廣西지역의 중국국민당 계열의 군

주 5) 중국군의 군 편제는 병력 수와 편제에서 우리와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949년 당시를 기준으로 중국 중국인민해방군은 예하에 5개 야전군을 운용하고 있었다. 1개 야전군은 대략 적게는 15만 여명에서 많게는 90만명 전후의 규모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제돼 있었다.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5월까지 중국은 제1·제2·제3·제4야전군 등 모두 4개의 야전군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 예하 부대의 편제는 3개 단위부대를 기본으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증감시키는 등 부대 편제 단위는 시기별로, 부대별로 달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개라고 규정할 수 없다. 여기서 그 단위부대로서의 '兵團' (=集團軍)은 우리의 군(Army)에 상당한다. 그 다음 아래 단계의 '軍'은 우리의 군단(Army corps)에 해당된다. 그 이하 쌍방의 군편제를 등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師=사단, 團=연대, 營=대대, 連=중대, 排=소대 등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병단 이상 단위 부대를 제외하고 그 하급의 단위 부대는 편의적으로 한국군 단위부대 명칭으로 고쳐 기술하겠다.

6) 劉少奇, 「代表中共中央給聯共(布)中央斯大林的報告」1949年 7月 4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央檔案館編, 「建國以來劉少奇文稿」(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5年), 第1冊, 1~2쪽.

벌들을 제압한 후 예하 5개 군단이 廣州를 중심으로 廣東과 廣西 두 지역의 국방을 맡고 있었다.<sup>7)</sup> 이 상황은 1950년 5월 야전군을 폐지하고 전군을 각 군구별로 개편, 재조정하기 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때 중국은 중앙군사위원회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부 등의 중앙기구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기존의 야전군 체제를 새롭게 전국을 중공의 6대 지방중앙군으로 개편한 군사관리 체제에 맞게 6대 군구(동북, 서북, 서남, 중남, 화동, 화북)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부 직할(제20병단) 체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sup>8)</sup>

이처럼 毛澤東은 6·25전쟁 직전까지는 핵심지대인 수도 북경과 화북지역 방어에 치중하기보다 중국국민당을 섬멸하기 위해 남방에 더 많은 군대를 투입 혹은 배치해놓은 형국이었다. 따라서 수도방어에 직결된 화북지역과 동북지역의 옛 해방구에는 주로 지방부대와 수비부대가 있었을 뿐 야전군의 주력부대는 적었다. 화북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부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제20병단(사령관 楊成武, 1914~) 예하의 제66·제67·제68군단 등 3개 군단과 기타 6개 2급 사단이 北京, 天津, 山海關을 잇는 선상에 배치돼 있었다. 핵심지역 방위에 직결되는 동북지역도 병력이 많지 않았다. 이 곳에 야전부대가 주둔하게 된 것은 중국인민해방군 제42군단이 이동한 1950년 봄부터 시작됐었다. 제42군단 군단장 吳瑞林(1915~)에 따르면 6·25전쟁 발생시 동북지역에는 자신의 제42군단 밖에 없었다고 한다.<sup>9)</sup>

이처럼 취약한 수도와 화북지역의 방어에 대해서 毛澤東은 다음과 같이 해결하려고 했다. 그는 먼저 상기 병력으로는 유사시 수도 및 화북지역 전역을 방어하기엔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 제3야전군의 경우 방어 중점지역은 화동지역이었고, 병력 일부를 대만 공격준비에 투입시켜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도 북경을 둘러싸고 있는 華北 지역까지 방어하기에는 무리였다. 이에 대비해 전군에서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제4야전군의 제13병단과 제1야전군의 제19병단 등 2개 병단을 수도를 중심으로 한 華北지역 방어뿐만 아니라 유사시 전국 차원의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이른바 ‘중앙인민정부 인민혁명군사위원회’(이하 ‘중앙군사위원회’로 약칭함) 직할의 ‘국방전략예비대’로 운용하고 있었다. 즉 제4야전군의 예하 군단들 가운데 廣州를 중심으로 兩廣(廣東과 廣西)지역을 수비하고 있는 5개 군단들 외에 3개 군단을 河南에 주둔케 함으로써 언제든지 華北으로

주 7) 각 야전군의 지휘관과 병력 수는 다음과 같았다. 제1야전군 사령관은 彭德懷으로서 15만 5,000명이었다. 제2야전군 사령관은 劉伯承이었고 28만명의 병력이 있었다. 제3야전군은 원래 사령관이 陳毅였으나 그가 화중지역에서의 군사 지휘관계로 부임하지 못하고 부사령관인 粟裕가 그를 대신하고 있었다. 병력도 초기 편제시에는 58만 1,000명이었으나 1949년 말에는 82만명으로 증가돼 있었다. 제4야전군의 사령관은 林彪였고 병력은 90만명이었다.

8) 화동군구로 개편될 제3야전군만 8월에 가서 개편이 확정됐고, 그 결정 후 실제로 중국은 1950년 10월 1일부로 전군에 일률적으로 야전군 명칭과 병단번호를 없앴다.

9) 徐澤榮, 「有關朝鮮戰爭的面幾訪點紀錄」, 『傳記文學』, 第77卷 第4期(2000年 10月號), 57쪽.

증원할 준비를 갖추게 하고, 기타 나머지 군단은 湖南, 湖北, 江西 3개 성에 주둔시켰다. 그리고 주력부대를 철도선상에 위치시켜 남북으로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다른 하나의 국방전략예비대인 彭德懷(1898~1974)의 제1야전군 예하 부대 가운데 楊得志(1911~)가 지휘하는 제19병단 소속 3개 군단 병력 10만명을 寶鷄, 天水, 平涼 지역에 주둔시켜 유사시 어느 곳으로나 기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sup>10)</sup> 毛澤東의 군 병력 배치 조정 작업은 1950년 상반기 제19병단과 제13병단 두 국방전략예비대가 각기 지정된 주둔지인 하남과 호남, 호북과 강서성 등지에 도착하면서 기본적으로 완료됐다.

이상의 배치에서 알 수 있듯이 毛澤東은 국방전략예비대를 남북과 동서의 주요 교통로가 교차하는 지역인 陝西省과 河南省 일대에 주둔시켜 남쪽과 북쪽 양방향으로 기동시킬 수 있도록 해 남방을 중시하고 북방을 느슨하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방을 중시하고 수도와 동북지역을 포함한 북방지역을 경시한 군사력 배치는 앞에서 소개한 지정학적 안보개념을 토대로 대륙 내 잔류중인 중국국민당군의 섬멸, 그리고 대만해방작전을 고려한 혼합형으로서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과도기적 조치였다. 당시 중국 국민당군의 잔여 세력이 중공군에 저항하고 있던 지역은 주로 장강 이남의 서남 각지였다. 첫째, 신 중국의 6대 행정구 가운데 동북지역은 해방이 가장 빨랐고 토지개혁도 이미 완성됐으며, 공업 분야의 회복도 마무리돼 가는 단계로 중공 지도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중점이 해방에서 이미 경제 건설로 이행된 상태였다. 둘째,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동북지역은 소련과 북한에 인접한 변경지역이었지만, 당시는 중소동맹이 체결된 데다 중북관계도 우호적이었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 이 지역 수비에 거대 병력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정학적 방어개념에서 볼 때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 주변의 국제적 안보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던 중국의 동북지역은 전략적으로 후방에 속했다. 이 점은 1960년대에 들어와 소련과의 관계악화로 중국군을 대거 동북지역의 중소국경지대로 배치시킨 사실과 대비된다. 중국은 국공내전 승리 후 방대해진 군 병력을 감원하기 위해 군대복원을 실시하기 전 한동안 전체 중국군의 병력이 정규군인 중국인민해방군과 기타 각종 무장병력을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인 총 530여만명으로 팽창했던 적이 있다. 이 때에도 毛澤東은 동북지역에는 방어병력을 많이 주둔시키지 않았다. 이 지역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동북군구는 예하에 6개 경비사단과 일부 지방부대 약 10만명 밖에 배속돼 있지 않았다. 이 병력은 당시 전국 6개 대군구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였다. 물론 이 외에 당시 동북으로 이동해와 농업생산에 종사하던 원 제4야전군 소속 제42군단과 정치 군사훈련

주 10) 毛澤東, 「關於兵力部署的幾點意見」(1949年 10月 31日), 軍事科學出版社、中央文獻出版社編, 『毛澤東軍事文集』(北京: 編者出版, 1993年), 第6卷, 35~36쪽.

(政訓)을 진행하고 있던 일부 포병부대와 기병부대들이 있었지만 이 부대들을 모두 합쳐봐야 총 22만 8,000명의 병력에 불과했다.<sup>11)</sup> 제42군단도 5월 중국인민해방군의 개편에 따라 부대 전체가 농업개간 부대로 전환됐으며, 6개 경비사단은 2개로 축소된 상태였다.

## 2. 방어와 개입을 위한 이중적 군사 예비조치

그러나 북한의 남침이 초래한 미국의 즉각적 한반도 개입과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진주로 중국 주변의 안보환경이 크게 변화하자 毛澤東은 기민하게 군사력 배치를 재조정했다. 毛澤東이 서둘러 군사력 배치를 조정하게 된 중요한 동인은 두 가지였다. 毛澤東은 한반도에 상륙한 미군이 북한을 거쳐 중국동북지역으로 진격해올 것으로 예단했고, 이에 따라 먼저 미군에 대항할 북한정권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중국동북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긴급히 군사력 배치를 재조정하고, 동북지역에 대한 군사역량을 증강시켜 안보태세를 공고히 함으로써 돌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毛澤東의 전략구상에 따라 전략적 후방으로 간주돼 오던 동북지역이 일약 국가안보의 전진기지(advanced base)로 바뀐 셈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 조치와 대응은 먼저 중공 중앙정치국 서기처 수준에서 논의를 거친 일차적 합의가 선행됐다. 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8일에 소집된 중공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이 국가 안보전략의 중점 재조정에 따라 결정된 중국의 국방 군사배치는 크게 두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sup>12)</sup> 즉 그간의 대만공격 작전준비는 계속 추진한다. 그와 동시에 동북변방의 안전을 지킬 이른바 ‘동북변방군’을 긴급히 편성해 동북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후 만일 미군이 38도선을 넘을 경우 즉각 개입하기로 하되 그에 관한 당론은 사태추이를 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동북지역에서의 방어작전과 유사시 한반도 군사진입에 필요한 소련의 공군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실제로 중국 수뇌부가 그 때까지 지속해온 중국국민당 잔여 부대 소탕을 포함해 대만에 대한 재공격준비를 일단 보류하고 즉각 중국인민해방군을 전

주 11)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著, 『抗美援朝戰爭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1卷, 64쪽.

12) 중공 중앙정치국회의는 6월 28일에 소집돼 하루로 회기가 끝난 것으로 중국의 각종 자료에 기록돼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춰 봐 그 후로도 연속적으로 몇 차례 더 회의가 진행된 듯하다. 당시 중앙정치국은 毛澤東, 朱德, 劉少奇, 周恩來, 任弼時, 陳雲, 康生, 高崗, 彭眞, 董必武, 林伯渠, 張聞天, 彭德懷 1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가운데 毛澤東, 朱德, 劉少奇, 周恩來, 任弼時, 陳雲(6월 9일 보선됨) 등 6명이 중공 중앙서기처 서기였다. 현재 중국정부는 아직까지 중공 중앙정치국이 결정했다는 문건이나 혹은 회의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 비상 예비동원체제로 신속하게 전환시킨 것은 북한군이 수세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전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은 8월 중·하순에 이르러서였다.

毛澤東은 일찍부터 6·25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950년 7월 7일 周恩來에게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국방군사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했다. 이 날은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날이자 동시에 중공 군사고문단이 베트민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을 향해 昆明을 떠난 날이기도 했다. 毛澤東의 지시에 따라 周恩來는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신분으로 즉각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해 당일 오후 국방군사회회의 제1차 회의를 열었다.<sup>13)</sup> 태평양 건너 유엔안보리에서 유엔군 결성안건이 통과되기 10여 시간 전이었다. 회의 참석자는 周恩來를 비롯해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관 朱德(1886~1976), 제4야전군 사령관 겸 중남군구 사령관 林彪(1907~1971)와 靑島에서 요양중인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 徐向前(1901~1990)을 대리하고 있던 부총참모장 聶榮臻(1899~1992), 그리고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 羅榮桓(1902~1963) 등 모두 20명 내외였다.<sup>14)</sup> 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적지 않게 불참했고, 그 대신 다른 야전 전투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점으로 보아 중공 최고 지도부 수준의 결정을 실무진에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회합으로 판단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周恩來로부터 毛澤東과 당 중앙정치국이 ‘東北변방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유사시 “출국 참전”에 대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周恩來 자신의 주장을 듣고 東北변방군에 관한 편성과 이동문제를 집중적으로 의논했다.

주 13)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선으로 1949년 10월 19일 출범했다. 주석 毛澤東, 부주석 朱德, 劉少奇, 周恩來, 彭德懷, 程潛을 포함해 총 29명이었다. 주석, 부주석 외에 나머지 위원 23명은 林彪, 高崗, 劉伯承, 賀龍, 陳毅, 羅榮桓, 徐向前, 聶榮臻, 葉劍英, 粟裕, 張云逸, 鄧小平, 李先念, 饒漱石, 鄧子恢, 習仲勛, 羅瑞卿, 薩鎮冰, 張治中, 傅作義, 蔡廷鍇, 龍雲, 劉斐 등이었다.

14) 참석자는 19명이었다는 설과 23명 혹은 24명이었다는 설이 있다. 전자의 19명설에 따르면, 회의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제4야전군 부정치위원 譚政,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 蕭勁光, 총정치부 부주임 蕭華, 중앙군사위원회 철도부장 겸 철도병 사령관 滕代遠, 총정보부장 李克農, 總後勤部부장 楊立三, 總幹部部副部長 賴傳珠, 중앙군사위원회 작전부장 李濤, 중앙군사위원회 軍訓部長 蕭克, 인민무장부장 張經武, 中央復員委員會 비서장 傅秋濤, 동북군구 후군부장 李聚奎 외에 중앙군사위원회 작전국 부국장 張淸華와 중앙군사위원회 작전국 부국장 겸 周恩來의 군사비서 雷英夫가 열석했다. 후자의 19명 이상 설에 따르면, 이들 19명 외에 공군사령관 劉亞樓, 포병부사령관 蕭進, 동북군구 부사령관 賀晉年, 제4야전군 포병사령관 萬毅 등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해진다. 韓懷智等編, 『當代中國軍隊的軍事工作』(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年), 上卷, 449~450쪽. 또 중국군사과학원의 관방서에는 기갑사령관 許光達도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著, 『抗美援朝戰爭史』(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1卷, 65쪽.



東北변방군으로 구성될 부대와 병력 수, 지휘기구 설립 및 지휘관 인선과 배치, 정치동원, 수송계획, 병참보급의 보장, 압록강 부근지역으로의 집결시간, 병력보충과 부대훈련 등에 관한 방안들이 거론됐다.

논의 결과 5개항으로 된 '동북변방 보위에 관한 결정'(關於保衛東北邊防的決定) 초안이 작성됐고, 그 날 밤 12시에 毛澤東의 승인을 받았다. 毛澤東은 동북변방군 편성에 관한 중앙군사위원회 제1차 국방군사회회의의 결정을 의의 없이 동의했고, 결정된 대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5개항의 내용은 첫째, 부대규모와 이동, 배치 문제로서 4개 군단과 3개 포병 사단을 7월 말까지 전부 安東(현 丹東), 輯安, 本溪 등지로 집결시켜 다음 명령을 기다릴 것. 둘째, 지휘기구 편성문제로서 제3야전군 부사령관 겸 화동군구 부사령관인 粟裕(1907~1984)를 동북변방군 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 蕭華(1916~1985)를 부정치위원으로 임명할 것. 셋째, 후방병참 업무를 준비할 것. 넷째, 병력자원 확보문제를 준비하되(중국인민해방군) 총후방군무부<sup>15)</sup>가 관련 계획을 기간 안에 완성할 것. 다섯째, "국방안전을 지키자"라는 슬로건 하에 정치동원을 전개하되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 이에 관한 계획을 기초할 것 등이다.<sup>16)</sup>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毛澤東이 승인한 문헌에는 동북지역으로 보낼 부대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지 않은 것처럼 기록돼 있다. 그래서 핵심 사항인 어떤 부대를 동북변방군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 끝에 사흘 후인 7월 10일의 제2차 국방군사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제1차 국방군사회회의가 끝난 후 제2차 국방군사회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제4야전군 겸 중남군구 제3정치위원 譚政(1906~1988)과 趙爾陸(1905~1967) 참모장, 萬毅(1907~) 특종병 사령관, 賀晉年(1909~) 동북군구 부사령관 겸 참모장이 잇달아 북경에 도착했다. 제2차 국방군사회회의에는 제1차 회의에 참가했던 인원 가운데 羅榮桓과 許光達(1908~1969)이 불참했고, 滕代遠(1904~1974) 대신에 중앙군사위원회 수송사령관 呂正操(1905~)가 참석했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총후군부 부부장 張令彪(1902~1987)가 총후군부 부장 楊立三(1900~1954)을 대리해 참석했으며, 譚政, 趙爾陸, 萬毅, 賀晉年과 중앙 인민정부 위생부 부부장 겸 중앙군사위 위생부 부장 賀誠(1901~) 등도 회의에 참가했다.

7월 10일의 제2차 국방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1차 국방회의에서 성안된 '동북변방군' 조

주 15) 총후방군무부는 중국 중국인민해방군의 후방군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정식 명칭은 '중국인민해방군 총후방군무부'이지만, 이 조직은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중앙정부의 군사기관인 '중앙인민정부 인민혁명군사위원회'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중앙인민정부 인민혁명군사위원회는 중공 중앙군사위원회가 확대 조직된 것이고, 양 조직의 위원도 거의 동일하지만 '중앙군사위원회' 안에 총후방군무부라는 부서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하 본문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군부'로 약칭하겠고, 그것은 바로 중앙군사위원회의 총후군부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6) 毛澤東, 「關於同意保衛國防問題會議決議事項給聶榮臻的信」(1950年 7月 7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第1冊, 428쪽.

직 관련 초안에 대해 심의한 후 이를 정식으로 통과시켰다. 계속해서 회의는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토의했고, 동북변방군 결성에 필요한 각종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 안은 周恩來가 몇 차례 문구를 조정하는 퇴고를 거쳐 3일 뒤인 7월 13일 毛澤東으로부터 “동의한다. 이대로 집행하라”(同意, 照此執行)는 최종적인 승인을 득했다. 관련 자료와 앞뒤 정황을 종합했을 때 毛澤東은 제1차 국방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최종 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7월 7일의 제1차 국방회의 결정 내용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으로는 단지 그 후 실행된 군 이동 시간과 실제 집결지역이 조금 변경됐을 뿐이다.

동북변방군 조직에 관한 최종 안에 따르면, 제4야전군의 주력으로서 중앙군사위원회의 국방전략예비대인 제13병단 예하 제38·제39·제40군단과 동북군구로 배속된 제42군단, 그리고 제1·제2·제8 등의 3개 포병사단과 공병, 기병 등의 특종부대 수 개 사단 및 연대를 포함해 총 25만 5,000명의 병력으로 동북변방군을 편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편성된 동북변방군의 병력은 이 보다 약 4,000여명이 적은 25만명을 약간 웃돈 규모였다. 선발된 병과와 부대별 병력 수는 아래 표와 같다.<sup>17)</sup>

동북변방군 부대 편성표

부 대		편 성 인 원(명)
제13병단	병 단 사 령 부	1,400
	제 3 8 군 단	49,015
	제 3 9 군 단	57,907
	제 4 0 군 단	50,916
	소 계	159,238
제 4 2 군 단	47,857	
포병사령부	포병사령부 본부	1,000
	포 병 제 1사 단	9,478
	포 병 제 2사 단	9,233
	포 병 제 8사 단	9,499
	고사포병 4개 연대	8,134
소 계	37,353	
기 병 1 개 연 대	1,100	
공 병 제 6 연 대	2,200	
자 동 차 병 3 개 연 대	3,000	
총 계	250,748	

주 17) 통계 내용은 1950년 7월 8일 중앙군사위원회 작전부가 작성한 계획을 근거로 했다. 후에 공병 제6연대는 포병사령부의 지휘를 받았으며, 기병연대는 제13병단 직속으로 정찰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3개 자동차 수송연대는 각 군단에 배속됐다.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著, 『抗美援朝戰爭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1卷, 67쪽에서 재인용.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4개 야전군 가운데 제4야전군이 6·25전쟁에 투입될 중국군의 주력으로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배경이 있었다.

첫째, 중국군 중 가장 전투력이 강한 최정예부대였기 때문이었다. 제4야전군은 원래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거치면서 정예부대로 성장 발전했는데, 특히 사령관 林彪가 1949년 4월 중국국민당군의 저항지였던 海南島를 점령함으로써 “철군”이라는 칭호를 얻은 전력이 이를 말해준다.

둘째, 제4야전군에는 東北지역의 지세나 기후 등을 잘 알고 있는 東北지역 출신 군인들이 많았고, 그들은 국공내전 시기 東北지역에서 전투를 치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東北지역전쟁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었고, 여기에다 한인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도 고려됐다.<sup>18)</sup> 한인 병사들은 태반이 1945년 8월 일제패망과 동시에 만주점령을 놓고 국공양당이 선점경합을 벌였을 때 毛澤東이 동북으로 급파한 중공군에 충원된 동북지역 출신들을 가리킨다. 그 후 계속해서 그들은 제4야전군에 소속돼 중국국민당군에 대한 전투를 위해 남방까지 동원됐다.

셋째, 당시 사령부를 漢口에 두고 있던 제4야전군은 예하에 제12·제13·제14·15병단 등 4개 병단과 특종병과 철도수송병으로 편성돼 있었다. 그 가운데 특히 제13병단이 주력으로 선정된 이유는 제4야전군의 海南島 공략작전시 제13병단 소속 제38·제39·제40군단이 선봉에 서서 주력군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제13병단은 1949년 말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직할 국방전략예비대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 병단은 중국을 둘러싼 주요 완충지대인 臺灣, 베트남과 한반도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편성돼 있었다. 이 세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전선에 배치돼 있는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고도 그 지역의 유사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무가 부여돼 있었다. 말하자면 전국적 차원의 방위의 틀을 흐트리지 않거나 전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국경변방의 국지전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13병단의 사령부도 유사시 중앙군사위원회의 직할군구인 북경군구와 그 밖의 6대 군구 등 전국 어디든지 필요한 곳으로 기동, 지원할 수 있도록 동서남북 기동이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인 중원지역의 河南省에 됐다.<sup>19)</sup>

상기 방침에 의거해 중국 지도부가 실제로 편성한 동북변방군 지휘부와 병력의 동북지역 이동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동북변방군의 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는 제3야전군 부사령관 겸 화동군구 부사령관 栗裕가 선임됐고, 부사령관으로는 蕭勁光(1903~1989)이

주 18)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 解放軍文藝出版社, 1991년 第2版), 1~2쪽.

19) 杜平, 『在志願軍總部』(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년), 11쪽.

선정됐다. 부정치위원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蕭華가 임명됐다.<sup>20)</sup> 동북변방군 후근사령관에는 李聚奎(1904~)가 임명됐다. 부대이동과 관련해 제38·제39·제40군단을 7월 10일과 15일 각기 주둔지인 廣州, 信陽, 漯河<sup>21)</sup>를 떠나 8월 5일 이전에 일단 동북지역의 중북국경의 安東, 遼陽, 鳳城지역으로 집결시키고, 제42군단으로 하여금 7월 30일 齊齊哈爾과 北安線을 출발해 通化, 輯安으로 이동, 집결하도록 계획했다.<sup>22)</sup> 毛澤東이 승인한 7월 7일의 지시는 제13병단의 일차 집결지로 安東, 輯安, 本溪로 지정됐는데, 이번에는 安東, 輯安, 本溪 지역 외에 遼陽, 鳳城 지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毛澤東은 제13병단 중 예하 3개 군단을 동북지역으로 이동케 함과 동시에 7월 19일 광둥의 제4야전군 소속 제15병단 사령관 鄧華(1910~1980)와 정치위원 賴傳珠(1910~1965)를 각기 제13병단의 사령관과 정치위원에 취임하도록 전보발령을 내렸다.<sup>23)</sup> 그리고 鄧華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13병단과 제15병단 지휘부를 서로 맞바꾸기로 하고, 제13병단 사령관 黃永勝(1910~1983)이 지휘부를 데리고 광주의 제15병단 사령부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중공 중앙의 심의결과 鄧華가 黃永勝 보다 군사 능력면에서 더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7월 25일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제13병단의 제40군단 군단장 韓先楚(1913~1986)를 제13병단 부사령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鄧華는 제13병단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毛澤東에게 제15병단 참모장 洪學智(1913~)를 제13병단 부사령관으로 천거했고, 毛는 8월 洪學智를 제1부사령관으로 임명해 鄧華와 손발을 맞추도록 했다. 또 한 사람의 부사령관은 7월에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에서 동북변방군 부사령관을 겸직토록 전보 발령 난 蕭勁光이었다 - 그러나 蕭勁光은 8월 중순까지도 부임하지 않았다. 부 정치위원에는 각각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蕭華가 겸직토록 임명됐으며,

- 주 20)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周恩來年譜 1949~1976』(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7年), 上卷, 53쪽.  
 21) 이종석은 자신의 근년 저서에서 제4야전군 예하 제38·제39·제40군단의 동북 이동 전 주둔지를 각기 信陽, 驛河, 洛陽으로 소개했다[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 2000년), 230쪽]. 이종석은 洪學智의 회고록에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朱建榮은 자신의 연구저서 최근판에서 당시 제13병단 정치부 주임을 지낸 杜平의 회고를 근거로 信陽, 漯河, 洛陽으로 기술했다[朱建榮, 『毛澤東の朝鮮戰爭—中國が鴨綠江を渡るまで』(東京: 岩波書店, 2004年 第2版), 68~69쪽]. 나는 중공 중앙문헌연구실에서 펴낸 『周恩來傳 1949-1976』에 근거해 3개 군의 이동전 주둔지를 각기 廣州, 信陽, 漯河로 소개했다. 이 책은 중국의 檔案 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 「關於保衛東北邊防的決定」(1950年7月10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周恩來傳 1949~1976』(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年), 上冊, 52쪽.  
 23) 그밖에 제13병단의 참모장은 제12병단 참모장 解沛然(나중에 解方으로 개명), 정치부주임은 제4야전군 정치부 조직부장 杜平이 임명됐다. 그리고 곧 8월 9일 洪學智가 제1부사령관으로 부임했고, 8월 19일 韓先楚가 추가로 임명됐다. 그러나 韓先楚는 9월 중순까지도 현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참모장과 정치부 주임에는 각각 解方(1908~1984)과 杜平(1908~)이 임명됐다.

그런데 동북변방군 사령부는 예정된 원안대로 설립되지 않았다. 동북변방군의 지휘관과 참모로 임명된 보직자들이 제각각의 이유로 현지에 부임하는데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중국 측 문헌들에 따르면 粟裕는 여전히 靑島에서 요양 중이었고, 해군사령관 蕭勁光과 蕭華도 현직에서의 업무관계로 쉽게 이임할 수 없었다고 한다. 蕭勁光은 8월 중순까지도 부임하지 못했다. 粟裕가 제때에 부임하지 않은 것은 중국측의 기록과 달리 그가 중공 중앙의 정책변화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7월 13일의 제2차 국방군사회의의 최종 결정사항을 각 군구에 하달했고, 粟裕에게 직접 東北변방군 사령관으로 취임하라고 통보했다. 粟裕는 毛澤東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이 때 그는 반발했거나 미온적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sup>24)</sup>

상기 사정을 보고받은 毛澤東은 周恩來와 聶榮臻의 건의를 받아들여 7월 23일 동북군구 사령관 겸 정치위원인 高崗(1902~1954)에게 동북변방군에 대한 지휘를 위임했고, 동북변방군의 후근부는 동북군구의 후근부와 합병토록 한 후 李聚奎에게 지휘를 맡겼다. 周恩來와 聶榮臻의 건의내용은 粟裕, 蕭勁光, 蕭華가 모두 제때에 도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高崗에게 지휘를 위임해놓고, 부임자들이 도착한 후에 사령부를 정식으로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高崗은 당시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스탈린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毛澤東으로부터 동북변방지역의 방어문제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동북군구의 부사령관은 제15병단 부사령관으로 있다가 얼마 전 동북군구 부사령관으로 전보돼 온 賀晉年이 임명됐다.

상기 선정된 야전부대들은 동북변방군 지휘부 구성문제가 상부 차원에서 재조정되기 전에 이미 동북지역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즉 중국이 본격적으로 중북국경의 압록강지역으로 군 병력의 이동배치를 개시한 시점은 7월 15일부터였는데, 그 이동과정은 다음과

주 24) 다른 논문에서 나는 당시 대만해방과 동북변방군의 편성, 바뀌 말해 대만해방을 먼저 완수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전황을 고려해 북방의 안보를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군내 의견충돌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론적인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중공의 문헌에서 粟裕가 청도에서 요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때에 임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된 부분은 그가 중공중앙의 대만공격 연기결정에 반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군내 의견 충돌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작용됐기 때문인 듯하다. 毛澤東이 粟裕의 청병에 대해 요양을 허락한 시점은 8월 8일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중공 당내 고위인사들의 신상변동은 반드시 최고 지도자의 허락을 받은 뒤야 실행이 가능했던 관례로 보아 毛澤東의 승인을 받기 전에 粟裕가 임의로 근무지를 벗어나 요양하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전후 사정의 맥락을 짚어보면 粟裕가 스스로 부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학계의 徐焰은 粟裕가 제13병단이 제4야전군 소속이다 보니 소속이 다른 자신의 명령에 잘 움직여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았다. 첫째, 관련 부대들은 각기 7월 14일부터 중앙군사위원회에게서 동북변방군 편성에 관한 결정과 구체적 지시를 하달 받았다. 이에 따라 제38·제39·제40군단은 대략 7월 15일을 개시일로 각기 주둔지를 출발해 대략 8월 5일 이전에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했다.<sup>25)</sup> 제13병단 정치위원 賴傳珠가 인솔한 제13병단 사령부 기구 및 직할부대 병력 2,000여명과 50여대의 차량, 말 49마리, 26만 2,000근의 물자는 대략 8월 12일과 13일 사이에 安東에 도착했다.<sup>26)</sup> 제1·제2·제8 포병 사단 등 3개 사단은 이미 7월 22일 이전에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했지만, 고사포 연대는 8월 상순까지도 이동이 완료되지 못했다. 그리고 동북군구의 제42군단을 제13병단에 소속토록 지시한 후 7월 30일 주둔지인 齊齊哈爾과 北安線을 출발해 四平철도를 따라 압록강의 대안인 중국 쪽의 通化, 輯安으로 이동, 집결하도록 조치했다. 제42군단은 원래 제4야전군 제14병단 소속이었으나 1950년 3월 경에 동북군구로 이동해온 뒤 동북야전군에서 확대 발전된 부대로서 모체는 동북야전군 제5중대였다. 이 군단은 동년 3월부터 동북지역의 북쪽 北大荒(현 三江 평원 일대)에 배치돼 황무지를 개간하던 중에 제13병단 편입을 명령받은 것이다. 동북변방군의 주력인 제13병단 사령관 겸 정치위원인 鄧華와 부사령관으로 결정된 洪學智는 8월 9일 북경을 출발해 그날 밤 동북군구 사령부가 있는 심양에 도착했다.

毛澤東이 중국군의 정예부대인 제4야전군 소속 제13병단을 주력으로 한 대규모 부대를 동북지역으로 이동시킨 배경은 전술했다시피 당시 동북군구에는 전 지역을 통틀어 제42군단과 5개 독립 사단, 그리고 1개 공안사단 병력을 모두 합쳐 20여만명 밖에 주둔하고 있지 않아서 미군 공격시 중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이나 되는 동북지역 방어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20여만명의 병력은 당시 중국군 전체 병력의 약 27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측의 입장에서 사후의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상 이 조치는 기민하고 시의 적절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군의 중국동북지역 진입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만일 북한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할 경우 그 때 가서 20만 이상의 대규모 군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당시 낙후된 수송수단 밖에 보유하지 못했던 중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모든 수송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 그에 따른 병력이동과 군수물자 수송 등의 전쟁준비는 때늦을 것이다.

주 25) 중국 정부의 학술연구기관이 펴낸 『周恩來傳』에는 7월 10일에서 15일 사이와 30일에 이동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반해 朱建榮은 중국군의 동북변방 이동과 집결은 7월 20일 경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朱建榮, 『毛澤東의朝鮮戰爭—中國가鴨綠江을渡るまで』(東京:岩波書店, 2004년 第2版), 134쪽.

26)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解放軍文藝出版社, 1991년 第2版), 7쪽.

동북변방군으로 개편돼 동북지역으로 이동해온 각 부대의 집결지는 아래와 같았다. 제13병단 사령부는 安東에 주둔했다. 제38군단 사령부는 鐵嶺에, 그리고 예하부대 제112·제113·제114사단은 각각 鐵嶺, 新開原, 老開原에 위치했다. 제39군단 사령부는 遼陽에, 예하부대 제115·116·117사단은 각각 遼陽, 土佳屯, 海城에 위치했다. 제40군단은 사령부와 예하부대 제118·제119·제120사단이 전부 安東에 집결했다.<sup>27)</sup> 특종병 사령부는 豊城에 위치했고, 예하 야전포병 제1·제2·제8사단은 각각 豊城, 本溪, 通化에 위치했다. 고사포 연대는 安東과 拉古哨에 집결했으며, 1개 공병연대는 安東에 위치했다. 제13병단에 배속된 기병 제13연대는 安東에 집결했으며, 전시 군수지원 임무를 맡은 동북군구 예하 제169사단은 大東溝에 배치됐다.<sup>28)</sup> 상기 4개 군단은 동북변방군으로 개편을 명령받고 동북지역으로 이동해 왔지만 동북변방군의 지휘부가 설립될 때까지 당분간 원 소속인 제4야전군과 중남군구의 지휘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 군사훈련에 필요한 군수, 병참, 수송 등에 관해서는 심양 동북군구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대규모 병력이 목적지에 당도한 뒤 최고 지휘관에게 도착보고를 하지 않는 지휘관은 없을 것이다. 당연히 현지 지휘관으로부터 도착보고를 받았을 毛澤東은 즉각 8월 5일 高崗에게 9월 상순에는 싸울 수 있도록 8월 중순에 군단과 사단 간부 회의를 열어 그들에게 군사개입의 목적, 의의와 대략적인 방향을 설명해주고 8월말까지 군사훈련과 출동 준비 등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명령을 기다릴 것을 지시했다.<sup>29)</sup>

### 3. 개입을 위한 후속 병력의 편성과 이동

그런데 중국군의 중북국경지역 이동은 1차에 그치지 않았다. 동북변방군의 편성과 함께 동북의 중북국경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1950년 8월 들어 한반도 전황이 '악화'됨에 따라 한반도 진입을 상정한 추가 병력이동이 두 차례 더 있었다. 즉 8월 하순에서 10월에 걸쳐 동북변방군을 지원할 병력을 제2선과 제3선의 지정한 위치로 배치했던 것이다.

이 시기 중국 수뇌부가 7월 중순 동북변방군의 편성, 이동 외에 그 후속조치로서 또 다시 중북국경지역으로 군 병력을 2차에 걸쳐 대규모로 증강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주 27) 중국 정부의 학술연구기관이 펴낸 『周恩來傳』에는 7월 10일에서 15일 사이와 30일에 이동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반해 朱建榮은 중국군의 동북변방 이동과 집결은 7월 20일 경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朱建榮, 『毛澤東の朝鮮戰爭—中國が鴨綠江を渡るまで』(東京: 岩波書店, 2004년 第2版), 134쪽.

28) 「高崗致中央軍委電」(1950년 8월 12일),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著, 『抗美援朝戰爭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년), 第1卷, 70~71쪽에서 재인용.

29) 毛澤東, 「軍委關於東北邊防軍月內完成一切作戰準備給高崗的電報」(1950년 8월 5일),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7년), 第1冊, 454쪽.

세 가지였다. 첫째, 8월 4일 한반도 군사개입의 원칙이 재확인됐고, 둘째, 8월 하순부터 시작된 압록강 하류의 안동시 일대에 대한 미 공군기의 잦은 중국영공 침범과 그로 인한 압록강 교량의 피폭 가능성, 그리고 셋째, 한반도 남단의 급격한 전황반전의 징후였다. 압록강 교량이 미군기에 폭파될 경우 중국군의 북한진입이 차질을 빚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한반도의 전황반전은 중공 수뇌부가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던 부분이었다. 이러한 '전황악화'는 중국수뇌부로 하여금 최종적인 군사개입의 결정으로 치닫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25만명의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중국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된 제2차와 제3차의 병력이동과 배치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동북변방군의 증강작업은 동북지역의 현지 야전군 지휘관들의 현지 실태보고에 따른 상응조치였다. 전술했다시피 8월 5일 毛澤東으로부터 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8월 말까지 완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高崗은 주요 지휘관들이 현지로 부임한 이후 毛澤東의 지시를 실행하는 군사준비에 착수했다. 먼저 그는 8월 13일~14일 간 중공 동북국상무위원회 1급 회의에서 동북군구와 동북변방군 예하 부대 사단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했다.<sup>30)</sup> 이 심양군사회의회에서 파병개입 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폭 넓게 검토됐다. 논의 결과 군사 개입할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점, 즉 병력 부족과 북한진입시 중국군을 엄호하기 위해 미 공군기를 견제할 공군기를 확보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8월 16일 동북군구 사령관 高崗과 栗裕 대신 동북변방군 사령관으로 전보된 蕭勁光是 중앙군사위원회에 전문을 보내어 周恩來와 毛澤東에게 병력충원과 공군력 보장 등을 요청했다. 병력충원은 우선 중남지구의 1개 군단을 동북군구에 편입시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군의 공군기는 당시 소련의 지원으로 195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1,560대를 보유하기로 계획을 잡았지만, 실제 전투투입은 1951년 1월 후에야 가능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겨우 11개 항공연대를 편성할 수 있고, 그 중 제트기 330대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에 대비해 동북지역과 관내의 天津과

주 30) 중국인민해방군 심양군구 참모장 재직시 중국 항미원조지원군사령부 작전처 부처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楊迪의 회고에 의하면, 동북변방군이 동북으로 집결한 후 첫 번째 고위 군사 지휘관급 회의는 이 보다 이틀 전인 8월 11일에 개최됐는데, 이 회의는 13일의 심양군사회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열린 예비회의였다고 한다. 심양군사회의회 참석자는 아마도 11일의 예비회의에 참석한 자들이 그대로 참석한 듯한데, 중공 동북국 서기이자 동북군구 사령관 겸 정치위원 高崗을 비롯해 동북군구 부사령관 겸 참모장 賀晉年, 동북변방군 부사령관 蕭勁光, 부정치위원 蕭華, 제13병단 사령관 鄧華, 제13병단 부사령관 洪學智, 제38군 군단장 梁興初, 동 군단의 정치위원, 劉西元, 제3군단 군단장 吳信泉, 동 군단의 정치위원 徐斌洲, 제40군단 군단장 溫玉成, 동 군단의 정치위원 袁升平, 포병사령부 부사령관 匡裕民, 동 포병사령부 정치위원 邱創成과 楊迪 등이었다.

靑島 등지에 각기 15개소, 20여개소의 비행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다.<sup>31)</sup>

이 건의를 받아들인 毛澤東은 8월 18일 우선 먼저 8월 말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한 출동준비 완료시기를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통보한 후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부에 高崗 등의 요청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sup>32)</sup> 毛澤東의 지시를 받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대리 聶榮臻은 먼저 遼寧省 남쪽지역으로 이동, 배치시킨 제13병단 25만 여명의 병력으로 사태에 대처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사전 방비를 위해 이를 보완할 전략 기동부대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의 부대배치 상황을 볼 때, 중남 지역과 서남지역의 부대가 각처에 분산돼 있어 군단 이상의 부대가 즉각 집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聶榮臻은 상해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던 화동군구 제3야전군 예하 제9병단 소속 4개 군단을 먼저 山海關 내 機動지역에 보내고, 여기에다 서북지역의 제1야전군 예하 제19병단을 적당한 시점에 가서하게 하면 제9병단과 공동으로 전략기동부대의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구상에서 毛澤東에게 제2선의 특정한 기동방어 지역에 병력을 배치할 것을 건의했다.<sup>33)</sup>

1950년 8월 하순 毛澤東은 동북변방군의 제2선 부대로서 2개 병단 병력을 山海關 기동지역으로 이동, 배치하자는 聶榮臻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毛澤東은 자신이 승인한 이 계획을 구체화하라고 周恩來에게 지시했다. 이를 검토한 周恩來는 8월 26일 동북변방군의 고위 지휘관들에게 군사훈련과 보충임무를 강조하면서 중앙군사위원회가 각 군구에서 제3야전군 소속 제10군단을 차출해 후방예비부대로 삼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다음날 8월 27일 毛澤東은 전보로 高崗과 蕭勁光에게 그들이 요청한 병력보충과 공군기 확보문제에 해결가능하다고 회답했다. 毛澤東이 이렇게 회답한 까닭은 8월 중순부터 소련공군기가 중국 동북지역에 주둔하기 시작한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각 군구의 주요 지휘관들인 高崗, 彭德懷, 鄧子恢(1896~1972), 饒漱石(1903~1975), 鄧小平(1904~1997)에게 북한에 투입시킬 병력을 기존 4개 군단에다 12개 군단으로 증강할 작정이라고 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 결정은 9월말이 될 것이라고 통고했다. 동시에 시국을 논의하기 위한 회합 건으로 高崗 등 상기 5명에게 모두 9월 25일 북경으로 와줄 것을 지시했다.

주 31) 周恩來, 「關於加強邊防軍計劃的報告」(1950年 9月 3日),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周恩來軍事文選』(北京: 人民出版社, 1997年), 第4卷, 52~53쪽.

32) 毛澤東, 「關於邊防軍務必在九月底以前完成一切作戰準備給高崗的電報」(1950年 8月 18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第1冊, 469쪽.

33) 「毛澤東致彭德懷電報中所附聶榮臻的報告」(1950年 8月 20日),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著, 『抗美援朝戰爭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1卷, 74~75쪽에서 재인용.

毛澤東의 지시에 따라 聶榮臻 등이 참석한 중앙군사위원회 실무회의를 몇 차례 주관 해온 周恩來는 8월 31일 앞서 聶榮臻이 구상했던 동북변방군의 제2선 배치 증원부대들이 동북지역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같은 제2선 배치지역으로 이동시켜 동북지역으로의 이동을 대기시킬 제3차 후속증원에 관한 계획을 완성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화동지역의 제9병단을 山東의 津浦線(天津-南京 浦口간 1,010km의 철로) 연선지역으로 북상, 군사훈련을 실시시켜 이를 동북변방군의 2선 부대로 삼는다. 그리고 서북지역의 제19병단 부대를 룡해선(甘肅省 蘭州-江蘇省 連雲港간 철로)과 연결된 산둥성의 기동지구에서 집결시켜 제3선의 후속 증원부대로 삼고 제9병단과 합동작전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었다.

周恩來는 상기 동북변방군의 강화계획을 9월 3일 毛澤東과 劉少奇(1898~1969)에게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보고내용 중 핵심사항은 기존 동북지역의 제1선에 배치돼 있는 4개 군단 25만명의 동북변방군을 총 11개 군단 36개 사단과 특종부대, 포병, 전차 및 후근부대 등을 합쳐 약 70만명으로 순차적으로 증강해 제2선, 제3선에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廣州에 주둔중인 중남군구의 1개 군단을 당시 4개 군단이 배치돼 있는 동북의 중북국경지대인 제1선으로 이동시켜 총 5개 군단 15개 사단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제1선의 5개 군단을 지원할 후속 부대로서 총 3개 군단 12개 사단을 화동에서 제2선인 徐濟線(徐州-濟南간 철로)에 10월말까지 배치한다. 제3선은 서북의 제1야전군 예하 3개 군단 9개 사단을 이동시켜 1950년 연말까지 집결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동, 서남에서 복원을 보류시켜 뒀던 장정 10만에서 12만명과 동북, 화북 등의 新區와 하남에 익년 봄에 10만명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비병력 총 20만명을 준비하기로 계획했다.<sup>34)</sup>

9월 3일 당일, 周恩來의 상기 안은 毛澤東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毛澤東은 즉각 상해지역의 제9병단과 西北지역의 제19병단에게 출동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고, 각 야전군 차원의 병력편성과 이동이 시작됐다. 먼저 제1선의 제13병단 소속 4개 군단에 새로 배속, 보강시킬 제4야전군 중남군구 직할부대 소속 제48군단이 같은 중남군구 직할부대 소속 제50군단으로 교체됐다. 毛澤東은 처음에 贛南, 粵北지역의 제48군단을 북상시켜 동북군구에 편입하도록 제4야전군 사령관 임표에게 지시했지만, 나중에 이 계획을 취소했다. 제48군단이 비적 토벌과 새로운 지역 건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30여 개 현에 분산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군단 간부들도 지방 행정 업무까지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상이 어려웠었고, 江西와 廣東지역의 비적 토벌은 물론 새로운 지역에 대한 건설 작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주 34) 周恩來, 「關於加強邊防軍計劃的報告」(1950年 9月 3日),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周恩來軍事文選』(北京: 人民出版社, 1997年), 第4卷, 51쪽.



그 대신 毛澤東은 9월 6일 제50군단을 동북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제50군단은 원래 1948년 10월 遼瀋전역 시 長春에서 起義해온 중국국민당군 제60군단이 1949년 1월 인민해방군으로 개편되면서 예하 제148·제149·제150사단과 제167사단으로 편제됐고, 총 병력 3만 6,000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1950년 제50군단은 湖北의 沙市지역에서 정치 군사훈련, 수리 건설과 생산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은 제50군단은 1차 집결지인 河南의 駐馬店과 湖北의 孝感을 떠나 동북지역으로 이동해 10월 중순 길림성의 西豐, 遼源, 海龍, 磐石 등지에 도착한 뒤 동북변방군에 편입됐다.<sup>35)</sup> 동북지역의 제1선으로 이동해온 동북변방군의 북한 진입 전 배치지역을 도면으로 나타내면 <지도 1>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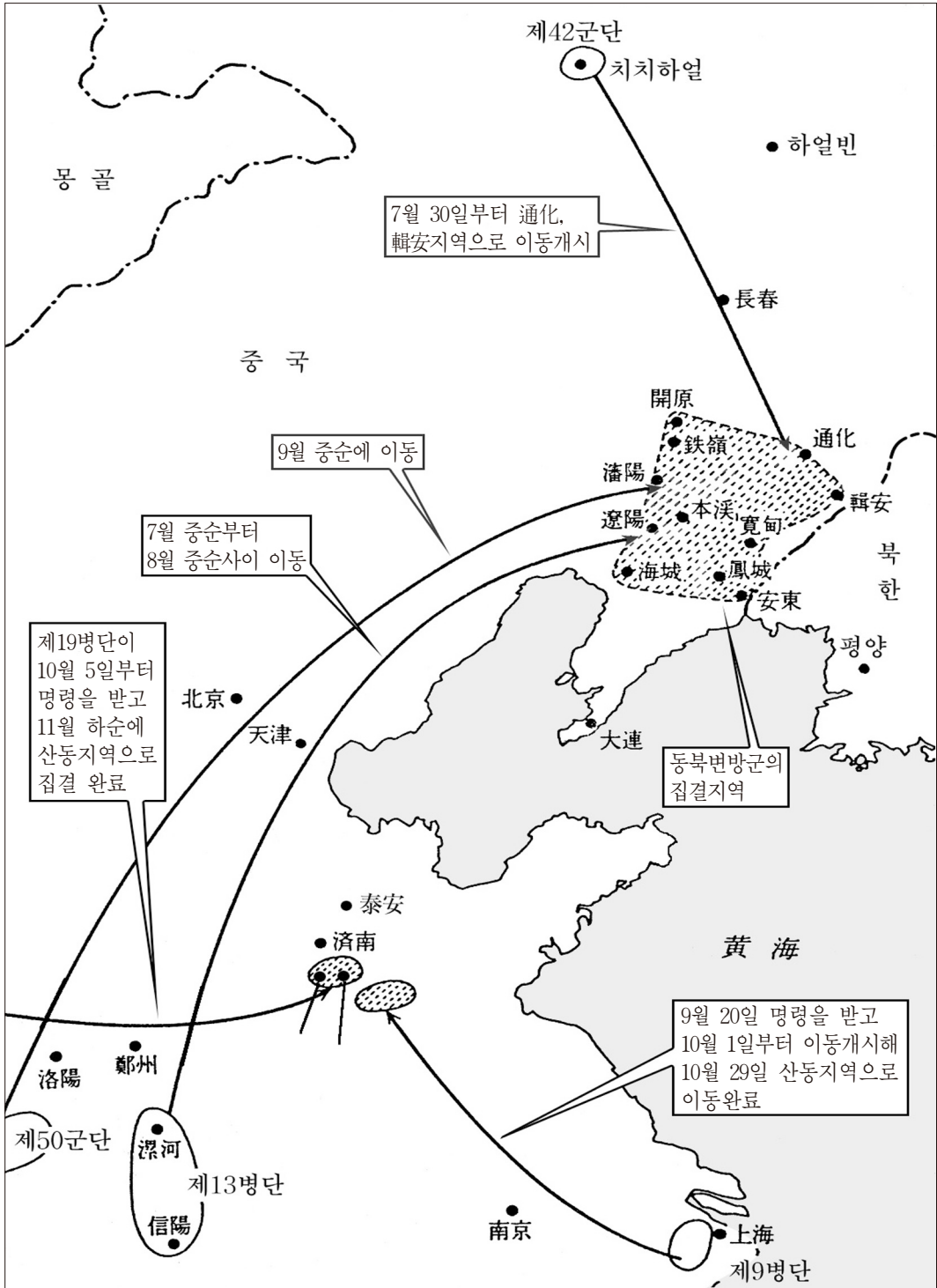
제2선 배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9월 초 화동군구 사령관 陳毅(1901~1972)는 명령에 따라 북경에 와서 직접 毛澤東으로부터 제9병단의 동원 임무를 부여받았다. 陳毅는 상해로 돌아간 뒤인 9월 5일 제9병단의 북상계획을 확정했다. 즉 평소 “작은 葉挺”, “패하지 않는 장군”(常勝將軍)으로 불린 葉飛(1914~)가 이끄는 제10병단 예하 제32군단 소속 제94사단을 福建의 廈門지역에서 북상시켜 제27군단에 편입시켜 제9병단의 모든 군단이 4개 사단으로 편제하도록 하고, 1개 사단 병력은 1만명 안팎으로 구성해 병단 총 병력이 15만여 명에 달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북상은 여러 조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각에 출동하는 방식을 취하여 10월 말까지 이동을 완료한 후 11월 중순 북한진입을 위한 군사정비와 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sup>36)</sup> 毛澤東은 9월 5일 다음과 같이 명령함으로써 陳毅의 제9병단 북상계획을 승인했다. “제9병단 전체는 10월 말에 徐濟線에 집결해 11월 중순부터 부대정비와 훈련에 들어가도 된다.”<sup>37)</sup>

이틀 뒤 9월 7일, 陳毅는 제9병단의 군단장 이상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毛澤東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각 부대로 하여금 새로운 작전임무에 적응케 하고, 즉각 병력을 보충한 후 북상 명령을 기다리도록 대기시켰다. 제9병단 예하 제20·제26·제27군단은 화동군구 제3야전군의 주력부대로서 장비도 비교적 괜찮았고, 구성원들의 자질도 뛰어난 등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부대들은 국공내전 후 줄곧 상해와 항주 지역에서 훈련하면서 대만해방 작전준비를 해왔었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 이후 대만공격 계획이 연기되자 그 동안 제9병단은 상해와 항주 지역의 경비 임무를 맡고 있었다.

주 35)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著, 『抗美援朝戰爭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1卷, 73~74쪽.

36) 「陳毅 饒漱石 唐亮等致毛澤東 軍委電(1950年 9月 5日),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著, 『抗美援朝戰爭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1卷, 75쪽에서 재인용.

37) 毛澤東, 「九兵團全部開到徐濟線整訓」(1950年 9月 8日), 軍事科學出版社, 中央文獻出版社編, 『毛澤東軍事文集』(北京: 編者出版, 1993年), 第6卷, 99쪽.



〈지도 1〉 동북변방군 편성에 따른 중국군의 이동배치

陳毅의 명령에 따라 제9병단 사령관 宋時輪(1907~1991)은 9월 20일 정식으로 예하의 3개 군단에 복상명령을 하달했다. 3개 군단 예하 12개 사단은 제58·제59·제60·제89사단(제20군단), 제76·제77·제78·제88사단(제26군단), 제79·제80·제81·제90사단(제27군단) 등이었다. 제9병단은 제20·제23·제26·제27군단 등 4개 군단으로 편성돼 있었지만, 그 중 제23군단(제67·제68·제69사단)은 복상하지 않았다.

명령을 받은 예하 부대는 10월 1일부터 上海의 昆山 등지에서 제27군단, 제20군단, 병단사령부, 제26군단의 순서로 복상했다. 제27군단은 津浦線 산둥구간의 泰安에, 제20군단은 山東의 兗州에, 병단사령부는 曲阜에, 제26군단은 滕縣지역에 각각 집결했다. 제32군단에서 제27군단으로 편입된 제94사단은 복상 중 10월 중순에 이동이 중지됐다. 왜냐하면 소련의 공군지원이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제1선 동북변방군의 북한진입이 확정되지 않았고, 연쇄적으로 제2선의 병력도 이동을 할 수 없어 毛澤東이 복상을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제9병단은 제94사단 외에도 몇몇 후미 부대는 그대로 上海의 華東지역에 체류했다. 이동이 중지된 부대들은 중국군의 자력 출병을 결정한 毛澤東이 10월 14일 다시 제2선 병력의 제1선으로의 이동을 재가동을 지시함에 따라 10월 28일부터 山東지역으로 이동했다.

제9병단의 예하 부대 전체가 지정된 지역에 집결을 완료한 것은 10월 29일이었다. 제9병단의 예하 부대들은 각기 도착과 동시에 차례로 정치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제9병단의 역량을 증강시키기 위해 화동군구는 원래 중국국민당에서 기의한 부대로 조직한 제16병단의 부대번호를 폐지하고 그 장병들을 제9병단의 각 부대에 나누어 배분, 보강했다. 그 후 제9병단 전원은 11월 1일부터 兗州를 출발해 동북의 중북국경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제1선의 부대들을 지원할 예비대가 됐다. 선두로 출발한 제27군단은 11월 3일 안둥에 도착했고, 나머지 2개 군단도 11월 상순과 중순에 모두 도착했다.

제3선의 병력이동과 배치는 다음과 같이 전개됐다. 제9병단이 제2선 집결지로 이동을 개시한지 4일 후인 10월 5일 楊得志는 毛澤東으로부터 직접 극비의 명령을 받고 자신이 지휘하는 제19병단 소속부대의 생산 및 기타 임무를 정지시킨 후 룡해선 연선지역으로 이동 집결시켰다. 계속해서 그는 10월 22일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11월 20일까지 동북출발준비를 모두 끝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서북군구 사령관 彭德懷는 毛澤東의 긴급 귀경 명령을 받고 북경으로 갔기 때문에 부재중이었다. 당시 제19병단 사령부는 西安에 위치해 있었고, 예하의 제63·제64·제65군단은 각기 陝西省의 省都인 서안 以西의 三原, 寶鷄와 寧夏 변계지역에 주둔 중이었다. 이 3개 군단 소속 9개 사단은 제63군단 예하 사단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187·제188·제189·제190·제191·제192·제193·제194·제195사단 등이었다. 이 병단 소속 3개 군단 가운데 2개 군단이 지방경비와 생산임무를 맡고 있었다. 나머지 1개 군단은 룡해선 철도의 天水-寶鷄구간을 수리, 복구하고 있던 중이었

다. 11월 20일 이전에 이미 출동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제19병단은 제9병단이 산동의 제2선 지역을 완전히 벗어난 뒤인 11월 22일 서안을 출발해 津浦線에 연결돼 있는 산동의 兗州, 泰安, 滕縣 등지에 집결했다.<sup>38)</sup>

이와 별도로 彭德懷<sup>39)</sup>는 鄧華, 洪學智 등 제13병단의 주요 지휘관들과 중국군의 입북 방안을 연구한 후 10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작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는 毛澤東에게 2개 군단과 2개 포병사단을 우선 파병시키려고 했던 원 계획을 바꿔 제1선의 4개 군단과 3개 포병사단 전체를 10월 15일 출동시켜 10월 20일 혹은 늦어도 10월 22일 까지 압록강 남단 북한의 지정된 지점에 집결시켜 적 섬멸 시기를 기다리겠다는 전술을 제시했다. 계획을 변경한 까닭은 미 공군의 공습으로 압록강 철교가 폭파되면 수송의 어려움으로 병력을 우세하게 집중시키기가 어렵게 돼 전기를 놓칠 것(失去戰機)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북경의 중공 수뇌부에서는 개입의 찬반을 두로 10월 1일부터 벌여온 격론 끝에 일차로 10월 6일 소련의 공군지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참전이 결정됐다. 그리고 毛澤東은 10월 10일 중앙군사위원회<sup>40)</sup>를 개최해 '항미원조지원군'으로 개편된 부대와 제9·제19병단 외에 서남군구에서 3개 군단 총 9개 사단을 선발해 1개 병단으로 조직한 후 1951년 1월까지 출동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또한 중남군구에서 2개 군단 6개 사단을 선발해 1951년 2월에 출동하도록 준비하고, 이와 별도로 17개 보병사단을 선발해 포병부대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했다. 毛澤東은 10월 11일 4개 군단을 모두 북한으로 진입시키자는 팽덕회의의 상기 전술방침을 승인한 후 그날과 이튿날 2차에 걸쳐 화동군구 사령관 陳毅에게 제9병단의 복상을 앞당겨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sup>41)</sup>

毛澤東의 기본적인 의도는 제13병단을 주력으로 한 5개 군단의 첫 번째 작전부대가 북한으로 진입하면 즉시 산동의 제2선에 집결중인 제9병단을 동북변방군이 원래 주둔한 지역으로 복상 진입시켜 제13병단의 제2선 부대로 삼고, 수시로 한반도 전투에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또 제9병단의 이동과 동시에 제3선 부대로서 제19병단도 동쪽으로 이동

주 38) 楊得志, 『楊得志回憶錄』(北京: 解放軍出版社, 1992年), 505쪽.

39) 彭德懷, 「彭德懷致毛澤東電」(1950年 10月 10日),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著, 『抗美援朝戰爭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1卷, 166쪽에서 재인용.

40) 이 회의 참석자는 聶榮臻, 羅榮桓, 蕭華, 李濤, 楊立三, 蕭克, 서남군구 정치위원 鄧小平, 화동군구 정치위원 饒漱石, 譚政 등이었고, 그들은 상기 결정 사항 외에 또 각 군구에서 간부들을 선발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軍委工作會議決定事項記錄」(1950年 10月 10日),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著, 『抗美援朝戰爭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1卷, 172쪽에서 재인용.

41) 毛澤東, 「關於九兵團提前北上給陳毅的電報」(1950年 10月 12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第1冊, 551쪽.

시켜 원래 제9병단이 주둔한 산둥지역에서 정치 군사훈련을 실시케 하는 등 참전에 대비했다.

제2선과 제3선 부대배치의 기동지역으로 산둥성의 濟南, 泰安 일대를 선정한 것은 이 지역이 서북의 蘭州를 중점으로 하는 룡해선이 津浦線에 연결되고, 津浦線을 이용하면 북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원지역에서 津浦線의 德州-天津-唐山-秦皇島市-錦州를 거쳐 한반도전선의 후방근거지인 瀋陽에 이르는 최단거리의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또 해군 수송선만 확보된다면 泰安에서 철도로 산둥반도의 烟臺까지 가서 해로로 남·북한의 지정된 지점 혹은 압록강 하구의 안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毛澤東이 후속부대를 중원지역에서 북경을 거쳐 동북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교통의 요지인 河南省의 鄭州에 집결시키지 않았던 까닭도 鄭州는 東北 혹은 華東지역으로 기동하기가 山東의 이 지역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sup>43)</sup> 동시에 산둥지역은 화동의 상해와 福建을 방어하거나 혹은 臺灣을 공격할 경우에도 鄭州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徐州-南京-上海로 직입할 수 있고, 또한 룡해선의 동쪽 종착역인 連雲港을 통해 해로로 일거에 福建省의 廈門, 金門島, 福州까지도 남하가 가능하다.

따라서 화이트(Allen S. Whiting)이 지적한 바 있지만, 중국 지도부가 산둥지역으로 병력을 이동, 대기시킨 조치는 한반도나 대만과 관련된 유사시에 대비한 다목적 군사준비로서 기동력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북경이 평양을 지원하기로 결정할 경우 산둥의 지리적 위치는 중국 동북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상 혹은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혹은 중국국민당군의 화동 연해지역에 대한 군사공격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게다가 毛澤東이 대만공격을 재개하기 위해 浙江省과 福建省으로 남하시킨다면 신속하게 공격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만큼 공수 전환이 용이한 곳이었다. 중국 지도부는 이 같은 군사배치를 통해 만일의 유사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전략적 기동력을 유지해 東北의 중북국경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만일의 경우 동북변방군을 한반도로 진입시켜야 할 경우를 대비해 지속적인 후속지원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략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다.

주 43) 鄭州는 北京-廣州간의 京廣線과 룡해선 두 간선이 만나는 교차지역(交匯點)으로서 동북, 화북, 중남, 서남, 동남연해지역 항구와 서북내지로도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정주는 근·현대 중국역사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鄭州에서 동북의 瀋陽으로 이동하려면 京廣線의 주요 도시인 石家莊-保定-北京-秦皇島市-錦州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津浦線을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가 멀다.

44)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pp.64~65.



### Ⅲ. 결 론

신 중국 건국 후 毛澤東은 전국적 차원에서 국방 군사 배치를 재조정하면서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중핵지대라고 할 수 있는 天津-北京, 上海, 廣州를 중심으로 한 세 권역을 중국 국방의 중점 지역으로 설정했고, 군대배치와 운용도 그에 부합되도록 조치했다. 이 때 중국대륙 내 잔류중인 중국국민당군의 섬멸과 대만해방작전을 고려해 중국인민해방군 병력 390만명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병력을 남방에 포진시켰다. 반면 북경의 안전에 직결되는 동북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병력만 배치했다. 동북지역의 군 병력은 이 지역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동북군구의 예하 6개 경비사단과 일부 지방부대 약 10만명과 동북으로 이동해와 농업생산에 종사하던 원 제4야전군 소속 제42군단, 그리고 정치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던 일부 포병부대와 기병부대들을 모두 합쳐봐야 총 22만 8,000명에 불과했다. 수도와 화북지역의 방위 문제는 중국 내 어느 방향으로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방전략예비대를 편성해 河南省 지역에 주둔시켜 남쪽과 북쪽 양방향으로 기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에 촉발돼 미국이 즉각 군사적으로 개입해옴과 동시에 미 제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진주시키는 등 중국 주변의 안보환경이 크게 변화하자 毛澤東은 미군이 북한을 거쳐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진격해올 것으로 예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먼저 미군의 중국진출을 대비하고, 미군에 대항할 북한정권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했다. 중공 지도부는 毛澤東의 지시로 소집된 1950년 7월 10일과 13일 두 차례의 국방군사회회의의 결과 중국군 가운데 최정예부대인 제4야전군 예하 제13병단을 중핵으로 4개 군단 3개 포병사단, 고사포병, 기병, 공병, 자동차병 등의 9개 연대 총 25만 여명으로 동북변방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毛澤東의 편성시기가 떨어지자 각지의 해당부대들은 바로 7월 15일부터 주둔지를 출발해 대략 8월 중순을 전후로 동북지역 압록강 대안의 安東, 鐵嶺, 遼陽, 通化, 豊城 등지에 배치됐다. 요컨대 동북변방군의 편성과 중북 국경지역으로의 배치는 방어와 개입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이었으며, 이 때부터 전략적 후방으로 간주돼 오던 동북지역이 일약 국가안보의 전진기지로 바뀌게 됐다.

毛澤東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부와 동북변방군의 야전 사령관들의 건의를 검토한 후 제2차로 중국인민해방군 후속부대들을 이동케 한데 이어 동북변방군을 지원할 세 번째 후속부대들을 이동시켰다. 8월 19일 동북군구로 배속키로 결정된 제50군단이 원 주둔지인 中南軍區에서 북상을 개시해 9월 6일에 동북지역에 도착했다. 계속해서 제3차로 제9병단과 제19병단이 각기 9월 중순과 10월 초순에 산둥성의 기동지역으로 이동을 개

시켰다. 이 때까지 중북 국경지역으로 이동한 병력규모는 먼저 이동돼 온 4개 군단에다 추가로 이동돼 온 제50군단을 합쳐 5개 보병군단과 3개 포병사단 등이었다.

그 후 중공 수뇌부는 일차로 참전을 결정한 후인 10월 10일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해 ‘항미원조지원군’으로 개편된 부대와 제9·제19병단 외에 서남군구에서 3개 군단 총 9개 사단을 선발해 1개 병단을 조직하고, 중남군구에서도 2개 군단 총 6개 사단을 선발해 각기 1951년 1월과 2월까지 출동준비를 마치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17개 보병사단을 선발해 모두 포병사단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말하자면 기존의 제9·제19병단 외에 군구병력 가운데 재차 총 32개 사단을 더 차출해 이른바 ‘抗美援朝 志願軍’을 증강시킨 것이다.

총괄하면, 동북변방군은 1950년 7월 편성 초기의 25만 여명 수준에서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이 점고됨에 따라 북한으로 출동하기 직전까지 부대를 개편해 총 70만명 수준으로 증편해 이동시켰고, 12월 하순에 이르러 이 병력을 제2선과 제3선에 걸쳐 한반도에 축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다. 즉 毛澤東은 중국인민해방군 전체 병력 가운데 약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병력을 중북 국경선에 집중 배치시켰던 것이다. 중국군의 사전 이동과 관련해 전후 중국인민해방군의 동향을 깊이 추적한 바 있는 그리피스는 중국군의 동북지역 및 산둥지역의 집결이 이뤄진 것은 1950년 5월과 7월 사이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45)</sup> 종래의 이 견해와 달리 중국군의 이동 및 증강은 7월 14일부터 북한 진입 후인 동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다.

毛澤東은 당시의 수송력 상황을 고려해 중국군을 세 단계로 나눠 이동 배치시켰고, 그의 기본적인 의도는 제13병단을 주력으로 한 5개 군단의 첫 번째 작전부대가 북한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 즉시 제2선에 집결중인 제9병단을 산둥에서 북상시켜 동북변방군의 원래 주둔 지역에 진입시켜 제13병단의 2선 부대로 삼고, 수시로 한반도 전투에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또 제9병단의 북상과 동시에 제19병단도 이동시켜 원래 제9병단이 주둔한 산둥지역에서 정치 군사훈련을 실시케 함으로써 제3선 부대로서 참전에 대비케 했다. 제2선과 제3선 부대배치의 기동지역으로 산둥성의 濟南, 泰安 일대를 선정한 것은 이 지역이 서북의 蘭州를 중점으로 하는 룡해선이 津浦線에 연결되고, 津浦線을 이용하면 북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원지역에서 津浦線의 德州-天津-唐山-秦皇島市-錦州를 거쳐 중북 ‘전선’의 후방근거지인 瀋陽에 이르는 교통로 중 최단거리에 위치한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또 해군 수송선만 확보된다면 泰安에서 철도로 산둥반도의 烟臺까지 가서 해로로 남·북한의 지정된 지점이나 혹은 압록강 하구의 안동으로도 연결되는 요충지였다.

주 45) Samuel B. Griffith,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67), p.106.

중국 수뇌부가 이 같이 군사배치를 재조정하고 중북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대거 집중시킨 것은 유사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전략적 기동력의 유지와 지속적인 후속지원 능력을 확보해놓음으로써 중북국경지역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동북변방 군을 한반도로 진입시켜야 할 경우를 대비해 전략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北京: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1卷.  
軍事科學出版社、中央文獻出版社編, 『毛澤東軍事文集』(北京:編者出版, 1993年), 第6卷.  
徐澤榮, 「“中國介入朝鮮戰爭之始末與目標” 分章摘要」 『傳記文學』, 第77卷 第4期(2000年 10月號).  
徐澤榮, 「有關朝鮮戰爭的面幾訪點紀錄」 『傳記文學』, 第77卷 第4期(2000年 10月號).  
楊得志, 『楊得志回憶錄』(北京:解放軍出版社, 1992年).  
吳瑞林, 『抗美援朝中的第42軍』(北京:金城出版社, 1995年).  
王健英編著, 『中國共產黨組織史料匯編領導機構沿革和成員名錄——大至十四大』(北京: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5年).  
王生榮主編, 『金黃與蔚藍的支點:中國地緣戰略論』(北京:國防大學出版社, 2001年).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央檔案館編, 『建國以來劉少奇文稿』(北京:中央文獻出版社, 2005年), 第1冊.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周恩來傳1949-1976』(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8年), 上冊.  
“中國人民解放軍通鑒”編輯委員會編, 『中國人民解放軍通鑒』(蘭州:甘肅人民出版社, 1997年), 中.  
中國人民解放軍南京軍區“第四野戰軍戰史”編輯室編, 『中國人民解放軍第三野戰軍戰史』(北京:解放軍出版社, 1996年).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周恩來軍事文選』(北京:人民出版社, 1997年), 第4卷.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宣傳部編, 『偉大的抗美援朝運動』(北京:人民出版社, 1954年).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檔案館、人民畫報社編輯, 『解密外交文獻—中華人民共和國建檔案交』(北京:中國畫報出版社, 2006年).  
韓懷智等編, 『當代中國軍隊的軍事工作』(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年), 上卷.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解放軍文藝出版社, 1991年 第2版).  
이중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중심, 2000년).  
Griffith, Samuel B.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7).  
Whiting, Allen S.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朱建榮, 『毛澤東の朝鮮戰爭—中國が鴨綠江を渡るまで』(東京:岩波書店, 2004年 第2版).

## 한국전쟁시 공수부대작전 전례

### 목 차

- I. 서 론
- II. 제187공수단 편성/작전 활동
- III. 공·지 연결작전 성과
- IV. 지상기동에 의한 차단과 엄호
- V. 결 론



3급 문 병 장  
(육군본부 동원전력실)

### I. 서 론

본 고는 한국전쟁 중 유엔군사령부의 직접 통제하에 전략기동부대로 운용된 미 제 187공수부대 전투단과 미 제1해병사단의 전례(戰例)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한국전쟁 당시 미 공수부대 역사와 활약상을 전사측면에서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미 공수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부터 창설되어 공수부대의 시초가 된 독일공수부대 ‘팔슈림야거’(Fallschirmjager)와 그 역사가 비슷하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언 일병’의 작품에서 구출 활동을 전개한 공수사단은 미 제101공수사단 ‘스크리밍 이글스’(Screaming Eagles)이며, 또다른 공수사단은 제81공수사단 ‘올 아메리칸’(All American)이다.

이 두 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시 지상최대의 작전이라 일컬어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루전 노르망디에 공수작전을 감행하여 최선봉부대로서 그 역할을 다했으며, 전투력은 일반보병보다 훨씬 강하게 활약했다. 미 공수부대는 이후에도 1944년말에 시작된 ‘발지전투’에서 ‘바스통’ 지역을 적의 기갑부대에 맞서 훌륭하게 방어작전을 전개함



으로써 그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현재 제101공수사단은 공중강습사단으로 재편되었으며, 제81공수사단만이 공수부대로 남아있고, 특히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의 최초 공수부대는 미 제187공수단이다. 미 CIA에서 한국인 공작원을 이용해 주관한 극동군사령부의 KLO(Korea liason Office)부대 중 하나였던 Y부대원들이 개마고원과 함경도 일대에서 공중침투로 북한군 동태파악, 조종사 구출, 후방 병참선 파괴 등 주로 중공군 증원에 관한 첩보수집을 한 전례(戰例)가 있다.

이러한 공수부대 운영목적은 유사시 소규모로 편성되어 적 후방의 교란과 요인납치, 암살, 폭파, 잠입, 수색정찰 등 정규군이 실천하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특히, 세계 어느 군대를 막론하고 공수부대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보병보다 강한 정신력으로 적지에서 중장비와 체대로 된 화력 없이 경무장으로 투하되어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의 생존가능성은 희박한 가운데 이들 상당수는 전사 또는 포로가 되고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미 제187공수단 작전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으며, 이들은 최초로 전구사령관(戰區司令官)인 맥아더 원수의 요구에 따라 미 본토에서 급파된 부대들로서 극동군사령부의 직접통제하에 운용하였으나 전세(戰勢)의 변동에 따라 제8군사령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양자 모두가 장기간 독립작전이 불가능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극동군사령부는 먼저 상륙한 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으로 상륙군단인 미 제10군단을 편성 운용하였으나 나중에 착륙한 공수단은 제8군의 전과확대와 차단임무 등에 운용했다.

특히, 본 고에서는 어떻게 최초 공수부대를 투입하게 되었고, 미 제8군의 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작전내용과 성과를 면밀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제187공수단 편성/작전 활동

### 1. 제187공수단 편성과정

한국전쟁 당시 미 본토에서는 유럽에서 철수한 완편부대인 제82공수사단과 극동지구에서 1년전 1949년에 철수한 50% 수준의 제11공수사단을 전략예비로 확보하고 있었다. 이 중에 제11공수사단은 기간요원만으로 명맥을 유지한 가운데 즉시 전선투입에 어려운

문제점이 수반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전면남침 10일후 7월 5일에 미 제24사단 소속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오산부근까지 북상하여 최초로 접전이 벌어진 후 맥아더 원수는 7월 20일부터 8월 10일 사이 실시예정인 ‘블루하트’(Bluehearts) 상륙작전 계획에 포함될 공수단의 급파를 합참에 요청함으로써 이의 차출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맥아더 원수가 요청한 공수단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완편된 제82공수사단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에 미 합참에서는 제82공수사단이 본토의 유일한 기동예비라는 점을 들어 극동군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 대신 제11공수사단 예하 제187공수단을 증편하여 증원키로 결정하고 참전을 지시하게 되었다.

특히 기간요원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공수연대 완편은 훈련된 병력의 보충뿐만 아니라 공수작전에 필요한 특수장비를 확보하고 또한 집결시키는 등 효율적으로 작전지역까지 수송문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현지부대의 작전상황과 일치된 준비는 더욱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무렵 극동군사령부의 ‘블루하트 계획’이 전세의 급변으로 7월 10일부로 보류되고 동 계획에 포함된 공수단의 최초 운용계획이 무효화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으나 그 뒤 다시 계획된 ‘크로마이트’(Chromite) 인천 상륙작전계획이 새롭게 공수단의 투입을 포함시켜 동 부대의 완전편성과 수송을 독촉함으로써 그 시기를 둘러싸고 극동군사령부와 합참간에 이견이 있었다.

7월 13일에는 합참대표로 육군과 공군의 두 참모총장이 동경의 극동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무렵, 참모장 ‘알몬드’(Almond) 소장으로부터 “상륙작전과 동시에 공수단을 후방에 투하시켜 한강 북쪽의 제방을 확보토록 한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Collins) 대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히 훈련된 부대를 과대평가하여 잘못 운용함으로써 병력의 손실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의 이러한 의견은 1개부대로 편성된 전투단을 광범위한 진지에 투입하는 것이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하였다.

실제로 광장교에서 제2한강교 부근까지 총 24km에 달하는 북안의 제방은 2개사단의 정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모두 건물에 근접한 도시이므로 적의 기습이 용이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와 같이 최초의 이견을 남겨 놓고 돌아간 그는 곧 육군성의 작전참모부장 ‘볼테’(Bolte) 소장에게 극동군사령부에 보낼 공수단의 편성완료시기와 수송문제에 대해 연구토록 지시했다.

이미 합참의 결정에 따라 제11공수사단에서 파견할 1개의 공수단을 편성토록 되어

있었던 만큼 7월초부터 ‘조지아’(Georgia) 주(洲)의 ‘포드베닝’(Fort Benning)에 있는 육군 공수학교로부터 장교와 부사관 요원이 전보되고 또한 매주 400명씩 병력이 보충되었다.

이와 같은 실정을 참작해 볼 때 ‘볼테’ 소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한 다음 그 편성완료시기를 판단했다.

그 제1방안은 공수학교로부터 계속 매주 400명씩 보충함과 동시에 잔여의 전투병력을 제82공수사단으로부터 차출하면 8월 1일까지 완료될 것이 제1방안이며, 제2방안은 공수학교로부터 매주 400명씩 보충되는 인원만으로 편성하고 훈련을 끝내려면 9월 20일까지 소요된다는 것이 제2방안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콜린스’ 대장은 제82공수사단을 손대지 않고 편성하는 제2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결심한 끝에 7월 18일에 맥아더 원수에게 “9월 20일까지 본국에서 파견된 공수단의 편성을 완료한다”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맥아더 원수는 인천 상륙작전에 공수단을 운용할 예정이므로 9월 10일까지 도착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맥아더 원수가 언급한 상륙작전계획이란 그 자신의 의도를 참모총장에게 전했을 뿐이며, 아직 구체적인 성안(成案)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육군성이나 합참의 참모들에게 생소한 것으로 공수단의 조기 파견은 편성절차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맥아더 원수의 의도<sup>1)</sup>는 즉각적이고 전투경험이 풍부한 완편된 제82공수사단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데 반해 미 정책당국자들은 본토의 안전을 이유로 끝내 반대하였고, 그 합리적인 방안으로 공수단의 특수성을 들고 나왔다. 이러한 사안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장군은 바로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 미8군사령관 릿지웨이 중장, 미 육군 작전참모부장 볼테 소장이었다.

## 2. 작전 활동

7월 23일 맥아더 원수는 극동군사령부 알몬드 소장이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에게 설명한 바 있는 공수단의 한강선 투입계획을 수정하여 주력의 인천 상륙작전과 동시에 공수단을 김포반도에 투입하여 적의 통신축선과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일후인 7월 25일에 계획수립의 주무자인 미 육군성 참모부장이 세운 계획은

주 1) Policy and Direction First year ; James F. Schnabel, 1970, pp.169~170. 미극동사 전문 C 57379('50. 7. 8)과 동 C58473('50. 7. 23)로 미 육군성에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 상륙작전과 거리가 먼 공수단의 편성과 이동계획이 마련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8월 19일까지 4,000명으로 제187공수단을 완전편성함과 동시에 8월말까지 훈련을 끝내고 이동을 시작하여 최소한 9월 21일까지는 일본의 기지에 도착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극동군사령부에서는 계속 독촉과 항의로 맞섰으나 결국 8월 28일에 시달된 지시에 의하면 즉 “9월 21일에 일본 사세보(Sasebo)항에 제187공수단이 입항할 것이며, 전선투입은 9월 29일 무렵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마지막 지시에서 공수단의 훈련정도와 기대되는 성과를 첨부했는데 내용은 ‘본 공수단은 주간작전만 임무가 수행 가능하며, 또한 고도의 기동으로 부여된 전투임무를 훌륭히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00대의 C-119수송기가 일본의 기지에 먼저 도착한데 이어 공수단장 보웬(Frank S. Bowen) 대령이 지휘하는 4,400명의 주력군은 14개 열차에 나누어 타고 미국 캠펠(Campbell) 기지를 출발하여 선발대를 실은 제1호 열차는 9월 1일에 워싱턴의 라우톤(Lawton) 기지로 향했다. 이곳에서 선발대는 수송기에 옮겨 타고 앵커리지와 세머야, 그리고 동경을 거쳐 일본의 구주(九州) 북단에 있는 아시야(蘆屋) 공군 기지로 공수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주력은 열차편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톤맨(Stoneman) 캠프로 이동한 다음, 이곳에서 일본 사세보 항구까지 해상수송을 맡은 해군 수송선단 소속의 헤인젤만(Heintzelman)호와 앤델슨(Anderson)호에 승선하여 9월 6일과 7일에 출항하여 9월 20일 목적지에 도착했다.<sup>2)</sup>

그런데 선발대로 출발한 수송기가 9월 6일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충돌사고를 일으켜 윗드머(Lavern G. Witmer) 중령과 동승한 넬슨(Robert J. Nelson) 소위가 사망하는 첫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러나 공수단장인 보웬 대령은 곧 이를 수습한 다음 선발대로 하여금 아시야를 경유하여 구주 북단의 하카다(博多)로 이동하여 그전에 제13포병대대가 주둔했던 장소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자신은 참모들을 대동하고 도착신고를 위해 동경에 위치한 극동군사령부로 출발했다.

그곳에서 공수단장 일행은 극동군사령부에서 합동전략 및 작전계획단이 작성한 인천 상륙작전계획과 공수단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체득(體得)한 다음, 곧 하카다 소재의 지휘소로 돌아와 기밀실과 작전상황실, 그리고 브리핑에 사용할 제반기구 등을 마련 작전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병력을 수용할 숙영지를 정돈하고 이러한 계획을 일명 우드캠프(Wood Camp)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주력이 9월 6일부터 해상으로 이동을 시작하여 9월 20일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9월 15일부터 실시되는 상륙작전에 처음부터 참가할 수 없는 세부일정을 살펴

주 2) 제187공수단 작전일지('50. 8. 1~10. 31)

보면 다음과 같다.

- 9월 6일 : 제187공수단 선발대 아시아(蘆屋) 공항 도착, 주력 본국 출항
- 9월 8일 : 극동군사령부 인천 상륙작전계획 최종 승인
- 9월 12일 : 미 제10군단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해상기동 개시
- 9월 15일 : 인천 상륙작전 개시
- 9월 20일 : 미 제187공수단 모지(門戶)항 도착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수단장은 전선투입을 가능한 한 단축할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사세보 항구로부터 숙영지까지 96km나 되는 거리를 불필요하게 이동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군의 도착항구를 모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지휘소 역시 9월 19일에 그곳에서 가까운 아시아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제187공수단 주력도 모지에서 아시아로 이동하여 즉각 김포반도에 투입될 태세를 갖추게 되었으나 이때는 상륙부대와 낙동강선의 제8군이 오산에서 연결(Linkup)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와 같이 공수단은 엇갈린 견해와 논란 끝에 겨우 투입태세를 갖추게 됨으로써 이 때가 9월 23일, 상륙작전이 개시된 지 8일후였다.

### Ⅲ. 공·지(空·地) 연결작전 성과

#### 1. 최초 기동과 잔적 소탕작전

본 전례를 통해 공수부대는 최소한 3일 이내에 주력부대와 연결해야 하며, 연결기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가 점차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전투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이와 같은 교훈을 체득한 바 있는 공수단 요원들이 극동군사령부의 예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포반도에 투입되어 아시아(蘆屋) 공군기지에 집결, 대기하였다.

미 제10군단의 주력부대로 인천에 상륙한 미 제1해병사단은 9월 18일 오전에 김포비행장을 완전히 탈환한 다음 영등포로 계속 진격하였으며, 9월 20일부터는 행주 나룻터 일대를 향하여 도하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해병대들이 통과한 김포반도 근처에 패잔병들이 은폐후 아군 후속부대를 기습과 저격으로 교란작전을 전개했다.

특히 김포비행장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미 제5해병연대는 수차 연습해 온 중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동 비행장을 확보함으로써 9월 18일 14:00에는 점령후 최초로 해병대 소속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게 되었고 19일에는 C-54수송기가 보급품을 싣고 일본으로부터



터 착륙하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 후 20일부터는 동 비행장에서 전투기의 출격이 시작되고 아시아 기지에서 대기중인 제187공수단이 극동군사령부의 작명에 따라 C-119수송기편으로 이곳에 착륙, 김포반도의 잔적 소탕전에 돌입했다.

작전에 돌입하게 된 제1, 2, 3대대 순으로 기동을 전개한 부대는 9월 26일까지 모두 착륙했는데 제1대대의 경우 잔적들의 소화기 사격을 무릅쓰고 활주로에 착륙하여 병력과 장비가 공수되는 동안 적의 저격병으로부터 발사된 실탄이 한 병사의 양 눈 사이를 관통하여 최초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어 후속 대대의 공수가 시작되면서 먼저 도착한 제1대대의 A중대는 비행장 동남쪽 8km까지 보행으로 행군하여 외곽에 배치되었다.

이어서 주력이 모두 김포비행장에 선착하자 한강 남쪽 일대 김포반도에 있는 잔적 소탕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때 공수단이 판단한 잔적은 북한군 제107경비연대 소속의 3개 대대 약 3,000명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이들은 혼합된 패잔병으로서 저항력이 미약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따라서 4일간의 소탕전에서 공수단의 주임무<sup>3)</sup>는 인천에서부터 부평으로 진격한 한국군 제1해병연대(연대장, 신현준 대령)와 협조하여 김포반도 서북쪽을 차단하면서 소탕전을 전개했다.

작전을 전개한 9월 21일에는 제3해병대대(대대장, 김윤근 중령)가 이미 김포읍 부평북쪽 12km까지 진출하여 적의 주력을 공격중에 있었으므로 후방의 잔적들은 부평 북쪽 5~6km 지점의 계양산(395고지)과 철마산(227고지) 등에 분산되어 아군 후속부대에 대해 기습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공수단장은 9월 26일에 3개 대대가 김포비행장에 모두 도착하자마자 곧 정돈을 마치고 다음날인 27일부터 제3대대를 선두로 김포반도 서북쪽을 향해 전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동 대대의 전위인 제3대대의 L중대가 배속된 전차소대에 탑승하고 폭격으로 파괴된 김포읍 남쪽의 교량에 이르러 이곳에서 하차후 도보로 전진했다. 이에 중대가 교량부근의 부락을 통과하여 전진하고 있을 때 500m 우측의 구릉에 배치된 약 400명 정도로 추산된 적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자 동일 17:00까지 4시간 동안의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때 본대가 구릉위의 적을 측방에서 공격하여 적을 격퇴시켰는데 이 전투로 수십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제1대대는 9월 29일부터 재차 서북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9월 30일에는 김포반도 북쪽까지 진출한 끝에 이 지역에 준동하고 있는 적을 모두 소탕하고 10월 1일에는 한국군 해병대와 함께 동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한강하구 일대의 잔적 소탕전을 완료했다.

주 3) 187 Airborn Regimental Combat Team, Fort Campbell, KY p.30.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수단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친 김포반도 작전에서 약 3,000명의 잔적을 소탕했으며, 이 중에 300명은 나룻배 등을 이용하여 강화도 쪽으로 도주했다.

때마침 10월 1일에 발표된 맥아더 원수의 북한에 대한 항복권고 방송이 있었고 이어서 동월 2일에는 38도선 돌파에 대한 유엔사 작명 제2호가 하달되어 김포반도 서북쪽에 전개 중인 제187공수단은 새로운 임무수행을 위해 김포비행장에 집결되었다.

이와 같이 공수단을 단기작전에 투입시킨 후 다시 집결토록 한 것은 10월 7일에 미 제10군단이 낙동강 전선에서 북진하는 미 제1군단에게 경인지구를 인계하고 인천에서 원산항으로 전진함과 동시에 평양탈환작전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혼잡을 피하면서 차기 연결작전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 10월 2일에 동 비행장에 재집결을 명령했다.

## 2. 숙천(肅川)·순천(順川)지구 작전

본 지역에 대한 D-day 결정은 10월 3일부터 7일까지 부대 정비와 함께 모든 장비를 갖추고 한강백사장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극동군사령부에서는 공수단의 투하 및 연결작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다.

이 무렵 유엔군사령부의 북진명령이 발표되자 각국의 기자들이 현지에 달려와 한국 전선에서 최초 실시예정인 공·지(空·地) 연결작전 계획을 취재하려고 김포비행장에 주둔한 공수단본부로 달려왔으나 보안문제로 이들을 부대내에서 완전히 통제했다.

특히 10월 7일에는 이러한 작전상황을 취재차 각국의 신문기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각 통신사 요원들과 종군기자들이 작전상황을 취재하는 동안 공수단은 대대별로 한강백사장을 낙하지역으로 하는 마지막 전투 낙하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한 취재활동을 실시한 각국의 신문 및 통신사는 라이프(Life),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Stars & Stripes), 그리고 프렌치(French) 기자 등 제한된 3명에게만 보안조치 후 조건부로 허용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공수단의 이 마지막 낙하훈련을 끝내고 10월 9일에는 미 제1군단이 개성부근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김천(金川)과 시변리(市邊里)로 전진했고, 동부의 한국군 제1군단은 10일에 원산을 점령하는 등 전황이 예상외로 급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월 11일로 예정된 최초의 낙하훈련은 이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로 인해 공수단의 사기가 저하되기도 했으나 계속 5개 예정낙하지역<sup>4)</sup>에 대한 인원 및 장비의 공수계획은 진행되었다.

주 4) 전개서, p.32, 5개 DZ선은 간포리, 황주, 평양, 숙천, 안주로 추측되며, 이 중에 평양, 숙천, 안주는 공수단의 전사에 명시된 지역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8군 산하의 한·미 양군 부대들은 추격속도를 가속화시킨 가운데 동월 16일 현재 서부의 미 제1군단이 신막(新幕)과 수안(遂安)을, 중동부의 한국군은 곡산(谷山)과 함흥(咸興) 남쪽의 정평(定平)까지 진출함으로써 맥아더 원수가 고려했던 공수단의 조기 투입계획은 다시 이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공수단의 디 데이(D-day), 그리고 연결후 지휘권의 소재 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첫째, 평양점령을 눈앞에 둔 미 제1군단의 진격속도와 둘째, 이미 한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점령함으로써 미 제10군단의 운용계획에 차질이 야기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작전명령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 유엔사 작명 제3호(50. 10. 16) 제187공수단은 10월 21일을 기하여 숙천-순천지구 에 공수 투하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북상 도주하는 병력을 격멸함과 동시에 유엔군 포로를 구출하고, 미 제10군단과 연결후 동 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간다.
- 유엔사 작명 제4호(50. 10. 17) 본 작명은 미 제10군단의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동군단에 양덕(陽德) 동쪽 전투지구를 부여했고 전 유엔군의 진출한계선도 선천(宣川) - 평원(平院) - 풍산(豊山) - 성진(城津)까지 연장한다

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공·지 연결작전 지역은 미 제10군단으로부터 제8군 산하로 전환되었다.

위의 작명 제4호가 하달된 10월 17일에 영국군 제27여단이 사리원(沙里院)을 점령함으로써 두 번째 DZ가 무효화되고 평양 북쪽 교외의 DZ도 적의 주력과 유엔군 포로들이 그들과 함께 이미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첩보에 따라 취소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안주(安州)와 개천(价川), 숙천과 순천의 4개 지역을 검토한 끝에 안주와 개천은 넓지대가 많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를 보류하고 후자인 숙천과 순천은 미 제1군단과 조기 연결이 가능한 곳이며, 또한 전자와 같은 결함이 없으므로 이를 DZ로 선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다음날인 10월 18일에는 김포비행장에서 대기중인 공수단장에게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동 명령상의 D-day는 10월 20일이었다.

특히 공수기동과 후방차단 문제는 낙하지역 주변의 적정은 미지수였다. 다만 미 제8군의 정보보고에 따르면 평양방어사 소속 3만 명의 적 병력중 그 50%가 이미 북쪽으로 철수중이며, 평양부근의 포로수용소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약 370명의 유엔군 포로도 이미 북상중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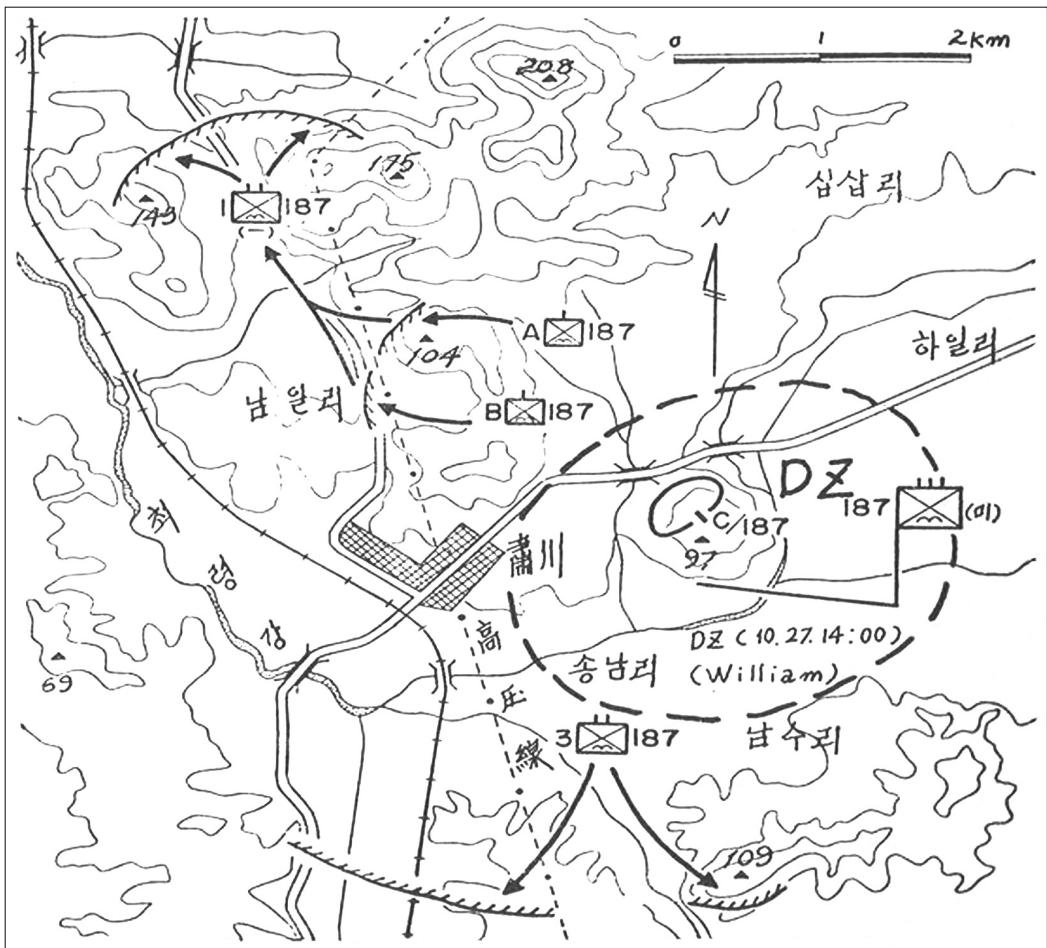
그런데 미 제8군사령관의 특명으로 미 제2사단 정보참모 '후오스터'(Ralph L. Forstor) 중령을 지휘관으로 하는 인디안헤드(Indian Head) 특수임무부대가 10월 16일에 전진을 개시하여 평양에 들어간 바 있으나 수명의 낙오포로만을 구출하여 복귀했고, 19일에는 한국군 제1사단의 제15연대와 제7사단의 제8연대가 평양을 점령함으로써 그들 주력이 이미

퇴각하여 다음날에 실시될 공수작전은 사실상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예정된 10월 20일 오전에는 많은 비가 내려 어느 정도 비가 개이자 12:00를 기하여 공중기동에 들어갔다. 이 작전에 동원된 수송기는 총 113대로서 낙하지역별 편성은 다음과 같다.

숙천지구(William)에서는 제1대대 및 직할대 1,470명, 제3대대 1,230명, 90밀리 대전차포, 105밀리 곡사포, 각종 차량 및 포탄 1,125발이었고, 순천지구(Easy)에서는 제2대대 1,300명, 각종 장비 및 탄약이 공수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서부 방어지역에서 공수작전을 경험한 바 있는 제 82, 101공수사단 장병들과 새로이 보충된 공수단 요원으로 구성된 각 대대는 당초부터 적의 지상화기로부터 피해를 감소하기 위하여 고공에서부터 투하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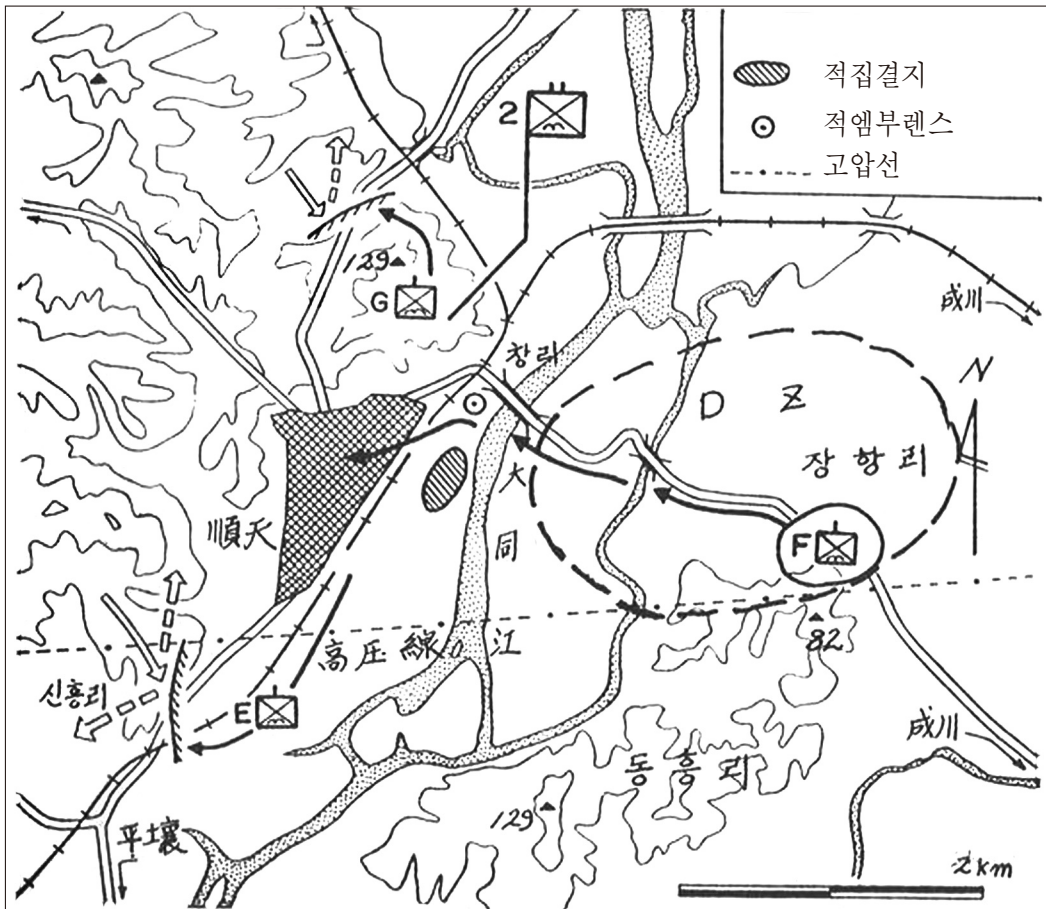


제187공수단 숙천 낙하지역

그 후 14:00부터 낙하가 시작된 제1대대는 먼저 1개 중대로 97고지를 확보토록 하고 대대 주력은 북쪽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계속 공격 104·143고지를 확보하였고 후속하여 낙하한 제3대대는 남쪽으로 3km를 전진하여 109고지와 평양으로 향하는 철도 및 도로를 차단하고 북진중인 영국군 제27여단과 연결하기 위하여 계속 남하 태세를 갖추었다.

이 무렵에 미 공군의 F-80, F-51전투기가 주변의 적 진지에 대하여 대지(對地)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마지막 수송기들로부터 경장비와 중장비, 그리고 탄약과 식량 순으로 투하되었는데 대체로 17:00까지 목표지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순천을 향해 기동을 개시한 제2대대도 14:30에 낙하를 시작하여 2개 중대로 먼저 순천 남북의 도로를 차단토록 하고 1개 중대는 읍내(邑內)를 소탕한 가운데 이날 하오에 한국군 제6사단의 선두부대와 이곳에서 연결함으로써 순천지구 작전은 비교적 조기에 완료되었다.



제2대대의 순천 낙하지역



한편 영유리(永柔里) 연결작전에서는 낙하상황을 숙천 상공에서 시찰하고 돌아간 맥 아더 원수는 5명의 기자들에게 “공중투하는 훌륭한 성공”이라고 칭찬하고 “적은 포위망 속에 압축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시간에 전쟁은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적의 주력은 이때 이미 청천강 북쪽으로 철수했고, 평양에 있던 북한군과 잔적들은 강계(江界) 방향으로 도주했음을 지방주민들의 첩보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들이 평양에서 강제로 끌고간 유엔군 포로들도 이미 순천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기진맥진한 포로들을 순천 북쪽의 명우리(鳴牛里) 부근 철도터널에 집어넣고 모두 사살했던 사실이 뒤에 미 제1기병사단 부사단장 알렌(Allen) 준장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연결작전은 계속되었다. 10월 21일 하오에는 순천의 제2대대와 숙천의 제1대대가 연결하고 제3대대는 북상하는 영국군과 연결하기 위하여 1개 중대를 어파리(魚波里) 방향으로 그리고 대대 주력을 영유 방향으로 각각 남진 전진토록 했으나 21일 13:00에 어파리까지 진출한 1개 중대가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고 281고지로 철수하여 잔여병력을 수습했다.

따라서 영유를 향하던 주력도 영유 북쪽 1.6km 지점에서 1개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전진이 저지되었으나 곧 반격을 가하여 300고지 방향으로 적을 격퇴시켰다.

이날 하오에도 적들은 국부적으로 대대 후방시설에 대해 공격을 시도했으나 모두 격퇴하였고 18:45에는 영국군 소위와 하사 2명이 배치지역 전방까지 진출하여 미 제1군단의 주력부대가 북진중임을 알려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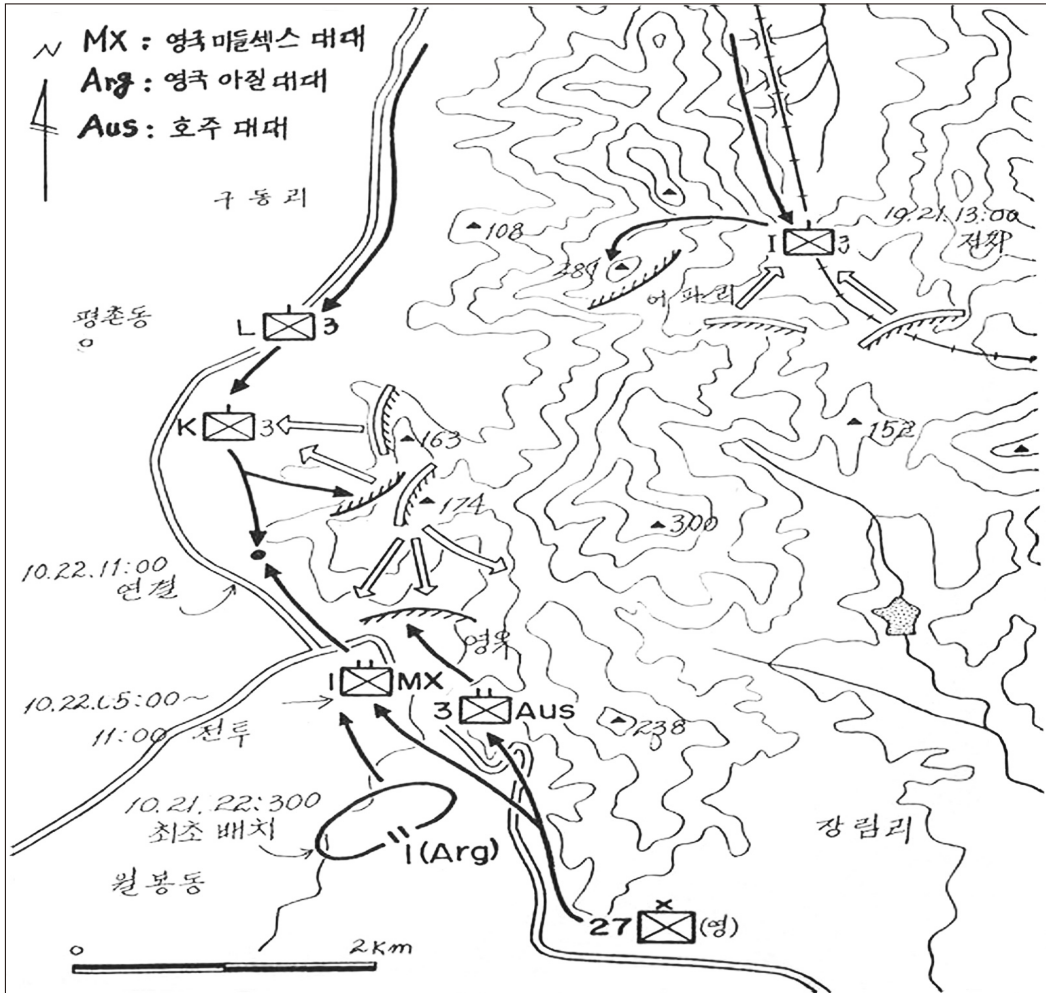
그 후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2,500명 규모로 편성된 적 제239연대 소속 2개 대대가 영유에 배치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10월 22일 02:00를 기하여 수차례의 공격을 시도했다.

때마침 평양에서 북진한 영국군 제27여단<sup>5)</sup>(미 제24사단에 배속)의 선두인 아질(Argyll) 대대가 전날 영유 남쪽까지 전진, 대기하고 있었으나 22일 새벽 미들섹스(Middlesex) 대대가 이를 추월하여 영유 부근의 과수원 일대에서 전투를 전개하고 다시 동 대대들을 추월한 보전협동의 오스트라리아(Australia) 대대가 공수단 방향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11:00에 양 주력부대의 연결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연결은 48시간 이내에 끝났으나 가장 중요한 포로구출에 있어서 북한이 순천 북쪽에서 유기한 23명만이 구조되었고, 75명은 사살된 시체로 발견됨으로써 작전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다.

주 5) 영 제27여단은 3개 대대로 구성되었으며, 이중에 Argyll and Sutherland Highlanders의 제1대대와 Middlesex Regiment의 제1대대는 '50. 8. 28에 내한했고, Australia Regiment의 제3대대는 동년 9월 28일에 도착하여 여단 소속으로 배속되었다.

the first Commonwealth Division the story of British Commonwealth Land forces in Korea 1950~1953 by Brigadier C.M.Barclay 1954, pp.17~23.



어파리와 영유의 연결작전

그리고 낙하 및 연결작전 과정에서 공수단과 미 제1군단은 166명의 전사상자가 발생되었고 어파리(漁波里) 전투에서는 모두 90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보았으나 적 사상 1,122명과 적 포로 3,818명의 전과를 거두었다.

### 3. 문산(汶山)지구 작전

공수단은 연결후 숙천으로 되돌아가 영국군 제27여단에게 작전지역을 인계한 다음 순천을 경유하여 10월 24일 평양으로 이동하여 미 제8군 예비로 경계임무를 수행했다.

이에 철수시의 엄호활동을 고찰해보면 11월 초에는 운산지구에 나타난 중공군으로 인하여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피난민이 증가되었으며, 이때 공수단은 평양-진남포간의 보급로와 평양비행장을 비롯한 주둔부대 지역내의 중요시설에 대한 감시 및 보호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무렵에 김일성 대학을 비롯한 주요 건물들이 북한의 불순분자들에 의해 방화 또는 파괴되어 갔고 800명 수용의 임시 포로수용소도 게릴라들의 방화로 휩싸이고 말았다.

이러한 혼란속에 아군 주력부대가 전선으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끊어진 철교 위를 생사의 기로에서 몸부림치면서 남하를 서두르고 북한군의 게릴라들은 피난민 대열속에 혼재되어 교란과 기습을 감행하면서 그들 상호간에 신호를 보내고 있음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수단은 11월 21일까지 제10 필리핀 대대를 작전통제하여 평양-개성간의 주보급로를 경계하면서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했는데 11월 28일 야간에는 적 항공기의 공중공격으로 6대의 아군기가 격추되고 일부 병력이 피해를 입었다.

그후 11월 하순부터 중공군 제4야전군 산하의 4개군이 본격적으로 침략을 개시하자 공수단은 제1대대를 대동강 하구의 서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구월산 부근으로 파견하였고 나머지 주력은 얼마뒤에 덕천지구의 한국군 제2군단을 포위한 중공군을 반격하면서 철수를 엄호했다.

이와 같이 11월 하순부터 중공군이 전면 침략에 들어가자 아군 주력도 다시 38도선 부근으로 철수했고, 공수단은 군의 후방과 측방을 엄호하면서 중부전선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작전준비를 서둘렀다.

따라서 공수작전의 준비상황은 문산지구에서 작전준비는 공수단이 원주 부근의 신막전투를 끝내고 1951년 3월 중순에 대구의 K-2 비행장에서 낙하훈련에 들어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무렵 전선은 아군의 2차 총반격작전이 시작되면서 40만 명의 중공군 및 북한군은 38도선상으로 퇴각하는 단계에 있었다.

1950년 12월 26일에 워커(Walker) 중장의 후임으로 미 제8군사령관에 임명된 릿지웨이(Ridgway) 중장은 군 예비로 확보중인 공수단을 춘천과 문산의 2개 낙하지역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연결작전을 실시키로 하고 먼저 공수단의 재편성과 훈련을 강조했다.

그 후 제2, 4 유격중대가 추가로 배속되고 총 4,033명의 낙하훈련이 시작되었는데 훈련 중 1명이 전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훈련중 마지막날에는 군사령관이 직접 사열을 하는 등 장차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 중공군 제3야전군이 38도선 남쪽으로 이동하여 의정부 부근에 집결중임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언제든지 아군에 대한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미 제8군은 중공군이 공격이전에 적의 후방을 차단하고 그들의 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춘천과 문산 부근을 낙하지역으로 선정, 연결작전을 실시키로 하고 그 준비에 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형분석과 적 능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 낙하지역은 춘천이 취소되고 문산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3월 19일에는 숙천, 순천지역 작전에 참가했던 C-119 및 C-47 수송기가 다시 일본으로부터 도착하여 공수단의 임무를 담당케 되었는데 이때 문산정면의 적은 이미 미 제1군단의 반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임진강을 건너 북쪽으로 도주중이었다.

그리고 문산 돌출부의 연결작전에서는 미 제8군은 제187공수단에게 “임진강을 횡단하는 적의 철수로를 차단하고 적 제17사단을 섬멸하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1951년 3월 23일 09:00를 기하여 문산 부근에 공수낙하하여 미 제1군단장 지휘하에서 크로우든(Crowden) 특수임무부대와 연결후 합동으로 동두천 남쪽 덕정(德亭) 방향으로 동진을 계속하고 서울로부터 북진중인 미 제3사단과 연결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공수단은 3월 22일에 준비명령을 수령한 즉시, 공수낙하를 위한 예비행동에 돌입했다.

한편, 숙천, 순천지구 연결작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산지구 연결작전을 직접 담당한 미 제1군단은 제8군의 리퍼(Ripper) 작전계획에 따라 서울 교외로부터 임진강까지 3월 22일을 기하여 공격을 개시했는데 이때 국군 제1사단은 구파발 부근에서 봉일천 문산 남쪽으로, 미 제3사단은 미아리 부근에서 의정부, 동두천 방향으로 각각 진격했고, 새로이 참전한 영국군 제29여단은 군단예비로 영등포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때 적들은 1개 대대 규모를 임진강 남쪽에 남겨두고 그들 주력은 거의 북쪽으로 철수한 상태였으므로 아군 주력부대들은 별다른 저항없이 공격개시 24시간 만에 의정부, 봉일천 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예정된 연결작전이 3월 23일 08:00를 기하여 시작되었는데 먼저 크로우든 특수임무부대의 전차중대가 한국군 제1사단을 추월하여 경의국도를 따라 진격했고, 공수단은 이보다 1시간후인 09:00에 문산 부근의 예정된 지역에 낙하했다. 이어서 제일 먼저 낙하한 유격중대가 문산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자 제1대대가 북쪽의 집결지에서 임진강 교량을 향하여 전진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제2대대는 북동쪽의 고지를, 제3대대는 문산 서북쪽의 낮은 고지를 각각 집결지로 하여 재편성에 들어갔다. 특히 낙하단계에서 중장비의 투하와 이의 신속한 지상편성은 고도의 기술과 침착성이 요구되었다. 예를 들면 제1대대의 중화기소대의 경우 2문의 75mm 무반동총과 4정의 경기관총, 수문의 3.5인치 로켓포와 모든 화기에 필요한 탄약 등을 투하할 때 각 대원들은 소유탄약 등을 휴대하고 담당 화기와 함께 낙하했다.

따라서 어느 사수는 3.5인치 로켓포 1문을 어깨에 메고 2개의 탄약상자와 5개의 소화기 실탄과 탄약, 그리고 전투낭과 T-7낙하산낭 등 모두 300파운드에 달하는 탄약과 장비를 휴대하고 낙하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5mm와 105mm포로 장비된 제67공수포병대대의 B포대가 투하되었는데 동 포대는 첫날에 제2대대 상황으로 즉각 활용할 수가 없었다.

즉, 낙하단계에서 동북쪽의 제2대대 지역에는 중무장한 북한군 제19사단 예하 제38연대의 1개 대대 병력 약 400명이 새로 배치되었고 이들과 연합한 중공군이 철수를 가장 하면서 북상중인 것으로 보였는데 운이 나쁘게도 제2대대가 이곳의 적진에 투하되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고전에 이른 동 대대를 증원키 위해 북쪽의 제1대대가 일부 특수임무부대만을 남겨두고 모든 주력으로 야간기동을 실시하여 다음날 아침에 제2대대 지역의 고지를 확보, 적의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잔여 아군 병력을 구출하였다.

그러나 이 낙하 첫째날의 잘못으로 한꺼번에 782명의 병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뒤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적의 낙하 2~3일전까지 그들 주력을 이곳에 배치하고 있었으나 아군의 계획을 탐지하고 사전에 중무장한 병력만을 낙하지점에 남겨두고 주력은 임진강 북쪽으로 철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공수단의 2개 대대가 상호 연결작전을 시도중이던 3월 23일 18:55에 문산 방향으로 진출한 정찰대로부터 북상중인 특수임무부대와 접촉케 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고 3월 24일 04:00에는 선두의 미 제6전차대대와 보병들이 의정부 방향으로 진격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공수단 지역으로 전개됨으로써 완전히 연결되었다.

그 후 제2단계 작전은 즉각 보전협동공격을 위한 편성을 마치고 포병의 지원하에 3월 24일 정오부터 의정부 동북쪽에 위치한 연대 규모의 적을 공격, 북진하는 미 제3사단과 제2차 연결을 위한 작전에 들어갔다.

따라서 제2대대를 선두로 하여 동일 하오에 범원리까지 진출하였는데 도로가 아주 불량한 데다가 비가 내려 기동에 지장을 받게 되었으나 계속 진출하여 3월 25일에는 공수단의 예비대가 의정부 방향으로 진입한 제3사단과 합류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일부로 미 제3사단장 '솔레'(Robert H. Soula) 소장의 지휘하에 덕정-동두천 서쪽 일대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했다. 그리고 3월 26일에 제3대대가 제2대대를 추월하여 동두천 부근의 228고지를 공격하였으며, 27일까지 치열한 전투 끝에 대대병력의 적을 모두 격멸하고 동 고지를 확보했다.

이때 적의 주력은 동두천 남쪽과 서쪽의 칠봉산, 그리고 감악산 일대에 있었으나 한국군 제3사단의 제15, 65연대가 남쪽으로부터 북진 공격중에 있었으므로 적의 주력은 거의 철수하고 중공군 제234연대가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3월 28일을 고비로 완전히 격멸되었다.

결국 문산지구 작전에서 최후 낙하 및 연결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동진하여 미 제3사단과 연결한 제2단계 작전은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공수단은 3월 29일 작전지역을 사단에 인계하고 대구로 이동하여 군 예비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본 작전에서 공수단은 낙하의 잘못으로 782명의 피해를 입었으나 공수활동 분석결과 적 사살 402명과 포로 263명의 전과를 획득한 전례를 남겼다.



#### IV. 지상기동에 의한 차단과 엄호

한국전쟁 기간중에 제187공수단은 위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두 번의 공·지 연결작전을 실시한 이외에도 미 제8군 주력부대의 작전을 엄호했고, 휴전협정이 성립될 단계에 이르러서는 거제도도 출동하여 포로들의 폭동진압작전을 활발하게 전개했으며, 따라서 세부적인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50년 11월에는 아군 작전부대들을 철수간에 좌측전선을 엄호했고 일부는 12월에 경북 풍기고개 투입
- 1951년 2월에는 제2차 진격과 동시에 원주지구로 진출, 중공군의 차단선을 돌파하여 포위된 한·미간의 병력을 철수 및 엄호
- 1951년 5~7월에는 미 제10군단의 재반격작전계획에 따라 인제-원통리에 진출하여 중공군의 후방을 차단 공격하고, 계속해서 적의 공세 저지작전에 참여
- 1952년 5~6월에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폭동진압작전 실시
- 1952년 7~9월에는 미 제1군단의 통제하에서 철의 삼각지대 작전 참가
- 1953년 7월에는 최종적으로 금화부근전투에 참가 후 10월 3일 일본으로 복귀하기 위해 인천으로 집결

위 전사(戰史)를 고찰해 볼 때 원주통로의 개방작전에서는 중공군의 침략이 38도선 이남의 원주 부근까지 도달한 '51년 2월 12일에 미 제8군은 새로이 미 제10군단으로 하여금 철수중인 한·미군을 수습하여 황성-원주선을 방어토록 했다. 이때 미 제1군단지역에서 운용해 온 공수단을 이곳으로 이동, 미 제10군단 작전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먼저 엄호임무를 띠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공수단의 제2대대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피해가 급증하자 제3대대를 특수임무부대로 편성하여 원주에서 황성 방향을 향해 진격토록 했다.

이 무렵 적의 포위공격으로 군단 주력인 미 제2사단과 국군 제8사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중공군은 계곡을 중심으로 동서 양쪽 고지를 확보하여 아군의 철수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이때의 적의 기도는 주공을 서부에, 그리고 조공을 춘천-원주로 하여 이미 그 선두가 원주 부근까지 접근하였다.

따라서 공수단은 먼저 증원된 미 제2사단이 적의 포위망에 들어가자 곧 이를 돌파하기 위한 작전을 2월 13일부터 7일간에 걸쳐 야간침투와 공격, 그리고 교량폭파를 실시하여 적의 차단선을 개방함으로써 포위망 속에 있던 아군의 철수를 가능케 했다.

이러한 작전을 끝내고 일부가 제천 북쪽 5km 지점으로 이동하여 적 후방 교란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동월 28일에는 다시 대구로 집결하여 문산지구 작전에 돌입했다.

그리고 현리 철수작전시에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제2차 춘계공세로 동부의 한국군 제3군단은 '51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철수작전이 시작되었으며, 동 군단의 좌 인접인 미 제10군단도 인제-관대리 선에서 20~30km 후방인 창촌-가리산 선까지 접적선을 후퇴하여 반격작전 준비를 서둘렀다.

따라서 이 광대한 적의 돌파구를 반격하여 원진지를 회복할 임무가 군사령관으로부터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중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원칙에 따라 포위공격을 받아 지휘력이 상실된 한국군 제3군단과 새로이 증원되는 모든 부대가 작전수행 부대장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 군단은 킬러(Killer) 작전계획에 따라 원통리-화천저수지 선을 확보하기 위해 5월 25일부터 반격을 개시했는데 이때 공수단에게는 제3대대에 전차중대를 배속하여 특수임무부대를 편성, 미 제2사단지역인 인제와 원통리를 먼저 확보할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작전이 개시되자 공수단의 제3대대 병력은 모두 전차에 탑승하여 중대 대형으로 전진을 시도했고, 적들의 저항은 약화되었으나 일부 교차로 부근에서는 병력과 화력으로 엄호하고 있었고, 이 무렵 공수대대는 전차포로 이를 제압한 다음 돌진을 계속하여 5일만에 목표를 확보했다.

이 마지막 작전에서 원통리 부근의 420고지를 확보중인 동 대대의 1개 소대는 반격해 온 중공군을 끝까지 격퇴하여 아군 주력의 진출을 용이하게 했는데 이 전투에서 6명의 적을 사살하고 중상으로 후송된 허난데즈(Hernandez) 하사에게 미국의 최고훈장인 명예훈장<sup>6)</sup>(Honor of Medal)이 수여되었고, 이는 참전 이래 두 번째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공수단<sup>7)</sup>은 공격작전에서 보전협동에 의한 돌진과 적의 후방차단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으며, 방어 및 철수작전에서는 아군 주력부대의 전진로 개척은 물론, 엄호부대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 전례(戰例)를 소개하였다.

주 6) 공수단 장병중에 한국전선에서 최고훈장을 받은 사람은 '50. 10. 21 어파리 전투에서 전우를 구출하다가 전사한 위생병 Richard G. Wilson 일병과 원통리 전투에서 중상을 입은 Roldolfo P. Ernaudez 하사, 그리고 Hammond, Lester 하사 등 3명이다.

7) 전계서, 187 ARCT 부대역사, pp.61~61.

참고사항 : 기간중 한국전선에서 공수단을 지휘한 지휘관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모두 부임후, 대령에서 준장으로 승진했다.

1950. 8. 1~1951. 8. 11. Fronls S. Boeren Jr.,

1951. 9. 12~1952. 7. 21. Thomas J. H. Trapnell.

1952. 8. 1~1953. 10. 19. William C. Westmoreland.

## V. 결 론

공수부대(Airbone Troops)는 공수되어 공중으로부터 낙하하여 군사상의 요지를 기습·점령하고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편성·장비·훈련된 특수부대, 공수특전부대, 공정부대(空挺部隊)라고도 한다. 수송기나 헬리콥터 등을 이용, 목표지역에 강하하여 지상부대와 협동 또는 독립하여 주로 적지(敵地)내의 교통차단, 주요시설 파괴, 적군 격파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공중낙하를 하지 않고 비행장 등에 직접 착륙할 때도 있다.

역사적으로 최초 공수작전은 1939년 소련-핀란드 전쟁에서 소련군이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국-독일 등이 대규모로 채택하였다. 특히 공수부대에 의한 작전은 기습 효과를 달성하는 대신 인원·장비·탄약 등 보급 제한을 받으며, 단독작전의 경우 고립될 위험이 크며, 제공권(制空權) 장악 없이는 작전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본론에서 자세히 고찰된 바와 같이 미 제187공수단은 미국 본토에 있는 제11공수사단 예하부대로서 전후의 평시 편제에 따라 기간요원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몇 차례 논란 끝에 이 부대가 한국전선으로 출동했음을 이미 간파했을 줄 믿는다.

따라서 맥아더 원수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공수학교에서 보충된 장병에 부가하여 전투경험이 풍부한 제82공수사단 요원이 충당되어 비로소 완편을 보았는데 특히 개전초기에 있어 동 공수단의 긴급 투입문제는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한편 반격작전과 더불어 이 부대를 한강변에 투입하려던 최초계획이 공중기동의 지연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그는 계획을 변경하여 김포비행장으로 공수하여 후방 소탕전을 전개했다.

당초 워싱턴 당국자들은 공수단의 특수성을 들어 성과가 기대되는 작전에만 운용하고 적의 저항이 강력하거나 장기간의 작전을 요할 때에는 그 운용을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기대했다.

따라서 극동군사령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2차에 걸친 공·지 연결작전에서 투하지역과 시기를 거듭 수정하면서 작전을 수행했으나 이의 성과는 기대치에 못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더욱이 문산지구 작전의 경우는 정보판단과 투하지역 선정의 잘못으로 완전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기간중 동 부대가 지상기동으로 각 지구전투에 투입되어 적의 후방을 차단하였고, 아군 주력부대 철수를 엄호하는 등 그 전과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폭동진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례 등이 아직도 훌륭한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 고 문 헌〉

1. UN군 전사. 육군본부. 1970, pp.169~170.
2. 제187공수단 작전일지('50. 8. 1~10. 31)
3. UN군 전사. 육군본부. 1970, p.1076.
4. \_\_\_\_\_, 육군본부, 1970, p.30.
5. \_\_\_\_\_, 육군본부, 1970, p.32.
6. \_\_\_\_\_, 육군본부, 1954, pp.17~23.
7. \_\_\_\_\_, 육군본부, 1970, p.20.
8. 부대역사, 1950~1952 pp.61~61.

# 임진왜란기 제2차 진주성전투와 조선관군의 전술

## 목 차

- I. 머리 말
- II. 전투의 배경
- III. 전투경과와 결과
- IV. 패인의 전술적 분석
- V. 맺 음 말



제 장 명

(해군충무공리더십센터)

## I. 머리 말

임진왜란 시기 진주성은 그 전략적 위치 때문에 대규모 전투가 두 번이나 벌어진 곳이다. 한 번은 1592(임진)년 10월의 제1차 진주성전투이고, 다른 한 번은 1593(계사)년 6월의 제2차 진주성전투이다. 이중 제1차 진주성전투는 일본군의 수륙병진작전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전략적 의미가 컸고, 불과 3,600명의 관군으로 일본군 3만여 명을 물리친 점이 높게 평가되어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로도 불린다. 따라서 일본군의 서진을 육지에서 막은 전략적 가치와 함께 수성장 김시민 장군의 전략전술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sup>1)</sup>

주 1) 대표적인 논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李炯錫, 「제1차 진주성전투」 『壬辰戰亂史』 中卷,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朴性植, 『임진란의 진주성전투』 태화출판사, 1991; 지승중, 「16세기 말 진주성전투의 배경과 전투상황에 관한 연구」 『경남문화연구』 제17호,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1995; 박익환, 「임란시 1차 진주성대첩에서의 학봉과 김시민의 공업」 『아시아문화』 제12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北島万次, 「제1차 진주성전투의 경위와 제2차 진주성전투의 요인에 대하여」 『제2회 충무공 김시민 장군 선양 학술심포지엄자료집』 충무공 김시민 장군 선양사업회, 2003; 최관, 『일본과 임진왜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강성문, 「진주대첩에서의 김시민의 전략과 전술」 『군사』 5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오종록, 「임진왜란중 진주성전투의 지휘체계와 전투의 전개-1차 전투를 중심으로-」 『진주성전투의 재조명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진주문화원, 2005 등 다수가 있다.



한편으로 제2차 진주성전투는 참담하게 패배한 전투로서 오늘날에도 그 의미에 대한 논란이 많은 전투이다. 특히 이 전투를 반드시 수행해야 했었는가에 대한 가치문제와 함께 패전한 전투라는 점에서 제1차 진주성전투보다는 인구에 회자되는 정도가 높지 않다. 이 전투는 전략적 가치보다는 오히려 이 전투에서 전사한 충신열사들의 애국충절을 기리는 차원에서 언급되어 왔다. 따라서 이 전투에 대한 연구 성과는 대다수 제1차 진주성전투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정도이지만,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 있다.<sup>2)</sup>

본 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의 패인(敗因)을 전술적인 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기왕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의 패인으로 피아간의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와 당시의 자연환경적 영향, 그리고 조선 관군 수뇌부의 갈등 등을 꼽는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는 박성식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3)</sup> 아울러 이형석의 연구에서는 전투상황의 경과와 결과를 관련 문헌의 기록을 참조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sup>4)</sup> 그런데 이러한 연구 성과에서는 패전의 원인 중 전략전술에 관한 분석은 소략한 형태로 고찰하고 있다. 패전의 원인 중 전략전술적인 면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을 것임에도 패전이라는 이유로 인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 전투의 패인을 전술적 차원에서 정리해봄으로써 임진왜란의 전투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왕의 연구 성과들과 함께 당시의 관련 사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침략 당사국인 일본측의 자료들도 상당부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전투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전투의 배경

제2차 진주성전투의 배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침략군 일본군과 동정군(東征軍)인 명군, 그리고 수성군(守城軍)인 조선군의 3자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침략군인 일본군의 당시 동향을 살펴보자.

주 2) 제2차 진주성전투에 대한 연구성과는 주1)의 논저에서 대부분 언급하고 있다. 제2차 진주성전투를 중심으로 한 논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炯錫, 「제2차 진주성전투」 『壬辰戰亂史』 中卷,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朴性植, 「계사 진주성전투 소고」 『경북사학』 제4집, 경북대 사학과, 1982; 조원래, 「제2차 진주성전투와 김천일의 전공문제」 『軍史』 제5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2; 최관, 『일본과 임진왜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진주성전투 참가자의 포상과정과 의미」 『지역과 역사』 제17호, 부경역사연구소, 2005; 佐島顯子, 「임진왜란 중 2차 진주성전투와 강화협상」 『진주성전투의 재조명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진주문화원, 2005 등 다수가 있다.

3) 朴性植, 『임진란의 진주성전투』 태화출판사, 1991.

4) 李炯錫, 앞의 책.

1592년 10월 초에 있었던 제1차 진주성전투의 패보를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11월 10일, '내년 3월에 꼭 조선으로 건너가 반란자들을 학살하고 모든 지방을 진압하겠다.'<sup>5)</sup>고 밝혔다. 1592년 늦가을의 일본군의 실상은 조선군과의 전투와 군량부족으로 인해 도요토미가 건너와도 모든 지방을 제압할 수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토미의 눈에는 조선 지배를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로 진주성이 부각되었다.

이 즈음 도요토미에게 명 원정을 포기시킨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그 대신에 도요토미를 위해서 명과 일본간의 통호재개(通好再開)를 계획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명군과 일본군이 휴전을 하고 강화를 맺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평양에 주둔한 고니시는 명의 사절 심유경과 교섭하기 시작했다. 이 교섭은 1593년 1월 명장 이여송의 평양성 공격과 고니시의 서울 퇴각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도 서울을 최전선으로 한 일본군 장수들은 조선군이나 의병과 전투를 하기엔 너무 지친 나머지 전의를 잃어버렸고, 군량이나 군병수도 모자라 결국 서울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고니시 등 일본군은 이제 서울을 철수하고 조선남부로 후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도요토미에게 허락을 구하는 한편 명군에게는 강화협상 재개를 요구했다.<sup>6)</sup>

1593년 2월 27일, 도요토미는 일본군이 서울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허락했지만, 대신 진주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sup>7)</sup>

그리고 4월에 도요토미는 장수 가토오 키요마사(加藤清正)에게 1592년에 잡은 두 왕자(임해군, 순화군)를 조선 조정에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조선에서 반란이 심한 이유는 1592년 장수들이 명 원정을 하기 위해 진군하는 데만 급급해서 조선지방의 지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sup>8)</sup> 1592년 평양성 함락 후 명 원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요동까지 쳐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바로 도요토미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명 원정이 불가능하게 된 책임을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현지 장수들에게 전가했던 것이다. 1592년 8월 30일 이후 도요토미는 명 원정을 연기하고 겨울에는 현해탄 항해도 어렵기 때문에 다음 봄에는 꼭 스스로 조선에 건너가서 반란진압과 조선영토의 분할작업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1593년 봄 상황은 도요토미가 조선영토의 분할작업을 할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 누구 눈에도 역력했었다.

명원정도 도요토미의 조선 상륙도 불가능하게 된 도요토미의 위광은 상처를 입을 수

주 5) 1592년) 11월 10日加藤清正宛秀吉朱印狀, 「加藤文書」14 『熊本縣史料中世編』5.

“來春三月必被成御渡海 一揆撫切に被仰付 可屬平均候”

6) 佐島顯子, 「豊臣政權の情報傳達について-文祿二年の戦線後退をめぐって-」 『九州史學』96, 30쪽.

7) 文祿2年(1593年) 2月 27日付朝鮮國在陣衆中宛秀吉朱印狀寫, 「立花家文書」326 『福岡縣史近世史料編 柳川藩初期 上』.

8) 1593年) 4月 17日付加藤清正宛豊臣秀吉朱印狀, 「加藤文書」22 『熊本縣史料中世編』5.

밖에 없었다. 이제 도요토미 정권이 통솔력을 잃었다고 보면 일본장수들까지 반란을 기획할 수도 있었다. 도요토미 정권의 통솔력과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클로즈업 된 것이 바로 진주성공격이었다.<sup>9)</sup> 도요토미는 장수들에게 진주성공격을 지시하고는 “한명도 살아남지 않도록 다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sup>10)</sup>

도요토미 자신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은 학살당할 것이라는 본보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1593년 5월 1일, 도요토미는 장수들에게 진주성공격을 지시했는데, 같은 날 출진하지 않은 장수 3명을 본보기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이 처벌은 당시 조선으로 건너가지 않고 안일하게 일본에 남아있던 동쪽지방의 일본장수들을 전율시켰다.<sup>11)</sup> 동일본 장수들은 5월 20일에 진주성공격군으로 정식 편성되었다. 도요토미는 동일본 장수들을 진주성전투에 동원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정권 휘하에서 위치를 지키고 명령대로 조선으로 건너가지를 확인하려 했다. 그리고 진주에서 그들에게 가해자 입장에서라도 정권에 대한 저항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 2월에 하달된 도요토미의 진주성 공격명령은 3월이 되어서야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장수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무리 도요토미가 협박을 해봐도 조선에서 굽고 지쳐있었던 일본 장병들에게 진주성 공격은 불가능하였다.<sup>12)</sup> 군량이 떨어지고 지친 군사들에게 전의는 남아있지 않았고 다만 도요토미의 처벌이 무서워서 고향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서울 진영에 머물고 있었을 뿐이었다.<sup>13)</sup> 따라서 도요토미가 파견한 군감, 구로다 요시타카(黒田孝高)가 3월에 일본군의 서울진영을 방문했지만 진주 공격명령을 장병들에게 실행시킬 수가 없었다. 진주 공격을 이행하지 못한 채 귀국한 구로다는 도요토미에게서 그 책임을 추궁당하여 실각했다. 결국 진주공격은 서울에 주둔했던 일본군들이 철수하고 동일본 장병들도 조선에 건너가 일본군으로 합류한 6월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때까지 조선에 건너가지 않고 규슈(九州)의 나고야(名護屋)성에 주둔하기만 했던 동일본 장수들이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은 것은 바로 진주성 공격에 참여하기 위해서였고, 일련의 전투가 끝나자 동일본 장수들은 다시 일본으로 귀국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해 일본의 모든 장수들이 참여한 전투는 이 진주성전투 뿐이었다.

주 9) 佐島顯子, 「임진왜란 중 2차 진주성전투와 강화협상」 『진주성전투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자료집』 진주문화원(2005), 93쪽.

10) 1593년) 4월17日付加藤清正宛豊臣秀吉朱印狀, 「加藤文書」 22 『熊本縣史料中世編』 5.

11) 『朝鮮侵略』 157~159쪽.

12) 1593년) 3월 3日付長束正家, 木下吉隆, 山中長俊宛増田長盛等連署狀, 「濱文書」 東京大學史料編纂所, 影寫本

13) 萬曆21年 2月 30日移本部咨, 宋應昌 「經略復國要編」 『壬辰之役史料匯輯』.  
“倭兵屢戰傷甚多 但懼關白法度 不敢回巢”

이와 같이 일본이 진주성을 침공하게 된 것은 도요토미가 하락하고 있던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삼은 데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속내 하에 겉으로 드러난 침공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첫째, 명의 침공을 목적으로 했던 초기의 방침을 변경하여 조선남부의 할양에 주목적을 두었다는 점, 둘째는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군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점령할 필요가 있었고, 이 경우 진주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통하는 요충지였다는 점, 셋째는 일본군의 사기 고양을 위해서로 요약할 수 있다.<sup>14)</sup>

다음으로 당시 명나라 원정군의 동향을 살펴보자. 일본군이 한양에서 철퇴함에 따라 명군도 남하하여 6월에는 한양에 이여송(李如松), 정주에 송응창(宋應昌), 대구에 유정(劉綎)·오유충(吳惟忠), 상주에 왕필적(王必迪), 남원에 낙상지(駱尙志)·송대빈(宋大斌)의 부대가 주둔하였다. 모양새로는 일본군을 포위하고 있는 형세였지만, 전투는 벌이지 않고 대치할 뿐이었다. 이여송은 심유경(沈惟敬)·서일관(徐一貫)·사용재(謝用栽) 등을 일본에 파견하는 등 강화를 통해 일본군을 철수시키려고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요토미의 엄명에 의해 일본군이 진주공략에 총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알아챈 명은 그것을 저지하려고 시도하였다. 일본과의 교섭을 담당하고 있던 심유경을 고니시에게 보내서 진주성 공격을 중지하도록 설득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화의에 힘써 왔던 고니시의 대답은 차가웠다. 진주성공격에 의한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선군이 진주성에서 미리 후퇴하여 성을 비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전할 뿐이었다.

(고니시가 말하길) “관백이 지난번에 군사를 보내었다가 진주에서 좌절을 당하였으므로 여러 장수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그 성을 쳐서 무찌르라고 하는데, 나는 중지시키고자 하나 가토오가 듣지 않으니 일본군이 진주로 행하거든 성을 비우고 부딪치지 말아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였다.<sup>15)</sup>

고니시는 가토오의 반대라고 하는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진주성 공략의 불가피함을 말하면서, 이번의 싸움은 진주만으로 한정되며 다른 우려는 없음을 보장한다고 하여 명군의 의심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 고니시의 변명을 들은 명은 가토오를 상대로 해서 협박과 회유공작을 펼쳤다. 예컨대 당시 동정군의 총수인 총병 유정은 적의 진주성 공위(攻圍)의 풍문을 듣고 적장 가토오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서한을 보내었다.

주 14) 北島万次, 「제1차 진주성전투의 경위와 제2차 진주성전투의 요인에 대하여」 『제2회 충무공 김시민 장군 선양학술심포지엄자료집』 충무공 김시민 장군 선양사업회(2003), 30쪽.

15) 趙慶男, 『亂中雜錄』 권2.

……대저 조선 팔도는 이미 칠도를 파하여 사녀(士女)들의 받은 바 전화(戰禍)가 매우 커서 참혹하기 이를 데 없거늘 이제 다시 무슨 원수이기로서니 진주의 거미같이 조그만 성을 치려는 것인가. 하필이면 왜 조그마한 일에 구애되어 커다란 불신을 중국에 대하여 범하려는 것인가.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려서 칠병하여 동쪽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반드시 병력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외국에 대하여 신(信)을 잃지도 아니할 것이로다. 만일에 다시 미련을 갖고 병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함선에 백만 대병을 싣고 연안선을 막아 너희 귀로를 끊어서 너희 양도(糧道)를 자를 것이며 결전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도사에서 굶어죽게 함으로써 단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sup>16)</sup>

그리고 그는 또한 호언하되 “명나라에서 보낸 백만 병력은 모두 압록강 어귀에 머물러 있으며, 대장 이모는 만 명을 거느리면서 경성(한성)에 있고, 광충병모는 20만 명을 거느리고 요동에 있으며, 평양·개성 등에 분산한 병력이 10여만 명에 달한다.”<sup>17)</sup>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심유경도 고니시에게 진주공격을 그만둘 것을 역설하자, 고니시는, “금일의 거병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오. 다만 가토오가 이러한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니 백번 말하여도 소용이 없소이다. 오직 먼저 성을 비워놓고 싸우지 아니함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심유경이 이 말을 들은 후 한성에 올라오자 도원수 김명원(金命元)과 경상도 순찰사 한효순(韓孝純)은 심유경에게 간청하되 “진주의 일이 급하니 당신이 힘써서 구하여 주시오.”하였다. 심유경이 대답하기를 “적은 작년에 진주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것을 분한하게 여겨서이외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오직 제장으로 하여금 고니시의 말대로만 하게끔 하는 것이 가하리다.”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이 명의 동정군은 공포(空砲)만 놓고 매우 희미한 태도로써 이 대병을 외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당시 명·일간의 강화를 반대하면서 일본군을 추격해온 조선측의 관·의병은 창녕·의령 등 모두 영남일대에 포진하였다.<sup>19)</sup> 즉 도원수 김명원과 순변사 이빈(李賓)은 제도의 장사를 거느리고 적을 추격한 끝에 김명원은 선산에, 이빈은 의령에 포진하였고, 전라병사 선거이(宣居怡)·충청병사 황진(黃進)·전라방어사 이복남(李福男) 등도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운봉을 넘어와 창녕·의령 등지에 포진하였다.

주 16) 安邦俊, 『隱峯全書』 권7. 「晉州敘事」.

17) 趙慶男, 『亂中雜錄』 권2 ; 安邦俊, 『隱峯全書』 記事 「晉州敘事」.

18) 安邦俊, 『隱峯全書』 記事 「晉州敘事」.

19)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16. 宣祖朝故事本末 晉州城陷明兵撤還.



당시의 조선장령들의 동정을 살펴본다면 김명원은 선산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그 나머지의 장령들은 모두 의령과 선산의 양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sup>20)</sup>

명군 역시 그 대부분이 영·호남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명군이 진주성을 중심으로 영·호남 일대에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은 적세가 막강하다는 소문을 듣고 적이 직접 밀어닥치자 전의를 잃고 흩어지고 말았으며, 명군의 경우도 일본군 추격에 방관적이었다. 진주성이 위급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도 명장들은 피아간의 군세가 서로 대치할 수 없다고 하여 모두 진주성의 응원을 거부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진주성을 공위하자 유정은 대구에서 함천으로, 오유충은 선산에서 초계로, 조승훈(祖承訓)과 이녕(李寧)은 거창에서 함양으로 전진하였으나 강대한 적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구원하지 못했다.<sup>21)</sup> 대신 명군측은 고니시의 말에 따라 진주성을 비워놓고 일단 피해버린다면 적 또한 그대로 물러갈 것이라는, 전혀 무책임한 일종의 공성책(空城策)을 제의하고 있었다.<sup>22)</sup> 이렇게 볼 때 당시 조·명군이 진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영호남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제2차 진주성전투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제2차 진주성전투의 주역 김천일(金千鎰)이 남하하는 일본군을 추격하면서 진주는 곡창인 호남으로 통하는 지리적 요충지란 점을 강조하면서 사수를 역설하였지만, 당시 조선측 관·의병장들은 이 말에 불응하고 흩어져 버렸다.<sup>23)</sup> 대표적으로 순변사 이빈, 의병장 곽재우(郭再祐), 좌의병장 임계영(任啓英)은 각각 단성현을 거쳐 서쪽 소읍으로, 또는 사천현에서 호남으로 돌아가 버렸다.<sup>24)</sup>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거제현령 김준민(金俊民)과 김해부사 이종인(李宗仁)은 먼저 입성해 있었고,<sup>25)</sup> 뒤이어 충청병사 황진·경상우병사 최경회(崔慶會)·복수의병장 고종후(高從厚)·사천현감 장윤(張潤)·의병장 변사정(邊士貞)이 파견한 그의 부장 이잠(李潛)·의병장 민여운(閔汝雲) 등이 김천일을 따라 입성하였을 뿐이다. 이에 김천일은 성중의 창곡을 점검한 뒤 분군·분수하여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sup>26)</sup> 당시 수성군의 부서편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주 20) 『亂中雜錄』 권2, 『懲毖錄』 권2 및 李炯錫, 『壬辰戰亂史』 中, 630쪽 참조.

21) 安邦俊, 『隱峯全書』 권7 「晉州敘事」.

22)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戊辰條.

23) 安邦俊, 『隱峯全書』 권7 「晉州敘事」.

24) 위의 책.

25) 『宣祖修正實錄』 권27, 26년 6월조.

26) 위의 책, 같은 조.

〈표 1〉 제2차 진주성전투의 군사조직<sup>27)</sup>

관 직 명	전투편제	이 름	관 직 명	전투편제	이 름
창의사	우도절제사	김천일	복수의병장	복수대장	고종후
경상병사	좌도절제사	최경희	복수의병부장	전투부대장	오 유
충청병사	도순성장	황 진	비의병장	부 장	민여운
진주목사	전투대장	서예원	의병장	전투부대장	이계련
사천현감	좌의병부장	장 윤	표의병장	부 장	강희보
거제현령	부 장	김준민	적개의병부장	전투부대장	이 잠
김해부사	부 장	이종인	분의병장	전투대장	강희열
감포현령	전투대장	송 제	우의병부장	부 장	고득뢰
해미현감	전투부대장	정명세	해남의병장	전투대장	임희진
진주판관		성수경	영광의병장	전투대장	심우신
공조좌랑	부 장	양산숙			

제2차 진주성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와 같이 관군과 의병 또는 의병상호간의 알력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적군이 서울에서 철수하자 도원수 김명원과 순변사 이빈은 제도의 장사를 이끌고 적을 추격하여 남하한 다음 김명원은 선산에 진을 치고 있다가 6월 7일에 감사 권율과 도원수직을 교대하였으며, 이빈은 의령현에 진을 치고 있었다. 도원수 권율은 신병을 거느리고 운봉현을 거쳐서 모두 창녕현과 의령현 등 여러 읍에 주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이미 권율·의병장 박재우·경기방어사 고언백 등 관군과 의병간에 전술상의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조선관군의 최고지휘관은 교대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각 책임 장수들끼리 상호 불협화음이 만연하고 있는 때에 일본군의 진주성 공략이 시작된 것이다.

주 27) 『宣祖實錄』·『亂中雜錄』·『邑誌』 등에서 추출하여 작성한 것임.

### Ⅲ. 전투경과와 결과

#### 1. 전투 직전의 상황

이미 진주성 공격을 위해 증파된 모리 히데모토(毛利秀元)·다테 마사무네(伊達政宗)·아사노 나가마사(淺野長政) 등의 대군과 한양에서 철수하여 경상도에 남하·분진하고 있던 일본군은 김해·창원 부근에 집결하여 진주공략에 나섰다.

그리하여 우키다 히데이에(宇喜多秀家)를 총대장으로 한 9만 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한 일본군은 6월 14일에 작전을 개시하여 6월 15일에는 김해와 창녕에서 수륙으로 병진하여 함안·반성·의령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이때 도원수 권율과 순변사 이빈 및 병사 선거이 등이 함안에 있다가 일시에 궤주(潰走)하고 말았다.

이후 일본군이 함안군을 분탕(焚蕩)하자 이빈이 급히 의령에 도착하여 제장들을 모아 이르기를 “흉적의 계교가 반드시 진주를 함락함에 있으니 이미 외로운 군사로서 지키기가 결단코 어려우니 본도의 의병을 추가로 보내어 성세를 돋우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빈의 본도 지원요청에 대하여 광재우는 “적병이 매우 강성하여 천하에서 능히 당할 수 없는 세에 있으니 3리 고성(孤城)을 어찌 능히 지킬 수 있으리오. 하물며 제군이 모두 다 성중에 들어간다면 내외의 응원지세를 잃을 것이니 나는 마땅히 밖에 있어서 응원할 것이며 성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경상우감사 김능(金玊)이 노하여 말하기를 “장군이 대장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니 군율을 어떻게 하리오.”하자, 광재우가 대답하되 “내 일신의 사생은 원래 아낄 바 아니오나 백전군졸이야 어찌 차마 버릴 수 있으리까.”하니 이빈이 드디어 정암진을 지키게 하였다.<sup>28)</sup>

이 당시 진주성에서는 창의사 김천일이 목사 서예원(徐禮元)을 불러서 성중 창고 안에 들어 있는 군량을 계산케 하니 수십만 석에 달하는지라 이에 여러 장수들이 크게 기뻐하여 이르기를 “성은 높고 험하며 군량이 족하고 기계가 많으니 이는 참으로 죽어서 보람 있는 곳이다.”하고 곧 군사를 부서(部署)하여 김천일과 최경회가 도절제사가 되고 황진이 순성장이 되는 등 제도의 관·의병장이 모두 군사를 배치한 다음 계엄하면서 대변(待變)하였다.

그런데 이때 진주성 내에 목사 서예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병장 김천일이 주장(主將)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당시의 진주목사 서예원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김해부

주 28) 李肯翬, 『燃藜室記述』 권16. 宣祖朝故事本末 晉州城陷明兵撤還.

사로 있을 때에 일본군이 밀려오자 성을 버리고 달아나 패군한 자이며,<sup>29)</sup> 진주성 2차 전투가 있기 직전에는 관관 성수경과 함께 명군의 지대차사원(支待差使員)으로 상주에 나가 있다가 일본군이 진주로 향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창황히 돌아온 지가 겨우 며칠 전이었다.<sup>30)</sup> 뿐만 아니라 김해부사 이종인이 그와 더불어 수성문제를 상의할 때에 그는 이미 성을 버릴 생각이었다. 평소에 겁이 많았던 그는 이종인의 위협 때문에 마지못해 성안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었으니, 대전을 목전에 둔 성주로서의 면모와 역량은 거의 찾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당시 피아간의 교전병력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일본군 병력<sup>31)</sup>

구 분	일본군 장수	책임구역	병원수(명)
제 1 대	加藤清正	성북면(城北面)	25,600
제 2 대	小西行長	성서면(城西面)	26,000
제 3 대	宇喜多秀家	성동면(城東面)	18,800
제 4 대	毛利秀元	예비	22,300
제 5 대	小早川隆景	(일부城北)	
제 6 대	吉川廣家	남강우안(右岸)	약 1,000

(총병력수 약 93,000명)

〈표 3〉 조선군 장수 및 휘하 병력(본주군 제외)<sup>32)</sup>

참전장수	병원수(명)	참전장수	병원수(명)
창의사 김천일	300	옹의병장 이계련	100여
충청병사 황 진	700	탈의병장 강희열	미상
경상우병사 최경희	500	우의병부장 고득빈	미상
복수의병장 고종후	400	표의병부장 강희보	미상
사천현감 장 윤	300	복수의병부장 오유	미상
적개의병부장 이 잠	300	거제현령 김준민	미상
의병장 민여운	200	김해부사 이종인	미상

주 29) 李魯, 『龍蛇日記』.

30)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16. 宣祖朝故事本末 晉州城陷明兵撤還.

“晉州牧使徐禮元 判官成守環 以明將支供差員在尙州 聞賊向本州 蒼黃而還纔 數生矣”

31) 李炯錫, 『壬辰戰亂史』 中卷(1974), 723쪽

32) 『宣祖修正實錄』 권27, 26년 6월조.

앞의 <표 2>와 <표 3>을 통해서 일본군과 조선 수성군의 병력규모에 대해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그 대체적인 추세는 짐작할 수 있다. 위 <표 3>에서 보면 당시 김천일 등을 따라 입성한 총 병력은 약 3,000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진주성에 포진하고 있던 본주군의 병력에 대해서는 자료부재로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에 의하면 ‘죽은 자가 크게 보아 6~7만’이라고 하고 있다.<sup>33)</sup> 그러나 이것은 당시 성안에 있었던 일반 백성들까지 포함된 숫자이다.<sup>34)</sup> 실제로 이 전투에서 수성군인 사망자수는 당시 경상우도 감사 김늑의 보고에 의하면 약 3천명으로 나타나는데,<sup>35)</sup> 이를 통해 볼 때 당시의 전체병력은 2~3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sup>36)</sup>

이렇게 본다면 당시 2~3만의 병력으로서 우세한 화력을 앞세운 약 10만 병력의 일본군을 상대한 제2차 진주성전투의 결과는 미리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이와 같은 전력상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2차 진주성전투에 조명군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조정에서는 오직 명군만을 믿고 있어 명군의 진주성 부원(赴援)을 촉구하는 문제를 놓고 혹은 선조의 친서로써 명장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방법이 최상책이라 주장하고, 혹은 국왕의 체모로서 불가한 일이라고 반박하는 등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설전이나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었다.<sup>37)</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2차 진주성전투는 시작되었다.

## 2. 전투경과

1593년 6월 19일 일본군이 작전을 개시하면서부터 동월 29일에 이르기까지 11일간 주야를 가리지 않고 피비린내 나는 대공방전이 일본군과 조선 관·의병 사이에 전개되었다. 당시 이 전투를 앞둔 진주성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이보다 앞서 성안에서는 적이 오려한다는 것을 듣고서 성남은 축석과 남강이 매우 위험하므로 적이 감히 범하지 못할 것이니 서북에 호를 파야 한다고 여겨 해자를 파서 그 곳에 물을 담아두었으므로 적이 공격할 수 있는 곳은 동편뿐이었다. 그런데 이때에 적이 그 해자를 파내어 물을 빼고서 다 마른 뒤에 흙을 운반해다가 해자를 메워 큰 길을 만들었다.<sup>38)</sup>

주 33) 위의 책, 같은 조.

34) 『湖南節義史』 壬辰篇, ‘晉州敘事’에서는 김천일과 입성한 병력과 諸守令兵 및 본주병 거기에다 민간인, 피란사녀까지 모두 합하여 7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35)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甲戌條.

36) 朴性植, 『壬辰倭亂의 研究 - 임진계사년 진주성전투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5), 170쪽 참조.

37)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戊辰條.

38)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16일 戊辰條.



위 기록과 같이 진주성은 천험의 요새지로 불릴 만큼 견고한 성이었다. 이 같은 당시의 진주성의 지리적 여건을 염두에 두고 전투전개에 따른 서술의 편의상 전전투 11일 기간 중 19~21일까지의 3일간과 22~29일까지의 8일간을 양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전투초기(6월 19~21일)의 전황

먼저 서전기에 해당하는 3일간은 일본군이 본격적인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기간이라 성중은 적정을 탐색하고 있었고, 일본군은 진주성을 중심으로 포진하여 공격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일본군은 작전개시일인 6월 19일에 의령현에서 진주성으로 진격해 왔는데, 이것이 제2차 진주성전투 시발의 첫째 날이었다.

조선군은 척후장 이하 정병을 뽑아서 단성현과 삼가현 방면에 나가 적정을 수색케 하는 한편 복병장 이하 용졸(勇卒)을 보내어 곤양현과 사천현 방면에서 적이 우회하여 오는 길을 막도록 하였다.<sup>39)</sup> 이 날에는 우선 적정을 탐색하고 적의 진로를 차단하는 전략에 의해 응전태세를 가다듬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전라병사 선거이와 경기조방장 홍계남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중에서 말하기를 “적과 우리의 병력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성에서 피하여 나갔다가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을 것 같소.”<sup>40)</sup>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명·일간에 제기되었던 ‘공성론(空城論)’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성론 주장에 창의사 김천일은 크게 노하여 책망하면서 절대로 성을 비우고 이탈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거부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순변사 이빈과 함께 함양 쪽으로 가서 운봉현에 진을 치게 되었다. 이들 공성론 주장을 지지한 자는 비록 적었지만, 당시 성내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성을 지키고자 하는 다수의 관·의병에게 끼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 즉 당시 수성군들의 전투의욕 상실이란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날 상주에 주둔하고 있던 명 부총병 왕필적과 상주목사 정기룡(鄭起龍)이 진주성 내에 찾아와 성지의 방어시설을 두루 살핀 뒤 천혜의 요새임을 격찬하고 총병 유정의 선견(先遣) 원병부대가 대구부에서 출동하여 이미 함양에 도착하였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실제 부총병 왕필적의 함양으로의 원정군 파견약속은 하나의 허언에 불과하였다. 아마 일본군에 대항하는 아군이 중과부적이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유정은 응원군 파견을 포기한 듯하다. 왕필적과 정기룡 등은 성 내에서 김천일과 함께 작전계획을

주 39)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16. 宣祖朝故事本末.

40) 『宣祖修正實錄』 권27, 26년 6월조.

수립하고 장병들은 임전태세를 완비하였다.

6월 20일에 복수의병장 오유와 적개의병장 이잠 등 두 장수는 진주 무사 정국상(鄭國祥)과 같이 적정을 살피기 위하여 출성하였는데, 적 선봉 2백여 기는 이미 진주 동북쪽 산상에 출몰하였고, 또 일부는 직접 마현봉(馬峴峯) 위에서 진용을 갖추고 있었다. 이를 본 무인 정국상은 귀성하여 이르기를 “두 장수는 필시 적을 보고 도망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 두 장수는 적 수명의 수급을 허리와 말안장에 매어 달고 귀성하여 성중 장병들의 사기를 충천케 하였다. 이 광경을 본 총병 왕필적은 감탄하여 성중의 상황을 알려 원병을 파견케 하겠다고 약속하고 상주목사 정기룡과 같이 돌아갔다.

사실 왕필적은 처음 입성했을 때는 적의 군세에 위축되어 원병파견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복수의병장 오유와 적개의병장 이잠 등이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적의 수급 몇을 빼어 개선, 귀성하게 된 것을 직접 보고 크게 감탄하고 나아가 원병을 파견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나 왕필적의 이 원병약속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실현되지 않았다.

김천일은 왕필적이 약속한 원병이 도착하지 않으므로 그의 막하에 있는 공조좌랑 양산숙과 홍함(洪涵) 등에게 복수의병장 고종후가 작성한 원병요청서를 휴대하도록 하여 총병 유정에게 밀파하였다. 그러나 총병 유정은 병력을 출동시킬 의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용기도 없었다.<sup>41)</sup> 이것은 대적함에 있어서 중과부적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유정은 아예 이 전투에는 출정시키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유정의 태도를 본 홍함은 양산숙을 버리고 홀로 도망쳤고, 양산숙은 홍함의 비굴함을 탄식하면서 단기로 적진을 헤치면서 입성하였다. 6월 21일 일본군은 진시(오전 8시경)에 동북산상에서 수십 기가 출몰하였다가 사시(오전 10시경)에는 수백여기가 북산에 설진하고 위세를 부렸다. 당시 일본군은 작전을 시작하면서 외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진주성을 중심으로 인근 제현에 군대를 분산 주둔시켰는데 그 병력은 사방 수백 리에 달하였다고 한다.<sup>42)</sup>

#### 나. 전투 중·후반기(6월 22~29일)의 전황

다음으로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은 일본군이 여러 가지 기묘한 전법을 구사하여 치열한 공격을 가해 혈전의 공방전이 전개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날인 6월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야음을 이용하여 오경(새벽 4시경)에 이르도록 적은 대군을 투입하여 3차에 걸친 본격적인 대공격을 가해왔다. 이날 일본군은 진시에 500여 기가 북산에 올라 열진약병(列陣躍兵)하다가 사시에 대병력이 속속 도착하자

주 41) 위의 책, 같은 조.

42) 위의 책, 같은 조.

이것을 둘로 나누어 일진은 문경원의 산허리에, 또 일진은 향교 앞길에 나누어 진을 침으로써 일차 교전이 시작되었다. 이 교전에서는 성중의 모든 화살을 집중하여 적 30여 명을 사살하게 되자 적은 견디지 못하고 군사를 거두어 후퇴하고 말았다. 제2차는 초저녁 무렵에 와서 대전하다가 이경(밤 10시경) 무렵에 물러갔고 제3차는 삼경(밤 12시경) 무렵에 왔다가 오경 무렵에 퇴각하고 말았다. 이날 전투에서 일본군은 우세한 화력과 장·광계(長·廣梯)<sup>43)</sup> 등을 이용하였으나 오히려 아군으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sup>44)</sup> 이날 전과는 당시 장병들의 치밀한 작전과 특히 충청병사 황진의 지략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앞에서 언급한 진주성의 지리적 이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날 전투 후 적은 성 서북쪽의 호(濠)를 끊어 물을 뽑고 흙을 돋우어 평지로 만들면서 공격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성 밑을 굴착하여 장대 대석을 뽑아내 성벽을 붕괴시킴으로써 성을 함락코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날의 전투상황에 대해 표의병부장 강희보는 적의 병세가 너무 강력하니 관군의 구원요청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는데, 김천일이 여기에 동의하면서 그의 막하에 있던 임우화(林遇華)를 구원특사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얼마 안가 적의 포로가 되고 이후 항상 적은 공격 때마다 임우화를 결박하여 앞줄에 세워 놓음으로써 수성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6월 23일에도 주야간 3전 3퇴, 4전 4퇴하여 그 과정에서 죽은 자가 부지기수라 하여 역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날 경상우병사 최경희와 창의사 김천일은 성루에 올라가서 조망하다가 “구원병이 많이 온다.”라고 하였다. 이에 성중 장병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큰 북을 치며 서로 다투어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 앞에 전개된 정황은 원군 백리에 모두 적병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김천일이 한탄하기를 “명군이 만약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대사가 이룩된다면 장차 명나라 국경을 쳐들어 올 야인들을 쳐서 그의 살이라도 같이 먹을 것이거늘...”<sup>45)</sup> 하였다. 이것은 당시 우세한 병력과 화력의 일본군에 맞서고 있는 수성군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때에 고성 의병장 최강(崔綱)·이달(李達)은 진주를 구원하려고 했으나 적세가 지난 해와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손을 쓰지 못하고 도로 고성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함안의 피난민으로 최강을 따라 왔던 자 3백여 명이 적에게 포위를 당하여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병장 최강이 말을 달려 적중에 뛰어들어 적병과 격전하여 사민을 무사히 구출하였다.<sup>46)</sup>

주 43) 攻城에 사용하는 기구로 長梯(높은 사다다리)와 廣梯(넓은 사다다리)를 의미함.

44) 『燃藜室記述』에서는 ‘射殺不知其數’라고 기록하고 있다.

45)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16. 宣祖朝故事本末.

46) 위의 책.

또한 이때 명 제독 이여송은 참장 낙상지와 유격장 송대빈 등을 시켜 호남을 출발, 진주를 구원하게 하는 한편 영남에 머물고 있는 총병 유정·절장 오유충을 시켜 힘을 합하여 구원하도록 하였으나 왜적의 세력을 대적할 수 없다 하여 모두 명령을 듣지 않았다.<sup>47)</sup>

6월 24일에는 적이 병력 5~6천 명을 추가하여 마현(馬峴)에 진을 치고 또 5~6백 명을 보태어 동변에 진을 쳤다. 이날도 격전으로 성내·외에 피아간의 전사자 수는 부지기수였다.<sup>48)</sup>

이날의 전투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본군이 ‘귀갑차(龜甲車)’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 차는 튼튼한 나무 궤를 사륜거 위에 올려놓고 군사 몇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손으로 사륜거를 앞으로 추진시키고 강삭(強索)을 뒤에서 당겨 후퇴시키는 장치였는데, 가토오(加藤清正)와 구로다(黑田長政)가 서로 의논하여 만든 것이었다. 이 차는 궤짝 정상부가 귀갑같이 구부러져 있었으므로 귀갑차라고 불리어졌던 것이었다.<sup>49)</sup>

6월 25일의 상황을 보면, 일본군은 동문 밖에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서 성중을 내려다보면서 총포를 비 오듯이 쏘았다. 이러한 일본군의 새로운 작전·전략에 대하여 수성군도 충청병사 황진이 직접 지휘하여 성내에서도 대좌지점에 역시 동일한 토산을 만들어 응전하기로 하고, 황진 자신도 의립(衣笠)을 벗어던지고 몸소 돌을 지니 성중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여 힘을 다해 하룻밤 사이에 그 공사를 끝내게 되었다. 이렇게 신축된 고부(高阜)에서 현자포를 발사하여 적굴(賊窟, 망루)을 깨뜨렸는데, 적은 다시 이를 개조하였다.<sup>50)</sup>

이날 일본군이 주간에 3진 3퇴, 야간에 4전 4퇴하는 사이에 김천일은 명군과 관군 측에 구원특사를 보냈으나 한 사람의 원군도 이르지 않았다.<sup>51)</sup>

6월 26일, 일본군은 목궤(木櫃)를 만들어 생피로 덮어 싸고 이를 각자가 머리에 이고 탄환과 화살을 막으면서 와서 성을 헐려고 하였다. 이에 성안에서는 큰 돌을 굴러 내리면서 화살을 비 오듯이 쏘니 일본군은 또다시 물러갔다. 일본군은 또 동문 밖에다가 큰 기둥 두 개를 세우고 그 위에 판옥을 설치하여 성안을 향하여 화전을 쏘아서 방화하자 성내의 초옥들이 일시에 다 타버리게 되었는데, 이에 맞서 황진도 건목설판(建木設板)하여 총포로서 적을 저지하였다.<sup>52)</sup>

한편 진주목사 서예원은 이 날도 겁에 질려 어찌할 줄 모르므로 김천일은 서예원 대

주 47) 위의 책.

48)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16일 戊辰條.

49) 李炯錫, 『壬辰戰亂史』 中卷, 733쪽 참조.

50)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16. 宣祖朝故事本末. “破賊窟 賊徒又改造”.

51) 『健齋集』 年譜 참조.

52) 『宣祖修正實錄』 권27, 26년 6월조.

신 사천현감 장운을 가목사로 삼아 사태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장병들은 연일 계속되는 격전과 숙식의 불편으로 피로가 가중되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연일 폭우까지 쏟아져 주무기인 궁시(弓矢)가 모두 풀어짐으로써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전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불리하고 위급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었다. 당시 일본군들은 전단을 통해 항복을 종용하기도 하였다.<sup>53)</sup> 또한 이때 성의 한 모퉁이가 무너져 일본군들이 이틈을 타서 올라왔는데, 김준민이 이를 막으려 하다가 전사하였다.

6월 27일에 일본군이 동서 양쪽 성문 밖에 다섯 개의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 대나무를 연결하여 방책을 만들어 성중을 굽어보면서 끊임없이 총탄을 발사하여 성중에 전사자가 300여 명이나 되었다. 또한 일본군은 대궐로 사륜거를 만들어 그 위에 적병 수십 명을 싣고 각자가 철갑을 쓰고 궤를 밀어서 성벽 아래까지 침입하여 철추로써 성벽에 돌입할 구멍을 뚫었다. 일본군은 외부에서의 공격만으로는 성을 함락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략상 성을 지탱하는 기층(基層)을 굴착(掘鑿)하여 성벽을 붕괴시켜 함락코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 성벽이 붕괴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날 전투에서 김해부사 이종인이 일본군 병사 5명을 죽이자 일본군은 모두 달아나 버렸다. 또한 성중에서 쇠를 묶어서 기름을 묻힌 뒤에 불을 붙여 일시에 투하하여 귀갑차는 모두 타버리고 궤중의 일본군 병사들은 모두 섬멸되었다. 초저녁에 일본군이 또 신북문(新北門)을 침범하였으나, 이종인이 힘써 싸워 물리쳤다.<sup>54)</sup>

일본군 측에서는 성중에 투서하여 항복을 종용하는 심리전을 펴기도 하였고, 수성군 중 표의병부장 강희보는 역전 끝에 전사하였다.<sup>55)</sup>

6월 28일, 진주목사 서예원의 불찰로 인하여 그의 담당지역이 야간을 틈타 공격한 일본군에 의해 거의 뚫린 상태가 되었다. 여명에 그 곳을 통해 일본군이 집중공격을 해왔으나, 황진·이종인을 선두로 한 성중인이 선전하여 격퇴시켰다. 그러나 이날 성 밑에 잠복한 일본군의 저격에 의해 황진이 전사하여 성중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수성군이 동요하기 시작했다.<sup>56)</sup>

6월 29일에 진주목사 서예원으로 하여금 충청병사 황진을 대신하여 순성장으로 삼았으나 서예원이 그 직을 감당할 수 없어 사천현감 장운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으나 그 또한 곧 전사하였다. 이와 같이 성중의 지휘체계가 무너지면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

주 53) 위의 책, 같은 조.

54)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16일 戊辰條.

55) 『矗石旌忠壇碑銘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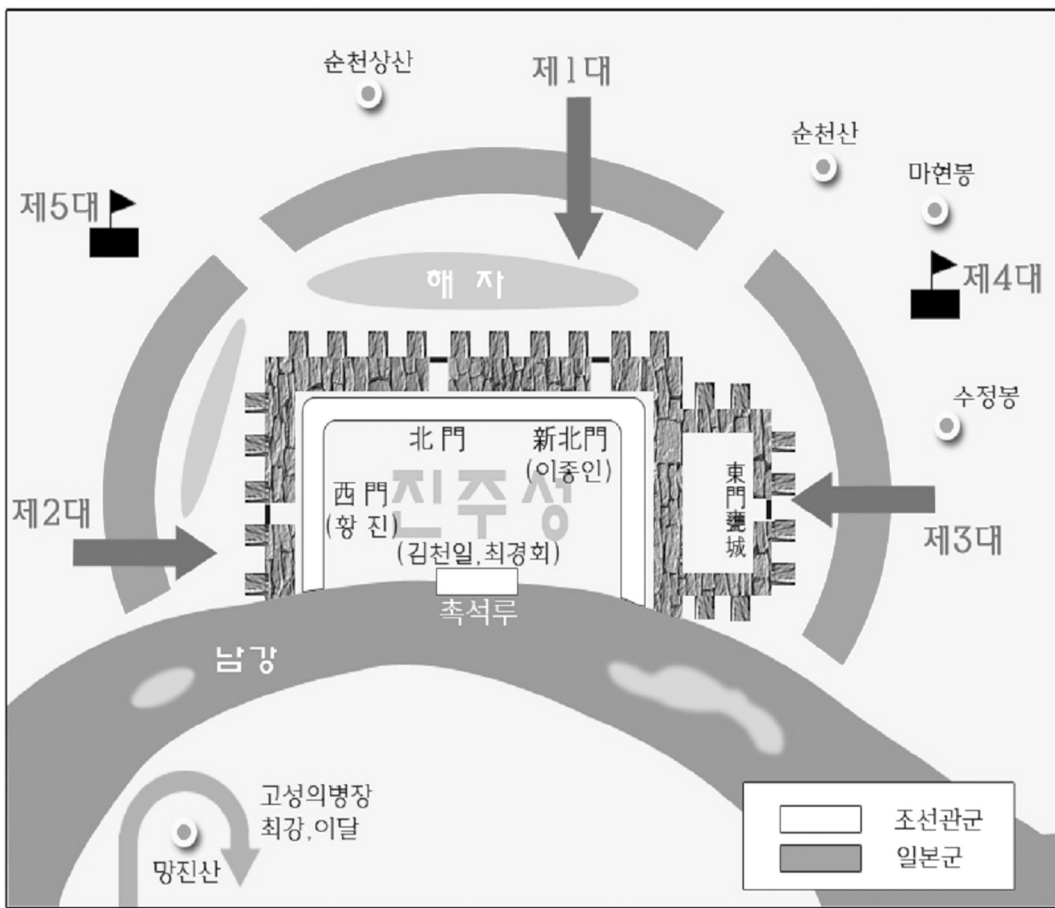
“賊又築五阜 於帥東西 登其上於丸 姜希輔死之 進乃放火箭 焚柵”

56)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16일 戊辰條.



행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미시(낮 2시경)에 성 동문이 폭우로 인해 무너지자 적병이 개미떼처럼 몰려오므로 김해부사 이종인은 친병과 더불어 창을 사용한 육박전으로 이를 물리쳤다. 다시 서북문을 향하여 적이 돌진하자 창의사 김천일도 중과부적으로 궤산(潰散)하여 모두 축석루 쪽으로 후퇴하였으며, 일본군은 드디어 성에 진입하였다. 이에 진주목사 서예원은 달아났으며 일반 군사들도 적세에 밀려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진주성은 마침내 함락되었다.(〈그림 1〉 참고)



〈그림 1〉 제2차 진주성 전투 상황도

이날 전투에서 이종인·이잠·강희열·오유 등이 전사하였고, 성이 함락되자 김천일·고종후·양산숙 등은 남강에 투신 자결하였다.

진주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본성을 무너뜨려 평지를 만들었다. 이때에 죽은 자가 6만

여 명이나 되었다. 후일 김늑이 사근찰방(沙斤察訪) 이정(李滸)으로 하여금 일대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성중의 시체는 천여구요, 축석루에서부터 남강 연안에 이르기까지는 쌓인 시체가 서로 겹쳐져 있었고, 청천강으로부터 옥봉에 이르는 5리 사이에는 시체가 강의 아래 위에 가득했다<sup>57)</sup>고 한다.

#### IV. 패인의 전술적 분석

위에서 살펴본 전투경과를 토대로 진주성의 함락 원인을 전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본군의 공성작전을 볼 때 몇 가지 두드러진 전술구사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① 참호를 흙으로 메운 후 그곳을 공격지점으로 삼았다는 것, ② 심리전술로 수성군의 사기를 꺾었다는 점, ③ 분산 주둔하여 진주성 주위를 겹겹이 포위하고 또한 신병력을 계속 투입하여 교대로 공격하였다는 점, ④ ‘귀갑차’라는 특수장비를 만들어 동원하였다는 점, ⑤ 토산과 판옥 등을 구축하였다는 것, ⑥ 성책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벽 굴착작업을 추진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sup>58)</sup>

이와 같은 막강한 적의 공세에 대처한 수성군은 오직 사수결의로써 처절한 전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투과정에서 언급하였지만, 외원(外援)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1차 진주성전투와 같은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처음부터 아니었다. 즉 1차 진주성전투의 경우 제2차 전투와 마찬가지로 적의 대규모 포위공격에 취약한 점은 사실이었지만, 이를 다양한 전략전술로 극복하여 승첩을 이끌었다. 예컨대 수성장 김시민은 진주성 단독작전의 한계를 인식해서 인접 거점과의 상호 연계된 기각지세인 협공작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아울러 김시민은 병력과 무기의 열세를 그의 탁월한 지모와 용병술을 통해 극복했던 것이다. 그리고 준비책으로 화약과 신병기를 제조해서 훈련을 시켰고, 수성군의 절대적 부족을 부녀자까지도 남장시켜 보충시켰다. 특히 일본군의 다양한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해서 대응토록 하였고, 약기나 호각 및 횃불 등을 이용한 위장술과 심리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도 했다.<sup>59)</sup>

주 57) 위의 책, 같은 조.

58) 朴性植, 『壬辰倭亂의 研究-임진계사년 진주성전투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5), 182쪽.

59) 강성문, 「진주대첩에서의 김시민의 전략과 전술」 『軍史』 제51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4), 214쪽.

한편 유성룡은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 성이 함락된 원인에 대하여 적의 병세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수성군의 대응책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진주의 함락이 비록 강대한 적병 때문이기는 하지만 우리쪽 대응의 잘못도 개탄스럽습니다. 신이 서울에 있을 적에 목사 서예원이 명군지대차사원으로 함창에 와서 있기에 즉시 이문하여 '진주가 곧 왜적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성을 지키는 관원이 어찌 멀리 나와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고 속히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체하고 돌아가지 않다가 적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들은 뒤에 겨우 입성하여 방비 등의 일을 미리 조처하지 못한 것이 잘못의 첫째이고, 또 제장들이 객병을 거느리고 한 성안에 많이 모였는데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각각 제 주장만 고집하여 분란을 면치 못했던 것이 잘못의 둘째이며, 제장들이 당초에 사세를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히 함안으로 나아가서 진을 치고 있다가 적병이 크게 이르자 낭패하고 도망해 돌아와서 적으로 하여금 승세를 타게 한 것이 잘못의 셋째이며, 정진(鼎津)에 군사를 진열시키고 굳게 지켰다면 적이 사면에서 함께 진격하여 오지는 못했을 것인데 모두 버리고 떠났으므로 적병이 수륙으로 함께 진격하였고 진주가 함락되기 전에 의령·삼가·단성·진해·고성·사천 등지에 적이 구름처럼 모여 원병의 길이 막힌 것이 잘못의 넷째입니다...<sup>60)</sup>

이것을 요약하면 ① 사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② 성중의 통제력이 상실되었다는 점, ③ 사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④ 정진을 고수하지 못함으로써 적병이 수륙 양면으로 진주를 공격해 왔고, 따라서 인접지역이 모두 적지가 됨으로써 원병로가 차단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진주성전투의 패인이 쌍방간의 현격한 전력격차가 주 요인이지만, 위와 같이 유성룡이 지적한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휘체계의 문제점이다. 1차 전투 때는 김시민 한 사람의 단일 지휘체계 하에 관민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함으로써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전투 때에는 김천일·최경회·황진 등 3명의 지휘관이 동급으로 지휘하게 됨으로써 지휘축선상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진주목사 서예원은 1차 전투의 김시민과 같은 면모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와 상반되는 모습만 부각되었다. 서예원은 작전수행도 제대로 못했을 뿐 아니라 황진이 전사 후 맡은 순성장의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그 임무를 장윤에게 넘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진주 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각각 거느린 군사들이 여러 지역에서 옴으로써 상호협조에 문제가 있을

주 60)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21일 癸酉條.

수 있었다. 예컨대 대다수의 병원(兵員)들이 김천일·고종후 등 휘하의 전라도 의병이었고, 나머지는 경성(京城) 시정(市井)의 소모병(召募兵)이었다는 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sup>61)</sup> 아울러 작전수행과정 중 지휘권 장악에서 의병과 관군과의 계통 난립이 또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또한 이 전투에 참가한 대부분의 군사가 타 지역 출신이었으므로 이들을 통합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약간의 차질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당연히 추측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부와의 호응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6월 23일에 고성의병장 최강과 이달은 진주를 구원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도중 피난민 3백여 명이 적에게 포위를 당하자 적진에 뛰어들어 적을 물리치고 이들을 무사히 구원한 사실이 있다.<sup>62)</sup>

이러한 고성 의병장 최강의 구원시도가 제2차 진주성 전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그 발상은 이 전투 이전에 광재우에 의해 제시된 게릴라식 유격전 및 측면공격을 통한 협공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당시 우세한 화력과 병력을 앞세운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상책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이러한 적 후방에서의 측면공격이 계속되어 나갔다면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부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이었던 것이다.

네 번째는 황진과 같은 뛰어난 병법을 구사한 자가 황진 외에는 없었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지휘부 인물 중 대다수는 문관출신으로서 병법에 뛰어나지 못하였거나 무관 중에도 무용은 뛰어나도 병법을 잘 구사하는 인물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수성전술구사에 황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컸음을 의미하고 황진 유고시 대응책이 없다는 결점을 내포한 것이다.

황진은 제1차 전투 때의 김시민과 비교될 수 있는 뛰어난 장수라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황진은 6월 25일에 적이 토산을 쌓아 망루를 만든 후 성을 공격해 올 때 솔선수범하여 토산과 정루를 만들어 막았으며, 적이 서북쪽으로 침투해 올 때 뛰어난 무용을 발휘하여 격퇴하였다. 6월 26일에도 적이 판옥을 만들어 공격해오자 황진은 성중에 판옥을 만들어 대응하면서 적을 물리쳤다. 6월 27일에도 적의 귀갑차를 이용한 공격에 화공전으로 대응하여 적을 크게 물리쳤으며, 6월 28일에는 적을 천여 명이나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적의 저격에 의해 전사하고 말았다.<sup>63)</sup> 결국 황진이 전사한 후 그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고 다음날인 6월 29일에 성은 함락되고 말았던 것이다.

주 61) 柳成龍, 『懲毖錄』 권2.

62)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16. 宣祖朝故事本末 晉州城陷明兵撤還.

63) 李炯錫, 앞의 책, 734~735쪽.

다섯 번째는 적과의 심리전술에서 제압당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본군은 공격시작과 동시에 요란한 호각과 함께 총포를 성중을 향하여 집중 발사함으로써 그 요란한 굉음에 수성군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일본군의 전단 살포에 따른 심리적 압박도 한 몫을 하였고, 조선군 장수를 일본군이 포로로 잡아 전투 때마다 앞에 세워 수성군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도 조선관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한 요인이었다.

조선 측은 전력열세로 인해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에도 급급한 나머지 이러한 심리전을 펼칠 여력이 없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김천일과 최경희는 주장(主將)이면서 원군이 온다고 거짓말을 하여 휘하 장졸들을 실망시켰다.

이와 같은 전술적 차원에서의 결함은 결국 수성군 전력의 열세에서 온 것인 만큼 수성군 지휘부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중과부적의 상황을 알고도 구원하지 않은 성 외의 조선관군과 의병 수뇌부들의 방관적 태도와 함께 내원한 명군 수뇌부의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제1차 진주성전투에서는 휘하 의병들을 이끌고 충실히 싸웠지만,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는 방관으로 일관한 의병장 광재우의 상반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재우는 적의 세력이 너무 강하여 성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밖에서 호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순변사 이빈이 정암진을 지키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광재우는 정암진을 지키지 않고 후퇴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후에도 1차 전투 때와 유사한 게릴라식 전투마저도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도원수 권을을 비롯한 관군 수뇌부들의 방관적 태도 또한 질타의 대상이다. 이들은 진주성이 함락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중과부적이라는 이유로 구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명군 수뇌부에서도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못했다. 이여송이 당시 남원성을 지키고 있던 낙상지와 송대빈으로 하여금 진주성을 구원하라고 하였고, 대구에 있던 유정과 오유충에게도 구원을 지시했지만, 아무도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조명군의 수뇌부들은 진주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봤을 뿐 아무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전술적 또는 군내부적 요인 외에 당시 명일간의 강화교섭의 영향도 진주성전투의 패배에 한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당시 일본은 강화교섭의 전개에 따라 남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이것을 통해 명군을 약화시켜 전국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었다. 명군으로서도 평양성전투에 이은 벽제관전투의 패전으로 일본군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격렬한 전쟁을 통한 자기희생을 치르지 않고 대국으로서의 위신을 갖추어 보겠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강화교섭의 분위기는 3차에 걸친 용산회담을 계기로 타협점이 모색됨으로써 왜군은 4월 18일 서울에서 부산방면으로 퇴각하게 되었다. 사실 당시 일본군의 부산방면으로의 남하에는 서울 외곽지대에서의 조선 관·의병들의 활동과 수군의 제해권 장악이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일본으로서는 강화교섭에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즉 부산으로의 남하와 두 왕자의 인질석방문제 등은 도요토미의 고유 권한이었다. 도요토미는 1593년 2월부터 수차에 걸쳐 전년 10월에 실패한 바 있는 진주성을 재차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것은 남하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진주를 통하여 호남으로 진출함으로써 남방의 기지를 확보하여 전국(戰局)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러한 일본군의 남하에 대하는 태도에서 조·명간에는 의견대립이 있었고, 그것은 조선의 추격전이 강화교섭에 방해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관·의병은 추격전을 독자적으로 감행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 실효를 기대할 수 없었다. 즉 이때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함으로써 일본군은 진주성 주변지역으로 운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때 미세하나마 관군의 재정비가 이루어졌고 또한 명군 내원시 절강 병법과 무기·화력도 도입되었으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명군이 전쟁주도권을 장악해 감으로써 초기에 큰 활약을 했던 의병은 그 역할이 감소되고 또한 관군의 재정비과정에서 관군으로 편입되면서 질적으로 저하되었다. 여기에서 지리적 환경과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한 의병의 유격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없었고, 또한 관·의병간, 또 의병상호간에 알력이 문제시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2차 진주성전투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 V.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차 진주성전투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초기전쟁 실패로 하락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재확립하기 위해 목표로 삼은 전투였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단순히 제1차 진주성전투의 복수라는 의미와 함께 강화회담에서의 유리한 여건 조성 등의 이유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일본은 당시 조선에 상륙한 후 전쟁에 지쳐있던 병력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인식하여 규슈지역에 남아있던 병력까지 동원하여 최대규모의 전력을 형성하였다.

일본군의 제2차 진주성 침공은 제1차 진주성전투에서의 패배를 교훈삼아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일본은 명군에게 이번 전투는 단순히 1차 진주성전투에서의 복수전인 만큼 전투구역을 진주에 한할 뿐 전라도를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연막전술을 구사하

였다. 그리고 성을 비우면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기만전술로 조선군 수뇌부의 전투의지를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말려든 명군과 조선관군 수뇌부는 대다수 공성책(空城策)을 표명한 가운데 일부에서만 결사수성(決死守城)을 주장하는 등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창의사 김천일을 중심으로 몇 명의 장수들이 진주성 사수를 주장하였다.

제2차 진주성전투는 김천일을 중심으로 한 일부장수들이 주축이 된 가운데 이들이 이끌고 온 병사들과 본주군(本州軍)이 결합한 가운데 일본군이 침입한 6월 19일부터 시작되어 11일간 혈전이 계속 되었다. 일본군 93,000여 명을 맞아 진주 시민을 포함하여 불과 2~3만의 수성군이 벌인 전투는 시작부터 패배가 예견된 것이었다. 더욱이 엄청난 전력차에다 일본군의 치밀한 전략전술이 가미된 전투는 함락 시간이 언제인지가 문제였다.

일본군은 엄청난 병원수를 이용하여 진주성 주변을 넓게 포위하고 분산 주둔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부원(赴援)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참호의 물을 빼낸 후 토산을 쌓아 조총을 발사하였다. 그리고는 수성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다양한 심리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귀갑차라는 공성용 신무기를 동원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폭우까지 내려 일본군의 공성(攻城)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반면에 조선의 수성군은 외부와의 연락이 고립된 채 오로지 성내의 전투력으로 결전 사수할 수밖에 없었다. 김천일·최경희·황진의 3두 지휘자 중 병법에 능한 자는 황진 밖에 없었다. 따라서 황진의 뛰어난 전략전술로 일본군의 침공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었지만, 황진의 전사 후에는 그를 대신할 인물이 없어 결국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조선 수성군이 증과부적으로 일본군을 당할 수 없었지만, 유성룡의 지적대로 몇 가지의 전술적인 문제점도 있었다. 예컨대, 사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를 맞아 성중의 통제력이 상실되었다는 점과 사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정진을 고수하지 못함으로써 적병이 수륙 양면으로 진주를 공격해 왔고, 따라서 인접지역이 모두 적지가 됨으로써 원병로가 차단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휘부의 인물 구성상 병법전문가가 황진 외에는 없어 계획수립에 제한을 받았다는 점과 타 지방에서 온 장수들의 휘하 구성원들이 제각기 출신지역이 달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이렇다보니 일본군의 전술에 말려들어 주도권을 상실함으로써 성중 사기가 매우 저하되었다는 점도 패배의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전투가 비록 조선관군의 무참한 패배로 끝났지만 나름대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전투에서 일본군도 많은 피해를 입음으로써 그들의 원래의 목표인 전라도 침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 수성군들이 비록 무모한 전투를 수행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일본군의 호남진출을 막은 격이었다. 따라서 진주성 전투에 참가한 조선 관·의병들은 결전사수의 의지로 싸워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힘으로써 일본의 호남진출을 막았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 사료 및 논저

#### 1) 관찬사료 및 문집류

『宣祖修正實錄』·『宣祖實錄』

申晳, 『再造藩邦志』·安邦俊, 『隱峯全書』·柳成龍, 『懲毖錄』·李肯翊, 『燃藜室記述』·李魯, 『龍蛇日記』·趙慶男, 『亂中雜錄』·『健齋集』·『湖南節義史』

#### 2) 단행본

김호중, 『서애 유성룡연구』 새누리, 1994.

朴性植, 『임진란의 진주성전투』 태화출판사, 1991.

李炯錫, 『壬辰戰亂史』 中卷,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최관, 『일본과 임진왜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3) 논 문

강성문, 「진주대첩에서의 김시민의 전략과 전술」 『軍史』 51, 국방부군사편찬 연구소, 2004.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진주성전투 참가자의 포상과정과 의미」 『지역과 역사』 제17호, 부경 역사연구소, 2005.

朴性植, 「계사 진주성전투 소고」 『경북사학』 제4집, 경북대 사학과, 1982.

\_\_\_\_\_, 『임진왜란의 연구 - 임진계사년 진주성전투를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5.

박익환, 「임란시 1차 진주성대첩에서의 학봉과 김시민의 공업」 『아시아문화』 제12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오종록, 「임진왜란중 진주성전투의 지휘체계와 전투의 전개 - 1차 전투를 중심으로 -」 『진주성전투의 재조명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진주문화원, 2005.

조원래, 「제2차 진주성전투와 김천일의 전공문제」 『軍史』 제5호, 국방부전사 편찬위원회, 1982.

지승중, 「16세기 말 진주성전투의 배경과 전투상황에 관한 연구」 『경남문화연구』 제17호,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1995.

## 2. 일본 및 중국의 사료 및 논저

1592年) 11月 10日加藤清正宛秀吉朱印狀, 「加藤文書」14 『熊本縣史料中世編』5.

文祿2年(1593年)2月 27日付朝鮮國在陣衆中宛秀吉朱印狀寫, 「立花家文書」326 『福岡縣史近世史料編 柳川藩初期 上』.

1593年)4月 17日付加藤清正宛豊臣秀吉朱印狀, 「加藤文書」22 『熊本縣史料中世編』5.

1593年)3月 3日付長束正家,木下吉隆,山中長俊宛増田長盛等連署狀, 「濱文書」東京大學史料編纂所, 影寫本.

北島万次, 「제1차 진주성전투의 경위와 제2차 진주성전투의 요인에 대하여」 『제2회 충무공 김시민 장군 선양학술심포지엄자료집』 충무공 김시민 장군 선양사업회, 2003.

佐島顯子, 「豊臣政權の情報傳達について-文祿二年の戦線後退をめぐって-」 『九州史學』96.

\_\_\_\_\_, 「임진왜란 중 2차 진주성전투와 강화협상」 『진주성전투의 재조명 국제학술 세미나 자료집』 진주문화원, 2005.

萬曆21年 2月 30日移本部咨, 宋應昌 「經略復國要編」 『壬辰之役史料?輯』.

# 高麗 江華遷都期 抗蒙史的 教訓 分析

## 목 차

- I. 서 론
- II. 강화천도기 국내·외 상황 조명
- III. 고려와 몽고간 전쟁 경과
- IV. 안보적 관점에서 본 항몽사적 교훈
- V. 미래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발전방향
- VI. 결 론



예)대령 신재현  
(교육사 BCTP단 지휘통제분석관)

## I. 서 론

고려와 몽고의 관계는 거란의 침입을 계기로 麗·蒙·東眞의 연합군이 거란의 본거지였던 江東城(江東邑 서쪽 20리)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몽고太祖(징기즈칸, 成吉思汗)<sup>1)</sup>는 거란의 침입을 제거해주는 조건으로 고려에서 歲貢(해마다 附·服屬國에서 上國에 보내는 貢物)을 받아갈 것과 양국은 兄弟가 된다는 조건아래 講和를 맺었다. 당시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태조의 정복 야욕은 이미 고려 침공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 몽고는 거란에 이어 동진과 金을 각각 정벌한 뒤 본격적으로 고려 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몽고는 고려에 다녀가던 사신 審古與 피살사건을

주1) 징기즈칸(1162~1227)은 也速該(예수가이)의 아들(鐵木眞, 티무진)로서 1206년 전 몽고민족을 통일하고 大汗(공 皇帝)에 올라 중앙아시아, 남러시아, 동유럽, 중동지역까지 동서 8,000km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의 군주로서의 비범한 재능과 군대 통솔력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東西文化의 존중, 종교의 보호, 제도의 정비 등을 규정한 札撒(자사, 法令集)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벌미로 급기야 단교하기에 이르렀고, 1231년 撒禮塔의 침공을 시작으로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하자 이후 28년간 국왕의 出陸 還都와 親朝의 이행을 요구하며 本土를 유린, 20여만 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등 그 피해는 막대하였다. 당시 고려는 권신 崔怡(瑀)와 崔沆이 집권하던 시기로서 반란 등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으며, 고려 왕실에서는 ‘主戰論’과 ‘主和論’ 등을 놓고 논쟁 끝에 결국 무인정권이 주도하는 강화천도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대몽관계에 있어서 강화천도 그 자체가 몽고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었다. 고려 무인정권은 몽고의 끊임없는 침공을 맞아 對蒙抗爭을 전개하였지만 궁극적으로 몽고에 服屬되었으며, 1270년 드디어 元宗이 開京(開城)으로 환도하니 강화도로 천도한 지 39년 만이었다.

고려 강화천도기 항몽사적 교훈분야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서를 접하지 못한 가운데 당시 혼란한 정치상황하에서 대몽고정책 가운데 과연 어떤 정치적 선택이 國益에 보다 기여할 수 있었고, 몽고의 침공으로부터 국토의 방위,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공고하게 보호해줄 수 있었을까 하는 측면에서 高麗史 등 관련 史籍 등에 기초하여 논의할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때 강화천도를 놓고 찬반의견이 제기되었지만 권신 최이가 천도를 반대하는 의견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조기에 천도방침을 결정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그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강화천도로 고려의 社稷을 보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한 주권 수호와 함께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할 수 있었음은 물론 몽고에 반대하는 세력을 거족적으로 결집시켜 대몽항쟁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어디까지나 왕족과 권신, 그 가족 등 소수의 특권계층만을 위한 천도일 뿐이며, 대다수 本土 백성의 安危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됨으로써 몽고의 침공으로 대규모 인명 손실과 막대한 재산피해, 영토 축소만 가져온 채로 결국 몽고에 굴복하였다고 주장한다. 찬반양론 중 어느 한쪽에도 상당한 정치적인 논리와 함께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몽고의 침략상황을 오늘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결정이었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강화천도와 더불어 장기간 몽고의 침략으로 이 강토가 초토화되었는데 당시 천도하지 않고 개경을 고수할 수는 없었을까, 또한 협소한 島嶼인 강화도에서 海島入保策<sup>2)</sup>이 아닌 본토라는 넓은 공간에서 작전적 행동의 자유를 확보한 가운데 총체적인 국력을 동원하여 전쟁지속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주 2) 海島入保策이란 육지를 포기하고 바다의 섬으로 들어가 방비하는 入海戰術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초하에 먼저 강화천도를 전후한 시기의 국내·외 상황 조명과 함께 고려와 몽고의 전쟁계획, 전쟁경과를 알아본 다음 안보적 관점에서 항몽사적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미래 국가안보상의 위기극복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강화천도기 국내·외 상황 조명

### 1. 국내 상황

최이 등 무인정권은 천도 등 국가 중요정책을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專橫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었지만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등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당초 ‘對蒙 和議’만 하더라도 최이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다가 몽고가 그들이 경략한 고려의 京府州郡 서북면 40여 城에 達魯花赤(다루가치)을 파견하자<sup>3)</sup> ‘對蒙 斥和’로 그 정치적 성향이 바뀌었다. 그런 입장 변화는 달로화적 설치를 계기로 몽고의 압력이 고려 왕실에 유입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무인정권의 정치적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무인정권은 몽고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몽항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본토에서 항쟁할 경우 몽고의 대군에 대적하기가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강화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런 결정은 몽고군이 騎兵을 앞세운 陸戰에서는 매우 위협적이거나 水戰經驗이 부족하기 때문에 海島에 入保하면 육지에서와 같이 선불리 공세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적의 강·약점을 고려하여 강화도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무렵 본토에서는 전쟁준비와 군사력 증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軍役, 租稅 부담의 가중 등으로 백성의 형편은 날로 궁핍해지고, 고려 왕실과 무인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심화되었다. 특히 고려는 몽고의 첫 침공에 맞서 분투하였지만 국력 부족으로 패배한 후 대몽 和議를 간청, 양국간 講和가 결정되자 평화가 찾아오는 듯하였다. 그런데 국내정세가 대몽 척화로 급반전하면서 강화천도가 단행되자 장차 몽고의 재침이

주 3) 達魯花赤(다루가치)은 몽고의 官職인데 ‘鎮壓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며, 鎮守者·斷事官·長官·民政監督官 등으로 번역된다. 여기에는 두 部類가 있는데 ① 점령한 지역의 백성을 직접 맡아 다스리던 다루가치, ② 國事 전반에 간섭하던 다루가치가 그것이다. 1231년(고려 고종18, 몽고 태종3) 撒禮塔의 제1차 침공시 경략한 서경(평양) 등 북계의 諸城에 두었던 다루가치는 前者에 해당된다. 이후 고려가 몽고에 항복한 후 1270년(원종11)에 배치되었던 다루가치는 後者에 해당한다.

예견되는 가운데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무인정권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던 대몽항쟁에 대한 거부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최이 등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親疎關係를 구별하고, 私第(高官의 私邸)에 政房을 설치<sup>4)</sup>, 銓注權(인사권)의 행사 등 불공정한 인사관리와 국가의 중요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專斷政治(제 마음대로 權力을 행하는 정치)를 일삼았다. 그런 나머지 무인정권은 내부 분열과 함께 많은 반대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았는데 1232년(고종19) 정월 忠州奴軍 牛本 등의 亂, 강화천도시기 御史臺 李通 등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이 무렵 馬山(坡州 추정)·冠岳山(果川)·白岳(서울)·龍門倉(楊平) 등지에서 草賊<sup>5)</sup>의 난, 남쪽 原栗(潭陽) 등지에서 초적 李延年的 난, 1233년(고종20) 5월에 西京人 畢賢甫가 西京郎將 洪福源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킨 사실 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변방의 오랑캐들도 이와 같이 혼란한 국내사정을 인지하고 거란, 동진 포선만노의 부하들이 침입해오는 등 국내 정치상황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 2. 국외 상황

몽고 太祖는 1209년부터 본격적인 대외 정복에 착수하여 1차로 서쪽의 西夏를 정복한 데 이어 1214년 금을 정벌한 후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몽고와의 전쟁으로 금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몽고는 거란을 토벌한다는 구실로 고려를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1216년(몽고 태조11)에 木華黎가 요동반도의 여러 성을 점령하자 금, 거란, 蒲鮮萬奴가 이곳을 버리고 도망함으로써 요동지방도 몽고의 영토로 되었다. 1218년 12월 1일에 몽고 태조는 元帥 哈眞·札剌, 포선만노의 完顏子淵으로 하여금 몽고·동진(곧 萬奴) 연합군 3만여 명으로 거란의 喊舍가 있는 江東城에 대한 공략에 나서도록 하였다.<sup>6)</sup> 몽고와 동진이 동맹을 체결한 것은 요동과 고려를 침공하는 거란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태조가 대외정복정책의 일환으로서 요동을 경략하려는 雄志, 그리고 동진의 포선만노가 금의 반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양측의 정치적 의도가

주 4) 政房은 1225년(高宗12) 6월에 崔怡가 私第에 설치하여 文武百官의 인사행정을 취급하던 私設機關이다. 백관의 昇降·任免·移動에 관한 이른바 銓政의 대권을 장악하였다. 이때부터 국왕은 정방의 注擬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할 뿐 모든 인사행정은 정방에서 행하여졌다. 정방은 최이의 뒤에도 崔沆(怡의 자)·崔堉(沆의 자)의 집권시대는 물론 최씨정권이 몰락한 후에도 존속되다 후기에 국가기관화 되었다.

5) 草賊은 지배층의 토지 奪占과 과중한 收奪에 저항하는 집단을 말한다.

6) 1219년(고려 高宗6, 몽고 太祖14, 금 興定3) 정월 14일에 趙沖과 金就勵 장군은 몽고의 哈眞, 동진의 完顏子淵 등과 함께 江東城을 포위하자 거란의 喊舍는 자결하고, 나머지 세력 5만여 명은 항복하였다.

부합한데 있었다. 이때 몽고의 합진은 거란을 토벌함으로써 고려에 은혜를 베풀었다며 고려군 사령관인 趙沖에게 군량의 보급과 함께 몽고와 兄弟國이 될 것을 약속하라고 요청하였다. 조정은 몽고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이 몽고가 점차 강성해진 반면 금은 지속적으로 쇠락하자 금의 각 지방에서는 반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금에 복종하던 거란인이 다수였다.

금에 반기를 든 거란은 몽고군의 공세로 압록강 방면으로 밀려난 후 약 3년간에 걸쳐 고려를 침략하였는데 한때 충청, 경상, 전라 이외의 전역을 잠식할 정도로 강성한 시기도 있었다. 거란의 빈번한 침공으로 고려는 수난을 겪었으나 趙沖·金就勵 등의 반격으로 거란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다.

금에 반하여 大眞國 天王이라 칭하고 일어난 포선만노는 요서를 정벌한 몽고군이 요동에 침입하자 항복하고, 몽고군이 철수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두만강 유역의 간도로 본거지를 옮기고 1217년에 국호를 동진이라 칭하였다. 동진은 고려와 친선관계를 맺으려던 의도가 고려에 의해 거부되자 1225년(고종12) 8월부터 고려를 침입하기 시작하여 1227년 이후로는 定州·長州(이상 定平)·長平鎭(永興)·宣州(德源) 등 동북면 각지에 침입하였다. 동진의 포선만노는 1233년(고려 고종20, 몽고 太宗5) 9월에 몽고皇子 貴由(뒷날 定宗) 등이 인솔한 대군의 공격을 받아 포로가 되었으며, 지금의 만주지방은 몽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무렵 금과 거란은 고려에게 침략하겠다고 하며 압력을 행사하였는데 금은 식량과 말(馬)을 요구하며 거란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제안하였고, 거란은 토지와 식량을 요구하는 한편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면서 양국의 요구를 일체 거부한 가운데 침략세력을 격퇴시키는데만 심혈을 기울였다.

1219년(고려 고종6, 몽고 태조14)에 고려측 조충과 몽고측 합진이 대표가 되어 麗·蒙 協約을 체결하였는데 골자는 고려가 몽고에 대해 附屬國의 禮를 행하는 것이었다.<sup>7)</sup> 이와 같이 몽고의 원정은 거란을 징벌하는 외에 만노를 복종시키고, 고려를 복속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다. 여·몽 협약에 따라 몽고의 受貢使는 1221년 4차례 73명, 1222년 1차례 31명, 1224년 2차례 20명이 다녀갔는데 이들 사신은 양국간 체결된 협약을恣意로 집행하면서 공물의 품목과 수량이 규정된 바 없음을 기화로 고려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를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려 조정의 예산이 바닥날 정도로 그 폐해가

주 7) 『高麗史』卷23, 高宗19年 11月, 麗·蒙 協約의 내용은 “첫째, 고려는 거란 평정의 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몽고에 投拜之禮(附屬國의 禮)를 할 것이며, 둘째, 고려는 매년 몽고에 貢物을 바칠 것이며, 셋째, (당시 요동에 金의 군대가 아직 진을 치고 있는 까닭으로 來往에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으로) 몽고가 사신을 매년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에 파견하며, 넷째, 이 사신은 반드시 萬奴의 영역 즉 東眞國을 경유할 것이니 고려는 이를 잘 명심하였다가 소정의 공물을 제공할 것” 등이었다.

극심하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를 마련하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몽고가 苛斂誅求 그 자체였다. 그러다가 1224년(고려 고종11, 몽고 태조19) 11월에 몽고사신 著古與 등 10명이 고려에 왔다가 1225년(고종12) 정월에 공물을 거두어 귀국하던 중에 압록강 저편에서 도적떼에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sup>8)</sup> 그런데 몽고는 고려가 저고여를 살해하였을 것이란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드디어 국교를 단절하기에 이르렀다.

### Ⅲ. 고려와 몽고간 전쟁 경과

#### 1. 몽고군의 침공계획

몽고군의 編制는 十進法 조직으로 가장 작은 단위는 10名隊(중대), 10명대가 10개 모여 100명대(대대), 100명대가 10개 모여 1,000명대(연대)를 이루며, 가장 큰 부대는 1,000명대가 10개 모여 1만 명으로 이루어진 ‘투만’(Touman, 사단)이었다. 3개의 투만이 하나의 군단을 형성하였는데 총 병력 10여만 명 규모(복속국의 助軍 제외)로서 이와 같은 단순한 편제는 일사분란한 지휘통제를 보장하였다. 몽고군의 강점은 유목민족의 특성대로 신속한 기동성을 발휘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유년기부터 말과 함께 성장하면서 터득한 기마술은 어느 민족도 능가할 수 없을 정도로 능수능란하였다. 그들은 전체 군대의 40%만 중무장하고, 나머지 60%는 갑옷을 입지 않은 채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투구만 착용하였는데 몸이 가벼운 이들은 적진교란, 원거리 공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목초를 따라 이주생활을 하는 습성상 사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射術(활 쏘는 기술), 騎兵의 장거리 작전수행능력이 탁월하였다.

그들은 戰鬪荷重을 경량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대다수 보급체계를 遠征地域의 현지 사정에 맞게 조정하고, 기동부대는 肉脯(보르츠, 말린 고기) 등을 휴대하여 신속 기동하면서 馬上에서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등으로 중심깊은 戰鬪機動을 보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정을 통해 服屬한 국가의 가용한 人馬와 軍糧 등 물자를 收用하여 전장에 동원하는 능력도 탁월하였다.<sup>9)</sup> 이렇게 하여 본국에서 군사력을 절약한 가운데 결정적인

주 8) 『고려사』 권22, 고종19년 11월, 몽고 太宗에게 보낸 陳情表를 보게 되면 몽고의 사신 著古與를 죽인 것은 金國 장수 虧哥下 혹은 東眞의 蒲鮮萬奴측의 소행인 듯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 몽고군은 필요시 服屬國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였는데 唐古의 제3차 침공시기인 1235년(고종22) 9월에 몽고군은 女眞(東眞)兵을 인솔, 침입하여 龍津鎮(德源郡)·鎮溟城 등을 함락하였고, 1236년(고종23) 8월에 역시 여진의 지원군이 和州(永興)를 공격한 사례에서 이를 알 수 있다.



戰域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전투력을 復元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고, 부족한 전투력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었다.

어떤 국가를 침공하기 전에 반드시 적국을 정탐함으로써 적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하여 적국에서 몽고군이라는 소문만 들어도 패배감을 갖도록 만드는 등 고도의 심리전도 구사하였다.

몽고는 고려에 대한 침공계획을 수립하면서 먼저 水戰에 미숙한 취약점을 고려 강화도를 직접 공략하기보다는 기병을 앞세워 본토를 신속하게 점령, 인적·물적 자원 통제 등 협소한 강화도 조정을 지속적으로 고립시켜 조기에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도록 강요하여 항복을 받아낸다는 기본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특성과 능력을 가진 몽고군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戰力으로 청천강 이북을 조기에 점령하여 고려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든다는 제1단계 작전목적을 설정하였다.<sup>10)</sup> 만일 고려가 여기에 불응하면 고려군의 방어거점을 신속히 우회하여 개경(개성) 점령 후 일방적인 강화조건을 제시하는 동시에 개경이남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여 고려를 굴복시킨다는 제2단계 작전목적도 설정하였다. 강화천도 이후 몽고군은 한반도내에 여러 개의 전선을 유지하여 고려군의 방어능력을 분산시키면서 본토를 무차별 유린, 고려 국왕의 出陸 還都와 親朝를 실현시키려고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몽고군은 우선 서북면에서 거점방어력을 제거하여 작전기지화 하는 동시에 동북면에서도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여 고려군이 효과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혼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였다.

## 2. 고려군의 방어계획

고려의 兵制는 2軍·6衛 45領의 총 병력 7만 2천여 명 규모로서 中央軍(京軍)과 地方軍인 州縣軍(5道·京畿)·州鎮軍(北界·東界)이 防衛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방군은 모두 6위에 소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1)</sup> 외침이 있을 때는 州鎮軍이 州鎮의 城을 고수하고 2군·6위 및 주현군이 이를 증원하는 방어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고려 兵制의 문란으로 10대 文宗 代(1046~1083)에 이르러 이미 외적을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武班의 지위가 文班에 비해 날로 저하되었고, 국가 재정능력의 부족으로 軍人田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군인에 대한 처우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주 10) 陸軍士官學校 戰史學科, 『韓國戰爭史』, 日新社, 1988, pp.34~35.

11)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5, pp.239~242.

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90, pp.282~303.

이후 明宗 代(1171~1197)에 이르러 반란진압이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부족한 官軍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別抄가 중앙과 지방에 편성 운용되었다. 崔氏政權은 권력유지 등 정치적 목적하에 禁軍(국왕 侍衛軍, 곧 牽龍·控鶴·內巡檢軍) 등을 장악하기 위해 都房을 운용하고,<sup>12)</sup> 유명무실한 官軍 대신 夜別抄를 창설하여 이를 국가관리하에 두지 않고 私兵으로 운용하였다.<sup>13)</sup> 이들 별초는 나중에 正規軍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발휘하였다. 별초군은 새로운 전투편제와 대민지배를 목적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兩班別抄·奴軍雜類別抄 역시 지방 州縣軍의 문란으로 그에 대체하는 조직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별초군은 지방 수령과 현지 유력자들에 의해 통솔되었다.<sup>14)</sup> 그 후 대몽항쟁을 위하여 야별초를 左別抄와 右別抄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당시 몽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해온 자들로 神義軍을 편성함으로써 三別抄는 대몽항쟁 중 각 전선에서 정찰대와 특공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몽항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세력은 승려·천민·초적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義兵들로서 이들은 몽고군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보다 기습 등 유격전방식을 취하였다. 무인정권은 대몽항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으로서 고려 사직의 보전과 이를 통해 그들의 정권유지를 최우선시 하였다. 이에 각 州縣鎮軍은 기병을 앞세운 몽고군의 기동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적 가치가 높은 主鎮 중심으로 고수하고, 대신 중앙군은 기본적으로 강화도 방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즉 무인정권이 주도하는 고려군은 몽고군의 최대 약점인 수전을 유도할 수 있는 강화도 중심으로 항전한다는 소극적인 대몽고 전쟁계획을 수립하였다.

### 3. 고려와 몽고간 전쟁

#### 가. 撒禮塔의 제1차 침공(1231년, 고종18년)

몽고가 고려를 침공한 동기는 겉으로 내세운 저고여 사건은 구실에 불과하며, 대외정복의 일환인 東域征伐 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몽고 太宗(窩闊台, 태조 성길사한의 제3자)이 즉위하자 마침내 태조의 유훈대로 고려 정벌을 명하기에 이르렀다.

주 12) 都房은 고려 무인정권의 私兵集團을 말하며, 최초 1179년(明宗9)에 慶大升이 설치, 1200년(神宗3)에 崔忠獻이 신변경호를 위해 文武官·閑良·軍卒 중 강력한 자를 모아 六番 교대근무하게 했다(六番都房). 이때부터 도방은 近衛隊로서 崔氏 一族의 권력유지의 支柱가 되었다. 崔怡에 와서 家兵을 內都房, 6번도방을 外都房이라 하여 확장시켰다(內外都房). 그후 崔沆에 와서는 내외도방을 합하여 36번으로 확장 강화, 林衍때 다시 6번으로 개편, 1270년(元宗11)에 林惟茂가 피살되어 외형상 王政復舊와 함께 폐지되었다.

13) 金唐澤, 『高麗의 武人政權』, 國學資料院, 1999, pp.297~322.

14) 申安湜, 「高麗中期的 別抄軍」, 『建大史學』7, 1989, p.259.

이리하여 몽고의 고려 침략은 이후 약 30년간 계속되었는데 몽고의 제1차 침공은 1231년(고려 高宗18, 몽고 太宗3) 8월 29일에 압록강을 건너와 咸新鎮(義州郡)을 포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三軍으로 하여금 적을 막게 하였으나 義州副使 全僞은 공포에 질려 防守將軍 趙叔昌(趙沖의 子)과 모의하여 항복하였다. 이 무렵에 西京郎將 洪福源은 주민을 거느리고 살레답에게 항복하여 그때까지 저항을 계속하던 나머지 州郡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는데 종사하는 등 반역하였다. 이해 9월 龜州城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장수는 靜州分道將軍 金慶孫과 西北面兵馬使 朴犀이었다. 蒙兵은 성을 다중포위하고 철야로 30여 일간 집요하게 공세를 가해왔으나 兩將帥는 鐵液(鎔解된 쇳물) 注出 등 방어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들을 격퇴시켰다. 조정에서는 귀주방어의 공훈을 기려 定遠大都護府로 승격시켰다. 한편 몽고군의 공세에 밀려 龍州(龍川)·宣州(宣川)·郭州(郭山) 등이 함락되었으며, 동년 10월 21일에 고려 3군이 安北城(安州郡)에서 몽고군과 교전한 결과 패배하였다. 이에 살레답은 蒲桃·迪巨·唐古 등 3장수를 계속 전진시켰다. 12월 1일에 몽고군이 개경을 포위하고 분산 주둔하자 조정에서는 御史 閔曦를 살레답에게 보내어 굴욕적인 화의를 간청할 수밖에 없었다. 살레답은 화의에 관한 고려의 제청을 받아들임에 앞서 3장수로 하여금 개경 이남의 지역을 침략하게 하고 또 고려에 대해 다량의 貢物과 人馬를 요구하였다.<sup>15)</sup> 몽고군은 廣州·忠州·淸州로 향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하여 남아나는 것이 없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黃金 131餘斤 등을 살레답 등에게 진상하였다. 고려는 몽고군의 살육과 약탈로 굴욕적 화의를 맺었으나 적개심은 강렬하였는데 그런 속사정은 ‘君臣盟告文’에 나타나 있다.<sup>16)</sup> 한편 살레답은 그들이 경략한 京府州郡에 달로화적 72명을 두어 감시하게 하고, 1232년(고려 高宗19, 몽고 태종4) 정월 11일에 철군하였다. 끝까지 몽고군에 대항하던 龜州의 朴犀, 慈州의 崔椿命은 몽고군이 철수한 뒤 조정의 설득으로 각기 성을 나왔다.<sup>17)</sup>

주 15) 『고려사』 권23, 고종18년 12월, 撒禮塔이 요구한 人馬와 貢物의 수량은 실로 막대하였으니

- ① 好金銀·好珠子·水獺皮·好衣服을 보내되 많으면 馬 2만 필로 실어오고 적으면 1만 필로 실어서 보낼 것
- ② 우리 大軍은 집을 떠난 지 오래인지라 입은 옷이 다 헤어졌으니 1백만 군의 所要服을 보낼 것
- ③ 大·小官馬 2만 필을 選進할 것
- ④ 王孫인 男孩兒 1천명과 公主·郡主 등 皇帝에 選進하는 것 이외에 大官人의 母女孫兒를 보낼 것이며 王府·大官의 남녀 각 1천명 등을 신속히 보낼 것 등이었다.

16)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권25, 고종18년 12월, ‘君臣盟告文’에 “저 무도한 몽고족은 무고히 침범하여 우리의 변방을 짓밟고 우리 인민을 죽이고, 개경(개성)지방까지 침투하여 날뛰기는 고기를 본 범과 같도다. 겁탈을 당하고 죽은 고려인이 길에 낭자하였고, 군과 신은 막아 볼 죄를 생각하나 창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 다만 무릎을 껴안고 길게 탄식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17) 『고려사』 권103, 列傳16, 朴犀 傳, 『고려사』 권103, 列傳16, 崔椿命 傳.

### 나. 고려의 강화천도와 撒禮塔의 제2차 침공(1232년, 고종19년)

권신 최이 주도로 강화천도를 강행한 것은 첫째, 몽고 사신의 행패 등으로 고려의 정체성에 위기가 왔고, 둘째, 몽고의 탐욕스런 요구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셋째, 水戰에 취약한 적의 약점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앞서 몽고군이 철군하자 사자 都且 등 24명이 개경에 왔다. 도단은 “고려 國事를 統括하러 왔다”고 공언하자 조정과 무인정권은 사직의 보전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sup>18)</sup> 또한 몽고는 무리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선박 30척, 水兵 3,000여명 등을 보내주자 다시 開州館(滿洲 鳳凰城) 등을 경작할 백성을 보낼 것과 王室 등에서 童男童女 각 50명과 刺繡女(자수에 조예가 있는 婦女子)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무인정권은 사직 보전과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海島로 들어가 대몽항쟁을 전개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전격적으로 강화천도를 추진하였다. 천도 논의를 거듭한 끝에 1232년(고종19) 6월 16일 논의에서도 대다수가 천도를 반대하면서도 최이가 두려운 나머지 본심을 말할 수 없었다. 이때 參政 兪升旦과 指諭 金世洵이 遷都論을 맹비난하자 최이가 강화천도 반대 주장이 번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본보기로 김세충을 끌어내어 참하고, 그날로 고종에게 강화도로 행차할 것을 주청하였다. 최이는 서둘러 백성을 山城과 海島로 대피시키고, 북계에 파견된 달로화적을 모두 처단하였다. 7월 6일 고종은 천도 길에 올라 익일(7월 7일)에 강화도에 도착하였으나 新궁궐은 축조 중이었다. 한편 御史臺의 李通 등이 개경의 취약한 틈을 타 초적 등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은 3군으로 하여금 昇天府 외곽에서 진압하였다. 최이 주도하에 전격적으로 강화천도가 단행되자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한 몽고 태종은 철군 후 7개월만인 1232년(고려 고종19, 몽고 태종4) 8월에 살레탐에게 재차 침공을 명하였다. 이때 흥복원은 추중세력을 거느리고 몽고군에 합세하였다. 살레탐은 먼저 강화도에 천도한 것을 비난하고 국왕과 최이의 출륙을 요구하여 왔으나 응하지 않자 위협하기 위해 개경을 우회, 남진하여 漢陽山城(서울)을 함락하였다. 살레탐은 水州(水原)의 관할인 處仁城(龍仁)에서 교전을 벌이다 승려 金允候에게 射殺되었다.<sup>19)</sup> 살레탐의 전사로 몽고군을 지휘한 副帥 鐵哥(帖哥)도 국왕과 최이의 출륙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이를 거부하였다. 철가는 歸附해온 북계의 諸 城을 흥복원이 관장하도록 조치하고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조정은 흥복원을 회유하기 위해 1233년(고종20) 5월에 宣諭使로 大將軍 鄭毅 등을 파견하여 설득하였으나 허사로 돌아가자 최이는 동년 12월에 家兵 3,000여명을 파견하여 반란군을 토벌하고 서경을 점령하였다. 그때 흥복원

주 18) 『고려사』 권23, 고종19년 正月·3월, 『高麗史節要』 권16, 고종19년 정월·3월.

19) 『고려사』 권103, 열전16, 金允候 傳, 『고려사절요』 권16, 고종19년 9월, 『고려사』 권23, 고종19년 9월.

이 요동으로 도망해오자 蒙帝(태종)는 그가 데리고 간 백성 1,500여호와 함께 東京(遼陽)·瀋州(奉川)에 거주시키는 일방 管領歸附高麗軍民萬戶에 임명하고 귀부해온 북계 40여성을 그에게 예속시켰다.

#### 다. 唐古의 제3차 침공(1235년, 고종22년~1239년, 고종26년)

살레탑 전사로 철수한 몽고군이 재차 침공한 것은 첫째, 동진과 금을 각각 정벌함으로써 고려의 고립이 심화되었고, 둘째, 동진 토벌로 東北面에서도 고려를 위협할 수 있었으며, 셋째, 동진, 금의 援軍을 확보한데 있었다. 태종은 고려에 대해 '5罪'를 들어 질책하고,<sup>20)</sup> 국왕의 出陸 來朝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동진의 포선만노를 토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다 1233년(몽고 태종5) 9월에 동진, 그 익년 정월에 금을 각각 정벌하자 드디어 고려에 대한 공세를 취하였다. 제3차 침공은 1235년(고려 고종22, 몽고 태종7)부터 1239년(고려 고종26, 몽고 태종11)까지 약 4년간이나 계속되었다. 1235년 윤7월에 선봉이 동북면에서 침입하였으니 이는 동진의 옛 땅에 주둔한 몽고군이였다. 그해 8월 본군이 西北面에서 남하하여 龍岡·咸從(江西郡)·三登(江東郡) 함락, 9월에 女眞(동진)兵을 인솔 남하하여 龍津鎭(德源郡)·鎭溟城 등을 함락하였다. 10월에는 서북·동북면으로부터 증원부대가 투입되어 洞州城(瑞興郡)을 함락하고 砥平까지 진출하였다. 그곳에서 야별초가 縣民과 함께 야간 기습전으로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236년(고종23) 6월에 후속군이 대거 義州로 들어와 安北府(安州)에 이르는 諸 城에 주둔하고, 8월에 여진의 지원병은 和州(永興)를 공격하였다. 서북면 주력은 강화도를 공격하지 않고 남하, 南京(서울)·牙州(牙山)·何陽蒼(稷山) 등지에 주둔하였다. 10월에 몽고병은 全州·古阜(井邑)까지 진출하였으며, 고려는 강화도 外城을 쌓았다. 1238년(고종25) 윤4월에 東京(慶州)의 皇龍寺塔을 불살랐으며, 동년 5월 고려의 趙玄翥 등이 주민 2,000여명을 인솔하여 투항하자 몽고는 이들을 東京(遼陽)에 안주시키고 洪福원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 무렵 백성은 산성과 해도로 들어가 淸野戰術<sup>21)</sup>을 시행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미약하였다. 兵禍로 백성은 살길을 잃고 국토의 황폐화는 날로 심하여 그해 12월에 將軍 金寶鼎·御史 宋彥琦 등을 몽고에 보내 撤兵을 간청하였다. 1239년(고종26) 4월에 몽고 태종은

주 20) 『고려사』 권23, 고종20년 3·4월, 『고려사절요』 권16, 고종20년 3·4월, 蒙帝가 고려 국왕에 대해 책임을 묻은 '5罪'는 ① 거란을 평정하고 몽고 사신을 죽인 뒤 한 사람의 사자도 보내지 않은 것, ② 사신을 보내어 祖宗의 訓言·省諭를 전달하려고 하였던 바 고려가 감히 돌려보낸 것, ③ 고려가 著古與를 謀害하고 蒲鮮萬奴의 民戶가 죽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 ④ 萬奴征討에 진군할 것과 入朝할 것을 명하였으나 감히 항거하고 海島에 들어간 것, ⑤ 民戶의 數에 대하여도 妄奏(부정확한 통보)를 감행한 것 등이다.

21) 淸野戰術은 적의 침입시 주민을 城內로 들이고 들(田畓)을 비워서 보급을 차단하는 兵法을 말한다.



김보정과 송언기를 억류한 대신 사자 甫可·阿叱 등 20명을 고려에 보내 국왕의 친조를 거듭 요구하고 그달(月)에 철군하였다. 고종은 친조 요구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 그해 12월 왕족으로는 처음으로 新安公 佺(顯宗의 8世孫) 등 148명을 몽고에 보냈다. 1241년(고종 28) 4월에 永寧公 縉(佺의 從兄<sup>22)</sup>)을 親子로 속여 귀족 자제 10명과 함께 몽고에 보냈다. 이해 11월에 몽고 태종이 죽고, 황후 脫列哥那(쿠릴타이)가 대권을 행사하면서 이후 약 5년간은 소강상태에 있었다.

#### 라. 阿母侃의 제4차 침공(1247년, 고종34년~1248년, 고종35년)

1246년(고종33) 7월에 몽고 貴由(태종의 장자)가 定宗에 즉위하자 歲貢 부실과 국왕이 출륙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재침을 명하였다. 그리하여 1247년(고려 고종34, 몽고 정종2) 7월에 아모간(阿母侃)이 흥복원과 함께 제4차 침공하여 威州(熙川)·平虜鎮(寧遠郡)을 함락하고 鹽州(延白郡)에 주둔하며 강화도 조정을 압박하였다. 조정에서는 起居舍人 金守精을 아모간에게 보내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몽고에도 사자를 보내 철군을 간청하였다. 그런데 1248년(고종35) 3월에 몽고 정종이 죽으니 몽고군도 물러갔다.

#### 마. 也古의 제5차 침공(1253년, 고종40년~1254년, 고종41년)

1251년 6월 蒙哥(태조의 제4자인 拖雷의 장자)가 憲宗에 즉위하자 다시 침공을 개시하였다. 제5차 침공의 계기는 고려가 출륙을 假裝한데다 오히려 軍兵力 충원 등 防備力을 강화한데 있었다. 1250년(고종37) 정월부터 강화도 대안인 昇天府(海倉浦 부근)에 궁궐과 성곽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몽고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오히려 강화도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中城을 쌓았다. 1252년(고종39) 7월에 건너온 사자 多可·阿土 등이 국왕의 출륙조짐이 없자 화가 나서 돌아갔는데 무인정권은 再侵에 대비하여 諸城에 防護別監 과견과 充實都監을 설치하고, 전국의 장정을 소집하여 군대를 증편시켰다. 이를 응징한다는 구실로 1253년(고려 고종40, 몽고 헌종3) 7월에 也古(헌종의 叔父)의 군대가 침공해오자 백성을 산성과 해도에 대피시켰다. 이때 야고와 동행한 영녕공 준(1241년 4월 親子로 속여 入朝)과 李峴(樞密院副使로 1252년 정월에

주 22) 永寧公 縉은 顯宗의 후손으로 1241년 왕명으로 왕자를 假裝하고 불모(뜰루게)로 몽고에 가서 발각된 바도 있으며, 1255년 몽고 憲宗의 명을 받아 차라대를 따라 고려에 침입 약 1년간 고려를 위협한 뒤 2천여 호를 分領받아 瀋州를 다스렸고, 1270년 고려 林衍의 반란 때 파병 요청을 받은 몽고 世祖의 명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또 고려에 들어왔다. 몽고에 인질로 오래 있으면서 조국인 고려의 戰後 복구를 돕기는커녕 고려 군대를 모두 몽고 침략군에 助軍으로 동원하려 한 賣國의 시도를 하였으나 侍中 李藏用的 外交로서 이를 막아내었다.

입조)이 최항에게 출륙을 권유하였지만 이를 듣지 않았다. 8월 12일에 야고의 本軍은 서북면에서 들어와 서해도의 椽山城을 공격하여 10세 이상 남자는 모두 살해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sup>23)</sup> 동북면에서 松柱(헌종의 弟)의 군사들이 들어와 高州(高原)·和州(永興)를 거쳐 東州山城(鐵原郡)을 점령하고, 婦女·童男을 잡아들였다. 이후 登州(安邊)·金壤(金化)·襄州(襄陽)를 차례로 함락하였다. 서북면 주력은 涿州까지 진출하였다가 別抄指諭 李柱에게 요격당하여 절반 규모가 죽었으며, 9월에 일부는 春州城(春川)을 다중 포위, 城中의 우물이 말라 소·말의 피를 마시는 극한상황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다 모두 玉碎하였다. 10월에 楊根·天龍城(驪州 추정)을 함락시키고 忠州를 포위하였다. 헌종은 고려 국왕이 '6事'를 비롯하여 命을 거역하므로 야고로 하여금 공격하게 한다는 글을 보내왔다.<sup>24)</sup> 장기간 병화로 본토가 폐허화되는 등 대몽항쟁이 한계에 부딪히자 조정에서 조속히 강화를 맺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해 11월 최초로 고종이 출륙, 승천부에서 사신 蒙古大 등을 맞았는데 몽고는 백성이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이 죽는데 고려 국왕은 一身만을 생각한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야고를 대신하여 忠州城 공격을 속행하던 아모간·홍복원 등은 약 1개월 뒤인 12월 28일경 포위를 풀고 북상하였다. 몽고병이 충주에서 철수한 것은 제2차 침공시 처인성에서 살레탑을 사살한 바 있는 김윤후의 固守防禦에 부딪혔기 때문이다.<sup>25)</sup> 이후 조정은 충주 고수의 공로를 인정하여 國原京으로 승격시켰다. 이 무렵 고종은 중신들의 간곡한 권유 끝에 安慶公 涓(고종의 제2자)을 입조시키기로 결정하자 몽고군은 물러갔다. 이에 조정에서는 반역한 이현을 참하는 등 징벌하였다.

## 바. 車羅大의 제6차 침공(1254년, 고종41년~1259년, 고종46년)

몽고는 고려의 태도변화를 기대하였으나 역시 搖之不動이자 차라대로 하여금 1254년

주 23) 『고려사』 권101, 열전14, 文漢卿 傳 附 權世侯, 椽山城은 4면이 절벽으로 오직 人馬가 겨우 다니는 길 하나가 있을 뿐인데 防護別監 권세후는 城의 險固함을 믿고 음주 등 방비를 소홀히 하다 砲·사다리·火箭 등을 사용한 몽고군에 함락되었다. 이때 권세후는 자결하고, 城中 사람 약 4,700여명이 피살되었는데 몽고병은 1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살해하고, 婦女·小兒는 兵卒에게 나누어 주었다.

24) 『고려사』 권25, 元宗3년 12월, 『고려사절요』 권18, 元宗3년 12월, '六事'는 당시 몽고가 다룬 민족이나 지역을 정벌 후 통치하는 제도로서 ① 納質(볼모), ② 助軍(援軍, 즉 군대를 동원하여 도우는 것), ③ 輸糧(식량 지원 또는 운송), ④ 設驛(驛站的 설치), ⑤ 供戶數籍(호구조사), ⑥ 達魯花赤(다루가치, 민정감독관) 설치를 말한다.

25) 『고려사』 권103, 열전16, 金允候 傳, 『고려사절요』 권17, 고종40년 12월, 忠州城 전투에서 김윤후의 불굴의 항전이 있었다. 당시 70여 일 동안 적군에게 포위되어 군량이 거의 다 하게 되자, 김윤후는 백성을 격려하여 "만일 능히 힘을 낸다면 貴賤을 막론하고 모두 官爵을 내리도록 주선하리라"하고, 官奴의 文籍을 불사르고, 또 노획한 牛馬를 나누어 주니 모두 분전하였다. 이 결과 충주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부터 1259년까지 6년간 전후 4차례에 걸쳐 침공하였다. 제1회 침공의 동기는 고려가 이현 등 반역자를 처단한데 있었다. 1254년(고려 고종41, 몽고 헌종4) 7월 22일 침공을 개시한 차라대는 불모인 안경공 창을 귀국시켜 강화도 조정을 안심시키는 일방 국왕을 불모로 삼겠다고 협박하는 등 和戰의 양면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때 서북면 본군은 서경(평양)·개경(개성)·남경(서울)·충주를 거쳐 경상도를 집중 공략하여 陝州(陝川)·東京(慶州)까지 유린하였다. 8월 22일에 대장군 李長을 차라대에게 보내 철병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군신과 백성이 출륙하면 荆髮(開荆, 몽고풍속의 두발모양)하거나 국왕을 데려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해의 병화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살육된 자가 헤아릴 수없이 많았다.<sup>26)</sup> 동북면의 몽고군은 鐵嶺(江原·咸鏡의 경계)과 登州(安邊)까지 진출하였는데 그해 2월 별초가 협공하여 섬멸하기도 하였다. 이때 몽제(헌종)는 고려의 태도 변화를 보기 위해 잠시 회군하도록 하여 차라대 군대는 의주 등 국경부근에서 대기상태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전히 출륙 조짐이 없으므로 헌종은 다시 차라대에게 철병을 명하여 1255년(고려 고종42, 몽고 헌종5) 9월에 제2회 침공을 개시하였다. 그들이 회군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再侵한 것은 약화된 고려군이 復元할 수 있는 機會를 박탈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水戰을 강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차라대 본군은 남경(서울)·公州를 거쳐 이번에는 全州·海陽(光州) 등 전라도를 집중 공략하였다. 그리고 수군으로 하여금 靈光·羅州 등지를 거쳐 서해 島嶼를 공격하여 강화도에 이르는 沿岸 海路의 차단을 기도하였다. 이에 조정은 將軍 李廣·宋君斐를 파견하여 적들의 도서 공격을 저지하였다. 약 1년간 전라도 등지에서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던 차라대 군대는 강화도 조정을 위협하려는 듯 1256년(고종43) 8월에 북상하여 鹽河 밖 通津山·守安縣(金浦) 일대에 주둔하였다. 9월 2일에 헌종은 사자 徐趾를 보내어 회군을 명하였는데 이는 進獻使 金守剛(전년 6월 입조)의 간곡한 철병요청을 몽제가 수용한데 있었다.<sup>27)</sup> 이리하여 9월 23일에 차라대 군대는 철군하였다. 1257년(고종44) 윤4월에 항몽책을 고수하던 中書令 崔沆이 죽고 그의 아들 崔煥가 집권하였으나 抗蒙 基調를 바꿀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주 26) 『고려사』 권24, 고종41년 12월, “이해 몽고군에 포로로 잡힌 자가 20만 6천8백여 명이며 살육된 자를 셀 수가 없었고 그들이 지나간 州郡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는데 몽고 병란 이래 이보다 심한 때는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7) 『고려사』 권102, 열전15, 金守剛 傳, 『고려사』 권24, 고종43년 9·10월, 몽고에 들어간 김수강이 蒙帝를 따라 和林에 들어가 罷兵을 빌었더니 몽제는 出陸하지 않은 것을 들어 거절하였다. 이에 김수강은 출륙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비유하건데 獵人이 짐승을 좇아 窟穴에 들어가게 하고 弓矢로써 그 앞을 지키면 困獸가 어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하니 몽제도 그렇게 여긴 나머지 김수강을 돌아가게 하는 동시에 徐趾를 車羅大에게 보내어 回軍을 명하였다.

그리하여 차라대는 1257년(고종44) 5월에 대군을 이끌고 제3회 침공하였다. 그들의 재침은 무인정권의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대몽항쟁이 그대로 계승된데 있었다. 동년 5월에 동북면에서 3,000餘 騎가 登州(安邊)까지 침입하더니 6월에 甫波大 군대가 개경(개성)·남경(서울)을 거쳐 稷山으로 내려왔고, 뒤이어 후속부대가 서경(평양)에 쇄도하자 조정에서는 侍御史 金軾을 차라대에게 보내 철병을 교섭하였더니 그가 국왕의 출륙과 태자의 입조를 요구하였다. 조정에서 다른 방도가 없어 왕자를 입조시켜 강화하기로 결정하자 차라대는 鹽州(延安)로 물러나 6월 9일에 보과대 군대도 철수시켰다. 한편 앞서(동년 5월) 몽고에 건너간 김수강이 헌종에게 회군을 간청하였더니 그것을 허락하고 사신을 김수강에 대동시켜 보내왔다.<sup>28)</sup> 이에 조정에서는 성의를 보이려고 동년 12월에 태자 대신에 安慶公 湑(태자의 弟) 등을 몽고에 입조시켰다. 1258년(고종45) 3월에 大司成 柳璈·別將 金仁俊(뒤에 金俊으로 개명)·將軍 朴松庇·都領郎將 林衍 등이 권신 崔誼를 죽임으로써 4대 60여년에 걸친 최씨정권이 끝을 맺었다. 강화도 조정이 여전히 출륙을 거부하므로 몽제(헌종)는 차라대로 하여금 재차 침공을 명하였다. 제4회 침공은 태자가 아닌 왕자를 입조시켰고, 최씨정권 몰락 후에도 항몽책을 고수하는데 따른 것이었다. 1258년(고종45) 2월에 차라대 군대가 남하, 강화도 부근인 昇天府·交河·峯城(坡州)·守安(通津)·童城(金浦) 등지에 주둔하여 강화도 조정을 직접 압박하였다.

동년 10월에 동북면에서 散吉·普只의 군대가 들어와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자 高州(高原)·和州(永興), 定州·長州(이상 定平)·宣州(德源)·文州(文川) 등 15州的 백성을 猪島(永興郡)·竹島(德源郡) 등지로 옮겼다. 그해 12월에 산길 등이 古和州(永興)에 주둔하자 龍州縣의 趙暉와 定州(이상 定平郡)의 卓靑 등이 몽고병을 끌어들여 東北面兵馬使 愼執平 등을 죽이고 和州(永興) 以北을 몽고에 歸附하였다. 몽고는 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화주에 雙城摠管府를 두고 조취로 總官, 탁청으로 萬戶를 각각 삼았다. 이 무렵에 병화와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던 일부 백성들이 防護別監 등 관원을 죽이고 투항하는 반역이 적지 않았다.<sup>29)</sup> 고려 조정은 항쟁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몽고에 굴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해 12월 29일 將軍 朴希實 등을 차라대에게 보내 그동안 최이·최항의 專斷政治 때문에 출륙하지 못했다는 뜻을 전하였다. 1259년(고종46) 3월 8일에 차라대의 사자 溫陽加大 등이 강화도에 왔는데 그때 太子 僖(후일 元宗)이 입조일정을 통보하자 몽고군은 북쪽으로 물러났다. 태자는 4월 21일에 參知政事 李世材·樞密院副使 金寶鼎 등 40명과 함께 國書 등을 가지고 몽고로 갔다. 한편 6월 8일부터 余愁達·

주 28) 『고려사』 권24, 고종44년 9월, 『고려사』 권102, 열전15, 金守剛 傳.

29) 『고려사』 권24, 고종45년 5월 條에 博州(博川) 葦島, 同年 9월 條에 廣福山城(伊川), 同年 12월 條에 達甫城(谷山 達寶山城 추정)에서 각각 피난민들이 山城·海島에 入保하였다가 鎮撫나온 관원을 살해하거나 투옥시키고 몽고군에 투항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松吉 등은 사자 周者·陶古 등을 강화도에 들여보내 內·外城 해체를 감시감독하게 하였다. 이해 6월 30일에 고종, 7월에 몽제 헌종이 각각 세상을 뜨니 대몽고정책에 큰 변화가 왔다. 1260년 3월에 몽고 忽必烈(헌종의 第2弟)이 世祖로서 제위에 오르고, 4월에 太子 儁이 귀국하여 元宗에 즉위하니 일시적으로 평화가 찾아왔다.<sup>30)</sup> 조정은 동년 11월에 군사로 하여금 舊京(開京)에 궁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원종은 항몽책을 고수하던 侍中 金俊(舊名은 金仁俊)을 제거한 후 1264년(고려 원종5, 몽고 세조5) 8월에 몽고 行에 나서 9월에 燕京(北京)에서 몽제에게 親朝하니 이로써 몽고에 服屬되었다. 그 후 김준 제거에 앞장섰던 권신 林衍 역시 抗蒙策을 고수하며 대몽 和議를 추진하는 원종을 廢立시켰다가 몽고의 압박으로 復位시켰다. 1269년(원종10) 10월 3일에 崔坦 등이 서경 반란을 일으켜 귀부하자 이듬해 몽제는 6城 지역에 東寧府를 설치, 慈悲嶺 以北을 몽고의 영토로 만들었다. 원종은 1269년(원종10) 12월 19일에 재차 몽고에 들어가 양국간 和好를 위해 태자와 몽고 공주와의 혼인을 제의하고 몽고군의 호위 속에 귀국하였다. 임연은 원종이 몽고군에 기반하여 자기를 누르고 출륙 환도할 것에 대비하다가 울화병과 등창으로 원종이 귀국하기 직전 죽었다. 원종은 舊京(開京)으로의 환도를 명하는 한편 이에 대항하는 敎定別監 林惟茂(임연의 제2자) 등을 제거하니 이로써 1백년간 지속된 무인정권이 종말을 고하였다.

#### IV. 안보적 관점에서 본 항몽사적 교훈

여·몽 전쟁경과를 통해 안보적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먼저 政略的인 안보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무인정권이 國權守護보다 그들의 政權維持, 既得權 보호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강화천도, 대몽항쟁을 전개한 것은 失策이었다.

그리고 초기전투에 실패하면 다시 만회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몽고의 제1차 침공시 북계의 諸城이 무너졌는데 終戰 時까지 회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지배권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收復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또한 본토를 포기하면 모든 가용요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강화천도와 동시에 본토의 모든 자원은 몽고군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주 30) 元宗은 세자로 있을 때, 몽고를 방문하여 忽必烈(즉위 전 世祖)을 만나(1259년 7월) 麗·蒙 戰爭을 종결시켰고, 즉위한 후에는 두 차례(1264년 8월, 1269년 12월)나 蒙帝(世祖)에게 親朝하며 우호적인 여·몽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몽고군을 대동하여 귀국 후 出陸 還都함으로써 三別抄의 지지는 받지 못하였다.



그런가 하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戰爭指導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강화천도 이전에는 승려·천민·초적 등 각계각층이 對蒙 抗戰에 적극 나섰으나 그 이후에는 강화도 정부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抗戰水準이 급격히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고려가 대몽항쟁에서 패배한 구체적인 교훈을 제시하면,

**첫째, 고려는 전통적인 抵抗精神 계승에 실패하였다.**

먼저 몽고군의 기세에 압도당한 나머지 敗戰意識에 사로잡혀 戰意를 상실하였다. 몽고군은 십전법 편성에 의한 일사불란한 지휘통제, 射術·전투중량 경량화 등으로 신속한 기동성 발휘<sup>31)</sup>, 騎兵의 장거리 작전수행능력, 마비를 유발하는 심리전 등을 통해 서하, 금 등에 連戰連勝함으로써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였다. 반면, 고려군은 공포에 질려 義州城 전투 등에서 보듯 對敵하기도 전에 투항하였다. 거기에다 북계 諸城 중심의 방어는 몽고군의 迂廻機動으로 위협이 되지 못하였고, 몽고기병의 중심 돌파로 포위되면서 투항이 두드러졌다. 그렇지만 귀주성과 같이 몽고군의 신장된 병참선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要險地에 대한 몽고군의 공격시에는 김경손·박서 등의 항전에서 보듯이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리고 고려는 전통적인 外侵擊退思想을 일시 방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는 612년 隋 煬帝가 이끄는 113만 대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唐 太宗의 침략 야욕을 번번이 좌절시키는 등 외침에 맞서 극렬하게 저항하였다. 일찍이 몽고에 입조하러 갔던 고려 太子 儁(후에 元宗)이 몽제(현종)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 大汗(황제)의 位를 차지하러 北還중인 忽必烈(현종의 第2弟, 후일의 世祖)을 만났을 때 그가 기뻐하며 “고려는 萬里 밖의 나라로서 당 태종이 親히 쳤으나 정복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고려 태자가 스스로 나에게 돌아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였듯이 고구려는 수·당의 大軍을 맞아 진취적 기상과 용맹,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결과 적국의 대군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抵抗精神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고려는 몽고 침공시 북계 諸城 중심으로 수세적인 방어만 하였을 뿐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임진강, 한강 등 천연장애물을 이용한 攻勢移轉을 시도하지 않았다. 거기에다 본토를 조기에 포기한데 따른 몽고군의 居民 통제로 전통적인 淸野戰術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였다.

주 31) 중앙일보, 2006. 7. 22, p.1, p.11, 몽고군의 활(角弓)은 작아서 휴대하기 간편하고 탄력이 뛰어났다. 최대사거리 315m에 달하였는데 당시로서는 첨단무기였다. 전투식량은 肉脯의 일종인데 가축 한 마리분의 고기를 말린 이 비상식량을 빵아 가축의 방광을 말린 통에 넣으면 병사 한 명의 1년분 식량이었다.

### 둘째, 戰爭指導力<sup>32)</sup> 발휘가 미약하였다.

이것은 단기적 안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먼저 무인정권 權益 위주의 항몽책이었다는 점이다. 최이 등이 주도한 대몽고정책에는 自主精神이 깃들여 있지만 또한 專斷의 權力을 유지하려는 욕구도 내포되어 있었다. 즉 승천부에 궁궐·성곽 수축 등 出陸 假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방위보다 정권유지를 우선시 하는 모습 등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당시 출륙 환도는 곧 그들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였기에 항몽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본토 백성의 다수가 항몽책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본토 거민의 입장에서 강화도 조정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인식과 함께 강화천도를 王權, 무인정권 등 특권계층만을 위한 항몽책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강화도 방비위주의 비조직적인 대몽항쟁이었다는 점이다. 당고의 제3차 침공시 야별초가 砥平縣民과 함께 야간에 몽고군을 기습하여 다수를 죽이고 군마를 탈취하는 등의 전과도 있었으나<sup>33)</sup> 이것이 도리어 본토 거민에 대한 보복적 만행만 키우는 경우도 많았다. 즉 일부 별초군이 소극적인 유격전을 전개한데 따른 몽고군의 報復心만 키워 도리어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본토를 몽고군에게 내어준 입장에서 손실된 전투력 복원 등이 제한되는데 따른 전투력 저하가 불가피하였고, 최이가 고수방어에 성공한 慈州副使 崔椿命을 처형하려 했던 경우 등에서 전쟁지도력 발휘가 매우 미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셋째, 협소한 강화도를 선택하여 守勢局面을 자초하였다.

먼저 강화천도가 대몽항쟁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무인정권의 避難策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일부 군대를 본토에 파송하여 방어군을 독려하기도 했지만 삼별초 등 정예군을 강화도 방비하는데 중점 복무시키고,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과 물자, 예산을 들여 水戰 防備施設을 추가 설치 및 보강하였다. 그러나 전장상황이 위급한 북계 등 본토에 추가 전투력 할당 등 필요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sup>34)</sup>

그리고 무인정권은 水戰 위주로 항몽책을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몽고군의 강화도 침공에 중점 대비하고, 만약 강화도가 몽고군에 피탈될 시에는 재차 사직을 다른 島嶼로

주 32)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육군인쇄창, 1999, p.494, 戰爭指導力(Direction of War)이란 “전시 국력운용에 관한 지표로서 전쟁의 수행을 위한 요강의 제정, 무력발동에 따르는 통수권의 행사, 국가전략과 군사전략간의 통합, 조정 및 효율적인 통제 등 궁극적인 전쟁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 총역량을 전승획득에 집중시키도록 조직화 하는 지도역량과 기술”을 말한다.

33) 『고려사』 권23, 고종22년 10월조에 처음으로 고려군의 戰果가 기록되어 있다.

34) 金唐澤, 『高麗의 武人政權』, 國學資料院, 1999, pp.297~322, 崔氏政權이 이용한 군사력으로 는 私兵과 官軍이 있었는데, 사병은 家兵과 都房으로 나눌 수 있고, 관군의 대표적인 부대로는 三別抄(左·右別抄, 神義軍)가 있었다.

움길 계획(海島再遷計劃)도 준비해놓고 있었다.

또한 본토에서 山城·海島入保策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조정은 본토 백성을 거의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면서 몽고군 침공시 인근 산성이나 해도로 피신시키는 것이 보호시책의 전부였다. 그러면서 전시상황하 본토 백성에게 賦役,<sup>35)</sup> 租稅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여 원성을 샀다.

**넷째, 본토 내 인적·물적 자원을 조기에 상실하였다.**

먼저 북계 지역을 조기 포기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義州防守將軍 趙叔昌의 투항 등에서 보듯 北·東界 要地에만 鎭이 설치되어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방어할 수단이 없었던 州鎭軍체제하에서 투항하거나 귀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는데도 사전 대비책 강구에 소홀하였다. 그리고 거점 중심의 방어체제가 붕괴될 시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어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金慶孫·朴犀, 崔椿命 등이 혈전을 치르고 龜州, 慈州 고수방어에 성공하였음에도 조정에서 항복을 권유함으로써 북계를 방비할 수 있는 여력마저 상실하였다.

그리고 후방지역에 대한 지배권이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귀주성과 같이 주 기동로를 위협하는 要衝地의 거점이 아닌 이상 몽고군은 가급적 迂廻機動을 실시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군의 방비대책이 허술하였다. 그리하여 적군으로 하여금 중심깊은 기동과 거의 무제한으로 본토를 유린하도록 만들었다.<sup>36)</sup>

또한 일부 본토민의 叛起와 함께 親몽고 정서도 유발되었다는 점이다. 강화천도를 전후하여 서경에서 어사대의 李通, 畢賢甫·洪福源, 충주에서 官奴 등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에서 보듯이 최씨정권의 강압적인 천도, 대몽항쟁이 지방사회, 특히 본토 거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본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강화도 조정의 권위가 실추되었고, 거기다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백성은 “오히려 蒙兵이 오는 것을 기뻐했다”고 할 정도였다.<sup>38)</sup>

주 35) 『고려사절요』 권16, 고종21년 10월, “崔怡(瑀)가 자신의 집을 짓는데 배로 開京의 재목을 실어오게 하고 또 집 동산에 심을 소나무·잣나무를 실어오다 사람이 많이 빠져 죽었는데 그 園林의 넓이가 무려 수십리였다”는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6) 『고려사』 권23, 고종18년 12월, “몽고병이 지나는 곳마다 파괴되고 학살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고려사』 권99, 崔惟清 附 崔璘 傳, “지금 백성들은 10명중 2~3명 남아있고, 만약 몽고가 물러가지 않으면 백성들은 농사를 전혀 못하게 되어 모두 적에게 투항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37) 申安湜, 『高麗 武人政權과 地方社會』, 景仁文化社, 2002, pp.263~265.

38) 『고려사』 권24, 고종43년 2월, 『고려사절요』 권17, 고종43년 2월, 車羅大의 제6차 제1, 2회 침공시 “조정은 6도에 宣旨使用別監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의 부정과 부패, 사리와 사육의 행위가 극심하여 백성들은 매우 고난을 겪게 되면서 도리어 몽고병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상태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 다섯째, 對蒙 抗爭 持續能力 유지가 곤란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먼저 강화도 조정의 主導權이 상실된 때문이었다. 이는 고려의 지배력이 강화도와 서·남해 일부에만 국한되어 행사되는데 기인하였다. 반면 본토는 사실상 몽고군이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본토 거민의 民心離反과 稅收의 감소는 무인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sup>39)</sup>

그리고 강화도 조정 자체로는 소요자원 대비 그 根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戰火속에서 본토 백성이 가꾸어 놓은 곡식을 몽고군이 모두 수확해 갔으니 강화도 조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궁핍하게 되었다.<sup>40)</sup> 당시에 전라·경상·제주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몽고군의 직접적인 지배아래 있었고 강화도로 들어가는 陸路는 사용이 불가능한 가운데 서해의 沿岸 水路만 이용이 가능하고, 수송을 위한 가용선박 등이 부족하였다.

또한 장기간으로 가면서 작전지속능력이 지속 저하되었다. 초기에는 본토에 대한 행정력이 미칠 수 있어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 유지가 가능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작전지속능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강화천도 이후에는 본토 각 州縣郡의 기능이 폐쇄되었거나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다.

### 여섯째, 대 몽고 연합전선이 구축되지 않았다.

이는 먼저 고려가 요동세력으로부터 연합전선 구축 제안을 받고도 끝까지 외면한데 있었다. 일찍이 동진에서 몽고의 동태에 관한 國書를 보내오자 고려가 이에 答書를 보낸 적은 있으나 국서교환으로 그쳤다.<sup>41)</sup> 그 당시에 이미 북방의 금, 동진 등은 몽고의 능력과 대적하면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동맹을 제안해왔으나 고려에서는 그들이 자국의 이익증진만을 위해 동맹을 제안하였을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주변국과 선린외교를 포기하고 독자노선을 추구하였다. 이는 금, 거란, 倭 등이 오랜 기간 동안 북계와 동·서·남해안을 침입하는 등 危害勢力으로만 존재하였고, 관념상 오랑캐와 동맹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기본인식에서 비롯되었다.

### 일곱째, 일부 군대가 무인정권의 私兵으로 전락하였다.

먼저 별초 등 일부 군대의 기본가치가 변질되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가 많았다. 일부 별초군이 해도에 입보하지 않았다 하여 양민을 타살하는 만행에서 보듯 국민에 대한 惡行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다. 더구나 무인정권하에서 추진된 '해

주 39) 金唐澤, 『高麗 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7, pp.200~201.

40) 盧啓鉉, 『高麗外交史』, 甲寅出版社, 1994, p.298.

41) 1224년(고종11) 정월에 東眞은 2통의 牒狀을 고려에 보내왔는데 하나는 “이미 몽고와의 舊好를 끊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양국이 각각 互市場을 열어 교역하자”는 것이었는데 고려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동북면 등지에 침입하였다. 1232년(고종19)에 고려는 동진으로부터 국서를 받고 몽고의 침공과 蒙將 撒禮塔 射殺 등 戰況이 담긴 답서를 보낸 바 있다.

도입보책'이 본토 거민에게는 몽고군의 약탈보다 훨씬 가혹한 것이었다.<sup>42)</sup> 또한 몽고군의 앞잡이가 되어 반역한 西京郎將 洪福源 등에서 보듯 군인 본분에 역행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무인정권의 정략적인 군대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국록을 받는 夜別抄, 神義軍 등이 최이, 최항의 私兵으로 복무하면서 무인정권의 유지, 政敵 제거, 출륙 환도여론 목살 등에 이용되었다.

또한 특정 군대와 본토 군대를 差別化하였다는 점이다. 최이 등은 무인정권 유지와 무관한 本土의 官軍 육성에 소홀하였다.

그런가 하면 군사력 낭비요소도 적지 않았다. 終戰 時까지 몽고군의 침공이 없었던 강화도의 방비력 보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결국 몽고군 감시단의 감독하에 內·外城 등의 해체작업이 이루어졌고, 民亂 진압 등에 군대 전환운용 등으로 전투력의 발휘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 V. 미래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발전방향

고려 대몽항쟁의 교훈을 통해 미래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발전방향은 먼저 국가수호를 위한 안보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 私兵集團 '都房'과 人事行政 私設機關 '政房' 설치 운영 등을 통해 專權을 장악한 무인정권처럼 政略的, 정권유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안보정책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國權 喪失 등 난국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의 총력전 수행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았던 강화천도를 강압적으로 추진하였지만 모든 것이 시급하게 추진된데 따른 부작용과 함께 민심이반으로 국력의 결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평시부터 유사시에 대비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무인정권이 중·장기적인 안보비전이 불비한 가운데 대몽고정책 관련 '主戰'과 '主和'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시급하게 강화천도를 강행하였지만 그때는 이미 효과적으로 對敵하기에는 力不足인 상황으로 변모되었다.

주 42) 尹龍赫, 「高麗의 海島立保策과 戰略變化-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 『歷史教育』 32, 1982, pp.66~69. (大將軍 宋吉儒가) 慶尙州道の 水路防護別監이 되어 州縣의 인물을 檢察하여 섬으로 들여보내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때려서 죽이고, 혹은 긴 새끼로 사람의 목을 잇달아 엮어서 별초를 시켜 양끝을 잡고 끌어서 큰 물속에 던져 거의 죽게 되면 꺼내고 조금 깨어나면 다시 그와 같이 하였다. 또 백성들이 재산을 아까워해서 떠나지 않을까 우려하여 그 집과 곡식에 불을 질러서 죽은 사람이 열에 8~9명에 이르렀다(『고려사절요』 권17, 고종45년 정월).



그런가 하면 미래 최첨단 情報科學軍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여·몽 전쟁 훨씬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위협상황은 大同小異할 것으로 예견된다. 즉 북방 대륙세력의 南進과 해양세력의 北進으로 상호 '힘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몽항쟁에 기초한 미래 국가안보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국민적 總力戰 遂行意志를 지속적으로 고양시켜야 한다.**

먼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에서 '不變의 威脅'이 상존하고 있음을 재인식시켜야 한다. 역사상 한반도는 북방 대륙세력의 南進과 남방 해양세력의 大陸 進出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勢力版圖는 미래에도 그와 유사한 구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은 불가피하게 常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인 민족국가들의 수도가 즐본성-국내성-평양-개성-서울로 점차 南下하는 현상에서 보여지듯 故土 縮小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威脅意識 內面化 등 정신무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족의 생존술로서 전통적인 自彊自衛精神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스스로 힘써 강건하게 함으로써 外敵을 방비할 수 있는 저항정신의 계승과 고구려가 수·당의 침입시 적국보다 적은 전투력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강인한 민족적 기질, 즉 누란의 위기시마다 전 국민이 渾然一體가 되어 더욱 결속력을 갖는 民族國家意識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전·평시 國家危機管理 능력을 지속 배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 안보비전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 대치상황, 대량 살상무기(WMD),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인 위협, 잠재적 위협세력 등을 상정하고, 이러한 다양한 위협세력으로부터 미래 군사력 건설소요를 도출하고, 가상적국을 억제 또는 격퇴시키기 위한 군사적 혁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대몽항쟁과 관련 당시 실권자 최이는 천도 등 국가의 중요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전한 의견수렴보다 거의 일방통행식의 의사결정으로 大義를 그르치는 過誤를 초래하였다.<sup>43)</sup> 당시 상황에서 대몽항쟁

주 43) 金唐澤, 『高麗의 武人政權』, 國學資料院, 1999, pp.186~203, 당시 宰樞의 회의장소가 최이의 私第인 상황에서 재추들이 최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고, 최이는 재추로 하여금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주도록 만들기 위해 재추회의를 소집하였다고 이해되며, 최이가 이미 천도를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추들은 천도를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이가 두려워 감히 말을 못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국가 중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왕·재추·권신을 비롯한 보다 폭넓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대몽화의로 後日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2가지 안보정책을 구상할 수 있었다. 결국 최이는 부족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강화도에서 대몽항쟁을 선택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抗爭限界點에 도달하여 복속되었다.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 존속차원에서 보다 발전된 안보비전 구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시부터 예상되는 안보위협 상황별 순차적인 危機管理 및 對備計劃 시행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같은 중요정책분야에 있어서는 위협상황 전개의 변수가 매우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장기적 안보위기사황을 가정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연도기준 最終安保狀態를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豫告의 危機管理, 전쟁대비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핵 실험을 시도한다거나 미국이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상황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시행할 수 있는 安保準備態勢를 갖추지 않으면 자칫 失機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전쟁지도능력을 지속 배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쟁지도 및 전쟁수행능력 발휘, 국가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評價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전쟁지도능력 등을 검토하여 취약한 분야를 보완시킬 필요성이 있다.

### 셋째, 攻勢的 安保與件 조성 및 決定的 作戰遂行을 보장하여야 한다.

먼저 국권수호차원의 전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목표’가 되어야 하며 과연 이런 요소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하여 재설정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무인정권이 ‘대몽 화의’에서 ‘대몽 척화’로 급선회하여 강화천도 추진, 당시 대제국인 몽고를 상대로 협소한 강화도에서 항쟁하겠다는 전쟁 목표는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즉 고려는 병화로 수십만 명의 인명손실과 막대한 재산피해, 故土 喪失, 그리고 복속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이겨놓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져놓고 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領土高權에 대한 수호의지를 제고시켜야 한다. 중국이 고구려·발해사 등을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東北工程’,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영토에 대한 直·間接侵略이 점증하고 있으므로 주변국에 대한 영토고권 수호의지를 확신시켜야 한다.

주 44) 張浚翼, 『北韓 核·미사일 戰爭』, 瑞文堂, 1999, pp.180~184,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정보나 첩보는 아직 없다”고 하였다.

중앙일보, 2006. 7. 25, p.3. 호주 언론(ABC방송과 디에이지)은 “미국 공군 B-1, B-2, B-52 폭격기들이 이번 주 호주에서 북한과 이란 등의 핵·미사일 시설 정밀공격을 상정한 폭격훈련을 실시한다”고 보도(2006. 7. 24)하였다.

또한 情報優位에 기반한 效果中心作戰(EBO)을 발전시켜야 한다. 고려가 대몽항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북계 諸 城이 조기에 붕괴됨으로써 결국 수세국면을 극복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방어만으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어시 공세행동, 공세이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라크戰 時 미군은 C4ISR+PGMs 체계하에 이라크의 전쟁지도부, 지휘통제시설 등을 정밀 타격하여 이라크군의 전의를 박탈, 絶對的 癱瘓 달성 등 「電子的 電擊戰」으로 新전략적 사고를 태동시켰다.<sup>45)</sup>

### 넷째, 국민적 安保價値觀 공유를 확대하여야 한다.

먼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성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유사시 불확실한 전장상황 속에서 그 실상 전파나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전황의 有·不利를 떠나 실제의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이 處仁城 전투에서 撒禮塔를 사살한 바 있는 金允侯는 다시 忠州城 전투에서 몽고군에 70여 일간 포위된 채로 악전고투하면서도 城民에게 믿음을 보이고, 모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함으로써 결국 몽고군을 격퇴시킨 전례에서 보듯 저변에서 안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필요한 安保協助 및 聲援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위기상황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찍이 몽고 太祖(징기즈칸)는 국가가 戰死者 자녀의 養育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대외 정벌간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용맹한 군대를 만들었다.<sup>46)</sup> 반면 여·몽 전쟁시 강화도 조정은 침략군으로부터 본토 거민을 보호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에서 投蒙 등 불행한 사태가 유발되었다.

또한 국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대다수 청소년이 外侵의 역사를 학습할 기회가 부족한 나머지 안보의식면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sup>47)</sup> 우선 각급 학교에서 國難克服史 등 교과목 추가 편성과 安保戰迹地 견학 등 교육실시에 내실을 기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족역사의식, 상무·저항정신 고양 등 유사시에 대비한 평시 안보교육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 45) 申在鉉, 「이라크戰 分析을 통한 未來戰 遂行 發展方向」, 『軍事研究』 121, 陸軍本部, 2005, pp.88~115,

C4ISR+PGMs(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Precision Guided Munitions)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정밀타격체계를 말한다.

46) 국방일보, 2006. 7. 28, p.11, 징기즈칸 군대 용맹성의 근원은 몽고 태조(징기즈칸)가 “전사한 將卒들의 자녀들을 궁으로 데려와 朕의 자식과 똑같이 養育하라”고 지시한 勅命에 그 비밀이 있었다.

47) 경향신문, 2006. 8. 14, p.2, 외국과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답한 일본 청소년·대학생은 41.1%인데 비해 한국은 1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후방지역 안정유지와 作戰持續能力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차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대와 유사시 전쟁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시부터 우발상황을 포함한 국가비상대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非常對備資源管理法 등에 의거 기본적으로 유사시 국가동원능력은 발휘된다고 보지만 여·몽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後退 등으로 후방지역작전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경우 국가의 동원능력범위가 축소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기 계획된 국가동원계획은 불가피하게 수정, 변경 등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방지역이 안정적으로 관리 및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국 또는 현존 및 잠재적 위협세력의 위해활동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 방호, 지·해·공 교통망 소통보장, 기능인력의 임무수행능력 발휘 보장 등이 중단없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적 특수전부대의 위협 등을 고려한 예비군 전력수준 유지 등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가 보장되는 동원소요판단과 전력증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군수에 바탕을 둔 작전지속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래 첨단무기·장비 운용 등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 비축물자·장비 성능개선, 자원관리상 透明性 확보 등 지속적으로 低費用·高效率의 국방운영체제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韓·美 同盟, 多者間 安保協力體制를 지속 강화해야 한다.**

먼저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어온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미군은 6·25 남침전쟁에 참전하여 3만 6,940명이 전사하는 등 값진 희생을 치르고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였다.<sup>48)</sup> 당시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當爲性에 기초하여 韓·美 血盟關係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한·미 동맹과 협력적 자주국방 관계를 논의하면서 일부 견해차이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sup>49)</sup> 우선 한·미 동맹의 성격부터 명확히 규정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GPR)과 연계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주한미군은 현재까지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戰爭 抑制, 安保費用 節減으로 경제발전

주 48) 국방일보, 2006. 6. 16, p.9, 미군은 3년간의 한국전쟁 기간에 연인원 178만 9천여 명이 참전하여 그중 전사 3만 6,940명, 부상 9만 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등 총 13만 7,250명이 생면부지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다.

49) 한·미 동맹관련 “...평화체제 이후의 한국의 안보전략은 한국주도의 자주국방을 하위구조로 하고 그 기반위에 한·미 동맹관계를 상위구조로 하는 자주국방체제를 확립하고...” (황원탁, 「정전협정 대체의 과제와 평화협정 수립의 요건」, 『외교』 77, 韓國外交協會, 2006. 4, pp.34~35)는 上部構造로 보는 입장이며, “협력적 자주국방은 공고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 격퇴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갖추어나가는 것”(국방일보, 2006. 6. 16, p.9)은 下部構造로 보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여, 동북아 평화유지 등 그 공헌도는 지대하다고 본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이어 제반 후속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에 대해 진정으로 고마움이 뒷받침된 가운데 주둔군 지위 협정(SOFA) 등에 의거한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對美關係에 있어서 이런 믿음이 훼손될 경우 아무리 좋은 대미정책을 제시하고 합의내용을 잘 이행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현재 북핵·미사일 문제 등 현안과 관련 6者 會談이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sup>50)</sup> 등 유엔에서 정한 큰 틀 안에서 북핵·미사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軍備競爭이 촉발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을 포함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해 군비경쟁 방지노력 등이 긴요하다고 본다.

#### 일곱째, ‘국민의 軍隊價値’를 제고시켜야 한다.

먼저 군 스스로 ‘국민의 군대가치’ 실천에 매진해야 한다. 여·몽 전쟁에서 보듯 무인정권 주도하에 ‘이미 저놓고 대몽항쟁’을 전개한 그런 우둔한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군대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당시 일부 별초군의 본토 거민에 대한 惡行 등으로 인해 投蒙 등 親몽고 정서가 유발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본다. 무릇 軍隊와 國民은 ‘물고기’와 ‘물’의 관계로서 “물을 떠난 물고기는 생존할 수 없다”는 爲民精神을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군대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여·몽 전쟁시 일부 별초가 최이, 최항의 私兵으로 복무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역행한 모습에서 보듯 특정정권의 유지, 강화 등에 앞장섰던 군대가 나중에 舊京(開京)으로의 還都를 거부하며 강화도-진도-제주도로 이어지는 三別抄의 亂을 통해 反蒙古, 反開京政府의 기치를 들었다고 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VI. 결 론

고려와 몽고의 관계는 몽고·동진의 연합군이 강동성을 공격하여 당시 고려를 침입하

주 5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 7. 16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2006. 7. 5)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 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제1695호)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 및 중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조정, 핵심 쟁점인 ‘유엔 헌장 7장에 따라’라는 부분을 삭제한 절충안을 상정해 중국·러시아를 포함 15개 이사국 만장일치(15-0)로 통과시켰다.



던 거란의 위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몽고는 사신 저고여 사건을 내세워 단교하고 1231년 제1차 침공하였으나 사전 대비책이 허술하였던 고려로서는 衆寡不敵으로 화의를 간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몽고의 고려에 대한 정복야욕은 더욱 노골화되었으며, 권신 최이 등 무인정권은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급기야 항몽책의 일환으로 강화천도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조정에서 主戰派와 主和派간 이견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국권수호를 위한 노력결집이 미약하였고, 본토 거민의 다수가 강화천도를 원하지 않았지만 무인정권은 그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강압적인 수단으로 반대 의견을 묵살시키고 대몽항쟁에 나서게 되었다. 몽고는 강화천도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여 고려 국왕의 출륙과 친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1232년부터 1259년까지 전후 8회에 걸쳐 고려를 침공하여 연인원 20여만 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등 병화의 피해는 형언할 수 없었다.

당시 무인정권은 조기에 본토를 포기한 나머지 인적·물적자원 부족 등 작전적 행동의 자유가 갈수록 속박당한 반면 몽고군은 조기에 본토를 장악함으로써 점차 작전적 행동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당시 왕족·권신 등 특권계층을 위한 천도라는 성격 탓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척 임한 정치적 결정이었으며, 본토 거민 대다수가 침략군의 무차별적인 학살과 수탈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강화도 조정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일부 投蒙 등 親몽고 정서도 유발되어 무인정권 위주의 대몽항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고려 대몽항쟁을 통해 안보적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먼저 정략적인 임시방편의 국방정책은 실패할 수 있고, 초기전투에 실패하면 戰勢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본토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상실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전쟁지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고려군이 몽고군에 패배한 것은 고구려 등의 전통적인 저항정신 계승에 소홀하였고, 무인정권이 주도한 전쟁지도력 발휘가 미약하였으며, 협소한 강화도를 선택한 나머지 수세국면 자초와 본토 내 인적·물적 자원을 조기 상실한데 있었다. 그리고 대몽항쟁 지속능력이 유지될 수 없었고, 북방의 동진·금, 남방의 倭 등과 대몽고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저조하였으며, 별초 등 일부 군대가 무인정권의 私兵으로 전락한데 있었다.

이와 같은 대몽항쟁 교훈을 통해 미래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발전방향은 먼저 국가 수호차원의 안보정책을 추진하는 일방 평시부터 유사시에 대비하는 준비된 안보전략이 수립되어 '이겨놓고 싸우는 군사대비태세'를 강구하고, 최첨단 정보과학군을 지속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적 안보가치관의 공유 확대를 통한 총력전 수행의지를 고양시키고, 전·평시 국가위기 관리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함은 물론 공세적 안보여건 조성 및 결정적 작전보장과 후방지역 안정유지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며, '국민의 軍隊

價値'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당시 무인정권은 안보비전이 불비한 가운데 수세적인 대몽항쟁으로 일관함으로써 이미 저놓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豫告된 服屬'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전 국민과 더불어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편성 및 조직하고, 전통적인 저항정신 등 潛在能力을 발휘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취약하였다.

따라서 국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정부의 가치 즉 '以民爲天(국민을 하늘같이 섬김)'의 사상을 기반으로 평시부터 국민적 통합에 기초한 현존 및 잠재적·초국가적 위협을 상정한 가운데 중·장기적 국가안보전략을 발전시키고, 그에 따른 防衛充分的 軍事對備 態勢를 지속적으로 확충시켜나가는 民·官·軍의 통합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高麗史』  
 『高麗史節要』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육군인쇄창, 1999.  
 金唐澤, 『高麗의 武人政權』, 國學資料院, 1999.  
 金唐澤, 『高麗 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7.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5.  
 盧啓鉉, 『高麗外交史』, 甲寅出版社, 1994.  
 『東國李相國全集』  
 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90.  
 申安湜, 『高麗 武人政權과 地方社會』, 景仁文化社, 2002.  
 申安湜, 「高麗中期の 別抄軍」, 『建大史學』 7, 1989.  
 申在鉉, 「이라크戰 分析을 통한 未來戰 遂行 發展方向」, 『軍事研究』 121, 陸軍本部, 2005.  
 陸軍士官學校 戰史學科, 『韓國戰爭史』, 日新社, 1988.  
 尹龍赫, 「高麗의 海島立保策과 戰略變化 - 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 『歷史教育』 32, 1982.  
 李弘植, 『새 國史事典』, 教學社, 1996.  
 張浚翼, 『北韓 核·미사일 戰爭』, 瑞文堂, 1999.  
 황원탁, 「정전협정 대체의 과제와 평화협정 수립의 요건」, 『외교』 77, 韓國外交協會, 2006. 4.  
 경향신문, 2006. 8. 14.  
 국방일보, 2006. 6. 16.  
 국방일보, 2006. 7. 7.  
 국방일보, 2006. 7. 28.  
 중앙일보, 2006. 7. 22.  
 중앙일보, 2006. 7. 25.

# 戰鬪의 構成要素 側面에서 본 2차 동학농민전역(東學農民戰役)의 패인 분석 - 우금치전투(牛金峙戰鬪)를 중심으로 -

## 목 차

- 제1장 서 론
- 제2장 전투의 구성요소(構成要素)
- 제3장 동학농민전역(戰役) 개관(概觀)
- 제4장 전투의 구성요소측면에서 2차 동학농민전역의 패인 분석
- 제5장 결 론



중령 김유석  
(육군대학 군수과장)

## 제1장 서 론

###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동학농민전역(東學農民戰役)<sup>1)</sup>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학적 시각에서 발발원인, 남북접

주 1) “동학농민전역”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국사편찬위원회 및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을 포함한 학계에서는 반관반지주투쟁(反官反地主鬪爭) 및 사회개혁 측면에 주안을 두어 영주와 농노간의 개혁을 목적으로 발생했던 서양의 중세농민전쟁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 “동학농민전쟁”으로 칭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군사적인 관점에서 “전쟁”이란 용어가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간에 있어서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행사하여 자기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는 행위 또는 그러한 상태이고, “전역”(Campaign)은 주어진 시간과 공간 내에서 전략적 또는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연관된 군사작전인 점을 고려시 반일반침략에 입각한 일본세력과 개화과정 권타도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민군과 관군 및 일본연합군간의 무력충돌이 일련의 전투로 전개되었고 이런 일련의 전투를 총칭할 경우 “전쟁”이나 “전투”가 아닌 “전역”으로 칭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여기에서는 다소 생소하나마 “동학농민전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연합(南北接聯合), 집강소(執綱所)와 도소(都所)<sup>2)</sup>, 역사적 성격과 의의, 또는 일반적인 실패요인 등을 분석한 내용들은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자료들로는 평소 군에서 교육이나 훈련시 직접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차 동학농민전역시 전봉준 등의 지휘하에 봉기한 20여만 명의 농민군이 2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조선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하는 공격에서 절대적인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참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2차 동학농민군이 갖고 있는 한계성 및 전술적 과오 등을 지금까지 막연하고 일반적으로 논의되던 것에서 탈피하여 전투의 3요소라는 군사적 측면에서 2차 동학농민전역의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당시 성공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먼저 시기와 장소 측면에서 2차 동학농민전역에 국한하되, 1894년 10월 2차 봉기 이후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공주로 진격하는 11월 20일(음 10. 23)부터 12월 7일(음 11. 11)간에 있었던 이인(利仁), 효포(孝浦), 능치(能峙) 및 우금치전투(牛禁峙戰鬪)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내용도 2차 동학농민의 실패요인을 풀러(J. F. C. Fuller)가 *The Foundation of the Science of War*에서 제시한 이후 일반적으로 군사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투의 구성 3요소인 “전투력”, “시간”, “공간” 요소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은 분석의 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풀러가 언급한 내용을 기초로 전투의 구성 3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정리하고, 제3장은 분석대상인 1, 2차 동학농민전역에 대한 배경과 주요 경과를 간략히 알아본 다음, 본 논문의 주요부분인 제4장은 앞의 2장에서 제시한 분석의 틀인 전투의 구성 3요소를 갖고 3장에서 개략적으로 알아본 2차 동학농민전역을 실패요인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으로 실패요인 분석을 통해 당시 동학농민군이 성공하기 위해 택했어야만 했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논문주제의 특성상 역사자료의 해석을 기초로 하는 문헌조사에 의한 방법을 위주로 하되 현지 지형조사 및 지형연구 등을 통해 상호 비교분석하는 방법도 일부 병행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실제 세부 부대들의 기동계획, 전투모습, 상황도 및 부대 배치 등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도식자료(圖式資料)가 거의 없었고 서술자료도 매우 한정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 중에서 동학농민전역과 관련한 군사적 관점 또는 전쟁사 측면에서 기술 또는 연구한 자료가 매우 적은 관계로 이를 완벽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 2) 도소(都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본고 4장 1절 1항의 내용을 참조할 것.

그러므로 본문에 포함시킨 상황도는 역사적인 문헌자료 중 동학농민전역과 관련하여 서술 또는 도식(圖式)한 기록을 근간으로 현지 지형연구를 통해 도식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작성된 상황도 등과 같은 도식자료들은 1차적인 자료의 빈곤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심층 깊은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함을 밝혀두고자 한다.

## 제 2 장 전투의 구성요소(構成要素)

### 1절 전투력

#### 1. 전투력의 양(量)

전투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전투의 직접적인 수단인 전투역량 즉 '힘'을 의미하는데 이는 물질적 요소와 이 물질적 요소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는 무형의 정신적 요소로 구분된다.<sup>3)</sup> 그리고 양적인 요소는 병력의 다과(多寡), 즉 병력과 장비의 수적 우열에 관한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병력과 장비의 우열은 전투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p>4)</sup>

우선 전투력의 양이 전투력에 미치는 정도는 란체스터 방정식인  $S = KN^2$ 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sup>5)</sup>

이에 따르면 전투력의 질(K)은 변함이 없더라도 부대수(量 : N)가 2배로 증가한다면 전투력(S)은 4배로 증가하는 반면, 반대로 전투피해 등으로 인해 부대수(量)가 1/2로 줄었을 때 부대수가 줄어들기 전의 상태와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의 질을 예전보다 4배 이상 증강해야 병력이 반감되기 전과 유사한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전투력의 양은 전투력의 증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전투력의 양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거나 유한(有限)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의 질을 증가시키거나 전투력의 운용의 차이에 의한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상대적 전투력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적 전투력의 우위는 국력과 국가정책, 전략 등 다분히 양병(養兵)의 영역에 속하지만 상대적 전투력

주 3) J. F. C. Fuller, *The Foundation of the Science of War*(London : Hutchinson & Co. LTD, 1925), pp.175~193.

4) J. F. C. Fuller(1925), op. cit., pp.182~188.

5)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이론연구』 (대전 : 육군교육사령부, 1987), p.401.



우위는 절대적 우위가 아니더라도 전투환경에서 대적하고 있는 적부대보다 특정한 시점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부분적으로 우세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전투력의 질(質)

전투력의 질은 전투의 효율성에 관계되는 중요 요인으로 조직(구성), 전투원의 훈련정도, 전투경험, 군기, 사기 및 단결 등의 상태를 의미한다.<sup>6)</sup>

조직이란 한정된 임무 혹은 업무 등 공통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직능적 연관성을 수립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통합된 관계를 의미<sup>7)</sup>하며, 첫째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둘째 가급적 그 목표를 합리적으로 이룩하고자 한다. 셋째 합리주의와 능률에 입각하여 분업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되 분업은 일의 종류에 따른 횡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일의 수준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명령권을 명문화하여 명령복종관계를 확립시킨 종적인 것도 포함된다. 넷째 조직은 하나의 체제로서 그것이 놓여 있는 환경과 언제나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며, 다섯째는 대체로 조직이란 규모가 크므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분(情分)이나 사적감정에 얽매이기 보다는 보편성의 원리를 우선 따르고 있다.<sup>8)</sup>

한편 군대 교육훈련은 현존 또는 유사시 동원되는 인적자원을 포함한 모든 요원이 군대조직체의 일원으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상·하간 공동의 전술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전술전기를 연마하며, 전투력을 최고도로 유지하여 유사시 이런 전투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평소 준비시키는데 있다.<sup>9)</sup>

그리고 군기란 어떤 환경 하에서 명령에 대한 복종과 엄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정신적 태도를 의미하고, 사기는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각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심리적 상태로 열성적이고 자발적인 명령복종이나 지휘관, 훈련 및 장비 등에 대한 신뢰감과 자부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sup>10)</sup>

또한 사기는 개체적인 힘이 아니라 전체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순간적으로 진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비록 고난의 상황에 봉착하여 소수의 일탈자(逸脫者)가 생기더라도 부대원으로 하여금 부대정신과 같은 다른 여러 정신적 요소를 촉진시키고 단결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sup>11)</sup>

주 6)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이론연구』 (대전 : 육군교육사령부, 1987), p.399.

7) 육군본부, 『육군 군사술어사전』 (대전 : 육군교육사령부, 1988), p.471.

8) 안향옥, 『정치학대사전』 (서울 : 박영사, 1980), pp.1418~1420을 주로 참고함.

9) 육군본부(1988), 전계서, p.600.

10) 육군본부(1988), 상계서, p.249.

11) 육군본부, 『지휘통솔』 (대전 : 육군인쇄창, 2003), pp.329~340.

### 3. 전투력의 운용(運用 : 集, 散, 動, 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과 전투력의 질과 양이 대등하거나 비교적 열세할 때 승패를 결정하는 역할은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하여 상대적 전투력우위를 달성하는 전투력의 운용기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휘방법의 적절성(集, 散, 動, 靜)이 전투승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sup>12)</sup>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적절하게 전투력을 운용한다는 것은 지상작전원칙 등과 같은 제원칙(諸原則)을 잘 적용하는 것 못지않게 과학적으로 정형화가 제한되는 술(術)적 요소인 지휘관의 지식과 두뇌, 창의성에 의한 기계(奇計), 지휘통솔력, 부대원의 훈련정도에 의한 숙련도, 사기나 협동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sup>13)</sup>

따라서 전투력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염두에 두고 운용을 하여야 한다. 우선 첫째 전투력은 집중되면 강해지고(集強), 둘째 분산되면 약(散弱)해진다. 셋째 전투력은 움직이면 능동적으로 작용하며(動能), 넷째 정지하면 수동적으로 작용(靜受)한다는 점이다.<sup>14)</sup> 그러므로 지휘관은 책임지역 내에서 끊임없는 전장관찰을 통해 적의 강·약점을 식별하여 적의 강점은 회피하고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결정적인 전투를 실시할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결정적 지점에 상대적 전투력의 우세를 달성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sup>15)</sup>

## 2절 시간

시간(Time)은 '시각의 연속개념으로서의 시간'과 주·야, 계절, 기상, 기후 등 '자연현상으로서의 시간', 그리고 전투승리의 호기로 판단할 수 있는 '전기(戰機)로서의 시간'을 의미하는데<sup>16)</sup>,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작전종료시까지 '가용시간'과 '자연현상으로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전기'를 포착하여 전투실시간 적시적인 결심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자연현상으로서의 시간

자연현상중 날씨, 바람 및 기온은 부대활동과 장비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먼저 비와 같은 날씨요소는 화승총과 같은 초기 화약무기들의 성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바람은 활, 창과 같은 비화약무기의 사거리나

주 12) 하대덕, 『전장원리론』(서울 : 문선사, 1984), p.17.

13) 육군교육사령부(1987), 전계서, p.402.

14) 육군대학 역, 『전리입문』(대전 : 육군대학, 1998), p.25.

15) 육군본부, 『전술』(대전 : 육군본부, 2005), p.3-8.

16) J. F. C. Fuller(1925), op. cit., pp.179~180.

정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마지막 기온중 하계 무더위와 동계 혹한 등은 부대 활동과 장비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작전에 있어서 기후 및 기상은 관측, 병력활동, 장비의 성능, 사격효과, 항공지원, 통신 및 전자전, 전술적 암호 및 기만, 교통통제, 군수지원, 민사작전 등 여러 분야에서 지형요소와 함께 군사작전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실시간대 부대가 처해 있는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17)</sup>

## 2. 전기(戰機)

전기란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여 전승을 획득할 수 있는 승기(勝機)를 말하며, 전장에서 적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필연적 또는 우연적 기회를 말하는 것으로 항상 유동적이어서 포착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일단 포착하여 활용하기만 하면 그 효과는 지대하다.<sup>18)</sup>

이런 전기는 부대의 대소(大小), 전투의지의 정도에 따라 창출될 수도 있으며 한 순간에 지나쳐 버리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머무는 것도 있으므로 적시적절하게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깊은 통찰력과 혜안(慧眼)으로 주어진 호기를 어떻게 포착하는가와 호기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인위적으로 어떻게 전기를 스스로 창출하느냐가 우선 중요하며, 주어지든 아니면 창출하든 간에 일단 전기를 포착했을 때는 신속하고 대담한 결심아래 즉시 실행에 옮기는 적시성과 실천력 또한 중요하다.<sup>19)</sup>

특히 전기와 관련하여 손자방법에는 “병문졸속(兵聞拙速)”<sup>20)</sup>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계획수립 및 전투준비간에 철저한 전투준비로 인한 자신의 전투력 증가 못지않게 그 시간을 이용하여 상대방도 취약성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전투수행간에는 다소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전기 상실시 초래될 수 있는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포착시 신속 과감한 결심으로 적시적절하게 행동에 옮겨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주 17) J. F. C. Fuller(1925), op. cit., pp.190~191.

18) Ibid, pp.179~180.

19) 양창식 역, 『전리란 이런 것이다.』 (서울 : 서림출판사, 1981), p.44.

20) 자세한 내용은 김병관 저, 『孫子兵法解説』 (대전 : 육군대학, 2004), p.18. 또는 이종학 편저, 『전략이론이란 무엇인가』 (대전 : 충남대학교출판부, 2005), p.66 참조 바람. “故로 兵聞拙速이오 未觀巧之久也라”의 뜻은 “그러므로 전쟁은 다소 준비에 미흡하더라도 속히 끝내야 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정교하기 위해서 오래 끈다는 법은 들어보지 못했다.”이다. 여기서 졸속(拙速)의 참 뜻은 ‘충동적이거나 성급한 판단에 의한 어설피고 빨리만 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후좌우의 환경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결단하에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보다 먼저 정확히 결심하고, 대응속도를 적 보다 빨리 하여 적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졸속의 참의미라고 할 수 있다.

### 3절 공간

공간(Space)은 시간요소와 함께 전투의 객관적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이러한 공간은 지형과 지물, 그리고 지형과 지물이 어우러진 전투공간(Battle field)을 말하며 화력과 기동을 촉진하거나 제한하기 때문에 군사작전시 핵심적인 고려요소 중의 하나이다.<sup>21)</sup>

#### 1. 지형지물

지형이란 고저나 기복 등 지표면의 상태를 말하며, 지물이란 지표면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고지, 하천, 삼림 등의 자연지물과 도로, 교량, 건물 등 인공지물을 포함한다.<sup>22)</sup>

지형은 통상 개활지와 산악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활지는 일반적으로 관측과 사계가 양호하고 행동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어 화력운용과 신속한 기동의 효과를 십분 발휘할 수 있으나 엄폐 및 은폐에 불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산악지는 이와 다소 반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군사작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물은 하천, 삼림, 도로, 사용 가능한 시설물, 교량 및 시가지 등을 들 수 있으나 공주일대가 주격전장이었던 2차 동학농민전 역시 도로나 일부 이용 가능한 시설물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물은 전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과 분석을 생략하고자 한다.

#### 2. 전투공간<sup>23)</sup>

전투공간은 지형과 지물에 의해 형성된 전장지역의 정면과 중심으로 특정제대에 통상 책임지역으로 부여되는데<sup>24)</sup>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소구획성 지형에 속한다.

이런 소구획성 지형에서 공격시<sup>25)</sup> 목, 고지, 안부(鞍部) 등 중요 지형지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면공격은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통상 강력한 적 방어진지를 최소의 병력으로 정면에서 고착시키고, 적 방어진지 간격에 최대한 전투력을

주 21) J. F. C. Fuller(1925), op. cit., pp.180~181.

22) 육군교육사령부(1987), 전계서, pp.350~351.

23) 전투공간은 지상공간과 공중공간으로 구분되고 이중 지상공간은 지형지물의 배치상태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 서로 다른 지형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소구획성 전투공간'과 일정한 지역 내 동일한 성질의 지형이 단조롭게 전개되는 '대구획성 전투공간'으로 구분되지만 한국의 지형특성상 소구획성이면서 회랑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구획성 전투공간에 한정하여 설명하였다.

24) 육군교육사령부(1987), 전계서, pp.350~351.

25) 육군본부(2005), 전계서, pp.5-91~5-95.

집중하여 돌파구를 형성하면서 측·후방으로 기동하여 돌파구를 확장하고, 후속부대를 연속적으로 투입하여 공격기세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형성된 적의 간격이나 약점으로 침투기동부대를 투입하여 애로 및 견부지역, 중심상의 주요 목 지역을 확보하는 작전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측·후방을 공격하는 부대는 후속부대가 적의 측·후방과 중심으로 기동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형성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돌파구가 확보되면 이를 후속하는 부대는 적의 측·후방으로 기동하여 정면에서 고착하는 부대와 협조하여 애로 및 견부지역을 확보하고 기동부대의 기동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3 장 동학농민전역 개관(概觀)

#### 1절 제1차 동학농민전역

동학은 철종 11년(1860) 교조 최제우가 풍수사상과 유불선(儒·佛·仙)의 교리를 토대로 서학(西學)에 대항하여 백성을 널리 구한다는 ‘광제창생(廣濟蒼生)’과 사람이 곧 하느님이며 만물이 모두 하느님이라고 보는 ‘인내천(人乃天)’을 내걸고 새로운 세계는 내세(來世)가 아니라 현세에 있음을 주장한 종교이다.

한편 조선말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대표되는 조세체계의 모순과 연이은 기근(飢饉)으로 농촌사회는 극도로 피폐해져 결국 1862년(철종 13) 진주의 농민봉기를 시초로 삼남(三南) 각 지방에서 농민반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일본에 개국한 이래 일본상인들은 우리 농촌에 침투하여 갖은 방법으로 쌀·콩 등을 매점매석할 뿐만 아니라 통제를 받지 않고 이를 일본으로 계속 반출하자 조선곡물의 절대비축량이 부족하여 식량난을 가중시켰고, 1888년(고종 25)에는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할 방도가 없게 되자 전국 여러 곳에서 연달아 폭동이 일어났다.

이 무렵 신임 고부군수로 조병갑(趙秉甲)이 부임후 농민들로부터 무리한 세미(稅米)를 거두어들이는 등 학정<sup>26)</sup>을 펴자 1894년 1월 10일 동학의 고부접주(古阜接主)로 있는

주 26) 백성들에게 무고한 죄명을 씌워 2만 냥이 넘는 돈을 수탈하는가 하면 부친의 송덕비각(頌德碑閣)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1,000여 냥을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였다. 또한 시급하지도 않은 관개용 저수지인 만석신보(萬石新湫)를 축조한다고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쌓게 하고, 가을에 수세(水稅)를 받아 700여 섬을 착복하는 등 온갖 탐학을 다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7권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개혁, pp.92~99의 내용을 참조바람.)



전봉준을 선두로 동학교도와 농민 1,000여 명이 봉기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불법으로 징수한 세곡을 모두 빈민에게 나누어 주었다.<sup>27)</sup>

이어서 전봉준은 인근의 동학접주들에게 통문을 돌려 보국안민(輔國安民)과 교조신원(敎祖伸冤)을 위하여 궐기할 것을 호소하자 1894년 3월 하순, 태인·무장·금구·부안·고창·홍덕 등의 접주들 또한 봉기하여 각기 병력을 이끌고 전봉준이 먼저 점령한 김제 白山면으로 모여 관아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여 서울로 진격을 도모코자 하였다. 이어 4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관군과 동학군간 실시된 황토현<sup>28)</sup> 전투에서 관군이 참패하여 동학농민군은 정읍 방면으로 북상하여 결국 4월 27일에는 전주성마저 쉽게 함락시킬 수 있었다.

한편 동학란이 거세어지자 조정은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여 청군이 6월 8일 아산만에 도착하였고, 지원요청이 없었음에도 일본은 일본대로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6월 7일에 출병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자 동학농민군은 청·일 양군이 출동하여 국가의 안전이 염려되는 시기에 정부군과 싸운다는 것은 대의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여 횡포한 부호를 엄중히 처벌할 것 등을 포함한 폐정개혁(弊政改革) 12개조를 요구하고 전주성에서 철병하였다. 그 후 강화가 성립되면서 대부분의 동학농민군은 철수했지만 폐정개혁의 실시와 교세확장을 위하여 전라도 53주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였다.

## 2절 제2차 동학농민전역

1894년 8월 25일(음 7. 25)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주 27) 당시 동학농민군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운사(轉運使)를 폐지하라, 균전사(均田使)를 없애라, 타국 상인의 미곡 매점과 밀수출을 막아라, 외국상인이 내륙 각지로 橫行하는 것을 막아라, 각 포구의 어염선세(漁鹽船稅)를 혁파하라, 수세 기타 잡세를 없애라, 담관오리를 제거하라, 각 읍의 수령·이서(吏胥)들의 학정과 협잡(挾雜)을 근절시키라.”

\* 전운사: 조선 후기에 지방에서 조세를 거두어 서울로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던 관리로 세곡의 징수·운송·수납을 관장했다. 전운사는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침투한 일본 선운업자(船運業者)와의 갈등이 야기되면서 선박을 처음에는 일본과 독일의 운선(輪船)을 빌려 사용하다가 뒤에는 기선(汽船)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 후기 이래 관행적으로 납세자에게 부과되던 운수비용(船價)이 늘어나 결국 납세자의 부담도 커졌고, 게다가 총책임을 맡은 전운사와 그 밑의 감관(監官)과 포구의 배주인 등이 가렴주구(苛斂誅求)함으로써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전역시 동학농민군은 전운사의 혁파를 주장하였다.

\* 균전사: 조선시대의 각 도의 전답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한 어사(御史)로, 전답의 측량뿐만 아니라 品等도 결정하고, 민정을 살펴 부정의 유무를 조사하는 목적에서 파견하였으나 품등 결정과 賦稅 결정 등에서 폐단이 심하였다.

28) 현 정읍 덕천면 학하리로 태인과 고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충지이다.

간섭하는 한편 일본세력을 중심으로 강화를 획책하자 내부 탐관오리들의 부패와 학정이 원인이 되어 봉기했던 1차 동학농민전역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이번엔 “반일반침략투쟁(反日反侵略鬪爭)”을 결심하고 곡식이 여무는 가을을 기다렸다가 10월(음 9월)에 접어들자 전봉준이 전주에서, 손화중(孫華中)은 광주에서 궐기하는 등 호남·호서의 동학 교도와 농민이 일제히 재차 봉기하여 합세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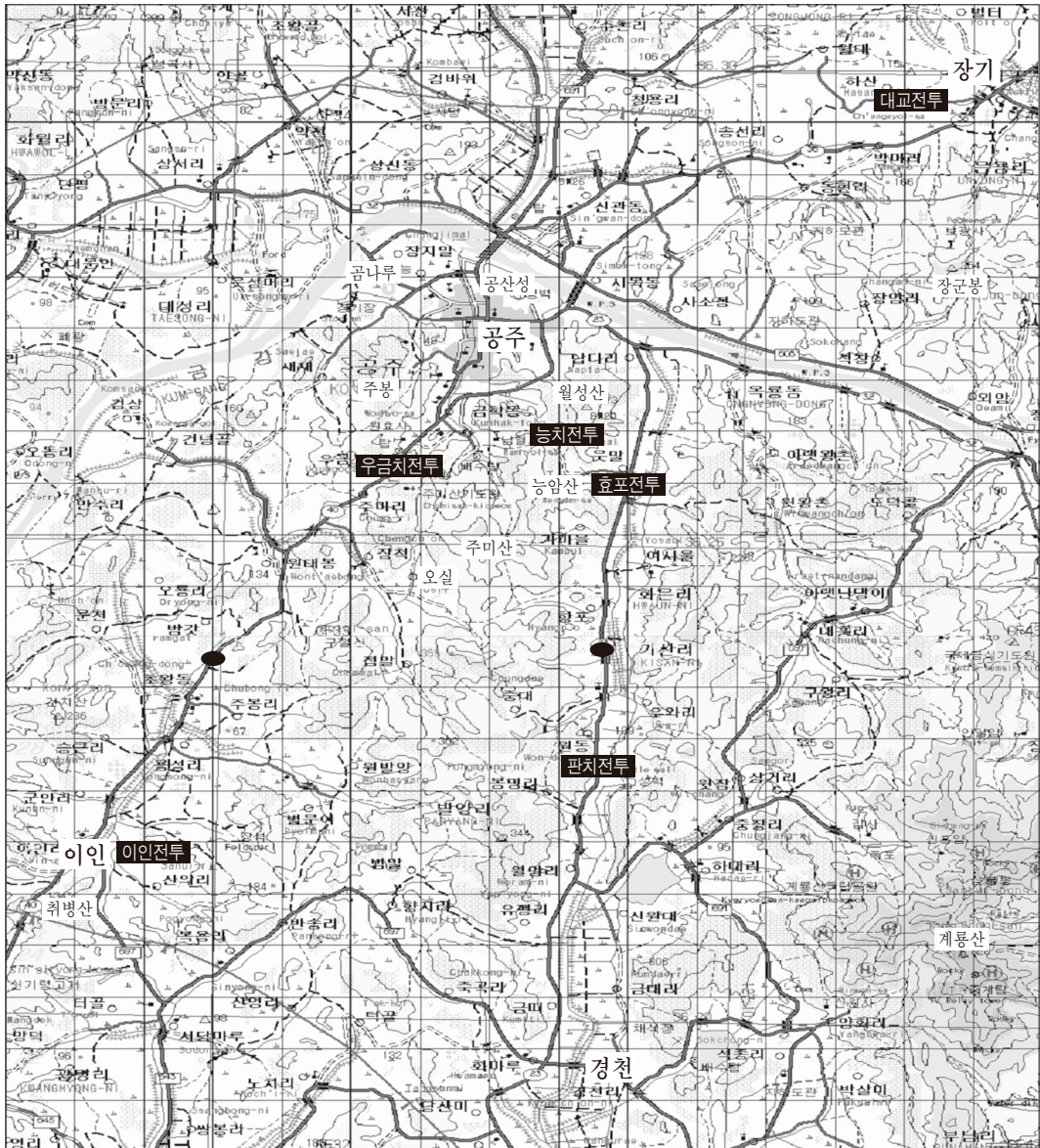


그림 1. 광주부근 주요 지명 및 격전지

전주에서 봉기한 전봉준은 삼례(參禮)를 동학군의 근거지로 삼고 1894년 10월 삼례를 출발하여 11월 9일(음 10. 12) 논산에 도착한 다음 북접<sup>29)</sup>의 동학농민군과 합류하여 11월 13일 논산대회를 치르고 부대를 개편한 후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공주를 첫 번째 공격목표로<sup>30)</sup> 설정하는 작전을 세웠다.<sup>31)</sup>

주력인 전봉준의 1만 호남군과 손병희의 1만 호서군은 11월 18일(음 10. 21)부터 이인, 효포, 능치(곰티, 웅치)전투에서 관군과 일본연합군을 공격하는 혈전을 거듭하였으나 상대방의 막강한 근대무기와 화력으로 인해 1차 공주 진격전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11월 18일 1차 공주 진격전 실패후 이어서 전력을 재보강한 동학농민군은 12월 4일(음 11. 8) 우금치일대에서 일본군 500여 명을 포함한 약 2,000여 명의 진압군을 상대로 결전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구식소총(火繩銃)과 죽창 등으로 무장한 동학농민군은 무려 40~50차례 거듭되는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신식무기를 구비한 조일연합군(朝日聯合軍)의 집중적인 사격으로 많은 희생자와 많은 피해를 입고 서울로의 진격이 좌절되었다.

이 싸움 후 재기를 노린 전봉준 총대장(總大將)은 결국 순창에서 체포되어 이듬해인 1895년 3월에 서울로 압송되어 처형됨으로써 1년 동안 전개된 동학농민전역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주 29) 북접 : 동학은 접(接)과 포(包)를 중심으로 한 접주제 조직으로 접은 집단적인 의례를 행하는 장이자 포교조직이었다. 조직의 초기에는 여러 곳에 접소를 설치하고 그 지방의 유력자를 접주로 삼아서 교세를 키워갔다. 북접이라는 이름은 창도 초기에 교조 최제우가 활동하던 용담(청주시 상당구)의 북쪽에 최시형이 살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 1894년 동학농민전역이 일어났을 때에는 통상 전라도 지역의 동학조직을 남접이라 하고 충청도 지역의 조직을 북접이라고 불렀다.

30) 당시 공주는 충청도 감영이 소재하는 중부지역의 거점으로서 전략상 공주 확보가 향후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게다가 우금치는 논산 및 부여방면에서 공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고개이며 일단 우금치를 장악하면 공주 점령의 기선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다.

31)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1996, p.281

## 제 4 장 전투의 구성요소측면에서 2차 동학농민전역 패인 분석

### 1절 전투력

#### 1. 전투력의 질

##### 1) 조직의 일반적 특성측면 분석

##### 가) 조직의 목표측면

2차 동학농민군의 표면상 목표는 “반일반침략(反日反侵略)”으로 조선을 침탈하고 있는 일본세력 외에도 일본을 추종하는 개화파정권을 철저히 적으로 규정하여 타도하는 것이었다.<sup>32)</sup> 따라서 이런 조직의 목표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지침을 제공하고 활동과 존재자체를 정당화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였으며 당시 이들로부터 많은 수탈을 당하던 농민들을 포함하여 하부계층 등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sup>33)</sup>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반일반침략의 명분하에 “반관반지주투쟁(反官反地主鬪爭)”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타도대상으로 일본세력 외에도 각 지방의 양반층과 향리층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을 철저히 적으로 규정하여 대치한 관계로 이들로부터 반감을 사서 오히려 탄압의 대상으로 변모하였다.<sup>34)</sup> 여기에다 지주, 부호(富豪), 지역유생 및 전 현직 관리들까지 위협을 느끼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들이 민보군(民堡軍)<sup>35)</sup>을 구성하여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이다. 특히 1894년 9월 이후 정부권유하<sup>36)</sup>에 조직되어 동학농민군에게 많은 피해를 준 민보군 조직지역을 보면 <표 1>과 같은데, 이들 지역들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했던 곳과 일치한다.

주 32) 『全捧準供草』初招問目, pp.318~319 등의 자료에 의하면 2차 봉기 배경에 대해 “貴國이 개화라 칭하고 自初로 一言半辭도 민간에 傳布함이 없고 또 檄書도 없이 率兵하고 우리 都城에 入하여 夜半에 王宮을 破擊하여 主上을 驚動하였으므로 我國境土를 侵掠하는가 疑訝하여 草野의 土民들이 忠君愛國之心으로 慷慨함을 不勝하여 義旅를 糾合하여 日人과 接戰하여 此事實을 一次請問코져 起包하였다”라고 하여 일본군대가 대궐로 난입했다는 말을 듣고 이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병을 쳐 물리치고 그 거류민(居留民)을 국외로 구축(驅逐)할 의도로 기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33) 1894년 9~11월경 동학농민군 구성을 보면 남원동학농민군은 小貧農層, 火賊, 유랑민(流民), 官奴, 무당서방(巫夫), 下層賤民, 사냥꾼(山砲手), 鑛夫, 소상인이 주였고, 강원동학농민군은 소빈농층이 주였으며, 황해도는 일반농민 외에 산포수, 광부, 유민, 소상인층 등으로 구성되었었다.(자세한 내용은 『동학란기록』 下, pp.511~522. ; 박준성, 「1894년 강원도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동학농민군의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pp.212~217. ; 송찬섭, 「황해도지방의 농민전쟁의 전개와 성격」,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pp.242~246 참조)

34)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서울 : 경세원, 1997), p.447.

35) 일반적으로 민보군과 같은 성격의 조직은 민보군 외에도 民包軍, 守成軍, 儒會軍, 鄉會軍 등의 이름으로 조직되어 동학농민군에 대항하였다.

36) 「全捧準供草」, 『東學亂記錄』 下, p.538.



〈표 1〉 1894년 9월 이후 조직된 민보군 현황

구분	계	경기	충 청	전 라	경 상	강원	황해
		2	13	23	15	4	3
지역	60	양근, 지평	천안, 공주, 홍주, 예산, 홍산, 서산, 태안, 남포, 한산, 비인, 은진, 옥천, 제천	금산, 무주, 장수, 진안, 용담, 부안, 태인, 무창, 고창, 부안, 옥과, 순창, 남원, 운봉, 구례, 동복, 담양, 능주, 순천, 나주, 함평, 영암, 강진, 해남	문경, 예천, 상주, 용궁, 함창, 의성, 안동, 거창, 함양, 안의, 지례, 개령, 인동, 선산, 하동	원주, 정선, 양양, 강릉	수안, 신천, 장연

출처 : 「甲午軍功錄」, 『東學亂記錄』 (국사편찬위원회판) 下卷, pp.713~728.

황현, 『梧下記聞』 3筆의 甲午10~12월조

송찬섭, 「황해도지방의 농민전쟁의 전개와 성격」, 『동학농민혁명의 지역 적 전개와 사회변동』 pp.250~251.

이처럼 조직의 목표측면에서 동학농민군의 목표는 상류층을 포함한 당시 지배계급으로부터 지지기반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로부터 반감을 사 토벌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조직의 목표가 적절치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즉 1차 동학농민전역이 주로 조세(租稅)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2차 동학농민전역(1894년 5월 이후)부터는 반관반주투쟁의 성격을 띠었으므로 신분제와 지주제를 골간으로 양반사족을 중심으로 운영된 당시 사회구조를 부정하여 기존의 생산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변모되었다. 결국 이로 인해 심지어 1차 때 동학농민군측에 가담했던 몰락양반층의 상당수도 이탈<sup>37)</sup>하게 되어 광범위하게 적대세력<sup>38)</sup>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반관반주투쟁이 아닌 일본세력과 개화과정권 타도만을 목표로 했다면 농민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양반층과 향리층, 지주, 부호, 지역유생 및 전·현직 관리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였을 것이고 이 중에는 정의로운 전·현직 무관출신들도 대거 참여하여 보다 체계적인 조직 구비가 가능했을 것이다.

나) 조직의 분업 측면

조직의 분업은 일의 종류에 따른 횡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일의 수준에 따른 직 무수행에 필요한 명령권을 명문화하여 명령복종관계를 확립시킨 종적인 것도 포함되는데, 2차 동학농민군의 횡적 분업은 명목상 틀은 구비하고 있었으나 전투실시간 전투근무지원

주 37) 김양식,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서울 : 신서원, 1996), p.357.

38) 『東學亂記錄』 下卷의 동학당정토인록(東學黨征討人祿) 등의 자료에 의하면 동학당을 토벌하는데 크게 기여한 義旅로 분류된 자는 모두 354명인데 이중 儒學者가 235명(68%), 鎭使가 10명이고, 전 현직관리 향리층 수령이 10명이며 나머지는 기타 말단관리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면에서 횡적분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적분업은 상하부대간 일사불란한 명령 및 지원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느슨한 분업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총대장이 동학농민군 전체를 장악하고 지휘할 수 없었다.

먼저 동학농민군의 횡적 분업체계를 보면, 황현(黃玿)이 쓴 『梧下記聞』 2筆과 반란진압임무를 수행한 관군 순무영(巡撫營) 선봉장이었던 이두황의 진중일기인 ‘兩湖右先鋒日記’ 등의 자료에 의하면 무기와 마필은 주로 기포장(讖捕長) 책임 하에 군량미는 운량관(運糧官) 책임하에 집강소를 통해서 관민으로부터 탈취 및 징발(收砲索馬)하여 동학농민군에게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의 무기는 점령한 지역의 장졸들이 가졌던 것들을 압수하거나 상당수 집강소가 설치된 곳은 부군현(府郡縣)의 무기고를 열어 비치하였던 무기나 화약을 지급하였고 말(馬)은 부군현의 말 또는 역마(驛馬)를 비롯하여 관영목장의 말 등을 징발한 것이며, 사포수를 비롯해 총포, 창검 등 각종 무기와 상매마(商賣馬)를 비롯하여 민간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징발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화약은 官民에 비축했던 것을 탈취 또는 징발하였지만 일부는 제조방법을 배워 자체 제조하여 조달하기도 하였다.

한편 군수전(軍需錢)이나 군수미(軍需米)의 조달은 관곡(官穀)과 관전(官錢)을 탈취 및 징발하여 사용하거나 동학농민군의 적대세력인 부호나 양반들에게 이를 강요하여 징수하고 때로는 일정한 격식에 따라 일반 민간인에게 배당하여 징수하였는데 이때 반드시 징수에 대한 증서와 같은 표지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집강소를 중심으로 전투준비간 횡적분업에 의해 무기, 말, 군량곡 및 자금 등을 모아 나름대로 2차 봉기를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투실시간에 분업상태를 보면 대단히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결정적인 우금치 진격전시 몇 끼니를 굶주린 동학농민군들에게 공주일대의 주민들이 현지에서 밥을 짓거나 메주콩 등을 삶아서 추진급식 하였고 패전하여 기거나 부상당한 동학농민군의 상당수가 인근 주민에 의해 보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9)</sup>

이처럼 보급 및 의무지원 등과 같은 전투근무지원이 대단히 미흡하여 상당부분 이를 현지 지역주민의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원활하지 못해 동학농민군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부상자가 속출하여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투이탈자가 급증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다음 종적 분업측면에서 보면 동학농민군의 종적 조직구성에 있어서 기초가 된 것은 당연히 동학조직이었다.<sup>40)</sup> 동학조직은 전도조직과 군사조직이 서로 나뉘진 이원체제였지

주 39) 공주시, 『공주와 동학농민혁명』 (공주 : 돌모루, 2005), pp.132~133.

40) 동학의 包(大接主), 接(接主) 및 都所(執綱)의 종적 조직은 도소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데 도소는 기본적으로 여러 접이나 포의 연합체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한 지역의 조직망이 단일 포일 경우 대접주나 수접주가 있는 곳에 도소가 설치되고 여기서 소속 접을 총괄하였고 한 지역에 여러 포가 중첩될 경우 가장 우세하고 지도력이 있는 접주가 있는 곳에 도소가 설치되는 등 도소의 전체적인 통제하에 대접주가 지휘하는 포와 그 예하에 수명의 접주가 지휘하는 접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조직이었다.

만 상호 검직이 가능하였고 기본조직은 포(包), 접(接) 및 도소(都所)였다.<sup>41)</sup> 그 중에서 동학농민군의 전위기구이면서 지휘부의 역할을 한 것은 동학 도접주들의 총집회 기관인 도소였다.<sup>42)</sup>

이를 바탕으로 부대간의 상하지휘체계 및 협조상태를 남북접연합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먼저 2차 봉기직후 남북접이 연합하기 이전에는 삼례를 근거지로 하는 남접부대는 총대장 전봉준에하에 대두령인 손화중(孫化中)과 김덕명(金德明)이 지휘하는 부대가 속해있었지만 그 외도 별도로 남원에서 봉기한 대두령 김개남(金開男)부대 약 9천 명이 있었다. 그리고 충북 보은을 근거지로 하는 북접부대는 손병희를 통령으로 하여 선봉군에 정경수(鄭璟洙)부대를<sup>43)</sup>, 후군에 전규석(全奎錫)부대를 그리고 이종훈(李鍾勳)부대와 이용구(李容九)부대를 각각 좌우익으로 편성하고 있었다.<sup>44)</sup>

〈표 2〉 남북접 연합후 동학농민군 편성

구 분	규 모	작전지역	임 무
계	5만명		
전봉준 총대장	1만명	논산, 공주우금치	논산→공주 우금치 방면 공격
손병희 부대	1만명	논산, 공주대교리	논산→대교리 →공주북부지역으로 공격
김개남 부대	9천명	전라 전주	전주→금산→청주방면 독자적으로 공격
김복용 부대	3천명	충청 목천(세성산)	중앙축선에서 남하하는 일본군과 관군 저지
박덕칠, 박인호 부대	7천명	충청 홍주, 예산	서해안 평야지대를 따라 남하하는 일본군과 관군 저지
최한규 부대	3천명	충청 유구	공주성 외곽포위, 관군/일본군 지원차단
김인배 부대	1만명	전라 순천, 여수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관군과 일본군 저지
손화중, 최경선 부대	7천명	전라 광주, 나주	일본군과 관군이 후방에서 공격해오는 것을 차단하고 호남일대 집강소체제 유지

출처 : 吳知泳, 「東學史」,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권, pp.481~485.

11월 13일(음 10. 13) 남북접이 연합하는 논산대회 이후 상하지휘체계 및 협조상태를 보면 전봉준이 연합부대의 총대장으로 추대되었고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는 병력은 〈표 2〉와 같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접연합 이후 외견상으로는 전봉준 총대장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부대가 8개의 주요부대로<sup>45)</sup> 나뉘어 작전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 41) 박맹수, 『갑오농민전쟁의 종합적 고찰』 (서울 : 한국사연구회, 1994), p.10.

42) 黃玆, 『梧下記聞』 2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권, pp.103~104.

43) 편의상 부대로 칭하였지만 실체는 동학의 교구단위인 “包”였다.

44) 신용하(1996), 전계서, p.311.

45) 상계서, p.312.

위에서와 같이 외형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종적분업은 명령권을 명문화하여 명령복종 관계를 확립하고 군기와 질서를 유지하는 형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형적인 피라미드식 종적 분업체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의 종적분업은 매우 느슨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전봉준이 2차 기포(起包) 직전인 5월 이후 여러 고을을 순행(巡行)하면서 동학농민군을 통제하려 하였으나 그의 명령은 도리어 행하여지지 않았고 각자 접을 만들어 오직 강성한 자가 서로 우두머리로 행세하려 하였으며,<sup>46)</sup> 8월 말 전봉준은 동학농민군에 대해 “오합지중(烏合之衆)”이어서 뜻을 이루기 어렵다고 평가한 바 있고,<sup>47)</sup> 또한 전봉준 부대가 10월 중순 삼례를 떠나 논산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전봉준은 연달아 격문을 보내 남원에서 봉기한 대두령 김개남(金開男)부대 약 9천 명으로 하여금 복상하여 후속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개남은 전봉준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49일간<sup>48)</sup> 남원에 머물다가 11월 11일(음 10. 14) 남원을 출발하여 19일 전주를 거쳐 은진, 연산, 회덕을 경유 12월 9일(음 11. 13) 청주성 공격직전까지 공주주변에서 머무르면서 합류하지 않았다.<sup>49)</sup> 즉 전봉준부대의 최대 고비인 2차 공주진격전이 있었던 12월 초순까지 거듭되는 연합부대의 총대장 전봉준의 합류요청에 응하지 않고 많은 부대들이 김개남 부대처럼 상당히 독립성을 가지면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였다.

한편 군에서 종적분업은 군기와 연계되는데 군기측면을 보면 2차 봉기후 세력이 왕성해져 전봉준부대가 전주성을 공격후 삼례로 이동할 즈음인 10월 14일(음 9. 16) 충북 제천 청풍에서는 내분이 일어나 동학농민군이 접주를 무기로 위협하면서 “너는 왜 우리를 간교한 말로 동학에 끌어들이었느냐 이제는 하루속히 사죄하고 우리 모두가 화를 입지 않도록 하라”하고<sup>50)</sup> 상주부에 그를 송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2차 봉기시 전봉준이 직접 지휘한 부대는 1만 명에 달하였지만 2차례의 접전후 인원을 헤아려보니 3천 명이 넘지 않았고, 재차 접전후 인원을 확인하니 대부분 달아나고 남은 자는 500명에<sup>51)</sup> 불과한 것처럼 군기상태가 매우 낮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포와 포 사이 또는 도소와 도소가 실제로는 개별분산체였기<sup>52)</sup>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서는 대도소의 지휘계통을 따르는 한편 상대적인 독자성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총대장의 지시가 일반적으로 모든 동학농민군에게 적용되는 것이

주 46) 黃玿, 『梧下記聞』 2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권, p.106.

47) 朴周大, 「羅巖隨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권, pp.376~377. ; 黃玿, 『梧下記聞』 2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권, pp.210~211.

48) 김개남이 49일간 복상하지 않고 남원에 머문 것은 남원에 49일을 머물러야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참위설(讖緯說 : 도참설)에 근거한 행동이었다.(『梧下記聞』,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권, p.253.)

49) 『巡撫先鋒陳騰錄』 갑오 11월 12일조, 『東學亂記錄』 上卷, p.499.

50) 박성수 註解, 『渚上日月』, 甲午年 9월 16일조, p. 217.

51) 「全琮準供草」 初招問目, 『東學亂記錄』 下卷, p.529.

52) 朴周大, 「羅巖隨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권, p.369.

아니었다.<sup>53)</sup> 게다가 일부 포섭에서는 내분이 발생하고 심지어 전투중에 전투이탈자가 급증하는 등 명령권을 명문화하여 명령복종관계를 확립하고 군기와 질서를 유지하는 종적분업이 매우 느슨했다.

2) 무기체계, 전투지휘 및 훈련측면 분석

동학농민전역시 동학농민군과 관군 및 일본군간의 무기체계, 전투지휘 및 훈련상태를 보면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무기체계면에서 동학농민군은 구식 무기체계를 갖고 있었으며 이것도 죽창, 활, 칼 등 비화약무기 10개에 화승총 1자루 정도의 비율밖에 유지하지 못한 것<sup>54)</sup>으로 판단된다.

<표 3> 동학농민군과 조일연합군의 능력 비교

구분	동학농민군	조일연합군
무기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승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전방식 : 총구전장식(前裝式)</li> <li>- 집화방식 : 노끈 집화후 발사약 폭발</li> <li>- 유효사거리 : 100보(70m)<sup>55)</sup></li> <li>- 발사속도 : 1발/30초</li> <li>- 우천시 화승이 젖어 사용제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美製) 스나이더 소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전방식 : 후장식(後裝式)</li> <li>- 집화방식 : 격발시 발사약 폭발</li> <li>- 유효사거리 : 500보(350m)</li> <li>- 발사속도 : 1발 / 1초</li> </ul> </li> <li>• 카틀링식 기관총</li> </ul>
화포	• 화포	• 화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창(주요 무기)</li> <li>• 활, 창, 칼</li> </ul>	• 창, 칼
전투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첩보획득 : 탐보(인간정보)</li> <li>• 통신 : 파발</li> <li>• 지휘통제 : 명목상 연합부대를 편성했으나 각 조직간 완만한 타협과 협조체제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첩보획득 : 탐보(인간정보), 망원경</li> <li>• 통신 : 전보, 파발, 봉수(烽燧)</li> <li>• 지휘통제 : 충청도 관찰사(일본군 증원 후에는 일본군 선임장교 주축으로 통합지휘)</li> </ul>
훈련정도	•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농민군	• 신식무기로 훈련한 정규군

주 53) 兩湖招討使 홍계훈(洪啓薰 : ?~1895)이 壯衛營軍과 江華營軍 등 京軍을 인솔하여 서울을 출발한 음력 4월 3일부터 전주성을 수복한 5월 16일까지의 일을 일기체로 수록한 『兩湖招討臚錄』에 의하면 “최시형을 東學徒로 말할 때 大巨魁이다. 그러나 소란통에 미루어 살펴볼 때 대거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충청도의 서부와 전라도에서는 별로 최시형의 지휘를 받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 각 거괴는 각자의 의견에 따라 각 지방에서 起包하여 자기 의사를 결행하려고 한 것 같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대접주들의 독자성이 강했다.

54) 공주시(2005), 전계서, p.132.

55) 黃玆, 『梧下記聞』 3필, 甲午 10일조,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권, p.19.

한편 전투지휘 측면에서 보면 첩보획득은 탐보(探報) 즉 주민들의 첩보제공 등과 같은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자체 적극적인 첩보수집부대 운용을 소홀히 하였으며 상호 연락 및 상황전파는 전적으로 파발에 의존한 상태에서, 명목상 연합부대를 편성했으나 각 조직간 완만한 타협과 협조체제를 유지한 형태이므로 실시간대 적시 적절한 지휘 통제, 상황전파 및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끝으로 훈련면에서도 현대식 정규훈련을 받은 병사와 장교로 구성된 관군 및 일본군에 비해 동학농민군이나 동학농민군의 지휘자 모두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사지식이 부족하였다. 특히 훈련면에서 동학농민군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첫째, 장비조작 및 사격술, 각개전투, 약정신호, 상황별로 지휘관의 명령에 맞는 행동요령 등과 같은 기본전투수행요령 숙달이 미흡하였다. 결국 이로 인해 동학농민군은 불필요하게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전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강인한 용기와 정신력배양이 요망되나 이런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목숨을 걸고 돌파하기보다는 전선이 탈자가 급격히 속출하여 공격제대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의 강약점을 회피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여야 했으나 이런 기초적인 사항이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의 강점을 회피해서 적의 약점으로 공격하는 전투가 수행되기 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공격하기 용이한 측면으로 공격을 반복하는 성향을 보였다.

## 2. 전투력의 양

앞서 동학농민군의 조직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동학농민전역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와 충청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에서 수십만 명이 봉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군처럼 하나의 통일된 지휘체계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작전과 전투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sup>56)</sup>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하여 상대적인 전투력 우위를 달성하는데도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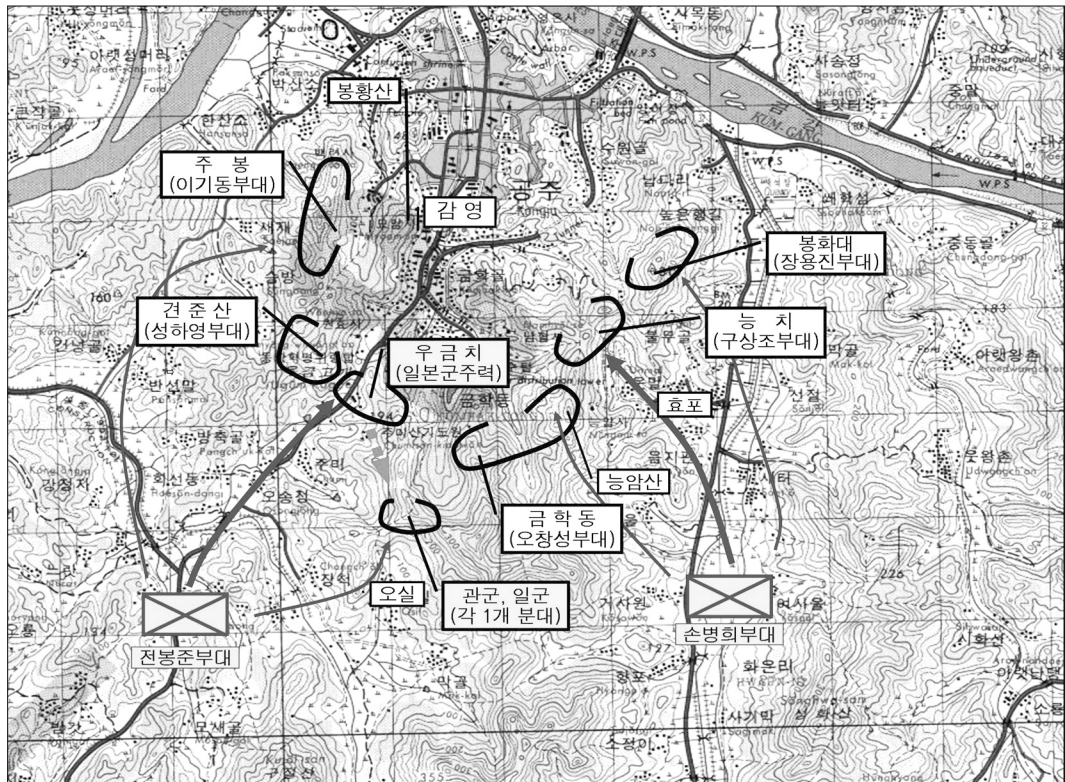
즉 2차 동학농민전역에서 전투력이 집중되어 상대적 우위를 달성해야 할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인 12월 5일 오전 전봉준이 직접 지휘했던 우금치 돌파전과 손병희가 지휘했던 능치 돌파전을 들 수 있는데, 먼저 우금치 돌파전의 경우 12월 5일 오전 10시를 전후한 피아 병력수를 보면 먼저 방어부대인 조선 관군은 경리청 소속 성하영 부대 280명이

주 56) 정창렬, 「古阜民亂의 研究」, 『한국사 연구』 제48~49집, (서울: 경세원, 1985), p.257.



견준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고 일본군은 최종적으로 능치 방면에서 우금치 방면으로 전환배치한 3소대 병력까지 포함하여 우금치 정상 좌우측에 2개 중대(-) 규모가 배치되어 도합 약 5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공격을 실시하는 전봉준 부대는 총 1만명 규모 중에서 상당수의 주력은 우금치 및 견준산 전방 500m에 있는 산까지 진출하기는 하였지만 동학농민군이 보유한 죽창이나 화승총의 사거리를 고려한다면 이들 부대들은 공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접전병력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10시 40분경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우금치전방 150m까지 진출한 200여명과 이중 우금치정상 몇 미터까지 진출한 5~6명만이 방어병력과 직접적인 전투를 수행한 병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금치부근에서 실제 근접전투를 수행한 병력만을 놓고 볼 때 관군 및 일본군 350여명 대비 동학농민군 200여명 수준으로 오히려 방어병력보다 공격하는 동학농민군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런 전투력비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금치 돌파가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또한 돌파가 실패로 끝날 무렵인 오후 1시 40분경 경리청 성하영 부대원중 불과 50여명을 우금치 전방 산허리로 전진시켜 공격하도록 했는데도 동학농민군의 공격제대는 대번 와해되어 퇴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림 2〉 2차 공주진격전

한편 손병희가 지휘했던 능치 돌파전을 보면 이 일대에 배치된 방어병력은 관군 장용진 부대 250명이 능치 좌측 봉화대에 배치되어 있었고, 구상조 부대 280명이 능치 일대 배치되어 도합 530여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반면에 공격을 실시한 손병희 부대는 역시 1만명 규모로 12월 4일 저녁 무렵엔 능치 전방 1.4km의 산위까지 진출하여 포와 화승총을 쏘며 대치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수적 우세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진출을 하지 못하다가 12월 7일(음 11. 11) 능치를 지키던 관군이 그간 전투에서 빼앗은 동학농민군의 옷과 수건으로 변장후 오히려 동학농민군 진지를 기습함으로써 결국 패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전봉준 부대나 손병희 부대가 각각 1만명 규모로 절대적인 수적 우세하에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500여명의 방어병력이 포진한 우금치와 능치를 돌파하지 못하고 돈좌된 것은 화기의 차이와 동학농민군의 훈련부족 및 전투의지 부족 외에도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일부의 병력으로 좌우측에서 방어부대의 주력을 고착전제하는 동안 주력을 결정적인 장소에 집중하여 이들 부대들의 간격을 이용하여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3. 전투력 운용(集, 散, 動, 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체계와 전투지휘체계 및 훈련정도 등과 같은 현격한 질적 차이 속에서 병력의 양적 우세만 고려하여 정면공격을 하는 것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은 이런 수적 우세를 극대화시키고 무기체계와 전투지휘체계 및 훈련정도의 열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계(奇計), 즉 동학농민군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며 관군과 일본군의 단점을 활용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전승의 기본원리(避實擊虛)를 따랐어야 했다.

〈표 4〉 동학농민군과 조일연합군의 장단점 비교

구 분	동 학 농 민 군	조 일 연 합 군
강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력의 수적 우세</li> <li>• 반봉건/반외세 및 종교적 단결심</li> <li>• 지역주민의 지지기반 획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식무기체계(스나이더 소총, 카틀링식 기관총)</li> <li>• 군사훈련을 받은 정규군</li> <li>• 방어에 유리한 지형지물 선점</li> </ul>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식무기체계(화승총, 죽창)</li> <li>•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농민군</li> <li>• 전술적 식견 및 지휘능력 부족한 지휘관(자)</li> <li>• 공격에 불리한 지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력의 수적 열세</li> <li>•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지지기반 미획득</li> </ul>

즉 <표 4>에서처럼 동학농민군은 수적 우세와 ‘항일구국일념(抗日救國一念)’이라는 대의명분하에 결속된 반면에 무기체계나 전투지휘체계 및 훈련정도 등에서는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규군이 아닌 관계로 지휘체통이 불명확하고 군기가 약하여 불리한 상황에서는 불퇴전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보다는 군중심리에 쫓리게 되며 쉽게 도주하고 흩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어 현대식 훈련을 받은 정규군과의 정면전투시에는 많은 희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철저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수적 우세와 단결심만을 내세워 정면공격으로 일관하는 반복된 공격형태보다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했다.

첫째, 동학농민군은 광범위한 지역주민의 지지기반을 획득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를 활용한 관군 및 일본군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부단히 하여 약하게 배치된 곳을 찾아 공격을 감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진압군측인 조선관군과 일본군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미흡하였다.

둘째, 물이 지형에 의해서 물줄기가 변하는 것처럼 용병도 적에 의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경우 중요지역이고 반드시 탈취 및 확보해야 한다는 일념에 집착하여 동일지역에서 동일한 적을 상대로 같은 공격방법을 반복함으로써 관군과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의 전투수행방법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결국 동학농민군은 많은 희생과 패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의 50여 차례의 반복적인 돌파시도보다는 공격의 변화를 가져왔어야 했다.

## 2절 시간

### 1. 자연현상으로서의 시간측면 분석

군사작전에 있어서 기후 및 기상은 관측, 병력활동, 장비의 성능, 사격효과, 항공지원, 통신 및 전자전, 전술적 엄호 및 기만, 교통통제, 군수지원, 민사작전 등 여러 형태의 작전 및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형요소와 함께 군사작전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1, 2차 공주 진격전시 기상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11월 중하순 및 12월 초순 공주일대의 날씨는 구름이 끼거나 차가운 비가 오는 날이 많았고, 바람은 대체로 북풍이 불었으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시작하였음을 볼 때 이러한 기상은 동학농민군에게 대체로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주요 접전기간 기상<sup>57)</sup>

일 자	날 씨	당시 추정기온 <sup>58)</sup>	비 고
11. 19	차가운 비 오락가락 함	6°C	성하영 부대 이인에서 탈출
11. 20	흐림	5.3°C	조일연합군 이인탈환전 실패
11. 21	구름 많고 비 뿌림	4.6°C	효포전투
11. 22	맑음	4°C	능치전투
12. 4	밤부터 비 내림	0°C	우금치 돌파전
12. 5	흐림	-0.1°C	

우선 날씨 측면에서 보면 공주일대의 11월과 12월 평균 강수일은 각각 4.3일<sup>59)</sup>에 불과하나 공교롭게도 1, 2차 공주진격전 당시 대체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왔다. 그런데 문제는 동학농민군이 사용한 화승총은 비가 오면 점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점화장치와 갖고 있던 조일연합군의 소총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하였다는 점이다.<sup>60)</sup>

또한 바람방향과 세기를 보면 공주지역의 11월과 12월의 바람방향은 약 3일에 한 번 꼴(36.4%)로 북서~북동풍이 불고 풍속도 평균 1~2m/s인 점을<sup>61)</sup> 고려시 초겨울 비바람을 안고 남에서 북으로, 게다가 우금치일대에서는 저지에서 고지로 공격을 하던 동학농민군은 상대적으로 화약무기뿐만 아니라 더더욱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활이나 창던지기 등 비화약무기 운용에 다소 불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기온 측면에서 보면 12월 초순경 비와 추위는 동학농민군들이 숙영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동학농민군은 개인 천막과 침구류를 보유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야지에서서 쉼과 같은 것을 덮거나 또는 인근 농가의 기타 시설 등을

주 57) 『東學農民戰爭 史料叢書』 第1卷: 『駐韓日本公使館 記録』 第1卷 「公州附近 戰鬪詳報」: 『나암 수록』; 『舊韓國官報』 등지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58) 1993년부터 공주시 우성면 농업기술센터의 자동기상관측소(AWS)에서 측정한 통계자료 중 11월 하순과 12월 상순 평균기온을 기준으로 당시 기상을 고려하여 추정한 것으로 실제와는 상이할 수 있다.

59) 공주시, 『공주시지』 上卷(대전: 대문사, 2002), p.90.

60) 일례로 2차 공주진격전시 12월 4일 밤 利仁에서 방어하던 관군 성하영 부대는 밤이 되자 동학농민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다가 마침 비가 오기 시작하자 동학농민군이 보유한 화승총과 화포의 점화가 제한되어 사격이 일시 멈추게 되었을 때 이 틈을 이용하여 성하영 부대는 들판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이용 포위망을 이탈하여 공주감영으로 복귀하는데 성공하였다.

61) 공주시(2002), 전계서, p.97.



활용하여 숙영을 하였기 때문에 비와 추위에 시달려 비전투손실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불을 피운 관계로 부대위치와 규모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하였다.

## 2. 전기측면 분석

손자병법에서 “병문졸속(兵聞拙速)”이라고 한 것처럼 전기측면에서 볼 경우 식량 확보 및 남북접 연합 등 철저한 진격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이 오히려 진압군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마련해준 격이 되었다.

즉 2차 동학농민군은 1894년 8월 25일(음 7. 25)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내정에 간섭하는 한편 일본 추종세력과 힘을 합쳐 강화를 획책하자 1차 동학농민전역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항일투쟁을 결심하고 곡식이 여무는 가을을 기다렸다가 10월 2일(음 9. 4)에 2차 봉기를 하였다. 그리고 11월 9일(음 10. 12) 논산에 도착한 동학농민군은 11월 13일 남북접이 합류하는 논산대회를 치르고 부대를 개편한 후 11월 18일(음 10. 21) 1차 공주진격전의 첫 접전인 이인(利仁)전투를 치르기까지 봉기한 뒤로 한 달 보름이상을 사용하였다. 또한 1차 진격전이 실패하자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2차 공주진격전이 시작된 12월 4일까지 또다시 보름가까이 시간을 사용하였다.

문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10월 2일 이후 1차 공주진격전의 시발점인 11월 18일 이인전투 개시 전까지 한 달 보름정도간 동학농민군이 식량과 무기를 확보하고 남북접이 연합하는 등 나름대로 전투준비를 하는 사이에 진압군 또한 증원과 전투준비를 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중앙에서 경리청 백낙완, 홍운섭, 성하영 부대가 공주에 추가로 증원되었고, 일본군 용산수비대 소속의 스키 소대도 증원되어 호남지역의 동학농민군이 북상하는 것을 차단하고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및 황해도 등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과 합류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12월 초순까지 본격적으로 중앙 진압군인 이규태 부대와 이두황 부대가 증원이 완료되었고 일본군 1개 대대규모의 부대도 추가로 공주감영으로 집결하여 대비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2차 동학농민군 봉기시 동학농민군의 공주진격준비와 관군 및 일본군의 취약성회복간에 있었던 시간적 함수관계에서 동학농민군은 전기를 상실하여 준비되지 않은 소수의 관군을 상대로 치를 전투는 결국 준비된 다수의 정규군과 싸워야만 하는 결과가 되었다.



〈표 6〉 2차 봉기후 동학농민군과 조일연합군의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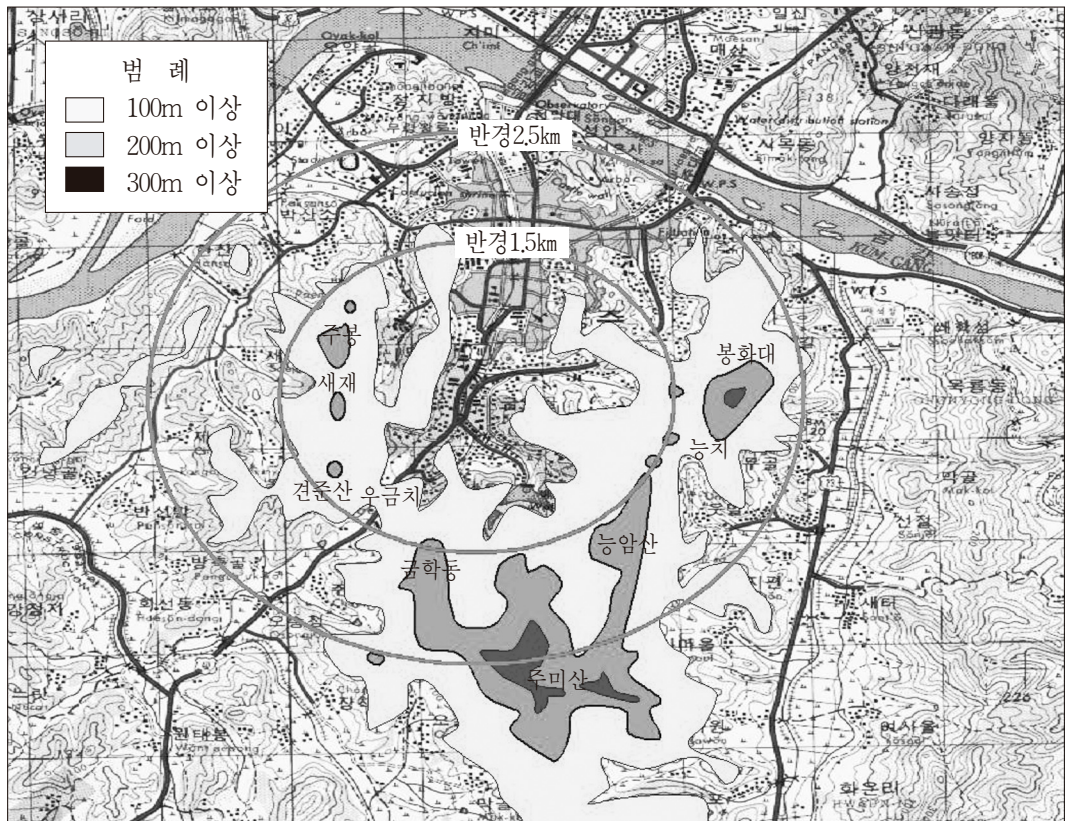
구분	동 학 농 민 군	조 일 연 합 군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일(음 9. 4) : 동학농민 2차 봉기</li> <li>• 12일 : 전봉준 전주성 공격후 삼례로 진격</li> <li>• 18일 : 전봉준 부대 여산 점령</li> <li>• 28일 : 김복용 부대 세성산 점령</li> <li>• 30일 : 전봉준 부대(4천명) 은진 도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일 : 이두황(죽산), 성하영(안성)이 동학농민군 진압시작</li> <li>• 12일 : 백낙완 부대(140명) 공주로 출발</li> <li>•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군 용산수비대 1개 소대 서울 출발 (스즈키 부대)</li> <li>- 이두황 부대(4개 소대) 서울 출발</li> </ul> </li> <li>• 26일 : 일본공사 일본에 1개 대대 증파요청</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일 : 전봉준 부대 논산 집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 접주 이유상 합류(5,200명)</li> <li>- 전 여산영장 김원식 합류</li> </ul> </li> <li>• 13일 : 논산대회 개최후 공주남쪽 노성(魯城) 점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일 : 경리청 백낙완 부대 공주 도착</li> <li>• 5일 : 스즈키 소대 공주 도착</li> <li>• 6일 : 19대대 3중대 인천상륙</li> <li>• 10일 : 스즈키 부대 공주북쪽 수춘일대의 동학농민군 공격</li> <li>• 12일 : 일본군 19대대 용산에서 3개부대로 나뉘어 남하개시</li> <li>•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리청 홍운섭 부대 공주 도착</li> <li>- 경리청 성하영 부대 공주 도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利仁에서 첫 접전 개시</li> <li>- 세성산전투 패배</li> </ul> </li> <li>•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봉준 부대 경천 점령</li> <li>- 옥천포 동학농민군(손병희) 대교 점령</li> </ul> </li> <li>• 22일 : 능치전투에서 패배, 경천으로 후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일 : 이두황군 세성산 진압</li> <li>• 20일 : 효포의 홍운섭 부대 대교에 있는 동학농민군 공격</li> <li>•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규태 부대 2,000명 공주 집결</li> <li>- 모리오 대위 부대(2중대) 본대 공주 집결</li> </ul> </li> <li>• 23일 : 19대대본부, 중로분진대 문의 도착</li> <li>• 24일 : 이두황 부대 공주 도착</li> <li>• 26일 : 일본군 19대대 공주 도착</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일 : 2차 공주진격전(利仁전투)</li> <li>• 5일 : 우금치 공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일 : 일본군 서로분진대 1개 소대(+) 및 관군 34명 공주 도착</li> </ul>

### 3절 공간

#### 1. 지형지물 이용측면 분석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주일대의 지형을 살펴보면 북쪽은 도섭이 불가능한

금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동-남-서쪽은 공주감영을 중심으로 반경 1.5~2km 내에 주봉(△250) - 견준산(△234) - 우금치(△130) - 금학동(△214) - 주미산(△430) - 능암산(△290) - 능치 - 봉화대(△313) 등과 같은 200~300m의 고지군과 능선이 방어에 유리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



〈그림 3〉 공주일대 고저(高低)분석도

따라서 관군과 일본군은 이들 주변의 고지군을 선점하고 여기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다음 동학농민군의 공격에 대비하였기 때문에 평지에서 고지로 복공을 끌어안고 공격하던 동학농민군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했음을 알 수 있다.

손자병법 지형편(地形篇)과 구지편(九地篇)에 지형의 종류를 6가지로<sup>62)</sup> 분류하고 있고,

주 62) 6가지 지형에는 맞는 전투력운동은 ① 通形者 先居高陽 利糧道以戰則利 ② 挂形者 敵無備 出而勝之 敵若有備 出而不勝 難而返 ③ 支形者 敵雖利我 我無出也 引而去之 令敵 半出而擊之利 ④ 隘形者 我先居之 必盈之 以待敵 若敵 先居之 盈而勿從 不盈而從之 ⑤ 險形者 我先居之 必居高陽 以待敵 若敵 先居之 引而去之 勿從也 ⑥ 遠形者 勢均 難以挑戰 戰而不利

있고, 싸움하는 장소에 따라 9가지의 지형별 전법을<sup>63)</sup>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우금치를 본다면 험지(險地), 경지(輕地) 및 쟁지(爭地)<sup>64)</sup>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전투간 적이 먼저 쟁지를 선점했다라도 작전목적상 반드시 탈취해야 할 대상물이라면 비록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를 점령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공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반면 때론 적절히 통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이 선점한 쟁지를 “쟁지즉무공(爭地則無攻)”처럼 직접적인 공격 없이 우회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관군과 일본군이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강하게 방어배치된 지역을 정면에서 돌파하기 위해 우금치를 계속 공격하기보다는 험지나 쟁지의 개념에 따라 우금치뿐만 아니라 공주를 우회하는 방안을 선택했어야 했다.

## 2. 전투공간 이용측면 분석

전투공간측면에서 볼 경우 우금치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형은 소구획성 지형이다. 이런 소구획성 지형에서 공격시 오늘날 전술교리는 목, 고지, 안부(鞍部) 등 중요 지형지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면공격은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통상 강력한 적 방어진지를 최소의 병력으로 정면에서 고착시키고, 적 방어진지 간격에 최대한 전투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형성하면서 측·후방으로 기동하여 돌파구를 확장하고, 후속부대를 연속적으로 투입하여 공격기세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up>65)</sup>

그런데 동학농민군의 우금치전투를 보면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강력한 적 방어

주 63) 싸움하는 장소에 따른 9가지 전법은 ① 散地：諸侯自戰其地者 爲散之 ② 輕地：入人之地而不深者 爲輕地 ③ 爭地：我得亦利 彼得亦利者 爲爭地 ④ 交地：我可以往 彼可以來者 爲交地 ⑤ 衢地：諸侯之地三屬 先至而得天下之衆者 爲衢地 ⑥ 重地：入人之深 背城邑多者 爲重地 ⑦ 圯地：山林險阻沮澤凡 難行之道者 爲圯地 ⑧ 圍地：所由入者隘 所從歸者迂 彼寡 可以擊吾之衆者 爲圍地 ⑨ 死地：疾戰則存 不疾戰則亡者 爲死地

64) 험지(險地)는 통행이 곤란한 곳으로 아군이 먼저 점령하게 되면 반드시 높고 양지바른 곳을 선점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야 하며, 만약 적이 먼저 선점하였다면 진출을 삼가고 유인하여 격멸하여야 하고 경지(輕地)는 국경선에서 적 지역으로 얼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불리해도 병사들의 마음이 동요되어 자국으로 퇴각하고자 하니 지체 없이 적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지만, 내가 점령해도 유리하고 적이 점령해도 적에게 유리한 쟁지(爭地)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적 또한 이를 확보·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므로 만약 적이 이를 먼저 선점했다면 공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이종학 편저, 『전략이론이란 무엇인가』(경주: 서라벌군사연구소, 2002), pp.90~100을 참조바람).

65) 육군본부(2005), 전계서, pp.5-91~5-95.

진지정면에 최소의 병력으로 상대를 고착시키기보다는 주력이 정면으로 40~50여 차례 동일한 공격을 반복하였고, 적 방어진지 간격에 최대한 전투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형성하면서 측·후방기동으로 돌파구를 확장하지 못했던 점을 볼 때 주공과 조공역할이 적절치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투공간측면에서 조공의 역할이 미흡했던 근거는 다음의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지형적으로 방자가 능치와 우금치를 계속 확보한 상태에서 만약 조공이 공격한 새재가 돌파되면 공격부대가 곧바로 공주감영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술교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자는 방어부대의 측후방을 돌파하는 경우가 되어 소구획성 지형에서 전형적인 공격모습이 될 수 있으나 이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방자의 입장에서 새재와 우금치가 대동소이하게 압력을 받았다면 일본군의 주력이 배치된 우금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전투력이 배치되었던 새재방면을 더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2중대장 모리오(森尾雅一) 대위는 예비로 향봉부근에 보유하던 3소대를 2차 동학농민전역의 절정적인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12월 5일 아침에 우금치로 전환배치하지 않고 새재방면으로 증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 3소대는 최종적으로 우금치로 증원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동학농민군은 소구획성 지형에서 공격시 통상 강력한 적 방어진지를 최소의 병력으로 정면에서 고착시키고, 적 방어진지 간격에 최대한 전투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형성하면서 측·후방으로 기동하여 돌파구를 확장하고, 후속부대를 연속적으로 투입하여 공격기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소구획성 전투공간을 활용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제 5 장 결 론 : 패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성공 가능한 대안들

이상에서와 같이 “전투력”, “시간”, “공간”요소 측면에서 2차 동학농민전역의 실패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분석내용을 기초로 볼 때 2차 동학농민군이 호남지역에서 서울로 진격하는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취했어야 할 바람직한 대안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도출할 수 있겠다.

첫째는 남북접이 연합된 상태에서 11월 중순경 공주를 직접 공격하지 말고 우회하여 서울로 진격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공주를 공격하려면 관군이나 일본군이 배치되기 전인 10월 말 이전에 가용병력으로 공격하여 돌파하는 방안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시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공주를 돌파하는 방안을 선택할 경우 공주(牛金峙)를 향해 정면 공격에 치중하지 말고 일부 부대의 운용을 조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이다.



## 1. 최선안 : 공주 우회

동학농민군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강하게 방어배치된 관군과 일본군을 정면에서 돌파하기 위해 우금치를 공격하기보다는 험지나 쟁지의 개념에 따라 우금치를 포함하여 공주일대를 우회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주력부대가 공주의 우금치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공주일대를 우회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주점령은 실질적인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점이다. 물론 공주(熊津:웅진)는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중부권 및 호서지방의 군사 및 행정의 중심지이었으므로 동학농민군이 이를 점령하게 되면 서울로 진격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2차 동학농민군이 서울 공격을 통해 당시 정권과 일본 추종세력을 타도한다는 봉기목적은 달성하는데 공주일대 점령여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점령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설령 공주를 점령하지 않음으로 인해 관군이 계속 공주일대를 장악하여 동학농민군의 병참선이 차단되더라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이다. 당시 동학농민군은 오늘날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남부지역 일원에 대규모 병참기지를 구축하고 서울로 진격하는 모든 부대에 식량과 무기를 지원해주는 체계가 아니라 일부는 자체 휴대를 하였고 상당수는 현지에서 조달하는 군수지원체계를<sup>66)</sup> 갖고 있었고 지휘기구 역시 전투하는 부대와 함께 이동하였기 때문에 명목상의 병참선으로 볼 수 있는 전주-논산-공주-천안-서울에 이르는 병참선이 차단되더라도 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9천명의 김개남 부대는 이미 공주를 우회하여 충청북도지역으로 기동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이들과 협조된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과 관군과 일본군이 이미 방어작전간 손무(孫武)가 말한 쟁지와 같은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여 방어태세를 잘 갖추었다는 점 때문이다.

## 2. 차선안 I : 2차 봉기직후 곧바로 공주 공격

동학농민군은 10월초 봉기후 남북접간의 연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늦어도 10월 말 이전에 즉시 가용했던 몇 천 명의 병력만으로도 소수의 관군이 지키던 공주감영을 공격하는 방안이다.

이는 앞서 전기 측면에서 분석시 언급한 바와 같이 곡식이 다 여물고 남북접이 연합

주 66) 공주시(2005), 전계서, p.132.



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11월 18일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기보다는 동학농민군은 10월초 봉기 직후 관군과 일본군이 배치되기 전에 신속히 남북접간의 연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늦어도 10월 말 이전에 즉시 가용했던 몇 천 명의 병력만으로도 소수의 관군이 지키던 공주감영을 공격했다더라면 쉽게 이를 점령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전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6·25전쟁 초기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서울점령을 자축하고 사기를 앙양시킬 겸 동서부전선간 보조를 맞추고 도하수단을 강구할 목적으로 서울에서 3일간 지체하였는데, 그 사이 한국군은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편성하여 한강방어선을 구축하고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북한군의 한강이남 진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 24사단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 3. 차선안Ⅱ : 공주 공격방법 변화

#### 1) 대안① : 방어배치된 관군과 일본군을 개활지로 유인격멸

첫 번째 대안은 정면공격의 반복보다 조일연합군이 강하게 배치되었던 우금치-금학동-능치-봉화대일대의 고지군에서 조일연합군을 끌어내어 이들이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조일연합군을 격멸하는 것이다.

동학농민군은 우금치를 돌파하기 위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40~50여 차례 파상공격(波狀攻撃)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방법보다는 이인과 공주사이 또는 경천과 공주사이 개활지 일대로 유인격멸을 했어야 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험지에 대한 공격방법이면서 인위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필연적 기회'<sup>67)</sup>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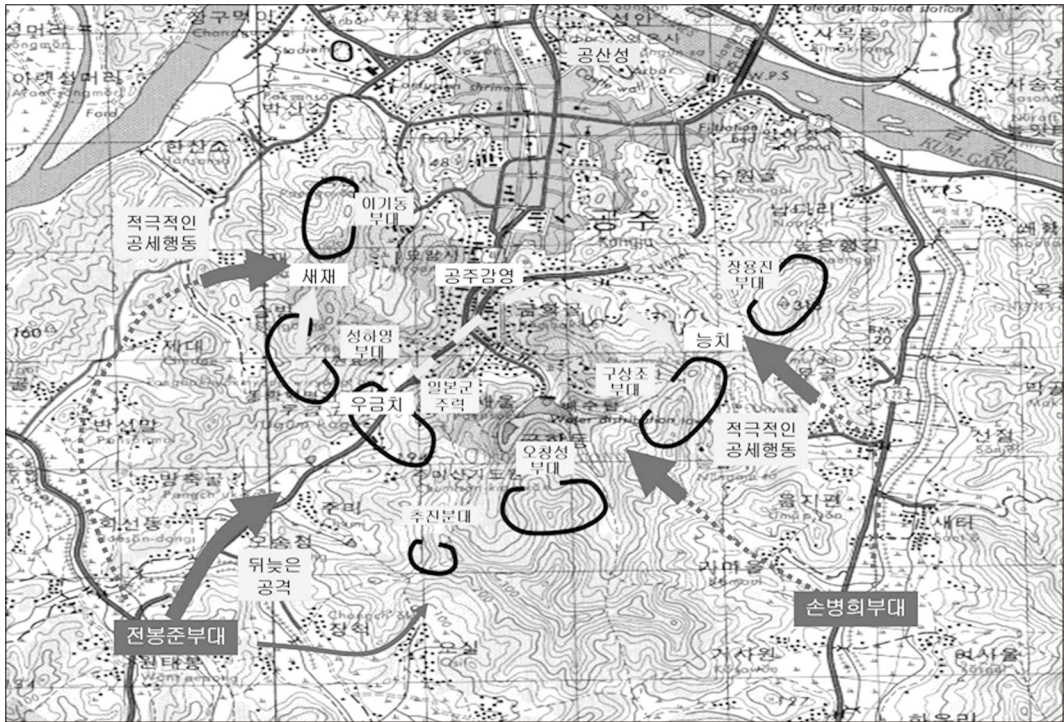
그러나 만약 조일연합군이 동학농민군의 의도대로 유인되지 않을 경우 동학농민군은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공주감영일대에 강하게 배치된 관군 및 일본군을 상대로 정면공격하여 공주를 탈취확보하기보다는 일부의 동학농민군으로 이를 고착시키고 주력은 이들과 접전을 회피한 상태에서 공주일대를 우회하는 앞의 최선안인 공주우회를 선택해야 한다.

#### 2) 대안② : 손병희부대와 조공이 적극적인 공세로 방어력 분산

두 번째 대안은 새재방면으로 공격한 전봉준 부대의 조공이나 능치방면으로 공격한 손병희 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우금치일대의 방어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주 67) 자세한 내용은 앞의 제2장 2절 2항 “전기(戰機)”에 대한 설명을 참조할 것.

이 방안은 동학농민군 특성상 신속한 주·조공 전환이 제한되어 주·조공을 전환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외선작전<sup>68)</sup>을 고려시 전봉준 총대장이 이끄는 본대가 비록 적의 주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배치되어 있는 우금치 방면으로 계속 공격하는 불리한 조건이나 전봉준 총대장이 손병희 부대를 포함하여 예하부대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으로 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배치된 약점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적의 방어력을 분산시키는 데 주안을 둔 방안이다.



(그림 4) 조공과 손병희 부대의 적극적인 공세로 방어력 분산후 주공 공격안

이는 주공으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새재 방면으로 공격한 조공이나 손병희 부대가 다소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12월 4일부터 적극적이면서도 과감한 돌파전을 감행하여 공주 서북방이나 동남방을 위협하였다면 일본

주 68) 외선작전(外線作戰 : Operation On Exterior Lines)은 적의 외부에 작전선을 구성하여 광범위한 포위로 공세를 취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가지고 주동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투력이 분리되기 쉽고, 각개격파를 당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외선작전은 작전방향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각 부대간의 행동을 긴밀히 연계시키며, 유·무형의 전투력을 통합하여 적에게 각개격파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이 매우 중요하다.(자세한 내용은 육군대학 譯, 『전리입문』, 1998, pp.46~49의 내용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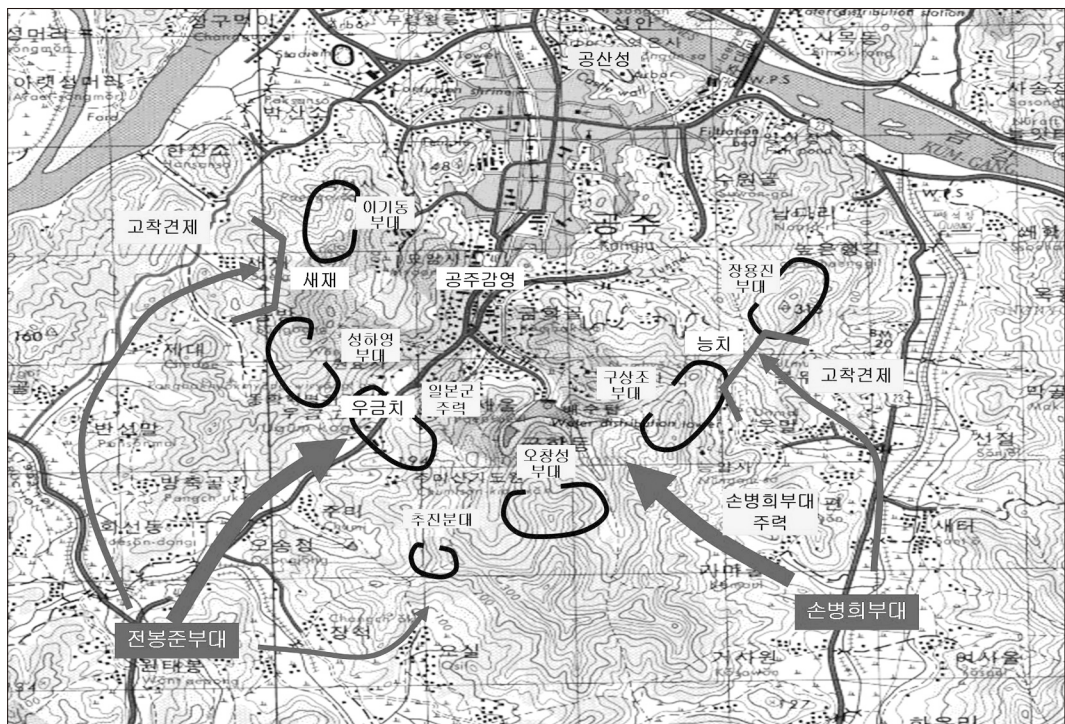
군의 주력을 포함한 방어부대의 주력이 우금치일대로 집중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금치에서 능치에 이르는 방어선에 일본군의 주력을 포함하여 관군 및 일본군의 병력배치는 12월 4일(음 11. 8) 저녁 무렵부터 자정사이에 대체로 이루어졌고, 12월 5일 오전에 일본군 중대장 모리오(森尾雅一) 대위는 예비로 있던 3소대마저 우금치로 추가 증원을 하였기 때문이다.

### 3) 대안③ : 손병희 부대 공격방향 조정

세 번째 대안은 손병희 부대가 일부의 병력으로 능치일대의 관군을 고착견제하고 주력을 전봉준 부대 우측으로 집중하는 방안으로 지형을 고려시 2가지 방안이 가용하다.

첫째는 주미산(△430) 좌단 오실방면 즉 일본군이 추진 배치된 곳으로 전환하여 집중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미산(△430)과 능암산(△390) 사이인 가마울에서 금학동으로 넘어가는 기동로 즉, 관군 오창성 부대가 배치되었던 방향으로 집중 공격하는 방안이다.

특히 이중에서 가마울 쪽에서 금학동방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동학농민군이 외선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이므로 외선작전의 특성상 상호지원이 불가능한 지형인 주미산(△430)과 능암산(△390)을 사이에 두고 외선작전의 핵심인 외부로부터 내부로 전투력집중을 달성하기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림 5〉 손병희 부대 공격방향을 가마울방면으로 조정 방안



그러므로 양개부대가 상호 지원 및 협조된 작전이 가능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방어부대가 우금치일대에 집중된 반면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배치되었고 그중에서 오창성 부대는 주미산일대 기동제한 등과 같은 방자의 이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방어력 배치가 미약하였기 때문에 손병희 부대를 이 지역으로 집중 운용한다면 전봉준 부대와 상호 협조 및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금치에 집중시킨 방어력을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만약 방자가 신속히 병력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결국 돌파될 위험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 〈참 고 문 헌〉

### 1. 단 행 본

- 공주시. 『공주와 동학농민혁명』. 공주 : 돌모루, 2005.
- 국사편찬위원회 역.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89.  
 . 『순무 선봉진 등록』.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89.  
 . 『全琿準供草』.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89.
- 국사편찬위원회. 『羅巖隨錄』.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80.  
 .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개혁』 한국사17.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77.
- 김양식. 『근대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서울 : 신서원, 1996.
- 史芸研究所 편저.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2, 13, 15, 18권. 서울 : 사운연구소, 1996.
- 신용하.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서울 : 대정문화사, 1996.
- 오지영 저. 미춘수 역. 『동학사 : 조선민중운동노기록』. 서울 : 평범사, 1970.
-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이론연구』. 대전 : 육군교육사령부, 1987.
- 육군본부. 『전술』. 대전 : 육군본부, 2005.
- 이종학 편저. 『軍事戰略論』. 서울 : 박영사, 1987.
- 이종학. 『現代戰略論』. 서울 : 박영사, 1988.  
 . 『전략이론이란 무엇인가?』. 대전 : 충남대학교출판부, 2005.
- 황현 역. 『梧下記聞』. 서울 : 역사비평사, 1994.
- Fuller, J. F. C. *The Foundation of the Science of War*. London : Hutchinson & Co. LTD, 1925.

### 2. 논 문

- 박맹수. “갑오농민전쟁의 종합적 고찰,” 서울 : 한국사연구회, 1994.  
 . “공주와 동학농민혁명관련 문헌자료,” 공주시, 『공주와 東學農民戰爭』 (2005)  
 .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검토 - 동학의 남북접 문제를 중심으로,” 『동학연구』 (2001)  
 . “동학농민혁명과 우금치전투,” 부여시, 『백제문화』 제23집(1994)
- 배항섭. “충청도지역 東學農民戰爭과 농민군지도부의 성격,” 서울 : 서경문화사, 1997.
- 신영우.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서울 : 새길, 1995.
- 양진석. “충청지역 농민전쟁의 전개양상,” 『백제문화』 제23집(1994)
- 이이화. “전봉준 반제의 봉화 높이 들다,” 『역사비평』 (1990)



# 프랑스 전역시 구데리안 군단의 초기 작전 분석

## 목 차

- I. 서 론
- II. 구데리안 군단의 초기 작전
  - 1. 아르덴느 삼림 및 프랑스 국경 통과작전
  - 2. 뮤즈 강 도하작전
  - 3. 프랑스군 역습격퇴
- III. 작전술에 기여하는 전술지도수행 측면 분석
  - 1. 작전목적 및 목표부여 측면
  - 2. 제 전투를 연속적·동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
  - 3. 전술에 유리한 상황조성
  - 4. 전술적 성과를 전략적 이점으로 확대
- IV. 결 론



중령 김규빈  
(육대 세계전쟁사 교관)

## I. 서 론

제2차 세계대전시 구데리안 군단의 아르덴느 森林 통과와 뮤즈 강 도하작전은 독일의 서부유럽 전선에서 성공의 緒戰이자 전 유럽 석권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는 핵심 전역이었다. 이 전역은 구데리안 기갑군단이 독일-룩셈부르크의 국경선을 출발한 5. 10일부터 약 5일 만에 뮤즈 강 교두보를 확보한 120시간여의 전투로서 대부대가 충돌하는 대규모의 전투는 없었지만 단 몇 개의 독일 기갑사단만으로 프랑스의 운명을 결정한 시간이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은 프랑스와 연합국들에 대한 서부공격을 개시하였다. 주공인 클리이스트 장군의 A집단군은 독일군의 프랑스 침공계획인 만슈타인 계획에 따라 아르덴느 삼림지역을 통과하여 공격하였다. 구데리안 장군이 지휘하는 제19기갑군단은 세당을 향해 집중돌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아르덴느 삼림지역을 통과하여 클리이스트

부대를 先導하였다. 기갑부대의 기동속도를 최대로 활용하여 구데리안 사단들은 사전에 결정된 4개의 기동로를 따라 세당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독일군의 주공을 식별하고 대응하기도 전에 서부전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구데리안 군단이 뮤즈 강을 도하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는 13일부터 15일까지의 상황은 프랑스군에게도 전세를 反轉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였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기회를 상실한 반면, 구데리안 군단은 초기의 승세를 유지시켜 승기를 확대함으로써 결국 전략적인 승리를 달성했다.

본고에서는 A집단군의 선봉인 구데리안 군단이 아르덴 삼림지대와 뮤즈 강을 어떻게 통과하여 돌파하였는지를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독일군의 공격에 대한 프랑스군의 반격은 왜 실패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전역에서 구데리안 군단의 작전경과를 전술적 차원에서 설명하되, 독일군의 對프랑스 작전이라는 전역계획에 포함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부대로서 “작전술에 기여하는 전술지도”라는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수준을 전략, 작전적 수준, 전술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작전술은 전략과 전술의 중간수준으로 방법이나 수단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그 역할 중 전술지도는 전술의 상위개념으로서 전술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은 전술적 수준에 비해 훨씬 더 확장된 일련의 전술적 행동들을 다루게 되며, 이러한 영역의 지휘를 담당하는 지휘관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슬림(William J. Slim) 원수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유지하여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행동에 따르도록 하여 아군의 音調에 맞춰 춤을 추도록 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이 지녀야 할 능력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sup>1)</sup>

본고에서는 구데리안 장군의 초기작전을 상기와 같은 작전적 수준 작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다만 지면의 제한과 분석내용의 세부고찰을 위해 독일군의 초기작전인 5일 동안의 시간과 독일 국경선으로부터 세당 및 교두보 확보 후 프랑스군의 초기역습이 종료되는 캐머리-벌손까지의 공세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주 1) 신태복 역, “전술과 작전적 수준의 전쟁”, 군사과학자료 133호, 1987

## Ⅱ. 구데리안 군단의 초기 작전

작전술이란 “군사전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술적 수단들을 조직 또는 연계시키는 활동으로써 전략목표를 전장에서 행동계획으로 전환하여 군사작전화하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작전술은 전략과 전술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말해 작전술은 전략의 하위개념으로 전략지침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전역 및 대규모 작전과 관련되고, 또한 전술의 상위개념으로 전략지침에 부합하는 전투와 교전 등을 실시토록 하는 중간 단계로서 상기 두 개념을 상호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작전술의 역할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략의 하위개념으로써 전략지침을 수행하며, 둘째는 전술의 상위개념으로써 전술적 행동을 지도하고, 셋째는 전쟁의 각 차원간 효과를 시너지화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전투가 전략목표에 지향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전술의 역할을 간략히 도식화해보면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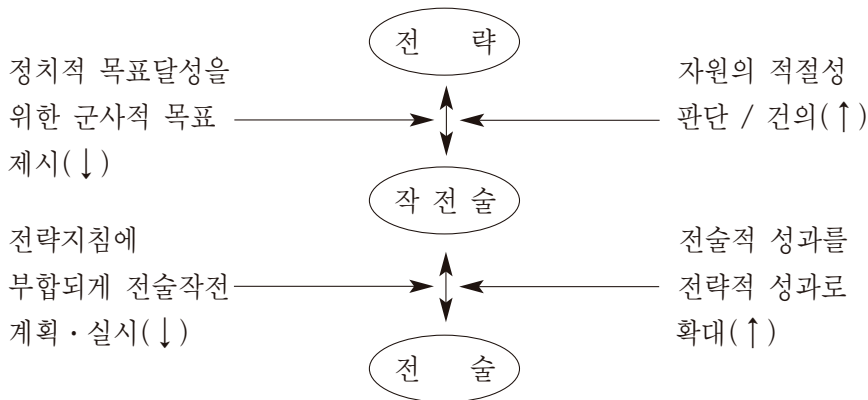


그림 1. 작전술의 역할<sup>3)</sup>

독일의 프랑스 침공이 결정되었을 때 구데리안 장군이 부여받은 군단의 임무는 독일군의 주공의 최선봉으로서 아르덴느 삼림을 통과하여 프랑스 국경요새인 세당을 신속히 돌파하여 영불해협을 가능한 빨리 도달하여 연합군을 남북으로 두 동강 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슈타인 장군이 지적한대로 신속하게 - 연합군의 군사 지도자들이 자신의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략예비를 전환할 여유를 주지 않을 만큼 - 기갑부대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속도로 아르덴느 삼림을 통과하고 뮤즈 강을 도하함으로써 영불해협을 향해 진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주 2) 육군본부, 교참100-1 「작전술」, pp.2-1~2

3) 앞의 책, 작전술, p.2-19

구데리안 장군은 이러한 작전의 성공을 확신했다. 1940년 초 독일 수상관저에서 개최된 프랑스 공격을 위한 회의에서 아르덴느 삼림 돌파와 뮤즈 강 도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구데리안 장군은 자신의 계획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넷째 날에 세당을 점령 후 뮤즈 강에 도착할 것이며, 다음 날에 그 강을 도하하여 저녁까지 강의 대안에 교두보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sup>4)</sup> 이러한 계획을 확신했던 것은 만슈타인 계획이 뒷받침했지만 구데리안 장군의 작전술적인 사고방식이 히틀러의 전략적 구상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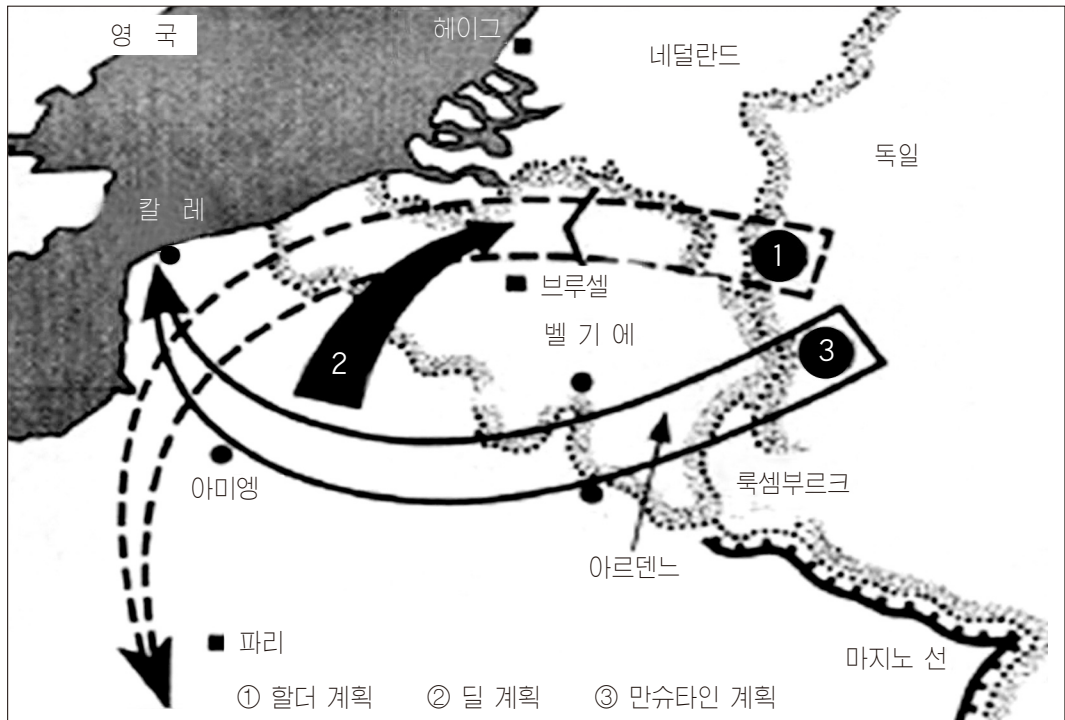


그림 2 할더/만슈타인/딜 계획

이러한 구데리안의 구상이 가능한 것은 당시의 독일군 및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대비하면서 살펴보면 그 달성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군은 독일의 공격이 제1차 세계 대전시의 공격방법 및 방향과 동일할 것이라 판단하고 이러한 독일의 공격계획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방어위주의 계획은 당시의 국제정세와 연합국간 협조 등의 문제로 5차례나 변경하면서, 발전시켜 왔다. 최종적인 5기 계획은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및 벨기에군으로 연합군을 편성하고 독일군의 공격을

주 4) 김정오 역, 기계화부대장, 한원출판사, pp.161~162

네덜란드의 딜강 선에서 저지한다는 계획으로 심지어 당시 연합군의 가장 강력한 프랑스의 제7기갑군을 네덜란드의 브레다까지 진출시켜 공격하는 독일군의 추후방을 공격한다는 공세적인 방어계획<sup>5)</sup>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독일은 1940년 초까지 슬리펜 식의 할더 계획으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할더 계획에 대한 異議를 제기한 A집단군 참모장인 만슈타인 장군의 案에 따라 아르덴느와 세당을 돌파하는 “전격전(電擊戰)”으로 연합군을 섬멸하고 전 프랑스를 석권하는 계획으로 변경, 승인되었다.

이러한 독일군의 원대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구데리안 군단은 프랑스군의 주력이 세당 방면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10일 이내에 세당지역의 뮤즈 강을 도하하여 프랑스군 지휘부의 의지와 예비대 운용을 마비시켜야만 했다.

특히 이러한 결정적인 작전을 위해 독일군은 연합군을 완벽히 기만시켜야 했다. 이러한 기만작전의 성공을 위해 첫째, 연합군은 그들의 계획대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주력과 주 예비부대가 집중되어야 했고, 둘째는 연합군이 독일군의 주공을 판단한 후 전력을 전환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주력부대가 일정지역까지 신속히 전진해야 했다.

이러한 전략에 의해 수립된 작전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된 독일군의 작전 중 초기 5일간 진행된 구데리안 장군의 제19기갑군단의 작전을 시간적(일자별) 전투경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아르덴느 삼림 및 프랑스 국경 통과작전

아르덴 삼림지대는 폭 80km, 종심 120km, 그리고 평균고도가 400~500m이며, 뮤즈 강은 폭이 약 70~500야드이며 유속은 상당히 급한 편이었다. 그런데 이 아르덴 삼림지대와 뮤즈 강은 세당과 나무르에서 놀랄 정도로 판이한 정경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세당 부근에서 뮤즈 강은 폭이 약 50m의 널찍한 흐름이며, 강의 양편 기슭은 상당히 부드러운 언덕을 이루고 있어 대안에 대해 매우 훌륭한 사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구간이 바로 세당~메지에르 구간의 방어선을 담당하는 프랑스 제2군 작전지역의 특징이다. 그러나 메지에르~나무르의 프랑스 제9군이 담당하는 지역의 모습은 제2군 지역과는 상반되는 지역이었다. 메지에르에서 북쪽의 지베까지는 깊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강폭은 좁고, 꾸불꾸불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양쪽기슭은 나무로 가득 찼고, 험한 절벽이 강 옆으로 형성되어 있었다.<sup>6)</sup>

주 5) 육사 전사학과, 세계전쟁사, 황금알, pp.289~295

6)이용호 역, 「파리함락」, (서울 : 백조출판사, 1972.), p.57



가. 룩셈부르크 국경선 돌파(5월 10일)

5. 10일 새벽 구데리안은 보병 1개 대대를 벨기에 국경선 마르트랑그(Martelange) 서쪽의 벨기에군 후방에 공중기동시켜 후방에서 국경선 방어부대를 혼란시켰다. 이어 05시 30분 예하 3개의 관저사단을 독일-룩셈부르크 국경선을 통과하면서 진격을 개시하였다.

연합군은 중립국인 룩셈부르크 및 벨기에 지역에 대한 독일군의 대규모 침략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 및 벨기에의 소규모의 미약한 군만 배치되어 있었다. 룩셈부르크는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독일군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흩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 선두부대들은 룩셈부르크 국경수비대들이 국경선 일대에 설치해 놓은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전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였다. 이어 룩셈부르크-벨기에 국경선에 도착한 독일군은 또다시 벨기에의 부대들과 그들이 설치한 장애물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림 3. 구데리안 군단의 뮤즈 강까지 진격

당시 벨기에군의 방어는 북부의 암스텔담 및 앤트워프 등의 북부지역 위주로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남부 아르덴 삼림에 대해서는 단지 이 지역을 차장하기 위해 소수의 경보병(증강된 사단규모)으로 편성된 아르덴 지역 국경수비대만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부대들은 독일군의 전차부대가 사격하면서 전진하자 사전에 설치해 놓은 각종 장애물을

방치한 채 북쪽의 나무르 방향으로 철수함으로써 독일군은 병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용지물이 된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전진하는 모습의 공격이 지속되었다.

한편 프랑스 제2군 사령관 훈찌제(Huntziger) 장군은 독일군의 아르덴느 삼림 방면으로의 침략을 보고받자 곧, 예하 제2, 5 경기병사단으로 하여금 아르덴 삼림지역에 대한 遮障作戰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5. 10일까지 아르덴느 삼림지역에 배치되었으나 그 날(10일) 오후 로시크날 부근에 배치된 제2경기병사단의 전위부대가 독일군 제10판저사단의 선두부대와 접촉하여 조우전을 실시하였으나 독일군 전차부대의 공격에 격파되어 세르와 강 후방으로 급속히 퇴각하였다.<sup>7)</sup> 이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연합작전계획, 장애물 활용한 작전수행 미숙, 상호간 정보유통의 부재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결국 지형의 이점을 활용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뮤즈 강 후방으로 제대로 전투도 수행하지 않고 철수하고 말았다.

제1판저사단은 새벽에 출동한 공정부대와 연결하고 내륙으로 전진하면서, 연합군(벨기에의 아르덴느 사단과 프랑스의 경기병사단)의 저항을 격파하였으나 이들이 철수하면서 설치한 장애물과 도로폭파 때문에 신속히 진격할 수가 없었다. 이는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특성상 도로 폭파시 우회 전진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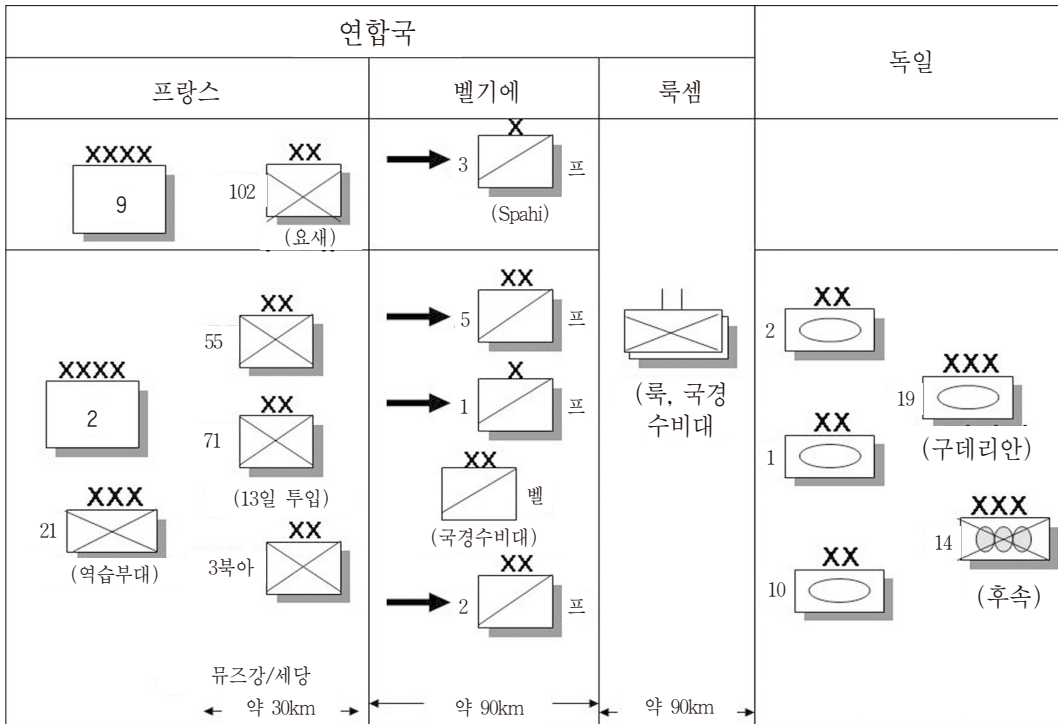


그림 4. 아르덴느 삼림/세당 지역 부대배치

주 7) 장삼열 역, “1940년 5월 제2의 세당전투”, 『군사평론』 198

### 나. 아르덴느 삼림 통과 작전(5.11~12일)

룩셈부르크 지역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벨기에 국경선에 도착한 제1판저사단은 벨기에의 네프샤토우(Nefchateau) 요새로 전진하였고, 이 요새를 짚고 치열한 격전 끝에 탈취하고 계속 전진하여 11일까지 세므와 강에 도착하였다.

한편 이러한 급격한 독일군의 진격상황을 확인한 프랑스 2군사령관은 예하 경기갑사단에게 세므와(Semois)강까지 철수를 허용하되 “세므와강 선은 반드시 사수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프랑스 제2군 북쪽의 9군사령관도 독일군 침공소식에 예하 제3스파이여단에게 군의 엄호부대로서 벨기에의 아르덴느 지역으로 전진시켰으나, 남쪽 2군 지역의 제5경보병사단이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자 독일군과 접촉이 없었음에도 뮤즈 강으로 철수해버려 북쪽 측방이 완전히 노출되었고, 이 핫점을 발견한 독일군 제1판저사단의 선두부대는 그 날(5. 11일) 저녁 부일롱(Bouillon) 까지 전진하여 세므와 강을 도하하기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였다.<sup>8)</sup>



그림 5. 구데리안 군단의 아르덴 삼림지대 돌파

주 8) 김정오 역, 앞의 책, pp.171~172

제2, 10판저사단은 전진간 장애물 극복에 일부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진격속도가 늦었으나 리브라몽(Librumont)과 벨레폰테인 지역을 탈취하여 계획에 따라 진격해 나가고 있었다.

다음날 5. 12일 아침(07시 45분) 제1판저사단은 좌우측에서 병진공격하는 제2, 10판저사단의 늦어진 진출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판저사단은 부일롱 일대에서 세프와 강을 방어하는 프랑스 제5경보병사단에 대해 공격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예하 제1소총연대는 프랑스군의 포병과 공군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강습도하를 실시함으로써 강 대안의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림 6. 경전차 삼림통과 모습



그림 7. 오토바이 부대(정찰부대)

프랑스군은 세프와 강의 교량들을 폭파해버렸지만 독일군은 수심이 얇은 지점에서 전차를 도하시키고, 또한 새로운 교량을 가설하면서 신속히 도하하였다.<sup>9)</sup>

이렇게 제1판저사단이 세프와 강을 급속도하하여 뮤즈 강 방향으로 진격하자, 프랑스 제2, 5경보병사단은 군사령관의 사수명령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전투를 회피하고 뮤즈 강 후방으로 철수하였고, 이에 제1판저사단은 퇴각하는 프랑스군을 뒤쫓아 전진하여 뮤즈 강 북쪽제방을 점령함으로써 역사적인 세당의 시가지 및 요새를 손쉽게 탈취하였다.

12일 프랑스군은 세당 서측의 방어선에 기존의 제55보병사단과 제3북아프리카사단 방어선 사이에 제71보병사단을 추가 투입하였고, 추가적으로 후방에는 제21군단(제55보병사단, 제3기갑사단, 제3차량화사단)을 새로 창설하여 배치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제55, 71보병사단은 모두 전투력이 형편없는 "B"급 사단이었고 특히 대전차화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더구나 제71보병사단은 13일이 되어서야 방어진지에 투입하고 있었고, 제55보병사단 역시 제5경보병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진지를 재조정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주 9) 김정오 역, 앞의 책, p.172.





그림 8. 독일군의 세르와 강 도하지점



그림 9. 독일군의 세르와 강 도하모습

## 2. 뮈즈 강 도하작전(5. 13)

구테리안에게 부여된 뮈즈 강 도하작전은 13일 16:00시에 실시토록 지시되었다. 그러나 최초 구테리안은 즉각 도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제1, 10판저사단은 도하공격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인 뮈즈 강 동안(東岸)에 도착해 있었지만 제2판저사단은 세르와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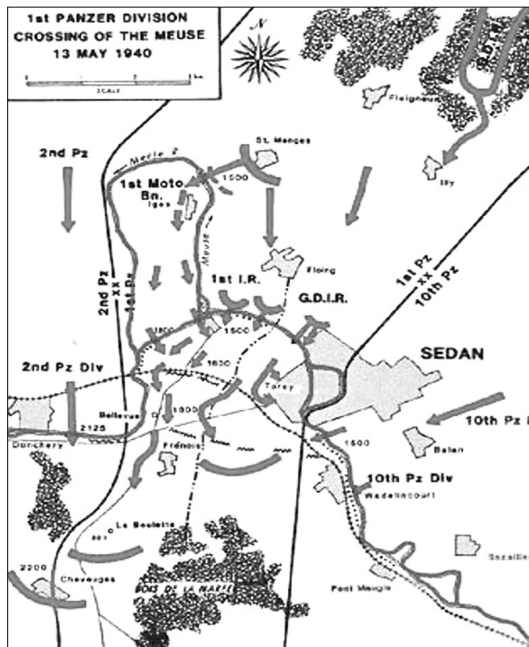


그림 10. 구테리안 군단의 도하계획



그림 11. 뮈즈 강 도하장면



도하하지 못한 곤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뮤즈 강 도하시간을 맞추기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군단의 신속하고 대담한 기동을 프랑스군이 결코 예상치 못할 것이라는 기습의 이점을 더 중요시하여 가용한 사단인 1, 10 판저사단으로 하여금 즉각 도하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sup>10)</sup>

구데리안은 도하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간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전 40년 2월 7일 코블렌스에서 실시했던 위게임시 수립하였던 당시 명령서를 꺼내 날짜와 시간을 바꿔 명령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그 명령은 날짜를 5월 13일로, 공격시간을 16시로 변경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상황에 완벽하게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sup>11)</sup>

당시의 도하작전계획을 살펴보면 북쪽 제2판저사단의 임무는 도하부대인 제1판저사단의 우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남쪽에 위치한 제10판저사단은 세당 남쪽에서 동시에 뮤즈 강을 도하하여 군단의 남쪽 측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공인 제1판저사단은 세당 북쪽에서 뮤즈 강을 신속히 도하하여 세당 전지역과 뮤즈 강을 감제할 수 있는 제1차 목표인 마르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5월 13일 군단은 하루종일 도하작전을 준비하였다. 도하부대와 장비들을 도하지점 북쪽에 집결시켰으며, 구데리안은 도하작전 준비상태 확인을 위해 예하부대를 방문하여 일일이 확인하였다.

한편 프랑스군은 오전부터 독일군에게 포병사격을 실시하였으나 산발적인 사격만을 실시함으로써 밀집되어 있는 독일군을 완전히 유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프랑스 포병은 탄약보급률이 문당 30발로 제한되었고, 독일군의



그림 12 슈투카의 폭격모습



그림 13 제1판저사단의 뮤즈 강 도하지점

주 10) 김정오 역, 앞의 책, p.174.

11) 김정오 역, 앞의 책, p.175.

도하시기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작전인 도하작전 이전에 많은 탄약을 소모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독일 항공부대는 5월13일 구데리안 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급강하 폭격기를 포함한 전투기를 집중하여 12시부터 16시까지 4시간이상 지속적으로 제파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뮤즈 강 남쪽제방에 노출된 프랑스군에게 폭탄을 퍼부었다.

이 치열한 공중폭격으로 프랑스군 포병은 물론 전 프랑스군이 큰 충격을 받고 대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sup>12)</sup> 예로 항공폭격간 프랑스 제55보병사단장 라폰데인 장군은 군단장에게 독일군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보고하였고, 군단장은 역습을 위해 준비해 둔 예비인 2개 보병연대와 2개 전차대대를 세당에 추진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실제 그 부대들은 밤늦게까지 이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적시에 방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5. 13일 16:00시 항공폭격이 끝나면서 독일군 포병이 초도화된 프랑스군 방어진지 위에 짧고 강렬한 포병사격을 실시하면서 도하부대는 도하를 위한 격렬한 전투를 개시하였다. 독일군 보병(주공 : 1소총연대)과 전투공병대는 16:00시에 미리 준비해놓은 고무보트와 돌격단정으로 뮤즈 강을 도하하였고, 이어서 구데리안도 도하부대와 함께 돌격단정으로 도하하여 대안의 제방에서 제1소총연대장인 발크 중령과 합류하였다. 초기 격렬한 전투이후 제1소총연대 및 그로스-도이칠란드 보병연대의 도하공격은 마치 기동훈련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프랑스군 포병은 독일군 급강하폭격기의 끊임없는 공격에 의해 거의 마비를 당해 버린 상태였으며, 뮤즈 강을 연해있던 콘크리트 포상(砲床)들은 독일군의 대전차 및 대공포병에 의해 붕괴되었고, 프랑스군의 기관총 사수들은 독일군의 중화기 및 포병의 사격에 의해 몸을 숨기도록 강요당했기 때문이었다.<sup>13)</sup>

도하지점이 노출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의 손실은 가벼워 제1판저사단은 해질 무렵인 18:30분에 공병대가 골리아 부근에 도보부교를 설치할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야음을 이용한 계속 공격으로 교두보를 확보하기로 결심한 선두부대 제1소총연대장 발크 중령은 부대원이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도록

주 12) 독일 제3전대 예하 제2전술공군비행군단(군단장 : 로에르쎄 소장)이 작전에 참여했으며 동시에 제5전술공군비행군단은 중심지역에 대한 차단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슈바르쯔코프 대령이 지휘하는 제77급강하폭격편대의 약 1,500대의 항공기가 클라이스트 기갑군단을 지원하였다. 5. 13일 세당 지역에만 310대의 폭격기, 200대의 폭격기 및 300대의 전투/전폭기가 투입되어 프랑스군에 대해 1,215회의 출격으로 510 s/t 정도의 공중폭격을 가하였다.

13) 김정오 역, 앞의 책, p.178.

독려하였다. 그 결과 제1소총연대는 23:00시에는 마르페 고지의 일부를 점령했고, 밤새 공격한 결과 다음날 새벽에는 프랑스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고지의 완전 점령은 물론 전방 6마일까지 진격하여 캐머리(Chemery)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1판저사단의 뮤즈 강 도하작전의 성공으로 제2판저사단과 대치하고 있던 프랑스 제55사단의 방어선은 와해되었고, 프랑스군은 포위의 위협 속에 무질서하였다.

또한 제2 판저사단의 선발부대인 수색대대 및 모터사이클 대대는 수차례에 걸친 치열한 격전 끝에 밤 22:00시에는 뮤즈 강 남쪽 제방에 있는 크로익스-파이어트(Croix - Piot) 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제10판저사단은 뮤즈 강을 도하하여 대안상에 교두보를 설치했지만 포병지원의 결핍으로 힘든 전투를 해야 했다. 즉, 주공부대인 제1판저사단에 대부분의 화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2, 10판저사단은 큰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도하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13일 야간 제1판저사단의 소총여단은 뮤즈 강의 좌측제방을 건너 계속 전진하고 있었으나 전차와 포병은 도하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구데리안은 14일부터는 항공부대가 다른 곳에서 운용되어 더 이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투근무지원부대에 앞서 군단의 중(重)대공포를 야간에 급속히 기동시켜 뮤즈 강의 가까운 제방까지 이동시켰다.

### 3. 프랑스군 역습격퇴(5. 14~ 15)

프랑스군이 세당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결정적인 역습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뮤즈 강 선단을 따라 배치된 병커를 제외하고는 제55보병사단은 부대훈련 부족과 지휘통솔의 문제점 등으로 와해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사단의 피해는 심하지 않았으나 병사들의 사기가 급속히 저하되어 독일 항공기의 폭격이 있자, 공황상태가 발생하여 포병부대 병사들은 포마저 버리고 도망가기 급급하는 등 프랑스군의 모든 지휘통솔 체계가 마비되었다. 오직 일부 전투원만 고립된 채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었다.<sup>14)</sup>

5월14일 04:30분에 프랑스 제10군단장(그랑샤르 장군)은 독일군의 뮤즈 강 도하상황을 보고받자, 곧 예비부대로 하여금 2개 방향으로의 역습을 지시하였다. 군단 예비인 213보병연대와 제7전차대대는 캐머리 방향으로, 제205보병연대와 제4전차대대는 벌손 방향으로 각각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주 14) 이한홍 역, 전투지휘의 원칙, 육사 화랑대연구소, pp.162~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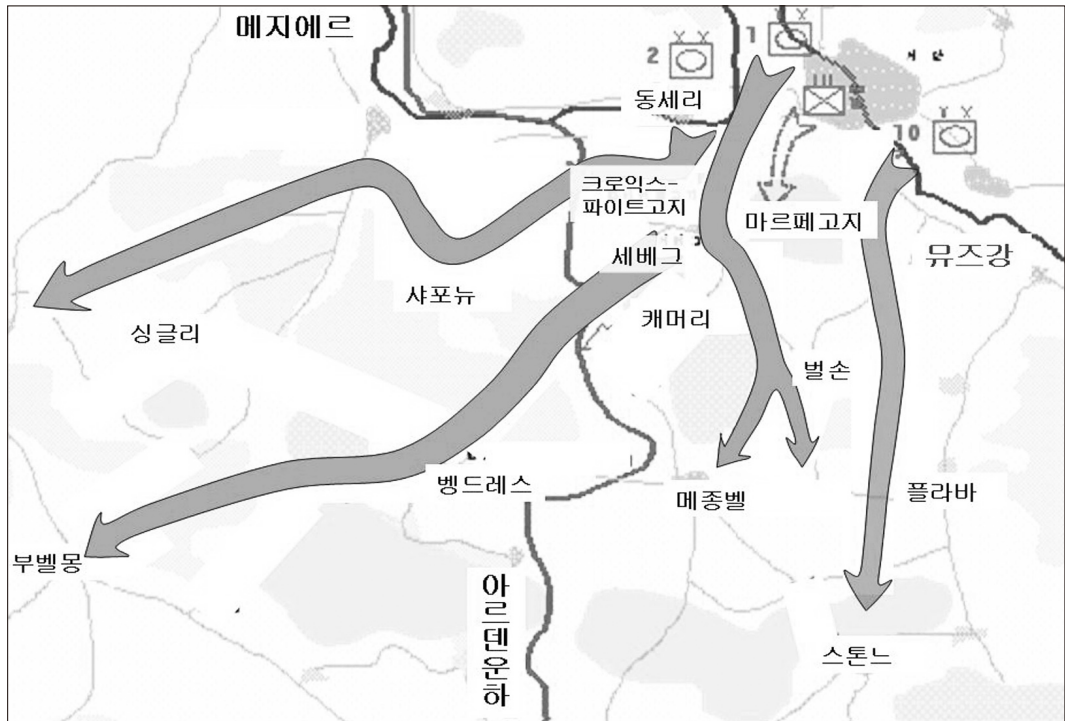


그림 14. 뮤즈 강 도하 및 전과확대

그러나 어느 부대 하나 역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늦은 07:00경에 제213보병연대와 제7전차대대가 카메라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으나 독일군 제1판저사단의 전차부대들이 이미 뮤즈 강을 도하하였고, 선두부대인 독일 제1소총연대는 이미 마르페 고지에서 전진하여 카메라 및 벌손 일대에서 진지를 강화한 뒤였다. 카메라 방향으로의 역습은 실시된 지 얼마되지 않아 전차의 절반을 잃고 무질서하게 후퇴하였고, 벌손 지역에서의 역습은 준비가 되지 않아 끝내 실시되지 않은 채 09:00시에 프랑스군의 공격은 종료되었다.

한편, 구데리안은 강력한 프랑스군 기갑부대가 카메라를 향해 이동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먼저 도하한 제1판저사단의 전차부대를 스톤스 방향으로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고, 또한 제2판저사단의 일부부대(1개여단)를 제1판저사단 도하지점으로 이동하여 제1판저사단을 후속하여 뮤즈 강을 건너 이동하게 하였다. 이는 프랑스군이 공격해왔을 때 가용한 기갑전투력을 對岸에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단의 전투지경선을 무시하고 제1판저사단의 후속부대 보다 인접 제2판저사단의 기갑부대를 먼저 도하시킴으로써 교두보상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휘조치였다.

카메라 일대에서 프랑스군의 역습이 실패하게 되자 프랑스군은 무질서의 모습 그대

로였다. 화포나 무기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철수 하는 등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4전차대대의 경우 훈련부족과 사기저하, 그리고 부적절한 지휘통솔의 결과로 완전 궤멸되어 구데리안 군단은 별 어려움 없이 교두보를 확장할 수가 있었다.

기간중 제2판저사단은 이제스 돌출부의 좌측 동세리 부근에서 뮤즈 강을 도하하여 남쪽 제방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제10판저사단은 아직도 뮤즈 강 서안의 프랑스군의 강력한 저항과 포병화력의 부족에 도하후 치열한 전투가 실시되었다.

한편, 이러한 독일군의 도하작전을 거부하기 위해 연합군의 공군은 14일 오후 가용한 전술폭격기를 동원하여 세당 지역의 골리에 부근에 가설된 부교를 파괴하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13일부터 아르덴 숲의 뮤즈 강 후방에 긴급 추진배치되어 있던 구데리안 군단의 대공포여단과 독일군 전투요격기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많은 피해를 입혔다.<sup>15)</sup>

14일 정오 독일군 제1, 2 판저사단은 세당 지역의 교두보를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제10 판저사단은 프랑스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교두보를 안전하게 확장시킬 수 없어 남쪽의 측익을 방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때 구데리안은 당시 제1판저사단을 “서쪽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아르덴 운하 동쪽 교두보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구데리안은 중단 없는 진격을 결심하게 된다. 즉, 제10판저사단을 뮤즈 강 남쪽 측방을 방호하기 위해 배치시키고, 제1, 2판저사단 모두를 서쪽의 아르덴 운하를 도하하고 프랑스군 진지를 완전히 돌파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런 결정에 따라 그로스-도이칠란드 연대와 제10판저사단을 스톤느 부근에서 군단 진격로의 남쪽을 경계하는 임무를 부여하여 이후 후속하는 제대의 도하를 지원하게 하였다.

결국 2개 사단만으로 진격하고 1개 판저사단은 측방노출 보호를 위해 후속제대 도착시까지 남쪽의 스톤느 지역 일대에 잔류시켰다.

한편 구데리안 군단의 거센 공격에 연합군 동부전선사령관 조프르 장군은 예하 제21군단에게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명령을 받은 군단은 12일에 세당을 향해 이동하여 14일 아침에 가까스로 스톤느 부근에 도착하고 있었다. 군단장(프라비니 장군)은 방어선을 재정비하고 16시에 제3기갑사단과 제3차량화사단으로 하여금 스톤느에서 캐머리를 향해 공격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하달된 역습방법은 전차부대가 보병을 따라 축차공격을 실시하는 프랑스군의 전통적인

주 15) 당시 영국공군의 71대 전투기중 40대가 격추되었으며, 당시 독일의 항공여단장인 하이펠(Hippel) 대령은 기사십자훈장을 수상하였다.



공격방법으로서 제3차량화사단을 주공으로 제3기갑사단을 작전통제하여 역습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전날 밤에 전차들이 여러 곳에 분산배치되어 원하는 시간에 전차들이 집결되지 않아 이 제한된 공격조차도 실시하기 어렵자, 공격개시시간을 15시에서 17시로 연기하였고 차후에는 공격준비가 미비하게 되었고 중심상의 부벨몽 지역이 돌파당했다는 소식에 접하자 지휘통제가 혼란하게 되었고 결국 그 공격마저도 모두 취소해버리고 말았다. 이후 현 위치에서 호를 구축하고 방어준비를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프랑스군의 역습은 실시되기도 전에 끝나고 말았다. 프랑스군의 역습작전 취소이유는 프랑스군의 교리 때문이었다. 당시 프랑스군의 역습교리는 적에 대해 균등한 압력을 가하여 失地를 회복하는 것이 정석이었고, 적의 돌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측방으로 역습을 가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군단장은 제3기갑사단에게 역습방향의 모든 접근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약 12마일 전선에 균등하게 분산 배치하게 함으로서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할 전투력이 없게 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만일 제3기갑사단이 계획대로 구데리안 군단의 측방으로 역습했다면 그 지점에 위치한 구데리안 군단의 사령부를 유린하고, 독일군을 일대 혼란에 빠뜨려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그날 저녁까지의 제1판저사단은 쉴 새 없이 아르덴운하 건너편에 부대들을 전개하여, 결사적인 프랑스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공격을 통해 싱글리(Singly)~벵드레스(Vendresse)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제10판저사단 전차대는 교두보를 돌파, 전진하여 벌손 주변의 남쪽 고지대에 도달하고 있었다.

최초 구데리안의 계획은 예하 3개 판저사단을 지휘하여 영불해협에 도달하고자 했으나 아르덴 삼림지역의 기동로 제한으로 후속부대가 늦게 진출함에 따라 남측방과 후방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구데리안의 제19기갑군단을 후속하여 남측에서 전진하는 제14차량화군단의 전진이 지연되면서 공격속도를 억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구데리안은 지속공격을 결정하면서 후속군단이 도착할 때까지 제10판저사단과 그로스-도이칠란드 연대로 하여금 군단의 남측방 경계를 담당하게 하였다. 즉, 제10판저사단이 그로스-도이칠란드연대를 작전지휘하여 아르덴 운하~스톤즈 근처의 고지대 남쪽의 뮤즈 강 만곡부를 연해서 구데리안 군단의 남측방을 엄호하도록 한 후 나머지 구데리안 군단은 계속 전진하도록 하였다.<sup>16)</sup>

이러한 문제는 결국 15일이 되어 도착한 제14차량화군단장과 논의 끝에 자신의 부대를 때놓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제14차량화군단이 세당 남쪽의 뮤즈 강 교두보 통제에

주 16) 김정오 역, 앞의 책, pp.182~183.

관련된 임무를 인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데리안 군단의 예하 제10판저사단과 그리스-도이칠란드연대를 제14군단의 지휘 하에 두기로 하였다. 그 결과 구데리안은 1, 2 판저사단 만을 가지고 영불해협으로 전진해야 했다.

한편 15일 그로스도이칠란드 연대는 스톤즈 부근의 감제고지를 장악하기 위해 남쪽으로 진출하여 이 지역에 투입하고 있던 프랑스 제3기갑사단과 제3차량화사단의 전방으로 진격해 나갔다. 이 당시는 스톤즈 부근에서 또 다른 프랑스군의 1개 경전차대대, 1개 중전차중대와 1개 보병대대가 국지적인 역습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양측은 대혼전에 빠져들었으나 그로스-도이칠란드 연대의 대전차중대의 활약으로 위기를 넘겼으며, 뒤이어 제10판저사단과 제14차량화군단의 제29차량화사단이 곧 이 지역에 도착하여 방어를 강화함으로써 구데리안 군단의 남쪽 측방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었다.

제1판저사단의 선두제대인 제1소총연대는 최초 공격개시 이후 수일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지칠대로 지쳐 있었으며, 연대전투력은 50% 이하였다. 그러나 평소 강한 훈련과, 연대장의 솔선수범하는 탁월한 지휘통솔 능력으로 부벨몽(Bouvellemont)을 성공적으로 탈취하여 임무를 완수하였다. 북쪽의 제2판저사단은 방어진지를 완전히 편성하지 못한 프랑스군 제53보병사단을 공격, 분산시킴으로써 프랑스군의 저항력은 완전 붕괴시켰다.

이제 구데리안 군단과 영국 해협사이에는 빈 공간만 있을 뿐 아무런 저항이 없게 되었다. 19일 영불해협의 아미앵을 점령한 구데리안 군단은 약 170마일을 9일 만에 돌파함으로써 영불연합군을 덩케르크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Ⅲ. 작전술에 기여하는 전술지도수행 측면 분석

작전술의 역할 중 하나가 “전술의 상위개념으로서 전술을 지도한다”이다. 이는 모든 전술적 행동 등은 전략지침이 구현되도록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지도를 위한 방법에는 작전목적과 목표 부여, 제 전투를 연속적·동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 전술에 유리한 상황조성, 그리고 전술적 성과를 전략적 이점으로 확대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sup>17)</sup>

이 네 가지 항목으로 구데리안 군단의 초기작전을 분석하여 구데리안이 작전적 개념에

주 17) 교참 100-1, 작전술, 육본, pp. 2-22~2-23

의거 자신의 예하부대를 어떻게 운용하였으며, 반면에 이 작전에 대응한 프랑스군은 작전적 개념을 소홀히 함으로써 패전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 1. 작전목적 및 목표부여 측면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은 예하 전술부대에게 전략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작전목표를 제시한다. 즉, 목적은 작전을 실시하는 이유로서 전술지휘관들이 작전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며, 목표는 상급부대 작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예하부대에게 과업을 할당함으로써 부여된다.<sup>18)</sup>

독일군의 프랑스 전역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또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구데리안 군단에게 부여된 임무는 무엇인가? 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히틀러는 만슈타인 장군이 건의한 계획을 수용하여 프랑스 전역에서 이를 적용했다. 이 계획을 분석해 볼 때 군사전략면에서 독일군의 작전목적은 연합군을 격멸하고 프랑스 지역을 조기 석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목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하부대에게 할당된 임무로 알 수 있는데, 구데리안 군단이 부여받은 목표 즉, 할당된 임무는 만슈타인 계획의 핵심으로서 아르덴느 삼림을 거쳐 신속히 돌파, 영불해협을 도달하여 연합군을 두 동강 내는 선두부대의 역할이었다.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가 어떤 전략적 목적으로 부여되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구데리안 장군은 그 목적에 부합된 작전을 수행하였고 이는 구데리안 군단이 수행했던 여러 작전경과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첫 번째, 구데리안 장군의 1차적인 목표는 분명 아르덴느 삼림을 신속히 통과하여 5일이라는 최단시간내에 세당 지역의 뮤즈 강을 도하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구데리안은 최초 4개 방향으로 3개 판저사단이 병행 공격을 실시하여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벨기에/룩셈부르크의 아르덴느 삼림지역에 대한 미약한 부대의 배치와 지형상 통과지역의 제한과 도로의 협소 등을 고려한 방법이었지만 첫 번째 고려사항은 시간단축이라는 전략적 목적 달성을 우선시켰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전략목표의 중간목표인 뮤즈 강과 세당 지역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목표 선정이다. 세당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불전쟁에서 독일의 최종승리를 달성한 곳으로 이 지역의 확보는 양개군의 심리적 우세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지역이면서, 연합군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으로 삼을 만한 심리적 취약지역이었다.

주 18) 앞의 책, 작전술, p. 2-22



그림 15. 연합군/독일군의 초기작전



그림 16. 부일롱 서편 아르덴지역<sup>19)</sup>

〈그림15〉에서 보는 바와같이 세당 남쪽으로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마지노선이 강력하게 설치되어 있고 북부 프랑스 지역은 연합군이 조밀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 세당지역에는 프랑스군 중 가장 최약체인 2군과 9군 만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구데리안군이 통과한 지역은 프랑스의 2, 9군의 전투지경선이 지나는 곳으로 취약한 부분 중에서도 더더욱 취약한 지역이었다.

또한 독일군이 지향된 지역은 연합군 측에서 예상치 못한 지역이었다. 아르덴느 삼림의 전체적인 구간은 전차가 통과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구데리안 군단이 공격하였던 지점은 강의 대안과 차안이 부드러운 언덕을 이루고 있어 도하가 가능한 지역이었다. 연합군은 아르덴느 삼림지역이 서부유럽의 평원이 아니기 때문에 1~2개의 기동로로서는 전차 및 기계화부대의 신속한 통과가 불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등한시했고, 결국 이 지역으로의 독일군의 기갑부대 통과는 완전한 기습의 효과로 나타났다.

한편 세당 지역에서 뮤즈 강을 도하하자 곧바로 서부지역을 향해 신속히 기동할 수 있는 양호한 기동로가 펼쳐졌다. 따라서 독일군 입장에서 보면 세당 지역에서 뮤즈 강을 도하 후 교두보를 확보하면 북쪽의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저지대와 수많은 강과 운하 지역들을 회피할 수 있고, 또한 연합군의 막강한 전투부대를 우회하여 신속히 영불해협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동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아르덴 삼림지대와 뮤즈 강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차가 통과가 어려운 지형이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르덴느 삼림지역에서도 전차가 종대로 이동할

주 19) 〈그림16〉은 뷔롱 서편의 아르덴지역으로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돌파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군은 험한 지형을 회피하고 보다 용이하게 통과가 가능한 지형에 주안을 두고 작전을 실시하였다.

수 있는 기동로가 있고, 세르와강과 뮤즈 강의 몇 개의 지점은 전차가 도하할 수 있는 수개의 양호한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다.

## 2. 제 전투를 연속적·동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

전투를 연속적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전투력의 투입이 연타가 되게 하여 그 효과가 시너지 되게 하는 것이며, 전투를 동시적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전투를 동시화시켜 그 효과의 시너지를 추구하는 것이다.<sup>20)</sup>

구테리안은 자신의 부대로 하여금 신속히 진격하여 연합군이 주조공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판단을 했다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예하부대를 부여된 방향으로 신속히 공격하되 뮤즈 강 교두보 확보단계까지는 동시에 가장 신속히 연속공격하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휴식이 없이 시간단위 진출의 제한선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만을 획득하는 작전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했다.

첫째, 그는 자신의 3개 판저사단을 각각 진격방향을 부여하여 동시 병행공격을 실시하여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였다. 진격방법도 각 사단별 분권화하여 진격시켰고, 또한 진출속도가 빠른 제1판저사단의 속도를 제한하지 않고 그 속도를 배가시키기 위한 군단차원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전체 공격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뮤즈 강 도하를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하여 전투력의 상대적 우세를 달성하게 된다. 뮤즈 강 도하시 제1판저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군단의 가용 화력자산을 집중시켜 성공적인 도하작전 보장을 지원하였다. 물론 이러한 조치로 남쪽의 제10판저사단은 화력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제1판저사단의 도하에 따른 간접적 효과를 통해 뮤즈 강을 도하할 수 있었다.

둘째, 아르덴느 삼림을 예하 3개 판저사단이 병행공격토록 되어있었지만 중앙의 제1판저사단 만이 신속히 벨기에 지역을 통과하자 제1판저사단과 병행진격하던 좌우측의 제2, 10판저사단의 진격이 늦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구테리안은 제1판저사단으로 하여금 시간을 지체시키지 않고 세르와 강을 급속도하시킴으로써 프랑스군이 세당에서 정상적인 방어작전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1판저사단의 저돌적인 공세로 인해 프랑스군의 제2, 5 경기병사단이 정상적인 차장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뮤즈 강 후방으로 철수하여 無主空山과 같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예하 3개 판저사단 모두가 신속히 뮤즈 강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주 20) 앞의 책, 작전술, pp. 2-22~2-23



또한 뮤즈 강 도하 간에도 구데리안 군단은 도하 준비시간이 부족하자 도하명령을 간략하게 하달하거나, 예하사단 도하현장에서 상급부대에서 조치해주어야 할 사항들을 현장에서 결정함으로써 프랑스군보다 빠른 결심과 대응으로 전장의 주도권을 해협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셋째는 뮤즈 강 도하시에도 정상적인 도하작전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지도 않았으며 도하를 위한 화력지원도 장비운반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신속한 도하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5월 13일 뮤즈 강에 도착하자마자 예하 제1소총연대를 프랑스군의 방어력이 미흡한 이제스 돌출부를 통하여 강습도하시키고 이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하 제1판저사단을 도하시키게 되었다. 북쪽의 제2판저사단은 아직 뮤즈 강에 도착도 되지 않았고, 제10판저사단은 도하를 위한 충분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군의 집중적인 화력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예로서 구데리안은 도하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자 2월 8일 코블렌즈 위 게임시 수립했던 당시의 명령서에 일자와 시간만을 바꿔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신속한 공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위게임을 통한 사전 충분한 준비와 예행연습이 성공적인 도하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라는 평가도 할 수 있지만 군단에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예하부대에게 신속한 공격의 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측면에서 구데리안 장군의 작전지도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제2판저사단의 선두부대인 수색대대와 모터싸이클 부대는 주력부대가 아직 뮤즈 강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뮤즈 강을 강습도하하여 차안상의 감제고지인 크로익스-파이어트 고지 쟁탈전을 벌임으로써 남쪽의 제1판저사단의 도하를 간접지원하고 이어 제2판저사단의 주력이 안전하게 도하할 수 있도록 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실시간에도 제2판저사단의 도하작전이 부진하자 제1판저사단이 도하한 장소를 사용하여 제2판저사단 예하 제2기갑여단을 도하시켰다. 그 이유는 기갑전력을 대안상에 충분히 확보하여 프랑스군 역습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5월14일부터 항공지원이 불가함을 예상하고 대공포여단을 뮤즈 강의 가까운 제방까지 이동시켜 영국공군의 전술 폭격기들의 공격을 격퇴시킨 것도 모두가 융통성있는 계획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다섯째는 도하의 선봉부대였던 제1소총연대와 그로스-도이칠란드 연대의 지속적인 공격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들 부대는 뮤즈 강을 강습도하 후 후속부대의 도하를 지원 후 휴식 없이 즉시 13일 야간에 지속적인 공격으로 마르페 고지를 탈취하였으며 當夜에 캐머리 지역으로 점령지역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차부대들은 도하와 동시에 뮤즈 강 남쪽의 프랑스군의 역습이 예상되는 세베그, 캐머리 방향으로 진출시켜 교두보를 확보하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프랑스군의 국지적인 역습을 결정적으로 격퇴시킬 수 있었으며, 그러한 노력에 남쪽 측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제1소총연대는 전투력이 50%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선두체대로서 연합군의 정상적인 방어작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군단의 공격기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데리안 장군의 모든 조치들은 전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연관된 작전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 3. 전술에 유리한 상황조성

작전술은 전술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결정적 성과를 얻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리한 상황이란 유리한 위치와 시간, 그리고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sup>21)</sup>

구데리안은 만슈타인과의 많은 토의를 통해 그의 계획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때문에 그는 항상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이러한 개념에 의거 예하부대의 1/3을 타 지휘관에게 인계하면서까지 주어진 임무인 영불해협으로 신속히 진격하였다는 점이다. 뮤즈 강 도하 후 구데리안 군단의 남쪽에서 후속진진하는 제14차량화군단의 진출이 지연되자 자신의 예하부대인 제10판저사단과 그로스-도이칠란드 연대를 남측 방호를 위해 잔류시키고 2개 판저사단만을 지휘하여 영불해협으로 향했다. 이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한 구데리안은 3개 판저사단의 병행공격 보다는 가용 2개 사단만으로 신속히 전략적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작전지도였던 것이다.

둘째, 구데리안 장군은 자신의 최초 목표인 세당의 탈취와 뮤즈 강 도하를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도하시 연합군의 공중 공격에 대비하여 선두부대의 진격에 후속하는 부대 중 방공부대를 야간에 신속히 아르덴느 삼림을 후속케하여 이튿날의 도하시 적절히 활용하였다.

또한 독일군의 항공기를 뮤즈 강 도하시 최적절 시기에 활용했다. 이는 합동작전의 승수효과를 가장 잘 보여준 장면으로 이러한 독일 항공기(특히 슈투카로 불리는 급강하 폭격기)의 효과는 이후 독일군 작전의 핵심전력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5월 13일 도하일 4시간 가량의 집중적인 항공기 공격은 뮤즈 강 남쪽의 노출된 프랑스군 포병부대에 집중적인 포탄을 퍼부어 도하하는 군에 대한 위협의 감소는 물론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대혼란에 빠져 무질서하게 후퇴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 구데리안 군단은 지형이 완전히

주 21) 앞의 책, 작전술, p2-23

노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 없이 해질 무렵까지 남쪽 제방에 도보부교를 설치하였고, 23시경에는 중요지형인 마르페 일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적인 전술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 협조된 제병과 협동 및 합동작전의 결합은 신속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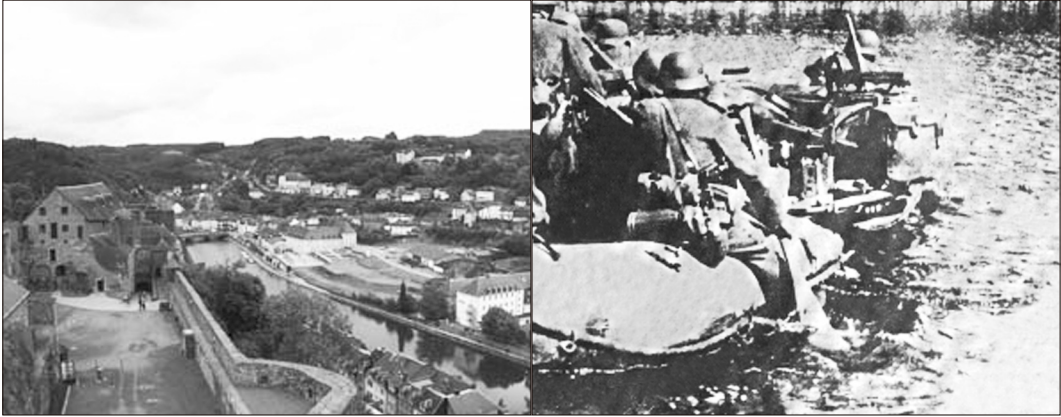


그림 17. 세당 도시 전경

그림 18. 독일군의 뮤즈 강 도하<sup>22)</sup>

셋째는 뮤즈 강과 세당지역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영불해협이 최단거리내 중심지역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독일군이 뮤즈 강을 도하하여 서쪽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2개의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세당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감제관측 할 수 있는 마르페(Marfee) 고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히틀러와 독일군 지휘부가 그렇게도 염려했던 프랑스군 예비대의 역습<sup>23)</sup>을 저지할 수 있는 스톤느(Stonne) 주변의 고지대들이다. 따라서 독일군이 마르페 고지를 점령하여 교두보를 확보한다면 뮤즈 강상에 부교를 가설할 수 있고, 그 이후 예상되는 프랑스군 예비대에 의한 역습을 저지하고 돌파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스톤느 주변의 고지대들을 얼마나 빨리 점령하는가에 작전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아르덴 삼림지대와 뮤즈 강이라는 천연적인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장애물의 효과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았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독일군은 보병부대에 의한 급속도하 후 감제고지를 장악함으로써 후속제대 도하에 유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주 22) <그림 18>은 독일기갑부대의 선견대인 보병부대가 뮤즈 강으로 도하하여 당일에 대안상에 약 3km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23) 히틀러는 세당지역 돌파 후 해협으로 진격시 프랑스군 예비대에 의한 측방으로의 역습을 두려워했다. 그 결과 5월15일 구데리안 군단에게 정지명령을 하달하였으나 구데리안이 이 명령의 취소요청을 클라이스트 사령관에게 건의하여 정찰만은 가능한 허락을 받게 된다.

반면 이러한 독일군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은 중요국면에서 연합군의 역습 기회 상실의 문제가 결정적이었다.

프랑스군은 역습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시간이 너무도 과다하여 3번의 역습 중 한번도 역습시간을 맞추지 못하여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구데리안 군단의 일부부대가 뮤즈 강을 도하한 직후 전투력이 양분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역습작전을 실시하여 구데리안 군단을 격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사전 계획수립 미흡 및 전술교리의 차이로 인해 역습다운 역습 한번 해보지 못했고, 결국 5월 14일 구데리안 군단의 기갑부대들이 뮤즈 강을 도하하여 물밑 듯이 해협을 향해 전과확대를 시도함으로써 5월 15일 구데리안 기갑군단들이 모두 도하를 한 시점에 이미 전쟁의 승패는 판가를 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장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후방지휘소에서 안일하게 지휘를 한 지휘관들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일군의 결정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한 효과적인 기만작전 수행이다. 프랑스전역에서는 연합군들이 전쟁양상 예측에 실패하여 독일군의 주공방향을 오판하였고, 그 결과 세당 지역에서는 독일군이 뮤즈 강을 도하한 이후에야 주공방향을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군이 뮤즈 강을 도하할시 예상하였던 피해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을 손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에서 뮤즈 강 도하 소요시간을 1주일로 판단하였으나 5일 만에 도하할 수 있었다.

#### 4. 전술적 성과를 전략적 이점으로 확대

전술적 성공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작전술의 핵심기능이다. 이러한 전술적 성과를 이용 확대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승리한 전투는 연속 동시적으로 조직 및 통제하여 신속한 전과확대가 되게 하고 패배한 전투는 그 영향을 감소 또는 역전시켜 다음 기회를 도모하게 하는 것이다.<sup>24)</sup>

구데리안은 이러한 교리적 개념을 완벽하게 전개하는 작전을 구사하였다. 그의 모든 작전은 이러한 개념에 의거 수행되었고 모든 전술적 작전수행이 모두 이 개념에 초점을 맞춰 수행하였다.

먼저 기습적인 중간목표 달성을 통해 전략적 목적을 달성했다. 아르덴느 삼림지역을 2~3일 만에, 도착 1일 만에 뮤즈 강 도하, 그리고 교두보 확보와 역습 저지에 1~2일 등 총 5일 만에 독일군 전략의 초기단계인 뮤즈 강과 세당 지역 교두보 확보를 완수하였다.

주 24) 앞의 책, 작전술, p2-25

기간중 연합군의 3회에 걸친 연습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었으나 효과적인 연습이 시행되지 않도록 연속, 동시공격을 하였으며, 또한 온전히 전투력을 보존하여 영불해협으로 진출하는 등의 작전수행을 통해 연합군의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못하게 만든 것은 구데리안 장군의 전략적인 개념에 의한 작전수행에 있었던 것이었다.

세당 지역과 뮤즈 강의 도하를 통해 독일군은 연합군의 아킬레스건이 된 프랑스의 중앙지역에 거점을 마련하여 이후 신속한 영불해협의 진출을 통한 전 프랑스 지역을 석권한다는 독일군의 전략을 달성하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독일군의 진출은 프랑스 군 및 연합군에게는 패배의식을 조장시켰음은 물론 독일군에게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신감에 충만케 함으로써 조기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상기와 같은 작전술의 역할중 전술의 상위개념인 전술지도의 네가지 역할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작전술 수준의 지휘관을 포함한 전술지휘관은 전략적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를 명확히 이해한 후 자신의 부대에 대한 작전을 계획, 실시, 지도해야 할 것이다.

구데리안 장군은 이와같은 작전술적인 개념 하에서 자신의 작전을 계획, 지도한 대표적인 지휘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IV. 결 론

새로운 공격계획으로 부대전개를 끝낸 히틀러는 여러 번의 공격계획을 연기하다 드디어 1940년 5월 10일 자정을 기하여 공격개시를 명령하게 된다. 5월 10일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대한 조공인 B집단군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 연합사령관은 독일군의 주공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바로 연합군의 작전계획인 딜 계획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연합군의 주력부대가 네덜란드의 딜 강 선으로, 예비인 강력한 제7기동군은 네덜란드의 브레다까지 깊숙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초기 작전이 진행되던 시기에 구데리안 군단은 조용히 그리고 급속히 세당까지 진격하였다. 연합군 사령관 죠프르 장군이 구데리안 군단의 이같은 진격을 인지한 시점은 벌써 이러한 전략적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후였다.

독일군이 세당 지역에서 뮤즈 강을 신속하게 돌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물론 조공의 임무를 수행했던 B집단군의 역할이 네덜란드 및 벨기에 전선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연합군측은 독일군의 주공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독일군 전략이 성공했던 첫째 이유는 전략적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작전, 즉 세당과 뮤즈강의 신속한 도하, 그리고 영불해협으로의 전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구데리안 장군의 개념에 부합된 작전에 있었다.

이러한 초기 5일간 구데리안 군단의 작전결과 연합군의 배후가 차단당할 위협 속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없었고 물리적, 심리적으로 마비된 상태에서 독일군에게 프랑스 전 지역을 내주게 되었다.

상기 전례에서 분석하듯이 구데리안 장군은 전략적 목적인 연합군의 2등분을 위해 신속히 중간목표인 세당과 뮤즈 강을 도하하여야 했으며, 이러한 초지일관된 전술행위는 곧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전투와 시간낭비적인 전술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뮤즈 강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또한 교두보 확보 후 그의 진로는 명확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1개 판저사단을 후방에 잔류시켜가면서 최종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듯 제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상급부대 및 상급수준의 작전목적에 부합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한 이후에 작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1. 장삼열 역, “1940년 5월 제2의 세당전투”, 『군사평론 제198호』
2. 박길승, “운명을 결정한 120시간” 『군사평론 제355호 부록』, (육군대학, 2002)
3. 김정오 역, 『기계화부대장』, (서울 : 한원, 1990)
4. 안동림 역, 「제3제국의 흥망」, (서울 : 양서각, 1962.)
5. 강창구 역, 「히틀러와 국방군」, (서울 : 병학사, 1979), pp.111~116.
6. 육군본부, 팜플렛 70-17-14, 『잃어버린 승리』, (육본, 1984)
7. 육군본부, 『20세기 극적결전』, (육본, 1979)
8. 육군대학, 『세계전쟁사, 교육참고 7-0-13』, (육군대학, 2004)
9. 육군본부, 『작전술, 교육참고 100-1』, (육본, 2000)
10. 신태복 역, “전술과 작전적 수준의 전쟁”, 『군사과학자료 133호』, 1987
11. 신태복 역, “작전적 수준의 전쟁”, 『군사과학자료 135호』, 1987
12. 이용호 역, “파리 함락”, (서울 : 백조출판사, 1972)
13. 제7군단, 『기동군단(Ⅲ)』, (제7군단, 2005)
14. 이한홍 역, “전투지휘의 원칙”, (육사 화랑대연구소, 2001)
15. The Breaking Point(Sedan and the Fall of France, 1940), Robert Allan Doughry, 1990  
Archon Books

# 현대전쟁에 있어서 제한전 연구

## - 코소보 전쟁을 중심으로 -

### 목 차

- I. 서 론
- II. 현대전쟁과 제한전
  - 1. 현대전쟁의 개념과 성격
  - 2. 제한전의 개념
- III. 코소보 전쟁의 배경
  - 1. 지정학적 특징
  - 2. 문화적 환경
  - 3.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
- IV. 전쟁의 경과 및 결과
  - 1. 전쟁의 경과
  - 2. 전쟁의 결과 및 평가
- V. 결 론



소령 조상현  
(군사연구소 세계현대전사 연구장교)

## I. 서 론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은 러시아의 혁명가 트로츠키가 한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은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의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과 여건 및 배경에 따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이 사는 세상은 전쟁이나 투쟁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국의 역사학자 싱어(David J. Singer)에 의하면 기원전 3600년부터 1980년까지 적어도 3,400회 이상의 전쟁이 있었고 전란 등을 포함시키면 13,600번의 전쟁이 있었으며, 이러한 전란으로 인해 10억명 이상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생명을 잃었다.<sup>1)</sup>고 한다. 또한 러시아태생의 미국 사회학자인 소로킨

주 1) Francis A. Beer, Peace Against War(San Francisco : W.H. Freeman and Company, 1981), pp.39~40.

(Pitirim A. Sorokin)에 의하면 1100년부터 1925년까지 유럽에서 862번의 전쟁이 있었으며, 17세기부터 1925년까지 3,400만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5천년동안 약 26,000여회의 전쟁이 발발했으며<sup>2)</sup>, 20세기 이후에 평균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sup>3)</sup>고 한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므로 명쾌한 결론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쟁의 원인과 발발과정을 보면 전쟁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광의의 전쟁은 모든 집단(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제 집단)에 걸쳐 동등한 실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적 접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간의 무력충돌만을 의미한다.<sup>4)</sup>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면 협의의 의미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의는 국가와 국가간 행하여지는 전면적·조직적 무력투쟁, 즉 국제전쟁을 의미하는 전통적 개념의 전쟁과도 일치한다.

한편, 현대전쟁의 출발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러 가지 시각 속에서 현대사회와 현대전쟁을 가름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약간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 시대와 전쟁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시기를 서양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종결이후로, 동양에서는 중국의 신해혁명(1911) 이후<sup>5)</sup>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대전쟁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이후를 현대전쟁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지배적이다.<sup>6)</sup> 즉, 1945년 태평양 전쟁 종료시점에 원자폭탄을 사용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현대전쟁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현대전쟁이 시작된 이후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대부분의 전쟁이 제한된 개념에 의해 강대국의 세력다툼에 의한 제한된 지역에서, 또는 제한된 전쟁목표와 무기체계에 의한 전쟁수행 등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전쟁을 연구하는 요원들에게 한반도 안보환경과 관련되어 현대전이 갖는 제한적적 의미를 인식시켜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제2장에서는 현대전쟁과 제한전의 개념과 성격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코소보 전쟁의 배경에 대해 지정학, 문화적 환경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전쟁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사용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특히 결과 및 평가부분은 코소보 전쟁이 지닌 특징을 요약해서 정리하였고, 결론에서는 코소보전쟁이 갖는 제한전의 의미에 대해 북한의 실체를 인식한 시각에 의한 교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주 2) 국제평화연구소편, 「평화의 연구」, 서울:법문사, 1982, p.23.

3) 이재영, 「전쟁」, 서울:대왕사, 2005, p.15.

4) 김순규, 「현대국방론」, 서울:교육원, 1966, p.12.

5) 이상신, 「역사학개론」, 서울:신서원, 1994, p.39.

6) 육사전사학과, 「세계전쟁사」, 서울:황금알, 2005, pp.453~454.

## II. 현대전쟁과 제한전

### 1. 현대전쟁의 개념과 성격<sup>7)</sup>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의 역사에서 현대라는 시대 구분을 의미 있게 해주는 요소는 핵무기의 등장이었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에 투하됨으로써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바 있던 핵무기<sup>8)</sup>는 사용초기에는 전쟁에 동원된 또 하나의 무기체계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체계를 동원한 전쟁은 전쟁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분석을 요구하였다. 즉, 핵무기를 동원한 핵전쟁은 정치, 이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흔히 동원되어왔던 수단으로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으며,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잔류효과는 전쟁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정치, 이념적인 목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핵무기의 출현은 현실적으로 쉽게 치를 수 없는 전쟁의 개념이 대두됨에 따라 전쟁을 이원화시켜 전쟁사에서 새로운 시대인 현대를 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 체계는 승리와 패배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고, 핵무기의 사용정도에 따라서 “인류의 생존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는 전쟁”을 추가시키고 있는 셈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핵무기체계는 인류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핵전쟁과 그 래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래식 전쟁으로 전쟁을 이원화시키면서 전쟁의 역사에서 현대라는 시대를 구분해 주었는데 이러한 현대 전쟁의 역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전쟁의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일부가 전쟁의 본질을 변질시켰다는 것이다. 전쟁과 외교의 역사에서 전쟁은 정치, 이념, 종교 차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동원되어 왔으며, 전쟁의 역사에서 모든 무기체계는 전쟁수행의 수단으로 손쉽게 전장에 동원되어 왔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말기에 실제 사용된 바 있던 원자탄은 재래식 무기<sup>9)</sup>와 같이 심각한 고려 없이 손쉽게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체계에 속한 폭탄이 아니었고, 이 같은 무기를 전면적으로 동원한 핵전쟁은 정치나 다른 차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기가 어렵게

주 7) 상계서 453~457내용 참조

8) 최초 미국은 원자폭탄 사용에 대한 효과에 대해 크게 신뢰하고 있지 못하였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파괴효과를 가져왔다.(이재영, 「전쟁」, 서울:대왕사, 2005. 참조)

9) 여기서 언급된 재래식 무기의 개념은 핵무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현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첨단무기는 재래식 무기의 범주에 속한다.



되었다. 또한,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잔류효과는 이를 동원한 전쟁에서 승패의 구분이 커다란 의미가 없게 만들었고, 승패의 의미가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어떠한 현실적인 목적도 정당화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에 등장한 핵무기체계는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보아왔던 기존의 전쟁본질론이나 '민족 생존요구의 발현'이라고 하는 생존권의 확보수단으로서의 전쟁이론의 실천적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는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일부가 지금까지 통용되어왔던 전쟁의 본질론<sup>10)</sup>을 거의 부정하는 상황을 내포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현대전쟁은 정책적 수단이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선택할 수 없는 핵전쟁을 전쟁의 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재래식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대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대전이나 전면전이 구체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지전이나 소규모 분쟁의 가능성을 남겨놓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현대전쟁이 보여준 또 다른 특징은 핵을 전쟁의 수단으로 거의 선택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역과 동원되는 무기체계면에서 전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에 구체화되는 지역적인 분쟁이나 국지적인 무력 충돌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문제와 연관을 맺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로 확전의 과정을 밟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여 치룬 과거의 전면전과는 달리, 현대의 지역적인 분쟁이나 국지적인 무력충돌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인류의 생존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에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분쟁이나 무력충돌을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은 관련 국가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추진되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현대전은 이것이 치루어 지는 장소나 동원되는 무기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현대전은 핵전으로의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하게 버리지 못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판단이 이성적으로 남아있는 한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전은 먼저 지역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확대되어 강대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자극할 경우에는 이들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전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한국전, 월남전, 코소보전, 걸프전 등과 같이 강대국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전쟁과 중동전,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포클랜드 전쟁 등과 같은 전쟁도 지역적으로 제한되었다.<sup>11)</sup>

주 10) 클라우제비츠 저, 이종학역, 「전쟁론」, 서울:일조각, 1995, pp.2~10.

11) 제2절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위에 해당하는 전쟁들은 그 전쟁 당사국(지역적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총력을 경주한 전면전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강대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제한전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만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전쟁수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목표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전쟁의 목표자체도 제한적으로 수립하여 상대의 완전한 굴복보다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는 선에서 전투행위를 중지하거나 자제하도록 강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현대전은 지역, 수단, 참여수준, 목표 등에서 제한되어 치루어지는 제한전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현대전은 대리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적으로나 동원되는 무기체계면에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를 국지적으로 국한시키기 위해서 범세계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이를 위하여 유엔군, 다국적군, 평화유지군 등의 이름으로 많은 국가들의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의 분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들이 이념적, 실리적, 경제적 이유에서 대리전을 치루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라크 전쟁과 같이 '다른 무기 생산국'에서 공급한 무기로 싸워 이들 국가들에게는 물질적인 부를 제공하고 전쟁 당사국은 거의 황폐화된 결과만을 기록한 '이상한' 대리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국지적인 전쟁의 확산을 막으려는 세계적인 노력과 무기생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한 강대국들의 위치가 현대전을 이러한 대리전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전은 직접 참여하여 전쟁을 수행하거나 무기의 공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든 간에 대리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sup>12)</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기체계면에서 볼 때 현대전쟁은 핵무기가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현대전을 제한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 2. 제한전의 개념

제한전쟁이란 용어는 「정치학대사전」을 보면 “전면전쟁을 회피한 국지전쟁, 원폭 등 초병기의 사용을 전략적으로 제한한 전쟁”<sup>13)</sup>으로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 의미로 적을 완전히 파괴하여 무조건 항복을 얻는 전쟁보다 낮은 수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싸우는 전쟁으로써 파괴력의 수준, 군인의 수, 전쟁지역, 군사전략을 대신하는 정치적 고려 등과 관계가 있는 전쟁을 의미한다.<sup>14)</sup> 즉, 제한전쟁은 전쟁의 목적, 동원되는 무기와

주 12) 강대국이 직접 참여하여 전쟁을 수행할 경우에는 본국이외의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였다.(월남전, 한국전, 코소보전, 등)

13) 박영사, 「정치학대사전」, 서울:박영사, 1980, pp.1403~1404.

14) Hanson W. Baldwin, "Limited War", in Walter F. Hahn & John C. Neff(ed), American Strategy the Nuclear Age(New York: Doubleday&Company, Inc., 1960), pp.251~253.

군대의 규모, 정치적 고려가 그 수준을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제한전쟁의 경우 대부분의 군사력이 한 나라의 정치적 목적에 합치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은 군사력을 조정·통제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군사력은 국가안보라는 국가적 목표 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은 군사력이라고 하는 수단이 목적을 이루는데 적절하게 공헌해야 하는 것과 같이 목적도 수단을 고려한 가능한 능력 내에서 설정되거나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국가는 군사능력에 따라 정책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나아가서 비군사적인 국력의 구성요소 등을 군사적 수단에 연결시키는 유기적 통합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5)</sup> 또한 제한전쟁의 의미에는 핵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부분적 군사력을 사용하는 전쟁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대전쟁에서 핵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제한 전쟁이론이 적용된 사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다.<sup>16)</sup>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일본에, 중국은 만주에 주요군사기지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격하지 않았으며,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중국·소련은 각기 전쟁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개입은 하였지만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을 염려해 자제력을 발휘했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에 발생한 대부분의 전쟁이 핵전쟁과 관련 없는 제한전쟁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보스니아사태와 코소보전쟁·걸프전쟁·아프카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이 제한전쟁의 좋은 실례가 될 수 있다. 물론 밀로세비치·후세인·탈레반 정권의 견지에서 보면 전면전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군사력을 사용하여 한정된 장소를 공격한 제한전쟁이었다. 사실상 전쟁은 관계국들의 군사력에 따라 전면전쟁과 제한전쟁의 경계선을 넘나든다. 군사력의 차이가 매우 큰 국가간 전쟁에서 군사강국에게 이 전쟁은 제한전쟁이지만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전면전쟁이 된다. 물론 러일전쟁과 포클랜드전쟁처럼 국력의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은 국가들도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제한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전쟁에서 어느 쪽도 전통적 의미의 완전한 승리를 획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량 파괴, 살상무기인 핵무기 때문에 전쟁의 범위와 강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일방에서 좀 더 강력한 무력을 사용하려는 노력은 상대방의 대응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다. 한 쪽에서 패배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한, 적대행위는 핵무기까지 사용하는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제한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살펴 보면,<sup>17)</sup>

주 15) 고준봉, 「국제분쟁과 전쟁에 관한 소고」, 경기행정논집(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pp.164~165.

16) 김순규, 「국제정세와 이슈」, 마산 : 21세기 국제정경연구원, 2000, p.507.

17) Henry A. Kissinger, Nuclear and Foreign Policy(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Doubleday & Company, Inc., 1958), p.139.

①핵보유국들 사이에 전쟁은 발생하나, 어느 측도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인구 조밀지역에 공격을 가하지 않는 상황, ②약소국들의 적대행위에 강대국들의 직접적 개입이 없고, 약소국들이 특수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전면전을 수행 할 수 없는 상황, ③핵보유국의 직·간접적 도움을 받는 약소국간의 갈등이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핵무기의 사용 없이 행하여지는 상황, ④한 핵보유국이 어떤 약소국에 취한 군사행동이 다른 핵보유국의 개입을 가져 오지 않는 상황, ⑤식민지국가 혹은 정부에 대한 국내반란에서 반군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며 경쟁하는 핵보유국가로부터 병력과 인적자원을 지원받는 상황, ⑥영토점령을 막기 위하여 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경찰부대가 취하는 집단행동의 상황, ⑦이론적으로 가능한 제한핵전쟁의 상황으로 강대국이 매우 한정된 군사목표에 한하여 전술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한전쟁은 4가지 형태의 전쟁<sup>18)</sup>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①열강의 개입이 없는 2류국가간 전쟁은 확대의 방지가 가능하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과 인도와 파키스탄간 전쟁이 여기에 속한다. ②강대국이 자신과 상대가 안되는 약소국과 수행하는 전쟁이다. 옛 소련의 위성국에 대한 간섭,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행동 등은 외국의 간섭을 받을 여지가 없는 전쟁이므로 제한전이 가능했다. ③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확대될 전망이 있는 전쟁이다. 열강국과 약소국 사이에 소규모적 국지분쟁으로 시작되지만, 장차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 전쟁을 말한다. 중국의 베트남 침입과 이집트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경찰행위가 대표적 실례이다. ④강대국들 사이의 제한전쟁이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전쟁은 앞에서 언급한 “제한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최근 사이에 전면전쟁의 가능성이 무한정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쟁보다 제한전쟁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강대국들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강대국과 중·소 국가간 전쟁에서 강대국들은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제한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강대국 이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국제체제·국제환경·핵무기의 위력으로 인한 상호 파괴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전면전쟁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강대국뿐만 아니라 비핵국가들도 국내외의 특수한 환경 및 국익추구의 견지에서 제한전쟁을 선호한다. 그러나 제한전쟁의 발발은 하나의 경향이며 강대국의 입장에서 보는 견지이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전면전시대라 일컫는 현대사회에서, 전쟁이 제한전쟁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극히 다행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주 18) 전개서, pp.137~138.

### Ⅲ. 코소보 전쟁의 배경

#### 1. 지정학적 특징

로마 제국이 분할되자 현재의 세르비아 공화국 지역은 비잔틴 제국에 넘어갔고 크로아티아 공화국 지역은 서로마 제국에 속하게 되었다. 원래 유고슬라비아(Jugoslavija)는 ‘남슬라브족의 나라’라는 뜻인데, 6세기 중엽 슬라브 민족들(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등)은 다뉴브 강을 건너 발칸 반도의 여러 지역으로 대거 이주해 왔다. 이들 가운데 유고의 북부 지방(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지역)에 정착한 남슬라브족은 프랑크 왕국(독일과 프랑스의 전신)의 지배하에 들어가 카톨릭 문화권에 속하게 되었고, 남동부 지방에 위치한 세르비아는 비잔틴 제국의 영향을 받아 동방 교회를 받아들였다.<sup>19)</sup>

이후에 세르비아인은 키릴(Cyril)과 메토디우스(Methodius)에 의해 정교로 개종하였으며, 비잔틴 제국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의 면모를 갖춘 세르비아 왕국을 탄생시켰다. 그러면서 스테판 두산(Stefan Dushan)<sup>20)</sup>의 통치 시기에는 세르비아가 현재의 알바니아와 그리스 북부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 세르비아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1389년 6월 28일 코소보(Kosovo) 전투에서 터키 제국에 패함으로써 세르비아는 약 500년 동안의 이슬람 통치를 예고받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정복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정치 구조를 이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슬람교로의 개종과 터키어의 사용을 강요함으로써 세르비아인들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역사적인 증오심을 갖게 되었고, 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전의 불씨를 갖게 되었다.<sup>21)</sup>

주 19) 외무부, 「유고슬라비아 개황」, 서울:외무부, 1988, pp.13~14.

20) (영)Stephen Dushan, Stefan(Stephen) Uro IV라고도 함.

세르비아의 왕(1331~46 재위), 세르비아인과 그리스인의 황제(1346~55 재위)였으며, 중세 세르비아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법전을 만들어주었다. 두산은 세르비아인들이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독립전쟁을 치렀던 19세기에 특히 인기가 높았다. 그당시 ‘위대한 두산’은 옛날의 영광과 위대함의 상징이었고, 두산의 제국을 되찾는 것은 세르비아 정치의 이상적인 목표로 강조되었다. 근대 역사가들은 세르비아 왕국을 발칸 반도에서 지배적인 지위로 끌어올리고 내정 개혁을 이룩한 그의 업적을 강조했다. 비잔틴 제국의 관행과 제도를 세르비아에 이식한 그의 내정 개혁은 행정조직 통합과 중앙 집권화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두산의 업적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된 것은 그의 법전이었다. 두산의 법전은 중세 세르비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고, 훗날 중세 사회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21) 김성진, 「발칸분쟁사」, 서울:우리문화사, 1997, p.32.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 각국에서 민족주의 정신이 고취되고 터키세력이 약화되자 세르비아는 남슬라브족들을 범슬라브주의 민족 운동으로 통합해 대(大)세르비아 제국의 건설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종과 종교적으로 반세르비아적이며 동방 정책을 추진하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고 말았다.

1908년,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합병하자 발칸 반도에서는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고, 이때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후원하고 있었다. 1차 발칸 전쟁(1912)에서 세르비아, 그리스, 불가리아는 마케도니아의 해방을 위해 터키에 대항하였으며, 2차 발칸 전쟁(1913) 때는 세르비아와 그리스가 연합해 마케도니아 영토를 요구하는 불가리아와 싸웠다. 이때 세르비아는 서구 열강들의 후원으로 알바니아로부터 코소보의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한편 세르비아 출신의 한 청년이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황태자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공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났으며, 이 전쟁에서 러시아와 프랑스는 세르비아를 후원하고 나섰다.<sup>22)</sup>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이보디나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와 연합했고, 세르비아 왕의 주도하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이 탄생하였다. 그 후 1929년에 그 이름은 유고슬라비아로 바뀌게 되었다. 1921년의 비도브단(Vidovdan) 헌법은 세르비아에 의해 주도되는 중앙 정부 창설을 유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크로아티아인과 다른 소수 민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세르비아 출신의 왕이 개인 독재를 선언함으로써 정치적인 혼란을 수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1934년, 마케도니아의 민족주의자에게 알렉산더 왕이 암살당하자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으며, 정부는 나치와 우호 관계를 맺음으로서 이를 극복하려 하였다.<sup>23)</sup>

그래서 1941년 3월, 유고슬라비아는 독일로부터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와 테살로니키(Thessaloniki)를 약속받은 후 파시스트 협정인 삼국 동맹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군부가 파시스트 옹호 정권을 전복시키고 피터 2세를 왕으로 추대하고, 삼국 동맹에서 탈퇴하였다. 이에 히틀러는 즉각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침공을 명령했고, 그 결과 유고슬라비아는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불가리아에 분할되고 말았다.

기간 중 티토(Josip Broz Tito)가 이끄는 공산당은 독일에 대항하여 무장 봉기를 선언하였으며, 1943년 '유고슬라비아 민족 해방을 위한 반파시스트 위원회(AVNOJ)'는 공산

주 22) 유영철·문광건, 「코소보사태의 전쟁양상 분석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서울:한국 국방연구원, 1999, p.28.

23) 송왕규, "탈냉전기 국제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요인", 경희대학원, 2001, pp.31~32.

주의자들이 유고슬라비아를 이끌어 나갈 초석을 마련해 주었다. 즉, 빨치산 대원들은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이탈리아와 독일 군대에 저항하느라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세르비아의 작가인 코초비치에 의하면 약 487,000명의 세르비아인, 207,000명의 크로아티아인, 86,000명의 무슬림, 60,000명의 유대인, 50,000명의 몬테네그로인, 6,000명의 알바니아인이 전쟁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45년에 공산당은 국민 의회의 통제권을 장악했으며, 11월에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세르비아의 실제 국토 면적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가 연방의 일원으로 포함되자 크게 감소되었다<sup>24)</sup>

티토의 슬로건인 ‘형제애와 단결’ 아래서 각 민족들의 민족주의 경향은 수그러졌다. 티토는 1948년 소련의 스탈린과 절교한 후 그 보상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20억 달러의 경제적·군사적인 원조를 받았다. 이러한 보조금과 미국, 서유럽의 후원은 유고의 개혁 노선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오늘날의 경제에도 기여하였다. 소련과의 단절 후 유고슬라비아는 연방 체제와 자주 관리 제도, 개인의 자유, 비동맹 외교 노선에 근거를 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 불리는 독자 노선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951년 시작된 지방 분권화는 국가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나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비동맹 운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각 공화국 사이에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코소보는 연방 내에서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티토는 당 개혁론자들의 숙청과 크로아티아에 대한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레닌주의로의 복귀’로 응수하였다. 재능 있는 지도부 인사들이 사라짐에 따라 유고슬라비아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침체기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의 헌법 개정으로 연방 정부는 외교 정책, 국방, 무역, 경제 및 인권 문제에 대해 6개 공화국(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과 2개의 세르비아 자치주(코소보와 보이보디나)에 부여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sup>25)</sup>

1980년, 티토가 사망하자 연방 대통령직은 6개 공화국과 2개의 자치주 그리고 국민 의회에 의해 4년마다 선출된 9명의 임원이 통치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유고슬라비아의 뿌리깊은 경제 문제와 공화국간의 반목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1980년대 말 동유럽에서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밀어닥치자 유고슬라비아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세르비아가 코소보의 자치권을 폐기해 버렸으며

주 24) 김달중, 「헝가리·유고슬라비아」, 서울:법문사, 1988, p.24.

25) 강봉구, “코소보 전쟁과 새로운 국제안보체제”, 「국가전략」제6권 1호, 2000, p.89.

연방군을 파견시켜 수십 명의 민간인을 사살하기도 하였다.<sup>26)</sup>

밀로셰비치대통령의 '대세르비아'에 대한 환상은 1990년 봄 비(非)공산 계열 공화국 정부를 탄생시켰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에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공화국 스스로 부(富)의 대부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느슨한 형태의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연방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1년 6월 25일,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유고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자 유고 연방군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일방적인 독립 선언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슬로베니아에 전격 작전을 개시, 6월 28일 슬로베니아 공화국과 연방군 사이에 최초의 내전이 발생하였다. 이후 EC(유럽 공동체)의 중재로 슬로베니아 공화국은 1991년 7월에 독립을 철회하고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가질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슬로베니아 공화국 방위군과 연방군이 충돌하여 격렬한 전투 상태에 돌입하였고, 이어 8월에 들어 크로아티아내에 연방군이 진입함으로써 내전은 유고 전체로 확대되었다.

1991년 9월에 마케도니아가 독립을 선언한 후 1992년 3월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도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에 1992년 4월 27일 세르비아 공화국과 몬테네그로 공화국 그리고 두 개의 자치주를 근간으로 한 '신유고 연방'이 탄생하였으며 코시치(Kosich)가 유고 연방 대통령, 밀란 파니치(Milan Panichi)가 연방 수상에 임명되었다. 12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파니치 수장과 전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셰비치와의 대결은 밀로셰비치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끝났다. 그러나 신 유고 연방이 결성됨으로써 사실상 유고 연방은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계속해서 휴전 협정이 파기되면서 내전은 이슬람계,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 세 민족이 혼재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 번지게 되었다.<sup>27)</sup>

그후 계속 평화 협상이 추진되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서방측은 내전의 궁극적인 책임이 구유고 연방의 세르비아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1992년 5월 이래 신유고 연방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였고, 1995년 5월 이후에는 미군 주도하의 NATO군이 대대적인 세르비아계 거점 지역들을 공격하여 내전 당사자들로부터 평화 협정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이러한 휴전 협정과 평화 모색이 영구적으로 정착되었다기 보다는 또다른 충돌을 잠시 진정시킬 뿐이었다.

신유고연방은 국토면적이 102,000km<sup>2</sup>로서 남한 면적과 거의 비슷하며, 코소보 지역은 10,887km<sup>2</sup>로서 남한 면적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한다. 신유고연방의 수도는 베오그라드이며, 전체 인구는 97년 기준으로 약 1,06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신유고연방은 2개의

주 26) 김달중, 「헝가리·유고슬라비아 정치경제 사회문화구조」, 서울:법문사, 1989, pp.45~46.

27) 유기준, 「발칸의 분쟁과 신유고 연방 수립과정 연구」, 고려대학원, 1996, pp.32~33.

공화국과 2개의 자치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화국은 세르비아공화국과 몬테네그로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주는 보이보디나 자치주와 코소보자치주로 구성되어 있다.<sup>28)</sup>



(출처 : NATO의 유고공습 분석, 육군교육사령부, 1999)

그림 1. 유고연방 지도

유고연방의 지형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악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유고연방의 수도인 베오그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지역은 평지 및 경작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남부지역은 약 1,500~2,000m의 고산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남부지역은 산세가 매우 험준한 관계로 급경사, 암석, 동굴, 터널 등이 산재해 있으며, 침엽수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북한의 고산지대와 매우 유사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전차, 중화기 등을 이용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한요소가 될 수 있다.

유고연방의 기상은 발칸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상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가 동계로서 이 시기에는 일기 변동이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3월부터 4월까지는 산악지형의 특성상 강설, 폭풍우, 짙은구름 등 악기상이 수시로 발생함과 동시에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정밀유도무기를 이용한 군사작전 및 항공력을 이용한 군사작전 수행에 많은 제한요인으로 대두되었다.

## 2. 문화적 환경

코소보를 포함한 구유고슬라비아는 다민족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때부터 동서양 문화의 접점으로서 항상 여러 문화가 머물렀으며,

주 28) 합동참모본부, 「코소보 전쟁 종합분석」, 서울 : 군인공제회, 1999, p.9.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다. 13세기 무렵 게르만족과 슬라브족간 ‘문화의 교차점’이었던 발칸반도에는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 작은 공국들이 형성되었으나 항상 외세의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했다.

여기에 14세기 이후 융성한 오토만 제국의 회교문명이 진입함으로써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카톨릭교, 그리스정교, 회교 등 3개 종교와 알바니아계 등 5개 민족, 4개의 언어, 2개의 문자권이 얽혀 분규의 불씨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6세기에 걸친 발칸의 역사는 반목과 대립의 연속이었다.

표 1. 구유고슬라비아의 민족·언어·종교분포 현황<sup>29)</sup>

국가 및 지역	민족	종교	언어	문자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인(90%)	카톨릭	슬로베니아어	라틴문자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인(78%)	카톨릭	크로아티아어	라틴문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인(17%) 세르비아인(31%) 이슬람계(44%)	카톨릭 그리스정교 이슬람교	크로아티아어 세르비아어	라틴문자 키릴문자
세르비아 보이보디나 자치주 코소보 자치주	세르비아인(70%) 헝가리인(3%) 알바니아인(17%)	그리스정교 카톨릭 이슬람교	세르비아어 헝가리어 알바니아어	키릴문자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인(62%)	그리스정교	세르비아어	키릴문자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인(65%)	그리스정교	마케도니아어	키릴문자

### 3.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칸반도 즉 유고연방 지역은 역사·지리·정치·문화적으로 볼 때 분쟁과 다툼이 필연적인 개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 코소보 전쟁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민족갈등의 상황은 1980년대 후반 폭력적인 방식으로 기울어졌다. 1987년 슬로보단

주 29) 이정록·김송미·이상섭, 「20세기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 서울:푸른길, 1997, p.135.



밀로세비치(Slovdan Milosevic)<sup>30)</sup>는 세르비아 공산주의 동맹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당시 유고내의 민족주의 세력 부활 분위기에 대한 세르비아인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였다. 그는 1989년 코소보와 보이보디나의 자치권을 박탈하여 벨그라드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알바니아계 코소보인들에 대한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그 이후 대부분의 알바니아계 코소보인들은 자신들의 자치권이나 생존권, 그리고 사법적인 보호를 받거나 자신들의 자녀들을 자민족의 언어와 문화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들을 박탈당했다.<sup>31)</sup>

이러한 민족 갈등은 세르비아인과 다른 민족들 사이의 갈등의 일부였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유고 연방내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인들이 민족주의와 분리주의를 표방하자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은 세르비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세르비아 국가를 건설하려는 데 세르비아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구호는 실제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독립 국가 건설 과정에 유고군이 개입하여 크로아티아의 영토의 약 30%를 차지하는 구체적인 사태로 발전하였다.

세르비아는 보스니아의 분리주의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에서 이슬람인들에 대한 테러와 학살을 감행했고, 국제연합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국제연합의 보호 아래 이슬람과 여타 민족들을 위한 ‘안전지역’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태가 격화되는 가운데 1995년 유엔 평화감시단의 감독 아래 있는 스테페니카에서 세르비아 무장습격대가 약 6,000여명의 보스니아인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나토 공군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있는 세르비아 군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이러한 압박에 못이겨 세르비아는 나토가 요구하는 협상에

주 30) ‘발칸의 도살자’로 불리던 그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와 소패권주의를 내세워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 등 발칸 전역에서 전쟁과 학살을 자행, 20만명을 숨지게 하고 300만명을 난민으로 만들었으며 유고 경제를 파탄시켰다. 그러나 그는 권좌에서 물러나 전범 재판에 회부된 뒤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참혹한 만행으로 평가되는 자신의 죄과에 대해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이 끝나기 전에 2006. 3. 13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1941년 8월 20일 세르비아 동부 포자레바치에서 그리스 정교 성직자와 열렬한 공산주의자 교사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자살하는 비극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났다. 1964년 베오그라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지방에 있는 공산당 산하기관인 경제연구소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 일하며 공산주의자로 입지를 다졌으며, 1984년 친구인 이반 스탄볼리치가 세르비아 공산당 새 지도자가 되자 공산당 지구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87년 코소보에서 소수인 세르비아계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 강력한 지지를 받는 민족주의 지도자로 성장했고, 89년 세르비아 공화국 대통령에 선출된 뒤 대 세르비아주의를 주창하며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촉발시켰다.

31) 송왕규, “탈냉전기 국제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요인”, 경희대학원, 2001, p.38.

응하여 데이튼 협정(Dayton Accords)<sup>32)</sup>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보스니아 사태 이후의 전반적인 유고 연방지역 상황은 코소보 지역의 긴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밀로세비치의 민족 탄압에 대응하여 알바니아계 코소보인들은 처음에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려 하였지만 세르비아인들이 행정 기구들을 지배하자 알바니아계 코소보인들은 일종의 대안정부를 구성하고, 스스로 선거를 치른 후 교육,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코소보 해방군을 조직하여 무장투쟁 노선을 견지하여 긴장은 더욱 더 고조되었다.”

코소보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1995년 1월 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회담을 소집하여 파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두 번에 걸친 회담에서 알바니아계 코소보인들은 타협안에 동의하였으나, 세르비아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 사이에도 코소보지역에서의 폭력행위는 더욱 더 증가되어 세르비아 보안대는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에 착수했고, 1998년 10월의 협정<sup>33)</sup>을 위반하면서 새로운 군 병력과 탱크를 코소보 지역에 투입하였다. 결국 1999년 3월 19일 무렵에는 유고연방군 병력의 1/3이 코소보 및 그 주변지역에 투입되었고, 3월 21일 세르비아군의 대공세가 시작되었다. 후에 “말뚝굽 작전(Operation Horseshoe)”이라 불리게 되는 이 작전은 수개월 전부터 이미 준비되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수만명의 코소보인들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상황이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자 미국 특사 리처드 홀브룩이 마지막으로 밀로세비치를 설득하기 위해 베오그라드로 갔으나 허사로 돌아갔고, 이에 하비에르 솔라나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 주둔 나토 연합군 사령관 웨슬리 클락 장군에게 유고에 대한 공습을 명령했다. 3월 24일 “연합군 작전(Operation Allied Force)”이라고 이름 붙여진 나토군의 공습이 시작되었다.

주 32) 클린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정책을 펴면서 보스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 3개국 대표를 오하이오주 데이튼으로 초청, 평화협상을 시작했다. 홀브룩 전 대사는 “협상이 깨질 경우 다시 폭격을 할 수 있다”며 압박, 협상개시 3주만인 1995년 11월21일 평화협정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대외적 통합은 유지하되 대내적으로는 보스니아-크로아티 연방과 레플리카 스프스카의 자치가 허용되는 시스템이 마련됐고 내전은 종결됐다. 데이튼 평화협정의 핵심은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선량한 국제중재자 역할을 했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신유고 연방에서의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아 코소보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33) 1998년 10월 13일 북대서양위원회(North Atlantic Council)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습을 승인하여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코소보로부터 병력을 철수시키고 폭력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밀로세비치는 코소보내의 군 및 경찰병력의 수와 무기의 수량을 제한하는데 동의했고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주도하는 감시단의 파견과 나토 주도의 공중감시 임무를 수용했다.

## IV. 전쟁의 경과 및 결과

### 1. 전쟁의 경과

NATO 폭격기들이 3월 24일 오전 영국 서부 페어포드 공군기지를 이륙함으로써 전쟁은 시작되었다. NATO소속 미 공군 B-52 폭격기 8대가 각각 20기의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하고 오전 10시 42분부터 2분 간격으로 발진하였다. 24일 오후 3시간 동안 계속된 1차 공습에서 NATO군은 유고의 병력과 발전소, 대공포대 등을 집중 공격했다. 해상과 공중에서 수습기의 크루즈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이어 영국의 페어포드 기지에서 발진한 B-52폭격기가 공격을 주도했다. NATO군은 25일 오전 2시 아드리아해의 미 구축함 곤잘레스호와 순양함 필리핀시호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2차 공습에 나섰다. 오전 9시에서 10시에는 이탈리아 아비아노와 이스트라나 기지에서 미 공군 F-18전투기 2대와 프랑스 공군 미라지 전투기들이 발진하여 공습에 가담하였다.<sup>34)</sup>

NATO의 군사전략 목표는 미국을 비롯한 NATO 회원국을 이용하여 공습을 단행한 3월 24일 이전에 설정되었으나, 예상 밖으로 유고연방이 끈질기게 항전함에 따라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수정되었다.<sup>35)</sup> 최초의 군사전략 목표는 항공기 및 장거리 정밀 순항미사일 등 첨단 항공력을 이용하여, ①발칸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유고로 하여금 NATO의 평화안을 수용시키고, ②신유고연방군의 전력약화 및 군사력을 분쇄하고, ③코소보 알바니아계 주민의 보호와 난민 발생 예방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전쟁기간 중에 유고연방에 대한 압박을 더하기 위해 ①유고의 항전의지 및 군사력 분쇄, ②코소보 지역 유고군 철수, ③평화유지군의 주둔 허용을 전략 목표로 수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항공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일일 공격 횟수를 늘리면서 압박의 수위를 강화했다.

이와 같은 군사전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행한 NATO군의 작전 단계 및 주요 목표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4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우선 준비단계에서는 공습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전력을 증강하면서 훈련을 강화하고, 정찰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정보수집 임무에 주력하였다.

1단계 작전은 여건조성(Set Condition)단계로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는데, 주로 항공기 및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를 이용하여 유고군의 공군기지 및 방공망을 무력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방공시설 및 부대, 레이더기지 사령부 및 지휘·통제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특히 폭격기와 미사일을 이용한 전략기지 공격

주 34) Lord Robertson, "Kosovo One Year on: Achievement and Challenge", pp.13~15.

35) 안재봉, "코소보전의 교리적 분석 및 공군 교리 발전방향", 1999, pp.26~27.

으로 세르비아의 방공시설, 레이더 기지 사령부, 통신센터 등 약 90여개를 파괴시켰다. 이 단계에서 항공기는 약 214~200소티의 공습을 실시하였다.



(출처 : NATO의 유고공습 분석, 육군교육사령부, 1999)

그림 2 나토의 유고내 공습목표

한편, 2단계 작전은 유고군 고립(Isolate)단계로서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19일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는 공습을 통하여 유고군을 고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북위 44도 이남의 유고군의 병영시설, 공군기지, 무기저장고 등 군사시설, 세르비아군 병력 및 특수정찰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항공기는 약 218~300대를 운용하였으며, 일일 평균 250~300소티의 공습을 단행하였다. 한편, 유고는 이 단계에서 컴퓨터 해커를 이용하여 NATO군의 인터넷에 침투하여 웹사이트를 일시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일종의 사이버전<sup>36)</sup>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주 36) 유고군은 당시 영국 기상청 전산망을 해킹하여 기상 정보를 제때에 받지 못한 NATO 전투기들이 공습을 취소케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공습은 사실상 제한된 횟수의 출격과 순항미사일만으로도 세르비아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시작되었으며, 나토측은 작전이 12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측은 곧 오판으로 나타났다. 이미 4월 중순에 작전은 나토측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훨씬 더 대규모로 확산되었고, 기존의 예상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나토측의 초기 공세에 대응해 유고군과 비밀경찰은 코소보인들에 대한 민족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서 난민의 숫자는 작전 개시 전의 21~24만 명에서 4월 3일경에는 50~60만명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나토는 처음에 대공방어망, 통신망, 유틸시설, 무기고 등을 포함한 50여개의 제한된 군사 목표물을 설정하고 작전에 돌입하였으나, 곧 그 공격대상을 세르비아 전역에 걸쳐 군사목표물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기간시설과 선전용 방송매체 시설 등의 전략, 전술적 목표물까지로 확대하였다. 이것은 후에 3단계 작전의 핵심 목표가 되었으며, 2단계 작전간 실시된 주요공격 목표와 시설은 아래에 보이는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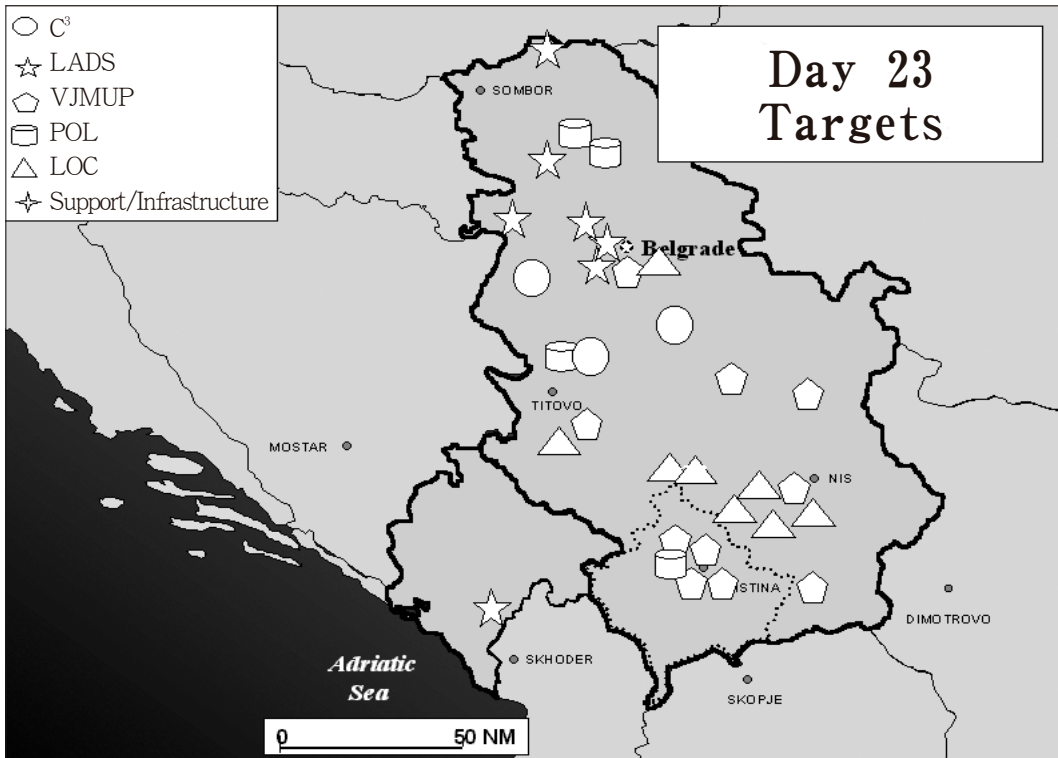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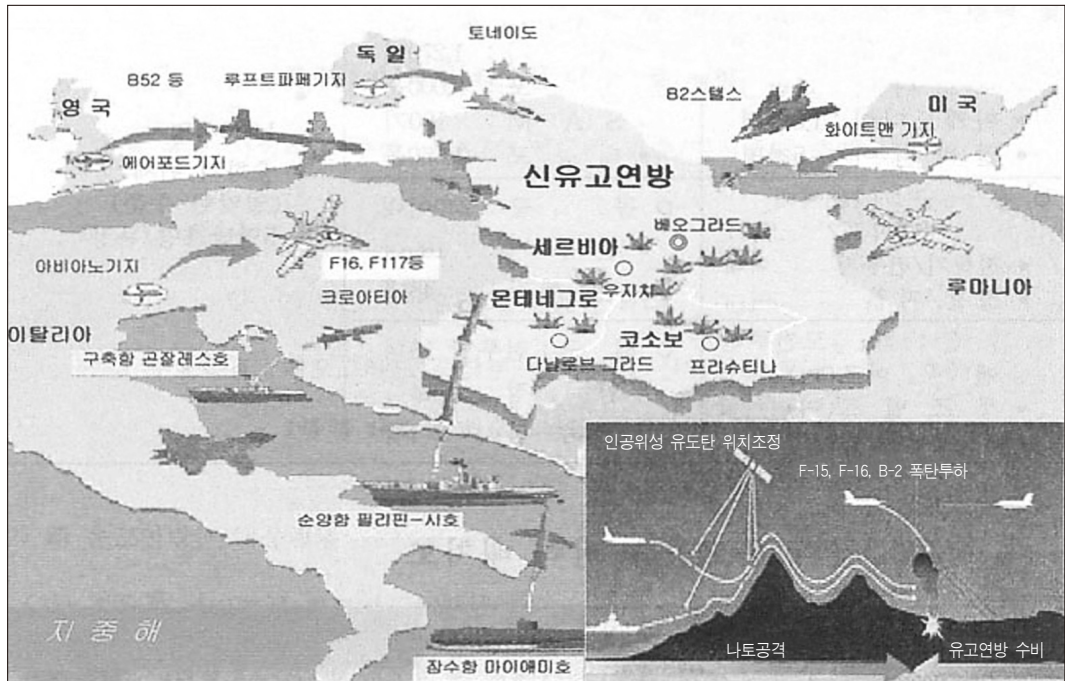


그림 3. 제2단계 작전간 주요목표(4.16)<sup>37)</sup>

주 37) <http://www.nato.int/kosovo/all-frce.htm>



또한, 3단계 작전은 유고 육군의 격멸(Decimate) 및 밀로세비치의 정권기반을 타격하는데 주안을 두고, 4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52일간 실시되어 유고의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부의 에너지원, 방송국, 철도, 교량 등 국가기간 산업시설을 포함하여 유고 전지역으로 폭격범위를 확대 하였다. 공격범위가 북위 44도 이북으로 확대된 이 단계에서는 항공기 약 350~535대를 운용하였으며, 일일 평균 400~600소타의 공습을 실시하였다. 이렇듯 나토의 공격이 강화되는 가운데 코소보 해방군도 공세를 시작했다. 유고군은 나토군의 공습이 시작되자 코소보 해방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으나 코소보 해방군을 격멸하지 못했다. 오히려 공습이 계속되면서 코소보 해방군은 그 세력이 더욱 증가하여 개전 전에 단지 수천명에 불과했던 병력이 20,000여명으로 늘었다. 물론 유고군에 비해서 수적으로 열세하였지만 세르비아가 코소보 해방군을 격멸하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 부대들을 집중시켜 나토 연합군의 공격에 좀더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기상조건의 호전과 함께 나토 연합군의 공습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항공력을 이용한 공습만으로 78일만에 전쟁을 종결하였으나, 6월 9일 종전 이후에는 코소보 지역에 파견되는 국제 평화유지군 활동이 사실상의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형태로 전개<sup>38)</sup>되었다.



(출처 : NATO 유고공습 분석, 육군교육사령부, 1999)

그림 4. NATO 유고 공격 상황도

주 38) 안재봉, “코소보전의 교리적 분석 및 공군 교리 발전방향”, 1999, p.27.

## 2. 전쟁의 결과 및 평가

유고에 대한 '연합군 작전'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군사훈련과 같은 일방적인 결과로 끝이 났다. 나토의 유고 공습은 걸프전쟁과 비교할 때 비슷한 규모로 시작되었으나 공습이 장기화되면서 점차 강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비록 유고 국민에 대한 살상은 피했지만 연료, 전기, 통신, 공공교통 및 여타 생필품 공급원을 제거시킴으로써 일상생활 전체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연합공군은 과거 분쟁보다 훨씬 많은 정밀 유도무기를 사용했으며, 미국은 최초로 세 가지 종류의 전략폭격기를 전부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 방부가 중점적으로 개발·투자한 장거리 폭격기, 원격순항미사일 및 개량형 정밀무기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 받았다. 또한 적의 방공망 밖에서만 미군기를 운용한다는 개념과 결합된 전술적 발전으로 인하여 미국은 단지 20여대의 무인기와 2대의 항공기만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39)</sup>

그러나 유고군의 피해는 극심한 것이었다. 6월 말 NATO사령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전 시점까지 나토가 세르비아군 중장비의 30%를 감소시켰다고 한다. 비공식적인 평가에 의하면 연합군은 400여 문의 화포, 약 270대의 장갑차, 150대의 전차 및 100대의 항공기를 타격 했으며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는 15,000여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고의 세부 피해는 아래 도표와 같다.

표 2. 유고군의 피해 현황<sup>40)</sup>

구 분	파 괴 수 량	피 해 율(%)
전 차	122	41
장 갑 차	222	33
화포 및 박격포	454	50
미그 29 전투기	14	85
미그 21 전투기	24	35
SA-2 대대	2	67
SA-3 대대	10	70
SA-6 포대	3	10
인 명 피 해	군/경 사망자 : 10,000여명 민간인 사망자 : 6,500여명 난민 발생 : 100만명	

주 39) David A. Fulghum, Robert Wall and John D. Morrocco, *Allies Piece Together Destructive Air Campaign*,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 1999, pp.72~73.

40) *Air Force Magazine*, August 1999, p.61. 참조.

표2와 같은 전과의 배경에는 나토군의 막대한 군사공습이 있었다. 기간 중 나토는 35,219회 출격으로 약 23,000발의 폭탄과 미사일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약 8,000발(약 35%)이 정밀유도무기였다. 표적을 이탈한 폭탄은 약 20발로서 발표대로라면 지극히 정확한 공격을 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41)</sup>

이러한 피해와 제3의 전쟁<sup>42)</sup>이라는 의미를 던져준 코소보 전쟁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인도주의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코소보전쟁은 신유고연방의 세르비아계가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인종청소’가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대표되는 서구진영이 인도주의를 표방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 과거 사회주의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유고연방의 내정에 무력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이 본 전쟁의 중요한 성격이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근본질서인 ‘국가주권의 불가침성’ 원칙을 유보하고 인도주의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국제사회가 타국의 내정에 집단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또는 유사한 경우 같은 방식의 해결방안이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전해주고 있다.

두 번째는 신무기의 실험장이었다는 것이다. 미공군의 최첨단 B-2 스텔스전략폭격기가 등장했는데 이는 항공작전 초일에 곧바로 실전에 참가하여 그 후 5월초까지 합계 약 40소트를 출격하였다. 이는 B-2가 배치된 미국중부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로 부터 유고까지 왕복 약 33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가용기 19대가 교대로 모두 폭격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전에 처음 투입되어 곧 주역이 되었던 JDAM이 있었다. 스마트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유도폭탄은 GPS 위성측지항법시스템을 유도에 이용하는 것인데, 폭탄은 낙하하면서 GPS로 자신의 3차원 위치를 파악, 투하전에 입력한 목표의 위치좌표에 공기역학적 날개로 방향을 잡는다. 따라서 종래의 광학식 유도폭탄과 같이 기상에 좌우되지도 않고, 투발기에서 목표에 레이저를 조사하거나 화상을 모니터 할 필요가 없다. 이 폭탄의 성능은 알려진 바로는 20여km에 있는

주 41) 항공폭격의 효과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다. 걸프전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전과에 대한 공식발표는 최초 크게 과장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견이 제시되면 진상조사를 실시하나 결과는 유야무야로 끝난다. 금번에도 나토사령부의 전장피해평가 발표에 이어 언론에서 유고군 전차 13대만 파괴되었다고 발표하자 즉각 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하였으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JIR(1999.9)에 의하면 영국군이 파괴된 전차 5대와 일부 흩어진 포와 차량 잔해만 발견하였다고 한다. 또한 6월말 유고군 지휘관은 피해상황을 사망 462명(경찰 114명 포함), 부상 2,000명, 기갑차량 5% 손실로 밝혔다. 이중 사망자의 대부분은 코소보 해방군과의 전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Jane's Intelligence Review, September 1999, pp.10~21 참조.

42) 육군교육사령부, 「NATO의 유고공습 분석」, 1999, p.65.

목표에 시험 발사한 결과 공산오차가 9.6m 정도였다고 한다.<sup>43)</sup> 그 밖에도 JSOW 무동력 활강폭탄, E-8 Joint STARS 및 U-2기에 설치한 차세대 첨단합성개구전탐체계(ASARS2)와 무인기 등이 있었다.

세 번째는 항공력의 승리라는 점이다. 물론 항공력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종결짓는다는 것에는 다소 이견과 수행한 항공전역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되었지만 어쨌든 코소보 전쟁에서는 지상군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마무리 하였다는 점에서 항공력의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당시 투입되었던 항공력은 그야말로 전세계 첨단 및 신세대 항공기가 총동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토 연합군은 기간 중 약 50여종 1,300여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항공전역을 수행하였다.<sup>44)</sup>

네 번째 정보작전<sup>45)</sup>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현대전에서 기술정보 및 전자전의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여러 전투에서 수차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코소보전쟁에서도 미공군은 세르비아 방공망의 지휘통제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초창기의 정보전 자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EA-6B 및 기타 항공기에 의해 제공된 지극히 효율적인 전파방해에 추가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침입한 컴퓨터 해킹은 세르비아군이 고가의 방공자산을 가동하지 않은 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값진 전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러한 정보작전 분야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요소 및 판단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소보 전쟁에서는 그동안 치루어졌던 전쟁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들이 있었으며, 또한 이 전쟁이 시사하는 또다른 교훈을 내놓았다. 그것은 비대칭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첨단무기와 선진 국방과학기술을 가지고

주 43) 미해군은 pin-point 종말유도를 위한 seeker와 사거리연장으로 JDAM 능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70,000-100,000달러 짜리의 또 다른 고도첨단무기에 대한 소요로 바뀌어 통상적인 재래식폭탄에 저비용 스마트유도를 '추가' 한다는 JDAM의 최초 개발의도가 빛을 잃고 있다.

44) 육군교육사령부, 「NATO의 유고공습 분석」, 1999, p.140.

45) 정보작전(IO:Information Operations):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전·평시 가용한 수단을 통합하여 아측의 정보 및 정보체계는 방어하고 상대방의 정보 및 정보체계에 공격을 가하거나 영향을 주는 작전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국가간에 발생하는 전쟁에서는 과학기술이 낮은 수준의 국가는 그들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상대편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전쟁수행방법 보다는 비정상적인(통상 이러한 방식을 비대칭적 수단에 의한 전쟁수행이라고 일컫음)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코소보 전쟁에서도 유고군은 방공망을 의도적으로 정지시킨다거나 주요 장비 및 물자를 연합군이 생각하지 못한 장소로 은폐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전투력을 다소 보존하였고 나토 연합군의 전산망을 해킹하여 그들의 작전수행에 차질을 준 바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장차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채택 가능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대응개념의 준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제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제한전의 개념적 정의상에서만 제한된 무기체계와 방법에 의한 제한전 수행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항공 전력만을 이용한 전쟁수행의 실례를 보여주었다는 것과 앞서도 언급된바 있지만 주권을 가진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무력의 사용은 새로운 제한전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동북아 역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제한전의 개념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 가능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전쟁의 목표를 제한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최초의 군사전략 목표는 항공기 및 장거리 정밀 순항미사일 등 첨단 항공력을 이용하여 발칸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유고로 하여금 NATO의 평화안을 수용시키고, 신유고연방군의 전력약화 및 군사력을 분쇄하고, 코소보 알바니아계 주민의 보호와 난민 발생 예방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NATO의 평화안을 수용시키는 목표'는 강대국의 이해논리에 따라 수립된 강제적인 것으로서 처음부터 달성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만약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의 강제에 불만을 품을 경우 그들의 강제를 받아 들이거나 혹은 끝까지 항전의 의지를 보이게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전쟁에 임해서는 끝까지 대항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로 세웠던 신유고연방군의 전력 약화 및 군사력 분쇄는 연합군이 예측하지 못한 비대칭적 수단 채택에 따라 개전초기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약소국의 비대칭전 수행시에는 전쟁을 완전히 종결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거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아프칸전쟁, 이라크 전쟁도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목표로 내세웠던 알바니아계 주민의 보호와 난민 발생 예방은 이 전쟁이 인도주의적 전쟁을 표방하기 위한 목표로서는 적당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군사작전의 목표로서는 적당하지 않았다. 만약 주민을 보호하고 난민 발생을 예방한다고 하면 이는 전쟁이 아니 다른 외교적 수단이나 대화 또는 정치적



타협을 거쳐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합군 측은 처음에 세웠던 군사전략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편, 전략 목표 뿐만 아니라 전쟁의 목표도 제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처음에 전략목표로 내세웠던 “유고로 하여금 NATO의 평화안을 수용시키기 위한 것”을 코소보 전쟁의 목표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전쟁의 목표 제한은 지상군의 투입을 최초부터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아 유고로 하여금 끝까지 항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상군의 미투입은 실제로 전쟁을 완전히 또는 연합군측의 의도대로 종결하는 데는 커다란 장애가 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전쟁지역의 제한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국제 상황을 다시한번 상기시킨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차전이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서 강대국은 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을 선택하여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란·이라크 전쟁은 전쟁지역의 제한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전 개념은 대리전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전쟁 당사국은 향후 20년 아니 그 이상의 복구와 국제무대 등장을 제한하는 대단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코소보 전쟁은 발발 당시 현대전의 대표적 제한전 사례라고 하여 많은 국가에서 그 전쟁을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오늘날 동북아 역내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경우 동일한 방식의 해결방안으로 채택 가능한 전쟁의 유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해결방안이 한반도에 적용된다면 그 피해는 순수하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어떤 학자는 그 피해는 6·25전쟁의 00배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인명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그러한 피해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리 스스로를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또한 길러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제평화연구소편, 「평화의 연구」, 서울 : 법문사, 1982
2. 육사전사학과, 「세계전쟁사」, 서울 : 황금알, 2005
3. 이재영, 「전쟁」, 서울 : 대왕사, 2005
4. 김순규, 「현대국방론」, 서울 : 교육원, 1966
5. 클라우제비츠 저, 이종학역, 「전쟁론」, 서울 : 일조각, 1995
6. 박영사, 「정치학대사전」, 서울 : 박영사, 1980
7. 김순규, 「국제정세와 이슈」, 마산 : 21세기 국제정경연구원, 2000
8. 외무부, 「유고슬라비아 개황」, 서울 : 외무부, 1988
9. 김성진, 「발칸분쟁사」, 서울 : 우리문화사, 1997
10. 유영철 · 문광건, 「코소보사태의 전쟁양상 분석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9
11. 김달중, 「헝가리 · 유고슬라비아」, 서울 : 법문사, 1988
12. 김달중, 「헝가리 · 유고슬라비아 정치경제 사회문화구조」, 서울 : 법문사, 1989
13. 합동참모본부, 「코소보 전쟁 종합분석」, 서울 : 군인공제회, 1999
14. 육군교육사령부, 「NATO의 유고공습 분석」, 1999
15. 이정록 · 김송미 · 이상섭, 「20세기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 서울 : 푸른길, 1997
16. 고준봉, “국제분쟁과 전쟁에 관한 소고”, 경기행정논집(경기대 행정대학원), 1986
17. 강봉구, “코소보 전쟁과 새로운 국제안보체제”, 「국가전략」 제6권 1호, 2000
18. 송왕규, “탈냉전기 국제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요인”, 경희대학원, 2001
19. 유기준, “발칸의 분쟁과 신유고 연방 수립과정 연구”, 고려대학원, 1996
20. 안재봉, “코소보전의 교리적 분석 및 공군 교리 발전방향”, 1999
21. Francis A. Beer, *Peace Against War*(San Francisco : W.H. Freeman and Company, 1981)
22. Hanson W. Baldwin, “Limited War”, Walter F. Hahn & John C. Neff(ed), “American Strategy the Nuclear Age”(New York : Doubleday&Company, Inc., 1960)
23. Henry A. Kissinger, “Nuclear and Foreign Policy”(New York : Doubleday&Company, Inc., 1958)
24. [http : //www.nato.int/kosovo/all - frce.htm](http://www.nato.int/kosovo/all-frce.htm)
25. David A. Fulghum, Robert Wall and John D. Morrocco, *Allies Piece Together Destructive Air Campaign*,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 1999
26. *Air Force Magazine*, August 1999
27. *Jane's Intelligence Review*, September 1999

# 군사정책/전략/사상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한반도 통일 ..... 예) 소령 김명한  
(국제사회교육원 교수)
- 디지털 정보전 양상과 대응태세 방향에 대한 제언 ..... 예) 준장 권문택
- 남북한 관계변화에 따른 대주변국 군사협력 방안 ..... 김종화  
작가, 삼사문화기협회 회장
- 선제공격전략의 이론적 고찰 ..... 중령 조상제  
(육군대학 군사전략교관)
- 지상전술 C4체계(ATCIS) ..... 대령 김영준  
(2군사령부 지휘통제체계과장)
- 「동국병감」에 나타난 전투현황과 전술형태분석 ..... 교수 문형진  
(한국외대 외국학센터)
- 한국 군사사상의 중요성과 연구 활성화 방안 ..... 중령 이기성  
(육군본부 제1경비연대 1대대장)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한반도 통일

## 목 차

- I. 서 론
- II. 남한의 통일정책
- III. 북한의 통일정책
- IV.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평가
- V. 한반도 통일을 향한 준비과제
- VI. 결 론



예) 소령 김명한  
(국제사회교육원 교수)

## I. 서 론

광복과 동시에 분단된 지 61년이 지난 오늘날의 현실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의 시대라고 부르는 역사적 전환기에 살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세기는 명암이 엇갈린 격동의 한 세기였다. 전반기에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파시즘, 나치즘의 흥망을 경험했고, 20세기 후반기에는 이른바 냉전질서를 통해서 ‘공포의 균형’을 경험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부(富)의 편재로 인해 국가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20세기는 식민지 지배의 종언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시기이기도 했다.

냉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빈곤극복과 평화는 새로운 세기로 들어선 지금도 여전히 인류의 숙제로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래의 국제관계형성을 결정할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 오늘의 현실에서 과연 그동안의 난제를 해결할 국제질서의 창조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9·11 테러 이후 세계가 국제질서의 재편과 국가주권의 개념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같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모색해 온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한반도에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두 체제를 다시 연결시켜 통합하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 형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은 서로 다른 남과 북의 정체성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해과정으로 볼 수 있다.”<sup>1)</sup>

특히 2000년 이후, 남북한 간에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과 참여정부의 평화와 번영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화해·협력을 통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간에는 왕래인원 9만명, 교역액 1조원,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이산가족 상봉인원 1만명, 남북회담 500회 시대에 돌입하였다.<sup>2)</sup>

또한 남북간 경협방식이 일방적인 지원에서 남북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바뀌었고, 선전수단 제거 및 해군 당국간 핫라인 구축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8·15민족 대축전 당시에는 북한 대표단이 국립현충원과 국회를 방문함으로써 정치적 화해가 시작되는 등, 남북관계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남북한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슬기로운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고에서는 남북한 통일정책을 시대별로 비교해 보고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한반도 통일을 향한 준비과제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남한의 통일정책

### 1. '80년대 이전의 통일정책

#### 가. 제1·2 공화국 통일정책

##### 1) 제1공화국 통일정책(1948~1960)

제1공화국 즉, 이승만 정권시기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북진 통일론, 흡수 통일

주 1)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2006)」, p.4.

2) 통일부, 「통일백서(2006)」, p.4.



론, 무력 통일론” 등을 내세웠던 시기이다.

이승만 정부는 최초로 1948년 8월 15일 통일에 관한 3개항을 발표하였다.

① 대한민국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② 북한지역에 100석 국회의 자리 유보하여 주며 그들이 이를 조속히 채워주기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기본정책으로는<sup>3)</sup>

① UN감시하에 자유총선거, ② 남북한이 동시에 총선거, ③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는 제1공화국 정부의 통일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제2공화국 통일정책(1960~1961)

제2공화국 정부는 1년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통일논의들이 나왔던 시기이다. 특히 조봉암 사건 등,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양상은 결국, 5·16 군사 쿠데타를 유발하게 되는 빌미를 주게 되었다. 또한 제1공화국에서 주장하였던 “무력복진통일론”이 “평화통일론”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제2공화국 시기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다양한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반면, 공산주의를 무조건 반대하는 반공(反共)을 국시로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을 내세웠으며, UN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는 여전히 주장하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나. 제3·4공화국 통일정책

### 1) 제3공화국 통일정책(1963~1972)

제3공화국 시기에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일체의 통일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정부가 발표한 통일정책의 기초는 첫째, 실력배양론에 근거한 “선(先)건설, 후(後)통일” 방안으로서 북한과 대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국력을 배양한 후에 통일을 실시하는 방안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 구상선언<sup>4)</sup>을 통하여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였으며 1972년 7·4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평화통일 3대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제안되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한 “남북조절위원회”가 탄생되기도 하였다.

### 2) 제4공화국 통일정책(1972~1979)

1972년 10월유신이 발표하면서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 및 대통령 권한

주 3)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4) 1970. 8. 15. 경축사를 통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① 긴장완화 ② 북한의 무력적화 야욕포기 ③ 북한간의 인위적 장벽들을 단계적으로 제거 ④ 북한의 UN참석 반대 안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강화를 위한 것을, 헌법에 의하여 선포하였으며 이 시대는 “정치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남북대화는 중단되었고, 북한의 김일성 또한 헌법을 개정(1972년)하여 “주석제에 의한 김일성 권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김일성 통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1973년 “6·23평화통일 외교선언”<sup>5)</sup>을 발표하였다.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은, ①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체결, ② 남북한 상호문호 개방과 신뢰회복, ③ 이러한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UN감시가 아닌) 감시체제 하에서 토착인구 비례에 의하여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통일보다는 안보가 남북한 양쪽에게 있어서 우선시되는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80년대 이후의 통일정책

### 가. 제5·6공화국 통일정책

#### 1) 제5공화국 통일정책

제1공화국 정부로부터 4공화국 정부에 이르기까지는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시한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sup>6)</sup>에 제시되었으며, 이것은 종전의 “선건설 후통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본틀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기를 거쳐, '80년대 이후부터 체계적인 통일방안과 정책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제5공화국 탄생과 함께, 전두환 정부는 1981년 1월 21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남북한 최고책임자들의 상호방문과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주 5)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평화통일은 민족지상의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상호간에 내정불간섭 & 상호 불가침을 실시한다”(이를 우리가 먼저 주장하였던 것이다)
- ③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④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
- ⑤ “북한과 함께 UN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⑥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국가들에 문호를 개방하고, 특히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한다.”(즉,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수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 ⑦ “우방국들과 기존의 유대관계를 더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6) 평화통일3대원칙(1974. 8. 15)

- 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체결
- ② 남북한의 상호 문호 개방과 신뢰회복을 위하여 남북대화 계속 및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현
- ③ 이러한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

또한 1981년 6월 5일 “평화통일 정책 자문회의 연설”을 통하여 제시하는 등, 이때가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가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82년 1월 22일 정부의 구체적인 통일방안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발표되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평화통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민주·자유·복지를 목표로 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통일을 과정으로 보고, 분단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려면, 그 과정에서 민족화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남북한 총선거의 규범으로서, 남북한 대표가 협의하여 제정하게 될 통일헌법 및 이 헌법에 따라 통일 민주국가를 완성시키는 과정과 절차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제6공화국 통일정책(1988~1993)

노태우 정부 시대에서는 1988년 “7·7특별선언”<sup>7)</sup>이 발표되었다. 발표내용은 대결 상태를 청산하고, 선의의 동반자 관계를 승화시키자는 주장과 함께 6개항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7·7특별선언을 통하여 “북방정책”을 위한 길이 열렸으며 구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가 가능해졌던 것이다. 이후 1989년 9월 11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되어, 실제로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통일방안이 발표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6공화국 정부는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통일노력을 전개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과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서, 우선 통일의 원칙으로 ‘자유·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통일 국가의 미래상으로는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sup>8)</sup>

### 주 7) 7·7특별선언(1988년 7월 7일)

- ① “남북한 동포간 상호 교류 및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한 왕래 실현”
- ② “이산가족들 간의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③ “남북한 교역의 문화를 개방하여, 남북한간의 교역을 민족내부에서의 교역으로 간주하기로 할 것”
- ④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서는 우방국가들과 북한 사이의 교역을 반대하지 않을 것임.”
- ⑤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경쟁 & 대결 외교의 종식 및 이를 위하여 남북한 대표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유로이 만나서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할 것”
- ⑥ “북한에 미국 및 일본 등의 남한의 우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할 용의가 있음” 등이다.

8)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2005)」, p.66.

통일국가의 수립절차는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을 거쳐,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통일정책

### 1) 문민정부 통일정책(1993~1998)

김영삼 정부 시기 통일정책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모태로 3단계<sup>9)</sup>(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기조(민족적 합의, 공존번영, 민족복리)를 통하여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1994년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통일 접근시각으로서의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2대 지주로 삼고 있다.<sup>10)</sup>

첫째,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자유보장, 사회적 배제의 배격, 남북의 다양성을 위한 관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통일로 가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에서도 일관되게 추구되어야 할 가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이 방안의 의미가 있다.

둘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 개념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의 공동선(共同善)의 관점에서 공유된 정치원리와 공론에 기초하여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상호부조를 중심가치로 하는 공동체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결사체를 의미한다. 민족정체성은 민족의 안정과 정착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민족공동체’는 동일한 혈연을 가진 우리 한민족 구성원 전체의 운명적 결합과 공동생활 양태 및 권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 9) 통일부, 「통일백서(2005)」, p.25.

10)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2005)」, pp.68~69.

민족공동체란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뿌리이며, 우리 민족이 재결합할 수밖에 없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민족공동체 통합 개념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 즉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상호협력의 장(場)을 열어가는 단계이며,

둘째,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 되는 단계이다.

셋째,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룩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랜 분단 상태의 지속에서 비롯된 이질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국민의 정부 통일정책(1998~2003)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햇볕정책(Sunshine Policy)과 대북화해 협력정책(Engagement Policy) 등이 나왔으며,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만나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남북화해협력 무드가 조성된 시기였다.

1998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와 현재의 '참여정부'는 1989년 9월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1994년에 이를 재확인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계승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연합제는 바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과 동일한 것이다. 그 점에서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급한 통일의 추진이 아니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평화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 대북화해 협력정책의 추진성과 중 가장 주목받은 남북정상회담(2000. 6. 13~15)은 56년 분단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만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구조적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본구도를 복원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냉전종식 이후 나타난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경향이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남북화해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의 정상이 합의, 서명한 문건이 남북관계 개선방향과 당면 실천과제 5개항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이며, 통일방안과 관련된 제2항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상호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남북한이 당장 제도적·법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현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특히 남북한 통일방안 사이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해나가야 할 중요한 국가과제다. 따라서 통일방안을 둘러싼 논쟁과 첨예한 갈등보다는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햇볕정책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다.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2003~ )

참여정부에서도 1989년 9월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1994년 재확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표방하고 평화와 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평화번영 정책을 제시하였다.<sup>11)</sup>

##### 1) 평화번영정책 추진배경/개념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분야별 남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적·물적 교류증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추진해 온 민족공동체건설 노력은 남북관계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즉 '동북아 속의 한반도'라는 차원에서 운용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인 '평화번영정책(Policy of Peace & Prosperity)'이 제시되었다.

주 11) 통일부, 「통일백서(2005)」, p.13.

또한 평화번영정책의 개념 속에는 첫째,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 협력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는 한편,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국제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셋째, 나아가 남북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추진원칙

한반도 평화발전 구상에 입각하여 참여정부는 정책목표를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로 설정하였다.

첫째, 한반도 평화증진은 당면과제인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을 증진하며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이 가능하게 되고, 동북아경제 중심국가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동번영은 역사적·지정학적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 경제통합이 실현되면 한반도가 대륙경제와 해양경제를 연결시키면서 결속시켜 나갈 수 있는 중추국가(Hub State)로서 도약할 가능성에 주목하여 동북아 차원에서 번영을 지향해 나가려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민족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위해 모든 갈등과 현안사안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원칙이다. 이는 남북한 및 미·일·중·러 등 상이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신뢰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원칙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이 협의하여 추진하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당사자 원칙을 기초로 국제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원칙이다. 정부는 정책 추진의 대내외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대북 접촉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하고 있다.

###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평화번영정책을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 중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과 국제사회의 협력 확보. 둘째, 남북간 포괄적 협력과 실용주의 외교 병행 추진. 셋째,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지원 등 새로운 국제환경 조성. 넷째,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제도적 보장 병행. 다섯째,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 여섯째,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라는 추진 방향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첫째, 평화체제구축 노력과 더불어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심화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추진. 둘째, 미·중·러를 대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추진방향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앞서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①북한의 핵(核)불용, ②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③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을 북한 핵문제 해결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해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핵·미사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문제 해결단계에 맞추어 대규모 대북 경제협력 조치를 단행한다. 둘째,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하며, 이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셋째,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도 고려하는 포괄안보를 지향한다. 그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로 인한 안보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남북경협이 평화증진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관련, 남북장관급 회담결렬과 남북대화의 중단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의 기조인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 4) 평화번영정책의 특성

평화번영정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을 개선한 것으로서 특징과 의의를 지니고 있다.<sup>12)</sup>

주 12) 통일부, 「통일백서(2005)」, pp.23~24.

평화변영정책은 첫째,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하면서 화해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남북관계를 넘어 동북아까지로 정책 시야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군사안보분야의 진전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유기적인 연계와 조화를 중시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정책 시야를 넓힘으로써 동북아 속에서 한반도의 위상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 남북 경제협력의 성과가 군사분야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이어지고, 군사분야의 진전이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시키는 구도를 지향하고 있다. 즉 군사안보분야의 긴장해소와 경제협력 확대의 효과가 서로 상승작용을 불러 일으키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에서 갈등의 장이었던 한반도를 지역평화의 축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평화와 변영의 동북아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1】 평화변영 정책의 체계<sup>13)</sup>

구 분	세 부 내 용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평화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 안보현안</li> <li>- 남북한 협력증진/군사적 신뢰구축</li> </ul> </li> <li>* 남북한 공동번영실현/동북아 공동번영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협력 활성화</li> <li>- 남북경제 공동체 건설</li> <li>- 동북아 번영기여</li> </ul> </li> </ul>
추진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li> <li>* 상호신뢰우선 및 호혜주의</li> <li>*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li> <li>*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li> </ul>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핵문제 평화적해결</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동북아 경제중심</li> </ul>

주 13) 통일부, 「통일백서(2005)」, p.24 표 참조 재구성.

### Ⅲ. 북한의 통일정책

#### 1. 1980년 이전의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문제 인식은 현실보다는 그들의 정형화된 시각에 의해 구성된 이념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통일문제를 민족해방의 시작에서 인식하고 있다.<sup>14)</sup>

6·25전쟁까지 북한의 통일정책의 핵심은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이미 1945년 12월 17일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선언했다. 여기서 ‘민주기지’란 전 한반도를 불세비키화하기 위한 공산주의의 기지를 의미한다. 그러한 북한의 기본입장은 김일성이 1955년 4월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라는 테제를 통하여 민주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 「민주기지론」을 견지하면서 평화통일 제안과 ‘남조선혁명’이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하였다. 남조선혁명의 실천 수단으로 제기된 것이 남북연방제라 할 수 있다. 남북연방제에 관한 구상을 최초로 북한에 제공한 사람은 쿠즈네소프 소련 외무성 부상이었다.

4·19혁명 직후 한반도 정세 논의차 북한을 비공식 방문한 ‘쿠즈네소프’ 제안에 대해 김일성은 1960년 5월 20일 노동당 정치위원회에서 “연방제로 남조선을 끌어안아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연방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 후 1960년 8월 14일 「8·15 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의하였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 조선의 연방제를 제의한다”로 했다. 그 내용은 “당분간 남북 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남북연방제」는 197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 회의에서 “현 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라는 북한 외상 ‘허담의’ 보고에서 8개 항의 대남제의를 통해 다시 제시되었으며, 그 후 김일성은 우리의 ‘6·23선언’의 발표가 있는 당일인 1973년 6월 23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서기 ‘구스타프 후사크’ 환영대회의 연설을 통해

주 14) 이흥구 외,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사, 1989, p.167.



“조국통일 5대강령”이란 것을 내놓았다. 이는 ‘허담’의 8개항을 단순화한 것인데 그 요지는 ①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② 남북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③ 남북의 각계각층 연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④ 고려연방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남북연방제의 실시, ⑤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이었다.

## 2. 1980년대 이후의 통일정책

### 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다시 정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sup>15)</sup> 그 내용은 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② 연방제의 구성원칙과 운영원칙, ③ 10대 시정방침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려민주연방제의 특징은 첫째, ‘고려’에다 ‘민주’를 첨가하여 선진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과도적 대책’ 또는 ‘당분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외형상 완성된 형태의 연방국가라는 점이며, 셋째, 민족, 자주 등의 개념을 이용하는 용어 혼란 전술을 포함하여 심리전적인 10대 시정방침을 제시한 점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남한에서의 ‘군사파쇼통치’의 청산과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①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파쇼악법의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의 제거, ②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③ 민주인사, 애국인사들의 석방, ④ 군사파쇼정권의 민주정권으로 교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는 긴장상태의 완화 및 전쟁위협을 제거라는 명분으로 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②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③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및 ‘두 개의 조선’ 조작 책동의 추구중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른바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남조선혁명론’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제를 하자고 했는데 두 제도에 의한 연방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우리 말로 ‘연방(Federation)’이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Confederation(국가연합)’이라고 표현하는 모호성이다. 넷째, 국호·국가형태·대외정책의 노선 등을 일방적으로

주 15)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2005)」, p.78.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통일 이전에 남북간에 실시해야 할 사항들을 연방제가 실현되었을 때의 시정방침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실시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연방헌법 등 연방의 형성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 나.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연방제는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했다. “남북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은 분열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통일은 후대에게 맡기자.”<sup>16)</sup>

북한이 이처럼 전례 없이 제도통일을 흡수통일로 보고 제도통일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제도통일 후대론’, ‘지역자치정부 권한강화론(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 들고 나온 것은 독일의 흡수통일방식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설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통일국가의 형태는 남북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이며, 제도통일은 후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통일국가의 성격은 자주·평화·비동맹의 독립국가로 규정해 놓았다.

둘째, 통일과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표방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란 것을 채택하면서도 남한에 대해 ① 외세의존 정책의 포기, ② 미군철수 의지 표명 ③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의 영구 중지, ④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가지 사항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통일원칙과 관련하여 북한은 7·4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원칙을 주한미군철수와 미국의 간섭배제로, 평화원칙을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연습 중지로, 민족대단결 원칙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공산당의 합법화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 16)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2005)」, p.79.

넷째, 통일이념에 있어서 북한은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통일의 주체는 '인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은 과도기구, 통일국가 수립절차 등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통일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구는 제시하지않고, 다만 통일국가의 기구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를 내세우며,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개최 → 통일방안협의 결정 →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선포' 등의 통일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의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20돌기념 평양시 보고회」 보고를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이 내용은 2000년 12월 15일자 노동신문 '6·15 선언 6개월' 특집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었다.<sup>17)</sup>

이후 북한은 2001년 12월 9일자 노동신문과 2002년 1월 7일자 평양방송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의 당위성에 맞추어 해석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2002년 5월 30일자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과 남이 통일방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식한 데 기초하여 그것을 적극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통일정책은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하는 대남전략을 기조로, 초기에는 무력적화 통일정책에서, 4·19 이후 남조선 혁명론으로 발전하였으며, 1973년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발전되었으며, 90년대 이후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로 전환되었다.

## IV.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평가

### 1. 남한의 통일방안 평가

우리의 통일방안은 우선 점진적 접근방법만이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 17) 전계서, p.81.

「선(先) 평화정착, 후(後) 평화통일」의 입장을 체계화한 것으로서 기능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통합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남북한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화해·협력은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양측의 실천 의지에 따라 실현될 수 있는 문제이다. 최근까지의 남북관계 수준에서 본다면, 현 단계에서는 화해협력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 상황 하에서 형성된 상호간의 불신의 차이를 해소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과도적 중간과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의 단계를 설정한 것은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타당성·합리성·실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결국 남한주도의 통일을 상징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와 민주는 냉전시대의 개념과 다르며 특정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담긴 가치, 즉 살기 좋은 공동체 및 그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관용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북한 통일방안 평가

북한의 통일전략은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 노선으로 체계화하여 전개되어 왔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북한체제 내에서 유지되는 한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이 쉽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후 1997년 6월부터 발표된 김정일의 통일관련 논문 및 서한을 살펴보면, 그동안 북한은 대남전략 차원에서 남한의 민족통합역량을 저해하는 한편 남한정부를 배제하려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이중적인 적화전술을 구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의 대두와 함께 소위 ‘민족공조’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으며 북한은, 2003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한반도 정세를 ‘조선 민족 대 미국의 대결’로 규정함으로써 핵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맞서 남북이 공동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실리추구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명분으로 ‘민족동조론’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통일방안은 논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북측의 주장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이 방안은 남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해 통일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제도가 바뀌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통일방안은 규범적 당위성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공통의 가치와 행동양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통일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 남북 양측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당위성·필요성·체제상의 차이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의 접근방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두 가지 통일방안은 모두 양쪽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타협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고 본다.

**【표-2】 남북한 통일방안 변천(1948~현재)<sup>18)</sup>**

통일방안 연도	남		북	
	남	한	북	한
*1948~ 1960	제1공화국 (이승만정부)	유엔감시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론	김일성정권	민주기지론 (민족해방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론
*1960년대	제2공화국 (장면정부)	남북자유총선거론 (유엔감시하)	"	남북연방제(1960)
	제3공화국 (박정희정부)	▲선 건설 후 통일론 (1964)		
*1970년대	제4공화국 ( " )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1973. 6. 23) ▲선 평화 후 통일론 (1974)	"	고려연방제(1973) 조국통일5대강령
*1980년대	제5공화국 (전두환정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1982)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	▲한민족공동체통일 방안(1989)		(고려연방제통일방안)

주 18)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2005)」, p.83(표-2) 참조.



통일방안 연도	남		북	
	남	한	북	한
*1990년대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	▲한민족공동체통일 방안(1989)	김일성정권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 제(1991)
*2000년	문민정부 (김영삼정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94)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연합제〉	김정일정권 (1998~)	민족대단결론
	국민의 정부 (김대중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계승(2000)		〈낮은 단계의 연방제〉 (2000) 민족공조론
*2003년~	참여정부 (노무현정부)	" 계승		

## V. 한반도 통일을 향한 준비과제

### 1.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우리의 염원인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변화된 북한의 인식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며, 동시에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우리가 함께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대상, 즉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이며, '경계대상'과 '동반자'라는 이중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현실인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적대감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 가. 북한이해의 연구 방법론

##### 1) 내·외재적인 접근방법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차원의 연구 방법론은 대체로 두 가지로 대별되어

왔다. 그 하나는 외재적 접근법이며 다른 하나는 내재적 접근법이다.<sup>19)</sup>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객관적·외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인식의 방법론을 말한다.

한편 내재적 접근법은 외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제시된 인식의 틀로서, 북한이라는 대상을 분석할 때 북한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면서 북한사회의 각종 현상을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이 각각 북한이해의 방법론으로서 기여한 바 크지만, 두 가지 관점 모두 나름대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의 피상적 실태를 알리는 데에 기여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경향이 있는 반면에 북한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내재적 접근법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2) 북한사회의 인식과 윤리적 판단방법

최근에는 북한을 연구함에 있어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양태를 기준으로 그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식의 방법을 말한다.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을 완성하려면 상대자인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이상적인 북한관은 북한체제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북한을 인식하고, 국민의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 나. 최근사회현상과 북한인식 결어

작금의 현실은 소위 진보적 시각과 보수적 시각, 그리고 세대간, 집단간 이해관계 및 접근방법에 따라 그 관점을 달리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북정책에 대하여 '남남갈등'이라는 사회적 현상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의 통일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사회를 장기적 관점에서 그 변화의 방향성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20)</sup>

주 19)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2005)」, pp.10~13.

20)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2005)」, pp.11~13.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정보나 자료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공식자료는 북한의 당기관지 「로동신문」이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등 신문, 당이론잡지 「근로자」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집 등인데, 이들은 북한의 선전도구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객관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체제대립으로 인해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은 객관적 분석보다도 당위성·주관적 인식 등에 따라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가 정치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북한의 전반적인 모습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지 살펴본다.

첫째,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의 균형적인 북한인식이 필요하다. 냉전시대 우리는 북한을 동족의 반쪽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와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집단 혹은 경쟁체제라고 하는 상반된 대북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한간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볼 때 북한당국은 분명 우리의 경계대상일 수 있지만, 북한주민은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북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반대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현실인식의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체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북한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체제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단편적 이해가 아닌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내적 작동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주민은 타도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같은 민족·동포로서 포용함은 물론, 북한사회의 특수성 이해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2. 통일을 향한 기반 조성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당면목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를 비롯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공존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본 틀과 토대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의 흐름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이라는 대북정책의 기초를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축으로 하여 남북공동선언과 쌍방 합의사항을 성실히 협의·이행해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는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인 구도 하에 차분하면서도 내실 있는 실천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틀과 기반 조성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가. 남북한 경제 협력과 기반 조성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4개 합의서를 발효하였다.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추진,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입장을 합의하여 진전됨으로써 남북경협 3대 중점 사업인 경제공동체 토대마련을 위한 역사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출발은 철도·도로연결, 금강산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우리 기업,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sup>21)</sup>

아울러 남북관계의 정치적 이념적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남북교류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고 북측의 입장과 호응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나. 인도적 차원 문제해결 공동 노력

최근 남북한 간의 인도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차근차근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6·15 공동선언 이후, 10여차례 이상 상봉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그동안 1만여명이 상봉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 이산가족 상봉도

주 21)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2005)」, p.126.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한 공동행사 추진과 함께, 화상상봉 행사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남북자 김영남씨의 가족 상봉과 같이 아직도 상봉하지 못한 또 다른 남북자 가족문제와, 국군포로 송환문제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다. 대북지원 문제

대북지원 문제는 정부차원, 민간차원,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1995년 이후,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관계개선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 교역동향도 2006년 4월 현재 남북한 교역량은 218,907천달러로서 전년대비 4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적 견지에 대한 우려 또한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방식과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나아가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두 축은 평화와 협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실질적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면서 인도적으로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신뢰구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북한의 개방 및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미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및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Ⅵ. 결 론

지금까지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 10월 동·서독이 통일국가로 탄생된 지 16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서, 베트남통일, 독일통일, 남북예멘통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구상에서 한반도만이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욱이 지난 해는 민족분단과 광복 6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민족사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해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통일은, 각기 다른 체제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7천만 단일민족의 숙원인 동시에 남과북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해묵은 냉전질서를 극복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보았듯이 동서독 통일과정의 이정표는 서독의 '브란트' 수상에 의한 강력한 '동방정책'의 추진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양국정상이 20여차례 이상의 정상회담을 통한 신뢰구축이었으며, 통일의 문제는 독일 민족의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내독성에서 관할하여, 차근차근 통일준비를 이루어왔던 것이다. 특히 인적, 물적 교류와 상대방의 TV시청을 통하여, 같은 생활권, 같은 문화권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큰 충격 없이 통일에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후 문화·경제적인 차이와 이질감 극복을 위하여 쏟아부은 막대한 비용 역시 우리에게 값진 교훈과 본보기가 되고 있다.

더욱이 남북한 간에는 독일 민족과는 달리 6·25전쟁이라는 민족간의 내쟁을 통한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여러 분야에서 괴리로 인하여 통일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통일정책에서 말해주듯이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이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의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두 체제를 통합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통일은 서로 다른 남과 북의 정체성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행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반세기가 넘는 분단경험을 통해서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체제가 점진적 상호 신뢰를 쌓아가면서 과도기를 거쳐 기능적으로 통합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접근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음은 물론, 평화적인 방법과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독일통일의 교훈을 되새겨, 남북한 간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증진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성급한 통일보다는 한발한발 통일여건을 성숙시키고 통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무엇보다도 북한체제를 포용할 수 있는 “부국강병” 즉,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홍구 외.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사, 1989.
-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9.
- 연합통신. 「독일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991.
- 통일원. 「남북대화기본 합의서 해설」. 1992.
- 연합통신. 「독일통일의 명암」. 1993.
- 민족통일연구원.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1993.
- 민족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1994.
- 평화문제연구소. 「기다리는 통일 준비하는 통일」. 1995.
- 아태평화재단. 「남북정상회담」. 2000.
- 통일부. 「평화와 협력의 실천」. 2003.
- 북한연구소. 「월간북한 5월호」. 2003.
- 통일부. 「통일백서」. 2005.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5.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5.
- 통일부. 「통일백서」. 2006.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6.

# 디지털 정보전 양상과 대응태세 방향에 대한 제언

## 목 차

1. 서 론
2. 정보전의 개념과 특징
3. 주요 정보전 기술과 무기
4. 주변 각국의 정보전 대응태세
5. 한국군의 정보전 대응실태 및 문제점
6. 정보전 대응태세 발전방향
7. 결 론



예) 준장 권문택

## 1. 서 론

전쟁 양상은 항상 기술발전에 따라 변해 왔다. 이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은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전쟁 양상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이미 변했고 또한 앞으로 유비쿼터스<sup>1)</sup> 정보기술(유비쿼터스 IT) 시대의 기술 추세에 걸맞게 변할 것이다. 지식정보화 시대와 유비쿼터스 IT 시대의 핵심 본질은 모든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이다.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에 따라 전쟁 양상도 바뀌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다. 이러한 전쟁 양상 변화의 핵심은 디지털 정보전(Digital

주 1) 유비쿼터스(Ubiquitous) : 유비쿼터스 개념은 지난 1988년 제록스 팰러 앨토 연구소(PARC)의 '마크 와이저'가 처음 제시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그 효시이다. 이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어디에나 존재하는'이란 뜻으로서 물이나 공기처럼 도처에 있는 자연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유·무선을 가리지 않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에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 사무실이 아닌 어느 곳에서든 지 다른 사람들과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허리에 붙어 있는 컴퓨팅장치로 온갖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세상이 다름 아닌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시대다.

Information Warfare)(이하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이라 칭한다)이다.



병법의 대가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했다. 정보전 전략은 바로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다. 정보전은 핵탄두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의 가시적인 무기와 병력 동원을 최소화하면서, 또한 인명 살상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면서 이상적인 전략 개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정보전’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여 첩보전과 해커전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고도의 정보전 능력’이란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컴퓨터 작동을 지연시키거나 시스템을 해킹하여 데이터를 변조시키는 등의 통상적인 정보전뿐만 아니라 국가 전력 공급제어 컴퓨터에 침입해서 전력공급을 마비시키거나 미사일의 목표지점을 바꾸게 하는 등의 보다 차원 높은 전자 공간에서의 정보전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최근 우리 군에서도 정보전이란 개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군 내부의 여러 문서와 보고서에 그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현 정보전 대응 실태는 비록 선언적으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실천면에서는 일부 정보통신 병과 간부와 기무사 등 관련분야 종사자 이외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조직, 인력, 예산 및 시스템 등 여러 면에서 투자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보다 많은 야전 지휘관 및 참모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전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선진 각국 군의 정보전 대응 실태와 우리 군의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미래 정보전에 대비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정보전의 개념과 특징

### 가. 정보기술 발전과 정보전

컴퓨터의 등장으로 시작된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기술을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응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대략 발전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1) 전산화 시대, 2) 정보화 시대, 3) 지식화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산화’ 시대는 대략 ‘60~’70년대에 컴퓨터의 빠른 연산속도를 활용하여 사람이 수(手)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능률적(비용과 속도)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초기 단계의 정보기술 활용 시기이다. ‘전산화’ 시대에서는 주로 특정 업무수행 위주로 자동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기계적이었다. 정보시스템의 구성도 업무별로 단일성이 강하며, 메인컴퓨터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은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특징지점에서만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폐쇄적인 특성을 가졌었다.

‘정보화’ 시대는 대략 ‘80~’90년대에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통합 및 정보공유 개념으로부터 등장하였다.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시스템이 인터넷 웹상에서 조직의 다양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음으로써 정보의 생산, 전송, 이용이 보다 쉽고, 실시간(real time), 양방향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시대 조직 구성원들은 그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들이 개방형 네트워크들 간의 상호접속과 운용을 통해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같은 정보자원을 공유 및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도서관, 박물관, 은행, 신문과 방송, 학원, 쇼핑몰, 위게임(전쟁공간) 등 수많은 공간들이 컴퓨터 속으로 빨려들어 왔다.

‘지식화’ 시대는 ‘9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지식자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저장, 창조하여 조직 전체의 지식수준을 높이고, 지식관리시스템상에서 모든 조직구성원이 투명하게 공유하여 조직혁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임으로써 조직의 가치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탄생한 정보기술 활용 시기를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체계에 의해 탄생된 공간을 총체적으로 전자공간(Cyberspace)이라고 부른다.

정보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시기는 ‘정보화’ 시대부터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 시기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네트워크가 통합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 즉, ‘지식화’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 나. 정보전의 개념

정보전 개념에 대한 정의는 많은 학자와 군사전문가들 간에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의 공식적인 정의를 준용하고



자 한다. 미군은 1995년에 합동교범에서 “정보전이란 아군의 정보체계를 적의 파괴, 조작, 탈취행위로부터 무결성을 보존하고 동시에 적의 정보체계와 정보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파괴, 조작, 탈취하기 위해 취해지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USJCS95]

한편, 우리 합참은 “정보전은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국가총력전 차원의 개념으로서 군사 및 비군사 분야의 정보 및 정보체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 및 정보체계는 보호하고, 상대국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교란, 파괴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광범위한 제반 활동으로서 정보전의 범주에는 정보작전, 경제정보전, 해커전, 사이버전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합참99]

미 합참의 정보전 정의는 정보전을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정보체계 및 절차에 대한 공격 및 보호 행위로 비교적 군사적 범위로 국한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 합참의 정의는 미 합참보다는 광의적 의미의 정보전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보전을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 및 정보체계는 보호하고, 상대국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교란, 파괴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광범위한 제반 활동”이라고 이해하면 충분할 것이다.

#### 다. 정보전의 특징

정보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공격과 방어의 대상이었던 기존 전쟁 양상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와 정보시스템이 공격과 방어의 대상이 되며, 전장의 범위가 가상공간까지 포함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전은 준비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전쟁 수행비용이 저렴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특징이 있다. 정보전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는 비교적 기존의 다른 무기체계 개발비용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기존의 어떤 무기체계보다도 인명이나 산업시설 등에 대한 피해 없이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보체계들은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정보체계의 마비는 그 체계와 연결된 모든 무기체계의 기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사전에 특정 시스템에 대한 전술적 경고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정보전은 사이버 공간에서 컴퓨터 조작만으로 공격이 가능하고, 신속한 공격이 가능하여 공격받은 전산망이나 기간시설이 완전 무력화되거나 정보유출·조작 등이 이루어진 후에야 공격

받은 사실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특정 지역이나 시스템에 대한 전술적 경고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전통적인 전쟁과 범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정보전은 정보전 무기를 사이버 공간에 배치하였을 경우 정보전 위협과 공격행위의 근원지 파악이 어려워지며, 자국의 정보체계가 공격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통상적인 사이버테러 범죄행위에 의한 것인지, 적국의 의도된 침략 전쟁행위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정보전은 전선이 따로 없고, 익명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정보전의 정보기술은 시간적·공간적 차이를 무의미하게 하므로 기존 전쟁과는 다르게 전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모든 기반통신체계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정보전 공격은 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전선이 형성되며, 더욱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침투했는지를 초기 단계에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

### 3. 주요 정보전 기술과 무기

#### 가. 정보전 공격 및 방어 기술

정보전 관련 기술을 공격 기술과 정보전 방어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보전에

【표-1】 정보전 기술-공격과 방어 기술

공격 기술	방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도해독, 바이러스, 논리폭탄 기술</li> <li>• 반도체에 역기능 삽입기술(Chipping기술)</li> <li>• 초미세형 로봇(Nano Machine) 기술</li> <li>• 컴퓨터 집적회로 파괴용 전자미생물(Microbes) 기술</li> <li>• 정보시스템의 기능 마비용 전자총(High Energy Radio Frequency Gun) 기술</li> <li>• 정보통신망 파괴용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기술</li> <li>• 정보통신 방해용 전파방해(Electronic Jamming) 기술</li> <li>• 위성공격 정보전 기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 분석 및 관리 기술</li> <li>• 인증, 접근통제, 부인방지, 감사추적기술</li> <li>• 해킹방지 및 대응기술</li> <li>• 접근통제, 바이러스 방지 기술</li> <li>• 운영체제, 네트워크, 인터베이스 보안기술</li> <li>• 정보통신망 보호용 암호시스템</li> <li>• 정보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li> <li>• 정보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li> <li>• 정보시스템 침입차단, 탐지시스템</li> <li>• 전자파 차단기술</li> <li>• 피해손실 복구기술 등</li> </ul>

서의 공격 기술은 능동적이면서, 한편 주도권을 쥐고 실시하는 행위이다. 이는 대부분 악의적이거나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 시스템, 시설, 또는 조직에 침투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행위로서 매우 위험한 세력에 의해 감행되는 기술이다.

정보전에서의 방어기술은 수동적이면서, 한편 주도권을 공격자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실시하는 행위이다. 이는 대부분 악의적이거나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침투한 공격자의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기술인데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공격을 당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항상 피동적일 수밖에 없다. 대략적인 공격과 방어기술을 분류하면 앞의 <표-1>과 같다.

## 나. 정보전 무기

앞 절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공격 및 방어 기술 개념을 실제로 구현한 무기들은 다양하다. 주요 정보전 무기들은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sup>2)</sup>, 워, AMCW, 트로이목마, 메일폭탄, 해킹 등의 무기들이 존재한다. 이를 소프트웨어적(논리적), 물리적 무기로 대별하여 기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적 무기

- 해킹 : 가장 흔한 기술이 해킹이다. 해킹은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원래 컴퓨터 마니아(Mania)들에 의한 순수한 컴퓨터 침입을 뜻하던 것이 대상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인 파괴와 정보유출, 그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스팸메일, 과도한 정보의 열람으로 시스템 부하를 유발해 정상적인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 네트워크에 떠도는 정보를 몰래 가로채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 컴퓨터 바이러스 :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시스템의 부트(Boot) 영역, 메모리 영역, 파일 영역 중 어느 한 곳 이상에 감염되어 자기 증식 및 복제가 가능하고 특정한 환경 등에서 데이터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자기 복제, 은폐기능, 파괴가능 등의 특징을 가진다.

주 2) 논리폭탄 : 트로이 목마와 유사한 컴퓨터 범죄의 하나이다. 해커가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를 조작해 이것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위에 숨어 있다가 특정 조건에 달했을 경우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논리폭탄이라는 용어 그대로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이 주어져 숨어 있던 논리에 만족되는 순간 폭탄처럼 자료나 소프트웨어를 파괴하여, 자동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한다. 최근에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고 있다.

- 웜(Worm) : 웜은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개입 없이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다른 컴퓨터에 복제. 전통적인 웜은 해킹기법을 이용하여 다른 시스템에 자동 침투하는 것으로 주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파되며 다른 시스템에 침투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 트로이목마 : 트로이목마는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악의적인 기능을 몰래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기생하지 않고 자기 복제 기능이 없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원격에서 컴퓨터 제어가 가능하며 주요 기능은 키 입력/오디오/비디오 캡취, 파일 공유관리, 패스워드 탈취, 통신 접속 변경, 프로그램 실행제어 등이다.
- AMCW(Autonomous Mobile Cyber Weapon) : AMCW는 공격 대상에 대한 정확한 순항 능력을 가진 일종의 컴퓨터 바이러스로 볼 수 있으며, 걸프전에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처럼 공격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하여 적국의 기간 통신망이나 방공망을 통제하는 중요 전산망을 파괴하거나 교란한다. 또 비밀정보를 없애거나 거짓 정보를 침투시켜 전산망이 통제하는 국가기반시설을 일시에 마비시킬 수도 있다. 특히, AMCW 공격은 해킹과 달리 공격자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더욱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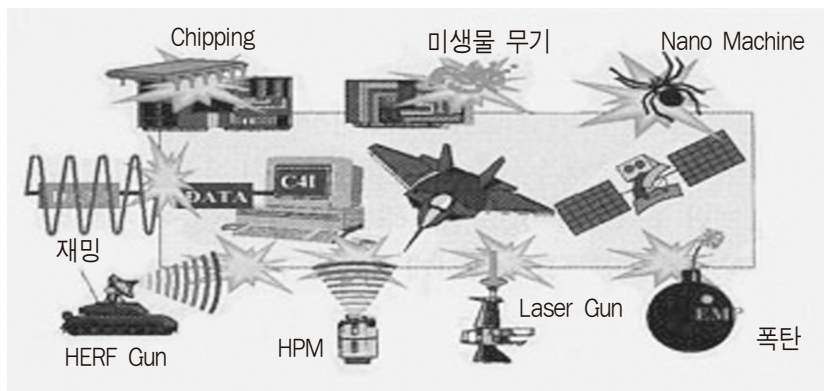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거부 공격 도구들과 기존의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공격 도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 2) 물리적 무기

전 항에서 기술한 소프트웨어적 정보전 무기들이 민간기업이나 군사용으로 두루 활동된다면 물리적인 무기들은 주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물리적 무기는 치명적인 군사적 살상무기와 병행하여 활용하면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자전, 심리전 등과 관계가 있는 무기들로 고주파 또는 저주파를 이용한 무기, 전자기장을 이용한 무기, 나노 기술과 생물학적 무기들로 구성된다.

- 칩핑(Chipping)기술 : 소프트웨어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 특히, 컴퓨터 칩을 조작함으로써 같은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컴퓨터 칩에 원하는 장치를 은밀하게 삽입해서 일정 시점이 되면 저절로 마비되게 하거나, 외부로부터 일정 신호를 받으면 고장을 일으키고, 혹은 일정한 시그널을 발생시켜 컴퓨터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하는 등의 조작이 가능하다.

- 마이크로 로봇과 미생물 : 이는 미 MIT의 링컨 연구소가 담뱃갑만한 소형 비행 물체로 개발한 것인데 비행 중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이로써 과거 U2, SR 71 등 첩보 비행기보다 진전된 형태의 적정탐지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개미만한 크기의 마이크로 로봇을 적진에 뿌리면 건물에 스며들어 스스로 컴퓨터를 발견해 파괴한다. 미국은 또 반도체나 전자기기의 회로를 먹어치우는 미생물 무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허프(HERF : High Energy Radio Frequency)총 : 이는 높은 주파수의 강력한 전자 신호를 목표물에 발사해 컴퓨터나 항법장치 등 각종 전자기기를 마비시킬 수 있고, 항공기에 겨냥해서 발사할 수도 있는 무기이다.
- 전자기장 폭탄(EMP : Electro-Magnetic Pulse Bomb) : 이는 강력한 전자기장을 형성해 주변의 모든 전자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 미국의 로스 알라모스 국방연구소가 개발한 것으로 허프 총처럼 목표를 향해 발사할 수는 없지만 손가방 정도의 크기로 훨씬 광범위한 지역의 전자기기를 파괴할 수 있다.
- 전파 방해 : 이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상대방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전파방해(Electronic Jamming) 기술이다. 이 기술과 관련하여 미 국방성의 전자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전파 방해를 비롯한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전투기, 함정)의 모든 레이더 체계에 전파방해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전파방해를 할 수 있는 레이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은 하나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아날로그 수신기들을 디지털 수신기로 대체하고 있다.



정보전의 물리적 마비 무기들

3) 최신 정보전 무기 : 스파이웨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 국민의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반면 인터넷 이용자를 감시 또는 추적하는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다. 즉, 인터넷 이용자는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받을 수 있으며, 스파이웨어는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를 감시/수집하는 도구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별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는 프리웨어(Freeware)<sup>3)</sup>는 스파이웨어를 확산시키는 주요원인으로 들 수 있다. 스파이웨어의 가장 큰 역기능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사용하는데 있으며, 이는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스파이웨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등 개인정보가 손쉽게 유출되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파이웨어는 군사적으로 이용한다면 산업 스파이들이 도청장비를 설치하던 형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방정보시스템에 침투하여 각종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할 수 있다. 스파이웨어의 작동 형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면 ① 잠입설치, ② 트로이 목마, ③ 근거리 도청 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인 잠입설치는 컴퓨터 사용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리적으로 컴퓨터에 접근하여 수동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스파이웨어는 두 번째 방식인 트로이목마 형태의 설치방법을 따른다. 이는 프로그램의 원래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스파이 기능을 프로그램 내부에 은닉하여 사용자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다.

세 번째 형태인 근거리 도청은 스파이웨어의 형태 중 보편적인 형태는 아니다. 이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직접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컴퓨터가 네트워크 사용을 위해서 경유하게 되는 다른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연결장치 부분에 미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도청하거나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보도록 조작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 예상 피해 상황은 ① 국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실행 통제 차단, ② 국방에 관련된 주요 정보수집, ③ 국방관련 정보시스템의 보안시스템 작동 차단, ④ 심각한 컴퓨팅 성능저하 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최신 악성 프로그램들은 정보전에서 활용하기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시에 전 국가기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전형적인 저비용, 고효율 무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주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적은 비용으로 강대국 또는 남한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좋은 정보전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주 3) 프리웨어(Freeware) : 원저작자가 금전적인 제 권리를 보유하여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프리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또는 온라인 소프트웨어라고도 한다. PC통신의 공개 자료실(Data Library)이나 인터넷의 FTP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아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4. 주변 각국의 정보전 대응태세

### 가. 미국의 정보전 대응태세

걸프전을 통해 사이버 정보전의 가능성을 확인한 미국은 국가안보국(NSA : National Security Agency) 주관 하에 가상 적에 의한 전·평시 해킹 가능성이 높은 주요 군사령부에 대한 모의 해킹을 감행한 바 있다. 그 결과는 대부분의 주요 사이트들이 고도로 훈련된 해커에 의해 손쉽게 해킹당하고 심지어는 주요 전력 공급망이 차단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 국방 주요 사이트에 대한 해킹이 손쉽게 가능함이 확인되자 미 국방성에서는 1998년 9월 말부터 전 세계 모든 미군 조직에 대해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국에 대한 잠재 적들을 이롭게 하거나 군인들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미 국방성 산하 연구기관인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는 1998년 9월부터 “차세대 국방정보 인프라망에 대한 정보보증(IANIGII : Information Assurance(IA) of the Next Generation Information Infrastructure)”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재 완성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세부 개발목록들은 ① Advanced Boundary Controllers, ② Monitoring and Threat Detection, ③ Risk Management and Decision Support, ④ Survivability - Incident Response and Recovery, ⑤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System Analysis, ⑥ Malicious Code Detectors 등이다. DARPA는 또한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0년까지 1단계로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에 대비한 방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차세대 IT 혁명인 유비쿼터스 컴퓨팅 하에서의 정보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군은 이미 1996년부터 국방성 산하에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RED Team”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현재 가상적의 군사, 정보 전산망과 컴퓨터를 해킹으로 파괴하는 컴퓨터 해킹 공격부대를 극비리에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간부들에 대한 교육에도 투자하여 지휘참모대학 등 모든 정규 교육 커리큘럼에 상당한 비중으로 정보전 교육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이제는 야전군 지휘관들도 사

이버 공격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비록 그 세부 내용은 극비로 분류되고 있으나 사이버 정보전을 방어차원에서 한 걸음 발전하여 적국 전산망을 파괴하기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 폭탄 프로그램 등의 공격무기도 이미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적인 정보전 기술을 통해 적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 없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주요 도시의 전력이나 전화망 등 핵심 기반시설을 마비시키거나, 부대의 위치, 병력 배치, 지형 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적을 교란시키는 전술 등을 실용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나. 북한의 정보전 대응태세

### 1) 북한의 정보화 수준

북한은 현재 한국보다는 그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새로 부설된 전화용 광케이블을 이용해 주요 컴퓨터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 “광명” 컴퓨터통신망(인트라넷)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광명” 인트라넷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복수 개의 네트워크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유사시 지휘통제 정보통신망의 두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체계를 다중화한 것이다.

북한 정보통신망의 특징은 철저히 외부 세계와 단절하여 독립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터넷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모든 행위에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오픈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오픈된 형태의 인터넷 연결을 거부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국민의 불만과 반항이 밖에 표출되지 않는 세계의 유일한 비정상국가이다.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역으로 이용해 인터넷이 없으면 국가기능의 마비가 올 수도 있는 미국이나 한국 등 그들의 적대국에 대한 정보전 내지는 대남공작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자신은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노출이 안 되고 반면 상대는 노출된 유리한 작전공간이 되는 셈이다.

### 2) 북한군의 정보전 대응태세

북한군은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국지전, 분쟁들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이나 연합국, 이스라엘의 전쟁수행방식들과 동원된 최첨단무기들의 능력들에 대해서 정밀 연구 분석하여 자체의 전쟁전략과 능력완비에 반영해 왔다. 1991년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유고전, 이라크전 등은 북한군의 정보전 전력 강화에 크나큰 전기가 된 사례들이었다.

걸프전의 교훈에서 북한군은 현대전쟁에서 정보전자전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총참모부에 지휘자동화국, 예하 각 군단에는 전자전연구소를 신설하여 어떤 장애환경에서

도 북한군의 지휘통신을 보장하며 적의 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한 각종 전자장비들을 개발하고 전자전 전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초고속통신망을 군사적으로 이용한 정보전을 준비하기 위해 최첨단 정보기술 운용 능력을 갖춘 “정보전 전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기술학부들을 군사대학들이나 군 관련 교육기관에 신설하고 우수인재를 훈련시켜 왔다.

또한 최근의 사례로서 2003년 이라크전쟁기간 동안 내내 군 수뇌부가 모여 미국의 CNN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시간, 분 단위로 전쟁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과 영국군의 새로운 전쟁수행방법과 전자전 장비들을 파악하였으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북한군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라크전쟁 당시 CNN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본 김정일은 “지금까지의 전쟁은 총알 전쟁, 기름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다. 즉 누가 평소에 적의 군사기술정보들을 더 많이 장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장에서 적의 군사지휘정보를 얼마나 강력하게 제어하고, 자기의 정보력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하면서 각급 부대에 첨단 정보기술에 대한 교육 강화를 직접 지시하였으며, 나이 어린 영재들을 모아 ‘미림대학’<sup>4)</sup>에서 ‘사이버 전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군은 정보전 능력을 정보제압능력과 정보획득능력, 그리고 정보처리능력으로 구체화시키고 육, 해, 공군의 전투작전능력에 이러한 새로운 능력들을 보충시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총참모부의 정보전 지휘능력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북한군은 공세적 정보제압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적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거부, 와해, 파괴 및 기만하기 위한 정보전 특수부대들을 조직하고 전투방법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군과 저격, 경비병 사령부들에도 종래의 직속정찰부대들과 독립된 직속정보정찰을 새로 조직하고 이러한 팀들 사이의 협동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주 4) 미림대학 : 지금은 자동화대학으로 개칭되어 불리고 있으나, 이것은 대외적인 명칭일 뿐 내부명칭은 미림대학으로 호칭되고 있다. 평양시 사동구역 미림동에 소재한 인민무력성 총참모부 전자전국 산하 5년제 대학으로서 군장비의 현대화 및 전자전 전력의 확보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한 대학이다. 학교위상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성이과대학 등과 동등한 수준이며, 학생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업대학 등의 졸업생들과 평양시내의 제1고등 중학교와 각 도의 제1고등중학교 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각 군부대 사병 가운데에서도 시험을 통해 매년 200여명씩 공개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졸업 후의 진로는 각 군부대 자동화부 참모에서 전자전 지휘체계를 수립하며, 전자전 전문-담당부대인 미림부대에 입대하게 된다. 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주로 동구권에서 제작한 486급 고급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부대에서는 386급을 사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해킹, 바이러스, 시스템 침입 및 파괴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어적 정보제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방어하고, 최고사령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총참모부 정보통제센터 등 핵심 정보전 시스템들을 적의 전자전, 정보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자전, 군지휘자동화와 관련된 군사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던 “미림대학”에 새롭게 정보전 연구센터를 세우고, 총참모부에는 정보통제센터를 새롭게 조직하여 전자전, 정보지원, 정보체계 운영지원 및 무기체계 운영을 조정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군 정보전 대비태세의 또 다른 특징은 아주 우수한 “정보전 도사”들을 조직적으로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폐쇄된 1인 독재체제 특성상 천재적 프로그램 도사들을 다수 양성하여 그들만의 은밀한 명령체계 안에서 전투작전 개념으로 사이버 정보전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서, 북한군 정찰국 121소와 중앙당조사부(35호실) 산하의 기초자료 조사실은 기본 임무가 특정 대상기관들에 대한 기밀자료의 해킹과 변조, 그리고 접근조작을 하는 것이다.

한편 적공국 204소와 중앙당 통전부 작전처는 한국군 혹은 사회지도층, 대학생,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허위정보의 유출과 여론 흐름을 조작하여 친북세력의 기득권 진출과 사회적 혼란 등을 조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정보전 능력이 더욱 위험한 것은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수학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뛰어난 재능을 소지한 천재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신형의 각종 암호작성 및 암호해독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보전 공격실천에 도입하는 시뮬레이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을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고도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해킹부대를 창설하여 그 조직을 ① 해킹도구의 개발과 ② 정보전 수행 파트로 구분하고, 수학 알고리즘 파트, 운영체제파트, 네트워크분석 파트, 시스템분석 파트, 트래픽 처리 파트, 코드화 및 검사 파트, 전투기획 파트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보전에 대비하고 있다.

#### 다. 중국의 정보전 대응태세

중국의 정보전 대응태세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직접 그 중요성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내릴 정도로 확고하다. 실례로서, 2004년 7월 당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장쩌민은 “정보전에서의 승리라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보기술로 재무장하여야 한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민해방군(이하 ‘중국군’이라 칭한다)의 고위 전략가들도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이 정보기술과 기존의 무기를 결합한 첨단 전자정보전으로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미래 정보전에 대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서는 ① 정보전 조직 강화, ② 정보전 관련 연구 조직 설립, ③ 각급 군사학교에서 정보전 교육 필수화, ④ 전문인력 양성 및 해커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정보전 관련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국군 총참모부 산하에 제3부와 제4부를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제3부는 통신부라고 부르며 주요 수행업무는 무선 통신감청, 암호번역, 위성정찰사진판독 등의 신호정보(SIGINT : Signals Intelligence) 관련 활동과 함께 정보전 관련 활동과 CAI 현대화, 통신 인프라 건설, 운용 및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제4부는 전자부라고 부르며 대전자 대책을 포함한 전자전 관련 연구, 전자정보 수집 및 분석, 대레이더 교란, 대적외선 교란 및 대적 기만작전 설계 등의 임무를 담당하면서 국내 전자산업 및 전자정보(ELINT : Electronic Intelligence)도 관리를 하고 있다.

중국군은 또한 정보전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전자시스템 엔지니어링사(CESEC : The China Electronic Systems Engineering Corporation)’라고 하는 민간조직 성격의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CESEC는 형식상 민간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중국군 정보통신기술 개발의 핵심 조직으로서 중국군의 이동통신에서부터 전화선, 컴퓨터 네트워크, 암호, 마이크로웨이브,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및 정교한 군 CAI시스템에 대한 보안기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조직의 특징은 민간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들과 교류 및 협조하면서 중국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군 각급 학교에서의 정보전 전문인력 교육은 ① 훈련을 통한 정보전 능력 개발, ② 정보전 선진기술 획득, ③ 필요시 해커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점은 ① 바이러스 침투, ② 정보 정찰의 실시, ③ 해킹을 통한 데이터의 변경, ④ 정보 폭탄 발사, ⑤ 불필요한 정보 제공, ⑥ 허위사실 유포, ⑦ 정보기만 실시, ⑧ 복제정보 유출, ⑨ 정보방어조직 스파이웨어 침투, ⑩ 네트워크 스파이웨어 침투 등 10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군의 주요 정보전 교육 훈련 기관으로서는 후안(Wuhan)에 소재한 통신사령부 아카데미(The Communications Command Academy), 칑후(Zhengzhou)에 소재한 정보공학대학교(Information Engineering University), 창사(Changsha)에 있는 국방과학기술대학교(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를 들 수 있다.

중국군의 현재 정보전 수준은 아직 이 분야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 수준에는 못 미치지 못하는 필요시 주요국의 민간과 군 컴퓨터 통신망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사용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전문

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는 최근에 유포되어 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던 라이온(Lion), 어도어(Adore) 및 코드 레드(Code Red) 등 최신 웜(Worm) 바이러스를 추적한 결과 이것이 중국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둥성의 한 대학교로부터 제작 유포되었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서는 2003년 9월에 대만의 수많은 회사들의 네트워크에 트로이목마 공격이 유포되어 심대한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는데, 이 공격이 당시 대만 정부가 중국 정부와 독립 문제로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우자 곧바로 일어난 사이버 공격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중국 정보전 당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라. 러시아 및 일본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다른 분야보다 군사분야 기술에서만은 언제나 선진국의 대열에 서 있다. 정보전 분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러시아 고위 군사 지휘관과 전략가, 과학자들은 전쟁의 개념이 과거의 '타격체계 경쟁'에서 '정보체계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전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지휘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전력 우위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기술과 정보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지휘통제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 바이러스와 논리폭탄 등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소위 '스텔스'라고 하는 공격용 바이러스나 논리폭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변종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다. 반면 상대방이 개발한 '스텔스'형 바이러스를 발견하기 위하여 파일 구조 및 수학적 프로시쥬어(Procedure)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평화헌법' 하에서 군사체계의 발전과 군사력의 정비를 엄격하게 제한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이테크 장비로 무장한 정예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11월 28일 일본은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변화와 새로운 임무수행에 적합한 방위력 건설을 위해 자위대 편제 및 전력 재정비 방향이 포함된 '신방위계획 대강'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방위력의 합리화와 효율화, 군사장비의 첨단화를 추진해 왔다.

일본도 정보전과 관련된 군사장비 첨단화 분야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신뢰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내 대규모 공장 설비, 네트워크 보안은 물론 석유, 화학, 전력, 철강 산업과 통신회사에 대한 전산망 보안 상황과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방위청은 컴퓨터를 통한 적의 공격을 막거나 역공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매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보완하여 예산안에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 문제 연구비로 수십억 엔을 책정하고 있으며, 자위대 산하 각급 학교에서 정보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5. 한국군의 정보전 대응실태 및 문제점

### 가. 정보전 대응 실태

#### 1) 정보화 목표와 정책

한국군의 정보전 대응은 국방정보화 정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한국군의 정보화 정책목표는 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필승의 지휘통제를 지원하고, 평시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경제적인 군 운영을 보장하는 데 두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방정보화 목표달성을 위하여 5대 핵심 분야 1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단계화하여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표-2 참조)

**【표-2】 국방정보화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핵심 분야(5)	중점 과제(15)
정보체계 구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전/체계통합전 수행을 위한 국방통합 C4I체계 구축</li> <li>•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국방통합자원관리체계 구축</li> <li>• 국방정보통신 기반체계 구축</li> </ul>
정보화 조직/인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CIO 제조 및 조직 활성화</li> <li>• 정보화 추진 전담조직 및 기능 개선 보완</li> <li>• 전 장병 대상 정보화교육 및 전문 인력 육성</li> </ul>
제도 및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통합 및 공동운영환경 구축</li> <li>• 국방정보화 사업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li> <li>•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국방업무절차 개선</li> </ul>
모델링/시뮬레이션 능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 시뮬레이션 환경 정비</li> <li>• 분산 시뮬레이션 기반 구축</li> <li>• 군별, 제대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체계 구축</li> </ul>
국가정보화 정책 사업과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보화 정책사업과 연계강화</li> <li>• 국가정보화 인프라 최대 활용</li> <li>• 정보화 분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li> </ul>

자료출처 : 국방정보화 발전계획, 국방부, 2003.

이러한 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2005년까지는 초고속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화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휘통제체계(C4I), 국방자원관리체계 등 국방정보체계의 핵심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2단계로 2010년까지는 정보기술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계 확장 및 체계통합을 통한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3단계는 2010년 이후로 모든 국방정보체계를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체계로 구축해 세계 10대 정보화 강군을 건설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2) 정보전 대응 실태

한국군의 정보전 대응을 위한 추진 실태를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정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조직은 정책과 기획을 다루는 부서로서,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 1개 담당관, 각군 지통실에 1개 담당관을 편성하고 있으며, 운영조직으로서 국방부 직할 조직인 국방전산정보관리소 및 각군본부 직할 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에 1개 CERT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인력 측면에서는 국방연구원에 7명, ADD에 6명이 편제상 충원되어 종사하고 있으며, 제도 및 절차 면에서는 군사보안업무 시행 규칙에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있고, CERT 운영지침, 연구개발 지침, 국방정보통신 기반체계 보호 지침이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다.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는 기무사의 사이버 보안사고 수사체계(2001년), 전자사고 유출방지시스템 개발(2001년), 국방통합전자자료 인증시스템 개발(2004년), 사이버 모의 훈련시스템 개발(2005년) 등이 부분적으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데이터 복구 및 백업체계 개발(현재 진행 중)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한편 군용 정보전 관련 장비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별도의 장비를 연구 개발 중에 있다.

한국군의 정보전 대응태세는 앞에서 열거한 조직, 인력, 시스템 등을 종합해 볼 때 주로 방어능력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정보전 공격능력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까지 없었으나 정보전 모의 공격훈련체계 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없고, 전담부대 편성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 3) 정보전 대응의 문제점

상기 현황을 검토해 볼 때, 한국군은 중·장기 정보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정보시스템 개발과 정착을 위한 목표와 계획은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보전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계획이나 노력은 주요 주변국의 정보전 대응태세와 비교하여 볼 때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정보전 방어 및 공격능력 구축을 위한 조직과 운용체계가 미약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전 관련 조직은 최고 기관인 국방부 본부 및 각군 본부에 1인 담당관, 운영은 각군 주요 사령부급에 1개 팀 정도 편성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 국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의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둘째,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다. 사이버 정보전 공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인력은 차치하고 우선 시급한 방어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연구 인력도 국방연구원과 ADD에 약간 명이 편제상 충원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정보전 대응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셋째, 디지털 정보전 교리 개발의 부족이다. 2002년도에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우선 개발하였으나 정보전 수행교리로서의 적합성은 아직 검증받지 못한 실정이며 합참차원의 상위 교리 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넷째, 정보전 핵심기술 개발의 부재이다. 이는 연구 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서 정보전은 공격과 방어기술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 처우 및 위상을 한 차원 높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보전 수행 책임부서의 역할 부재이다. 즉, 현재는 정보전체계 구축을 위한 부서의 활동은 외부 용역 등을 활용하여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으나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이를 운용하여 정보전 수행을 책임질 독립 부대나 조직 편성이 전혀 없다.

## 6. 정보전 대응태세 발전방향

### 가. 정보전 대응태세 발전방향 식별

한국군의 정보전 대응체계 구축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 준거 기준으로 한국군보다 선진적인 미군의 정보전 대응태세 준비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미군은 미 국방위원회 특별 연구팀이 1996년과 2001년에 작성한 정보전 관련 준비태세 확립 권고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USDSB96, USDSB01].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3]과 같다.

미 국방부 특별위원회가 자국의 정보전 수행능력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방어적 정보전 준비 권고안은 한국군의 정보전 대응태세 준비에 가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권고안은 정보전체계 구축의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는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신중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전은 사이버상에서 전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전 무기체계는 기존의 재래식 대칭형 무기체계와는 달리 국경이



**【표-3】 미 국방위원회 방어적 정보전 준비 권고안(요약)**

1996년(1차 권고안)	2001년(2차 권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어적 정보전을 위한 조직편성</li> <li>• 군 일반에 정보전 인식 확산</li> <li>• 기반구조의 의존성과 취약점 평가</li> <li>• 위협의 조건과 대응 정의</li> <li>• 방어적 정보전 준비태세 평가</li> <li>• 저비용 고효율 상용제품 도입</li> <li>• 최소한의 핵심 정보기반구조 설정 및 유지</li> <li>• 연구 및 개발, 인력 확보</li> <li>• 사이버 정보전 법적제도 확립</li> <li>• 국가인프라 보호계획과 통합</li> <li>• 방어작전 예산 투자 증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우위 획득 위원회 설립</li> <li>• 글로벌 정보체계 구축 정책, 구현 계획, 체계 구조, 예산 반영, 정보보증 테스트 베드 구축</li> <li>• 공격기술 연구 및 개발 투자 확대, 공개키 기반구조 구축</li> <li>• 전문 인력 양성, 예비군 활용방안 강구</li> <li>• 기존 정보작전과 통합 연구, 공격팀 활동 활성화, 민간기술 활용, CERT<sup>®</sup> 활동 및 협조 활성화</li> <li>• 정보작전 조직들에 대한 역할, 임무, 책임 명시</li> <li>• 교리 개발, 방어적 정보작전과 통합, 정보 공유</li> <li>• 국가 인프라 정보보호 재설계 및 활용방안 강구</li> </ul>

없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국력과 관계없이 비교적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응용한 다양한 전자상거래가 한국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것은 정보기술이 개발하거나 구축하는데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 항에 언급한 미 국방성의 권고안을 참고로 하고 현 한국군의 정보전 대응 실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발전방향을 도출해 볼 수 있다.(표-4 참조)

**【표-4】 정보전 대응태세 발전방향**

조직 및 인력 분야	제도 및 교리 분야	기술개발 및 교육체계 구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전 전담 정책 조직 신설</li> <li>• 정보전 전담 신규 부대 창설</li> <li>• 정보전 연구 및 개발 인력 보강</li> <li>• 정보전 시스템 운용 인력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전 방어 및 공격 수행 교리 개발</li> <li>• 국방망 취약성 평가/보완 체계, 절차 확립</li> <li>• 전·평시 정보전 수행 법적 근거 확립</li> <li>• 민·관·군 통합 협조체계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전 방어 및 공격기술 개발</li> <li>• 기존 국방정보체계와 인프라와 통합</li> <li>• 각급 교육기관에 정보전 관련 과목 필수화</li> </ul>

주 5) CERT :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의 약어. 컴퓨터 해킹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을 해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통신보안 전문가그룹으로서 국방부 본부 및 각군 주요 사령부 전산소에 편성 운영되고 있다.

## 나. 정보전 대응태세 발전방향

### 1) 조직 및 인력 분야

정보전을 막연한 개념만으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책화하고 교리를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실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전 전담 정책 조직 신설이다. 미래 정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위 조직에 정보전 전담 정책 부서를 설치하고 책임자를 임명하여 정보전 대응 체계구축을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여기에서 조직은 최소한 국방부 본부 또는 합참에 기존의 정보화 기획실이나 지휘통제부 산하에 또는 별도로 전담 국, 실 수준의 조직을 신설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을 보직하여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보전 전담 신규부대 창설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방 산하 정보전 관련 조직은 독립부대는 전무한 실정이며, 국방부 직할 전산정보관리와 각군 예하부대에서 운용하는 CERT팀 정도이다. 이러한 조직 위상이나 규모로는 미래 정보전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미군은 차치하고라도 전 절에서 이미 기술한 중국군과 북한군의 정보전 전담조직 편성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 최소한 국방부 산하 정보통신 분야 조직 산하에 독립적인 정보전 부대를 창설하고, 해커 요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전 연구 및 개발 인력과 운용인력을 확충 및 보강해야 한다. 정보전 연구 및 운용 전문 인력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정보전 대응태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를 수집, 처리, 보호하고 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는 전문 인력은 정보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군내에는 국방 정보기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구 및 개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전 및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하겠다.

정보전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소요인력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인력양성계획을 수립, 군 내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정보전 및 정보보호관련 과정 및 학과 및 과목을 개설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또한 정보전 인력 수급 및 활용방안 연구를 계속하여 기술 변화에 적합한 교육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정보전 전문 인력을 수요와 환경에 적합하도록 양성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대학 등의 정보보호연구센터에 관련분야 종사자들을 위탁하여 재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전문 인력 양성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사항은 일단 양성된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의 중요성이다. 현역 장교나 또는 군무원 중에서 양성된 정보전 전문 인력은 현 조직이나 인사관리체계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애써 양성해 놓는다 하더라도 민간기관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보전은 두뇌싸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승진, 기타 보상제도를 확립하여 장기 활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제도 및 교리 분야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된다 해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교리 분야의 발전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전 방어 및 공격 수행교리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정보전 방어 및 공격을 수행하는 전·평시 교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이버 공격은 전선이 없는 특성상 군과 민간기관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전략 전술 교리는 대량 살상 무기체계에 바탕을 둔 교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미래 정보전은 전선이 없고, 소리 없이 진행되며, 인명 살상이나 구조물의 파괴를 수반하지 않으며, 또한 적의 의도된 정보전 공격인지 통상적인 해커 활동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국내 및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 즉, 상대측에 우리의 정보전 및 정보보호 기밀을 노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보전 공격 및 방어 교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정보전 교리 내용 중 주요 포함사항은 전·평시 ① 위협분석 방법, ② 위협 평가 방법, ③ 보안대책 수립, ④ 사후 관리 등이 될 것이다.

둘째, 국방정보통신망 취약성 평가 및 보완체계와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평가 전담반을 구성하여 중요도별로 취약성 분석 절차를 마련하고 단계별로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모의훈련을 통해 취약성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 체계와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단계별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취약성 진단대상의 현 보안체계 및 보안대책 문서 검토
- 2단계 : 취약성 진단 도구를 활용한 보안진단 수행, 필요시 침투 시험 수행
- 3단계 : 점검 결과에 대한 분석 수행
- 4단계 : 분석자료를 통한 취약점 제거 방안 수립
- 5단계 : 취약성 분석 및 보안대책 수립 최종 보고서 작성

셋째, 전·평시 정보전 수행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전·평시 정보전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는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반 보호 및 정보전 대응법(가칭)」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관할권 문제, 전자추적 등 압수·수색의 문제, 보안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 간에는 시스템 관리자의 수사 협조 의무, 전자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해야 한다. 또한 암호체계와 응용기술에 대한 국가표준을 확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지침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군·관·민 통합 협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사이버 정보전 공격관련 정보 공유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우선 해킹으로 인한 위협과 파급 효과가 큰 금융·통신 분야에 「정보공유 및 분석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군·관·민 합동으로 가상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효율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군·관·민 '정보공유 및 분석센터'에서는 정보전 대응을 위한 주요 자산과 인프라를 지정하여 중요 인프라에 대한 수시 감시체계 구축 및 경보체계를 확립하고 정보체계의 취약성 평가 및 보완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

### 3) 기술 개발, 교육체계 구축 분야

조직, 인력 및 제도와 교리 분야의 발전은 기술 개발의 뒷받침을 받아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전 방어 및 공격기술 개발이다. 여기에는 ① 공격이나 위협에 대한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증, 접근통제, 부인방지, 감사추적 기술, ②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보호기술, ③ 침입차단 시스템(Firewall), 침입탐지 시스템(IDS : Intrusion Detection System), 인증 시스템(Certification System), 안티바이러스 시스템(Anti-Virus System) 개발 등이 포함된다.

둘째, 기존 국방정보체계와 인프라와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군은 1990년 중반부터 중·장기 정보화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자원관리체계, 전장관리체계, 행정업무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이 중에서 인사, 군수 등 자원관리체계와 사무자동화를 비롯한 행정지원체계는 비교적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었으며, 지휘소자동화체계는 현재 실용 운용 중에 있고, 각 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전술 C4I체계는 일부 시범부대에 적용하고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정보전 특히 방어적 정보전 대책은 이미 이와 같이 개발 운영 중인 국방정보체계 인프라와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효과를 볼 것이다.

셋째, 교육기관에 정보전 관련 과목 필수화이다. 정보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군의 정보화 교육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는 중국군의 교육체계가 될 것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군은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으로서는 ① 훈련을 통한 정보전 능력 개발, ② 정보전 선진기술 획득, ③ 필요시 해커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반 야전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는 미군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정규 교육 커리큘럼에 상당한 비중으로 정보전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야전군 지휘관들도 사이버 공격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 7. 결 론

주지하다시피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근간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이다. 인터넷은 문명의 이기로서 인간의 모든 활동과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으나 한편 많은 역기능을 탄생시켰다. 이 중의 하나가 이미 미래학자와 군사전문가들이 예측했듯이 정보전이다. 정보전 하에서 국가안보는 매우 위험한 사이버 공간에 노출된 격이다. 정보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현재 또는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이다. 파괴력 또한 순식간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일순간에 국가 전체를 환란에 빠트릴 수 있다. 군의 기본 임무는 국토방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군사부분의 정보전 대응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정보전 대응에도 만전의 태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정보전의 개념과 특징, 주요정보 기술과 무기, 주변 각국의 정보전 대응태세를 살펴 본 후 한국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군도 21세기 정보시대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비하여 정보전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조직과 인력, 제도와 교리, 기술개발과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미래 정보전에 대비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고의 내용이 국방 정보화와 정보전 대응태세 확립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합참99] 합참. 합참 비전 2015 합동전장 운용개념서. 1999. 4.
- [국방02] 국방부. 「국방정보보호 발전 기본계획」. 2002. 2.
- [황호02] 황호상. 「정보전 교리연구」. 합참대, 2002.
- [남길01] 남길현 외. 「국의 국방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분석에 관한 연구」. 국가보안기술 연구소, 2001. 12.
- [남길02] 남길현.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국방연구 45권 1호」. 국방대학교, 2002. 6.
- [박상01] 박상서. “정보전 개념과 기술”, 「육군 정보화 정책과정」. 2001. 6.
- [김현02] 김현수 외. 1.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일본의 대응정책 고찰. WISC2002, 2002. 9.
- [Waltz98] Edward Waltz, Information Warfare Principles and Operations, 1998.
- [Libiki95] Martin C. Libiki, What is Information Warfare, 1995.
- [USAF98] US AF, Information Operations, 1998.
- [USDOD00] US DoD CIO Annual Information Assurance Report, 2000.
- [USDOD01] US DoD Dictionary of Military Terms, 2001. 12.
- [USDSB96] US DSB TF Report, Information Warfare – Defense, 1996.
- [USDSB01] US DSBTf Report, Protecting the Homeland, 2001.
- [USJCS95] US JCS Pub, 1 – 02, 1995.
- [USJCS98] US JCS, Pub, 3 – 13, Information Operations, 1998.
- <http://www.kisa.or.kr/technology/sub5/america.html>,
- <http://www.kisa.or.kr/technology/sub5/japan.html>,
- [http://www.mnd.go.kr/mnd/sub\\_home/html/sub\\_home5\\_\\_texmenu\\_\\_ss.html](http://www.mnd.go.kr/mnd/sub_home/html/sub_home5__texmenu__ss.html).

# 남북한 관계변화에 따른 대주변국 군사협력 방안

## 목 차

- I. 서 론
- II. 군사협력의 필요성
- III.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 IV. 대주변국과의 군사협력 실상
- V. 대주변국과의 군사협력 방안
- VI. 결 론



김종화

(작가, 삼사문학회 회장)

## I. 서 론

서측을 시발로 동쪽 끝단까지 246km의 휴전선은 적어도 강산이 다섯 번씩이나 변할 만큼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쪽의 가슴에 싸늘한 총구를 겨누는 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극한 대치 속에서 치러지는 소모전은 국력낭비에 앞서 불행한 민족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기 어려울 것이다. 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지구촌의 국가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화해와 협력을 향한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조류에 편승해 동북아시아의 주변 환경 역시 냉전기류가 점차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의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에 힘입어 한반도에서도 마침내 평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정상회담 이후 10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온 이산가족 상봉이야말로 남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산가족문제는 남북한의 대립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였다.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상봉이 정례화됨으로써 같은 가족이면서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생사조차 몰랐던 가족들이 마침내 만나게 된 것이다.

10차례의 이산가족상봉을 통해 약 1만명이나 되는 이산가족들이 반세기 동안의 이별의 아픔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었다. 아울러 남북한은 사회문화, 경제분야 협력 등을 통해 정상회담 이전에는 상상조차 힘들었던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정상회담 이전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은 각자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일회성에 그치기도 하고 남북한 합의사항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몇 차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로의 문을 열고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그동안 대결과 반목을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남북한은 분단 역사상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동해안으로는 금강산 유람선이 항해하는 가운데 북한의 잠수정 침투가 이루어지는 현실상황을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02년 6월에 일어났던 서해연평도 교전사건은 한반도가 언제든지 첨예한 긴장의 장으로 변할 수 있음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화해 협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화력과 기동력이 뛰어난 기계화 2개 여단을 전방에 배치하고 실전훈련을 대폭 늘이는 등 전쟁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안보와 화해협력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는 대북정책의 두 기둥이다. 화해협력을 한다고 해서 안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면 화해협력 자체가 명분을 잃게 된다. 안보와 화해를 혼돈하는 위태로운 줄다리기 곡예는 절대로 안 된다. 특히 21세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과 함께 다원적 국제질서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원적 국제질서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대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한·미, 한·일, 한·중, 한·러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해야 할 대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해 보는 것도 의의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전환기적 안보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국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한반도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주변국과의 군사협력 방안을 조심스럽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군사협력의 필요성

지난 2000년 6월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국민들에게 과장된 희망을 안겨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피동적인 대응으로 한반도가 평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함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들에 대한 협력<sup>1)</sup>(Cooperation)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한반도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라는 전통적인 인식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 이들 국가들의 대한반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일종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협력이란 당사국 모두에게 유리한 모종의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사국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조건하에서 공동 노력을 진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남북한과 주변국간의 협력이며, 둘째는 주변국들 간의 협력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우선 평화정착은 남북한 쌍방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협력의 목표 및 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남북한 쌍방이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을 살펴볼 때, 첫 번째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 속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불리한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는 바로 미국 부시행정부의 세계전략변화 및 지역전략 중심의 이동이다.

부시 행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MD<sup>2)</sup>체계의 구축 및 지역전략 중심의 아태

주 1) 협력이란? 행위 참가자들이 상호정책조정 과정을 통하여 공동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지향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협력의 과정에는 “인식공동체이론”과 “국제체제이론”으로 구분하며, 협력의 구분방법에는 “이동식접근”과 “다자적 접근” 방법이 있다.

2) 국가 미사일방어체계라고도 한다. 197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전략방위구상이 지구 규모방위전략인 GPALS로 대체되었는데, 미사일 방어 즉, MD는 이 지구규모방위전략의 하나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전체를 방위하는 전략적 개념이다.

지역으로의 전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국제협력에서 주도적인 강대국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과정이 직면한 난국이며 난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 문제가 잘못 처리된다면 한반도 평화과정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던 여타의 주변국들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정착은 지연 또는 중단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내지는 평화통일은 또 한번 미국의 전략변화로 인하여 강대국 간의 정치적 충돌의 희생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출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반도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정착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부환경요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미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천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관건은 내부 남북 쌍방간의 상호 이해 및 양해를 통한 성의 있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외부 여건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국제협력은 결국 남북한 협력의 기초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 쌍방은 상호이해와 존중을 통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반도 주요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불리한 환경하에서의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우호 친선 및 선린관계 내지는 혈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하여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이 동북아 안정과 이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여타 주변국들과 연계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지속적으로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시에 세계 여러 국가 및 국제조직들과 외교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들 국가의 지지 및 지원은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압력이 될 것이다.<sup>3)</sup> 따라서 이러한 국가간의 적극적이고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된다면, 국가간의 군사협력도 보다 쉽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주 3) 한국국방연구원, “남북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안보”(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1), pp.1~2.



### Ⅲ.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새로운 밀레니엄시대 동북아 질서의 모습은 “신냉전적 양극체제”, “고전적 세력균형체제”, “강대국 협력체제” 중의 하나가 될 공산이 크다. 신냉전적 양극체제는 미·중 관계 및 일·중관계가 악화되거나 미·일관계가 공고화되는 반면 중·러의 전략적 밀착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새로운 냉전이 형성되는 경우이다.

고전적 세력균형체제는 4개국(미·일·중·러)간 두드러진 밀착관계 없이 힘의 배분과 전략적 필요에 따라 신축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강대국협조체제는 4개국이 지역 내 갈등방지와 현상유지에 합의함으로써 19세기 초 유럽협조회의와 유사한 동북아 협력체제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사실 미·일 신안보협력 이후 이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중·러간 전략적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MD 구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신냉전적 질서가 공고화될 가능성은 낮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적 우위에 도전할 만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적 이슈를 중심으로 미·중, 미·러간 양자관계가 유지됨으로써 갈등양상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동북아 질서가 고전적 세력 균형체제의 양상을 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다자안보기구의 전통부재,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상이, 관련 국가들의 국력차이, 양자관계에 치중하는 관련 국가들의 입장, 역사적 피해의식과 상대 국가에 대한 불신 등이 다자안보협력체제 형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협력은 유럽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F<sup>4)</sup>, 6자회담, 한·미·일간 3자조정감독그룹 등 사안별로 다자협력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보면 동북아 질서는 갈등적 대립구조 양상을 띠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안별로 다자협력체제가 가동되는 과도적 양상을 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에서 갈등적 구조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신냉전체제와 같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주 4) ARF(Asia Research Fund) 동북아시아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련국가 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에 관한 학술연구 및 학술교류를 지원하는 재단법인.

상태로 전개될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슈별 다자협조체제가 가동되지만 상당한 기간동안 유럽에서와 같이 제도화된 형태의 다자협력체제가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미·북 및 북·IAEA협상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금지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촉진시켰다.

둘째, 1991년 한·소 수교 및 한·중 수교에 의해서 냉전체제의 한 축이 무너진 이후, 북·미 관계개선과 북·일 수교교섭이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4개국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 교차협력은 남북한 평화공존체제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 교차협력으로 인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4개국의 역학관계는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는 국제적 변수로 작용함은 물론, 남북한이 한반도 현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셋째, 주변 4강은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려 할 것이다. 주변 4강의 대한반도 균형정책은 반드시 산술적으로 남북에 대한 균형자적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 관계가 차지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대등한 관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점진적으로 대북관계의 폭과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투명성 제고에 입각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미 협상의 진척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북 수교협상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북 및 일·북 관계 개선에 따른 영향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북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도 정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6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과 “조·러 친선선린협조조약”<sup>5)</sup>을 체결한 이후 대북한 영향력

주 5) “북·러 친선선린협조조약”은 2000년 2월 9일 북·러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①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② 침략과 전쟁반대, ③ 중요한 문제 정기적 협의, ④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지지, ⑤ 쌍무협조발전, ⑥ 의회, 정부, 사회단체간 관계심화, ⑦ 다양한 수준, 다방면접촉 활성화, ⑧ 테러·마약반대, ⑨ 투자촉진을 위한 별도조약체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군사적 동맹관계에서 일반적 협력관계로 변화시켰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 조약을 근거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잃어버린 역할회복”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6자회담의 제의 등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경제면에서 남한과의 정치, 경제적 유대관계도 증진시키고자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국가간의 정상외교가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여 정상회담 및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경제발전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과 남북한 장관급회담, 그리고 북·일간의 회담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추이에 대해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IV. 대주변국과의 군사협력 실상

군대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를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구촌의 안보환경이 변화되면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자국의 힘만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자간안보협력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역내 국가들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하여 여타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1. 한·미 군사협력실태

한·미 양국은 1882년 5월 “조·미 평화수호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의 체결로 첫 공식적인 관계를 시작하였으나, 1905년 일본의 강요로 을사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이 외교권을 상실하여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일본의 무장해체를 목적으로 38선 이남지역에 진주하면서 한·미 관계는 재개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UN의 결의에 따라 미군이 참전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혈맹의 관계”가 되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동맹관계”로 발전하였다.

한·미 군사협력체제의 법적근거는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1966년에 체결된 “한·미 주둔지 지위협정(SOFA)”<sup>6)</sup>이다. 또한 196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해

주 6) 주둔군 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되었으며, 이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와 시설의 제공과 반환,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노무 출입국관리, 통관과 관세 등 여러 분야에서 이들에게 일정한 특권과 면세를 부여하는 한편, 우리나라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고 있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up>7)</sup>와 1978년에 창설된 “한·미 연합군사령부(CFC : Combined Forces Command)” 그리고 1991년 체결된 “전시지원협정(WHNS)”<sup>8)</sup> 등은 한·미 안보협력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세계적인 냉전종식, 미국의 국방비축, 해외주둔 미군철수 거론 등 안보환경이 새롭게 변함에 따라 양국은 주한미군 규모를 일부 감축하고, 한·미 야전사를 해체시켰다. 아울러 평시 정전위원회 수석대표와 한·미 연합사의 지상구성군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하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등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꾸준히 지향해 왔다.

## 2. 한·일 군사협력실태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어업협정(1965. 6. 22), 무역협정(1966. 3. 24), 대륙붕협정(1978. 6. 22) 등을 통하여 제한적인 협력을 해오다가 1983년 1월에 “나카소네” 일본수상의 방한시 40억불 경제협력 차관문제가 해결되어 정치로부터 경제협력 차원으로 이전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군사적인 노력 덕분에 일정부분에 대해 혜택을 입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들만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도 해상수송로의 확보, 3해협의 보호, 주일미군기지 제공 등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구가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양국은 서울과 동경에서 교대로 연 1~2회씩 정보교환을 해 오고 있다. 주요의제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정보 및 위협평가와 전망 등이다. 그러나 타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 7)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는 1968년 1·21사태 및 1월 23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이후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안보회의”를 연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의의 주요 기능은 한·미 양국간의 주요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고 “한·미 군사위원회”에 전략 지침을 하달하는데 있다.

8) 전시지원협정(WHNS : Wartime Host Nation Support)은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의 도착, 이동 및 전투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협정으로서 1991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전투병력 위주의 증원군을 신속히 전개 배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미 증원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사 교류면에서는 통합막료장을 비롯한 일본 자위대 간부 및 군 관계 교수들이 1968년 이후 상호방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양국의 국회의원들도 매년 1회씩 동경과 서울을 오가면서 간담회를 실시해 오다가 1977년부터는 양국의 국방관계의원들이 별도의 모임을 갖고 주변정세와 양국의 안보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일본 측은 이 모임에서 육사생도와 육군대학 학생들의 상호 교환교육을 제의하였다.

현재 육사생도의 교환방문과 더불어 육군대학생 교환교육은 1991년부터 일본자위대 간부가 육군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교리교환, 군 간부 교환방문, 국방대학원교수 교환방문, 해사생도 원양훈련 등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군사협력문제에 있어서는 기지사용을 제외한 주요기술, 장비개조, 자재 및 부품, 수리부속(제한된 품목) 및 기술교환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sup>9)</sup>

해군 훈련은 미·일·캐나다·호주·영국 등이 참가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RIMPAC<sup>10)</sup> 훈련에 해군함정 2척이 1990년 3월 최초로 참가하였다. 이는 비록 미국을 주축으로 5개국이 참가하는 훈련이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참가한 최초의 훈련이자 군사협력을 위한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4년 우리 국방장관이 최초로 일본을 방문한 이후 상호 방문형식으로 매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왔으며 군지도급 인사의 상호방문과 해사생도 순항훈련 함정의 교환방문, 우리나라 육·해군대학과 일본 방위연구소 및 간부학교간 교환교육 등 점진적으로 군사교류를 확대해 오고 있다.<sup>11)</sup>

또한 양국은 군용기 우발사고방지를 위한 합의서환을 교환하고 안보토의와 학술회의 참가 등 군사적 신뢰관계를 증진시켜왔다. 1994년 이후 양국군은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군사분야 교류현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분야에서의 교류 협력도 점차 탄력을 얻고 있다. 먼저 우리의 대북화해 협력정책에 대한 공조를 위해 양국의 외무, 국방당국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안보정책협의회를 1998년부터 연례행사로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양국의 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하는 한편, 1999년에는 합참과 통막부간 부장급회의, 해군·해상자위대간의 회의를 실시하는 등 군사적 대화 채널이 다양화되었다. 동년 8월에는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순수 평화적 목적의 “한·일 해양공동수색 구조훈련”을 실시해 군사적 교류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킨 바 있다.

주 9) 민태식,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연구”(서울: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10) 환태평양훈련(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은 2년 단위로 태평양에서 5개국 해군이 참가하여 전개하는 훈련이다.

11) 안창남, “한·일 군사협력방안”(서울: 국방참모대학, 1992) pp.38~41.



### 3. 한·중 군사협력실태

한·중 양국은 그동안 적대국으로서 상호 견제의 대상으로 군사교류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지난 1992년 8월 24일 역사적인 한·중 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은 “항구적인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에 새 지평을 열었다.

또한 동년 9월 30일에는 한·중 정상회담 공동발표를 통하여 양국은 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관계진전에 의해 양국은 냉전시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양국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아·태 질서의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1993년 주중 무관부 설치와 1994년 주한 중국 무관부 개설을 계기로 양국간 군사관계 증진을 점진적으로 모색해 왔다. 1992년부터 양국의 군인체육선수단 상호방문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1995년도부터는 고위급정책 실무자간 상호방문을 실시해 왔다.

특히 1998년 8월, 우리 국방장관의 최초 중국방문과 2000년 1월 중국국방부장의 최초 방한은 양국 군사교류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두 차례에 걸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우리 측은 우리의 대북화해 협력정책에 대한 중국 군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했고, 중국 측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약속했다. 또한 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유지 등에서 전략적 공동이해를 갖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군사교류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중국의 국방대학 학생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며, 2001년 6월에는 우리 국방부의 초청으로 중국 국방대학 부교장인 천짱유엔 소장을 단장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육·해·공군의 주요 엘리트들로 구성된 40여명의 대표단이 방문하였다. 이들은 방한기간 중 국방부와 계룡대를 비롯하여 국방대학교와 군부대를 방문하였다. 특히 2001년 10월 26일 해군순항훈련분대의 해사 56기 생도들이 한국 해군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동해함대 상하이 기지 군항에 입항하여 교류의 폭을 증진하였다.<sup>12)</sup> 이와 같은 중국과의 활발한 군사교류의 확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4. 한·러 군사협력실태

한·러간의 군사협력은 1990년 12월 노태우 전대통령이 모스크바 방문시 해군참모총장

주 12) 국방일보, “해사 56기 순항훈련분대를 따라”, 2001. 11. 3. 3면.

이 공식 수행함으로써 물꼬를 트기 시작했으나 실질적인 군사협력은 이듬해 양국군간 무관부가 개설되면서 본격적인 군사협력이 시작되었다. 1992년 5월에는 CIS 제1참모차장의 우리나라 방문에 이어 7월에는 합참 제1차장이 군수협력 협의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1994년도에는 우리나라 국방차관이 러시아 방문시 1994~1995년 군사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군사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년 6월에는 양국외무장관 “공해상 해상사고 방지협정”이 서명됨으로써 한·러 양국 해군간 직접적인 대화채널이 마련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한하였고, 1996년 11월에는 양국 국방장관간 “군수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1997년 11월에는 이정린 국방차관의 러시아 방문시 “군수방산기술협력”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양국군간 교류 협력 및 방산협력에 대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실무급에서도 다양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3년 이후 우리 해군 함정과 러시아함정이 수 차례에 걸쳐 상호방문을 실시함으로써 양국 해군간의 우의와 이해를 증진하였다. 또한 1996년 최초로 개최된 서울 에어쇼에는 러시아 신예 항공기가 참가함으로써 러시아 항공기의 우수성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군사교육분야에 있어서는 1994년 10월 육·해·공군의 한국군 장교 8명이 러시아 군사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이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대학 학위과정에서도 다양한 전공과목의 석·박사과정에 한국의 학생장교들이 수학 중에 있다.

1998년 5월에 체결된 친선군사사절단 상호방문 양해각서에 의해 1999년부터 매년 한·러 양국의 장교들이 상호방문을 통하여 이해증진과 함께 우호를 다져 나가고 있다.<sup>13)</sup> 또한 1999년 서울과 2000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은 우리의 대북화해 협력정책에 대한 러시아군부의 지지를 당부했고, 러시아 측은 우리의 남북정상 회담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2001년 7월 5일 제1차 한·러 본부장급 회의가 합참 전략본부장과 러시아 총참모부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참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은 자국의 국방정책을 소개하고 한반도 정세를 평가한 뒤,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외에도 한·러 양국간의 군사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한 바 있다. 특히 우리 군은 차관자금 일부 상환과 연계해 1990년대 중반에 러시아제 무기를 일부 도입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전력증강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군사적 신뢰증진 및 경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러시아 방위산업 관련 협력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주 13) 유영철 외, “제2차 한·러 국방학술회의”(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0) pp.153~155.

## V. 대주변국과의 군사협력 방안

한 국가의 지위는 그 국가의 국력의 상대적인 강약에 의해서 결정되며, 국력의 직접적인 형태가 군사력이므로 군사력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군사력의 건설에는 경제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도 감안해야 한다. 즉 직접적인 군사력의 증강은 주변국가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군사력의 건설보다는 타 국가의 군사력의 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군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국의 안보 목표 달성에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간의 군사협력 관계는 외부 군사적 위협과 국제체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국내적인 안정 등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14)</sup>

### 1. 대미국 군사협력 방안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는 지금보다 더 고도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양국의 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위상이 더욱 증진되는 가운데 양국간의 군사협력이 수평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의 변화와 중·러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한·미 군사관계의 핵심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와 방위비 분담문제, 방위산업 및 군사기술 협력문제, 연합지휘체제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sup>15)</sup> 첫째, 부시정부 등장과 함께 대두되었던 주한미군 감축문제는 언젠가는 겪어야 할 필연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감축문제는 한반도 주변여건과 미국의 국내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우리가 주한미군의 감축문제를 검토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정치·경제·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도 방위비 분담문제, 주한미군의 역할변동 문제, 작전권이동 문제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해·공군은 가급적 현상유지함으로써 실질 억지전력의 저하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한국방위의 주된

주 14) 최영찬,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관계 : 특징과 유형”(서울 : 국방대학원, 1997), p.71.

15) 오관치 외, “한·미 군사협력 관계의 발전과 전망”(서울 : 세경사, 1993), pp.13~179.

책임은 우리 군에게 맡기고 주한미군은 보조적인 역할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6)</sup>

둘째, 방위비 분담정책이다. 방위비 분담정책의 기본원칙은 방위비분담을 가급적 줄여 미국의 안보지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과 방위비 분담문제로 인하여 미군주둔과 관련된 사항이나 한·미 안보협력사의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내에 이를 전담하는 실무 및 조사부서를 마련하여 각종자료의 조사 및 수집과 적정 목표비율의 산정, 그와 관련된 문제들의 분석과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sup>17)</sup>

셋째, 방위산업 및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정책이다. 방위산업 및 군사과학기술 협력은 우방국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무기체계 표준화 및 상호호환성 증대를 통한 국방예산 절감과 연합작전의 효율화를 위하여 향후 우방국간에 가장 활발한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한·미간의 방위산업 및 군사기술협력은 미국 무기체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내실화하고 제한된 국내수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한·미간에 체결된 DTIC<sup>18)</sup> 협정을 기반으로 하여 NATO나 이스라엘 수준의 방산 협력으로 차원을 높여야 한다.

또한 양국간 공동연구 개발은 현실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한·미 양국간 구체적인 공동연구 개발 수행절차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장비 위주의 개발보다는 구성품이나 부품개발에 미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사업을 실용성 및 경제성 위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동생산은 미국정부가 사업추진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술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미·일간의 공동생산시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관련기술자를 스카우트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빼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 없이도 업체 대 업체 계약에 의거 우리의 방위업체가 주 계약업체가 되어 미국의 관련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사업형태이므로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협력형태로써 가급적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호조달 문제는 우리의 방산 및 조달시장 개방문제와 직결되므로, 우리의 방위업체가 공동생산, 자체 개발 등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주 16) 오관치 외, 앞의 책, pp.179~181.

17) 오관치 외, 위의 책, pp.179~181.

18) DTIC(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operation) 방위산업 및 기술협력.

협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sup>19)</sup>

넷째, 한·미 연합체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작전통제권의 환수여부에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동맹체제에 있어서 작전지휘의 독자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연합작전 능력은 저하된다.

작전지휘에 있어서의 독자성이 제한된다는 것은 곧 동맹국의 군사력이 전·평시 통합지휘체제하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지휘체제는 동맹국간에 협조의 필요성을 제거하므로 긴급한 전쟁상황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더욱이 침략위협이 강하고 기습가능성이 높을 때 통합지휘체제의 유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우리의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우리의 독자적인 국방노력과 능력함양을 지연시켰다는 측면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보다 빨리 해체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 왔더라면, 현재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의 확보는 보다 많은 국방비 지출과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므로 강력한 군사력과 독자적인 방위체제 구축은 보다 낮은 경제성장, 보다 낮은 생활수준, 보다 많은 동원훈련 등 국민부담의 증가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독자적인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제기하는 정치적 비용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국익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sup>20)</sup>

다섯째, 군사작전 및 교리의 공동연구와 연합군사훈련의 지속적인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장차전은 연합작전체제하에서 작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평시부터 군사작전 및 교리공동연구를 통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연합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휴전 이후 과거 50여 년 동안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해 온 동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근간으로 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력증대에 따른 방위분담능력의 향상에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안보공약은 변함이 없으나,

주 19) 오관치 외, 앞의 책, pp.187~194.

20) 오관치 외, 위의 책, pp.195~2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국들이 자국의 경제력 증대에 상응하는 방위분담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비용분담의 증가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수십억 달러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또 유사시에는 자국 군인의 생명을 희생시킬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우리나라에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미국이 한국이라는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아마도 미국의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미국과 같은 가치를 신봉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들의 이상을 피 흘려 쟁취한 상징으로서의 한국이 지닌 가치 때문일 것이다. 물론 여기에 곁들여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우리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 결코 미국의 사활에 관계될 만큼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으로 발생하는 방어력 약화는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군의 전력증강은 막대한 국가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며, 가용한 국가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국방소요가 증대된다면 희생을 감수할 부문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투자 와 주택건설 등 국민복지 부문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천년대는 우리에게는 도전과 함께 기회도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우리도 적절한 수준의 방위 분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익을 증진시키며, 보다 좋은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호혜적인 한·미 군사협력관계의 발전은 최선의 국가 대전략이 아닌가 싶다.<sup>21)</sup>

## 2. 대일본 군사협력 방안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동북아 안보상황은 국가들마다 국가 이기주의적 성향의 증대, 주변 강대국들간의 지역내 패권경쟁과 영토분쟁, 한반도에서의 남북한간 상호경쟁으로 인한 국력의 소모, 한국내 각 정당의 안보관의 차이로 인하여 군사안보 현상의 악화 등은 구한말의 한반도 상황을 방불케 한다.

한반도는 일본의 대륙팽창을 위한 전진기지나 대륙세력의 일본침략을 한반도에서 저지시켜주는 완충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 21) 오관치 외, 앞의 책, pp.219~221.

남방진출의 후방지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 더구나 한반도가 지역국가들의 패권전쟁을 위해 전장화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일본의 대한반도 군사안보정책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일군사안보정책을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정부나 국민이 일본을 대하는 감정을 반목보다는 국익적 시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국민 일부에 대한 감정은 냉소적 또는 비우호적인 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의 군비증강이나 자위대 해외파병 등에 대하여 우려와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주변국들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그들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군사력 증강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로서는 일본의 현재 행동성향을 보다 진지하고 정확하게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일본이 의도하는 목적과 행동방향을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한반도에 일방적 영향권을 확대시키려는 일본의 군사적 대외팽창정책을 봉쇄시켜야 한다. 반면에 한·일간에 대등한 여건하에서 상호주권을 존중하면서 공존공생할 수 있는 공동의 군사안보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찾아야 한다.<sup>22)</sup>

한·일 군사안보관계는 미·일 군사동맹과 한·미 군사동맹의 틀 속에서 한·일 간에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관계는 한·일간의 선린우호협력관계와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미·일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력을 명분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력의 직접적인 한반도 문제 개입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군사력의 한반도 출병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환경에서 통일전이나 통일 후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일 군사협력의 대상분야와 범위를 설정하여 일관성 있는 중·장기 대일 군사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수준은 지나치지 않은 적절한 수준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출병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군사협력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미·일 안보관계에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일본군의 역할과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일의 군사협력관계에서 한반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한·일간에 군사협력의 대상과 분야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6·25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미군에게 지원하였던 군사협력 수준과 둘째로,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 22) 국방대학원, 앞의 책, p.105.

한·미 동맹을 축으로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여 작성한 시나리오에 의한 주한 일본인의 안전구조를 명분으로 한, 일본자위대의 한국 영토내에서 직접적인 군사활동의 허용은 절대로 안 된다. 다만, 한반도에서 일본의 자위활동은 관·민에 의한 비군사적인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sup>23)</sup>

일본의 과거 한국에 대한 조선 경시론과 정한론은 일본의 한국식민통치의 미화와 생명론선으로 명칭만 바꾸었다. 한반도를 일본의 이익선으로 설정했던 개념은 부산적기론과 한반도 안마당론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력 건설과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청·일, 노·일 전쟁시에 전장터가 되었던 한반도가 지금은 미·일 합동군사훈련시 공지전투 연습의 대상지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우리의 대일 정책방향은 반목보다는 국익적인 시각에서 보다 발전적인 군사협력관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전까지 우리의 입장은 북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일과 공조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일 및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와 같은 한·미·일의 안보협력관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여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략환경하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측면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간 안보군사협력관계는 간접적이고 지극히 명분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관계가 이루어졌으며, 한·일간의 직접적인 군사교류는 지난 30여 년간 인적교류, 함정상호방문, 제한적인 대화채널 등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취약한 전략환경을 고려한다면 한·일 관계는 양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보다 실질적인 군사협력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패권전략을 봉쇄하면서, 군사협력은 대등한 여건하에서 상호간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존공영할 수 있는 군사안보의 대상과 범위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 군사협력은 한·일간의 직접적인 군사협력관계보다는 한·미 동맹관계를 축으로 하여 유사시 일본의 역할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한·일간 군사협력 관계의 증진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관계 악화로 발전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망된다.<sup>24)</sup>

주 23) 국방대학원, 앞의 책, pp.106~107.

24) 국방대학원, 위의 책, pp.110~111.

### 3. 대중국 군사협력 방안

한·중 양국은 상호신뢰 구축 및 이해증진을 위하여 우선 군인사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러 국방장관 양해각서와 같은 한·중 국방부문 관계발전을 위한 군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질적인 군사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사적 신뢰구축의 중요한 조처를 내용으로 하는 군 인사 교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은 한·중 양국의 협력이 장차 안보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먼저 학술분야에서는 우리의 국방대학교 국방연구원, 3군사관학교와 중국의 국방대학, 사회과학원, 군사과학원, 북경 국제전략학회의, 손자연구소 등과 정기적인 교환방문을 실시하고 연구원 상호교환 파견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문화분야에서는 양국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서화, 예술단, 공예, 도자기 전시회 등을 교환 개최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류는 관련협정을 정례화, 체계화시킴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양국 사관생도들의 위탁교육, 중국군 내의 조선족 출신 인사 및 지한파 인사들의 방한초청, 양국의 해군기지 상호방문 해군사관학교 순항분대의 교환방문 및 군사 퍼레이드 실시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다자안보포럼이나 중국과의 쌍무적 안보대화를 시발점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교류가 활발하게 실시되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원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오관하지 않도록 중국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처럼 국제화시대에서 생존과 번영의 관건이 여기에 있음을 북한에 설득할 수 있는 세력으로 중국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과학 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양국의 국방과학 기술분야는 경쟁적인 것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즉, 중국은 기초과학, 항공, 우주 및 원자력 기술면에서, 우리는 전자 및 통신, 자본과 설비면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적절히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 우리의 안보환경하에서 통일전후에 한반도의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중국 군사협력의 대상분야와 범위를 설정하여 일관성 있는 군사안보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 25) 국방대학원,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한반도 군사협력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93-6」, 1993, pp.47~49.

또한 우리는 중국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선진국들이 이전을 기피하는 군사분야 첨단 과학기술을 획득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경제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이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개혁 및 개방에 실패한다면 체제붕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핵을 포기하고서도 체제의 생존과 개혁개방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포함한 상호간의 사고대처 및 분쟁조정 등 쌍무적인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간의 국익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26)</sup>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군은 분명한 목적과 이에 부합되는 군사협력의 수준과 방위를 확실히 설정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군사협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여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협력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구걸행위나 저자세를 취하여 실리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중국과의 협력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융통성 있는 전략을 구사하여 한국의 국가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이 개입된 쌍무적인 군사협력은 국력의 격차로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보포럼 등 다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하여 이러한 예상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sup>27)</sup>

#### 4. 대러시아 군사협력 방안

동북아 및 아·태지역 안보구도상의 주요동인으로서, 또한 한반도 통일시 국경을 맞대게 될 인접국으로서 한·러 양국이 한 단계 더 발전된 우호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협력방안들이 바람직할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먼저 양국간 군사교류 형태를 다양화하는 일이다. 이미 추진되어온 양국군 고위직 인사 상호방문 및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양국 군 지휘부 내에 상대국을 더 잘 알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일이야말로 양국 군사관계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 26) 김암산 외, 중국의 전략전망과 한·중군사협력방안(서울:한국 국방연구원,1993), pp.179~189.

27) 국방대학원, 「연구보고서 93-6」, 앞의 책, p.52.



가져 올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양국 국방부 및 각 군, 그 외 관련기관의 실무진들간의 접촉을 늘여가면서 의료계와 문화 및 홍보분야를 망라하는 다양한 실무요원들의 상호접촉, 그리고 군 합창단들이나 오케스트라의 연주 방문의 교환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미 시작된 우리 해군과 러시아 태평양함대 함정교류를 2~3년에 한 번씩 정례화하는 방안도 있다. 특히 함정의 교환방문은 양국군간 상호 이해의 증진과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례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항공기의 방문 교류문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 해군참모총장인 「꾸루에도프」 제독이 방한하여 제시한 러시아 극동함대와 우리 해군간의 합동훈련은 양국 해군간 협력 채널로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 해군은 태평양함대와의 직접적인 대화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러시아의 선진 해군 전략·전술도 습득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의 군사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 활성화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국방연구원과 러시아연방 군사연구원간에 정례적인 군사교류가 실행되고 있으나 군사·안보부문을 뛰어넘는 보다 광범위한 군사분야에서의 연구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국이 개발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 평가모델을 소개하거나 공동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군사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협력은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뿐만 아니라 양국의 전력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장기적인 양국 군사협력 증진을 위해 군사교육 교류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양국간 교류기회를 상대국에 대한 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지속적인 양성에 활용함으로써 21세기 양국간 협력증진에 대비하는 방안이다. 우리 측은 러시아의 군사교육기관 이외에도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 중·단기 연수생을 파견함으로써 교류기회를 다각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많은 학생장교들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교육을 받아오고 있으나 러시아 측에서는 학생장교들을 파견한 적이 없다.

이는 한·러 양국의 군사교육 교류가 상호 호혜적인 토대 위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러시아 군내에서 한국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 대외 군사협력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방산·군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소련에 제공했던 경험차관 상환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방산 기술분야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방산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는 서방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그들이 이전을 기피하는 기술획득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차관상환 문제를 자국 국방예산과 연계시켜 기술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차관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러 군사협력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2차 차관상환 관련 방산물자 도입협상에 앞서 한·러 양국은 상환방식의 전환, 즉 기술협력에 중점을 둔 방식의 채택에 대한 타당성을 공동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 측은 경협차관 상환과 연관된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미 군사협력을 최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한국과의 방산협력 증진에서 오는 국가이익을 위해서나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군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한·러 양국 군에게는 위기관리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한·러 해상사고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양국간에는 이미 공해상의 위기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협력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자국의 영해·영공에 있어서의 상대국의 항공기 및 선박활동에 대한 안전보장, 해상운송로와 항공교통망의 안전관리, 우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통신망을 포함한 포괄적 협조체제의 구축, 또한 국제사회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는 국제테러에 대한 공동대비책의 모색 등은 21세기 신안보시대를 살아가는 한·러 양국의 공동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식대화 채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러 군사협력 협의회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군사교류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양국 고위장성들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번갈아 개최함으로써 한·러 간 군사안보 현안이나 주변 안보환경동향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설회의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그동안 양국 군사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대화채널이 미흡한 실정이다. 수교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국방장관급 회담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례화나 제도화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한은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따라 한·러 양국의 군사협력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주 28) 유영철 외, 앞의 책, pp.161~164.

양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더라도 한국과 러시아는 민족적 갈등이나 영토분쟁을 겪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더라도 양국의 경쟁적인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고, 상호보완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이 동북아에서 향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한반도 통일과 함께 국경을 맞대게 될 인접국으로서 공동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사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양국간의 군사협력을 위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현안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군사관계는 상호보완적이며 장기적으로 매우 희망적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안보환경의 개선에 참여하여 러시아가 아·태지역으로서의 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경제개혁 등 내부분제를 해결함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활발한 방산협력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능성은 기존의 한·러 군사관계보다 한층 더 긴밀한 관계를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 양국군이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sup>29)</sup>

## VI. 결 론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한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으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일·중·러 등 4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의 화해·협력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등 정책적 공감대를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주변국과의 군사외교를 강화해 안보 및 군사분야에서 정책적 공조와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우리 군사외교의 기본방향은 한·미 동맹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교류와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있다.

첫째, 미국과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1966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을 통하여 양국의 안보협력체제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68년부터 연례적

주 29) 유영철 외, 앞의 책, pp.164~166.

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한·미 안보협의”와 1978년에 창설된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1991년 체결된 “전시지원협정” 등은 한·미 안보협력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근간을 바탕으로 양국은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가운데 연합역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앞으로도 세계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안보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새롭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과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오고 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우리의 대북 화해 협력정책에 대한 공조를 위해 양국의 의무, 국방당국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안보정책협의회”를 1998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1999년에는 합참·통막부간 부장급회의, 해군·해상자위대간의 회의를 실시하는 등 군사적 대화채널이 다양화되었다.

특히, 1999년 8월에는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순수한 평화적 목적하에 실시된 한·일 해상공동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해 군사적 교류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킨 바 있다. 이러한 일본과의 군사교류 협력의 증진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의 과거사 인식문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양국의 군사교류 협력의 장애로 작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일간의 군사교류 협력은 우리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과는 1992년 8월 수교 이래 비교적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북·중 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군사분야의 교류는 국민의 정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98년 8월 우리 국방부장관의 최초 중국방문과 2000년 1월 중국 국방부장의 최초 방한은 양국 군사교류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수 차례에 걸친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우리 측은 우리의 대북 화해 협력정책에 대한 중국 군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했고, 중국 측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약속했다.

또한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유지 등에서 전략적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군사교류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군사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남북화해 협력에도 중요하다. 우리 군은 중국과 군 지도급인사 교환방문, 군 체육교류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합정상호방문, 평화적 목적의 공동수색, 구조훈련 등 협력분야를 다양화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러시아와의 군사관계는 1990년 국교수립 및 1991년 무관부 개설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한·러 군사협력관계는 1998년 이전까지가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는 군사교류 협력과 신뢰 구축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먼저 1999년 서울과 2000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은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러시아 군부의 지지를 당부했고, 러시아 측은 우리의 남북정상 회담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차관자금 일부 상환과 연계해 1990년대 중반에 러시아제 무기를 일부 도입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전력증강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군사적 신뢰증진 및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체는 남북한 당사자이다. 그러나 주변 4개국 또한 한반도 문제가 자국의 안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주변국들과 군사분야 교류 협력을 통하여 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대북정책 관련 공감대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책에도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은 우리의 군사적 역량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국과는 동맹관계강화, 일본과는 대북정책 관련정책 공조노력 지속, 중국·러시아와는 군사적 신뢰를 더욱 심화시키는데 군사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미·북 관계와 일·북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최종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중이 보장하고 러·일이 협조하는 국제협력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지면부족으로 인하여 대주변국 상호간의 이해관계 분석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폭넓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군이 여타 국가와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고도의 협력기술을 부여하기 위하여 군사협력 전문가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압산 외. 「중국의 전략전망과 한중군사협력방안」. 한국국방연구원, 1993.
2. 김창수 외. 「미·북 관계변화가 한·미 군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방연구원, 2000.
3. 국방부.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00.
4. 국방대학원. “일본의 신안보전략과 한·일 군사협력방안”, 「정책연구보고서」 통권 제259호. 국방대학원, 1996.
5.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한반도. 「연구보고서, 93-6」. 국방대학원. 1993.
6. 국방일보. “해사 56기 순항훈련분대를 따라”. 국방일보, 2001.
7. 민태식.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5.
8. 백종천. “한·미 군사협력”. 세종연구소, 1998.
9. 안창남. 「한·일 군사협력방안」. 국방참모대학, 1992.
10. 엄영수.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발전과 전망」. 국방대학원, 1992.
11. 오관치 외. 「한·미 군사협력관계의 발전과 전망」. 세경사, 1990.
12. 유영철 외. 「제2차 한·러 학술회의」. 한국국방연구원, 2000.
13. 최영찬. 「한·미·일 3각 군사협력관계(특징과 유형)」. 국방대학원, 1997.
14. 한국국방연구원. 「남북관계전환기의 한반도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2001.
15. 홍봉기. 「미·북 관계변화와 한·미 군사협력의 신구상」. 국방대학원, 1997.

# 선제공격전략의 이론적 고찰

## - 선제공격의 정당성 및 합법성 중심으로 -

### 목 차

- I. 서 론
- II. 선제공격의 기본개념
- III. 선제공격의 정당성과 합법성 논의
- IV. 결 론



중령 조상제  
(육군대학 군사전략교관)

## I. 서 론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9·11테러 참사 이후 2002년 9월 20일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테러 전쟁은 종전의 전쟁과 다른 것으로서 테러 위협이 미 본토에 도달하기 이전에 파악하여 제거할 것이고, 테러분자들의 위협에 대해서는 선제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며, 그리고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라크(현재는 이라크 제외), 북한, 이란 등 불량국가에 대해서도 필요시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던 것이다.<sup>1)</sup>

주 1)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Washington D.C : GPO, 2002. Sep) 참고 ; 국가안보전략서의 핵심은 테러를 포함한 주요 안보위협을 일차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고(prevent)**, 긴박한 위협을 사전에 포착하거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공격을 감행하고(preempt)**, 그리고 외교·경제·정보·군사 등의 국력수단을 총 동원하여 대테러전을 포함한 전쟁이외의 군사작전에서 **승리하는(prevail)** 등 “3P 전략”으로 압축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3월 16일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도 선제공격전략을 재확인하였던 것이다.<sup>2)</sup> 이 보고서의 의의는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게하기 위해서 선제공격전략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sup>3)</sup>

한편 러시아도 2003년 10월 2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 참석 하에 핵무기의 한정적 사용과 필요시 선제공격을 용인하는 새로운 군사 독트린을 발표하였다.<sup>4)</sup>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책임자가 '선제공격론'을 공론화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을 자아내고 있다.<sup>5)</sup>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최근 일본이 선제공격을 공론화함에 따라 선제공격의 합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한 이래로 국제법적으로 선제공격전략을 선택할 시, 그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법 학자 및 국제재판소 판사들, 국가들 간에 논쟁이 되어 왔다. 미국이 2002년 국가안보전략서에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면서 이를 최초로 적용한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여부가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UN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 및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프랑스 및 독일 까지도 침략전쟁이나 방위전쟁이나 하는 합법성의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합법성 해석의 초점은 유엔헌장 제7장 내용중에서 제2조 4항의 일반적 무력 사용의 금지의 원칙, 제39조의 개별국가가 강제제재 조치를 행사할 경우, 그리고 제51조에 명시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자위권의 발동요건에 대한 제한 등이다.<sup>6)</sup> 유엔헌장 7장의 주요쟁점은 국제법 학자 및 군사전문가, 그리고 각 국가마다 자위권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여 일관된 합치성을 이룬다는 것은 어렵다.

주 2)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 GPO, 2006. March) 참고.

3) 미국의 선제공격 및 핵사용에 관한 명문화한 문서는 '02년 1월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 '04년 5월 국가군사전략(NMS), '05년 3월 국가방위전략(NDS), '06년 3월 국가안보전략서(NSS) 등이다.

4)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ие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На пороге нового этапа развития" (Moscow :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3. Oct.), 역 국가정보원, 러시아의 신 군사전략(서울 : 국가정보원, 2003. 12) 참고.

5)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2006년 7월 10~12일자.

6)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은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현실적 또는 급박한 불법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여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서울 : 합참, 2003), p.329;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명백하고 긴박한 危害에 대해 자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한도 내에서 실력행위를 취하는 합리적인 국가권리를 말한다. 현재의 자위권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自存權(Right of Self-Preservation)과는 달리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특색이 있다. 이장희, "이라크 전후 국제법 과제와 대책", 아사연 학술포럼시리즈 2003-3, p.22.

전쟁의 명분은 전쟁의 정당성 및 합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제공격이 국제법적으로 전쟁의 정당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논자는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선제공격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제공격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자료의 제한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UN헌장에 명시된 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제재조치, 자위권과 관련한 조항들, 과거의 전례, 그리고 오늘날의 국제정세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은 민감한 사안들이나 이라크전을 계기로 공론화되었고,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일본의 선제공격의 논란 등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를 문제 제기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 II. 선제공격의 기본개념

### 1.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의 개념

선제행위는 자주적이며, 능동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결전을 기도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첨단무기체계의 파괴력과 정확도 및 치명도가 극대화됨에 따라, 선제기습공격의 효과가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라는 측면에서 최대의 장점 및 유리한 점이 있다.

선제행위는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예방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attack)은 양국이 모두 전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선제공격의 이점을 이용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먼저 공세를 취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적의 공격이 임박한 확실한 증거를 기초로 시작하는 공격이다.<sup>7)</sup> 다시 말해서 적의 공격이 긴박하다고 위협을 느낄 때<sup>8)</sup>, 자위를 위해서 적이 공격하기 직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선제공격의 직전의 의미는 해석의 다양화로 문제는 있지만, 적의

주 7)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p.237.

8) 적공격의 긴박성 의미는 완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여 상대방 국가의 군사력을 전개/동원, 공격준비명령 하달, 공격의 징후발견 등을 통해서 위협을 인식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재래식 공격은 시기적으로 전략적 선제기습공격, 또는 예방전쟁을 구분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한미 연합사는 CANSR체계를 통해서 북한군의 공격징후목록을 고려하여 북한군의 기습공격 또는 先攻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의 첨단군사과학기술 능력, 특히 상대방보다 정보우위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군의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의 시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 미국만이 판단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공격이 막 시작될 때 또는 적이 공격을 하기 위한 부대이동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거의 동시에 적에 대해 타격을 가하는 행위이다. 히브리 속담에서 “당신을 죽이러 오는 자가 있으니 일어나서 그를 먼저 죽이라”라는 표현이 선제공격의 정신이다. 그래서 선제공격은 예방전쟁처럼 냉철한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최종적인 순간에 응급조치로서 행해진다. 따라서 선제공격의 목적은 임박한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즉각적인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군사력을 사용할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다.<sup>9)</sup>

대표적인 사례로는 3차 중동전을 들 수 있겠다.<sup>10)</sup> 이스라엘은 3면이 적대국인 아랍 4개국(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에 둘러싸여 있고, 전략적 중심이 극히 결여되어 있어 적의 기습 공격에 대처할 효과적인 방어와 반격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며, 국내·외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느껴지면, 선제공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실제,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시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에 대해 자위적 선제공격을 통해 단 6일 만에 이스라엘 영토의 6배를 확장한 전쟁의 기적을 이루었다.<sup>11)</sup>

다음, 豫防戰爭(preventive war) 또는 豫防攻撃(preventive attack)은 전쟁의 발발이 당장 급박한 상황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조만간에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긴장 속에서, 적이 유리한 전략태세 하에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보다 앞서서 개전하는 先攻행위를 말한다.<sup>12)</sup>

즉, 예방전쟁은 하나는 적이 공격할 계획 및 의도를 가지고 있어 지금 공격하지 않는다면 아축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체로 현재는 아축이 적보다 군사력이 유리하다 판단될 때, 적에 대해 먼저 공격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강하므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방전쟁은 양국간의 군사력 균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라가 상대방에 대해 먼저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sup>13)</sup> 따라서 예방전쟁은 전쟁이 궁극적으로는 불가피한 것이기

주 9) Y. Harkavi, “Nuclear War and Nuclear Peace”(Jerusalem : Israel Program for Scientific Translation, 1966), 류재갑 외 1명 역, 핵전쟁과 핵평화(서울 : 국방대학교, 1988), pp.81~82.

10) William V. O'Brien, “The Conduct of Just and Limited”(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81), 국방대학교 역, 전쟁의 정당성과 제한전쟁(서울 : 국방대학교, 1987), pp.50~51.

11) 세부적인 내용은 신재균, 선제공격의 적용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서울 : 국방대학교, 1986), pp.31~47 참고.

12) 합동참모본부, 합동참고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p.284.

13) Y. Harkavi, Nuclear War and Nuclear Peace, p.80.



때문에 전략환경이 아직 유리할 때에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선의 방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관적 태도를 배경으로 한다.<sup>14)</sup>

그 대표적인 사례는 1973년의 이집트의 대이스라엘 공격을 들 수 있겠다. 이집트는 1967년 6일전쟁 때 상실한 시나이 반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개시하였으며, 또한 미소 강대국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당시 이집트는 6일전쟁이후 긴장이 팽배되고 있던 대이스라엘 관계가 조만간 전쟁의 재발로 치달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간 민족주의 측면에서 보복의 기회를 찾아오던 중에, 이집트는 대이스라엘 전력이 어느 정도 대등한 시점인 1973년에 개전을 하게 된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방위태세의 취약점이 최대한 노출된 상태에 있었으며, 이집트는 개전을 통해서 아랍권의 내부결속을 삼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갖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sup>15)</sup>

그러나 이집트의 공격은 긴박한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방위조치로서가 아니라 실지 회복을 위한 전쟁으로 계획되고 수행되었다.<sup>16)</sup>

한편 이스라엘은 아랍의 전면적 패배나 파괴를 열망하지 않았으며, 민감한 골란고원(Golan Height)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영토를 점령하지 않는 등 아랍의 자극을 가급적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목표를 설정하여 자위권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하였다.<sup>17)</sup>

## 2. 예방적 선제공격과 선공의 개념

### 가. 예방적 선제공격의 개념

“예방적 선제공격”이라는 용어가 종종 학술회의 및 군사관련 잡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방대학교 김영호 교수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번역하면서, “세계 테러리즘을 분쇄하고 미국 및 미국의 우방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한다.(strengthen alliances to defeat global terrorism and work to **prevent** attacks against us and our friends), 적들이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들을 대량살상무기로 협박하는 것을 **예방한다**.(prevent

주 14) 위의 책, p.81.

15) 신재균은 이집트의 4차 중동전을 선제기습공격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신재균, 선제기습공격의 적용성 연구, pp.48~62.

16) William V. O'Brien, “The Conduct of Just and Limited”, p.403.

17) William V. O'Brien, “The Conduct of Just and Limited”, p.393.

our enemies **from** threatening us, allies, and our friends,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sup>18)</sup> “우리의 적들에 의한 적대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필요한 경우 선제공격도 불사할 것이다.(To forestall or **prevent** such hostile acts by our adversaries, the United States will, if necessary, act preemptively)”<sup>19)</sup> 등 예방, 방지와 선제공격을 함께 용어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군사전문가도 “예방적 선제공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20)</sup> 이것은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을 합성어라는 의미로 용어의 혼동을 줄 것 같다.

그래서 “예방적 선제공격”이라는 의미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불량국가 및 테러단체가 먼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에, 미국이 필요시 사전 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제공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적”이라는 수식어 또는 접두어를 사용할 필요 없이 “긴박한(Imminent)”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선제공격”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나. 先攻의 개념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attack)은 기습적으로 개시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개시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쟁의 정당한 명분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현행 국제법상으로 볼 때 선제공격은 상대방의 명백한 공격개시행위를 탐지하고 상대방의 공격과 동시 또는 바로 직전에 행하는 自衛的 正當防衛의 대응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개전의 명분은 방위의 정당성에 있는 것이며, 선제공격을 감행했을 때에는 전쟁발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의 先攻을 선제공격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당한 전쟁을 유발시킨 책임이 적에게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아측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아측은 적의 명백한 전쟁도발을 미리 탐지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자위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제공격은 아측에서 감행했을 때에만 정당한 것이며, 적의 침공은 상황에 따라 예방전쟁이거나 불의의 기습공격이 될 것이므로 선제공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先攻이라고만 표현하여도 적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주 18)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Washington D. C. : GPO, Sep. 2002) 김영호 역,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전략 2002년 제8권 4호(서울 : 세종연구소, 2002), p.165.

19) 김영호, 위의 책, p.177.

20) 송화섭,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국방정책연구, 2003년 여름 (서울 : 국방연구원, 2003), pp.116~117.

도발행위의 양태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sup>21)</sup> 그러나 선제공격과 선공의 개념은 각 국가의 주관적 해석과 판단에 따라 시행하므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합참에서는 선제공격 사용에 대한 검토 결과, 교리적으로 “선제공격”의 용어 정의는 적의 공격징후가 확실하고 임박하였을 때 자위권 및 정당방위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격 행위이므로 적절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던 것이다.<sup>22)</sup>

아직까지 우리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한 것처럼 “선제공격”을 명문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선제공격은 상대국가보다 먼저 공격하므로 UN헌장 7장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방한계선의 특성과 이에 따른 국내·외적 요소, 그리고 대통령 지침<sup>23)</sup> 등을 고려시 “선제공격”을 “자위적 공격” 또는 “자위권적 방어조치”로, “선제사격”을 “자위적 사격” 등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선제”를 “자위적” 또는 “자위권적”으로 표현한 것은 국수통수권자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 Ⅲ. 선제공격의 정당성과 합법성 논의

#### 1. 공론화 논쟁과 반응

##### 가. 무력행사의 논쟁

선제공격과 예방전쟁간의 구분은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제 법학자 및 국제정치 학자, 군사전문가들간에 상당히 논쟁되어 왔다. 일부 전문가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제기된 문제는 선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행동의 필요성과 행동의 실행여부에 균형을 맞춘 “예방적 군사작전” 또는 “예방전쟁”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긴박한 위협”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상당한 정보가 전제되기 때문에, 예방전쟁을 위한 결정의 문지방(Threshold)이 선제공격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주 21) 류재갑, 소련·중공·북한의 작전술 발전경향(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0), pp.122~123.

22) 합동참모본부, 합작교 33830-00, 군사용어 사용의 적절성 검토(서울 : 교리훈련부 교리과, 2002. 7) 참고.

23) 연평해전후 대통령은 ①북방한계선(NLL)고수, ②선제사격 금지, ③상대가 선제사격시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 ④전쟁으로의 확전 방지 등 4대 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하였다. 이 지침도 선제에 대한 용어를 피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관점에서 예방전쟁보다 선제공격이 먼저 사용되었기 때문에 공론화에 이르게 된 것이다.<sup>24)</sup>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침략을 받은 자위의 경우와 UN 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sup>25)</sup> 예를 들면 제4차 중동전시 이스라엘의 대응은 이집트의 침략을 받은 자위의 경우이며, 북한이 먼저 침략한 한국전쟁과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은 UN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자위권 차원에서 각각 UN군 및 다국적군이 참가한 경우이다.

선제공격의 타당성과 합법성의 논의는 침략행위에 대한 자위권(the right of self defence)에 관한 문제이다. 무력행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국제법 규정은 UN헌장 7장 내용중에서 제2조 제4항, 제39조 및 제51조 등이다.<sup>26)</sup> UN헌장에 명시한 무력행사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①제2조 4항 ;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threat or use of force)를 삼가야 한다. ②제39조 ;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sup>27)</sup>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권고하거나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sup>28)</sup> ③제51조 ;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if an armed attack occurs) 가능하며, 이는 안보리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수단을 발동할 때까지이다.<sup>29)</sup>

주 24) M. Elaine Bunn, "Preemptive Action : When, How, and to What Effect?", *Strategic Forum, No. 200*(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NDU Press, July 2003), p.3.

25) 김열수,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 : 변화 · 원인 · 전망", *합참 20호*(서울 : 합동참모본부, 2003), pp.29~30.

26) 이충면, "무력행사와 군축에 관한 국제법", *21세기 현대 국제법 질서*(서울 : 박영사, 2001), p.628.

27) 1974년 12월 14일, 제29 UN총회에서 침략의 정의를 채택하였다. 침략은 "타국의 주권, 영토 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의 사용이나 UN헌장과 양립되지 않는 모든 방법에 의한 무력의 사용"이라고 규정하였다.

28) 제41조는 비군사적인 수단(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통신수단 등)에 대한 조치를 언급하였고, 제42조는 제41조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기타의 행동을 포함하여 조치하는 것이다.

29) UN헌장 제51조 : 본 헌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어떠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 자위권의 행사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헌장에 따른 권능과 책임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조항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은 헌장 제2조 제4항은 개별국가의 의무로서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제51조는 개별국가의 권리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먼저 제2조 제4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무력행사인데, 예를 들면 다른 국가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행사, 다른 국가에 의한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의 무력행사,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무력적으로 개입하는 인도적 간섭 등이다.<sup>30)</sup>

둘째,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후 일본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UN헌장 7장 중 제39조, 제41 및 제42에 관한 것이다. 주 쟁점사항은 제41조의 비군사적 수단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42조의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제재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결국 7월 16일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UN헌장 7장 주요 적용이 빠진 권고적 성격만 유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이다.<sup>31)</sup>

마지막으로 제51조의 자위권의 발동요건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로 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

첫째, 무력공격(an armed attack)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 즉 어떠한 종류의 무력행사가 헌장 제51조에서 말하는 무력공격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의 의미, 즉 무력공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격의 우려가 명백하고 위협이 절박한(긴박한) 경우, 바꾸어 말해서 현존하는 위협과 절박한(긴박한) 위협(present danger and imminent threat)이 있는 경우에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무력공격 이외에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법익<sup>32)</sup>의 침해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를 무력공격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위권의 발동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sup>33)</sup>

일반적으로 예비적 자위권이라 함은 두 번째의 경우로서 아직 현실적으로 무력공격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긴박한 무력공격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 발동되는 자위권을 의미

주 30) 이충면, 앞의 책, pp.634~636.

31)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2006. 7. 17일자.

32) 법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상의 이익 및 가치를 말한다. 민중서림,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서울: 민중서림, 1996), pp.971~972.

33) 김영원, “자위권에 관한 유엔헌장 제51조와 예비적 자위권 문제”, 21세기 현대 국제법 질서(서울: 박영사, 2001), p.680.



한다. 세 번째의 무력공격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법의 침해행위(간접침략<sup>34)</sup> 등)는 무력 공격의 위협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를 예비적 자위권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sup>35)</sup>

**나.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 논의**

**1) 국제법, 국가관행 및 국제관계의 상호관계**

**〈도표 1〉 국제법, 국가관행 및 국제관계의 상호관계**

국 제 법				국가관행		국제관계
불법행위	전·평시 관련한 자위권 차원의 규범	무력공격(권리법)	⇔	부인행위	⇔	전후단계
		군사력 위협/사용(의무법)		묵인행위		냉전단계
합법행위	다른 규범	UN헌장	⇔	승인행위	⇔	탈냉전단계

출처 : 이충면, 힘의 관리시스템 :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체계, pp.641~647에서 발췌하여 재정리

국제사회에서 주요 행위자는 주권국가인데, 일부 국가들은 관행이나 행동을 이용하여 무력행사와 관련한 UN헌장 제2조 제4항, 제39조 및 제51조에 명시된 국제법 규정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 국가간의 무력행사의 사용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 국가관행, 국제법을 먼저 살펴보아야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국제관계, 국가관행, 국제법의 세 영역의 상호작용은 〈도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관계의 영역은 특정한 국가관행을 일으키고, 국가관행은 국제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체계로 연계되어 작용한다. 먼저, 현대 국제관계는 전후단계, 냉전단계, 그리고 탈냉전단계로 발전되어 왔다. 둘째, 국가관행의 영역은 타 국가들에 의해 그 정당성과 합법성이 부인되는 행위, 승인되는 행위, 그리고 부인 및 승인되지 않는 묵인행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자국민을 보호 또는 후송하기 위해 수행하는 무력행사는 UN헌장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개별국가의 합법적인 수단이 제대로 발동되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인해 그 정당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끝으로, 국제법 영역에서는 불법행위와 합법행위의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주 34) 간접침략은 어느 국가의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또는 영토의 일부를 분리·독립시키기 위한 내란이 발생한 경우, 그 내란에 대해 군사적·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는 외국의 행위를 말한다.

35) 김영원, 위의 책, pp.682~685 ; 이충면, 앞의 책, pp.634~637.

헌장 제2조 제4항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별국가들은 제51조에 의한 자위권의 경우에만 무력사용으로 인정된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개별국가에 아닌 안전보장이사회에게 있다. 어떤 국가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그리고 침략행위를 할 경우, 안보리는 그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를 위해 승인결의를 한다면 그것은 정당성과 합법성이 있다. 예를 들면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을 비롯한 UN 회원국은 이라크 침공을 비난하고 즉각 쿠웨이트의 철수를 강요하였던 것이다. 또한 걸프전시 안보리 승인 결의를 통해서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을 편성하여 이라크를 응징한 것은 그 정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헌장 제5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개별국가의 무력행사도, 즉 국가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개입,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범하면서 행해지는 인도적 간섭, 그리고 예비적 자위권 행사 등은 현국제법 하에서는 불법이다. 예컨대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1983년 그라나다를 침공한 사례를 들 수 있다.

## 2) 국제관계 관점에서 국제법 논의

지난 수세기 동안 국제법은 “긴박한 공격의 위협”을 야기시키는 군사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이다.<sup>36)</sup> 다시 말해서 “긴박한 공격의 위협”을 받을 시 그 국가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에 선제공격을 사전에 할 수 있다는 견해였던 것이다. 국제법 학자 및 국제재판소 판사들은 종종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긴박한 위협의 현존, 즉 대부분 공격을 준비하는 육·해·공군의 가시적인 동원으로 조건화시켰다.<sup>37)</sup>

선제공격의 조건인 “긴박한 위협”은 상대방의 방어준비태세 증가, 군사력 전개 및 국가동원, 공격명령하달 시기 포착, 공격징후목록상에 제시된 상황 포착 등의 상황이나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해상봉쇄, 경제제재 등이었다. 긴박한 공격의 위협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국제법 학자들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한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황 하에서 국제법이라는 도덕적 및 윤리적 측면에서의 이상적 정치주의와 국가이익이라는 현실적 정치주의간에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한편 2001년 9·11테러이후 국제정치의 기본구조는 미국이 잠재적국으로 상정했던 러시아와 중국이 테러전쟁의 시대를 맞아 미국의 대테러 전쟁 수행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주 36)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16.

37) The White House, 앞의 책, p.16.

취하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sup>38)</sup> 그러나 9·11테러로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서에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 필요시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고, 동맹, 국제적 공조, 국제법 및 기구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일방주의 대외전략을 취하게 되었다.<sup>39)</sup> 사전 공격은 침략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는 점이였다.<sup>40)</sup> 2003년 이라크 전쟁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여 프랑스 및 독일까지도 UN 결의 없이 미국이 수행한 전쟁에 대해 침략전쟁이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탈냉전 하에서 국제체제에서도 UN헌장 7장 제2조 제4항 및 제51조에 규정한 무력행사에 관련한 규범도 그 실효성을 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대국 및 우방국들간의 국가이익이 상충될 시, 헌장규범이 현실적인 국제정치를 성공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행사에 관한 규정은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국제법인 UN헌장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 국제정치상에서는 이 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개별국가들은 UN헌장에 명시된 무력행사에 대해 UN결의만 승인된다면, 전쟁에 대한 정당성과 합법성이 부여되므로 무력행사에 관한 규정은 계속 존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선제공격의 시기, 방법, 효과

### 가. 시 기

앞에서 논의된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의 시기 문제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어 왔다. 예방전쟁은 학자들 사이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선제공격은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UN헌장의 목적과 취지는 집단적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자위권의 확대해석은 인정하기 곤란하며, “긴박한(imminent)” 경우라 한정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선제의 시간선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선제행위가 평화시 또는 위기발전시 취해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써, 평화-위기-전쟁-전쟁이후의 시간선이다. 두 번째는 탈냉전이후 미국이 지정한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이 대량살상무기를

주 38) 이춘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 군사전략의 발전방향”, 제11회 국방·군사 세미나 논문집(서울 : 한국군사학회, 2003), pp.9~11.

39) 백진현, “이라크 전쟁이후 미국의 안보전략과 한미동맹”, 제8차 해성해양공개강좌(서울 : 한국해로연구회, 2003), p.2; 김성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신보수주의 미래”, 국방대학교·고려대학교 공동 학술세미나(서울 : 국대원 및 고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3), pp.88~91.

40) 김열수,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 : 변화·원인·전망”, 합참 20호, pp.29~30.

획득-사용의 시간선상에 있는 경우이다. 두 번째의 시간의 연속성은 ①적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시점인데, 이것은 완성된 대량살상무기 능력에 필요한 마지막 품목의 운반을 봉쇄시키거나 차단할 때의 시점이다. 테러 사태시에는 테러 조직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기지로 침투하기 전에 차단할 경우이다. 또한 대량살상무기가 적에게 인도되기 전의 시점이다. ②적이 대량살상무기 능력 및 적대의도를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다. 끝으로 ③적이 특정한 적대의도를 가지고 있고,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 긴박한 시점 등을 망라한다.<sup>41)</sup>

어느 시점에서 위협이 “긴박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라이스(Rice) 국가안보보좌관(지금은 국무장관)은 “새로운 기술은 언제 위협이 실제로 ‘긴박하게’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며 ... 우리는 긴박한 위협의 개념을 오늘날의 적 능력과 목표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42)</sup> 그러나 “긴박한 위협”은 어느 시점인가에 대해서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군사전문가인 월처(Michael Waltzer)는 “긴박한 공격”의 관점보다 “충분한 위협”의 관점에서 합법성과 비합법성의 일격 사이에서의 선을 그었다. 그는 “충분한 위협”을 세 가지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①피해를 입히려는 명백한 의도, ②적대의도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준비의 정도, 그리고 ③전투보다는 어떤 것을 기다리고 수행하는 것이 매우 위협을 확대시키는 일반적인 상황 등이다.<sup>43)</sup> 예를 들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연평해전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 서해교전을 일으켰던 경우, 북한이 기습공격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서 60% 이상의 기계화부대 등을 전진배치한 경우, 그리고 위협을 확대시키기 위해 체제유지와 경제회복을 위한 일환으로서 대량살상무기(핵 프로그램, 장거리 미사일 등) 개발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 나. 방 법

선제공격은 군사 및 정보,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군사적인 방법 등 광범위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국가안보전략서에 의하면 “미국은 출현하는 위협을 선제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위협에 군사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른 국가는 공격의 구실로 선제공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sup>44)</sup> 따라서 선제공격은 표적에 대한 관성유도무기를 포함한 SWAT팀, CIA 및 FBI 구조팀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운용한다는 것이다.

주 41) M. Elaine Bunn, Preemptive Action : When, How, and to What Effect?, p.3.

42) Condoleezza Rice, remarks on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lorf-Astoria Hotel, New York, NY, October 1, 2002.

43)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New York : Basic Books, 1977), p.81.

44)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p.17.

선제공격은 공역 및 공해상, 불량국가의 영토, 실패국가의 영토, 그리고 동맹국가의 영토에서 크루즈 미사일, 스텔스 폭격기 등 역학적 무기의 사용뿐만 아니라, 봉쇄 또는 억제제를 위한 정보작전, 특수부대 작전, 해안경비대 등 비역학적 공격수단도 있다. 예를 들면 '02년 12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해상에서 북한 상선이 중동 예멘으로 수송하는 15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차단하는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31일 폴란드 방문중 “확산방지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처음 제시한다. 확산방지안보구상(PSI)은 참가국들이<sup>45)</sup> 자국의 영해 및 영공에서 국내법에 의거하여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항공기를 검색 및 거부한다는 것으로서,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마약 밀매, 위폐거래, 그리고 여타 경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봉쇄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PSI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은 공해상에서의 조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안보구상을 통해 한층 미사일 수출입을 봉쇄할 것으로 전망된다.<sup>46)</sup>

#### 다. 효과성

효과성은 목표 달성여부에 초점을 두고, 목표로 하는 결과에 대한 실현된 결과의 비율이다. 즉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느냐 하는 것이다.<sup>47)</sup> 효과성의 의미를 선제공격과 연관시키면, 선제공격의 효과성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선제공격의 효과성은 아래 요소와 같이 국제적 반응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sup>48)</sup> ①무엇 때문에 선제공격을 위한 이유, 선제공격의 효과성 및 능력을 사용했는가?, ②선제공격이 요구된다면, 군사력의 수준은 과업에 상응하게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과도하게 사용된 것처럼 인식되었는가?, ③선제공격이 국제법 하에서 어떻게 보여 지는가?, ④위기 대처시 자국의 대응과 정보공유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하였는가?, ⑤의도되지 않은 피해의 수준(탄저균 및 사린 살포 등)은 민간인과 다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였는가?, ⑥선제공격이후 사후관리는 얼마나 효과적이었으며 사후관리시

주 45) 확산방지안보구상 최초 참가국은 미국, 스페인, 일본, 호주, 영국,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이태리, 프랑스 등 11개국이다. 지금은 15개국으로 확대되었고, 한국은 2006년 1월부터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6) 동아일보, 안보리 대북결의안 이후, 2006. 7. 18/20일자

47) 조상제, “군사전략수립시 정치적 목적과 군사목표관계에 대한 연구”, 합동군사연구 13호 (서울 : 합참대, 2003), pp.108~108.

48) M. Elaine Bunn, 앞의 책, p.6.



자국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⑦ 선제공격을 위한 증거 제시, 선제공격이 여러 나쁜 방책 중에서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사실, 선제공격이 자위권차원에서 수행했다는 사실 등 제 문제에 관해 자국의 외교적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⑧ 적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동맹국과 우방국의 반응은 위에서 제시된 전부 및 일부 요소의 조건에 따라 선제공격의 권한, 영토 및 자원 사용에서의 접근의 용이성, 비행허가뿐만 아니라 동맹 형성과 결합,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제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제공격을 선택하는 국가(미국, 러시아 등)는 잠재적국(악의 축, 불량국가, 실패국가, 테러지원국가 등)에게 전달할 메시지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판단해야 하며, 또한 타 국가들(중국, 인도, 프랑스 및 독일 등)도 미국 및 러시아의 선제공격 정책이 선제공격을 위한 청신호로서 또는 적어도 수사적인 구실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군사적 측면에서 선제공격의 효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제공격을 수행하는 국가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선제공격의 작전에 대한 효과성 및 그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선제공격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정권교체라면, 목표달성은 반드시 쉽지는 않지만 그 효과성의 측정은 매우 간단하다. 반면에 목표가 적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적의 군대를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면, 그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sup>49)</sup> 예를 들면 2003년 5월 1일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 종결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이후 후세인을 제거하여 목표 달성은 하였지만, 2006년 현재까지 저항세력에 대한 안정화작전이 수행되어 목표 달성여부의 효과성은 판단하기 곤란하다.

### 3. 선제공격의 교리

#### 가. 국가전략적 교리

선제공격은 과거에 UN헌장상의 자위권 논란의 문제로 단지 선택으로만 취급되었다. 그러나 9·11테러이후 아프간 대테러전쟁을 치르면서 선제공격은 선택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6월 1일 육군사관학교 연설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선제공격을 표명하였다.<sup>50)</sup> 부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봉쇄나 억제에 사라진 것처럼 들리나, 라이스(Rice) 보좌관은 “국가안보전략은 50년 동안 사용한 교리를 변경하거나 봉쇄 및 억제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봉쇄 및 억제의 전략개념은 적절한 장소에 운용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운용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주 49) M. Elaine Bunn, 앞의 책, p.5.

50) President Bush, remarks at West Point, in New York, June 1, 2002. accessed at<<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2/06/20020601-3.html>>.

한편 냉전시대 미국과 구소련간의 억제전략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자제하는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가의 정체성이 없는 테러집단이나 비합리성을 추구하는 악의 축의 국가 및 불량국가의 경우, 사전에 위협을 제거하는 선제공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sup>51)</sup> 그래서 미국은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sup>52)</sup> ①냉전시대에는 억제가 효과적인 방어였다. 그러나 보복의 위협에만 기반을 두는 억제는 위험한 행위를 저지르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번영을 담보로 도박하는 불량국가의 지도자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②냉전시대에는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국가도 대량 파괴의 위협을 안고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량살상무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은 대량살상무기를 우리의 동맹국에 대해 위협과 군사적 공격의 도구를 위한 선택의 무기로 보았다. 또한 그들은 대량살상무기를 미국의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③전통적인 억제개념으로는 무차별적인 파괴와 죄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테러 전술을 구사하는 테러리스트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소위 순교자로 추구하는 군인이나 그들의 유력한 保護膜은 국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 및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군사교리는 정책이나 전략도 아니지만, 군사력 적용이란 측면에서 나름의 효과가 있다.<sup>53)</sup> 선제공격을 교리로 호칭한다는 의미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력의 수단을 사용하기 위한 중앙집권적이고 조직적인 원칙이며, 관련된 사태가 있을 경우에, 기존에 지배되어온 전쟁의 원칙에 따라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sup>54)</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2년 9월 국가안보전략서에 선제공격전략을 선택한 이래로, 2003년 3월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은 선제공격에 대한 새로운 교리의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선제공격은 교리적인 수준으로 부상하지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 운용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先拋棄 後體制 보장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표명하여 왔다. 물론 선제공격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것은 선제공격을 모든 상황에 선택할 수 없다는 불일치성으로 인해 교리가 될

주 51) 김성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신보수주의의 미래”, 이라크전 후 새로운 국제안보질서와 한반도, 국방대학교 · 고려대학교 공동 학술세미나(서울 : 국방대학교, 2003), p.91.

52)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16.

53) JCS, JP 1, Joint Warfare of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Washington D.C. : GPO, 2000. 11), pp. I-8~I-9.

54) M. Elaine Bunn, 앞의 책, p.7.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55)</sup> 그러나 군사력 수단은 다른 국력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설득, 협박, 강압, 협상 등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상황 논리에 의거하여 선제공격이 교리로도 가능하다.

## 나. 군사전략적 교리

전통적인 미국의 전쟁수행방식은 대량의 부대 및 물자·장비를 투사하여 상대방 국가의 목표물에 대해 대량파괴를 함으로써 기동전보다는 소모전위주의 형태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월남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및 국제적인 반전여론으로 인해 정치지도자의 정치생명에 도전을 받게 됨에 따라, 정치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명희생과 물리적 파괴로 조기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수행방식이 요구되었다.<sup>56)</sup> 이후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의 거울을 삼아 기동전 중심의 공지전투(Airland Battle)교리를 발전 및 적용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걸프전부터 전장가시화를 위한 정보능력 및 정보우위 개념의 발전과 장거리 정밀유도무기에 의한 타격수단의 발전으로 공지전투교리에 의한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전쟁양상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전쟁수행 방식과 병행하여 걸프전에서 최초로 “효과중심작전(Effects-based Operations : EBO)” 개념이 부분적으로 개발되어 적용되었다.

1996년에 미 합참은 장기 국가군사전략기획 개념서인 “합동비전 2010”을 발간하여 전 영역에서 우위확보의 군사력 운용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세한 기동(Dominant Maneuver), 정밀교전(Precision Engagement), 집중적 군수지원(Focused Logistics), 그리고 전영역 방호(Full Dimensional Protection) 등 네 가지의 작전개념을 제시하였다.<sup>57)</sup> 이어서 합참은 2000년도 “합동비전 2020”을 발간하여 “합동비전 2010”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가운데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군사작전 영역의 확대, 다국적 작전 및 기관작전의 협조의 필요성 강조, 정보작전의 범위 및 정보우위 개념의 발전, 상호운용성 범위의 확대, 그리고 인간적 요소의 혁신개념 강조 등 합동작전수행개념을 제시하였다.<sup>58)</sup>

1999년에 창설한 합동전력사령부(JFCOM)는 합동비전(JV)을 구현하기 위하여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개념, 합동교리, 합동실험, 합동상호운용성, 합동조직, 합동훈련 등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적용시켜 왔으며, 또한 국방장관의 국방기획지침서(DPG)에 명시된

주 55) M. Elaine Bunn, 위의 책, p.7.

56) 이장근, “이라크전을 통해 본 신속결정작전(RDO)”, 군사평론 제365호(대전 : 육대, 2003. 11월), pp.99~100.

57) Joint Chief of Staff, Joint Vision 2010(Washington D.C : US GPO, 1996) 참조.

58) Joint Chief of Staff, Joint Vision 2020(Washington D.C : US GPO, 2000) 참조.

신 합동작전 개념과 수행능력을 개발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합참은 2004년 5월에 국가군사전략서를 발간하여 과거 합동비전서를 통합하였고, 특히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승리, 합동전투수행능력(EBO 교리화 추진) 향상, 그리고 미래를 위한 변혁 등 세 가지 우선순위에 주안을 두고 선제공격 군사교리를 발전시키고 있다.<sup>59)</sup>

효과중심작전은 부시 행정부가 선택한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및 국방기획지침서, 국가군사전략에서 제시된 선제공격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탄생된 군사력 운용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60)</sup> 이것은 효과중심의 戰役에서 정치·군사목표를 달성하고, 전력의 증가 없이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수행하며, 인명과 국가재산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력의 타수단(외교, 정보, 경제)과 연계하여 군사력을 적용하는 효과적인 작전방법이다. 미 합동교리는 합동작전 3-0 및 합동작전기획 5-0과 같은 주요 교범에서 효과중심작전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sup>61)</sup>

#### 4. 선제공격의 판단 기준

선제공격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설정은 일부 논문에 논의된 것은 있지만, 권위 및 근거 있는 국가안보전략서, 군사문헌 및 군사교범에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논리를 전개하는데 많은 제한사항이 따른다. 선제공격의 판단기준은 각 국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객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선제공격의 판단 기준을 위한 준거의 틀(Reference of Framework)이 만들어져야 선제공격의 적용과 실체가 가능하므로, 분석의 틀을 세 가지 방향으로 구상하고자 한다. 선제공격의 판단 기준은 첫째, 부분적이거나 과거에 연구되었던 문헌연구 사례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선제공격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둘째, 전략을 수립할 시 그 전략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전략의 구비조건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셋째, 전쟁의 명분에 대한 합법성과 타당성을 따져 보는 正戰論의 판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논자는 먼저 각각 세 가지 선제공격의 판단 기준을 각각 염출한 다음, 공통요소를 뽑아서 새로운 하나의 선제공격의 판단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의 문헌 연구 사례를 통해서 선제공격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주 59) Joint Chief of Staff,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4, May 참조.

60) 세부적인 내용은 USJFCOM, Command's Handbook for an Effects-Based Approach to Joint Operation(Joint Warfighting Center, 2006. 2. 24), 연합사 역, 효과중심작전(EBO) 지휘관 핸드북(상설합동군 본부 합동개념발전 및 시험부 합동전투모의 센터, 2006. 4) 참조.

61) 위의 책, p.69.

### 가. 선제공격의 기준 설정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이 사용 가능성이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대응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언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선제공격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의 기준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다면, 기준설정에 너무나 많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선제공격에 대한 기준설정을 침묵하는 것은 논점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이다.<sup>62)</sup> 이것은 UN헌장 제51조 무력행사와 배치되는 선제공격의 정당성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국제법상 자위권과 관련한 무력행사는 침략자는 불법이며, 피침자에게는 합법성을 인정하는 견해인 것이다. 전쟁의 정당성 여부는 “긴박한 위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느 한 개별국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침략을 한다면 국제법에 저촉되지만 용인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선제공격의 정당성이 입증되려면 “긴박한 위협”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긴박한 위협”에 대한 해석도 강대국의 논리와 국제적 환경 및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UN 헌장의 해석은 강대국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었고, 약소국이나 독재국가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 UN의 권위와 위신은 상대적으로 추락되었던 것이다.

기존 문헌에 나타난 선제공격에 대한 기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전쟁목적과 군사목표, 전략적 환경(지리적, 군사적, 대내정치적, 대외정치적 여건)**<sup>63)</sup>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지만, 이를 적용하는데 너무 주관적이어서 한계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선제공격을 위한 유용성 있는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선제공격의 기준을 대체하기도 한다.<sup>64)</sup> ①우리는 동맹국과 우방국, 우리의 이익에 대하여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려는 국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념이 부족한가?, ②우리는 특정 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국가에게 이양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가? ③이러한 국가들이 단지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중요한 이익을 위협하는 전쟁의 위협 또는 강압 및 공격행위를 증가시킬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이 모두 긍정이라면 그 다음의 질문? ④우리는 이러한 위협들이 선제공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하는가? 만약 아니라면 다음 아래 항목으로 내려가야 한다. ⑤우리가 시행한 공세적 군사행동이 도덕적으로 및 법적으로 특정국가의 행위에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⑥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반응은 무엇인가? 만약 여론의

주 62) M. Elaine Bunn, 앞의 책, p.7.

63) 신재균, 선제기습공격의 적용성 연구, 참조: 세가지 요소의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제3·4차 중동전쟁을 중심으로 선제기습공격을 비교분석하였다.

64) M. Elaine Bunn, 위의 책, pp.7~8.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라면 군사행동을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비난을 감수하고 시행할 것인가? ⑦군사행동은 보복이나 심지어 우리의 이익에 보다 큰 위협을 주면서 '의도하지 아니한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위협을 봉쇄 또는 제거할 수 있는가? ⑧우리는 높은 성공의 확신과 용납할 수 있는 부수적인 피해수준을 감내하고 효과적인 공격을 실제로 개시하기 위해서 적의 능력, 방어, 그리고 작전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⑨우리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군사능력과 정보능력이 선제공격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⑩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선제 군사행동이 어떤 선례를 마련할 것인가?<sup>65)</sup> 예상되는 효과는 비용보다 높은가? 역으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기꺼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용의가 있는가?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용납할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대량살상무기 보유 국가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는 것이며, 그 위협들이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가, 한 국가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및 도덕적으로 군사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한 국가가 높은 자신감과 용납할 수 있는 의도적인 아닌 피해수준으로 효과적인 군사능력과 정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등이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선제공격에 대한 기준 설정은 그 국가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질문형식으로 제시한 문헌연구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 만큼 정형화된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도 선제공격의 시기, 방법,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국가차원의 선제공격을 구현하기 위한 미국의 국가군사전략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기존 논문과 10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종합해보면, 선제공격의 기준 설정은 ①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②적 위협 판단기준(의도, 능력, 환경)<sup>66)</sup>, ③지·전략적 특성(위치), ④국내·외적 지지, ⑤도덕적 및 법적인 정당성(UN헌장 규범), 그리고 ⑥선제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능력과 군사능력 보유 등의 고려요소를 염출할 수 있다.

## 나. 선제공격의 구비조건

둘째, 선제공격의 구비조건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선제공격전략을 공개적으로 채택

주 65) 고전적인 선례의 하나는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락(Osirak) 핵시설을 공격하였다. 이스라엘은 이라크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한 예비적 자위권의 행사로서 일반국제법의 원칙과 헌장 제51조에 의거하여 국가의 생존과 번영측면에서 핵시설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공격행위가 UN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비난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선택하였다. 김영원, 앞의 책, p.686 ; M. Elaine Bunn, 앞의 책, p.2.

66) 육군대학, 군사전략(전문과정, 2003), p.21.

하는 국가는 국력이 막강한, 특히 군사력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다. 그러나 국력이 비교적 약한 국가도 그 국가가 처한 고유의 전략환경에 따라 비공개적으로 선제공격을 위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요소인 적합성, 달성 가능성 및 용납성이라는 전략의 구비조건에 의해 검증하면, 그 유용성이 증대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sup>67)</sup>

### 1) 적합성

적합성은 전략이 국가목표·국가안보목표·국방목표에 부합하며, 기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국가이익측면에서 국가목표(전시 전쟁목표)와 군사전략 목표와의 관계에서 분석되며, 그 함목적성이 주관심사가 된다. 국가통수권자가 선제공격을 위한 의지 표명 여부에 따라서, 군사전략도 선제공격을 위한 선택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선제공격은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 및 논란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제공격을 선택하는 국가는 그 국가가 처한 특수한 전략환경에 기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9·11테러이후 선제공격교리를 선택했다면, 타 국가들도 국가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논리에 부합한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정치 환경은 매우 불안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제공격전략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요인으로서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주변 강대국에 비해 절대적 국력과 영향력 면에서 열세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의 세계평화애호 및 유지 국가로서의 체면과 손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 2) 달성 가능성

달성 가능성은 전략개념을 시행함으로써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용자원 및 능력(정신, 물질적)을 투입하면 그 개념이 시행 가능한가? 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달성 가능성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하나는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선제공격 대안을 제시하면 군사차원에서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개념을 수립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선제공격을 위한 수립한 전략개념이 실제로 사용된다면, 가용자원과 능력으로 선제공격이 제시한 전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선제공격전략을 선택한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CAISR체계가 구비되어야

주 67) 육군대학, 군사전략(전문과정, 2003), p.70 ; 육대, 독서자료1-3, 전략기획(1993), pp.127~128 ; Henry E. Eccles, "Strategy - The Theory and Application" in John P. Stewart and Arthur F. Lykke, Jr., ed., Military Strategy : Theory and Application(Carlisle Barracks : Army War College, 1982), p.3-44.

하며, 정밀 정보의 수집능력과 첨단정밀무기에 의한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의 제1타격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CAISR체계, 탄도미사일체계, 방공체계 등 방어준비태세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선제공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선제타격능력과 생존성의 보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북한의 공격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정보는 전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고, 적의 전략적 중심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되며, 그리고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초전 생존성이 취약한 상황 하에서 선제공격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적으로 비대칭전력과 전략을 개발하고, 미국의 증원전력(연합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도 북한 등 악의 축의 국가들에게 필요시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 3) 용납성

용납성은 전략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용납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용납성은 ①전쟁명분, ②법적인 측면, ③도덕적 측면, 그리고 ④비용 대 효과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국제법적으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논의하는데 중요하다. 국제법 학자 및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용납성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먼저, 전쟁 명분은 선제공격을 수행하는 국가가 불가피하게 먼저 자위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것은 한 국가의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내·외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쟁명분은 또한 법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법적인 측면에서 무력행사를 수행할 경우, UN헌장 제2조 4항, 제39조, 제41조, 제42, 제51조 및 일반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UN헌장상에서 합법적인 무력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①안보리의 집단적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인데 제39조의 권고, 제41조의 무력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조치, 그리고 제42조의 육·해·공군에 의한 군사적 조치이며, ②제51조의 개별회원국들의 자위권 행사이며, 그리고 ③헌장 제39조의 평화에 대한 위협(Threat to Peace), 평화에 대한 파괴(Breach of Peace) 또는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 상황 하에서 평화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UN 안보리 결의안의 승인 등 국제적 지지의 획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①의 경우는 개별국가의 강제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안보리의 집단적 강제조치를 취해야 하나, 지금까지 UN 안보리의 강제조치 발동은 회원국들이 안보리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국의 군대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실현된 적이 없다.

현실적으로 UN헌장체제 하에서 합법적인 무력행사의 경우는 ②의 자위권 행사와 ③의 안보리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전쟁수행간에 도덕적인 측면은 하나는 독재국가가 압제적인 인권을 유린하거나 탄압시 인도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비록 전쟁은 무자비한 폭력을 의미하지만, 인륜적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여론이 용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종청소 및 화생방무기 등을 이용한 폭력행위는 국제적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전쟁범죄자로 취급받는다.

또한 도덕적인 측면은 법적인 측면의 전쟁의 정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행위가 법적인 측면에서는 정당성이 있는데 도덕적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법적인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지만 도덕적 측면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걸프전은 UN 결의안 허용으로 법적인 정당성은 있으나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코소보전은 처음에는 UN 결의안 없이 NATO 회원국들이 유고의 밀로세비치 인종청소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NATO 영역 밖에서 수행한 최초의 전쟁인데, 지상군 투입 없이 공습에 의한 무력행사는 나중에 UN 결의안이 승인되었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을 얻었다고 보아진다.

마지막으로,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선제공격전략이 수세전략 및 수세후 공세전략보다 효율성이 있는가 또는 타당한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전략 측면에서 공격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회비용이 고려되어야 하고, 군사비 증대 가능성이 높다.

소결론적으로 선제공격을 위한 구비조건인 적합성, 달성가능성, 용납성의 세 가지 요소는 최초부터 판단되어야 하며, 상호 균형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서로간 불균형관계이면 조정해야 한다.

#### 다. 正戰論의 판단기준

셋째, 正戰論의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正戰論(Bellum Justum Doctrine)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은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전쟁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양 교전당사자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무력의 한계를 규율하는 법인 “교전규칙”(Jus in Bello)이 아니라, 전쟁의 행할 권리인 “전쟁의 합법성”(Jus Ad Bellum)에 관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正戰論은 전쟁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데 기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의의 전쟁이라는 것은 무력의 강제사용과 무력행사에 호소하려는 도덕적·법적 지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正義의 戰爭”(Just Wa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허용 가능한 전쟁”(Permissible War)이라는 표현이 더 옳다.<sup>68)</sup> 국제적으로 군사문제와 관련한 학계에서는 “正義의 戰爭”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전쟁의 명분과 관련된 전쟁의 합법성 및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그렇지만 正戰論에 대한 비판은 과거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것은 ①正戰과 不正戰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②正戰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③전쟁이 법을 집행하는 적합한 수단(제재, 중재 등)으로서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등이다.<sup>69)</sup>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전론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정전의 객관적 기준의 문제는 UN 헌장에서 언급한 침략 개념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으로 귀착된다. 제29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침략의 정의에 의하면, 한 국가가 타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는 침략이므로 전쟁의 합법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②정전의 객관적 판단의 주체는 UN이 관장하는 국제형사재판소 및 안보리의 결의로써 침략자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강대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을시 거부권 행사와 안보리의 결의가 승인되지 않을시 집단방위체제 및 강대국 논리에 의거 전쟁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1년 걸프전은 UN 결의안 승인으로 이라크를 쿠웨이트로부터 축출하였지만, 1999년 코소보전은 집단방위체제(NATO)로 유고의 밀로세비치의 인종청소를 응징하였으며, 2003년 이라크전은 유엔 결의안 승인 없이 미국이 이라크 후세인을 제거하였던 것이다. ③전쟁의 법적인 수단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전쟁이 허락되는가 하는 것이며, 전쟁에 승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명분이 합리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도 UN 헌장상의 자위권과 관련한 무력행사의 합법성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전쟁의 합법성의 지침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은 ①**법적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y)**, ②**정당한 대의명분(Just Cause)**, 그리고 ③**정당한 의도(Right Intention)**이다.<sup>70)</sup> 첫째, **법적 관할 당국**은 교전규칙 하에서 교전당사자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전쟁을 선포하고 종결하는 헌법상의 전쟁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통상 오늘날 교전당사자는 국제연합에 가입한 주권국가, 정치적 집단(UN, NATO, 반정부세력 등) 등을 포함한다.

둘째, **정당한 대의명분**은 교전규칙 하에서 사용되는 수단의 均整性 결정을 위한 주요

주 68) William V. O'Brien, "The Conduct of Just and Limited"(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81), 국방대학교 역, 전쟁의 정당성과 제한전쟁, pp.27~31 ; Nicholas Rengger, "On the Just War Tradi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Affairs, Vol. 78, No. 2(2003), pp.53~363.

69) 임덕규, 정당한 전쟁론(서울 : 육사, 1984), pp.83~84.

70) William V. O'Brien, 앞의 책, pp.32~51.



대상을 설정한다. 정당한 대의명분에 대한 주요 대상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지만 정당한 대의명분의 실체, 정당한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형식, 정당한 목적과 수단간의 比例的 대응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평화적 처방의 철저한 사용 등 네 가지로 세분화된다.<sup>71)</sup> ①정당한 대의명분의 실체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타인을 살상하지 않아야 하는 ‘自명한 의무’ (Prima Facie Obligation)가 되어야 한다. ‘自명한 의무’는 不正義의 공격으로부터 無罪한 자를 보호하는 것, 사악하게 거부된 권리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정의로운 질서를 재확립하는 것이다.<sup>72)</sup> 이러한 정의는 고전적인 대의명분의 실체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정당한 대의명분은 침략전쟁이 아닌 방위전쟁, 인류의 보편타당한 세계평화 및 민주주의 체제, 인도주의적 지원 등과 관련이 있다. ②정당한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형식은 자위권과 관련된 공세적인 전쟁과 수세적인 전쟁이 있다. 오늘날, 앞에서 논의한 UN 헌장 제2조4항, 제42조, 제51조와 관련이 있다. 수세 후 공격은 자위권 차원에서 합법성이 있는 반면에, 선제공격 및 예방전쟁은 원칙적으로 UN 헌장에 위배되지만, “긴박한 위협”의 해석에 따라 전쟁의 합법성이 달라진다. ③정당한 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적 대응성은 국가이성(Raison d'etat)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을 사용시, 국가이성(정당한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수단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sup>73)</sup> 국가이성은 국가 존립의 당위성과 일반의지의 관심사로써 생존, 번영, 국가위신을 추구하지만, 국가 통치권자는 이것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74)</sup> 따라서 각 국가들은 정당한 정치적 목적의 달성 정도에 따라 군사력의 사용범위를 결정한다. 전쟁의 본질은 정치적 동기에 따라 군사력 사용 정도(범위)가 달라진다. ④정당한 대의명분의 마지막 요소는 전쟁이 평화적 대안을 모두 사용하고 난 후에 유일한 최후의 호소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장치로는 국제연합에 의한 협상, 조정, 仲裁, 裁決을 위한 수단이 있으나 각 국가마다 국가이익의 상이로 인하여 UN 역할의 한계성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의도(목적)**는 ①교전국(상대적국)으로 하여금 공언된 정당한 대의명분을 추구하지 못하게 제한하며, ②정당한 교전국이라면 항상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할 것을 요구하고, ③적들 사이에서도 평화적인 처방을 취할 수 있는 慈善과 박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5)</sup> 정당한 의도는

주 71) William V. O'Brien, 위의 책, p.38.

72) Childress, *Just-war Criteria*, p.46.

73) 세부적인 내용은 拙著 조상제, “군사전략수립시 정치적 목적과 군사목표 관계에 대한 연구,” *합동군사연구 13호*(서울 : 합참대, 2003. 12) 참조.

74) 세부적인 내용은 조상제, “클라우제비츠의 사상과 논리 : 전쟁의 이중성과 삼위일체,” *군사평론 367호*(대전 : 육대, 2004) 참조.

75) William V. O'Brien, 위의 책, pp.59~61.

도덕적 및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전쟁은 진정한 국가이성에 입각한 정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당한 의도는 전쟁이 전쟁자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국가의지(intelligence element)<sup>76)</sup>를 통하여 전쟁이 목적을 갖게 함으로써 비로소 전쟁의 의미가 되고, 전쟁의 정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 IV. 결 론

선제공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개념 없는 덩어리”처럼 비난받을 소지가 많은 명제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들, 국제법 학자, 군사전문가들, 심지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에도 타당한 선제공격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표 2〉 선제공격 판단 기준

구분	선제공격 기준 설정	선제공격 구비조건	정전론의 판단기준
국가 이익	•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 적합성	• 정당한 대의명분(실체)
수단	• 정보능력과 군사 능력	• 달성가능성	• 정당한 대의명분(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적 대응성 요구)
합법성	• 국내·외적 지지, 도덕적 및 법적인 정당성	• 용납성	• 정당한 대의명분 • 정당한 의도
전략 환경 평가	• 적 위협판단기준 (의도, 능력, 환경)	• 적합성, 달성가능성, 용납성	• 법적 관할 당국, 정당한 대의명분, 정당한 의도
	• 지·전략적 특성(위치)	• 달성가능성	• 정당한 대의명분(추구형식)



<b>선제공격 판단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제공격의 구비조건(적합성, 달성가능성, 용납성)</li> <li>• 적 위협판단기준(의도, 능력, 환경)</li> <li>• 지·전략적 특성(위치)</li> </ul>
----------------------	---

주 76) 국가의지는 전쟁에 대한 UN결의안 통과 등 국제적 지지, 국민의 지지, 국회의 지지 등을 망라한다. 나의 의지가 국가의지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의지(general will)로 작용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전쟁의 합법성이 부여된다.

선제공격 판단기준은 <도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이익, 수단, 합법성, 전략환경평가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서로 의미가 유사한 공통되는 요소를 염출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선제공격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주관적인 성향이 개입되어 객관성에 도전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틀을 창안해야 하는 것이었다. 선제공격의 판단기준은 선제공격의 기준 설정, 선제공격의 구비조건, 正戰論의 판단기준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①선제공격의 구비조건(적합성, 달성가능성, 용납성), ②적 위협판단기준(의도, 능력, 환경), ③지·전략적 특징 등으로 제시하였다. 전쟁의 합법성을 분별하기 위한 선제공격의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으나 분석의 틀을 만들었다.

〈 참고 문헌 〉

1. Bunn, M. Elaine. "Preemptive Action : When, How, and to What Effect?", Strategic Forum, No. 200.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NDU Press, July 2003.
2. Joint Chief of Staff,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4 May.
3. Harkavi, Y. "Nuclear War and Nuclear Peace", Jerusalem : IPFST, 1966,  
류재갑 외 1명 역, 핵전쟁과 핵평화. 서울 : 국방대학교, 1988.
4.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ие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 На пороге нового этапа развития" (Moscow :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3. Oct., 역 국가정보원, 러시아의 신 군사전략. 서울 : 국가정보원, 2003. 12.
5. O'Brien, William V. "The Conduct of Just and Limited War",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81, 국방대학교 역, 전쟁의 정당성과 제한전쟁. 서울 : 국방대학교, 1987.
6. Roberts, Adam, "Law and the Use of Force After Iraq", Survival, Vol. 45, no.2, London : IISS, Summer 2003.
7. Rumsfeld, Donald H.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 February 2006.
8. Rumsfeld, Donald H.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 GPO, 2005. Mar.
9. USJFCOM, Command's Handbook for an Effects-Based Approach to Joint Operation, Joint Warfighting Center, 2006. 2. 24
10. Walzer, Michael. Just and Unjust. New York : Basic Books, 1977.
11.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 GPO, 2002. Sep.
12.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 GPO, 2006. Mar.
13.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전략지침(Ⅱ급). 서울 : 국가안보회의 사무처, 2006.
14. 김영원, "자위권에 관한 유엔헌장 제51조와 예비적 자위권 문제", 21세기 현대 국제법 질서. 서울 : 박영사, 2001.
15. 류재갑, 소련·중공·북한의 작전술 발전경향.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0.
16. 신재균, 선제기습공격의 적용성 연구, 미 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국방대학교, 1986.
17. 이장희, "이라크 전후 국제법적 과제와 대책", 아사연 학술포럼. 서울 : 아사연, 2003.
18. 이충면, "무력행사 및 군축에 관한 국제법", 21세기 현대 국제법 질서. 서울 : 박영사, 2001.

## 地上戰術 C4I體系(ATCIS)

### 목 차

- I. 序 論
- II. C4I體系 必要性
- III. 外國軍/合同 C4I體系 紹介
- IV. 地上戰術 C4I體系 紹介
- V. 期待效果/制限事項
- VI. 結 論



대령 金暎峻  
(2군사령부 지휘통제체계과장)

### I. 序 論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 육군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고, 국민들 가슴 속에 믿음직한 군대로서 각인되어 있으며, 이는 오직 위국헌신(衛國獻身) 정신으로 격동의 세월에도 오로지 총력안보(總力安保) 파수꾼으로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로서 성장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육군은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군의 간성(干城)으로서 위기(危機)와 도전(挑戰) 등을 창의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위기의식이 없으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결코 발전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육군의 존재의의는 국가의 안전보장, 즉 주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주권(主權)을 지켜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 육군이 처한 현재의 안보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이러한 안보환경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육군의 존재목적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므로 우리 육군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확고한 이정표(里程標)를 수립해야만 한다.

최근 두차례에 걸친 이라크 전쟁은 첨단 정보·과학기술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상과 하늘을 연계한 전쟁수행과정은 바로 전쟁역사(戰爭歷史)이며, 이에 우리 육군으로서 시사(示唆)한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 육군은 대북 열세를 극복하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주적 정예 군사력 건설”의 국가안보정책에 발맞추어 기술집약적 첨단 전력증강 및 전술 C4I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환경과 전쟁양상 변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최적방안은 육군을 정보화시키는 것이며, 그 핵심전략은 바로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C4I체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95년 12월부터 시작된 전술 C4I체계에 대한 개념연구로부터 '05년 7월 전투용 사용 “가” 판정까지 개발내용을 토대로 21세기 전장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서 미래전 양상에 대처하는데 인식의 전환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내용은 C4I체계의 전력화와 관련하여 군에서 보완/발전시켜야 할 방안을 제시한다.

## II. C4I體系 必要性

21세기는 세계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기회(機會)와 도전(挑戰)이 함께하는 역동적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세계질서 개편과 함께 우리의 국방환경을 전망해 보면 국가적으로 국력신장 및 국가위상 제고에 따른 안보의 중요성 증대와 통일여건이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쟁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또한 개혁과 구조조정에 따른 국방 예산삭감,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은 전쟁양상 및 국방자원 관리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즉 현대전은 정보의 지배, 지휘통제 감시 및 정찰, 정밀타격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하에 미래의 전장을 장악하고 통제하며 승리하기 위해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 먼저 타격함으로써 전투력 운용효과를 극대화시켜 장차전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한국형 지상전술 C4I체계의 구축이 요구되었다. 또한 현대사회는 산업화 시대를 거쳐 정보화 시대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도 이러한 기술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기존의 집중과 파괴, 지휘통제를 보다 정교하고 빠르게 하는 기술적인 혁신(RMA)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가 '91년의 걸프전을 인류최초의 정보전쟁이라고 불렀으며 이것이 10년이 지난 이라크전에서는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을 볼 수 있었다.

즉 전쟁의 양상이 지식·정보의 상대적 우월성과 지배성이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를 여러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내면 장거리 정밀타격전, 첨단 네트워크전, 정밀 기동전, 정보전, 특수전, 심리전 등의 여러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쟁의 양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장차의 전장환경에서 C4I체계는 전쟁지휘로부터 말단 전술제대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시간단축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또한 끊임없는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는 길은 정보화분야에 대한 과학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자적인 지상전술 C4I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 1. C4I體系 定義

현대전은 과학·군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장이 확대되고 복합적인 상황하에서 전투가 수행될 것이다. 또한 세계 안보정세는 탈냉전후 안보질서 재편과정에서 화해와 협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와 지역분쟁,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등 불안정한 상황이 혼재해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은 타격력 위주의 무기체계 중심에서 통합전투 수행을 위한 정보체계 중심으로 전투력 운용의 효과집중을 통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보화 군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육군 지상전술 C4I체계의 구축목적은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를 중심으로, 전·평시 및 훈련시에 신속·정확히 전장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통합 전투력(統合戰鬥力) 운용을 보장하는 데 있다.

C4I체계의 운용범위는 체계의 운용제대, 체계와 연동되어 운용되는 정보체계 및 무기체계, 자동화가 가능한 지휘통제 업무, 체계가 운용되는 시기를 대상으로 하며, C4I체계가 운용될 대상 제대는 육군(해병대 포함) 군단, 군단직할대, 사·여단, 사단직할대, 연대, 대대 등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로 하며, C4I체계와 연동되어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체계 및 무기체계는 전략지휘소 자동화 체계(KJCCS) 등 8개 감시 및 타격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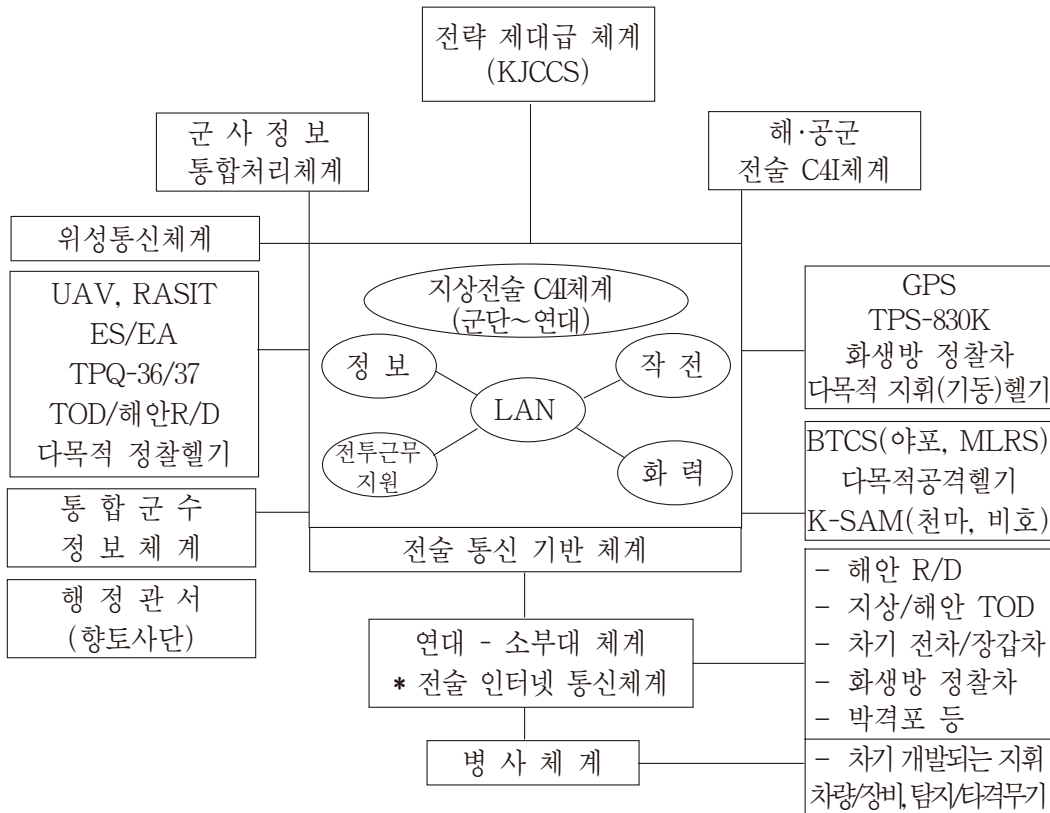
## 2. C4I體系 開發目的

육군이 건설하고자 하는 C4I체계의 구축방향은 다음에 제시한 목표를 구현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을 찾는 방법을 최적화하며
- 영상(映像), 신호(信號), 인간정보(人間情報)를 ASIC/CCC에 자동유통시키고
- ASIC/CCC에 입력된 수많은 정보중에서 아군 작전에 위협을 주는 정보를 자동 선택하여
- 자동선택된 이 정보를 필요한 부대에 실시간에 전파하고
- 획득된 정보에 부합된 타격능력을 갖춘 부대를 자동선택하여 타격하며
- 또한, 이러한 전과정을 통하여 전투지속능력 보장을 위한 실시간 전투근무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각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차기 지상전술 C4I체계 기본 구조는 군사령부 이상의 전략 제대급 체계인 지휘소 자동화체계(KJCCS : Korea Joint Command & Control System)와 군단에서 연대까지의 지상전술 C4I체계, 연대급부터 소부대까지의 전술 인터넷 체계 그리고 병사체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육군의 차기 C4I체계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 차기 C4I체계 기본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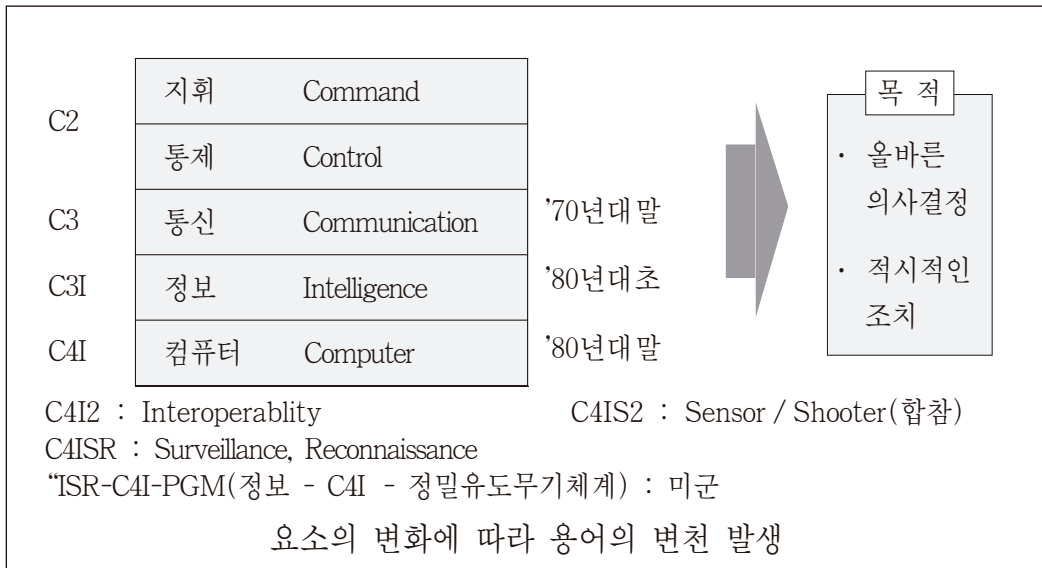


현재 육군에서는 피·아 전장상황의 신속한 보고, 처리, 전파, 도식으로 전장 가시화를 달성하고 감시장비 등 핵심센서와 타격수단을 연결하여 실시간 타격을 하며 지휘결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을 목표로 지상전술 C4I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통신기반체계 발전과 병행하여 분석형 S/W개발과 대대급이하체계 개발, 병사체계 개발로 지속적인 체계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다 다양한 사용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원화된 군 통신망을 통합, 일원화하고 다양한 전장정보(음성, 데이터, 영상, 위치정보 등)를 대량, 초고속으로 전달 가능한 디지털화된 고신뢰도의 광역 통신망을 구축하여 제 전투 요소를 네트워크 연결 및 결합시켜 전장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현재의 SPIDER체계보다 약 20배 이상의 대용량, 초고속 전송이 가능한 군전술 종합정보통신체계(TICN :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를 연구 개발중에 있다.

### 3. C4I 개념 / 변화

[ C4I 관련용어 변천과정 ]



#### 가. 지휘·통제체계(C2체계: Command and Control System)

'6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C2(Command and Control)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며, 지휘 및 통제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일찍부터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지휘통제체계란 "지휘관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예하부대를 계획·지시·조정 및

통제하기 위한 시설·장비·통신·절차 및 인원을 총괄한 개념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C2는 지휘관의 임무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지시·통제 및 협조하는 모든 과정과 절차로서 지휘통제를 위한 편성 및 기구, 규정 및 절차, 시설·통신수단의 임무와 기능,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히 상호 통합되어 체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지휘통제의 조직은 이미 군 조직에 편성되어 있는 지휘관 및 참모 편성이며, 절차는 지휘관 및 참모활동절차, 야전예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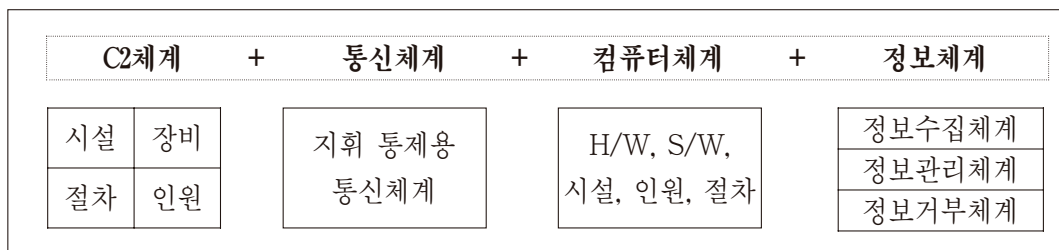
이 용어는 '78년 미 육군의 공지전투 개념에서 C3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공·지전투(空地戰鬪)는 적 중심 공격을 위한 장거리 타격체계와 전장 중심 감시장비가 필요하고, 적의 정보를 신속히 수집 분석하여 각 부대에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되는 등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된 정보수집 수단과 예하 제대에 대한 지휘통제능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 따라 C3I기능이 요구되었다.

**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C4I 체계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System)**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달성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적의 장소와 시간에 배열하여 전투력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의 각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 연결하여 실시간에 정보수집 및 분석, 지휘결심, 계획·지시, 작전수행(타격)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시설·장비·인원 및 절차로 구성되고, 통합된 지휘통제체계로서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 먼저 행동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배비하고 운영하는 총체적인 수단과 절차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C4I체계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공통의 정보통신 기반 위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정보의 전자적 수집·저장·신속한 분류·정보의 전파·접근 등의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군사업무에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지휘통제 및 전장정보 이용에 보다 폭넓게, 보다 적시에 접근하게 해주는 첨단화된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며, C4I체계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C4I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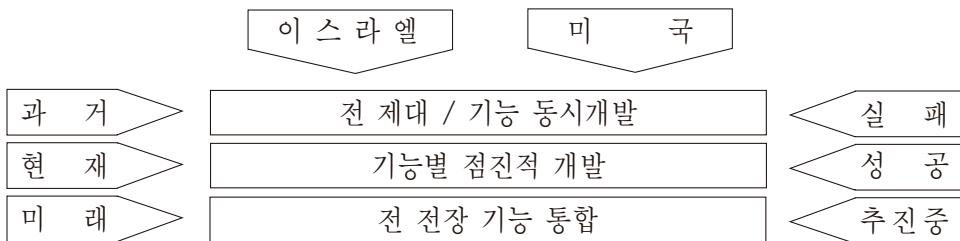
C4I체계는 C3I체계의 자료관련 분야 자동화 업무를 통합한 발전된 개념으로 「고도 정보전·과학전」에 대비하여 C3I체계에 대용량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컴퓨터의 기능을 강조한 체계이다.

### Ⅲ. 外國軍/合同 C4I體系 紹介

#### 1. 外國軍 C4I體系

우리 육군의 C4I체계 개발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먼저 이와 유사한 체계를 기개발하여 운영중인 미국과 이스라엘 등 타국의 전술 C4I체계 개발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본바와 같이 선진국의 개발방안은 다음과 같다.

[ 선진국의 개발 방안 ]



즉, 미국이나 이스라엘 모두 최초로부터 전 체대·전기능을 동시적으로 개발하고자 했을 때는 성공치 못하였으나 기능별로 점진적으로 했을 경우는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

사업추진시 점진적과 진화적의 용어를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부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은 시정해야 한다. 일견 비슷한 용어인 것 같으나 점진적이라 함은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개발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위험요소(기간, 예산) 등을 예방하자는 것이며, 진화적이라는 것은 목표단계가 불명확하고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기본이 되는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용자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완성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은 사업의 추진전략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 2. 合同 C4I體系

합동 C4I체계는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휘·통제체계로서 사령관이

합동작전을 계획·지시·통제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인원 및 절차로 구성되는 종합체계이다.

합동 C4I체계의 역할은 감시 및 경보체계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 분석처리하여 참모판단, 지휘관 판단 및 결심을 통하여 기동 및 타격체계에 제공하여 실시간에 표적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합동 C4I체계 구조 및 기능으로 합동 C4I체계는 각 군 및 관련체계에서 생산된 첩보·정보 및 서비스를 재사용하고 중복생산을 최소화하며, 각 군의 조직과 기능영역을 벗어나 구축된 C4I체계의 확장 및 통합의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개발 및 건설하여 목표에 이르는 절차와 관련체계들을 논리적·물리적으로 체계구조 및 기술구조를 완성하여 사용자 요구에 충족되도록 운영하는데 있다.

이러한 합동 C4I체계는 지휘관이 시스템의 상태와 고장현황 및 복구 예정시간 파악 등이 용이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합동 C4I체계 배치 및 운용으로 합동 C4I체계는 육·해·공군의 작전사급 이상 전략제대의 지휘통제체계이다. 따라서 그 배치는 육군의 군사령부급 이상 제대, 해·공군의 작전사급 이상 제대에 체계가 배치운용 되고 있으며, 그 이하 제대는 전문처리체계(MHS)로서 통제된다.

합동 C4I체계의 운용사항으로 합동 C4I체계는 전략제대의 지휘통제를 전·평시 구분 없이 지원한다. 평시에는 고정시설에 배치된 체계를 이용함으로 제한없이 운용이 가능하나 전시에는 전장 영역의 변경으로 현시설을 이동할 시에는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평시에 C4I체계 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운용한다.

첫째, 평시 일일 작전지원을 위한 통신은 일반적으로 기존 비화 및 비비화 전화기와 기록통신 및 데이터 통신으로 지원하고,

둘째, 각종 조기경보 및 첩보자산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단시간에 C4I체계를 통해 처리하여 자동으로 필요한 부서에 실시간에 제공되며,

셋째, 전사전환체계 확립으로 C4I체계는 신지휘소에 사전 배치하여 전시에는 전개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위기시 운용은 위기조치시 시기를 놓쳐 적으로부터 큰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전준비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사항은 각종 데이터베이스(필수자료 등) 들을 사전에 구비하고 항시 최신화한 상태에서 유지함으로써 상황발생시 즉각 운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위기조치 초기단계에 합동 부대를 지휘통제하는데 필요한 부서 및 기관은 합동 C4I체계를 이용하여 실시간에 지휘 조치한다.

전시에 운용은 수직·수평적으로 정보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를 하나의 체계로 수용하여야 하며, 연합작전 체계와도 연동되는데 주안을 두고 합동 C4I체계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 IV. 地上戰術 C4I體系 紹介

우리 육군은 정보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전장관리 실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보수집·분석·전파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현 정보수집체계는 수작업에 의한 정보산출(情報算出)과 저급수준(低級水準)의 장비와 인간정보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정보산출도 수작업으로 의존하고 있어 전장감시 및 정보산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정보전파 측면도 재래식 통신수단에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둘째, 실시간 전장상황 파악 및 통제가 곤란하다.

현재 전장상황은 수작업(手作業)에 의해 기록유지 되고, 재래식 상황 전파체계로 정확한 전장상황 파악이 지연되고 있으며, 동시에 파악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며, 또한 상황이 누락되거나 중복기록과 과다한 오차발생으로 인하여 결심과 통제가 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황전파 수단과 지휘결심을 지원할 수 있는 적시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통제체계가 필요하다.

### 셋째, 통합 전투력 발휘가 제한된다.

상하 제대간, 지휘관·참모간, 전장기능간 정보 유통체계가 수동식 체계로 이루어짐으로써 각종 정보의 공유와 전장가시화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지휘 반응 시간 단축 및 제 전장기능 요소를 통합한 전력 발휘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대별 상이한 대응조치로 타격효과가 감소되며, 유희전투력 발생과 전투력의 낭비현상을 초래하여 결정적인 시기에 전투력을 집중 및 통합의 발휘가 요구된다. 그리고 획득된 표적에 대한 실시간 자동타격 및 시·공간별 통합전력은 보유화력의 85% 발휘 수준에 불과하다.

### 넷째, 탐지체계와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용이 미흡하다.

탐지체계와 무기체계의 연동이 제한되고, 독립적으로 운용됨으로써 탐지된 표적에 대한 반응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즉, 다양한 탐지수단과 무기체계간의 효율적

이고 근실시간 연동이 제한되고 타격우선 선정이나 탄약의 현황유지 등에 대한 근실시간대의 정확한 파악이 제한된다.

#### **다섯째, 전장가시화가 제한된다.**

전장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및 가시화가 수작업에 의존함으로써 적시성이 결여되고, 종이지도를 사용함으로써 IPB에 대한 입체적 가시화가 제한되며, 투명지 또는 도시요소를 표현하는 도구들은 전장을 가시화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처리된 정보와 분석업무를 가시화시 좌표체계를 갖는 오차범위는 정확성이 결여되고 상황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음성·영상 등)도 입체적인 가시화가 제한되고 있다.

#### **여섯째, 전투근무지원 요소 판단시간이 지연된다.**

현 전투근무지원 체계는 수작업에 의한 현황·지원능력에 대해 자료유지·관리·처리로 판단기준이 복잡하고 자료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전투근무지원 요소에 대한 소요예측이 불명확하고, 계획·명령작성을 위한 자료종합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결과보고·전파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각급 부대에서 전투지휘결심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시적이고, 정밀한 자료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차 전장환경에 부합되게 전투근무지원 자산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실시간 전투근무지원의 소요예측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 **1. C4I體系 構築概念 / 戰略**

정보화전력은 누가 개발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 육군 스스로 육군의 개념과 체계에 맞게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개념과 체계를 개발해야 할 문제이며, 물론 기술적인 부분적 모방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겉모습과 같은 하드웨어(Hardware) 부분은 모방 또는 도입으로 해결이 되지만 사람의 속마음과 같은 소프트웨어(Software) 부분은 기본적으로 육군 스스로의 해결책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체계개발전략은 개발목표 및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채택하여 계획수립시 기반이 되었으며, 체계개발과 관련된 제반여건, 환경, 제약사항 및 위험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어진 여건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육군에서는 피·아 전장상황을 가시화하고 핵심 센서(Sensor)를 연결하여 실시간 타격이 가능케 하며, 지휘결심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개발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그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그리고 체계구성은 수직으로는 군단으로부터 연대까지 수평적으로는 지휘통제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응용 S/W인 정보·작전·화력·전투근무지원과 공통 S/W인 상황도 도시, 전문처리 등의 다섯개 분야가 H/W 및 정보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수집자산과 타격자산은 접속장치를 통해 관련 기능실과 연동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세대간 정보유통은 전술통신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차사업의 개발범위는 전술통신체계 능력 범위내에서 S/W와 장비위주로 개발하고, 사업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였으며, 응용 S/W는 상황과악 및 조치 등 19개 과제를, 공통 S/W는 상황도 도시 등 5개 기능을, 하드웨어는 위치보고 접속장치 등 8종을 개발하였다.

그동안 육군에서 추진한 주요 개발내용은 전장가시화는 센서로부터 접수된 전장정보를 실시간에 상황도에 도시(표적·비행항적·부대위치 등)하고, 감시수단으로부터 획득된 표적영상을 보면서 전투를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소에는 영상화(映像化) 및 정보(情報)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또한 중요 상황보고·첩보처리 결과 등이 근 실시간에 상황도에 도시되도록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실시간 타격을 위해 UAV 영상으로 핵심표적을 보면서 타격하도록 개발하였으며, 핵심센서와 슈터를 연결하여 실시간 타격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하였다.

그간 한국군과 미군체계를 종합 비교해 보면 미군은 기능별 체계를 선 구축 후 공통 작전상황도(COP)를 중심으로 통합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전장 기능별 하부 시행체계를 개발하지 않고, 최초부터 전 전장기능을 통합하여 종합 상황도 위주로 개발하였다. 이는 후발주자의 이점으로서 미군도 이러한 통합체계로의 전환이 필수라는 사항을 인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는 금번에 기개발된 핵심체계에 군 비전에서 요구되는 주요 기능 체계를 개발하여 연동을 실시하면 보다 우수한 기능의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군단-연대급 전술체대의 현 지휘통제실 구성을 고려 전장기능을 정보종합실, 작전실, 통합화력지원실, 전투근무지원실별로 운용하도록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스파이더 전송속도와 개발난이도, 지휘결심의 기술적 차원 등을 고려 분석형 S/W를 제외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분석형 S/W는 차후 성능개량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군단·사단·연대급 체대는 LAN이 구축이 되고 대대급은 단말기(PC)가 보급되어 연대체계의 일부로 운용하게 되며, 특공 및 수색소대는 P-999K와 접속하여 운용되는 위치보고 접속장치로 자동적인 위치보고와 단순 상황보고 및 지시 위주로 간단한 전문 송수신이



가능하다. 지상전술 C4I체계는 스파이더 전술통신 기반하에서 운용되고 지상전술 C4I체계는 스파이더의 전송능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체계구성은 다음 그림에서 본바와 같다.

[ 체계 구성 ]



## 2. C4I體系 開發 主要內容

육군에서는 디지털 육군건설을 위한 전력증강의 일환으로 지난 '00년부터 군단급이하 전술체대의 전투수행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한 지상전술 C4I체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으며, 그중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2·3단계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전방군단에 전력화를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C4I체계 구축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등에 비하면 약 5~10년 정도 뒤진감이 없지 않으나 육군에서는 우수한 요원이 편성되어 전문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순수한 국내업체 기술로 육군의 작전환경과 교리, 작전개념 등을 반영하여 우리 육군 고유의 전술 C4I체계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전술 C4I체계 구축사업은 모든 전투력을 통합하여 전투력발휘 승수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탐지 및 타격체계를 연결하고, 적시적인 판단과 결심으로 실시간 전투력 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즉, “우리 육군의 싸우는 방법을 변경시키고, 체질을 바꾸는 일대 혁신적”인 과업(課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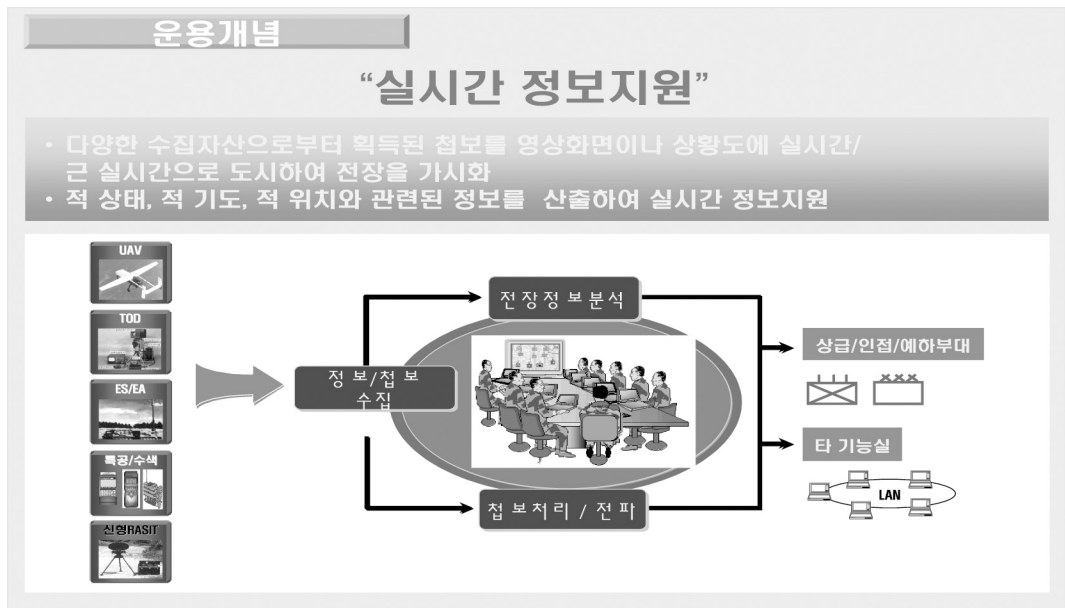
### 가. 응용 S/W 기능

육군, 전술 C4I개발단에서는 미군의 공통작전상황도(COP) 개념을 분석, 지휘통제 본부의 임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체계 홈페이지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체계의 홈페이지인 종합상황도와 지휘관이 사용하는 지휘통제홈, 각 기능실이 사용하는 기능실홈으로 개발하였으며, ‘지휘통제홈’ 구성요소는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기능실 개발내용중 지휘관에게 긴요한 자료를 연동하여 개발하고, 홈페이지는 전장을 가시화하는 상황도 영역과 업무를 수행하는 메뉴영역으로 개발하였다.

#### 1) 정 보

정보기능 개발목표는 첩보·정보의 수집·처리, 전파과정의 현황자료 지원절차를 부분 자동화하여 각 기능 및 제대에 신속히 제공하여 적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과제는 정보·첩보수집, 전장정보분석, 정보·첩보처리 및 전파 등 3가지로써 주요 기능은 다음 그림에서 본바와 같다.

[ 정보기능 개발 ]



특히 정보·첩보수집기능은 첩보수집계획 및 명령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수집·탐지체계에서 획득되는 첩보를 접수하여 관리하며, 최적의 수집 자산 위치를 자동으로 제시해 준다.

그리고 정보·첩보처리 및 전파기능은 접수되는 정보·첩보를 접수, 기록·관리하고 정보상황도에 도시하며, 처리결과를 각 기능실에 전파하되 전투첩보는 경보음과 함께 실시

간 전파되며, 전장정보분석 기능은 참모판단시 수작업으로 작성했던 작전지역 분석도와 적 능력평가, 적 작전예상도, 사태분석도 작성을 자동으로 도시는 등 참모·지휘관 판단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토록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 2) 작 전

작전기능의 개발목표는 전장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적합한 대응조치 방법에 대한 지휘결심 자료를 지원하며, 명령작성 기능과 전파 기능으로 통합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개발과제는 부대위치 관리, 전투력수준 판단, 종합상황도 관리, 계획 및 명령작성, 상황파악 및 조치, 화생방보고 관리, 방공작전 통제, 공병지원 등 8개 과제으로써 세부개발내용은 다음 그림에서 본바와 같다.

[ 작전기능 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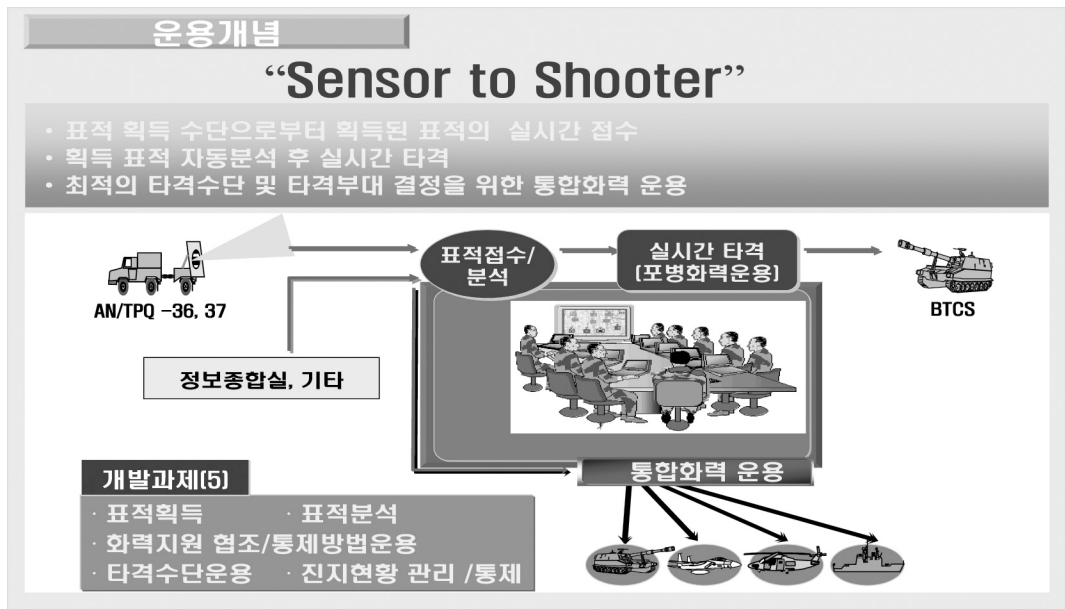
부대위치 관리는 특공/수색부대의 경우 위치보고접속장치(PRE)로부터 부대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자동 갱신하고 상황도에 도시하기 때문에 부대위치 파악을 위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전투력 수준은 전투근무지원실에서 종합되는 병력·장비현황을 기초로 자동으로 부대별·요소별 종합전투력을 산출하여 “표” 형태 및 상황도에 도시가 가능하고, 상황도상 부대 단대호 클릭시 전투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투근무지원 현황 변동시 부대전투력 현황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지휘관·참모는 항상 최신의 전투력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상황도는 적·아군부대 위치, 전투력수준, 상황일지 등이 실시간 갱신되어 자동으로 도시되기 때문에 일일이 부대위치와 전투력을 파악하여 단대호를 붙이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지휘관·참모는 그리기 기능 및 브리핑 지원기능을 이용하여 연구자료 브리핑 및 방안토의시 방안을 그려가며 토의가 가능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군단·사단·연대급제대에 대형 상황전시 장비가 보급될 예정이다.

### 3) 화 력

화력기능 개발목표는 획득된 표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화력지원 협조·통제·전과절차 부분 자동화로 실시간 타격과 통합화력 운용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개발과제는 표적획득, 표적분석, 화력지원 협조·통제운용, 타격수단 운용, 진지현황 관리·통제 등 5개 과제로써 세부개발내용은 다음 그림에서 본바와 같다.

[ 화력기능 개발 ]



그리고 표적획득은 표적탐지 레이더(TPQ-36/37)와 연동하여 실시간 획득된 표적을 접수하고, 상·하급부대에서 접수되는 표적정보를 최신화하여 관리하며 경보음과 함께 상황도에 도시함과 동시에 중복된 표적을 식별하여 최신화하고, 신규 표적은 표적번호를 부여하여 목록을 작성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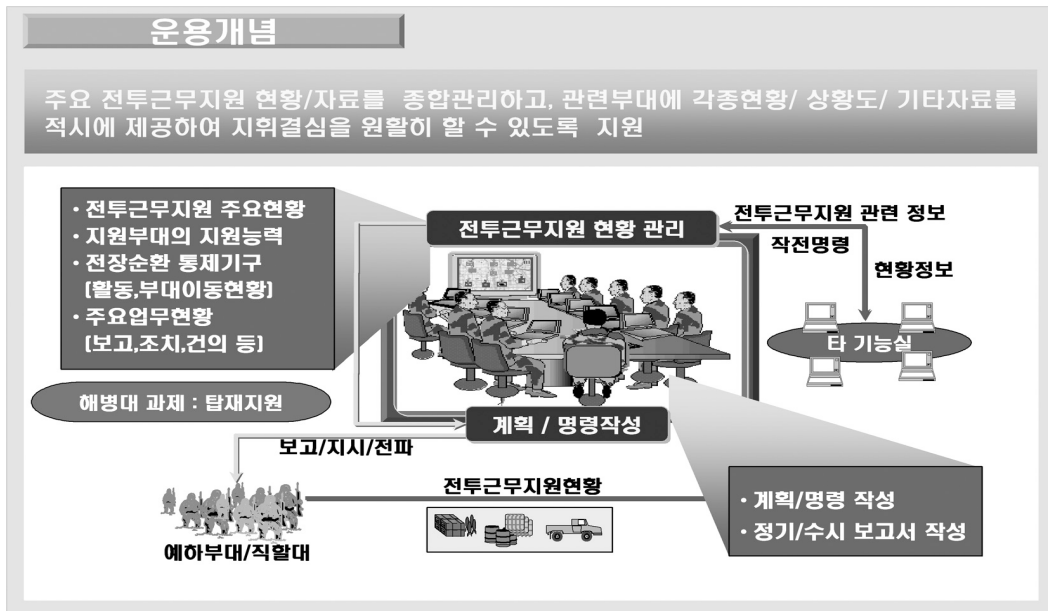
이에 따른 화력지원 협조·통제는 접수된 표적에 대한 타격 우선순위와 최적의 타격수단 결정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화력계획 작성과 이를 해당부대에 전파하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또한 화력지원 허용·제한방법을 해당시간에 상황도에 도시하고 전파

하며, 공역통제 구역을 도시하고 경고하여 주며, 진지현황관리는 포병대대 가용진지 현황과 이동제원을 관리하고 진지변환 통제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타격수단 제공은 통합화력 운용도표 및 타격명령서 작성을 지원하고 통합화력계획 표적은 타격완료시까지 상황도에 도시된다. 또한 임무수행 가능성 여부와 사격능력도를 도시하여 제공하고, 포병부대 BTCS와 연동획득된 표적정보 및 타격지시를 실시간에 전파하여 적시적인 타격이 가능하게 하며, 접수된 타격결과를 자동으로 종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재타격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토록 개발하였다.

#### 4) 전투근무지원

전투근무지원 기능은 전투수행에 필요한 전투근무지원 현황·자료를 종합관리하고, 상황도 도시를 통해 결심지원 자료로 제공하며, 관련부대에 지시 및 전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개발과제는 전투근무지원 현황관리, 전투근무지원 계획·명령작성, 해병대 상륙작전지원을 위한 탑재지원 등 3개 과제로써 세부개발내용은 다음 그림에서 본바와 같다.

[ 전투근무지원 개발 ]



이에 따라 전투근무지원 현황관리는 병력현황(동원병력 포함), 급식현황, 유류현황, 탄약현황, 장비현황(동원장비 포함), 도로지원능력 현황, 전장순환 통제기구 현황관리와 전투근무지원 상황도관리 등이다. 예하부대·직할대, 타기능실에서 접수되는 각종 현황, 상급부대 지원능력 현황 등을 관리 유지하고, 자료변동시 자동으로 갱신되어 최신자료를 유지하여 언제든지 각종 현황과악이 가능하다.



또한 전투근무지원계획 및 명령작성은 계획 및 명령작성에 필요한 각종 전투근무지원 양식과 지원부대 위치, 지원능력 현황을 토대로 계획·명령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지휘관계 및 지원관계 변동시 변경된 부대의 전투근무지원 현황이 즉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제시되고 조회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해병대 탑재지원은 전술 CAI체계가 해병사단에도 전력화되기 때문에 상륙작전 지원을 위한 추가과제로 개발하였다.

## 나. 공통 S/W 기능

공통 소프트웨어는 지휘소 자동화체계(CPAS)에서 개발된 기능중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전술 CAI체계 적용에 적합한 부분은 수용 및 보완하여 재사용하고, 그 외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개발되며, 개발되는 분야는 상황도도시, 전문처리, 시스템관리, 영상처리, 사무지원 등이다.

상황도도시 기능은 야전에서 종이 지도를 이용하여 상황을 유지하던 수동방식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방식으로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 즉 종전에는 상황도에 단대호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상황을 유지하였으나 전문처리 및 외부체계(CPAS, 탐지·타격체계)와 연동되어 접수된 응용체계 각 기능의 정보를 실시간 또는 근실시간으로 상황도에 자동적으로 도시된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경보음 및 자막도시와 함께 발생위치가 화면중앙에 도시할 수 있는 선택 대화상자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군단·사단·연대급 제대에 보급되는 대형 모니터의 상황도에서 지휘관 및 참모는 현재의 부대위치, 접촉선, 전투력, 핵심표적, 주요 전투경과 등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전문처리 기능은 실시간 전투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각 부대간 부대내에 명령·상황 등의 보고 및 지시와 관련된 문서처리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지휘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며, 정보를 전파하고 명령과 보고를 공식적으로 주고 받는데 사용한다.

시스템관리는 전술 CAI체계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체계상태를 감시, 장애(障礙)를 쉽고 빠르게 인지(認知)하여 조치함으로써 체계가 중단되지 않도록 운용 유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기타, 영상처리 기능을 개발하여 UAV, 군사정보 처리체계 등에서 획득된 영상자료를 입력하고 저장·검색·분석·편집·전파할 수 있으며, 사무지원기능으로써 문서편집을 위한 워드프로세서 기능, 수치계산을 위한 스프레드시트 기능, 사무보조 기능, 브리핑지원 기능, 비문관리 기능 등을 개발하고 있다.

## 다. 전술 C4체계 개발장비 소개

### 1) 위치보고 접속장치(PRE : Position Report Equipment)

위치보고 접속장치는 GPS로부터 위치를 수신하여 지도 및 위치를 전시하고 무전기를 이용하여 단문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개인휴대용 단말기이다. 운용개념은 지도 및 위치전시 기능과 전문 작성 및 송수신 기능은 물론, 다양한 장비와 연동이 가능하며 암호호 모듈 장착으로 메시지 비화와 적 피탈에 대비한 암호호 모듈 및 운용 프로그램 소거기능과 운용상태 표시, 설정 및 제어기능이 가능하며, 자체진단 기능이 있다.

### 2) 실시간 데이터 처리기(DLP : Data Link Processor)

전장감시 및 수집 수단으로부터 유·무선 경로를 통하여 전송되어 각 기능실의 다기능 접속장치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가공, 처리, 분배하는 장비로서 운용장소는 전산셀터 랙을 설치한 곳에서 사용된다.

운용개념은 실시간 데이터의 접수·처리·저장·전송을 하고 항적자료 비교·분리·일치 및 피아식별과 무중단 운용을 위한 랜 카드 및 전원모듈 이중화와 패킷망 이용불가 시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우회전송을 도모하고, 웹을 통한 설정 및 제어와 사용자 로그 등 데이터 백업은 물론,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 3) 디지털 모뎀 집선기(DMC : Digital Modem Concentrator)

LAN이 미설치된 제대의 노트북 PC를 스파이더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술C4I체계에 접속시켜 주는 장비로서 야전환경 및 전자파 장애에서도 운용 가능토록 MIL-SPEC 수준이 충족되고 있다. 운용개념은 연대급 이상부대의 전산셀터내 랙에 장착되어 설치 운용하고 군단, 사·여단 및 연대급부대의 직할부대, 지원 및 배속부대 등 LAN이 설치되지 않은 부대를 DSMT로 연동하여 단말기의 데이터 통신 경로구성과 DSMT/DMT를 16대까지 가입시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지원을 하며, 무중단 운용지원(운용간 불량카드 교체가능), LAN 접속 및 원격제어기능 지원, 데이터 처리 및 에러보정, 암호모듈 내장 및 암호화 통신제공을 한다.

### 4) 다기능 접속장치(MFE)

전술부대가 보유한 감시 및 타격체계와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는 접속장치로서 야전환경 및 전자파 장애에서도 운용 가능토록 MIL-STD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기능 접속장치(MFE)의 운용개념은 지휘소내 각 기능실에 설치 운용함으로써 유·무선 장비 6대까지 연결하여 운용이 가능하며, 감시·타격 체계와 데이터 통신 기능지원은

물론 실시간 데이터 처리기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LAN 접속 및 원격제어와 무중단 운용지원(운용간 카드교체 가능)과 선로 및 장비 이상시 경고 및 자체진단이 이루어지고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 5) 전산셸터(SHT : Shelter)

지상전술 C4I체계의 전산장비 및 데이터통신 장비를 장착하여 체계내의 모든 유통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동화된 전산셸터이다.

운용개념은 상용 전산장비 및 데이터통신 장비탑재, 사단급 이상은 전산셸터를 주·예비 셸터로 이중화 구성하여 기동간에는 주·예비셸터를 축차적으로 기동하여 24시간 무중단 운용을 지원한다.

### 6) 무정전 전원공급기(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상용전원이나 발전기 중단시, 전산셸터내의 전산 및 데이터통신 장비에 무중단 전원을 일정시간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비로서 감시 판넬을 통하여 무정전 전원 공급기의 상태 감시를 위해 입출력 전압, 배터리, 전원 과부하, 내부온도 감시를 위해 야전환경에 운용가능토록 MIL-SPEC의 견고화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운용개념은 각 부대 전산셸터내 및 후방지휘소에 설치하여 운용한다.

### 7) 보호케이스(ERC : Equipment Rugged Case)

지상전술 C4I체계의 전산셸터내에 설치되는 상용장비를 전산셸터 및 장비 이동간 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이다. 운용개념은 전술C4I체계에 적용되는 상용장비의 규격변화 및 진동, 충격에 대비하여 폼쿠션을 이용 융통성있게 제작되었고, 전산셸터내 장착 가능하도록 소형화, 경량화 되었으며, 비운용시와 이동시 장비보호는 물론, 전산셸터내 RACK에 장·탈착, 도수운반 및 차량탑재 운반에 용이하다.

### 8) 종합시험 측정장비(ATE)

C4I체계 장비중 디지털 모델 집선기, 다기능접속장치(신호변환기 포함), 위치보고접속장치의 카드조립체, 연결케이블 이상유무를 진단하는 장비이다. 운용개념은 사단·군단 정비대대에 설치운용하고 지상전술 C4I체계 개발장비의 3, 4계단 정비시 사용하며, 각 장비의 고장수리를 위하여 검사대상 품목의 기능 및 성능을 시험 측정하여 고장부위 및 위치를 식별하고 수리후 정상적인 작동 유무를 시험하는 장비이다.

## 라. 타체계와의 연동기능(CPAS / 기타)

전술 C4I체계와 연동이 되는 체계는 전략 계대급 지휘소 자동화체계(CPAS),

UAV, 신형 라지트, 전자전 지원·공격 장비(ES/EA), 저고도 탐지레이더(TPS-830K), 위치보고접속장치(PRE), 표적탐지레이더(TPQ-36/37), 포병대대 전술사격 지휘체계(BTCS) 등 8개 체계이다.

#### 마. C4I체계 전·평시운용

지상전술 C4I체계 전·평시 운용은 체계가 지원하는 각종 기능을 이용 전·평시부터 지속적으로 체계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훈련시는 물론, 전시에도 효과적으로 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휘통제본부는 전장협조실, 정보종합실, 작전실, 통합화력지원실, 전투근무지원실로 구성 운용되며, 그중 전장협조실(상황실)은 전·평시 및 훈련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지휘관이 현장지도를 한다고 하여 보고용 상황판을 별도로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술 C4I체계가 전력화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으며, 즉 특공/수색 부대위치가 GPS 기능에 의해 자동으로 도시되고 각부대의 위치가 최초 입력제대에서 한번 입력으로 각 기능실에서 종합된 적 위치, 전투력 수준, 상황일지 등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도시된다. 또한 지휘통제본부와 필요시 일반사무실에 LAN을 구성하여 체계를 운용하며 경계작전관리, 야외 훈련부대 통제 및 보급수송차량 통제시에는 지휘통제본부 LAN에 접속하여 상황보고 및 브리핑을 수행한다. 그리고 지휘관, 정보·작전·인사·군수참모부를 LAN으로 구성하는 일반사무실은 부대운용에 따라 지휘통제본부와 연동하여 현황보고, 데이터관리, 전문처리 및 사무지원을 통하여 보고·지시·전파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시 지휘통제본부 내에 구성되는 각 조직은 평시 소속된 부대에서 체계를 이용하다 훈련시 또는 전시 상황하에서 전환 운용하고 즉각적으로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는 평시부터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3. C4I體系 維持補修

#### 가. 유지보수 개념

지상전술 C4I체계는 지휘통제용 무기체계로써 개발장비, 방산(지원)장비, 보안장비, 상용장비, 상용 및 S/W로 구성되며, 군수품화하여 관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체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정비대상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 설정하였으며, 정비지원 절차는 군직정비 후 외주정비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정비를 수행한다. 이에 체계정비에 대한 군직정비 수행 범위로서 상용장비는 부대정비까지, 개발

장비는 부대정비 및 야전정비까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정비 소요발생시 외주정비를 수행한다.

체계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군직정비 수행범위는 상용소프트웨어는 부대정비까지, 개발 소프트웨어는 부대정비 및 야전정비까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정비 발생시에는 외주정비를 요청하여 수행한다.

따라서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야전정비 수행은 육군에서(유지보수처)에서 수행하며, 사용부대에서 유지보수 범위를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장애에 대하여 인가된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상전술 C4I체계의 24시간 무중단 운용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지원장비에 대한 표준화와 호환성을 유지하고 가급적 현 지원체계를 활용토록 개발하여 운영유지비를 최소화 하였고, 야전배치 운용간 경험제원을 수립·분석하여 최신의 제원으로 정립하고 성능개선간 환류시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사항은 C4I체계가 진화적 개발전략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 및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운용유지 추진방안

전술 C4I체계 운용유지를 위한 현 추진계획은 체계관리책임은 지휘통신참모부 통제하에 통신부대 지휘관 및 참모(전산요원)가 수행하며, 지휘통신참모부서가 편성되지 않은 제대는 작전참모부서에서 통제하여 운용유지할 책임을 진다.

체계관리를 위하여 군단·사단급부대 전산운용 요원은 현편제 인원을 활용하고 여단·연대급 부대중 전산운용 요원이 미편성된 부대는 인원이 추가되며, 체계정비를 위하여 군단 일반지원 정비대대에 정비병, 사단 통신대대에 정비병이 스파이더 정비병으로부터 전환 편제되며, 전산 셀터차량 운영을 위한 운전병이 추가 편성된다.

## V. 期待效果 / 制限事項

### 1. 기대효과

지상전술 C4I체계가 전력화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전장상황 파악이 용이해진



다는 점이며, 정보처리 소요시간이 현재 25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고, 아군 위치파악이 현재 45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는 등 전장상황 파악과 조치가 용이하고 신속해짐은 물론, 우리 육군의 신경조직에 일대 혁신과 함께 근실시간 전장상황을 공유하고, 작전템포가 빨라져 작전성공 확률이 향상될 것이다. 즉 특공/수색부대 위치가 GPS기능에 의해 자동으로 상황모니터에 도시되고 자신이 부대위치를 입력시 전부대가 위치를 공유하는 등 부대위치 및 전투력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되며, 각종 탐지체계 및 예하부대, 상급부대에서 파악된 적 상황이 상황모니터에 도시되어 적 상황 파악은 물론, 또한 전투상황 관련 부대별, 시간대별 상황일지가 자동으로 유지되어 예하부대 전투상황 파악이 용이하다. 종전방식과 비교해 볼 때 전화·팩스 등으로 부대위치·전투력을 보고받아 상황도에 일일이 도시하며, 수시간 지난 상황을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변화인 것이다. 또한 표적탐지레이더(TPQ-36/37)와 포병의 BTCS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발견된 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이 가능해 지고 포병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 제한사항

전술 C4I체계는 전술통신체계(스파이더)를 기반체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파이더 전송능력 범위내에서 체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IMF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어 개발범위와 전력화범위를 축소화하였다. 그리고 개발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분석형 S/W를 제외시킴으로써 참모판단 및 지휘결심 지원을 위한 기능별 업무 자동화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는 등 야전 운용상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1차 전술 C4I체계는 군단~연대급제대 위주의 체계로 대대급은 단말기(PC)만 연대 전술 C4I체계 LAN에 유무선으로 연결 운용하기 때문에 대대급이하 제대는 지휘통제가 제한되며, 지휘소가 이동간에는 체계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장차전 양상이 비선형 전투와 전·후방 동시전투로 연대급이하 제대는 지휘소이동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대급이하 제대는 이동간에도 지속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한 전술 C4I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1차 전술 C4I체계 개발이 종료되면 정보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연대급이하 전술 C4I체계 및 성능개선에 대한 개념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성능개선 사업은 1차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핵심 분석형 S/W개발과 지휘소 자동화체계 및 탐지·타격체계의 연동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분석형 응용 S/W개발을

제외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필요한 분석형 기능제공측면에서 미흡하며, 지휘소 자동화체계 성능개선이 되면 군사령부와 군단간은 WEB으로 D/B를 연동하여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차기전차·장갑차, 소형 UAV, 방공작전 시스템, 다목적 헬기 등 추가 탐지·타격체계가 개발되면 전술 C4I체계와 연동되도록 하는 등 연동수준 향상을 위한 성능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3. 발전방향

지상전술 C4I체계가 전력화되면 이미 언급했듯이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우리 육군이 축적했던 정보화 인프라를 기초로 육군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싸우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등 육군의 개혁은 물론, 큰 변화인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전술C4I체계 전력화와 관련된 변화를 전파하고 각자 위치에서 전술C4I체계 전력화에 맞추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스스로 역할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사전에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요소를 준비해야 한다.

#### 가. 교리발전 필요성

전술C4I체계 전력화지원요소로 개발업체가 동시에 제작 발간 예정인 교리문헌은 체계운용에 필요한 지침서와 기술교범으로서 지침서는 일반운용요원(단말기, 체계관련 장비운용)에게 필요한 “사용자 지침서”와 전문운용요원(통신부대 지휘관, 참모, 전산장교)에게 필요한 “관리자지침서”를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서는 운용상의 전술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 아닌 체계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서일 뿐이며 향후 많은 훈련과 사용을 통해서 교리와 훈련면에서 무엇을 개선하고 변경시킬 것인지 검토,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교범을 발간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현재까지의 부대훈련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와 평가도 변화가 요구된다.

전술C4I체계가 전력화됨에 따라 기준교리와 통신체계교리에 대한 교범(교육회장) 신규발간과 지상작전, 부대지휘절차, 체대별 교범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소요는 교육사 및 학교기관에서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 나. 사용자 교육

물론 체계를 전력화시 개발업체에서 부대별로 체계인수전에 최초 운용자교육을 실시하지만 육군 전 교육기관과 해당부대에서 자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관을 양성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은 육군대학 및 각 병과학교 양성·보수 교육과정에 전술 C4I체계 소개와 운용개념, 체계운용 요령, 체계관리, 유지보수 등에 대한 내용을 전술 C4I체계가 전력화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야전부대교육은 부대별로 지휘관 재량에 의거 전술 C4I체계에 따른 운용 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직책별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무훈련(OJT) 및 부대교육시간을 이용하여 주특기(MOS)훈련은 물론, 간부교육을 숙달시켜야 한다.

#### 다. 유지보수체계 구축

지상전술C4I체계는 최초 전력화되는 무기체계로써 통신전자장비, 기동장비, 일반장비, 상용 및 개발 S/W로 구성되며, 유지보수책임은 군수품화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군수참모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방부 군자체 유지보수지침에 의거 육전소에 유지보수처를 편성하여 S/W 유지보수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H/W는 군참부에서 S/W는 지통부에서 유지보수관련 참모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체계가 고장났을 때 고장원인이 H/W에 있는지 S/W에 있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가 조치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정비소요 건의가 지연되고 정비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정확한 업무분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 라. BCTP훈련방법 변경 모색

BCTP훈련은 군단장 재임기간중 워게임 모델을 이용하여 지휘통제기구 훈련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BCTP훈련의 장점은 실전투력을 운용하지 않고 지휘관·참모가 전장실상을 체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상황묘사, 훈련통제, 통신망구성 등을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대W/S과 사단지휘소간의 정보유통은 유선/FAX를 이용하여 부대위치·전투력 등을 보고하고 사단지휘소에서는 일일이 상황도에 도시하고 현황을 수정보고함으로써 상황파악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시간이 지나간 상황을 유지하며 상황조치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전술 C4I체계가 전력화와 병행하여 기존의 W.G모델과 연동되는 체계를 개발하여 실전투장비를 사용할 지휘관·참모훈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야전에서는 연대 RCT 및 호국훈련 등 예하부대 평가 및 훈련을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전술 C4I체계를 이용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통제 방안 등을 연구하고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마. 전·평시 전장상황 유지/발전

전술C4I체계가 전력화되면 부대위치의 전 부대공유 및 도시와 각 기능실에서 종합된 적 위치는 물론, 전투력 수준이 자동으로 갱신됨으로써 따라서 상황실은 전·평시 및 훈련시에도 동일하게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평시 교육훈련과 수색/매복 등의 작전활동시 위치 및 상황과악 등 다양하게 전술C4I체계의 특성을 발전시켜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VI. 結 論

모든 국방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 간부와 장병들은 물론, 그동안 육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술 C4I체계 개발내용을 토대로 향후 육군의 핵심전력(核心戰力)이 될 C4I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모두 공감(共感)했으리라 본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라크전쟁에서 시사(示唆)한 바 있듯이 이라크군은 각종 재래식 대공포를 빈틈없이 배치한 다음 수천발의 포탄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린 반면, 미군은 센서식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추적하는 첨단무기로 1,000km 밖에서 이라크 주요 목표물을 선별적으로 초토화시킨 것을 목도(目睹) 하였다. 즉, 방어(防禦)하는 이라크 군대는 일일이 표적을 눈으로 보고 조준해서 사격하는 방식으로 싸웠다면, 공격(攻擊)한 미군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맥락(脈絡)에서 C4I체계의 구축은 현대전과 미래전에 있어서 전장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전술임을 고찰하였으며, 선진국의 C4I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앞으로 21세기 미래전의 양상은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전쟁(Information Warfare)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쟁의 승패는 첨단 군사기술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한국군의 현대화는 이러한 미래의 전쟁수행개념과 군사력 요구에 기반을 두고 모든 군사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술C4I체계는 기술구조와 운용구조, 체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육군 모든 기능의 통합이라는 면을 감안하면 한번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이를 개발하여 야전에 배치하는 과정은 더 어렵다. 단순히 기술분야만 알아도 안되고 운용분야만 알아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만을 알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나 이는 전체를 바라보는 조화(調和)와 균형이 결여된 것이다. 단지 부분적인 참고·개선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으로 전체를 평가·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쉽지 않은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10여년간 수많은 선배 전우들이 음으로 양으로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그 당시의 최선의 결정을 내려오면서 계속 추진하여 왔기에 오늘의 이러한 결과가 있고 그 당시의 교훈(敎訓)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지속발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부단한 노력(努力)이 요구되는 시발점에 서 있다. 모두의 체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깊은 애정과 정성을 쏟아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육군 전술 C4I체계 구축과 진일보(進一步)된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思考)는 물론, 사용자 요구를 확인하며, 합리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육군으로서 우수한 C4I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내(堪耐)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통합 C4I체계를 앞당겨야만 완벽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합동·통합 C4I체계 구축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우리 실정에 알맞은 모형으로 개발되고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장차 한반도에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부터 이양받을 시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東國兵鑑」에 나타난 전투현황과 전술형태분석

## 목 차

- I. 서 론
- II. 본 론
  - 1. 전투현황 분석
  - 2. 전술형태의 다양성
- III. 결 론



교수 문형진  
(한국외대 외국학센터)

## I. 서 론

『동국병감』은 우리나라 대외항쟁사를 기술한 책이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약 1,500년 간의 역대 전쟁사를 다루고 있다. 상·하 두 권으로 편성하였고 37개 전투 현황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책의 제목을 ‘병감(兵鑑)’이라고 붙인 것은 ‘역대 전란을 거울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포한 것이다. 이에 조선시대 무장들의 필독서였고, 무과 취재시험에서 취재과목으로 활용되었다.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라 과거의 국란사를 통해 교훈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조선 문종때 의정부에서 『동국병감』의 편찬 필요성을 건의하면서, 우리나라 무장들이 정작 우리나라 전란사를 모른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전쟁사는 『사기』나 『자치통감』 등을 통해 꿰뚫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전쟁사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한탄한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동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김부식 또한 당시의 무장들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해박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깨우치고자 『삼국사기』를 기술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동국병감』 상권의 전쟁사는 많은 부분에서 『삼국사기』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아마도 『삼국사기』의 편찬 동기까지 계승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이 책이 짜임새 있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상권과 하권의 구분이 분량을 균등히 하는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구분되었고, 고려시대 이전의 전쟁사는 피아가 뒤바뀐 채 기술되어 있다. 즉 중국의 역사책을 답습한 『삼국사기』를 그대로 인용한데서 비롯된 흠결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우리나라를 주체로 하여 전투현황을 소개하였다.

이 책의 편찬자는 중국의 강대한 제국에 맞서 싸웠던 우리민족의 저항정신이 계승되기를 바랐다. 승전뿐만 아니라 패전 또한 날카롭게 분석함으로써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 그러나 한자로 기술되어 있고 내용이 방대하여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체적인 전투 현황을 나라별로 묶어 분석하였고, 전술체계부분에서는 귀감이 될 만한 전술형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조망하였다.

과거의 역사는 곧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다. 지나온 국란사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춰야할 당연한 소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때로는 소홀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동국병감』은 이러한 나태함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판단된다. 본고를 작성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 II. 본 론

### 1. 전투현황 분석

『동국병감』은 조선초 문종의 명에 의해 편찬을 시작하여 세조 1년(1455년) 완료하였다. 조선초 『오위진법』과 『병장설』 등 여러 군사관련 서적이 편찬 되면서 함께 완성되었다. 세종을 전후한 문화중흥기에 편찬된 다양한 역사서와 지리서 등과 더불어 병서 또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편찬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문종실록에 기술되어 있는 『동국병감』 편찬 동기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나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외적이 침범해 온 사실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어 대책 및 항전 경과와 득실 등을 살펴서 장차 외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상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동국병감』은 과거의 외침을 교훈삼아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전란을 미리 대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초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내걸었던 편찬 동기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김부식은 당시의 무장들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현실을 한탄하며 『삼국사기』를 편찬했기 때문이다. 여하튼 『동국병감』은 조선초 정도전이 추진한 진법훈련이 발미가 되어 정도전을 소환하는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악화된 명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북방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침입에 대비하고자 하는 역사적 식견 속에서 편찬된 책이라 할 수 있다.

『동국병감』은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침략한 것으로부터, 고려 말엽 1383년에 이성계가 여진족 호바투 군을 길주에서 몰아내기 까지, 약 1,500년간의 전쟁 사례를 3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sup>1)</sup>

이 가운데 ‘고려가 여진족을 공격’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국의 한족과 북방 이민족들의 침략에 맞서 싸운 항전의 기록들이다. 그 대체적인 전투현황과 전쟁발발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동국병감』에 기술된 전투현황과 전쟁발발시기

순서	국문(번역) 제목	원문 제목	전쟁 발발 시기
1	한 무제 군이 조선을 침략하다	漢武帝定朝鮮爲四郡	B.C. 109
2	고구려가 선비족을 항복시키다	高句麗擊降鮮卑	B.C. 9
3	고구려가 한의침공을 막아내다	高句麗禦漢兵	대무신왕11년(28)
4	고구려가 요동-현토군을 막아내다	高句麗攻遼東玄菟	태조대왕69년(121)
5	고구려가 한의침공군을 패퇴시키다	高句麗敗漢師	신대왕8년(172)
6	위의 관구검이 환도성을 함락하다	魏毋丘儉攻陷高句麗丸都城	동천왕20년(246)
7	연의 모용외 군이 고구려를 침공하다	燕慕容廆侵高句麗	봉상왕2년(293)
8	연의 모용황 군이 환도성을 격파하다	燕慕容皝破丸都城	고국원왕12년(342)
9	수 문제 군이 고구려를 침략하다	隋文帝伐高句麗	영양왕9년(588)
10	수 양제 군이 고구려를 침략하다	隋煬帝伐高句麗	영양왕23년(612)

주 1) 『동국병감』은 상하 두 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문에서는 역대 왕조의 전쟁사를 시대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제1장, 제2장으로 장을 구분하여 붙인 것은 필자가 편의상 설명을 쉽게 하기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순서	국문(번역) 제목	원문 제목	전쟁 발발 시기
11	수 양제 군이 고구려를 재침략하다	隋煬帝復伐高句麗	영양왕24년(613)
12	당 태종 군이 고구려를 침공하다	唐太宗伐高句麗	보장왕4년(645)
13	당 태종 군이 고구려를 재침공하다	唐太宗復伐高句麗	보장왕6년(647)
14	신라-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다	唐及新羅滅百濟	의자왕20년(660)
15	신라-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침공하다	唐及新羅伐高句麗	보장왕14년(655)
16	신라-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다	唐及新羅滅高句麗	보장왕26년(667)
17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하다	唐伐新羅	문무왕13년(673)
18	거란 군이 고려를 침략하다 (1)	契丹侵高麗	성종12년(993)
19	거란 군이 고려를 침략하다 (2)	契丹侵高麗 (二)	현종원년(1010)
20	거란 군이 고려를 침략하다 (3)	契丹侵高麗 (三)	현종9년(1018)
21	고려가 여진족을 공격하다	高麗擊女眞	숙종9년(1104)
22	거란 유적이 고려를 침범하다	丹賊寇高麗	고종3년(1216)
23	고려장군 김희제가 동진 군을 격파하다	高麗金希禪擊東眞	고종6년(1219)
24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하다(1)	蒙古侵高麗	고종18년(1231)
25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하다(2)	蒙古侵高麗(二)	고종23년(1236)
26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하다(3)	蒙古侵高麗(三)	고종34년(1247)
27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하다(4)	蒙古侵高麗(四)	고종41년(1254)
28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하다(5)	蒙古侵高麗(五)	고종42년(1255)
29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하다(6)	蒙古侵高麗(六)	고종44년(1257)
30	고려가 하란 침공군을 격파하다	高麗破哈丹	충렬왕16년(1290)
31	고려가 홍건적을 격파하다	高麗破紅賊	공민왕8년(1359)
32	고려가 재차 홍건적을 격파하다	高麗復破紅賊	공민왕10년(1361)
33	고려가 나가추 군을 패퇴시키다	高麗走納哈出	공민왕11년(1362)
34	고려가 덕흥군을 몰아내다	高麗逐德興君	공민왕13년(1364)
35	고려가 올라성을 탈취하다	高麗取兀刺城	공민왕19년(1370)
36	고려가 동녕부를 공격하다	高麗擊東寧府	공민왕19년(1370)
37	고려가 호바투 군을 몰아내다	高麗逐胡拔都	우왕8년(1382)

상권에는 제1장 ‘한 무제가 조선을 침략하다.’에서 시작하여 ‘거란 군이 고려를 침략하다.’까지 20개의 장으로 기술하고 있고, 하권에는 제21장 ‘고려가 여진족을 공격하다.’에서 ‘고려가 호바투 군을 몰아내다.’까지 1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위만 조선을 제외하고 제2장부터 제17장 까지가 삼국관련 전쟁사이고 제18장부터 제37장까지가 고려시대의 대외항전사인 점을 고려하면 제18장부터 상하권의 경계가 되어야 하지만, 이 책은 시대적 구분이나 전투의 유사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분량의 균등성만을 고려하여 편의상 상하권으로 나누고 있다.

『동국병감』의 결함은 구성면에서 뿐만 아니라 서술체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상권 제1장에서부터 제17장까지의 기록, 즉 고조선에서 삼국시대까지의 기록은 전투현황을 기술함에 있어 피아가 바뀐 채 기술되어 있다. 중국이 적으로 기술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적으로 기술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제18장부터 제37장까지의 기록은 이와 반대로 적을 중국 내지 북방 이민족으로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즉 하권의 책속에 삼국시대까지는 적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고려시대의 전쟁사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북방 이민족이 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권의 책 안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이는 『동국병감』을 저술함에 있어 인용한 사료가 달랐기 때문이다. 삼국시대까지의 기록은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피아가 바뀐 서술 형태를 띠고 있고, 고려시대의 기록들은 『고려사절요』와 『고려사』 같은 우리나라 역사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삼국시대까지의 전쟁사는 군의 편제나 전투 상황, 전쟁의 승패 분석 그리고 지휘체계에 이르기까지 중국측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중국에서 바라 볼 때 자랑할 만한 전투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패전이나, 불리한 현황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기술하거나 아예 누락시켜버리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전쟁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군 지휘 체계와 전투현황 등이 고려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전투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한 무제 군이 조선을 침략하다.’에서는 한의 무제가 위만조선을 침공한 연유가 기술되어 있다. 양복(楊僕), 순체(荀悅) 두 장수를 파견하여 수륙 양로에서 위만조선을 공략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sup>2)</sup> 중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발해를 건너 해로로 위만조선을 침공한 양복이 왕검성(王儉城)에서 우거왕(右渠王)에게 패전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왕검성을 포위하고도 수개월 동안 함락시키지 못한 점, 수륙 양군을 이끈 양복과 순체

주 2) 한 무제가 조선을 침공할 때 육로사령관으로 순체를, 수로 사령관으로 양복을 임명하여 수륙양면에서 공격하였다. 두 장수가 이끌고 간 병사는 대략 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조선전사』 2 고대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북한), 1979, 108쪽).



두 장수를 이간시켜 한의 전력을 약화시킨 점<sup>3)</sup>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장의 기록을 통해 위만조선은 한의 대규모 침공군을 맞아 지형을 활용한 지연술과 적장을 이간시키는 이간책 등을 이용하여 한의 침공을 막아냈음을 알 수 있다.

제2장부터 제16장 중 제14장 '신라-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다.'를 제외한 14장은 모두 고구려의 전투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한 것과 한나라와 고구려간의 전투를 각각 3장으로 나누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당 태종이 고구려를 공략한 것과 신라-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침공한 것 그리고 연나라와의 전투를 각각 두 장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고구려와 한나라간의 전투는 총 3장이다. 고구려가 한의 침공군을 막아낸 제3장과 고구려가 한나라의 요동-현도군을 공격한 제4장 그리고 고구려가 한의 침공군을 물리친 제5장이다.

제3장에서는 고구려 제3대 대무신왕 11년(28년) 7월 한나라의 요동 태수가 군사를 일으켜 침공한 사실을 적고 있다. 대무신왕은 을두지(乙豆智)의 견해를 받아들여 무모한 전쟁을 피하고 성을 굳게 지키는 지구전으로 대항하여 한의 침공군을 막아낸다. 제4장에서는 고구려 제6대 태조대왕이 중앙집권 체제를 갖춰가면서 한 나라 세력과 정면 대결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요동군의 공격에 대해 태조왕은 침공군의 진로를 차단한 후 요동성을 공략하여 함락시켰고 요동태수까지 죽인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제 5장에서는 고구려 제8대 신대왕 8년(172년) 한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신대왕은 명림답부(明臨答夫)의 견해를 받아들여 수성방어 전술을 편 후 적이 후퇴하면 후방을 공략하는 전술을 펴 한나라 군사를 섬멸하였다.<sup>4)</sup>

연(燕)나라와 고구려의 전투는 제7장 연의 모용외(慕容廆)군이 고구려를 침공한 것과 제8장 연의 모용황(慕容皝)군이 환도성을 격파한 전투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다. 제7장에서는 고구려 제14대 봉상왕(烽上王) 2년(293년) 8월에 연나라의 모용외가 고구려를 침공해 왔다가 고노자(高奴子) 군에게 대패하여 되돌아갔고, 3년 후인 봉상왕 5년 8월 고구려를 재침하여 서천왕(西川王)의 시신을 파헤치다 인부가 죽고 무덤속에서 음악소리가 들리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 군사를 철수한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제8장에서는 모용외의 아들 모용황이 고구려를 침공하여 고국원왕의 부친인 미천왕의 시신을 파내어 신고 생모를 인질로 잡아 감으로서 굴욕적인 항복을 청할 수밖에 없었음을 교훈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수나라와 고구려와의 관계는 제9장부터 제11장까지 3장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제9장 수 문제 군이 고구려를 침공한 부분에서는 고구려를 침략한 수 문제의 30만 대군이

주 3) 『漢書』 卷 95, 朝鮮傳 第65 <3866>.

4) 『三國史記』 卷 第16 高句麗本紀 第4 新大王 8.

홍수와 전염병 그리고 폭풍우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해 철수하였다.<sup>5)</sup>라고 중국측 자료를 인용하여 소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단순한 자연 재해라기 보다는 고구려 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형세가 불리한데다 장마철을 맞아 요하가 범람함으로써 보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여기에 전염병까지 창궐하자 퇴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서 그리 자랑할 만한 전투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고구려와 관련된 부분은 축소시키고 퇴각 원인을 자연재해로 돌려 기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10장에서는 문제의 아들 양광(楊廣)이 아버지와 형을 죽이고 황제가 되어 전차 5만 대와 전선 3백척 그리고 113만의 대병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공한다.<sup>6)</sup> 그러나 전투에 임하는 현지 장수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고 양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sup>7)</sup> 전술상의 문제로 인해 고구려 군에게 대패한다. 제11장에는 수 양제가 1차 원정에서 참패를 당한지 6년 후인 영양왕 24년(613년) 고구려를 재차 침공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양제는 1차 침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군보다는 소수 정예병으로 군사를 편성하였고, 각 군 지휘관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고구려 측에서는 수나라의 대병을 정면에서 맞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을두지나 명림답부가 활용하였던 수성방어 계획을 활용하여 성을 지키면서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을지문덕을 비롯한 고구려 병사들의 적극적인 저항에 부딪치고 수나라 내에서 양현감(楊玄感)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제는 하는 수 없이 또 다시 군사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당나라와 고구려간의 전투는 당 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한 두 차례의 전투(12, 13장)와 신라-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침공한 두 장(15,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 태종의 고구려 1차 침입을 다루고 있는 제12장에서는 당 태종이 역신 연개소문을 토벌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정병 10만 명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안시성 전투<sup>8)</sup>에서 3개월을 허비한 끝에 폭설과 흑한이 겹쳐 철군한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sup>9)</sup> 제13장은 당 태종이 고구려를 재침한 내용으로 1차 침입의 실패를 거울삼아 3년 동안 준비한 끝에 보장왕 7년(648년) 1월 25일 고구려를 침공한다. 그러나 당 태종은 끝내 고구려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듬해인 649년 5월 '고구려 원정을 중지하라'는 한 많은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다.

주 5) 『資治通鑑』 卷178 開皇 18年(598) 9月.

6) 『資治通鑑』 卷181 大業 7年(611) 2月 壬午 ; 8年(612) 1月 壬午.

7)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第8 嬰陽王 23年(612).

8) 박지원은 그의 저술 『열하일기』에서 '안시성주 양만춘이 당 태종의 눈을 쏘아 맞히자, 태종이 성 아래서 군사를 직접시켜 시위(示威)하고, 양만춘에게 비단 1백 필을 하사하여 그가 자기 임금을 위하여 성을 굳게 지키는 것을 가상(嘉賞)하였다.'고 기술하였다.(박지원 저·임정기편, 『열하일기』, 민족문화추진회, 1980, 58~59쪽).

9) 『高句麗 對隋唐戰爭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民族戰亂史8, 1991, 198~200쪽.

제15장은 신라-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침공한 전투이다.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을 맞아 남북 양쪽에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연개소문의 지휘하에 처절하게 싸움을 벌려 당나라 군사를 물리친다. 제16장에는 나당연합군에게 고구려가 멸망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666년에 고구려의 구심점 이었던 연개소문이 죽자 자식들간에 권력투쟁이 발생하여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당 고종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음해인 667년 원정군을 파병한다. 북방에서 진격한 당나라군과 남방에서 북상한 신라군이 평양성을 포위한지 1개월 만에 성이 함락된다. 이 장에서는 중국의 역대 제국이 수많은 군사를 파병하여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불굴의 투지로 적의 침입을 막아냈던 고구려가 정작 내분으로 멸망했음을 기술함으로써 가장 큰 적은 외세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임을 지나온 역사를 통해 교훈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18장부터 20장까지는 거란군이 고려를 침략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918년 왕건에 의해 개국된 고려는 건국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문물제도를 완비해갔다. 동시에 왕권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던 신라의 골품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 왕조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선 후, 북방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중국 중원을 통일하기 위해 남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송을 물리쳐 중국대륙을 지배하고자 했던 거란족에게 있어 고려의 정벌은 선결과제였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고려를 후방에 두고서 송을 치기 위해 대규모 군사력을 남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거란족은 고려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성종 12년(993년) 대군을 파병하여 고려를 침공하였으나 서희의 외교술에 말려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sup>10)</sup>

1차 침공이 소득이 없었음을 파악한 거란 군주 성종은 ‘역신 강조를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40만 대병을 동원하여 고려를 재침공한다. 고려에서도 거란의 재침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술의 실패로 통주전투에서 패배한 뒤 거란군에게 개경을 점령당한다. 현종 2년(1011년) 정월 1일 개경에 입성한 거란군주는 태묘와 궁궐, 민가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불질러 태워 버렸다.<sup>11)</sup> 거란의 2차 침입으로 고려의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고려는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다.

주 10) 서희의 외교술에 말려든 소손녕은 고려 영내에서의 즉각 철군과 고려의 강동 6주 영유권을 인정 하는 조건으로 강화교섭을 체결하였다.(朴賢緒, 『北方民族과의 抗爭』 『韓國史』 4, 國史編纂委員會, 1974, 268쪽 ; 『東史綱目』 第6 下 癸巳年 成宗 12年 閏 10月).

11) 『高麗史』 卷4 顯宗 世家 2年 1月 乙亥.

요나라 성종이 귀국한 후 고려 국왕이 끝내 요 조정에 입조하지 않자 요 성종은 재출병을 계획하게 된다. 현종 9년(1018년) 12월 10일 요 성종은 정예병 10만 명을 소배압에게 주어 고려를 침공하게 한다. 소배압은 개경을 함락하여 고려 군주를 사로잡으면 된다고 판단하여, 정예부대를 이끌고 신속하게 개경을 향해 진군한다. 그러나 강감찬의 뛰어난 전술에 말려 살아남은 자가 겨우 수천에 불과 하였다. 고려초 거란족의 침입을 물리친 고려는 이후 100여 년 동안 문화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권은 제21장부터 37장까지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한 사례가 6개의 장으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고, 고려 말 이성계의 활약상이 제33장 나가추 군을 패주시킨 것에서부터 제37장 호바투 군을 몰아내기까지 5장에 걸쳐 서술되어 있다.

『동국병감』 하권에서는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한 과정을 제24장에서 제29장까지 6장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몽고군의 제 1차 침입을 다룬 제24장에서는 몽고군이 고려를 침공하게 된 배경이 고려에서 공물을 받아가던 몽고사신이 살해된 데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sup>12)</sup> 그리고 몽고군의 다양한 전술에 맞서 귀주 병마사 박서와 분도장군 김정손이 뛰어난 전술로 방어했음<sup>13)</sup>과 적장 살리타이가 처인성에서 사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제25장에서는 1차 침입에서 맺어진 평화교섭이 고려 조정의 전략이었음을 파악한 몽고가 3년 후(1236년)에 재침하여 교전이 벌어진 경과를 서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주의 황룡사 9층탑이 소실된다. 몽고의 3차 침입을 기술한 26장에서는 몽고군이 이전의 전투를 거울삼아 철저하게 고려를 파악한 후 침략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투항한자들은 형제로 대우함으로써 이단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사용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몽고 주장 예꾸(也竊)가 충주성을 포위하고도 70여일이 지나도록 함락시키지 못한 것은, 김윤후가 성안의 백성들과 일체가 되어 적의 공세를 저지했기 때문이라고 칭송하고 있다.<sup>14)</sup> 일체된 군민의 적극적인 저항에 막혀 몽고군은 끝내 충주 이남 지역으로 남하하지 못했다.

제27장에서는 몽고군에 사로잡힌 고려 백성이 무려 20만 6천여 명에 이르렀고, 사살된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한편 몽고의 5차 침입을 다룬 제28장에서는 기마병 위주의 육상 공격에 능한 몽고군이 전남 무안 일대의 섬을 공략하면서 전선(戰船) 70척을 이용했음을 밝히고 있어, 유

주 12) 1225년 1월 고려에 왔던 몽고사신 자꾸예(著古與)가 귀로에 압록강 안에서 금의 유적(流賊)들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몽고에서는 이를 고려측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다.(『元史』本紀, 太宗 3年 8月條; 『高麗史』卷22, 高宗 世家 12年 正月條;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卷28, 〈上都皇帝陳情狀〉)

13) 『高麗史』卷103, 朴犀 列傳

14) 『元史』卷208 高麗傳; 『高麗史』卷103, 金允侯 列傳;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卷28, 〈答東眞別紙〉

목민족이 함선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최초의 시도였음을 밝히고 있다. 몽고군의 마지막 침공을 다루고 있는 제29장에서는 항몽을 주장하던 최의(崔瑄)의 피살과 태자가 인질로 간다는 최소한의 명분이 충족되자 여러 차례의 고려 침략이 종식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15)</sup> 태자를 본 쿠빌라이는 “당 태종이 친히 정벌에 나섰어도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던 곳인데, 이제 그 고려의 태자가 스스로 나를 보러 왔다니 이야말로 하늘의 뜻이로구나!” 하며 몹시 기뻐했다.<sup>16)</sup> 몽고의 입장에서 고려 정복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었다. 그 뜻을 이룬 쿠빌라이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 고려의 풍습을 인정함과 동시에 국경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하는 여섯 가지 사항을 발표<sup>17)</sup> 하여 고려와 우호적인 선린관계를 지속시킨다.

고려 말 이성계의 활약상은 제33장부터 제37장까지 기술되어 있다. 적군을 상대하는 이성계의 전술은 적의 사기를 떨어뜨려 적군을 섬멸하는 전술이었다. 공민왕 11년(1362년) 나가추(納哈出) 군이 침범하였을 때, 고려군이 연전연패하고 있었다. 이성계는 그 원인이 적장을 제거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적장을 사살해 버림으로서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sup>18)</sup> 이 후 덕흥군(德興君)이 침범하였을 때도 수주(隨州)의 달천(獐川) 전투에서 적장 서너 명을 사살해버림으로서 적군이 사기를 잃고 패주한다. 공민왕 19년(1370년) 동녕부를 공략할 때도 이성계가 적장 추밍(處明)을 제거함으로써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sup>19)</sup>, 호바투(胡拔都)<sup>20)</sup> 군을 몰아낼 때도 호바투를 단신으로 대적하여 승리를 거둬<sup>21)</sup>으로써 승전보를 올릴 수 있었다.

지금까지 『동국병감』 상하권에 수록된 전투현황을 37개 장으로 구분하여 도표화함과 동시에 유사성이 있는 전투를 중심으로 한데 묶어 전투 발발 원인과 전투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 2. 전술형태의 다양성<sup>22)</sup>

### 가. 반간계(反間計)에 의한 유인전술

전투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전술의 운용을 들 수 있다. 적의 동태를 파악

주 15) 『高麗史』 卷24, 高宗 世家 46年 4月條

16) 『高麗史』 卷25, 元宗 世家 元年 3月條

17) 『元高麗紀事』 世祖皇帝 中統 元年 6月條.

18) 『東國兵鑑』 卷 下, <高麗走納哈出條>.

19) 『東國兵鑑』 卷 下, <高麗擊東寧府條>.

20) 이름이 아니라 ‘용맹한 오랑캐 장수’란 뜻이다. ‘호’(胡)는 오랑캐(여진족)이고, ‘발도’(拔都)는 몽고어로 바투(Batu) 즉 용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21) 『東國兵鑑』 卷 下, <高麗逐胡拔都條>.

22) 전술형태의 다양성 부분은 『東國兵鑑』(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군사문헌집 2, 1984) 국역본을 주로 활용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하고 적장의 성향을 파악한 후 그에 합당한 전술을 활용해야한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한 반간계를 통한 유인전술은 전통시대 전투에서 가장 흔하게 활용되었던 전술의 한 방법이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은 나라를 건국한 이 후 정복전쟁을 벌여 인접한 행인국<sup>23)</sup>과 북옥저<sup>24)</sup>를 복속시킨다. 이 후 왕위를 계승한 2대 유리왕은 부친의 유업을 계승하여 선비족<sup>25)</sup>을 항복시킨다. 고구려가 선비족을 항복시키는 과정에서 활용하였던 전술이 반간계이다.

고구려 2대 유리왕은 선비족이 험한 지세를 믿고 고구려와 화친하지 않으면서 형세가 유리하면 노략질을 일삼고 불리해지면 들어가서 수비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에 하루는 근심거리를 제거하기 위해 유리왕이 대소신료들을 모아 놓고 선비족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선언한다. 이때 부분노(扶芬奴)가 “선비국의 지형이 험하기는 하지만, 저들의 성품이 미련하기 때문에 계략을 써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고 답하였다. 이에 유리왕이 그렇다면 그 계략이란 무엇인가?라고 묻자 부분노가 이렇게 답하였다. “유능한 사람을 써서 반간계를 써야 합니다. 저편으로 망명해간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병력이 약하며 겁이 많아, 군대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말로 기만하면, 저들이 필경 우리를 알보고 방비를 소홀히 할 것입니다. 신은 이 기회를 타서 정예부대를 이끌고 사잇길로 나아가 산림 속에 숨어 형세를 관망하고 있겠습니다. 이때 왕께서 별도로 소수부대를 적의 성 남쪽으로 진출시켜 도전을 하시고, 적이 성 밖으로 나오면 싸우다가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도록 하십시오. 저들은 틀림없이 성을 비우고 멀리까지 추격해 올 것입니다. 이 틈에 신은 정예부대를 이끌고 성안으로 들어가 거점을 탈취할 것이니, 왕께서는 친히 용맹스런 기병을 거느리고 적을 협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리왕은 부분노의 말을 옳게 여겨, 그 계획대로 작전을 진행하였다. 선비족은 과연 예상한대로 성 문을 열고 전 병력을 출동시켜 고구려군을 추격하였다. 그 틈을 노리고 있던 부분노의 정예부대는 선비족의 성안으로 쳐들어갔다. 선비군은 이 광경을 바라보고 크게 놀라 추격을 멈추고 성안으로 들어가려했다. 그러나 부분노의 부대는 성문을 가로막고 응전하여 수많은 적을 쳐 죽였다. 유리왕의 기병대 역시 깃발을 올리고 북을 울리며 밀어 다치자, 선비군은 앞뒤에서 협공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힘이 다하여 항복하고 말았다. 이 후 선비족은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다.

주 23) 행인국(荇人國)은 백두산 동남방에 거처하고 있었다.

24) 북옥저가 거처하고 있던 곳은 현재 함경북도 지역이다.

25) 중국 전국시대부터 만주일대에서 활동하던 몽고계열로 3세기경에 이르러서는 거란족으로 발전하였고, 10세기 무렵에는 요(遼)나라를 건국하여 고려를 침공하기도 하였다.

부분노가 선비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활용하였던 작전 기술은 손자병법(孫子兵法)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다. 적국의 지형과 적군의 성격을 파악한 후, 그것을 토대로 간첩을 써서 적을 교만하게 만든다. 소수병력으로 적을 거점으로부터 유인해내고 잠복시켰던 부대를 출격시켜 적의 본거지를 점령한다. 이 후 다시 협공을 감행, 퇴로를 차단하여 섬멸한다. 이러한 전법은 전통시대 전사에서 자주보이는 전법이다.

『동국병감』에 기술되어 있는 여러 전술들 중 위계에 의한 유인전술의 백미로는 수양제의 백만 대군을 물리친 것을 들 수 있다. 고구려 영양왕 22년 2월 수나라 양제는 강도로부터 탁군으로 행차하면서 고구려 정벌을 선포한다. 조서를 내려 천하의 군사들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전선 3백 척과 전차 5만대를 제조하도록 명하였다.

영양왕 23년 정월 양제는 출정조서<sup>26)</sup>에서 “이번 정벌은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을 위무하고 죄인을 도벌하기 위함이고, 공명을 세우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장 중에 혹시라도 경무장한 병력으로 적을 기습한다던지 단독으로 싸워 개인의 공명을 세워 상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대군의 전법이 되지 못한다. 부대의 기동과 정지는 일체 나에게 보고하고 회보를 기다린 다음 실시할 것이며, 독단으로 실행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밝히고서, 친히 1백 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

수나라 양제는 직접 장군들을 지휘하여 각 군마다 대장과 부장을 각각 1명씩 두고, 기병은 총 40개 대로 편성하였다. 1개의 대를 1백 명으로 하고, 10개의 대를 1개의 단이라 하였다.<sup>27)</sup> 부대의 행군과 정지하는 사이, 그리고 숙영시에 모두 절차와 법도가 있었다. 하루에 한 개 군씩 출발하되, 앞 부대와 40리 쯤 간격을 두고 군영이 연이어 차례로 행진하였는데, 40일 만에야 출발이 완료되었다.

4월 15일 요동성을 포위한 수나라 군사에 의해 요동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성안의 고구려인들은 수나라 진영에 항복하겠다고 간청하였다. 그런데 수나라 장수들은 양제로부터 독단행위를 금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었으므로 양제에게 보고한 다음 그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sup>28)</sup> 이 동안 고구려군은 성의 수비태세를 정비한 다음, 항복은 하지 않고 다시 수나라에 대항하였다. 이런 상황이 두세 차례 되풀이 되자 수나라는 4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요동성을 공격하고서 함락시키지 못하였다.<sup>29)</sup>

수나라 우익대장군 내호아는 해로를 따라 진군하였는데 수나라의 군사 중 가장 먼저 고구려 영토에 진입하였다. 평양성 60리 밖에서 고구려군을 대파한 내호아는 정예병 4만

주 26) 『資治通鑑』 卷181 大業 8年(612) 5月.

27) 『隋書』 卷4 帝紀 第4 煬帝 大業 8年(612) 1月 辛巳.

28)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第8 嬰陽王 23年(612).

29) 『高句麗 對隋唐戰爭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民族戰亂史8, 1991, 78~79쪽.

명을 이끌고 평양성 아래까지 진격하였다. 이 때 고구려 장수들은 바깥성에 있는 빈 절간에 군사를 매복해 놓은 다음, 별도로 1개 부대를 출동시켜 내호아의 공격군과 접전하다가 고의로 패주해 적을 유인하도록 하였다. 과연 내호아는 이들을 추격하여 바깥 성안에 들어간 후에, 군사를 풀어 마구 약탈하게 놓아두었다. 내호아 군이 약탈에 정신이 팔려 대오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고구려의 매복 부대가 내호아 부대를 급습하였다. 이 전투에서 내호아군은 4만의 병사들 중 살아서 돌아간 자가 불과 수천 명에 불과했다.

고구려에서는 영양왕이 대신 을지문덕을 적진으로 보내, 거짓으로 항복의사를 밝히고 적정을 탐지해 오도록 하였다. 그런데 출정 당시, 우중문은 양제에게서 ‘만일 고구려왕이나 을지문덕이 오면 그 즉시 사로잡으라.’는 밀명을 받고 있었다. 마침 을지문덕이 진중을 방문하자, 우중문은 즉각 그를 잡아 가두려 하였다. 그러나 위무사 유사룡(劉士龍)이 군이 이를 반대하므로 끝내 을지문덕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우중문은 곧 후회하고 귀로에 오른 을지문덕에게 급사를 보내 할 말이 아직 남았으니 다시 와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돌아보지 않고 압록강을 건너 돌아왔다.

을지문덕은 우문술의 군사들에게서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고서 수나라 병사들을 지치게 하기 위해 접전할 때마다 고의로 패주하곤 하였다. 우문술을 비롯한 추격군은 하루에 일곱 차례 싸워 번번이 승리를 거두자 자만심에 빠져 계속 동쪽으로 진격하여 평양성에 육박하였다. 이때 고구려 측에서는 우문술에게 사자를 보내 ‘5일 정도 여유를 주면 국가의 문서와 장부들을 정리해 가지고 나가서 지시를 따르겠다.’ 라고 거짓 항복의 뜻을 전하였다. 5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우문술이 거듭 재촉하였다. 10일째에 이르러 고구려측에서는 ‘내호아의 수군도 참패당하고 식량도 바닥이 났을 터인데, 그대들은 무엇을 또 바라고 기다리는 것인가?’ 라고 한 후 대항해 싸웠다. 이에 우문술은 병사들이 너무 지쳐있는데다가 고구려의 전략에 말려들었음을 깨닫고 철군을 단행하였다.

고구려를 침공했던 수나라 병사 1백 13만 중 요수를 건너 고구려에 진공했던 30만 명 중 요동에 귀환한 병사는 겨우 2천 7백 명에 불과했다. 8월 25일 크게 진노한 양제는 우문술을 위시한 패전 장수 전원을 결박해 귀국길에 오른 후 9월 3일 을지문덕 체포를 만류한 유사룡을 참형에 처하였고, 우문술·우중문 등 패장들의 관직을 삭탈하고 서민으로 만들어 패전의 분을 풀었다.

#### 나. 지구전으로 수성방어(守城防禦)

고구려 제3대 대무신왕 11년 7월, 한 나라의 요동태수가 군사를 일으켜 침공해 왔다. 대무신왕은 여러 신하들을 소집하여 응전여부를 물었다. 이 때 을두지(乙豆智)가 “소수의 군사가 무리하게 싸움에만 집착한다면 강대한 적에게 사로잡히는 법입니다. 우

리가 소수의 병력인 바에야 계략을 써서 적을 상대해야 합니다. 힘으로만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계략을 써야 하겠는가? 라고 대무신왕이 물었다. 이에 을두지가 “현재 한 나라군은 본거지로부터 멀리 와서 전력을 다해 싸우려고 할 것이므로, 그 예기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성문을 닫고 튼튼히 수비하시면서 적군의 예기가 꺾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반격을 가하신다면, 적을 격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무신왕은 그의 의견이 옳다고 여겨 위나암성에 들어가 수십 일 동안 성을 지켰다. 그러나 피아간의 거듭된 교전으로 인해 전투력이 고갈되고 병사들의 피로가 가중되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 이때 을두지가 ‘한나라 군사들은 우리성이 암석지대에 세워졌으므로 필시 우물이나 연못이 없으리라는 판단아래 장기간 포위한 채, 아군의 식수가 고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물고기를 구해 수초에 싸가지고 술을 곁들여 한나라 진영에 보내십시오.’라고 하였다. 고구려 측의 선물을 받아본 한 나라 장수들은 상의 끝에, ‘고구려군의 성 안에 못이 있으니 쉽사리 함락시킬 수 없겠다’고 결론짓고 군대를 이끌고 철수하였다.

고구려에서 을두지의 전술을 채택하여 무모한 결전을 피하고, 성을 굳게 지키는 지구전으로 대응하여 침공군의 예봉을 둔화시킴으로써, 한군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였다. 이러한 수성방어 전술은 강대한 한(漢) 제국을 적으로 삼기에는 아직 국력이 미치지 못했던 고구려의 현명한 대응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국병감』에 나타난 또 다른 수성방어 전술로는 한의 재침을 막아낸 명림답부의 전술을 들 수 있다. 고구려 8대 신대왕 8년 11월에 한나라는 대군을 이끌고 재차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누란의 위기 속에서 신대왕은 신하들에게 응전과 수비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물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군을 출동시켜 결사 항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명림답부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 나라는 영토도 넓고 인구가 많은데다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먼 곳까지 왔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선불리 그 예봉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병력이 많으면 공격하고, 적으면 수비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한 나라는 천 리나 되는 먼 길에 군량을 수송해 와야 하므로, 결코 지구전을 기도할 형편이 못될 것입니다. 이에 아군이 참호를 깊게 파고 보루를 높이 쌓은 다음, 청야(淸野)작전<sup>30)</sup>으로 적의 보급을 어렵게 만든다면 적들이 피로해져 1개월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주 30) 청야작전이란 적의 침공이 예상되는 곳의 주민을 안전한곳으로 대피시키고, 육지에 있는 군량과 병기 등 군수물자를 모조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며, 전야(田野)의 곡식을 완전히 소각하여 적군의 군수물자 조달에 지장을 주어 조기 철군을 유도하는 전술이다.

신대왕은 명림답부의 의견을 채택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수성방어 작전을 펼쳤다. 한 나라의 침공군은 성을 둘러싸고 연일 공격을 퍼부었으나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병사들이 굶주림에 빠지자 하는 수 없이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명림답부는 적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수천 명의 기병을 이끌고 적을 추격하여 한 나라 군사들을 섬멸해 버렸다.

명림답부의 수성 전략은 을두지의 전략을 계승한 것이었다. 장거리를 진격해온 적군의 최대 약점은 후방으로 부터의 원활한 보급이었다. 그러나 수 천리나 되는 곳에서 군수품을 원활히 보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적은 속전속결을 추구할 것이 분명하였다. 사나운 적의 예봉을 피하면서 적병을 피로하고 지치게 한 후, 퇴각하는 적의 후방을 공격하여 섬멸하는 전술은 군사가 적은 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훌륭한 전술이었다. 고구려는 이후에도 수성방어 계획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나라의 백만 대군을 막아내는 전술로 계승 발전시켰다.

#### 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외교술

고려 제6대 성종 12년(993) 8월 거란군이 고려를 침공하였다. 그해 10월 성종은 시중 박량유(朴良柔)를 상군사로, 내사시랑(內史侍郎) 서희(徐熙)<sup>31)</sup>를 중군사로 삼고 거란군의 침입에 대비시켰다. 윤 10월 거란의 부마 소항덕(蕭恒德)<sup>32)</sup>의 대군이 봉산군(蓬山郡)을 공격하자 중군사 서희가 병력을 이끌고 봉산군의 위급을 구원하러 달려갔다. 이때 적장 소항덕은 고려 측에 서한을 보내 항복을 종용하였다. 서희는 소항덕의 서한을 받아보고 서경으로 돌아와 성종에게, '적장이 보낸 글의 내용으로 보아, 화의를 모색할 만한 기미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성종은 사자를 파견하여 화친을 청하기로 한 후 조정의 중신들을 소집하여 사태 수습책을 의론에 붙였다. 어떤 신하는 '임금께서는 서울로 귀환하시고, 대신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항복을 청하자'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서경 이북의 영토를 거란에 떼어 주고 국경선을 황주에서 절령(岳嶺)<sup>33)</sup>까지로 다시 확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주 31) 서희(942~998)는 고려초기의 외교가로 광종 11년(960) 문과에 급제한 후 출사하였다. 성종 12년(993) 거란이 침입하자 중군사로 북계에 출전하여 전세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적장과 담판을 벌여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이남 평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32) 항덕(?~996)은 요나라 장수로 성종의 딸 월국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었다. 남송을 공격할 때 올린 전공으로 공신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였지만, 여진족 토벌에서 패전함으로 인해 관직을 삭탈 당하였다.

33) 절령은 황해도 서흥군(瑞興郡) 서쪽 60리 지점의 자비령(慈悲嶺)을 일컫는다.



성종은 영토를 떼어 주자는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서경의 창고에 비축해 두었던 쌀을 풀어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였다. 남은 쌀에 대해서는 적의 군량으로 이용될까 두려워하여 모두 대동강에 던져 버리도록 하였다. 이에 서희가 거란군의 군세가 강성한 것을 보고 선뜻 서경 이북의 영토를 떼어주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면서, 싸우고 나서 안 되면, 그 때에 화의를 모색해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

서희가 언변을 통해 적군을 물리쳐 보겠다면서 국서를 받들고 거란군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거란군의 진영에 도착한 서희가 통역관에게 상견례의 절차를 묻자 소항덕이 “나는 대국의 부마로서 귀한 신분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마땅히 뜰에서 나에게 배례(拜禮)를 올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서희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뜰아래서 절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예의인데, 양국의 대신이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그런 예를 올릴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소항덕이 대등한 상견례를 허락하지 않자 서희는 관사로 돌아와 누운 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제야 소항덕은 허세를 버리고 ‘당상에 올라와 상견례를 올리자’고 양해하였다.

서희가 당상에 올라와 상견례를 행한 후 동서로 자리를 정하여 마주 앉았다. 소항덕은 서희가 자기와 대등한 예우를 주장하고 조금도 굽히지 않는 태도에 신기해 하면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 “그대의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으니, 고구려의 영토는 우리의 소유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우리의 소유가 된 옛 고구려의 토지를 침식해 들어왔다. 그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육지로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토벌하러 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우리에게 떼어주고 우리와 수교를 맺는다면,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다.”

이에 서희는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후신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고려(高麗)라고 하였다면서, 영토의 경계를 가지고 따지면 귀국의 동경(東京)<sup>34</sup>까지도 모두 우리 국경 안에 있는 셈인데 어떻게 침식했다고 말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고려가 거란과 수교를 할 수 없는 것은 여진족들이 북방지역을 몰래 점거 한 후 교통로를 막고 있어 육로로 다니기가 바다를 건너기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거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반환해 주고, 성과 보루를 쌓아 교통로를 확보해준다면 고려는 기꺼이 거란과 수교를 맺을 것이다. 그대가 나의 뜻을 귀국의 황제에게 전달한다면 황제께서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하였다.

서희의 언변과 태도가 간곡하고 능률했기 때문에 소항덕은 강압적인 수단으로 일을 매듭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강화를 승낙하였다. 소항덕과의 담판에서 서희가 승리할

주 34) 동경(東京)은 중국 요녕성(遼寧省) 요양시(遼陽市)로 고구려 때에 수당제국의 침공을 막아냈던 요동성(遼東城)이 있었던 곳이다.

수 있었던 것은 거란측의 허위성을 공격함과 동시에 역으로 여진을 빗대어 그 행위를 힐책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대륙의 통일을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던 거란으로서는 자신들이 증원으로 진군하였을 때 고려가 그 배후를 위협하는 상황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고려를 침공하였다. 거란으로서는 고려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는 압록강 동부 일대를 고려에 주고 평화를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에 서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록강 동부에 이르는 토지에 대한 고려의 기득권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거란의 80만 대군을 맞아 서희가 벌인 외교술은 피를 흘리지 않고 오히려 옛 영토를 수복하는 전과를 올린 셈이 되었다. 병법에서 말하는 최고의 전술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인데 아마도 이를 두고 이른 것이 아닌가 싶다.

## 라. 지형활용 전술

현종 3년(1012) 4월 거란 군주는 고려국왕에게 직접 내조(來朝)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현종은 그해 6월 사신을 파견하여, ‘국왕이 신병으로 인해 조회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거란 군주는 자신의 친정이 헛수고에 불과하였음을 깨닫고 1018년 소배압(蕭排押)<sup>35)</sup>에게 정예병 10만 명을 주어 고려를 침공하도록 하였다.

현종 9년(1018) 12월 10일 단행된 거란의 3차 침입은 예견된 것이었다. 거란의 입장에서 이전 두 차례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키지 못함으로써 제국의 명예에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제1차 침입 이후 여진족 점령지역을 고려에게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여전히 송나라와 교린을 돈독하게 유지한채 거란을 미개민족으로 치부하며 무시하였고, 오히려 견제정책까지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정복하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고려 또한 문화적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친송반요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고, 고려 초기의 진취적 기상을 바탕으로 거란의 침공을 두 차례나 막아낸 경험을 토대로 거란의 재침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

거란의 3차 침입에 대해 고려 현종은 강감찬(姜邯贊)<sup>36)</sup>을 상원수로 그리고 강민첨(姜

주 35) 소배압(?~1023)은 요나라의 명장으로 지략이 뛰어나고 궁술에 능했다. 거란의 제2차 침공 때 공적이 있다 하여 황제의 부마가 되는가 하면 제3차 침입시 총지휘관이 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지만, 강감찬의 지략에 말려 전군을 희생시킴으로써 관직이 모두 삭탈되는 수모를 격기도 하였다.

36) 강감찬(948~1031)은 고려의 명장으로 성종 2년(983)에 갑과(甲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출사하였다. 현종 9년(1018) 거란이 소배압을 시켜 고려를 침공하자 강감찬이 상원수가 되어 20만 군사를 이끌고 적과 맞서 싸웠다. 귀주에서 소배압군과 일전을 벌여 적을 대패시킴으로써 살아 돌아간 적이 수천에 불과했다. 推忠協謀安國功臣에 봉해졌고 시호는 仁憲公이다.

民瞻)<sup>37)</sup>을 부원수로 삼는 군 지휘 체계를 편성한 후 군사 20만 8천 3백 명을 주어 적을 막아내도록 하였다.

영주로 복상한 강감찬은 다시 흥화진(興化鎭)까지 진출하였다. 산골짜기의 험준함과 적군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강감찬은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우선 기병 1만 2천명을 뽑아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다음, 굵은 밧줄로 쇠가죽을 꿰어 흥화진 성 동쪽에 흐르는 큰 시냇물의 흐름을 막아 놓고 적군이 도달하기를 기다렸다. 과연 적의 대군이 흥화진 골짜기를 통과하자 강감찬은 막아 놓았던 물고를 터 적이 급류에 휩쓸리도록 하였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당황하던 거란군은 대오를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고려군은 이 혼란한 틈을 타 적을 섬멸하였다.

현종 10년(1019) 정월 2일 강감찬은 거란군이 개경을 향해 공격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 11만 명을 개경에 들여보내 왕궁을 호위하도록 하였다. 정월 3일 소배압군은 개경에서 1백리 떨어진 신은현까지 진출하였다. 현종은 도성 밖의 주민을 모두 성안으로 수용하고, 청야(淸野)작전으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소배압군은 신속히 개경을 점령하여 고려 국왕을 생포할 심산으로 질풍같이 남진하였으나 고려군의 끈질긴 저항과 후방의 퇴로가 차단될 위협을 극복하지 못하고 철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2월 1일 거란의 철수군 주력 부대가 귀주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 때 강감찬 휘하의 고려군은 귀주성 동쪽 벌판에서 이들과 결전을 벌여 승리를 하였다. 이 전투에서 거란군의 시체는 들판을 뒤덮었고, 고려군이 획득한 포로와 관마, 무기 등은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았다.

이러한 귀주 전투에 대해 요사(遼史)에서는 보다 소상하게 전투의 전말을 기술하고 있다. “귀주 백석천에서 소배압군은 고려군과 싸워 패배하였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여러 장수들은 소배압에게, ‘고려군이 강을 건너온 다음에 격파하자.’고 건의 하였으나, 북원 추밀부사(北院樞密副使) 야율팔가(耶律八哥)가 ‘도강한 적은 배수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싸울 것이니, 그 계획은 위험하다. 두 갈래 강 사이에 유인해 놓고 협공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소배압이 야율팔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싸운 결과 2개 군이 전멸 당하였고, 고위 장수 여러 명이 전사하는 대패를 하였다.”

이 귀주 전투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간 거란군은 수천 명에 불과하였으며, 거란의 패배가 이때처럼 혹심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참패를 보고 받은 요나라 성종은 ‘네가 적을 가벼이 여기고 적지 깊숙이 들어갔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주 37) 강민첨(?~1021)은 고려의 무신으로 목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현종때 안찰사(按察使)로 동여진의 침입을 물리쳤다. 강감찬의 부장이 되어 흥화진에서 거란군을 격파하였으며 이 후 병부상서에 올랐다.

대하려는가. 내 기어이 네 가족을 벗겨 죽이고야 말리라.’라고 크게 진노하였다.

강감찬의 귀주 대첩은 지형을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고려초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귀중한 승리였으며 이 후 100여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고려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전투사에 길이 남을 승전이라 할 수 있다.

#### 마. 적군 지휘체계 무력화 전술

적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적장을 먼저 사살하는 방식은 고려 말 명장이었던 이성계가 주로 활용하는 전술이었다. 이성계는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군의 사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투가 벌어지면 자신의 뛰어난 활 솜씨로 적장을 먼저 제거하였다. 이성계의 이러한 전술은 33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나 언급되고 있다. 그 대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민왕 11년(1362) 2월 3일 쌍성의 총관으로 있던 조소생(趙小生)<sup>38)</sup>과 천호(千戶) 탁도경(卓都卿) 일당이 나가추(納哈出)를 끌어들여 고려를 침범해 왔다. 4월 21일 공민왕은 상호군(上護軍) 이성계(李成桂)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하여 현지로 파견하였다. 그 해 7월 나가추는 수 만 명의 대 병력을 이끌고 조소생, 탁도경의 무리와 함께 달단동(韃鞢洞)에 진을 치고 카라만호(哈刺萬戶) 등에게 군사 1천 명을 주어 선봉 부대로 삼았다. 고려군과의 여러 차례 교전에서 나가추군이 연승을 하였다.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받고 현지에 도착한 이성계는 연전연패한 연유를 물었다. 그 연유인즉 매번 전투가 벌어지면 붉은색 철갑을 입은 적장 한 명이 창을 휘두르며 돌진해 오는데 그 기세가 사나워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성계는 교전이 벌어지면 바로 그 적장을 찾아내 제거하고자 하였다.

피아간에 전투가 벌어지자 붉은색 갑옷을 입은 적장이 나타났다. 이성계는 그 자와 싸우다가 짐짓 패해 달아나는 척을 하였다. 이에 적장은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어 이성계의 앞을 가로 막고서 날쌔게 창을 휘둘렀다. 이성계는 슬쩍 몸을 뒤집어 말다래<sup>39)</sup>에 달라붙어 적장의 창끝을 피하였다. 창을 헛찌른 적장이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자 이성계는 즉시 안장에 다시 올라 활시위를 당겨 적장을 사살해 버렸다. 이 광경을 본 적병들은 기가 질려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주 38) 조소생(?~1362)은 고려 공민왕 때의 반역자로 공민왕 5년(1356) 유인우(柳仁雨)가 쌍성을 공격할 때 여진으로 도주한 후 나가추를 끌어들여 여러 차례 고려를 공격하다가 여진 사람에게 의해 살해당하였다.

39) 말다래는 기수의 옷에 진흙이 튀지 않도록 가죽 등으로 만들어 말의 배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것을 일컫는다.

이 후 나가추 본진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성계는 나가추를 바짝 뒤쫓아 공격하였다. 겁을 먹은 나가추가 말머리를 돌리려 하자 나가추가 탄 말을 쏘아 죽였고, 이 후 전투에서도 적장 셋을 활로 쏘아 죽였다. 이성계의 활 솜씨에 놀란 적들은 대오가 한꺼번에 무너져 달아나기 시작하였다.<sup>40)</sup> 공민왕 13년(1364) 정월 1일 덕흥군(德興君)<sup>41)</sup>을 받든 최유(崔濡)<sup>42)</sup>가 1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와 의주성의 전초기지인 궁고문(弓庫門)을 포위하였다. 의주 방어를 담당하던 도지휘사 안우경(安遇慶)의 부대는 이들을 맞아 일곱 차례나 싸웠지만, 중과부적으로 결국 패하였다.

압록강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보고를 받은 공민왕은 동북면을 수비 중이던 이성계에게 다시 명령을 내려 정주(定州)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적의 주력은 수주(隨州)의 달천(獺川)<sup>43)</sup>에 주둔 중이었다. 이성계의 부대는 우익군에 편성되어 달천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성계는 적군이 3개부대로 나뉘어 포진하고 있음을 보고, 자기도 병력을 셋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자신은 중앙에 자리 잡고, 휘하의 노련한 장수 2명에게 좌우익을 맡겨, 각자 적의 1개 부대씩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공격을 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전투가 개시되자, 이성계는 이전의 전투에서 행했던 것처럼 우선 적의 장교 서너 명을 사살한 다음, 휘하의 좌우익 두 장수와 함께 일제히 목표한 적의 부대로 돌진하여 일거에 적진을 초토화 시켰다. 이 싸움 결과 덕흥군의 1만 군사 가운데 목숨을 건져 돌아간 자가 겨우 17기(騎) 뿐이었다. 이성계가 달천 전투에서 덕흥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적장을 사살하여 적의 지휘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전술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고려 공민왕은 원 제국이 신흥세력 명나라 군사에게 연패하여 북방 초원지대로 쫓겨감에 따라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공민왕의 북진 정책은 윤관이 동북면을 개척한 이후 260여 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적극적인

주 40) 이성계군의 달단동 전투를 기념하는 전공비가 현재 함경남도 흥원군 용운면 영상리에 세워져 있다. 이 전공비는 선조 29년 왕명에 의해 건립된 것이다.

41) 고려 20대 충선왕(忠宣王)의 셋째 아들로 어려서부터 원나라에서 성장하였다. 역신 최유와 공모하여 고려왕이 되고자 침공하였으나 대패하여 돌아갔고 원나라에서 부정이 탄로나 하북성(河北省) 영평부(永平府)로 유배 되었다가 병사하였다.

42) 최유(?~1364)는 고려 말기의 역신으로 조적의 난 때 왕을 호종한 공로를 인정받아 1등 공신이 되었다. 충정왕(忠定王) 즉위와 관련한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원나라로 달아났다. 공민왕에 원한을 품고 있던 기황후를 꺾어 덕흥군을 왕으로 삼고자 고려를 침공하였다가 대패한 후 고려로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43) 수주는 평안북도 정주남쪽 15리 지점에 있으며 달천은 정주 동쪽 5리 지점의 작은 강이다. 달천 전투에서 패한 최유는 자군 내에 난동이 겹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압록강을 건너 도주하였다.



영토 확장 사업이었다. 일차적으로 올라산성(兀刺山城)<sup>44)</sup>이 공격 대상이었다.

공민왕 18년(1369) 12월 19일 고려 조정은 이성계를 동북면 원수로 임명하여 동녕부를 치게 하였다. 다음해 정월 14일 이성계는 기병 5천과 보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도하하여 올라산성에 다다랐다. 올라산성의 주장 고안위(高安慰)는 성안에 웅거한 채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였다. 이에 산성에 접근한 이성계가 여느 때와 같이 활을 사용하여 적장을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날따라 늘 쓰던 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장이 휴대한 활을 빌려 사용하였다. 70여 발의 화살을 쏘았는데 모두 적병의 면상에 적중시켰다. 상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사들은 기세가 꺾여 투지를 잃고 말았다. 이튿날 적의 두목 20여 명은 자기 휘하 백성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와 고려군에 항복하였다. 이성계의 올라산성 전투의 승리는 압록강에서 북쪽으로 강계, 길주에 이르는 동북면 일대에게까지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투에 임하여 적장을 먼저 사살함으로써 적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이성계식 전투방식은 이후 전투에서도 자주 활용된다. 올라산성 공략전을 완료한 공민왕은 원의 동녕부 소재지인 요동성에 대한 공략작전을 실시한다. 동북면 원수 이성계를 위시한 고려군은 공민왕 19년(1370) 8월 13일 출군하여 11월 4일 요동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적들은 고려군의 병력이 소수인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대항해 싸웠다. 그러나 점차 후속 부대가 도착하자 기세가 꺾여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적장 추밍(處明) 만은 자신의 용맹을 믿고 대항해 싸우고자 하였다. 이성계가 그 용기를 가상하게 여겨 살려서 거두어 쓰고자 하였다. 여러 차례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거부하자 이성계는 활로 추밍의 투구를 쏘아 벗겨내고서 다시 설득하였다. 그러나 추밍이 여전히 항전 하고자 하므로 다시 다리를 쏘았다. 화살을 맞고도 다시 항거해오자 '재차 항거하면 이번에는 면상을 쏘겠다.'라고 하자 그제야 말에서 내려 이마를 땅에 대고 항복하였다.

고려 제32대 우왕 8년(1382) 정월 여진족의 호바투(胡拔都)가 요동 지역으로부터 1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침공하였다. 그해 8월 고려측에서는 이두란<sup>45)</sup>의 부대가 선봉이 되어 출격하였지만 전투에서 패하였다.

주 44) 주에 의하면 올라산성은 이산군(理山郡) 북방에서 압록강, 파저강을 건너가면 올라성이 보이는데, 넓고 평평한 가운데 사면이 절벽을 이룬 지형위에 축조되어 있다. 오로지 서쪽 통로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천연 요새였다. 여러 문헌 자료에 의하면 올라산성은 요녕성에 있는 오녀산성(五女山城)이 아닌가 생각된다.

45) 이지란(李之蘭)(1331~1402)은 여진족 출신으로 공민왕 때 귀화한 후 이성계의 휘하가 되었다. 두란(豆蘭)은 여진족식 표현이며 이후 이씨 성을 하사받고 지란으로 개명하였다. 1392년 이성계가 등극하자 개국공신이 되었다가, 이성계가 왕위를 물러나자 벼슬을 버리고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

적장 호바투는 두꺼운 갑옷을 세 겹이나 껴입고, 겉에는 붉은 배옷을 걸친 차림으로 검정빛 암말을 타고 있었다. 이두란의 부대를 격퇴시킨 호바투는 기세가 등등하여 단기 필마로 이성계와 단관을 벌였다. 이성계 역시 칼을 뽑고 단기로 달려 나가 호바투와 격전을 벌였다. 두 장수가 서로 칼을 주고받으며 대적을 하다가 호바투가 미처 말고삐를 잡아채 세우지 못하는 순간, 이성계는 빠른 몸놀림으로 말을 되돌려 세운 뒤 활시위를 당겨 그의 등에 화살을 쏘았다. 그런데 호바투의 갑옷이 워낙 두꺼웠기 때문에 뚫지 못하였다. 이성계는 즉시 다시 활시위를 당겨 호바투가 타고 있던 말을 쏘아 꺼꾸러뜨렸다. 호바투가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자, 이성계가 즉시 사살하고자 하였으나, 호바투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구출해 갔다. 호바투는 부하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였지만, 기세가 꺾인 그의 부대는 대패하고 말았다.

### Ⅲ. 결 론

지금까지 『동국병감』에 기술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쟁사 37장을 전투현황과 전술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밝혀진 사실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도록 하겠다.

『동국병감』에 수록된 전투 현황은 총 37개 이다. 상권에 20개의 전투현황이 기술되어 있고 하권에 17개의 전투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승전과 패전에 관계없이 역대 왕조의 시대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중국 대륙에서 제국이 흥기함에 따라 상대국이 바뀌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삼국과 고려가 침략에 대응하였다.

『동국병감』에는 삼국 중 고구려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다. 삼국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17개 항목 중 신라-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고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한 두 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항목이 고구려와 중국제국간에 벌어진 전투이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대륙의 한반도 침입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와 한나라간의 전투는 3장에 걸쳐 언급되어 있다.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투 또한 세 차례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당태종의 고구려 침입과 신라-당 연합군의 두 차례 침공 그리고 고구려와 연나라간의 전투가 각각 두 장씩 언급되어 있다. 고구려는 수차례의 외세 침입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나라를 유지 발전시켰다. 고구려를 침공한 수나라가 전쟁의 패전 여파로 제국이 멸망되었고, 당 태종 또한 연승가도가 고구려전에서 멈추게 되었으며 한나라와 연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에는 많은 제국이 흥망을 거듭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가 의연하게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비록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하지만 이 또한 외세의 침략이라기보다는 연개소문이 죽고 난 후 자식들 간에 벌어진 권력투쟁 때문이었음을 밝힘으로서 이 책의 편찬자는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이 내부의 분열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몽고군의 거란 침략에 대해서는 총 6개장을 할애하여 가장 길게 서술하고 있다. 몽고군의 침략에 굴하지 않았던 고려 조정을 평가하면서도 도륙에 빠진 백성들을 방치한 책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형태는 과거의 전란사를 항전으로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통해 후세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판단된다.

전술체계 부분에서는 37개 전투 현황 중 뛰어난 전술체계라고 판단된 몇 가지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수성방어 계획을 적절히 활용하여 적의 침공을 막아낸 을두지와 명림답부의 전술을 소개하였고, 위계에 의한 유인전술을 활용하여 수나라의 대병을 물리친 을지문덕을 비롯한 고구려 장수들의 기지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싸우지 않고도 영토를 넓은 서희의 외교술을 언급하였고, 험준한 지형을 적절히 활용하여 거란군을 물리친 강감찬의 공적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막아낸 이성계의 활약상을 그의 전술을 통해 드러냈다. 이성계는 전투에 임하여 적장을 제거함으로써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적의 지휘체계 무력화 전술을 사용하였다.

1,500여 년 동안 많은 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고구려와 고려로 이어지는 저항정신이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것을 알 때 세계가 보이고, 우리의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자임한다면 우리나라의 과거 전란사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동국병감』은 우리에게 미래의 난국을 헤쳐가는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1. 『漢書』
2. 『元史』
3. 『資治通鑑』
4. 『元高麗紀事』
5. 『三國史記』
6. 『高麗史』
7. 『東史綱目』
8. 『東國兵鑑』
9.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10. 박지원저·임정기편, 『열하일기』, 민족문화추진회, 1980.
11. 『조선전사』2 고대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북한), 1979.
12. 『高句麗 對隋唐戰爭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民族戰亂史8, 1991.
13. 朴賢緒, 「北方民族과의 抗爭」『韓國史』4, 國史編纂委員會, 1974.
14. 이기백, 이기동 공저, 『한국사강좌 - 고대편』, 일조각, 1983.
15. 이기백,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80.
16. 宮崎市定, 『中國史』, 역민사, 1984.

# 韓國 軍事思想의 중요성과 연구 활성화 方案

## 목 차

- I. 서 론
- II. 군사사상의 개념
- III. 한국 군사사상의 변천과 중요성
- IV. 군사사상 연구 활성화 방안
- V. 결 언



중령 이기성  
(육군본부 제1경비연대1대대장)

## I. 서 론

역사의 동일한 반복은 없다고 하지만, 약한 민족이 강한 민족에게 지배당하는 “약육강식(弱肉強食)”,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칙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유사한 반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주적인 군사사상의 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국방분야에서 ‘국방개혁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선진 정예 강군육성을 통한 자주적 국방역량 강화를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자주국방역량 확립을 위해 같이 정립되어야 할 분야가 군사사상이라 할 수 있다. 유형적 군사능력과 병행하여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전쟁관 확립과 국민적 의지를 결집한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지침이 되는 軍事思想의 定立은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미진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군사사상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군사사상은 무엇인가?”, “우



리의 군사사상이 있는가?”라고 자문하면서 “우리는 자주적 군사사상이 미흡하다”라는 말을 먼저 한다. 그러면서도 한 국가가 국가방위를 위해서는 독특한 군사사상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다.

아울러 1980년대 초에 육군본부에서 군사사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의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1985년부터 3회에 걸쳐 연구결과를 발간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사상의 흐름과 지향 방향을 정립해 놓은 것은 소중한 업적이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군사사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인원들이 우리의 군사사상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사상에 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하고 그나마 1980년대에 일부 이루어 졌으며, 최근의 연구자료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에 동·서양의 군사사상에 관한 연구는 육군대학에서 발행되는 “군사평론”지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수의 연구결과를 찾아 볼 수 있었다.<sup>1)</sup> 이처럼 한국의 군사사상에 관한 저조한 연구노력은 한국의 군사사상 정립이 미진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군사사상은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렵고, 많은 인원들이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 져야만 비로소 우리의 군사사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인원들이 군사사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의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지 접근방법과 방향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는 자주적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 군사사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활성화하여 한국의 군사사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군사사상의 개념을 알아본 후 한국 군사사상의 현주소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군사사상 연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자주적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군사사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軍事思想의 概念

군사사상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연구한 결과<sup>2)</sup>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 1) “군사평론”지가 2006년 6월 현재까지 380호까지 발간되었는데 군사사상에 관한 내용은 단 2회(6,262호)만 게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군사평론지가 군사사상에 관한 분야를 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군사사상에 대한 관심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육군본부, 「한국 군사사상」, 1991, pp.14~26.

먼저 군사사상의 어원은 군사<sup>3)</sup>(Military affairs)와 사상(Thought)이란 말의 합성어로서 “軍事를 思想하는 것” 또는 “軍事를 思考한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어원 해석과 문헌에 나타난 주요 견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군사사상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및 장차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어떠한 전쟁의지와 신념으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적 사고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군사사상의 이념적 근거는 그 국가의 전쟁에 관한 기본철학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사상은 ‘전쟁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지를 보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전쟁지도 및 수행신념(戰爭觀),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군사력 건설(養兵),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전쟁수행 차원에서 군사력 운용(用兵)이라는 3가지 분야에 관한 개념적인 사고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군사사상의 범주는 군사이론, 군사교리 등 유사개념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도표 1>에서처럼 군사사상 체계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사상, 군사이론, 군사교리가 상하구조를 이루고 있다. 먼저 군사사상은 전쟁지도 및 수행신념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체계로서 군사사상을 체계화하면 군사이론이 되고, 정립된 군사이론을 한 국가의 제반 환경에 기초를 두고, 국방의 기본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행동 지침으로 공식화 하면 군사교리가 된다. 이러한 체계는 반드시 군사사상, 군사이론, 군사교리 순으로 상하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역순으로, 한 단계 뛰어 넘을 수도 있는 가변성을 갖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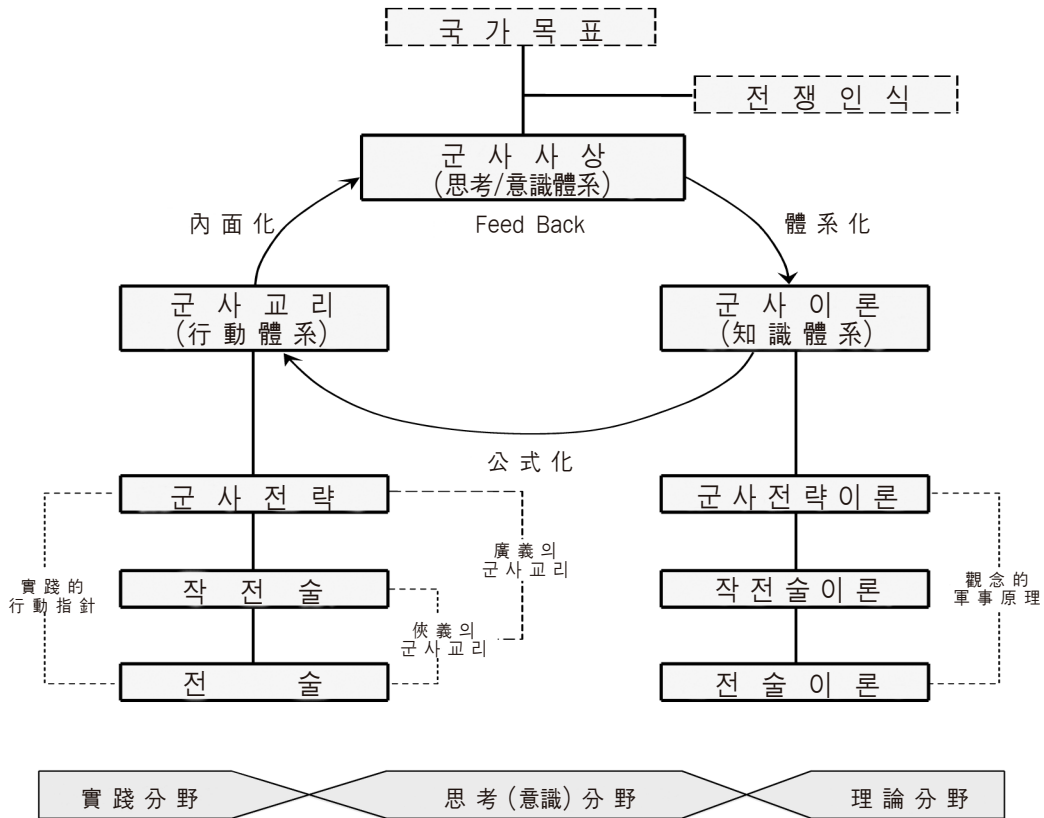
따라서 군사사상을 모체로 하여 군사이론이 구체화되고, 군사이론이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군사교리로 채택됨으로써 보다 현실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군사사상은 군사이론과 군사교리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주 3) 군사란 전쟁을 전제로 전쟁의 본질, 성격, 목적, 수단 등을 고려하는 가치적 측면으로서의 전쟁철학과 전쟁을 억제하거나 전쟁준비를 통해 일단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육사 군사학처, 「군사학 길라잡이」(서울: 양서각, 2004), p.86.

4) 군사사상 구성요소 및 순서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개념은 ① 전쟁관, ② 군사력 건설, ③ 군사력 운용의 3개요소로 정립되어 있으나, 구성요소를 ① 전쟁관, ② 전쟁의지 및 신념, ③ 군사력 건설, ④ 군사력 운용의 4개요소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 순서도 군사력 운용을 먼저 생각하고 군사력을 건설하려는 사고가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력 운용이 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두, 「한국적 군사사상의 구현방안」, 『군사연구(제117집)』(육군본부, 2001), pp.272~274.

5) 육군 교육사, 「군사이론 연구」, 1987, pp.21~22.

〈도표 1〉 군사사상 체계도



출처 : 교육사, 「군사이론연구(용병술체계 중심)」, 1987, p.23.

### Ⅲ. 한국 軍事思想의 변천과 중요성

#### 1. 한국 軍事思想의 변천

군사사상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및 민족의 전통사상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민족은 농경사회, 왕권정치, 양반체제, 사대교린 정책, 호국정신 등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유·불·선 3교, 多勿精神, 충효사상, 숭문경무사상(崇文傾武思想), 상무정신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시대별로 우리 민족의 군사사상의 변천과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sup>6)</sup>

주 6) 한국 군사사상 변천은 “육군본부, 「한국군사사상」, 1991, pp.96~177”을 참고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 가. 고 조선

고조선은 부족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군사조직이 없었고 부족공동체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전쟁수행신념은 건국이념인 弘益人間의 실천,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부족 공동체를 방호하였고, 仙 사상에 의한 이상국가 건설을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아 외침을 물리침으로써 부족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군사력 건설은 당시는 청동기 시대로서 청동제 무기(활, 창, 칼)로 무장한 부족장 중심의 부족군 연맹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생활집단을 군사조직화 하여 전원무장에 의한 자전자수(自戰自守)체제로 군사력을 건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군사력 운용은 구체적인 기록이 부족하지만 청동제 무기를 가지고 만주의 요서·요동지역까지 정복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아 공세적인 영토확장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고 구려

고구려의 전쟁수행신념은 부족세력을 통합하여 상무정신을 민족 단합의 구심점으로 삼아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팽창정책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고조선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다물정신(多勿精神)으로 강대국인 중국민족과의 투쟁속에서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군사력 건설은 6대 태조왕 이후 부족 연맹체를 벗어나 전국적인 군사조직을 정비하여 상비군 체제를 정착하였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에 각 5部를 두고 전국적으로 약 200 여개의 城을 중심 깊게 설치하였다. 이 성에는 경당<sup>7)</sup>이라는 교육기관을 두어 문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병력 보충의 역할을 하였다. 軍役은 국민계병제로 확대하고 보병과 기병(騎兵)이 중추를 이룬 가운데 수군(水軍)을 건설하였다. 군사력 운용은 약 200여개의 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공동방호에 중점을 두고 청야입보(淸野立堡), 이일대로(以逸待勞)에 의한 선수후공(先守後攻) 전술을 구사하였다. 견고한 성곽과 인근 촌락 주민과의 공동유대, 중심 깊은 성곽의 배치 등으로 적의 대규모의 침입을 축차적으로 둔화시킨 후, 적의 약점을 발견하여 기동력 있는 소수병력으로 대규모의 적을 격파하는 이소제대(以小制大)의 공세적인 군사력 운용을 하였다.<sup>8)</sup>

주 7) 고구려의 私學기관으로 문무일치 교육을 위해 평민층의 자제에게 經典과 弓術을 가르치기 위해 전국 각처에 설치하였으며, 忠·孝·信의 정신덕목과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각 城은 우수한 군대의 자원을 성 가까이서 육성하여 원활한 병력보충이 가능하였다.

8) 대표적 전례는 612년의 살수대첩이다. 수의 원정군을 천연장애물인 요하에서 초전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요동성, 만주에 산재한 성들을 이용하여 장기간 고착, 견제시키고 적의 일부가 압록강 이남으로 공격할 때 평양성 가까이 유인하여 매복공격으로 적 30만 5천명중 2700명만이 살아 돌아갔다.

## 다. 신 라

초기 씨족사회 형태의 후진국가였던 신라의 전쟁수행개념은 독자적인 성장을 위해 화랑도를 통한 인재양성과 세속오계를 통한 애국정신을 배양하여 영역을 확대하고 자주적인 독립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군사력 건설은 수도를 방어하는 6部兵(차후 6停으로 발전)과 중앙군인 9서당(誓幢)과 지방군대인 10停외에 여러 가지 군사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병력보충은 주로 화랑도와 청년단체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전략적인 요충지에 건설한 성과 주민간의 유대를 통한 지역별 공동체 방호에 주안을 두고 군사력을 건설하였다. 군사력 운용은 개인보다 집단적 힘에 의존하고 연합군과 동맹군을 형성하여 열세한 전력을 극복하였다. 특히 步騎戰術이 삼국중 가장 발전하였고, 매복 전술을 잘 활용하였다. 전력이 열세인 신라는 초기 수세에 치중하다 산악과 같은 지형을 이용하여 적의 공세를 약화시킨 후 반격을 취하고, 주변국과 연합을 형성하여 승리하는 선수후공의 전술을 구사하였다.

## 라. 백 제

백제는 한반도의 중앙인 한강유역의 경제적, 문화적 힘을 바탕으로 영토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을 전개하였다. 백제의 전쟁수행신념은 전략적 요충지인 한강유역을 수호하면서 주변국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스스로 힘을 길러 해양으로 진출하여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군사력 건설은 중앙군 5部(上·前·中·下·後部)와 지방군 5방으로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전 국민이 전투원으로 조직되고 국민계병제 아래 전 국민이 중심깊은 성으로 배치되어 성에 주둔한 상비군과 주민간의 유대를 통하여 성을 방어하는 지역별 공동체 방어에 중점을 두었다. 군사력 운용은 수성위주의 방어개념 하에서 인접왕조가 약해졌다고 판단되면 성을 쳐서 탈취하는 거점확보를 통한 점령지역 확보 위주의 전술을 채택하였다. 국력신장기에는 制海權 장악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함으로써 공세적운용으로 전환하였다.

## 마. 고 려

고려는 고구려의 구토수복(舊土收復)이라는 소명을 갖고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 전쟁수행신념은 거란, 여진, 몽고 등 북방민족과 60여 년에 걸친 투쟁 성격의 민족생존 전쟁이었으며, 고구려의 구토를 수복하려는 민족번영의 투쟁이었다. 따라서 고려는 호국 불교 정신을 국민정신의 이념으로 삼아 자주, 자립정신에 입각한 국가총력전을 수행하였다. 군사력 건설은 지방 호족세력의 사병을 혁파하여 성종 대에 이르러 중앙군은 왕의 친위군인 2軍과 수도수비와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6衛를 조직하였다. 지방군은 州縣



軍을 조직하고, 북방 국경지대 군사요충지에는 州鎮軍을 편성하였으며 光軍이라는 예비군 제도를 두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였다. 이처럼 고려는 직업군인인 中央軍과 兵農一致에 의한 地方軍(농민군)이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군사력 운용은 윤관이 여진 정벌을 위해 조직한 별무반이 기병전술에서 잠시 공세적인 운용이 나타나지만, 북방 이민족이 침입할 때마다 州鎮<sup>9)</sup>을 전투단위로 하는 견벽고수전술(堅壁固守戰術)과 병행하여 인병출격전술(引兵出擊戰術)<sup>10)</sup>을 병행한 수세 내지 공세적 방어형태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바. 조 선

조선은 事大交隣을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으로 하고 억불숭유정책을 취하여 성리학을 국가통치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성리학에 바탕을 둔 유교적 忠孝精神은 전통적 인간관계의 규범이 되고 윤리적 근간이자 왜란과 호란같은 위기상황에서 민족과 국가를 구출할 수 있었던 민족생존을 위한 전쟁수행 신념이 되었다. 하지만 문반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면서 국방문제에 소홀하였다. 현실적인 군사정책보다는 정치, 외교적 관계로 국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養兵은 養禍”로 인식하여 “不戰而勝” 전략개념으로 지나친 안전주의와 도덕주의를 강조하였다.

군사력 건설은 중앙군은 5衛制로 편성하고 전국의 지방군 조직을 일원화하여 鎮管體制를 조직하였다. 진관체제는 국토 전체를 독립된 통수권과 작전권을 보유하는 진관단위로 편성하여 巨鎮, 主鎮, 諸鎮을 두고 진관 밑에 무수한 방어거점을 둔 지역방어체제였다. 하지만 전국적 방위망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문관인 지방의 수령이 군사지휘권을 겸함으로써 무력함을 드러내었다. 지방군은 正兵(육군)과 水軍(해군)으로 편성하여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保人制度, 放軍收布制 등을 시행하였지만 오히려 지방관들의 착복의 대상이 되는 등 진관체제의 유지가 어려웠다. 따라서 군사가 아닌 계층까지 동원하는 制勝方略<sup>11)</sup>이란 방위체제가 발생하였다. 임진왜란의 참패로 중국의 병법인 속오법

주 9) 고려시대 서북 국경의 군사요충지에 성을 쌓고 독립적인 방어거점을 만들어 중심깊은 방어거점을 설치한 것이 州와 鎮이다. 이 州와 鎮은 城에 둘러쌓인 武裝都市를 이루어 州에는 防禦使, 鎮에는 鎮將에 의해 지휘되는 상비군이 배치되었다.

10) 城에서 전투중 적의 포위망에 취약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성문을 열고 출동하여 적을 격파하거나, 야간에 성밖 요지에 伏兵을 배치하여 기습으로 적군의 전력소모를 최대한 강요하였다. 특정한 성이 장기간 포위공격을 받을 경우 인근의 성이 연합하여 적을 역으로 포위하는 등 지형적 특성과 적의 규모, 전술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전개하였다.

11) 自戰, 自守하는 鎮管體制의 원칙을 깨뜨리고, 적의 주접근로에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병력을 배치하는 일종의 중점방어체제로서, 임진왜란시 왜구의 침입경로가 비교적 일정한 부산포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침입에는 효과적이거나 대규모 전면전에는 주방어선이 무너지면 예비대가 없어 효과적인 방어가 불가능하여 다시 진관체제로 환원되었다.

(東伍法)에 의하여 중앙에는 훈련도감을 신설하고 지방군은 東伍軍이 설치되고 中央軍은 5軍營을 설치하지만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이후 국방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군사력 건설 노력이 미흡하였다. 군사력 운용은 왕조에 따라 전쟁양상에 따른 군사력 운용도 변천을 하였지만 조선시대에 일관적인 군사력 운용 기조는 성을 중심으로 한 거점 중심 방어체제와 先守後攻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지형의 특성상 野戰보다는 山城을 이용한 수성위주의 방어전략을 채택하고, 국경선에 대규모 부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내륙지방의 성을 이용하여 以逸待勞, 淸野入堡의 의한 축차적인 방어를 실시하다가 적의 약점이 발견되면 반격전을 감행하여 적을 격멸하는 선수후공의 방어전략에 주안을 두고 군사력을 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도표 2〉 民族史의 軍事思想

구 분	전쟁지도 / 수행신념	군사력 건설	군사력 운용
고 조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仙”사상에 의한 自衛, 自強情神</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족공동체 방호</li> <li>全族武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세적 의지 (遊牧生活)</li> </ul>
삼국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무, 화랑정신에 의한 자주, 자위, 자강, 협력 정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공동체 방호</li> <li>全民武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합적 공세의의지 (先守後攻)</li> </ul>
고 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교 호국정신에 의한 자주, 자립, 자위, 협력 정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족공동체 방호</li> <li>소수상비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세적 의지 (堅壁固守戰術)</li> </ul>
조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교, 충효정신에 의한 자주, 자립, 자위, 협력정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족공동체 방호</li> <li>소수상비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세적 의지 (守城爲主縱深防禦)</li> </ul>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민주수호정신에 의한 협력정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공동체 방호</li> <li>국민계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세적 의지</li> </ul>
사 상 적 기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주, 자립, 자위, 자강, 자주적 협력 의지의 바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兵農一致制 (상비군+농민+의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력방어</li> <li>제한된 연합적 수세화</li> </ul>

출처 : 교육사, 「한국 군사사상 연구」, 1985, p.121.

## 사.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군사사상을 정리하기는 많은 제한이 있지만 해방이후 우리 군사사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군사사상의 틀 속에서 일반론적인 기술을 하고자 한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국방경비대가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편입되면서 군의 정신적 구심점을 태동시켜 나갔지만 전쟁수행신념이 미정립된 가운데 좌·우익의 분열, 국토분단, 남북대립, 국제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군사사상과 자주적 방위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국가안보를 주로 외세에 많은 부분 의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미 연합군 중심으로 억제 및 평화수호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립, 자강, 협력정신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사력 건설은 초기 국방경비대가 일본군의 복장을 개조한 服制에다 미군의 규범과 제도를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받아들였으며, 미군정하에서 여러 가지 제한으로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많은 제한이 뒤따랐다.<sup>12)</sup> 군사력이 제대로 건설되기도 전에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며, 전쟁을 통하여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며, 국력의 열세, 위기의식 결여는 국난을 자초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였다. 휴전 이후에는 북한의 군사력 우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해·공군은 주로 미군 전력에 많은 부분 의존해 온 부분이 있다. 최근에는 현존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한 자주국방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양한 국민적 욕구와 일부 정치적인 논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군사력 운용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군사력 운용에 대한 한반도에서의 전쟁경험을 하였고 인천상륙작전에서 처럼 공세적인 군사력 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선수후공의 공세적 방어전략을 유지하고, FEBA 위주의 선과 지역방어 개념을 발전시켜 오다가 최근에는 공세적인 군사력 운용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전시 연합작전을 상징하여 군사력 운용을 준비하여 왔으나, 평시 한국군 작전통제권 확보이후 개념, 교리, 교육훈련 등을 통해 독자적인 운용능력을 구비를 추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비롯하여 연합방위체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사상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주 12) 육군본부, 팜플렛 70-22, 군사발전지(제3집), p.46.

## 아. 군사사상의 民族史的 특징

우리민족의 군사사상 발전추세를 요약하면 전쟁수행 신념은 고조선의 홍익인간으로부터, 삼국시대의 상무정신, 고려의 호국불교정신, 조선의 충효사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수호정신이 민족정신으로서 自主, 自立, 自衛, 自強, 자주적 협력의지가 전쟁수행신념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군사력 건설은 시대별 상황에 따라 전쟁수행 신념을 형성하여 군사력을 건설하여 전쟁수행 능력으로 표현되었다. 삼국시대까지는 생활단위별 공동체 건설 의지가 잘 나타나 만주대륙을 석권하고 민족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후부터는 문준무비사상에 의하여 군사력이 왕권이나 집권세력의 비호세력으로 전락되고 군사능력이 부족하여 민족사적 시련을 당하였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군사력 건설의 사상적 기초는 병농일치(兵農一致)에 의하여 생활영역과 城을 중심으로 소수의 상비군을 유지하면서 일부 농민군과 의병 등 전 국민이 군사화 함으로써, 비록 적은 병력이지만 다수의 적을 격파하기 위한 총력방위적 군사력 건설에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군사력 운용은 고조선과 삼국시대를 제외하고는 수세적인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 원인은 고려의 불교정신, 조선의 유교사상이 우리의 의식구조를 수세적으로 만들었고, 농경생활의 전통이 전쟁수행의지에도 수세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군사사상의 특징은 첫째, 민족의 전통 및 사상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우리민족의 농경사회는 병농일치의 향토방위체제와 성 중심의 수세적 전술 및 직업군인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함으로써 淸野入堡, 以逸大勞 전술을 구사하게 하였다. 왕권정치는 군사력이 왕권강화 및 유지의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귀족들의 사병화 됨으로써 국민군으로 발전되지 못하여 수많은 국난을 반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대교린 정책은 국가안보를 외세에 의존하게 하였고,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고 자주국방 의식이 부족하여 군사사상 확립이 미흡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저항과 호국정신은 약 5천년의 역사상 이민족과의 938회의 투쟁에서 생존의지와 저력을 과시함으로써 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유지해온 원동력이 되었다.

사상적인 면에서 불교의 호국정신과 유교의 충효사상은 끈질긴 국난수호의 강한 動因이 되었다. 삼국시대 이전의 상무정신은 만주일대까지 국력을 영토를 확장시켰다. 하지만 조선후기 이후 상무정신이 약화되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자초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승문경무 사상은 지도층이 국방문제를 소홀히 하고 국가의 취약성을 노출하여 내우외환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이다.

주 13) 김선호, 「한국의 군사사상」, 군사발전 제65호, 1992, pp.104~105.

두 번째는 수세적인 군사사상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군사사상이 수세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사상적으로 유·불·선 3교의 영향으로 승문경무사상(崇文傾武思想)이 확산되고 상무정신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농경문화의 전통, 선비사상과 양반체제의 전통이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공세적인 군사사상 형성을 어렵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에는 지정학적인 특성과 연합방위체제, 국가 경제발전의 필요성 등으로 공세적인 군사사상의 발전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 군사사상 정립이 미흡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90여 회의 외침과 맞서 싸워왔다. 이러한 국난극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군사사상 정립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 전사를 보면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는 승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군사사상을 도입하여 다음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은 1차대전후 癱瘓戰, 機動戰 사상을 도입하여 마지노선을 돌파하였고, 미국은 월남전을 교훈 삼아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을 발전시켜 걸프전을 수행한 사례 등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도 국난극복의 역사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군사사상의 발전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네 번째는 한국의 군사 사상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군사사상을 연구하고자 하면 우리는 동양의 孫子(BC 541~482), 서양의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 리델 하트(Basil Henry Liddell Hart, 1895~1970) 등을 우선적으로 찾게 된다. 서양의 군사사상은 주로 인물을 연구하면 군사사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훌륭한 군사사상가를 찾아 나서는 것도 우리의 군사사상 뿌리를 찾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군사사상에 관한 연구자료를 찾아보면 서양의 군사사상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은데 우리의 군사사상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훌륭한 군사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 예를들면 을지문덕, 이순신, 이율곡, 유성룡 등과 같은 분들은 우리들이 높이 받들어야 할 군사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군사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군사분야에서 훌륭한 장수, 정치가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한국 軍事思想의 중요성

### 가. 민족의 興亡盛衰에 영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군사사상의 확립은 국방태세 확립과 국가발



전의 기반이 되어 민족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있었을 때에는 국운이 융성하였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외세의 힘이 작용할 때마다 크나큰 민족적 수난을 겪어야만 했었다.

군사사상이 정립되어 국방태세가 확립되고 민족의 융성기를 구가한 시기는 고구려와 신라시대를 들 수 있다. 고구려는 상무정신과 다물정신(多勿精神)이라는 사상적 구심점 아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 구조와 편제를 유지하고, 청야입보(淸野立堡), 이일대로(以逸待勞), 선수후공(先守後攻) 등과 같이 지형을 이용한 군사력 운용술을 개발하여 수·당과 같은 강대국들을 상대로 하여 고구려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신라는 화랑도와 호국불교정신 아래 국가 지도층과 전 국민이 화합 단결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가장 불리한 여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삼국을 통일 할수 있었다. 비록 라·당 연합군에 의하여 통일을 달성하였지만 자주적인 정신으로 독립을 유지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군사사상을 형성하고 인재육성을 포함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에 부합한 군사력 운용술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민족의 융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군사사상의 확립을 소홀히 한 조선후기에는 國恥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에는 국론 분열과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평화유지의 효과적인 수단임을 망각하고 양병(養兵)을 양화(養禍)로 인식함으로 인하여 국방의지의 결여, 국가방위의 소홀로 인하여 임진왜란을 자초하였고, 병자호란 또한 같은 선상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선말에는 지도체제의 분열과 함께 안보의식과 군사력 약화로 한일합방의 치욕을 당하고 만 것이다.

#### 나. 國防意志의 체계화

군사사상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차 또는 당면한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의지에 입각하여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할 것이냐에 관한 통일된 사고체계”라고 정의한 것처럼 군사사상의 핵심은 한 국가의 國防意志<sup>14)</sup>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의지는 장차 또는 당면한 전쟁을 위하여 어떻게 군사력을 준비하고 수행할 것이냐에 대한 정신적 기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군사이론의 정립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주 14) 국방의지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국가가 처하고 있는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전쟁관에 바탕을 둔 전쟁지도 및 수행신념, 그리고 이 신념에 입각한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수행한다.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사상의 뿌리가 미흡한 가운데에서도 편성, 무기체계, 교리, 교육훈련 분야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왜 싸워야 하고, 어떤 의지를 갖고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랍국을 대상으로 한 승리와 월남의 패망을 통하여 국가 최고 지도자로부터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국방의지를 갖는 것이 전쟁에서 승패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의 存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현대화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민전체가 확고한 전쟁지도 및 수행의지가 없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사상은 이러한 국방의지를 체계화하는 것이며 유사시 모든 국력을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군사사상의 정립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사회가 다양화되고, 국가이익보다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시 되는 흐름 속에서 국방의지의 체계화는 국민들에게 군사분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을 건설과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 다. 통일된 軍事的 價値觀 형성과 戰勝 보장

군사사상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모든 군사적 노력을 군의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시키고, 조화를 이루게 하여 전승을 보장하게 해주는 것이다. 통일된 군사사상은 국가와 군 조직원들이 이심전심의 교감을 형성한 가운데 전쟁준비와 군사작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 통합되어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다 창의적인 군사사상은 올바른 전쟁관, 정확한 미래예측,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다.<sup>15)</sup>

전사를 통하여 볼 때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정립된 국민전쟁사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이 군사적

주 15) 1870년 보불전쟁에서 패배한 직후 프랑스의 포쉬 장군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보다 오히려 군사사상의 부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군사사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관한 소신과 철학이 없는 것이다. 확고한 신념과 치밀한 준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전쟁을 치루게 되면 승리는 커녕 패전한 까닭마저 알 수 없게 된다.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가 오늘날 독일의 군사사상에 탐닉한 나머지 아무런 비판없이 모방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두려운 것이다”하고 하여 군사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육본, 「한국 군사사상」, 1991, p.9.에서 재인용.

성공을 거둔 것도 창조적인 군사사상의 덕분이었다. 독일은 기동전과 마비전(痲痺戰) 사상을 통찰하고 전차를 중심으로 한 팬저(Panzer) 사단과 직강하 폭격이 가능한 스투카(Stukas) 폭격기를 이용한 전격전을 통하여 제1차대전의 진지전, 소모전 사상에 젖어 있던 프랑스 마지노(Maginot) 요새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또한 마한의 해양전략, 두체, 미첼, 세베르스키의 항공전략과 같은 새로운 전략사상은 현대의 통합작전수행의 연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군사사상은 국가방위를 위한 통일된 군사적 가치관, 공통된 인식을 형성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전쟁인식, 군사력 건설 및 운용 등 모든 군사적 활동을 지배함으로써 전쟁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sup>16)</sup> 나아가서 육·해·공군 각 군의 이해관계도 공통된 목표로 결집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라. 國防의 미래를 先導하는 역할

군사사상은 불확실한 전쟁의 영역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개척해 나가는 안내자이자 올바른 전쟁지도 및 수행을 위한 지표가 된다. 확고한 군사사상의 뿌리가 없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군사이론과 용병술의 발전이 미진하고 부대지휘에 있어서도 미시적이고 단편적이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사상은 군사력 건설, 전략수립, 군사교리의 발전, 작전수행에 있어서도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국방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군사사상이 정립되어 있다면 군사전략 수립에서부터 군에서 작성되는 각종 중장기계획 수립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원들이 군사사상의 기초를 유지한 가운데 공동의 인식을 갖고 계획수립과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확고한 군사사상의 발전은 국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억제력을 유지하고 유사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기체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력의 운용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과 전투수행방법의 발전을 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마. 地政學的 특수성 극복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세력이 상충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되는 특수성으로

주 16) 김희상, 「한국적 군사발전을 위한 모색」(서울: 전광, 2000), pp.39~40.

인하여 많은 국난을 겪어 왔다. 국난극복의 역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수행을 위한 군사력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 군사력 수준인지 그 능력의 한계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략적 환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스위스는 독특한 군사사상을 보유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 유대민족의 생존과 자위적 팽창주의를 전쟁수행신념으로 하고, 量보다 質 위주의 군사력 건설에 치중하여 國民階兵的 總力戰 수행을 위한 군사력 건설에 역점을 두어 선제기습, 속전속결, 대량보복전을 수행함으로써 철저한 응징에 의한 적의 도전의지를 말살시켜 전쟁을 억제하는 공세적 군사력 운용을 하고 있다.

한국은 특수한 전략환경에서 주변 강대국을 능가하는 군사력 증강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뒤따른다. 한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의 군사역량을 절대적으로 압도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서 비롯된 독특한 군사사상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정학적 특수성, 즉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 불리한 전략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IV. 군사사상 研究 활성화 方案

### 1. 한국의 傳統과 軍事思想의 체계적 연구

한국의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정립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군사사상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과 군사사상을 알아야 한다. 한국 군사사상의 특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군사사상은 우리의 전통과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군사사상이 왜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미래의 군사사상은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인지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과 사상에 대한 이해는 군사사상의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의 전통과 사상에 기초한 군사사상이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군사제도, 병법, 무기체계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군사사상 뿌리를 찾아내고, 이러한 군사사상을 현대적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창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

다.<sup>17)</sup>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이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군사, 국방관련 학술지나 연구논문을 찾아보면 우리의 군사사상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무척 어려운 반면에 외국의 군사사상 및 전략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사상에 대하여 설명하면 그 형성배경 등에서부터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한데 우리의 군사사상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군사제도, 병법 등에 대한 연구는 한국 군사사상에 대한 기초를 강화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분야는 보다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가 집단까지 확대하여 연구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민족의 전쟁사 연구를 통하여 군사사상의 뿌리를 찾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서양의 주요 군사사상 발전은 전쟁수행을 통한 교훈을 도출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수행한 전쟁사 속에서 어떠한 군사사상을 적용하여 전쟁을 수행하였고, 도출된 교훈들이 이후에는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전쟁사 연구를 통한 우리의 군사사상을 찾는 노력은 보다 실질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2. 세계의 軍事思想과 理論의 연구

군사사상의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군사사상과 함께 발전된 세계의 군사사상과 이론의 연구 또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동·서양의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군사사상 발전을 위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동·서양에서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손자, 클라우제비츠를 비롯한 많은 군사사상가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실적을 우리의 군사사상 창출에 접목시키는 노력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동시에 각 시대별, 국가별 안보전략 환경이 그들의 군사적 전통에 어떻게 반영되어 어떠한 군사사상으로 발전되었으며, 그렇게 정립된 군사사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군사사상 창출에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서양의 정립된 군사사상을 분석하여 한국적 상황에 부합되도록 적용하는 노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sup>18)</sup>

주 17) 김희상, 앞의 책, p.156.

18) 김희상, 앞의 책, p.157.



또한 서양의 군사사상을 연구하게 되면 군사이론분야 및 군사교리분야를 보다 심도 깊게 접근함으로써 사고 및 의식체계인 군사사상이 체계화되어 군사이론으로 정립되고 군사교리화 하여 용병술체계(군사전략, 작전술, 전술)까지 연계성 있게 접근함으로써 실천 및 적용분야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한국의 軍事思想家에 대한 연구

우리는 위대한 군사사상가를 찾게 되면 우선 손자, 리델하트, 클라우제비츠 등과 같이 외국에서 먼저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유구한 역사적 전통과 외세와 투쟁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의 역사속에서도 훌륭한 군사사상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예들 들면 조선시대의 이순신, 유성룡, 이이 등과 같이 군사분야에 대한 선각자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인물들이 많이 있다. 우리들이 이분들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그분들의 사상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군사사상을 창출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인 접근이었다면, 새로운 각도에서 인물 중심의 연구는 좋은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서양에 위대한 군사사상가가 많은 이유는 특정한 인물이 주도적으로 군사사상을 정립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일편 보여지기도 한다. 역사속에 나타난 위대한 장수, 인물들의 군사사상이 무엇이였으며, 그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였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좋은 연구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연구가 군사사상적인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4. 군사사상과 科學技術의 조화

서양의 군사사상 변화는 정치적 목적과 무기체계의 발전, 전략이론의 발전에 따라 개념이 확대되고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말기의 핵무기의 등장은 전쟁을 '전쟁원인과 전쟁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에 추가하여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 재래전과 핵전쟁으로 구분할 정도로 군사전략이 확대되었고 병행하여 군사사상도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이 군사사상에 많은 영향<sup>19)</sup>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대의 특징적인

주 19) J.F.C Fuller(1878~1966)는 그의 저서 “무기와 역사”에서 “만일 적절한 도구나 무기를 발견한다면 이는 승리의 99%를 보장한다. 전략, 지휘통솔법, 용기, 군기, 편성 및 사기와 전쟁물자 등은 무기의 우월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승리의 1% 역할 밖에 못한다.”라고 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현상이다. 핵무기의 출현에서부터 최근에는 로봇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신무기 출현은 전략개념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어떤 종류의 무기체계를 보유할 수 있는가 여부는 군사사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늘날은 일반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의 개념이 형성되었다.<sup>20)</sup>

육군도 국방개혁 2020 추진을 위한 미래 육군 건설 비전에서 “군 구조는 21세기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위주의 첨단 전력구조로 개편해 나가겠다”<sup>21)</sup>고 제시한 것은,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부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공지전투(Air land battle) 개념은 교리를 먼저 정립한 후 부대구조를 구상하고 무기체계를 발전시킨 혁명적인 것이었다. 과거에는 개별적인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이 전술, 교리는 물론 부대구조 등 모든 것을 선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지전투개념은 통합성(Synchronization) 개념에 의하여 제전장기능을 통합운용함으로써 통합전투력 운용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특히 걸프전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개념에 의한 현대전 수행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전쟁수행 개념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신무기의 등장도 먼저인지, 군사사상을 정립한 후에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신무기를 등장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현명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장차 추구되어야 할 군사사상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무기체계를 갖추고 그 무기체계에 맞추어 전쟁수행 논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하는 싸울 방법을 먼저 설정한 후에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군의 전투발전체계상 개념에 의한 소요체계(CBRS)제도화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가는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물론 여러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때에 따라서는 군사사상이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군사력 운용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군사력 건설을 추구하는 사고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주 20) 과학기술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도입되어 무기체계의 발전, 정보수집자산의 발전, 군사력 운용개념의 변화와 같은 군사혁신을 가져왔다. 온창일의 4, 「군사사상사」(서울 : 황금알, 2006), p.315.

21) 「국방일보」, 2006. 7. 28.

## 5. 군사사상 전문가 육성과 연구의 붐 조성

군사사상의 정립은 어느 한 두사람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완성될 수도 없는 과제이다. 자주적인 군사사상의 정립은 우리의 전통과 사상, 국가전략,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 군사제도의 변천 등 다양한 분야를 심도깊게 연구하여 군에서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 더욱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군사사상에 대한 많은 전문가 육성과 연구의 붐 조성이 필요하다. 먼저 군사사상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장교 양성교육기관에서 부터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기관에서 더욱 심도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실상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군사사상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한국의 군사사상보다는 동·서양의 군사사상에 관한 내용 위주로 진행되는 듯하다. 육군대학에서도 군사사상 과목을 전략학 시간에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도이다. 교육을 위한 가용시간이 제한되겠지만 모든 장교 양성교육기관에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병과 학교 및 육군대학에서도 연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군의 간부들이 군사사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학문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군사사상 하면 어렵다는 선입견을 먼저 갖게 되는데 이는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한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인원들의 관심과 접근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 군사학을 학문으로 인정하고 군사학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것은 군사사상 연구를 위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군사사상에 대한 접근을 강화한다면 군사학 석사, 박사과정에서 군사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도록 유도해 나갈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연구산물의 축적이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는 가칭 “軍事思想”誌를 발간하는 것이다. 군에서 많은 간행물이 있지만 군사사상을 전문으로 하는 간행물은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군사사상에 대한 특집이나 연구산물을 고정적으로 게재하는 곳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칭 “군사사상”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면 군사사상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 주기는 연간단위로 발행하다가 연구산물이 축적되고 활성화되면 반년단위로 발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조직, 예산면에서 제한이 된다면 우리 육군에 새로이 신설된 리더십 센터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군사사상지 발간이 제한시 가능한 대안은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기간행물에 “군사사상” 분야를 신설하여 고정적으로 게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군 교육기관에서 군사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문적 연구와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한국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한국적 군사사상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 V. 결 언

우리민족의 군사사상은 전통적으로 수세적인 특징으로 자전자수사상(自轉自守思想)과 선수후공(先守後攻)과 국민 총력방위전략을 추구해 왔다. 국가가 융성하였던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를 필두로 하여 상무정신을 고취하여 튼튼한 국방력을 보유함으로써 외침에 대응하고 위세를 과시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소극적 선수후공개념(先守後攻概念)의 방어위주 전략으로 일관함으로써 문약에 젖어 국방력이 약화되어 국난을 자초하였던 것이다.

결국 군사사상은 민족의 흥망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방의지를 체계화하여 통일된 군사적 가치관 형성으로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고 국방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독특한 군사사상이 없는 민족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우리의 군사사상 정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의 군사사상이 새로이 정립된다면 이는 “모든 국민이 전쟁에 임하는 정신적 구심점”이 되고 “공통의 사고와 행동지표로서의 전쟁수행신념”이 될 수 있으며, “전·평시의 전쟁대비 및 전쟁지도를 위한 사상적 기반”이 되는 역할<sup>22)</sup>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자주적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군사사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의 군사사상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의 군사사상을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군사사상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사사상의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의 전통과 군사사상의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고, 세계의 군사사상과 이론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훌륭한 장수,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가 다소 소홀하였던 훌륭한 군사사상가를 발굴하고 한국 군사사상의 뿌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무기체계의 발전이 전략개념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먼저 군사사상을 정립하여 군사사상이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조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군의 교육기관에서 군사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의 붐 조성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군사사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사사상 연구를 활성화하여 창조적인 한국의 군사사상이 정립된다면 자주적 국방역량 확립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주 22) 육군본부, 「한국군사사상」, 1990, p.243.

# 무기체계

- 무기체계 분석평가 내실화 방안□ ..... 대령 조경익  
(육군본부 전력분석과장)
- 이라크 파병을 통해 얻은 교훈과 발전방향 제언□..... 중령 이대진  
(1사단 전차대대장)



# 무기체계 분석평가 內實化 방안

## 목 차

- I. 서 론
- II. 분석평가 업무수행 체제
- III. 분석평가 효율성 저해요인 분석
- IV. 분석평가 내실화 방안
- V. 결 론



대령 조경익  
(육군본부 전력분석과장)

## I. 서 론

국방 주요사업 특히 방위력개선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관련업무 종사자는 물론이고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발전과 정착도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02년도에 국방부에 분석평가관실<sup>1)</sup>이 창설되면서부터 방위력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방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업무가 확고한 제도로 정착되어 시행되어 오던 중, '06년도에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방위력개선 사업 업무수행체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분석평가 업무체제도 보완과 개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해서 다양한 발전 방안들이 검

주 1) '02. 1월에 투자평가과, 운영평가과, 비용분석과 등 3개과로 편성되어 분석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정착에 노력해 오다가 '06. 1월에 방위사업청 창설과 동시에 분석평가 조직이 이관되고, 현재는 자원관리본부의 전력조정평가팀에서 분석평가 관련 정책/제도발전 및 조정,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토되고, 시행되어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외형상의 제도 정착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분석평가 수행과 그 결과를 적절하게 차기 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체제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부나 각군본부,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분석평가 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석내용의 질적인 수준이나 분석결과의 활용도면에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분석평가가 특수영역이었고 분석내용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지 않아서 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시 되었으나 이제는 분석대상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렵게 수행한 분석평가 수행결과가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적시성을 상실하여 제대로 사업추진에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동일한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중복 수행하는 비효율적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무기체계 전력화 과정에서의 분석평가 업무수행상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제시하여 분석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분석평가 업무수행 체제

### 1. 분석평가 업무 정의

방위력개선 사업 분석평가는 “방위력개선 사업의 최초 소요기획으로부터 집행 및 운용, 도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문적·심층적 분석활동으로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의 개념<sup>2)</sup>을 포함한 국방기획관리제도상

주 2) “사업분석”은 방위력개선 사업을 기획,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목표의 달성도와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제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의사결정권자 또는 각종 심의·조정·의결기구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위력개선 사업 분석평가의 한 분야이며, “비용분석”은 방위력개선 사업을 기획,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한정적인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 및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적정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의사결정권자 또는 각종 심의·조정·의결기구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위력개선 사업 분석평가의 한 분야이다.

의 한 기능”으로 정의되고 있다.<sup>3)</sup> 또한 시행시점에 따라서 소요기획단계, 획득단계, 운영 유지단계 분석평가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분석평가를 통하여 국방투자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지침 내용은 의사결정체제에서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변화에 동요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방위력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 2. 분석평가 수행 방법

방위력개선 사업에 대한 단계별 분석평가는 업무의 특성과 수행절차를 반영하여,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합참 및 각 군·기관이,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방위사업청이, 운영 유지단계 분석평가 중 전력화 평가는 각 군이, 전력운영분석은 합참이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대별 분석평가 대상 및 방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제대별 분석평가 대상 및 방법**

구 분	자 체 분 석(검증)	전 문 용 역 분 석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참/방위사업청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 사업 중 장관이 검증을 지시한 사업</li> <li>방위사업청에서 분석평가한 사업 중 중요 사업</li> <li>합참에서 제출한 소요요청/제기 사업중 예상 획득비용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관 지시사업</li> <li>유사목적별 사업의 통합 분석평가 필요 사업</li> <li>사업조정·통제, 분석평가 기법 발전에 대한 방안 연구 등</li> </ul>

주 3) 국방부, 『분석평가지침』, 2006. 6. p.3.

4)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방위력개선 사업의 소요제기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합리성, 정책에 부합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인 소요결정을 지원하며,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의 사업추진 단계별로 세부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를 지원한다. 그리고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는 전력투자예산의 집행에 따른 초도양산 배치, 야전운영 및 도태까지의 전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목표달성도, 사업집행의 교훈 및 집행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당해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 분	자 체 분 석(검증)	전 문 용 역 분 석
합 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참의장 지시 사업</li> <li>• 각 군/기관에서 분석평가 결과가 제출된 사업</li> <li>• 합참에서 소요 요청하는 사업</li> <li>• 기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분석 대상사업 중 분석의 신뢰성 요구정도, 분석 난이도 및 분석여건 등을 고려 전문용역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li> </ul>
각 군/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군/기관의 장이 지시한 사업</li> <li>• 소요요청 사업 또는 소요변경 요청 사업</li> <li>• JSOP에 반영된 전력 중, 장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소요요청 사업</li> <li>• 유보/삭제된 소요요청 사업 중 재소요요청 사업</li> <li>• 소요요청 부서 의뢰사업 중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분석 대상사업 중 분석의 신뢰성 요구정도, 분석 난이도 및 분석여건 등을 고려 전문용역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li> </ul>
방 위 사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 청장 지시 사업</li> <li>•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요구 사업</li> <li>• 2개 군 이상 공통 사업</li> <li>• 중기계획 신규반영 및 중대한 계획 변경 사업</li> <li>• 예산요구서상 신규요구 및 예산변경 사업</li> <li>• 사업주관부서 의뢰사업 중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li> <li>• 기타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분석 대상사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액관리대상 사업(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li> <li>- 기술적 난이도 등으로 자체분석이 제한되는 사업</li> <li>- 국민적 관심이 예상되는 사업 등 전문용역분석이 필요한 사업</li> </ul> </li> </ul>
사업주관 부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계획 신규반영/계획변경 사업</li> <li>• 예산요구서 신규반영/예산변경 사업</li> <li>• 집행 중 또는 집행완료 사업 중 방위사업청(분석시험평가국) 미 선정 사업</li> </ul>	
국과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연구개발 실행계획서에 신규 반영할 주요 핵심 기술개발 사업</li> <li>• 중기계획 신규반영 및 중대한 계획변경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li> </ul>	

이에 따르면 분석평가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에 관련되는 각 군 및 기관, 합참,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과연 등 모든 제대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분석평가 수행 방법은 자체 분석을 수행하거나 전문용역 기관에 의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의 경우에는 합참이나 방위사업청에서 분석한 사업에 대한 검증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5)</sup>

방위력개선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는 종료 후 2주 이내 국방부에 보고하고 사업주관부서,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하며, 국방부는 분석평가 결과에 대해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분석·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분석평가 결과를 접수한 사업주관부서, 관련부서 및 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방부 및 분석평가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sup>6)</sup>

### 3. 분석평가 내용

방위력개선 사업이 시작되는 소요요청 단계로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무기체계가 야전에 배치, 운용되는 단계까지 각 사업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분석평가의 주요 분석내용은 “필요한 무기체계를 적정한 비용으로 도입하여 야전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사업단계별로 요구하는 분석내용은 사업추진의 성격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되는데 사업추진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분석평가의 주요 분석요소는 <표 2>와 같다.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경제적인 추진방안, 계획 대 추진 실적, 요구되는 성능 발휘여부 및 보완요소, 전 단계 분석평가 내용의 반영여부 등이 주요 분석 내용이 된다. 방위사업청 창설에 따라 계획-예산-집행단계의 분석평가는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하게 되어 각 군과 합참에서는 소요결정을 위한 소요요청 단계에서의 분석평가가 주를 이루게 되며, 전력운용단계에서의 전력화평가와 전력운영분석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소요요청은 전력

주 5) “자체분석”은 소요요청부서, 사업주관부서 및 분석평가 전담부서에서 지시/의뢰/자체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직접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검증은 합참, 방위사업청에서 분석/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공동으로 검증을 실시하는 용역검증과 국방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용역분석은 관련부서·군 및 외부전문기관의 요원을 지원받아 팀을 구성하거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공동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국방부, 『분석평가지침』, 2006. 6. p.17.



〈표 2〉 사업단계별 분석평가 주요 분석요소

사업단계	주요 분석요소
소요요청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필요성</li> <li>• 편성/운용개념, 소요기준/소요량의 타당성</li> <li>• 전력화시기/방법, 작전요구성능, 전력화 지원요소의 적절성</li> <li>• 부대소요시기, 소요병력 및 기타 참고사항</li> <li>• 비 투자 개선방안 분석</li> <li>• 비용대효과 분석</li> </ul>
계획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필요성/운용계획의 적절성</li> <li>• 계획의 실현 가능성/계획수립의 완전성</li> <li>• 계획예산의 타당성</li> <li>•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작전요구성능 적정성</li> <li>• 비용대효과 분석</li> <li>• 추진전략(기술확보 목표 등)의 적정성</li> </ul>
예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필요성, 소요재원 및 성능, 획득방법, 운영유지, 기타 요소 등</li> <li>• 요구예산/사업계획의 타당성</li> <li>• 각종 규정·절차 준수여부</li> <li>• 계획단계 사업분석 결과 반영실태</li> </ul>
집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집행 계획 대비 실적</li> <li>• 소요기획/계획/예산단계 평가결과 반영여부</li> <li>• 사업추진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객관성</li> <li>• 예산집행과정의 합리성·투명성</li> <li>• 계획의 변동요소 및 대처방법 적정성/문제점 발생 가능성 및 방지대책</li> <li>• 효율적 사업관리 여부</li> </ul>

사업단계	주요 분석 요소
전력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단계 분석결과의 반영여부</li> <li>• 운용부대의 임무 수행 실적</li> <li>• 사용부대장, 운용자 및 정비 관리자의 의견, 업체의 A/S 실태</li> <li>• 정비지원 실태/부품의 조달체계</li> <li>•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운용예산의 지원체계</li> <li>• 관리교범, 교육지원 등의 준수지원요소</li> <li>• 유사 장비 및 무기체계에서 발생된 문제점의 재현여부</li> <li>• 제기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장치 및 사후 환류체계</li> </ul>
전력 운영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전배치 후 패키지 요소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li> <li>• 합동 전장운용 개념에 부합된 통합전력 발휘여부</li> <li>• 사용부대장, 운용자 및 정비 관리자의 의견</li> <li>• 부대구조, 편제, 편성대비 인력확보 및 운용실태</li> <li>• 무장확보 실태 및 부품의 조달체계</li> <li>•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운용예산의 지원체계</li> <li>• 관리교범, 교육지원 등의 준수지원요소 구비 실태</li> <li>• 유사 장비 및 무기체계에서 발생된 문제점 재현 여부</li> <li>• 결함의 원인, 시정방안 및 시정결과 등</li> </ul>

증강업무의 출발점으로 여기에는 적정 성능의 무기체계를 적정 기간에 적정수량 전력화하기 위한 내용이 망라되기 때문에 구성요소들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는 해당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분석요소들에 대한 내실 있는 분석평가를 위해서는 경험 있는 군사전문가의 식견이 요구되고 있지만 특히 소요요청 및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용대효과 분석’은 신뢰할만한 분석수단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분석전문가가 구비되어야만 수행 가능한 고도의 전문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분석평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 4. 분석평가 수단

각 단계별 분석과제에 대한 분석평가는 대부분 관련자료를 종합평가한 정성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사업분석의 주요 구성요소인 비용 대 효과 분석은 정량적인 분석수단을 활용하게 된다. 비용 대 효과 분석은 비교대상 무기체계의 전 운용가능 기간의 운용효과와 생애주기 비용을 산정한 후, 두 무기체계의 효과비율과 비용비율을 상호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무기체계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효과산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제대별, 용도별로 개발된 분석용 워게임 모델을 운용하거나 설문방법 등을 사용하게 되며, 비용분석에는 생애주기 비용(life-cycle cost)을 추정하는 모델을 운용하거나 유사한 무기체계의 비용자료를 원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비용 대 효과 분석에 활용되는 모델 및 기법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비용 대 효과 분석에 활용되는 주요 모델/기법 명칭**

명 칭	용 도 및 특 징
JICM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구급 합동작전 분석용('94년 미국 RAND연구소 개발)</li> <li>• 정밀 사후분석 기능 보유(전선이동 거리, 전과/손실 원인별 분석 가능)</li> <li>• 정성적 요소 반영 가능(병력충원, 부대 준비태세, 보급품수준 등)</li> </ul>
VISION21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단급 부대 방책 및 작계 분석용('01년 교육사)</li> <li>• 분대~사단 단위까지 묘사 가능</li> <li>• 전선이동, 장비별/원인별 손실 및 전과 등 상세한 모의결과 제공</li> </ul>
JANUS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부대 작전계획 및 무기체계효과 분석용('97년 미국 리버모어연구소)</li> <li>• 소대, 분대 개별무기체계까지 묘사가능</li> <li>• 상세한 지형특성 반영</li> </ul>
ADAGE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공무기체계 효과분석용</li> <li>• 개별무기 교전효과 모의기능으로 방공무기체계 성능 분석</li> <li>• 통합전력 모의기능으로 전술상황하의 능력 분석</li> </ul>
AHP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약어, 미국 Satty 교수 개발</li> <li>•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하여 각 대안의 중요도 산출</li> <li>• 일정규모 이상 대상자에게 설문조사 실시</li> <li>※ 계층구조 설정 및 설문대상자 선정 결과가 분석의 질 결정</li> </ul>
PRICE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통계적 기법으로 비용추정</li> <li>• 장비의 전체체계를 하위체계, 모듈, 부품 등의 구조로 분해</li> <li>• 모델내의 비용관계식에 따라 개발비, 생산비 추정</li> </ul>

### Ⅲ. 분석평가 효율성 저해요인 분석

#### 1. 분석수행 방법상의 문제점

##### 가. 단위사업 위주 분석

지금까지 소요요청을 위한 사업분석<sup>7)</sup>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단위사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타군전력 및 유사전력 등 통합전력운용을 고려한 전력소요결정 필요성을 분석하기보다는 소요요청 대상 전력에 국한된 필요성, 소요량, 전력화 시기에 관련된 단편적 분석에 치중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개별 단위사업 위주 분석지원으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 적정 전력증강 소요산정, 첨단무기 전력화에 따른 기존무기 감소 소요 등 종합분석 및 대안제시가 미흡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소요요청의 필요성 검토결과는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고 소요량이나 소요예산도 치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나. 주장비 위주의 분석

전력화된 무기체계가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장비 전력화 이외에도 편성, 교리, 교육훈련, 종합군수지원(ILS) 등 전력화 지원요소가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요요청 단계에서는 물론 획득단계 분석평가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심층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비용을 검토해 보면 운영유지단계의 비용은 초기 획득비용 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석평가는 주장비 위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전력화 지원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상세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만큼 계획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으나, 주로 가용인력이나 시간, 분석수단 등 분석능력 부족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sup>8)</sup>

##### 다. 사업분석/비용분석 대상사업 구분 불명확

분석평가 지침에 의하면 소요요청 단계에서 각 군은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을 실시

주 7) '06. 5월까지의 '사전분석'이라 하였으나 새로운 '분석평가 지침'에서는 '사업분석'이라 부르고 있다.

8) 육본 분석평가단의 '06년 사업계획에는 각종 무기체계의 창정비 방침과 관련된 사업분석 과제 및 부대 창설관련 시설사업 분석 과제가 10여 건에 이르는 등 주장비 위주의 분석에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비무기체계 사업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분석평가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가용능력과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분석이나 비용분석 중 한 가지를 수행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소요요청단계 사업분석의 주요 분석요소를 적 위협 평가, 신규전력 소요의 필요성 검토, 작전요구성능/소요량, 전력화 시기의 타당성 및 총사업비의 개략적인 판단 등으로 예시하면서 여건 허용시 비용대효과 분석도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비용대효과 분석은 여건 허용시 실시하는 평가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상위문서인 전력업무발전규정에는 비용대효과 분석이 포함된 사업분석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모든 소요요청 대상 사업은 비용대효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sup>9)</sup> 또한 비용분석서도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동장비나 화력장비 등 주요 무기체계는 비용대효과 분석이 가능하지만 전투근무지원 분야 장비나 특수전 분야 장비 등은 효과측정이 매우 어려워 사실상 비용대효과 분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렇게 비용대효과 분석이 어려운 사업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게 되면 신뢰할 수 없는 분석결과가 제출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분석평가 전체에 대한 신뢰성 훼손이 불가피하게 된다.

## 라. 전력운영분석 대상 선정기준 부재

전력운영분석은 전력화되어 야전에서 운용되는 장비 중 전력발휘가 제한되거나 전반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종합평가 후 보완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현존전력을 극대화하고 신규 전력소요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분석평가의 한 분야이다.

대상사업은 주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의 주요 전력투자사업 중에서 초도 배치되어 운용중인 무기체계, 전력화 완료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이 착수된 무기체계, 2개 군 이상이 관련되어 합동전력 운용차원의 분석평가가 요구되는 무기체계, 기존 전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범주별 무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애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사업분석이나 전력화평가와 같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서, 분석평가 능력의 부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판단된다.

## 2. 분석기법 적용상의 문제점

### 가. 위게임 모형의 타당성 문제

무기체계의 비용대효과 분석에서 효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

주 9)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국방부 훈령 제793호)』, 2006. 6. p.144.

10) 국방부, 『분석평가지침』, 2006. 6. p.43.



법은 분석용 위게임 모델 활용과 AHP기법 등 설문방식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육본 분석평가단 전력분석과에서 '02년부터 '05년까지 실시한 15건의 대표적인 사업분석 사례들의 효과측정 방법을 검토한 결과 9가지는 위게임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AHP 기법을 사용하였다.<sup>11)</sup>

위게임 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가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제사항은 모형의 구조와 논리 그리고 타당성(validation)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타당성의 보장은 특히 분석모형의 경우에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사용된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확신 없이는 그 결과를 국가적 의사결정 문제에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게임 모형의 타당성은 군사전문가들이 그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거나 군사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증된 모형이라는 사실 등이 타당성 근거의 대부분임이 현실이다.

최근 분석용 위게임 모형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 기반환경의 발달과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묘사논리의 발전으로 정밀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밀성의 강화는 자연히 묘사범위 확대에 따른 고려변수의 대폭적인 증가를 수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입력 자료의 가변성을 더욱 증가시켜 총체적인 모형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전장이라는 복잡한 상황을 정밀하게 묘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분석용 모형은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르는 변수를 포함하게 되고<sup>12)</sup> 시나리오 또한 최소 수십 개에 이르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sup>13)</sup>

## 나. 입력 자료의 신뢰성 문제

위게임 모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입력 자료(D/B)를 구축해야 한다. 대표적인 戰區級 모델인 JTLS 모형<sup>14)</sup>을 예로 들면 지형, 부대, 무기체계 및 각종 손실 관련 데이터들을 사전에 구축해야 하며, 작전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부대 운용계획도

주 11) 육군본부, 『'02, '03, '04, '05 분석평가 결과』, 각 년도 3월.

12) JICM 모형의 경우 무기체계 특성데이터를 제외하고도 관련 입력파라미터는 약 600개 이른다.

13) 김운태·고원·박혜련, “분석용 정밀 위게임 모형의 통계적 진단 및 활용”, 2004 Proc - eedings of the Autumn Conference, Korean Statistical Society, pp.117~121.

14) Joint Theater-Level Simulation의 약어. 미국에서 개발된 전구급 분석모델로 '90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분석용과 훈련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대단위로 입력되어야 한다.<sup>15)</sup>

문제는 위게임 모델을 운용하기 위한 D/B 작성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나 하는 점이다. 모델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겠지만 그 내용의 객관적 신뢰수준은 누구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도입한 모델의 경우 대부분 최초 도입한 기관에서 우리 군의 실정을 반영하여 구축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분석목적에 부합되게 일부 데이터를 수정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무기체계 살상자료 등 위게임 결과의 근본적인 신뢰도를 결정짓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모델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진단이다. 따라서 위게임을 운용하여 도출된 분석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델 자체의 모의논리 뿐만 아니라 입력되는 다량의 데이터에 대한 검증체계가 구비되어야만 한다.

#### 다. 계층구조 설정의 임의성

비용대효과 분석에서 효과측정시 가장 보편적 방법인 위게임 모형 활용은 기동장비나 화력장비 등 일부 분야 분석에 국한되며, 지휘통제나 전투지원 또는 전투근무지원 분야 등 위게임 모의가 제한되는 장비들의 효과측정 방법으로는 AHP 기법이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AHP 기법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인데 설문결과는 통계적 처리에 의해 정량화된 수치로 표시된다.<sup>16)</sup> 일반적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계층구조를 문제에 적합하도록 설정하는 것과 둘째는 적합한 설문 대상자를 적정한 규모로 선정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분석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러한 주관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표현 또는 계량화하는 것이 AHP 기법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주 15) 이중 지형데이터를 예로 들어보면 위게임 모델을 운용하기 위한 D/B 구축 작업이 얼마나 방대한 작업인지를 알 수 있다. JTLS 모형에서 지형은 크게 15개 유형(평지, 혼합, 구릉, 도시, 산악, 하천 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모의대상이 되는 전 작전지역을 일정한 면적의 최소단위로 분할한 후 각 단위마다 해당하는 지형유형을 입력하게 된다. 지형유형 구분은 부대기동 및 교전효과와 장비운용 효과를 모의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러한 D/B가 구축된 이후에도 실제 전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모의조건 및 시나리오 관련 요소들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상전, 해상전, 공중전에 관련된 요소들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하는데 지상전의 경우에만도 피아 부대유형 설정, 편성 무기체계, 지형조건, 피아 정비/보충율, 전쟁임박 경보/동원령 경보시기, 화학전 피해율, 공격/방어부대 편성, 작전형태 결정, 전투주기 설정, 피아 최초 전투력 수준, 공격축선/방어선 설정, 최초 피아부대 편성/배치, 주요 부대 운용, 민감도 분석요구 등의 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

16) 조근태·조용근·강현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p.3.

AHP 기법을 적용한 분석결과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층구조가 대상 과제에 적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중요요소가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구성요소간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석평가단에서 지난 4년간 수행한 사전분석 과제중 AHP 기법을 적용한 6건<sup>17)</sup> 중 같은 화력분야 분석내용인 “K-55자주포 성능개량사업 사전분석”과 “130밀리 다련장 운영실태 분석” 등 2건의 계층구조 설정 내용 및 요소별 가중치 산정내역을 예로 들어 검토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계층구조 설정 내용 및 요소별 가중치 산정내역**

● K-55 자주포

대분류 가중치(Wi)	세 부 평 가 요 소	
	대분류 내 소항목 (가중치)	요소별 가중치(wi)
화력성능(0.426)	사거리 향상 (0,157)	0.067
	발사속도 향상 (0,170)	0.072
	자동화사격지휘체계(0,502)	0.214
	초탄발사속도 향상 (0,170)	0.072
기동성능(0.174)	최대속도 (0,358)	0.062
	궤도 성능 (0,642)	0.112
생존성능(0.26)	내부통신 성능 (0,546)	0.142
	진지 소산 운용 (0,454)	0.118
지원성능(0.14)	내구성 향상 (1,000)	0.140
총 효과지수	.	1

주 17) 실제 AHP 기법을 적용한 분석건수는 상당히 많지만 분석평가단에서 대표적인 분석평가 내용을 수록하여 매년 발행하는 “분석평가 결과” 책자에는 “K-55자주포 성능개량사업 사전분석”(’02년), “차기 서부지역 전자전 장비”(’02년), “미스트랄 대체방안 사전분석”(’03년), “130밀리 다련장 운영실태 분석”(’04년), “SAM 탑재차량 성능개량 사업 분석”(’04년), “군단 UAV 성능개량 사전분석”(’05년) 등 6건이었다.

● 130밀리 다련장

대분류 가중치(Wi)	세 부 평 가 요 소	
	대분류 내 소항목 (가중치)	요소별 가중치(wi)
화력성능(0.37)	사거리 향상 (0.256)	0.09
	발사속도 향상 (0.356)	0.13
	자동화사격지휘체계(0.177)	0.07
	초탄발사속도 향상 (0.211)	0.08
기동성능(0.20)	야지기동 성능 (0.636)	0.13
	도로주행 성능 (0.364)	0.07
생존성능(0.22)	장갑방호력 (0.412)	0.09
	화생방 방호력 (0.363)	0.08
	진지 소산 운용 (0.225)	0.05
지원성능(0.21)	탄약준비 용이성 (0.498)	0.10
	정비 용이성 (0.271)	0.06
	수리부속 지원 (0.241)	0.05
총 효과	.	1

(근거 : '02, '04 분석평가 결과 책자, 분석평가단)

1단계 계층구조의 구성요소는 화력성능, 기동성능, 생존성능, 지원성능으로 동일하지만 요소별 가중치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고, 2단계 계층 구성요소인 세부평가 요소는 항목자체도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항목별 가중치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전장기능 분야라 해도 장비의 특성에 따라 계층구조 설정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같은 성능을 요구하는 유사장비가 상이한 계층구조 및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석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상이한 구조를 가진 설문을 실시할 경우 효과 측정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 설문대상자 선정 기준 부재**

설문조사 방법에서 설문대상자의 수가 증가하면 정확도는 상승하게 된다. 추출된 표본집단의 의사가 모집단의 의사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체계 효과분석을 위한 AHP 기법 적용에 있어서도 설문대상을 가능하면 충분히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설문대상을 다수로 하기 위해서는 제한 요소도 많기 때문에 적정수의 설

문대상 선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규모의 설문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석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어떤 분석의 경우엔 설문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어 설문 내용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 마. 비용추정의 어려움

사업분석이나 비용분석에서 정확한 비용추정은 분석결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 산정 문제이다. 30년 이상 운용될 장비의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 장비운영유지비 등을 반영하게 되는데 장기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기 소요제기시에는 신빙성 있는 비용자료의 획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기관에서는 자료축적 내용의 공개가 제한되고 따라서 업계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게 되면 신뢰성이나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면 업계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비용자료를 제시한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초 개발계획서 제출시에는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는 개발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간 점차 소요비용 증가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A무기체계의 전력화 과정을 들 수 있다. '99년 최초 비용분석 자료에 의하면 40억원이 산정되었는데, '01년 집행승인 건의시에는 44억원이 되고, '02년 계약시에는 67억을 요구하여 53억원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비용자료 내용이 크게 변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작성된 분석평가 결과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 3. 분석수행 체제상의 문제점

#### 가. 분석대상의 중복

현재의 분석평가체제에서는 하나의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단계별로 유사한 내용의 분석평가를 여러 차례 중복해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 소요요청 단계에서 각 군에서는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합참에서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중기전환 소요요청시에도 각 군에서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합참에서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다.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 각 단계에 대한 국방부의 검증 및 추가 분석, 집행단계에서의 방위사업청의 사업분석, 운영유지단계에서 각 군의 전력화 평가 및 합참의 전력운영분석 등이다. 분석능력이 구비되어 각 계대별, 단계별로 충분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



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능력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 규정된 모든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충분하지 못한 분석평가가 반복해서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분석내용의 유효성도 문제가 되지만, 상하제대의 분석 관점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sup>18)</sup>

### 나. 분석능력의 제한

분석전담 조직의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분석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중의 하나이다. 육본 분석평가단의 경우 매년 연말에 다음연도의 분석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심의를 하게 되는데, 각 참모부에서 요구하는 분석소요의 50%도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이것은 1년 전에 이미 결정된 분석과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시 분석과제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시 분석과제는 신속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기 계획되어 있던 과제들을 순연시키면서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06년의 경우에는 육본에서 '총 전력 분석'을 6개월 이상 실시하게 되어 개별 소요요청 사업의 분석지원이 곤란하게 된 반면에, 군 개혁 추진을 위한 소요요청 대상 사업은 증가하여 분석 의뢰과제 24개중 5개 이내만을 지원하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분석능력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요요청 사업에 분석평가 결과 첨부이 필수화됨에 따라 소요요청 담당부서와 분석평가 전문부서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분석지원 능력이 제한되다 보니 분석지원의 적시성을 달성하기가 지극히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분석평가 부분이 소요요청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과 함께 '분석평가 무용론'이라는 극단적인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는 것이다.

분석평가 능력의 제한사항을 검토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중의 하나가 분석요원 확보문제이다. 훌륭한 분석수단과 분석여건이 구비된다 해도 분석평가 결과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분석요원의 분석능력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구비한 분석평가 전문요원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육군에서는 분석평가 전문요원을 정책형 특기의 하나로 별도 관리하면서 우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절대숫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요원이 부족하다 보니 야전요원으로 충원하게 되고, 야전요원의 경우는 계획인사가 적용되므로 어느 정도 분석기량을 습득할 때쯤이면 이동을 하게 되어 만성적으로 분석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주 18) 실제로 10여 년 전에 동일한 사업에 대한 육본과 국방연구원의 비용대효과 분석 결과가 상이하여 논란이 되었던 일도 발생하였었다.

### 다. 가용 모델/기법 부족

현재 육군에서 분석평가에 활용 가능한 분석용 워게임 모델은 JICM, JANUS, VISION 21, ADAGE, CEM, PRICE<sup>19)</sup> 모델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현 보유모델들은 작전계획이나 방책분석 위주의 모델로 무기체계별, 전장기능별 세부분석 및 작전 요구성능(ROC)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개별 무기 효과분석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미래 핵심전력인 지휘통제 및 정보전력 등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분석용 워게임 모델 부족을 일부분 대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성적 요소를 계량화할 수 있는 분석방법’도 AHP기법 이외에는 부재한 실정이다. 지휘통제, 정보, 화학, 전투근무지원 분야 등은 효과적인 워게임 모의가 제한된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CAI 체제나 정보장비 운용효과 등을 모의하는 워게임 모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sup>20)</sup> 육군 교육사에서 전투근무지원 훈련모델을 개발한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워게임 모델을 상당부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계획문서 분석평가 제한

소요가 확정되면 계획-예산-집행단계의 업무수행 및 평가는 방위사업청에서 전담하게 되어, 비록 자기 군의 주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각 군은 업무협조 및 의견제시 수준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방위력개선 사업의 추진에는 주장비 전력화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요소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업무는 계속 각 군에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주장비의 전력화와 연계하여 지원요소의 준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의견교환 및 밀접한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에서 작성한 국방중기계획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 군에서 그 타당성을 분석평가해 볼 기회가 없다는 것은 업무추진의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 19) PRICE 모델은 매개변수에 의한 비용추정관계식(CER)을 이용한 비용추정기법으로, 장비의 기술적/물리적 특성 및 환경 데이터와 과거 유사장비의 비용자료로부터 산출된 경험적 요소를 반영하여 연구개발, 생산, 운영유지비 등을 추정하는 소프트웨어 툴(tool)이다. PRICE-H/HL/M/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추정 과정을 완전 전산화하여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비용 관계식을 처리할 수 있고, 다수의 사용자에게 의해 정확성이 검증(실발생비용의 5~10% 이내에서 비용 추정 가능) 되었으며, 개별국가 및 개별 업체의 특성을 Calibration이라는 절차를 통해 모델에 반영시킴으로써 시장의 평균치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사업에 대해서도 비용 추정의 정확성을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 국방연구원은 독일에서 지휘통제 분야 모의모델인 DNS 모델을 도입하여 운영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 IV. 분석평가 內實化 방안

### 1. 분석수행방법 개선

#### 가. 총체적 전력분석 실시

금번에 새로이 제정된 ‘국방 전력발전 업무규정’이나 ‘분석평가 지침’ 등 에서도 소요요청 단계에서의 분석평가는 개별 소요전력에 대한 사업분석과 비용분석 위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전력소요는 단위무기체계에 국한된 분석에서 탈피하여 지상작전 수행개념을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전력운용차원에서의 전력소요와 유사전력과의 연계성, 미래전 양상 등을 고려한 심층 깊은 분석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합참이나 육본에서는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총체적인 전력소요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sup>21)</sup> 육군의 경우 이러한 분석소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체적 전력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총체적 전력분석은 육군 비전 및 개념서, 미래 작전능력 요구서(FOC)<sup>22)</sup> 등에서 제시된 미래전력 소요와 야전요구에 의한 긴급 전력소요 등 정성적으로 산출된 전력소요를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정량화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절차는 육군 비전 구현을 위한 전력소요를 종합한 후, 수개의 방안을 선정, 반복 모의를 통하여 계량화한 후 기존의 중·장기 전력증강 계획과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전력증강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sup>23)</sup> 이때 전술세대~전구급 위게임 모델을 활용하게 되는데, 육군전략목표기획서 작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3년 단위로 반복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육군의 소요요청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전력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지휘통제, 정보, 기동, 화력, 방호, 전투근무지원 등 전장 기능분야별 전력단위분석도 연간 1~2개 분야씩을 실시하여 분야별 전력의 균형성, 완전성, 취약요소 등을 심층 분석, 보완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입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개별무기체계 소요요청을 위한 단위사업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총체적 전력분석 수행의 일환으로 육본에서는 '05년 하반기부터 육군 최초의

주 21) 미 육군의 경우 2년 주기로 중기계획 작성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TAA(Total Army Analysis)를 실시하여 적정 전력소요와 부대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22) Future Operational Capabilities의 약어. 육군 교육사에서 작성한 개념문서의 일종으로 전장 기능을 중심으로 29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하고 요구되는 미래 작전능력을 제시하여, 미래 전력 창출의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된 문서이다.

23) 육군본부, “총전력분석 시행 계획”(육군본부 내부분서), '05. 10.

총전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sup>24)</sup> 금번 육본의 총전력분석은 국방개혁案과 연계하여 수립된 「육군 전력구조 혁신案」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능력 평가 및 취약요소 도출, 보완방안 제시에 주안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주요 분석내용은 위게임 모의와 전력지수를 활용한 총체적 전력 분석평가와 전장기능별 전력 분석평가, 제대별 전력분석평가, 신규 무기체계 작전효과 분석 등이다.<sup>25)</sup> 이와 같이 전체전력~개별무기체계까지를 망라한 체계적·종합적인 전력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새로운 전력구조와 이에 따른 전력소요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자료로 활용되어 목표지향적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고 소요요청의 합리성 및 논리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가용 국방재원내에서 효율적인 전력증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 관련요소 종합적 검토

개별 소요전력의 분석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성 검토에 있어서는 현재 보유 전력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전력 차원보다는 미래 전쟁 양상과의 적합성, 통합적 전력배비와의 부합성, 미래전 양상 등을 고려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소요량 검토에 있어서도 현존 부대구조에 따른 소요량 차원보다는 미래 군 구조와 전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력화 시기면에서는 제기전력 자체 차원 보다는 관련기술의 국내 수준 및 연계전력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작전요구성능(ROC)의 경우에도 선진국에서 현재 운용중인 전력의 성능차원 보다는 관련기술의 세계적 발전추세와 국내기술 확보계획 등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주장비 관련사항 위주의 분석에서 영역을 확장하여 편성, 교리, 교육훈련, 종합군수지원(ILS) 등 제반 전력화 지원요소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비수명주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창정비 방침 등에 관련된 사항들도 중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 24) 이미 제시된 전력구조안에 대한 분석평가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소요를 도출하는 본래의 ‘총전력분석’ 과는 다소 성격이 상이하지만 “육군 총전력분석”으로 호칭하고 있다.

25) 위게임에 의한 총체적 전력 분석평가는 전구급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전체 전력의 작전계획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전력지수에 의한 분석평가는 전체 및 전장기능별 전력의 향상 및 미흡분야와 축선별 전력배비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전장기능별 전력분석평가는 전체 전력을 6대 전장기능으로 구분하여 취약분야 분석 및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제대별 전력분석평가는 전술제대 분석용 위게임 모델을 활용, 군단~연대급 제대의 전투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정성적 방법에 의한 전장기능별 평가와 전력지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신규 무기체계 작전효과 분석은 개별무기체계 효과분석용 위게임 모델을 활용하여 전투효과를 도출하고, 무기효과지수(WEI) 구성요소인 화력, 기동성, 생존성, 지휘통제 능력 등을 비교하여 무기체계 성능평가를 한 후 이를 종합하여 작전효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다. 사업분석/비용분석 일원화

소요요청시의 사업분석이나 비용분석은 해당사업의 소요재원을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원조달 가능성을 판단하여 소요결정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전력화 방안을 검토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이러한 동일 목적을 위한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을 전혀 다른 양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분석 대상사업과 비용분석 대상 사업을 분리해서 사업 성격에 맞는 분석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결과보고서 양식을 개선해서 효과측정이 가능한 사업은 비용대효과 분석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그 외의 사업은 비용분석 결과만을 제출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각 군의 능력으로는 모든 소요요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분석이나 비용분석 한 가지만을 수행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방안은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을 일원화하여, 현재의 사업분석 결과보고서 양식 중 “비용대효과 분석” 항목을 필요시에는 “비용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양식이 개선되면 사업분석이나 비용분석 모두 공통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편성 및 운용 개념의 타당성, 전력화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타당성, 작전요구성능 설정의 적절성, 전력화 지원요소 적절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비용대효과 분석의 경우에는, 효과측정이 가능한 기동, 화력, 방공 분야 등의 주요 전투장비는 비용대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효과측정이 곤란한 전투근무지원 분야나 전투지원 장비 등은 비용분석만을 실시하도록 하면 된다. 소요요청 사업의 특성상 비용대효과 분석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분석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부실한 결과의 제출은 결국은 분석평가 전 분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라. 전력운영분석 체제 정착

분석평가 지침에 제시된 전력운영분석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각 군 및 합참, 연합사에서 실시하는 전투준비태세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육군본부의 예를 들면 전투준비태세평가에서 취약분야가 선정되면 분석평가단에서는 연간 2~3개 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전력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전력발휘 제한 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여기에는 비투자 운용개선 방안, 적정도대시기 판단, 성능개량이나 후속 무기 전력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전투준비태세 평가 이외에도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이나 육군에서 실시하는 전투지휘검열 결과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 2. 분석기법 타당성 제고

### 가. M&S용 표준자료 체제 구축

분석용 위게임 모델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한국형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국방 M&S분야 “자료 표준위원회”를 설치, 운용하여 부서/기관별 입력 영역 설정 및 자료 표준화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입력자료 요구내용을 구체화한 후, 기관별/모델별 특성에 적합한 자료수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표준자료체제 구축이 가능한 자료의 종류를 부대자료, 무기체원/성능, 표적자료, 지형/기상, 군수자료, M&S 관련자료 등 6개 분야로 구분하고 국방부/합참, 각 군 및 연구기관 등의 역할분담체제 하에서 국제자료표준을 적용한 단계적인 구축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sup>26)</sup>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자료 활용체제는 국방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국방관련 M&S 모델을 운용하는 모든 부서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표준자료체제 구축은 M&S 전문기관에서 현재 운용중인 대표적인 모델들의 자료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JICM, 비전21, JANUS 등의 분석용 위게임은 물론 창조, 전투21, CBS 등 훈련용 위게임 모델까지를 망라해서 해당 모델의 자료를 지형, 무기체계 특성, 살상률, 부대목록, 부대자료 입력내용 등을 분야별로 분석, 상호 비교할 필요가 있다. 작전형태별 임계값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또는 지형 특성이 몇 가지로 분류되며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무기체계간 살상률은 어떠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타당한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요구되는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료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하게 되면 그 차이에 따른 모의 결과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고,<sup>27)</sup> 따라서 요구되는 자료 특성이나 단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자료체제는 모델 단위로 구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의수준에 따라 모델에 입력하는 단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기체계나 부대구성 관련자료 등은 표준안을 작성해 놓으면 여러 모델에 공통으로 활용가능한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주 26) 대표적인 연구로 「장상철·이민형·이효정, “국방 M&S 표준자료체제 구축방안 연구”, 국방연구원, 2004. 12.」를 들 수 있다.

27) 과거에 분석용 위게임 모델을 활용하여 연대급 부대 편성안의 방어능력을 분석한 사례가 있었다. 위게임 모델에 적용되는 공격→방어, 방어→지연전으로 전환되는 작전형태 변환 임계값을 70%, 50%로 설정한 경우에는 연대의 방어작전이 성공했는데, 70%, 60%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방어가 실패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공자와 방자가 교전시간이 경과하면서 전투력이 저하되는데 공자가 먼저 70% 이하로 저하되면 공격이 실패하여 방어가 성공하게 되지만, 방자가 먼저 임계치에 도달하면 지연전으로 전환되어 방어가 실패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는 공자의 전투력이 70%에 이르렀을 때 방자 전투력은 60~50% 사이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 나. 모델 및 자료 인증체제 개발

표준자료체제가 구축되고 나면 모든 분석용 위게임 모델 운용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표준자료체제를 활용한 모의결과만을 유효하도록 인정하는 인증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표준자료체제 구축은 각 기관 및 군별로 특성에 따라 임무를 분담하게 되지만 인증체제는 국내에서 가장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분석 전문기관에서 전담해야 한다.

이러한 인증체제가 구축되면, 어떤 모델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경우 관련 자료구축체제를 검토해서 표준자료 입력 활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점검하여 가능시는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불가능시는 수정을 요구하여 표준 자료구축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외국모델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자료내용을 점검하고 어떻게 구축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증되는 경우에만 모델운용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면 자료의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분석평가 담당기관이나 부서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다. 전장기능별 표준 평가요소 설정

AHP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장기능별로 무기체계에 요구되는 성능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반영한 계층구조를 설정해야 서로 다른 무기체계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계층구조 구성요소들 간의 가중치를 먼저 산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비교대안별 효과지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모든 분석평가 과제 수행시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같은 전장기능 내에서는 서로 다른 분석과제 수행시에도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준 계층구조를 설정하고 필요시에는 표준 가중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장기능별, 장비별로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개발해야 한다. 무기체계별로 이러한 표준평가요소 및 가중치가 제시된다면 유사한 무기체계의 효과측정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요소가 상이하여 효과측정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표준평가요소는 각 군에서 해당 군 무기체계에 대한 운용개념 및 교리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참에서 그 적절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적정 설문대상 표준화

적정 규모의 설문대상을 설정하는 문제도 전장기능 및 무기체계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소화기와 항공기를 예로 든다면 설문대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범주별로 전문가 집단 선정을 내규화하여 정책부서, 야전부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세분화한 적정인원을 직위별로 지정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AHP 기법을 적용하여 대안별 효과를 측정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설문대상 선정 문제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는 분석업무의 능률 도모 및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목표가에 의한 비용통제 방안 강구

업체에서 제시한 비용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표가”에 의한 비용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개발계획서 제출 등 사업초기에 비용분석을 실시하여 비용상승 예상폭을 반영한 목표가를 설정하고 사업을 중기계획에 반영할 때 목표가를 확정한다. 이후에는 사업단계마다 업체 요구비용이 목표가를 초과시 심의회에서 비용 상승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재판단하여 비효과적 사업은 과감히 중단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비용통제체제가 가동되면 사업추진간 불합리한 비용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업체선정시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 육군의 경우도 8.2조원이 투입된 코만치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 조치한 사례도 있다.

### 3. 분석수행 체제 보완

#### 가. 세대간 분석업무 역할 정립

각군본부로부터 전문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 비용분석이나 효과분석이 무기체계 설계단계에서 量産까지 단계별로 수행되어 작전요구 성능, 개발목표 등이 필요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됨으로써, 최적설계안 도출, 비용절감 등을 추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분석능력의 제한을 고려한다면 사업추진 단계별로 그리고 세대별로 분석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사업의 중요성, 사업의 규모, 관련세대 등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이왕 이루어지는 분석평가는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군본부에서는 소요요청되는 무기체계의 필요성, 비용대효과, 작전요구성능(ROC) 적절성 등을 분석하고 합참에서는 각군본부의 분석결과를 검증하고, 전장운영 개념에 근거한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며 각 군과 분석중복 과제는 합참차원의 합동성위주로만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 나. 분석능력 확충

분석능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분석평가 전담 조직을 확충하는 것이다. 육군본부 분석평가단의 경우 모의분석과 등 2개과 규모의 조직 확충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확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총체적 전력분석, 전력단위별 분석, 단위사업별 사업분석, 소요요청 사업 비용분석, 전력운영분석, 전력화평가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능력의 부족을 조직확장으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소요요청 및 사업주관부서의 자체분석 능력 보강이 필요하다. 자체분석은 소요요청 부서 및 사업주관 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직접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방위력개선 사업은 1차적으로 소요요청 부서 및 사업주관 부서에 의한 ‘자체분석’이 실시되어야 하고, 분석평가 전담부서에 의한 ‘분석평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비용대효과 분석을 위한 작전효과 분석이나 생애주기 비용(life-cycle cost)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분석평가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요요청 부서의 자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석평가 업무수행의 안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석평가 실무참고서”를 발간하고, 국방대학교 등에 분석평가 직무과정을 개설하여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분석평가단 분석전문 요원들의 전문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정책형 장교 보직비율을 50% 이상으로 증대시켜 장기보직이 가능토록 하고, 분석업무 유경험 예비역 장교를 용역요원으로 확보하거나 현역 군인의 분석능력이 제한되는 핵심기술 분야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분석평가 능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는 분석평가 자료의 공동 활용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군 및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이루어진 단계별 분석평가 결과 및 분석에 활용된 자료 등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활용토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번 제정된 분석평가 지침에서 국방부가 “방위력개선 사업 분석평가결과 자료목록을 종합하고, 최근 5년간 목록을 종합하여 책자로 발간/배포하며, 전산자료로 작성, 게시”토록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국방연구원에서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한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 결과를 접수하여 활용 가능한 D/B를 구축하고 국과연의 성능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되면 분석평가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분석용 모델/기법 개발

방위력개선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가장 유용한 방법은 위게임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무기체계로부터 전구급까지 정량적 분석 가능한 제대별 분석모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휘통제나 정보, 전투근무지원 등 기존의 위게임 모델로 모의가 어려운 분야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전장기능별 세부 분석모델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분석용 위게임 모델은 가능하면 국내 개발업체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관련기술 발전 및 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위게임 모델 이외에도 효과측정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게임으로 모의할 수 있는 대상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AHP 기법 등은 어떤 위게임 모델보다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분석기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분석기법을 확보하는 것은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육본에서 금번 총전력 분석을 수행하면서 활용한 “전략목표지향 임무분석법(STT ; Strategy To Task)”은 새로운 분석기법 도입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STT 기법은 정성적인 판단을 계량화하는 기법 중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AHP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법중의 하나이다. AHP 기법의 일반적인 단점은 먼저 비교대상 항목이 증가할수록 설문대상자가 답해야할 쌍비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sup>28)</sup> 두 번째는 연속적으로 쌍비교를 실시하는 경우 AHP 기법에 대하여 완전한 이해가 없는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은 일관성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점이다. STT기법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성적 의사결정 방법 대안 중의 하나이다.<sup>29)</sup>

육본 분석평가단은 '06년 육군 총전력분석간 AHP와 STT 기법을 적용하여 신규소요 요청 무기체계 64종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였다. AHP 기법만을 적용한다면 약 1,500

주 28) AHP 기법에서 쌍비교를 할 때 비교항목의 수가 6개인 경우 쌍비교의 수는 15개, 7개 항목의 경우는 21개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29) STT는 '80년대 일본 도요타사에서 개발한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 품질기능 전개)에 기원을 두고 있다. 도요타사는 고객이 원하는 요구(전략목표, Strategy)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의 세부기능(임무, Task)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을 창안하였다. 그 후 모든 차량 생산시 이를 적용하여 설계단계부터 고객요구를 만족시키는 노력을 통해 최종제품 출하시까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90년대 美 RAND 연구소는 QFD를 군사분야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통해 STT기법을 개발하였다. STT는 QFD에서 사용된 “고객의 만족 달성”을 “전략목표 달성”으로, “세부기능의 우선순위 선정”을 “정책대안, 전장기능, 무기체계의 우선순위”로 대체한 것이다.



회의 쌍비교가 필요한 설문이었으나 STT 기법을 적용하면서 판단이 필요한 질문 횟수를 320회로 줄일 수 있었으며 설문응답방법도 쌍비교보다 단순하고 간편하였다.

### 라. 계획문서 평가분석 수행

획득단계의 분석평가는 방위사업청에서 전담하고 국방부에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위력개선 사업은 각군본부와 밀접한 연계하에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각 단계별로 각군본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군에서는 중기계획이나 예산편성안의 사전분석은 불가능하지만 이들이 확정, 배포된 이후에는 각 군의 요구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수정이나 보완사항이 없는지 등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중기계획이나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환류(feed-back) 기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에서 차기년도 중기계획이나 예산편성 작성시 각 군에서는 전년도의 분석평가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각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V. 결 론

새로운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방위력개선은 매우 복잡하게 여러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단계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통제장치가 필수적이며, 분석평가체제야말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분석평가체제의 발전은 효율적인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착단계에 이른 방위력개선 사업의 분석평가 중 각 군에서 실시하는 소요요청 단계 및 운영유지 단계의 사업분석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분석수행 방법 개선으로 현행 분석평가체제가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점 보완을 위해서 향후에는 총체적 전력 및 전력단위별 종합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사업에 별도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을 일원화하고, 전투준비태세 평가와 연계하여 전력운영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분석평가체제로 발전시키고, 둘째는 분석평가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해 M&S용 표준자료 구축 및 인증 체제를 구축하고, 정성적 요소의 계량화 기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AHP 기법 적용을 위한 전장기능별 표준 평가요소를 설정하여 설

문대상 집단구성을 표준화하는 등 운용체제를 발전시키며, 비용분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비용통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분석수행 체제 보완을 위해 각군본부로부터 전문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 단계별로 분석평가 관련부서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분석평가 자료의 공동활용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제대별 분석능력을 확충하며, 분석용 위게임 모델 및 새로운 분석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발전방안들은 일순간에 실현가능한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해당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방위력개선 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발전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에만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러한 발전이 밑받침 되어야 보다 내실 있는 분석평가 업무수행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러한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수록 분석평가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해 주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무기체계 획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사업추진 단계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핵심기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방부,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국방부 훈령 제792호)』, 2006. 6.
2.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국방부 훈령 제793호)』, 2006. 6.
3. 국방부, 『분석평가지침』, 2006. 6.
4. 국방부,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서』, 2006. 6.
5. 방위사업청,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서』, 2006. 6.
6. 육군본부, 『'05 분석평가 결과』, 2006. 3.
7. 육군본부, 『'04 분석평가 결과』, 2005. 3.
8. 육군본부, 『'03 분석평가 결과』, 2004. 3.
9. 육군본부, 『'02 분석평가 결과』, 2003. 3.
10. 육군본부, “총전력분석 시행 계획”(내부문서), 2005.10.
11. 육군본부, “분석평가 기능 활성화 방안”(내부문서), 2004. 9.
12. 김운태·고원·박혜련, “분석용 정밀 위계임모형의 통계적 진단 및 활용(Proceedings of the Autumn Conference)”, Korean Statistical Society, 2004.
13. 박태유·엄종선, 『효율적인 분석평가체계 구축 방안』, 국방연구원, 2002. 12.
14. 박태유 외, 『무기체계 평가분석 방법론』, 국방연구원, 1996. 12.
15. 장상철·이민형·이효정, 『국방 M&S 표준자료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방연구원, 2004. 12.
16. 조근태·조용곤·강현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2003. 9.

# 이라크 파병을 통해 얻은 교훈과 발전방향 제언

## - 무기·장비분야를 중심으로 -

### 목 차

- I. 서 론
- II. 현지 무기·장비 운용간 문제점 및 발전 방향
  - 1. SLAT 장갑
  - 2. Mild Core(연철심) 소총탄과 방탄복
  - 3. 실용성이 증대된 개인군장
  - 4. 차량개조
  - 5. 현지여건에 부합된 장비개조 및 화력보강
  - 6. 운용성/편의성을 증대시킨 소총 보조킷
  - 7. 운용환경이 장비 및 부품에 미치는 영향
- III. 결 론



중령 이대진  
(1사단 전차대대장)

## I. 서 론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대외적 국가위상 제고와 국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사단은 월남전 파병과는 달리 파병준비부터 전개까지 한국군 자력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현지 임무수행간에도 타 파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04년 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단급 파병안이 가결된 이후 육군은 장병들의 안전과 사막환경에서의 장비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장비를 보강 및 개조, 추가 보급하였으나 현지 사용간 여러 시행착오 및 제한사항이 발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여러 시행착오 및 제한사항 중에서 무기·장비분야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언하도록 하겠다.

## II. 현지 무기·장비 운용간 문제점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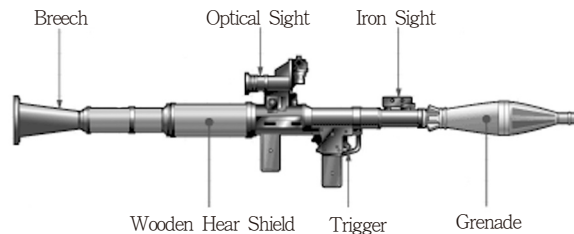
### 1. SLAT 장갑

#### 가. SLAT 장갑이란

SLAT 장갑은 주장갑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얇은 판재를 그물처럼 조합하여 주장갑 외부에 장착함으로써 성형장약효과(Shaped Charge Effect)를 이용하는 대전차 고풍탄을 방호하고자 고안된 단순한 형태의 장갑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장갑으로는 러시아가 체첸공격시 RPG(Rocket-Propelled Grenade)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장갑차를 방호하고자 고안한 봉상형 장갑이 있다.

통상 전차 및 장갑차의 방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갑두께를 보강하거나 반응장갑과 같은 부가장갑을 추가적으로 부착하게 되는데 이때 전투하중의 증대 및 기동성 저하는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제한사항이었다. SLAT 장갑은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RPG같은 보병용 대전차무기의 탄두부분 콘(원추형, 깔때기 형태)을 찌그러뜨려 탄의 집중효과를 무력화시키거나 피탄되더라도 조기 분사된 폭발력을 복합재로 방호하는 등의 대전차고폭탄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SLAT 장갑은 '03년 말 미군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에 배치하기 직전 적대세력의 증대되는 RPG 공격에 대한 방호를 목적으로 쿠웨이트에서 긴급장착/실전에 사용되었으며, 작전중에 받은 RPG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호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스트라이커 장갑차와는 대조적으로 무적을 자랑하던 M1계열 전차는 이라크 작전간 RPG-7에 의해 총 6대가 파괴('04년 6월 기준)되어 중(重)장갑장비라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기보다는 비록 얇은 장갑이지만 적의 주요 화력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RPG-7 형상 및 제원

구	경	85mm	관	통	력	330mm
무	계	발사기	사	거	리	유
		탄				효
		6.3kg				- 고정 : 500m
		2.6kg				- 이동 : 330m
						최
						대
						1,98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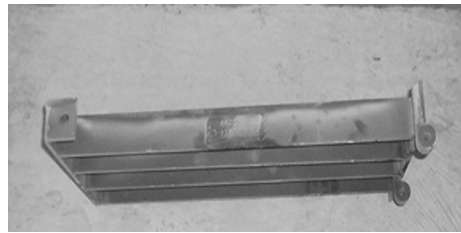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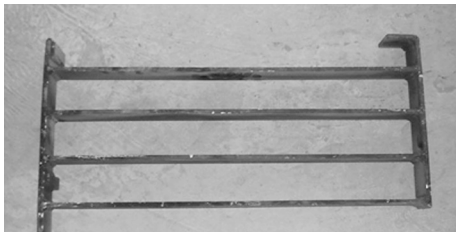


그림 1. SLAT 장갑이 장착된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SLAT 장갑의 단위격자<sup>1)</sup>

### 나. SLAT 장갑의 원리

SLAT 장갑의 원리를 최초 그림 2(좌)와 같이 화학에너지탄의 최대약점인 이격거리 증가에 따른 관통력 저하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림 2(우)처럼 약 70mm 정도 이격된 단위격자의 간격 사이에 RPG탄두(85mm)를 걸리게 하여 콘을 찌그러뜨림으로써 탄저신관을 작동치 못하게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만약 탄이 SLAT 장갑의 격자 공간에 걸리지 않고, SLAT 장갑을 타격할 경우 거리이격에 따른 관통력이 저하될 수 있으나, 장갑차는 장갑이 얇기 때문에 저하된 관통력으로도 관통되므로 결국 확률에 의해 관통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RPG가 SLAT 장갑의 간격에 걸리지 않고 SLAT 장갑을 타격하더라도 이를 일정두께의 복합재같은 장갑판으로 보강할 경우 기본 장갑이 얇은 장갑차도 RPG의 공격에 방호받을 수 있다.

주 1)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캠프 세다에서, 단위격자는 이라크 캠프 아나콘다내 미군 정비부대에서 촬영하여 세부제원을 입수하였으며 이를 역설계하여 K200A1 및 차륜형 장갑차에 장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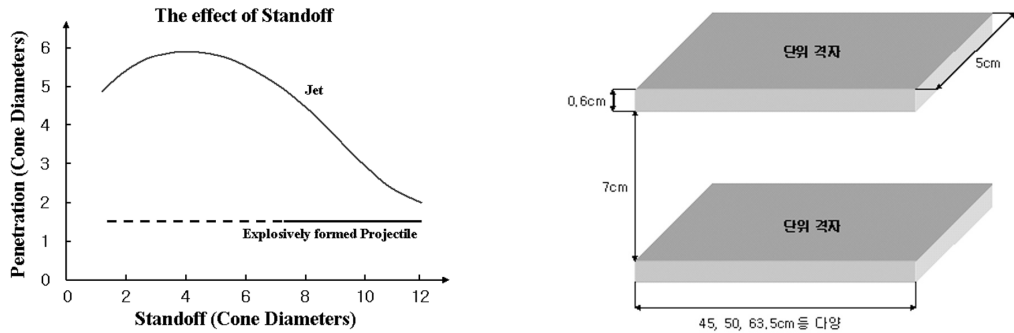


그림 2 이격거리에 따른 관통력 변화(좌) 및 단위격자의 규격과 격자간 간격(우)



그림 3. LAV에 장착된 봉상형 장갑(SLAT장갑 원리와 동일)<sup>2)</sup>

#### 다. 한국 무기체계에 적용

전차의 경우 전차탄이나 ATGM(Anti-Tank Guided Missile; 대전차미사일), 장갑차의 경우 장갑차에 장착된 기관포에 의해 관통될 수도 있지만 RPG같이 값싸고 간단한 보병휴대용 대전차무기에 의해 관통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소총탄과 같은 운동에너지탄 방호를 위해서는 장갑을 두껍게 하거나 기타 복잡한 부수장치를 부착하여 중량이 증가되는 등의 많은 제한사항이 따르지만 모든 보병용 대전차화기는 성형장약의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효과의 약점<sup>3)</sup>을 이용한 SLAT 장갑과 유사한 형태의 장갑을 사용할 경우 최소한 RPG같은 휴대용 대전차무기에 의해 주요 무기체계나 주요 시설이 파괴되는 확률은 급격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는 '04년 7월경 긴급 소요제기되어 제작된 SLAT 장갑을 K200A1 장갑차에 부착한 모습이다.

주 2) 쿠웨이트 캠프 버지니아에 집결되어 있는 호주군 장갑차를 촬영.

3) 살상력보다는 관통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Munroe 효과, 즉 탄두 중앙에 충전제(폭발물) 대신 진공의 lyner(갈매기 형태)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집중하였기 때문에 관통력은 증대되나 일반 고퍽탄(대인용 탄)에 비해 살상력은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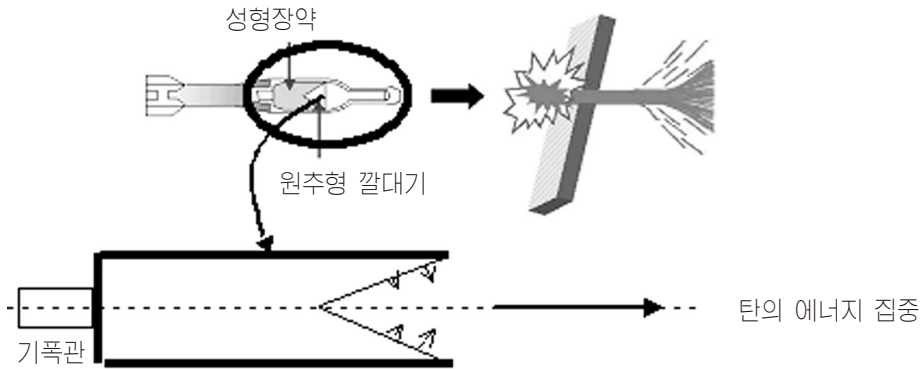


그림 4. 대전차 고폭탄의 관통원리



그림 5. K200A1 장갑차에 장착된 SLAT 장갑

## 2. Mild Core(연철심) 소총탄과 방탄복

### 가. Mild Core 소총탄

#### 1) 적대세력 운용 소총탄

이라크 적대세력은 한국군이 주로 사용하는 보통탄보다 관통력이 증대된 철갑탄을 사용하고 있었다. 적대세력이 사용하는 탄종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라크 현지에서 노획한 소화기탄(7.62×39mm) 111발의 탄두를 분류하여 확인한 결과 Mild core탄은 65발,

보통탄은 46발로 관통력을 증가한 Mild core탄이 전체 사용 탄약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통탄은 납-안티몬 Core로 구성되어 탄두의 재질이 약해 피탄시 유선형 형상으로 변형, 관통력이 저하되는 것과는 달리 Mild core탄은 탄두를 연철재질로 구성, 피탄시 탄자의 변형이 거의 없어 관통력이 대폭 증대된다.

동구권의 대다수 국가가 이러한 Mild Core 소총탄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도 이러한 탄종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6. Mild core탄과 보통탄(좌) 및 Mild core탄두와 보통탄두(우)<sup>4)</sup>

2) 한국군 소총탄에 적용

한국군에게도 현재 사용중인 KM193 보통탄보다 성능이 증대된 탄이 요구된다. 미군의 경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형탄인 M995 텅스텐 Core탄을 개발하여 운용중에 있다. M995탄은 현재 한국군이 운용중인 KM193탄보다 관통력은 6배, 탄속은 1.05배 빨라 관통력 및 명중률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2> 소화기탄 발전추세

구 분	M193탄	K100탄	M995탄(미국)	비 고
탄자구성	납-안티몬 Core, 구리 외피	Steel Core, 구리 외피	텅스텐 Core, 구리 외피	.
탄 속	960m/s	920m/s	1,013m/s	.
관통능력	1mm	3.45mm	6mm	사거리 600m, 연철판 기준
강선회전율	121인치	72인치	72인치	인치/회전
사용가능 소총	K1, M16A1	K2, K3, M16A2, M4 ※ K1, M16A1 사용불가		.

주 4) 적대세력으로부터 노획된 탄의 탄두를 분리하여 이라크에서 필자가 직접촬영.

**나. 방 탄 복**

방탄복의 방호력은 크게 위협에 따른 방호정도, 중량이 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자이툰사단의 방탄복 선정시에도 위 2가지 요소가 고려되었다. 따라서 자이툰 부대원의 방탄복 선정기준은 탄의 관통여부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느냐에 달려있다.

〈표 3〉은 방탄복/방탄판에 관한 미국 NIJ(National Institute Justics, 미 법무성 산하 사법연구소)규격으로 자이툰 방탄복은 NIJ-Ⅲ 기준에 방호토록 제작되었다.

**〈표 3〉 방탄복/판관련 미국 NIJ규격**

구 분	레 벨	방 탄 성 능	탄자의 중량/속도
I	방탄복	38구경 리볼버	2.60g/320 <sup>m</sup> /s
Ⅱ-A	방탄복	9mm 권총	8.00g/332 <sup>m</sup> /s
Ⅱ	방탄복	9mm 권총	8.00g/358 <sup>m</sup> /s
Ⅲ-A	방탄복	9mm 권총	8.00g/426 <sup>m</sup> /s
Ⅲ	방탄판	7.62 소총탄(납탄 방호)	9.70g/838 <sup>m</sup> /s
Ⅳ	방탄판	7.62 기관총(Mild Core탄 방호)	10.08g/868 <sup>m</sup> /s

이라크 현지에서 적대세력이 Mild Core탄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방탄복/방탄판 규격을 NIJ-Ⅳ 대신 NIJ-Ⅲ로 선택한 이유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량으로 인한 장비들의 활동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방탄복/판관련 규격에 따른 중량차이**

성 능	구 분	규 격	중 량		
			계	방탄판	방탄복
납탄 방호	폴리에틸렌	NIJ-Ⅲ	6.7kg	1.4kg×2개	3.9kg
Mild Core탄 방호	세 라 믹	NIJ-Ⅳ	11.4kg	3.6kg×2개	4.2kg

실제 현지에서 부대(전투)원은 방탄복뿐만 아니라 방탄모, 전투화 등 20kg 이상의 군장류를 착용하게 된다. 만약 방탄복이 Mild Core탄을 방호토록 제작되었다면 전투하중은 30kg 이상으로 전투피로도도 가중되어 임무수행에 제한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 필자가 신천지작전<sup>5)</sup>에 전투원으로 참가한 경험에 의하면 Mild Core탄 방탄복보다 4.7kg이나 가벼운 납탄 방호용 방탄복(6.7kg)을 착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전간 더위로 인해 피로도도

주 5) '04. 7. 19~21(2박 3일) 동안 최초 서희·제마부대가 주둔한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서 현재 자이툰사단이 주둔한 아르빌까지 지상이동작전.



증가하여 집중력 저하현상이 발생하였고 행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방탄복은 기본적으로 전투시 전투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파편방호가 주목적이며, 직격탄 방호는 부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자이툰사단의 방탄복 방호기준을 NIJ-Ⅲ(납탄 방호)로 선정한 현재의 기준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3. 실용성이 증대된 개인군장

#### 가. 벨트형 탄띠 개선

자이툰사단의 파병을 위해 많은 장비들이 제작 보급되었지만 일부 장비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많은 장병들이 군 지급품대신 사제 군장류를 착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신형 방탄복을 착용할 경우 탄입대, 수통, 소형 무전기, 예비배터리 등의 장비 휴대가 제한되었으며 운전병의 경우 방탄복 부착물로 인해 핸들 조작이 곤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의 휴대가 가능하고 허리에 집중되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림 7과 같은 사제 군장류를 착용하였다.



그림 7. 다양한 장비 휴대가 가능하고 허리 접촉부분이 보강된 탄띠

#### 나. 어깨걸이형 권총집 개선

권총집의 경우 군 지급품은 한쪽 어깨에 하중이 집중되어 장시간 착용이 제한되었으며 어깨에 걸린 끈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탄입대를 부착할



그림 8. 군 지급 권총집(좌)과 개인구매 양쪽 어깨형 권총집(우)

수 있는 고리가 없으며 왼손잡이의 경우 사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일부 인원은 그림 8(우)과 같은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쪽 어깨형 권총집을 사용하였다.

#### 다. 발전방향

관점에 따라 사제 군장류 착용에 대해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제 군장류가 군 지급 군장류보다 작전 및 전투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최초부터 사용자의 의견과 인체공학적 특성 및 전투효율 등을 고려치 않은 군장류 설계에 대해 먼저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장류 설계시에는 운용자의 입장에서 전투효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사용자가 군 지급품대신 사비를 들여 개인군장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다.

### 4. 차량개조

#### 가. 개요

이라크 파병 전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적대세력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4톤, 5/4톤, 2½톤 일반차량을 방탄화하는 것이었다. 방탄작업간 여러 요소를 설계에 반영하였지만 5/4톤 적재함 의자방향과 에어컨 설치의 공사차질에 따른 납기 지연 우려 때문에 설계에 미반영되어 현지 작전에 투입되었고 우려했듯이 이 2가지 사항으로 인해 신천지/파발마작전간 운용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표출되었다.

#### 나. 문제점

##### 1) 5/4톤 적재함 의자

적대세력의 공격에 방호가 가능하도록 5/4톤은 그림 9와 같이 적재함을 방탄화하고, 방탄판 뒤에서 전투원이 사격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전투원은 항상 사격 가능토록 외부를 관측해야 하나 현 의자방향으로는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실제 신천지작전 후 작성한 소감문에서 발췌한 내용<sup>6)</sup>은 현재의 잘못된 의자의 방향이 운용자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주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주 6) ① 11여단 5지역대 대위 ○○○ : 5/4톤 적재함 탑승자 4명중 2명은 휴식, 2명은 후방감시 임무를 부여하여 1시간 단위로 임무를 교대시켰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캠프 스캐니아(중간 숙영지)에 도착했을 때 5/4톤 탑승자 전원은 체력을 소진하여 실신 직전 상태였다.  
 ② 11여단 5지역대 하사 ○○○ : 오늘은 01:30 기상이어서 미칠노릇이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5/4톤 방탄차량은 타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계속적인 이동으로 5/4톤 방탄차량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무릎이 원래 설치되어 있던 의자에 계속 부딪히면서 아파오기 시작했고, 이윽고 엉덩이까지 아파오기 시작했다. 결국 경계는 안중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편한 자세를 잡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림 9. 신천지작전 투입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나무의자 및 간이그늘막

### 2) 5/4톤 에어컨 미설치

이라크의 기온은 겨울을 제외하고 한낮에 40도, 여름철은 55도를 넘는 살인적인 더위였다. 이러한 온도와 복사열은 5/4톤 운전자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제한한다. 미군의 경우 이라크 더위를 고려하여 에어컨이 장착되지 않은 험비에 그림 10처럼 에어컨과 송풍호스를 장착하여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였다. 실제 5/4톤 차량 구조상 차량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방열기를 운전석 상부(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이라크에서 운용중인 일부 상용차량의 경우 방열기를 차량 외부에 노출시켜 냉각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림 10. 험비 내부에 설치된 에어컨(좌) 및 송풍호스(우)<sup>7)</sup>

### 3) 공용화기 거치대

최초부터 공용화기를 거치도록 설계되지 않은 1/4톤 및 5/4톤 차량에 공용화기를 거치하는 것은 위치 특성상 제한된다. 특히 5/4톤의 경우 거치대가 적재함 전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60도 회전사격이 제한된다. 또한 차량과 근접한 부분에 사각지역이 발생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거치대의 높이를 높일 경우 사수의 위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한정 높이는 것 또한 제한된다. 험비의 경우 사수위치가 차량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60도 사격은 가능하지만, 화기 사각이 존재한다.

주 7) 캠프 빅토리(바그다드)에 주차중인 험비내부 촬영.

그림 11은 2½톤 또는 5톤의 선탑좌석에 360도 회전레일을 설치하고 있지만 후방 사격은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 2½톤 및 5톤 선탑좌석 상판에 전방향 사격가능토록 설치된 거치대<sup>8)</sup>

#### 다. 발전방향

위에서 열거한 운용자 불만사항들은 현지여건 및 예상되는 작전형태를 고려할 경우 충분히 예견된 사항들이었지만 설계에 반영할 수 없었다. 저자가 자이툰사단에 선발되기 직전 육본 전력단에서 방탄차량에 대한 기술관리를 하면서 위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토록 수 차례 제작업체에 요구하였지만 납기를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만약 이 방탄차량사업이 전문화·계열화로 분류되지 않고 독점이 아닌 경쟁체제하에서 진행된다면 “예견된 문제점을 가진 차량이 제작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 5. 현지여건에 부합된 장비개조 및 화력보강

#### 가. 미 군

미국의 종전 선언 후 이라크내 적대세력의 공격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미군의 주



그림 12. 파괴된 미군의 험비

주 8) 캠프 세다에 주둔중인 차량 촬영.



차량인 험비의 피해가 속출하였고 특히, 비방탄 일반차량의 경우 적대세력의 표적이 되었다. 따라서 미군의 경우 현지에서 임시방편으로 차량을 방탄화 개조하고 화력을 보강하였으며, 추가 보급되는 차량은 현지여건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개조하여 보급되었다.

이라크에서 운용되는 험비의 경우 한국에서 운용되는 험비처럼 규격(제식)화된 차량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이 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임시방편으로 다양하게 변형한 것이었다. 그림 13처럼 현지에서 개조한 차량의 단면은 마감질 및 도색이 되어있지 않아 녹이 슬고 조잡하였으나 신규 보급된 차량은 그림 14처럼 비방탄문을 방탄화하고 방탄유리 및 적재함의 공용화기 사수 보호판을 장착하였다.



그림 13. 사격범위 확대를 위한 발판확장 및 측면보호판(좌), 철판으로 보강된 문과 적재함(우)<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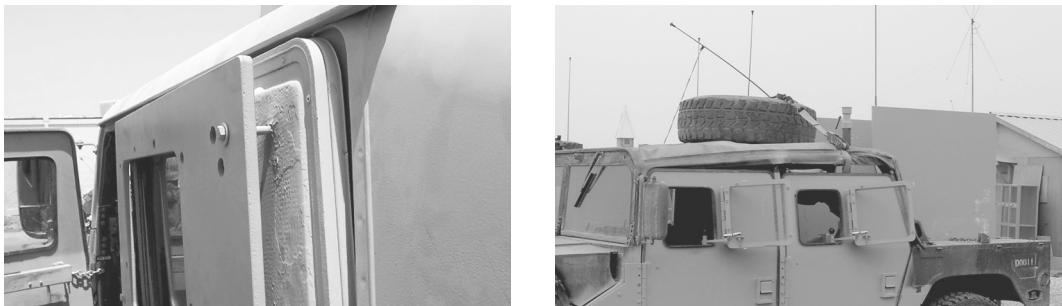


그림 14. 철판으로 보강된 문/방탄유리(좌)와 후방 사수보호대(우)

## 나. 한국군

서희·제마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된 시기에 나시리아지역의 위협은 거의 없었으나 종전후 적대세력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나시리아지역에서의 공격정보가 입수되었다. 따라서 비방탄차량을 운용하였던 전개 초기와 달리 파병부대 차량의 방탄화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서희·제마부대 2진 교대병력으로 파견된 자이툰부대는 1/4톤 일반차량을 부분 개조하는 방탄작업에 착수하였다.

주 9) 나비스타(쿠웨이트와 이라크의 국경)에서 촬영.



방탄작업으로 그림 15와 같이 운전병/선탐자/후방 탑승자 방호를 위한 방호판(철판)을 설치하였으며 공용화기 거치대, 사수를 보호하기 위한 후방 방호판을 각각 설치하여 방호력 및 화력을 보강하였다.



그림 15. 운전병/선탐자 방탄작업(좌)과 차량 측면에 5mm 철판장착(우)

#### 다. 발전방향

현지 상황이 급변한 상황하에서 나시리아에서 행해진 비방탄차량의 방탄화작업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내의 군용장비에 적용되어지는 형상관리 규정에 위반된다. 하지만 현지 위협이 증대되고, 한국군에 테러첩보가 수시로 입수되는 급박한 상황하에서 국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상관리 규정 위반은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처럼 현지에서 급박한 개조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처럼 상급 부대에 건의하여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현지 실정에 적합하도록 장비를 선(先) 개조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6. 운용성/편의성을 증대시킨 소총 보조킷

다양한 실전경험이 있는 미군의 경우 소총 보조킷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한국군에 적용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신속한 탄창 교체를 위한 탄창 연결클립

교전상황에서 신속한 탄창 교체여부는 전투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전경험이 많은 미군의 경우 그림 16처럼 신속한 탄창 교체가 가능토록 2탄창 또는 3탄창 연결클립을 고안하여 사용중이지만 한국군은 신속한 탄창 교체관련 교보재나 전투발전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간단한 실험을 통해 한국군이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탄

입대에 의한 탄창 교체시간과 그림 16과 같은 2탄창 또는 3탄창 연결클립으로 교체시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실험을 통해 현재 군장류를 방탄복에 부착한 상태에서 새로운 탄창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엎드려 쏘 자세에서 약 7~8초가 소요되지만 2탄창 또는 3탄창 연결클립을 사용할 경우 약 5초(70% 이상 시간 단축)이상 탄창 교체 시간이 단축됨을 알 수 있었다.

〈표 5〉 탄창 교체시간 비교

사격자세	탄창 교체시간(초)		차이(초)	비 고
	현 탄입대 사용시	연결클립 사용시		
엎드려 쏘	7~8	1~3	- 5~6	자이툰부대원
지향사격자세	5~6	1~2	- 3~4	5명으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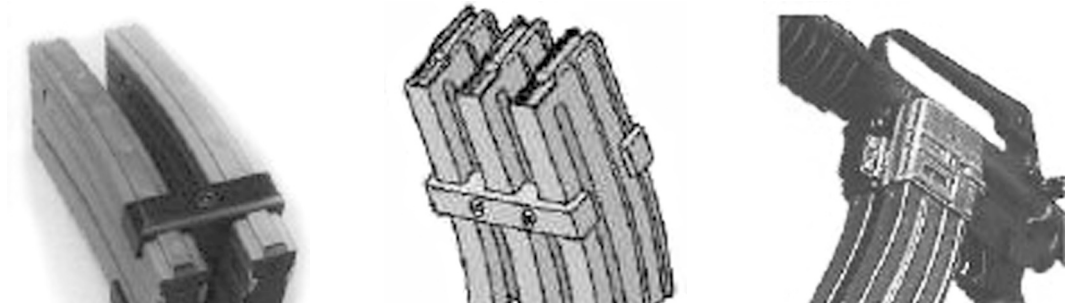


그림 16. 2탄창 또는 3탄창 연결클립(좌)과 소총에 장착된 모습(우)

야전부대에서 일부 인원이 2개의 탄창을 역으로 부착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지만 의탁사격시 밀을 향하고 있는 탄창에 흙같은 이물질이 삽입되어 소총의 기능고장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며 미군이 채택하고 있는 클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림 17처럼 각 탄창 사이에 약 5밀리 두께의 나무조각을 끼우고 테이핑을 할 경우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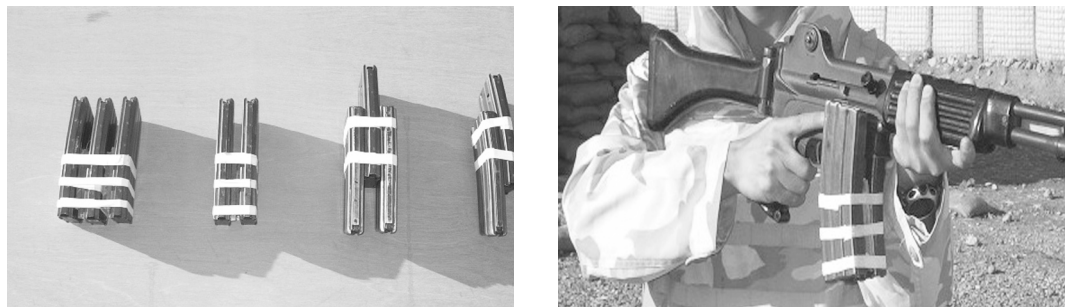


그림 17. 급조된 탄창연결(좌) 및 2발 연결탄창을 소총에 부착한 모습(우)

### 나. (지향)사격을 용이하게 고안된 손잡이

현재 한국군의 경우 조준사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라크 현지에서 교전 초기에는 조준사격보다는 지향사격이 요구되고 있다. 현 편제화기(K-1과 K-2)는 지향사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손잡이가 고안되어 있지 않으나 이라크 현지에서 일부 K-1 소지자들은 그림 18(우)과 같은 손잡이를 부착하여 운용중에 있다. 미군의 경우에도 그림 19와 같이 체식화된 손잡이를 보급하여 운용중이므로 한국군도 K-1 소총에 꺾기 가능한 손잡이 장착을 고려해 봄직하다.



그림 18. K-1에 부착된 권총손잡이(좌) 및 권총손잡이를 이용한 지향사격 자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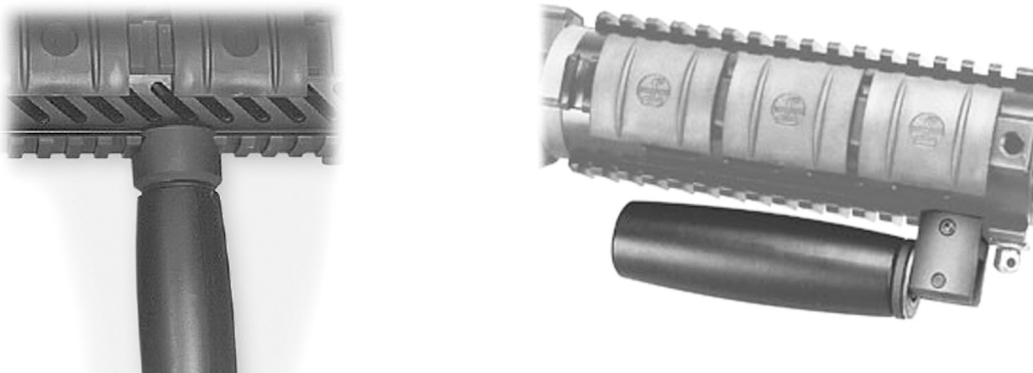


그림 19. 레일형식(손잡이 거리조정 가능) 및 꺾기식(휴대용이)

### 다. 발전방향

한국군의 경우 운용자가 사용에 편리토록 장비를 개조하거나 부착하는 것을 금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라크 내에 활동중인 동맹군이나 사설업체 경호원의 군장류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해당장비를 운용하는 인원과 대화를 하면서 전투시에 “꼭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였다. 요즘 레저생활로 인기가 높은 서바이벌 게임의 경우에도 매니아들이 착용하는 다양한 군장류는 실제 멋으로만 부착된 것은 아닌 것 같다. 한국군의 경우도 대부분의 운용자가 필요로 할 경우 해당장비에 대한 검증을 통해 다양성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 7. 운용환경이 장비 및 부품에 미치는 영향

### 가. 개 요

파병전 예상한대로 고온 및 먼지가 많은 이라크의 특수환경은 한국보다 장비 및 수리부속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쳐 많은 정비소요를 발생하였다. 물론 그 세월이 단기간에 산출된 것이지만 파병부대에 신품이 보급된 것을 고려할 때 이라크 현지환경이 장비 및 부품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은 분명했다. <표 6>은 '03년 4월 이라크 남부지역인 나시리아에 파병된 서희·제마 1진부터 자이툰사단 공병·의무대대가 철수한 '04년 7월까지 기동장비의 주요부품 교환시기가 나타나 있다.

<표 6> 기동장비 주요부품 교환시기

구 분	교 체 시 기		비 고
	한 국	이 라 크	
배터리	24개월	12개월	- 고온으로 운용간 에어컨 상시 가동(전력소모 과다) - 전력 충·방전 불균형
에어컨 가스	4~5년	1~2년	- 고온으로 에어컨 과다사용
고무제품/벨트류	4~5년	1~2년	- 고온으로 산화 가속화
오일교환	5,000km		.
에어필터	6개월	3개월	- 주 1~2회 세척 및 먼지제거 실시

### 나. 발전방향

차후 파병 또는 북한지역의 동계작전 등 운용환경을 고려한 부품 교환주기가 산출되어야 하며 이라크와 같은 특수한 환경하에서 작전을 위해 배터리, 방열기, 에어컨 용량 등은 한국에서 운용되는 장비와 달리 설계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Ⅲ. 결 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대부분은 실제 이라크 현지에서 작전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투발전요구가 되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관점의 차이에 따라 현지 사용자의 필요성을 간과할 경우 혹은 이라크 파병에서 얻은 교훈을 이라크 지형과 기상 특수성으로 국한한다면 한국군의 무기와 장비분야는 변화 없이 예전것을 답습하고 말 것이다.

오랜기간 무기체계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해당분야에 근무한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위에서 사용자가 제기한 전투발전요소 대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비록 이러한 것을 검토하는 실무자가 그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해당 장비를 조작하는 인원의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공감할 경우 그 제안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전투현장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인원이 그 장비를 가지고 전투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전투발전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예를 들면, K-1 소총에 지향사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임의 제작하여 부착한 권총손잡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규정대로 처리한다면 명백히 형상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나 실 상황에서는 필요하며 미군의 경우 군장류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교육사 전투발전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SLAT 장갑의 경우 육군본부에서 구형전차의 부품 피해율을 분석하기 위해 '05년 6월경 RPG-7을 실 전차에 사격한 결과 사격발수 ○○발중 ○○ 발이 명중되었으나 ○발만이 관통되었고 특히, 그림 20과 같이 돌출된 철판이 대전차고폭탄의 콘을 찌그러뜨려 RPG의 관통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 도출된 전투발전 소요에서도 SLAT와 유사한 형태의 장갑보호용 금속망 제작이 건의된 바 있다.



그림 20. M계열 전차 후방엔진 덮개(방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간 존재)



강력한 육군의 출발은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현 전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실제 전투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진정한 전투발전요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야전에서 다수에 의해 반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내용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하찮은 전투발전요구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격려하고 포상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 주변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투발전으로 채택이 되어 포상이 되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 야전에 사장되어 있는 많은 요구사항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 우선순위에 의해 취사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실용화하여 야전으로 퍼드백(환류)한다면 야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존 전력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K1A1, 차기전차, 차기장갑차나 K9 자주포 1대보다 비록 가시화된 전력은 아니라도 야전의 운용자들이 불편해하고 요구하는 것을 우선 반영하는 것이“현존전력 극대화”의 출발점일 것이다. 고비용의 장비를 구매하면 연간 일정비율의 유지비용이 소요되지만 야전에서 요구하는 장치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야전부대에서 다수인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전투발전소요를 사용자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요원과 전투실험인원이 대폭 확충되고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기 타

-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국가안보 ..... 정치학박사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장)
- 동북공정에 대한 역사북벌론의 시의적절성에 대한 연구 ..... 박경민  
(작가/역사칼럼니스트)
- K-1 전차는 과연 교량을 통과할 수 있나? ..... 소령 문성호(육군 공병학교 교관)  
대위 임덕기(육군 공병학교 교관)

##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국가안보

### 목 차

- I. 서 론
- II.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래와 의미
- III. 동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요사례
- IV.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요사례
- V. 한국의 국가안보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 VI. 결 론



정치학박사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장)

### I. 서 론

시드니 후크(Sydney Hook)는 “한 나라의 지도자 역할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상황의 예는 무수히 많다.”고 말한 바 있다.<sup>1)</sup> 우리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한 나라가 바로 서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자기절제·희생정신 등의 기본덕목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말들이다.<sup>2)</sup>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의 지도층인사들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 때 상류계층의 사람들은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과 도덕성을 갖춘 상류 지도층인사들의 존재를 갈구하면서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곧잘 인용하고 있다.

주 1) Sydney Hook, *Hero in History : Myth, Power or Mortal Ideal?*(Stanford : Hoover Institute at Stanford University, 1978), pp.9~10.

2) 김강녕, 『민족정신과 통일안보』(부산 : 신지서원, 2005. 3. 1), p.113.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외래어로서 사회의 고위직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노블레스 오블리지,’ ‘노블레스 오블리쥬,’ 등으로 혼용되어 오다가 2002년 4월에 열린정부·언론 외래어 공동심의위원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표준어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sup>3)</sup>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미덕은 중세와 근대사회를 거치면서 거대한 조직과 국가를 이끄는 데 있어 리더십(leadership)의 표본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움츠러들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마련이다. 이럴 때 상류 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바탕 위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솔선수범(率先垂範)하여 앞장서 나감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이 발발하여 국가안보가 위태로울 때 상류 지도층 인사들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총화와 단결에 기여함으로써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는 이때에 사회의 지도층인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구현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관련된 동서양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한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적 과제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 II.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래와 의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용어는 프랑스 귀족사회에서 생겨난 외래어로서 19세기 초인 1808년 프랑스의 정치가인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Gaston Pierre Marc, 1764~1830)가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신분(noblesse)’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oblige)’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귀족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당시 유럽의 귀족가문의 가훈이자 마땅히 전해져 내려오던 고귀한 전통이었다.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주 3) 김규만,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국가안보,”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비상기획보』, 2005년 봄호, 제72호(2005. 5), p.25.

앞장서 나아가던 기사도정신(騎士道精神, a spirit of chivalry)이 바로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화랑도정신도 유럽의 기사도정신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시대의 귀족들은 국가의 지도층으로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에 앞장서 나아가 목숨을 바쳤고, 또한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헌납하고 기부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귀족들의 귀한 목숨의 희생과 재산의 기부는 평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나아가 국가가 환난(患難)에 처하였을 때 전 국민이 단결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고대 로마시대 귀족들의 이와 같은 정신은 후세의 프랑스에서 생겨난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에서 각 문명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그 사회에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라고 지적하였다. 토인비에 따르면, 인류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사람은 극소수의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기존문화를 떠받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sup>5)</sup>

창조적 소수, 그것은 한 사회의 엘리트계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의미한다.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엘리트계층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회 또는 국가가 닦쳐온 도전에 적절히 응전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6)</sup>

그렇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떠한 의미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란 무엇이며, 과연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주체에 대해 알아보자. 과거 고대 로마와 서양의 귀족사회에서는 귀족들과 상류층인사들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왔다. 그러나 귀족제도가 없어진 현대사회에서는 누가 그 주체가 되어 실천해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이 시대에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적인 지위에 있거나 고위층의 인사,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정치가와 고위공직자, 경제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재벌들과 기업가, 부

주 4) 김규만, 2005. 5, p.26.

5) Toynbee의 견해에 대해서는 D. C. Somervell, *A Study of History*(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참조.

6) "122명 한국 엘리트들의 실패와 반성," 『월간조선』, 1997년 10월호 참조.



자들, 학자와 교수 등 전문직업인, 판·검사, 변호사와 의사 등의 전문직업인, 국방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군의 고급지휘관과 장군 등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를 이끌어 가고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과 사람들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의 지도층인사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왜 실천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들은 그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갈구하는 권력과 명예, 부(富)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로 높고 고귀한,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로부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권과 혜택을 부여 받고 상류층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중산층과 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위해 더 큰 공헌을 하고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양보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 것이다. 국가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또 전쟁에 처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여하고 또 희생함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 그 다음으로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돈과 재물이고 재산인 것이다. 국가가 위기와 위난에 처하였을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과 불우한 이웃,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돈과 재산, 재물을 기부하고 봉사함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다.<sup>7)</sup>

### Ⅲ. 동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요사례

#### 1. 고대 로마

고대 로마시대에 있어서 초기 왕과 귀족들은 평민들보다 앞서 솔선수범과 절제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국가의 초석을 다져 나갔다. 초기 로마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포에니전쟁<sup>8)</sup> 때에는 막대한 전비를 충당

주 7) 김규만, 2005. 5, pp.26~27.

8) 포에니전쟁은 BC 3~BC 2세기에 걸쳐 일어난 로마 카르타고의 3차례 전쟁을 말한다. 이 전쟁은 서지중해 전 지역을 무대로 한 고대의 세계대전으로 3차례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함으로써 하나의 도시국가에서 지중해 전체를 지배영역으로 하는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된 전쟁이다.

하기 위해 전쟁세(戰爭稅)를 신설하였는데 재산이 가장 많은 원로원의 귀족들이 더 많은 세금부담의 감수는 물론 기부금까지 자발적으로 냈다고 한다. 그것도 제일 먼저 세금과 기부금을 내기 위해 수레에 돈을 싣고 경쟁적으로 국가에 갖다 바쳤고, 이를 본 평민들도 앞다투어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전비충당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귀족인 고위층이 전쟁에 참가하는 전통은 확고했다. 한 예로,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와 대항하여 16년간 벌인 제2차 포에니전쟁중에는 로마의 최고지도자인 집정관(Consul)의 전사자 수만 해도 13명에 이르고 있다. 집정관이라면 로마 공화정시대의 행정 및 군사의 최고 지도자였다. 이러한 집정관이 죽음을 기다리는 전장의 전면에 나서서 전쟁을 지휘하는 것은 요즘 상식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 지도층의 희생정신은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로마 건국 이후 5백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보다 15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계속된 전투과정에서 지도층계급에 속하는 이들 귀족이 어느 계층보다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9)</sup>

기원전 167년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파울루스 장군은 마케도니아 왕궁에서 빼앗은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를 로마제정에 충당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해적 토벌로 명성이 높은 폼페이우스 장군과 갈리아를 정복한 시저(Julius Caesar)도 전쟁 후 전리품들을 모두 국고에 납부하여 국가 신전건축사업에 크게 기여했다. 로마 공화정치시대의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도 자신의 두 아들을 왕정 복고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형하였다. 또한 수많은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이 고갈되어 병사들에게 보급을 주지 못하게 되면 지배층인 원로원은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을 국고에 바쳤으며 이를 본 평민들도 앞다투어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 로마 시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다. 어린 후계자만을 남기고 일족이 모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파비우스 가문의 예에서 보듯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를 위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다.<sup>10)</sup>

지성은 그리스인, 체력은 켈트인과 게르만인, 기술은 에트루리아인, 경제력은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졌던 로마인이 어떻게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의 대답은 간결하다. 로마제국을 지탱한 철학(또는 정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이다.<sup>11)</sup> 귀족과 원로원 의원들이 자신이 누리는 특권에

주 9) 김규만, 2005. 5, pp.27~28.

10) 국군기무사령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국가홍명(4) : 로마의 홍명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방일보』, 1999년 8월 3일자 4면 ; 김강녕(2005. 3. 1), pp.126~127.

11) 김석희 역, 시오노 나나미 저, 『로마인 이야기』, 제8권 : 위기의 극복(서울 : 한길사, 1999. 10).

겉맞게 의무를 다한 것이 대제국을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로마는 부족한 재정을 부유한 계층이 내는 기부금으로 충당했고, 귀족들이 전쟁터에서 늘 평민보다 적진에 먼저 뛰어들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귀족층의 숭선수범과 희생 때문에 로마는 고대 세계의 맹주(盟主)로 자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帝政) 이후 권력이 황제 개인에게 집중되고, 지도층의 인사들이 도덕적으로 헤이해지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은 퇴색하게 되었다. 귀족들은 권력과 특권을 향유하는데만 급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의무와 숭선수범을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와 국가발전의 역동성이 급격히 쇠퇴하게 됨으로써 결국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sup>12)</sup>

로마 몰락기에 귀족들의 생활은 로마 융성 발전기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성공 속에 쇠퇴의 씨앗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제국의 지배계층들은 ‘지중해 제패’라는 커다란 목표가 달성되어 주변의 위협이 사라지고, 오랜 기간 로마의 번영이 지속되자 차츰 국가의 이익보다는 사리사욕을 앞세우며 사치·탐욕·방탕에 빠져들었다. 당시 귀족들은 사치품과 은그릇을 사서 모으고 호화로운 대저택을 짓는데 열중했으며, 로마의 밤은 연일 연회로 흥청댔다. 당시의 향락풍조는 “로마 대제국은 사치스런 목욕탕으로 망하기 시작했다”는 한 역사가의 지적처럼 지금도 발굴이 계속되는 이탈리아 남단 폼페이 목욕시설 유적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또한 로마 쇠퇴기에는 탈영하거나 병역을 피하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심지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쟁포로나 외국에서 흘러든 용병들에게 나라를 지키게 하는 등<sup>13)</sup> 군복무나 참전을 명예스럽게 여기던 로마 융성기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국 로마제국은 지배층이 책임과 의무에 숭선수범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평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절제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번영했으나, 귀족들이 그러한 미덕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부와 안일만을 추구하며 탐욕에 빠져들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 호화, 과소비가 만연하면 나라는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sup>14)</sup>

## 2. 미국의 사례

### 가. 미국인의 군인정신

전성기의 로마의 경우가 그러했지만, 미국인의 군인정신 또는 국방정신은 본받아야

주 12) 김규만, 2005. 5, p.28.

13) 태평사, 『대세계의 역사』, 제2권, 1981, p.196.

14) 김강녕, 2005. 3. 1, p.130.

할 부분이 많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은 케네디(John F. Kennedy)이다. 그는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제2차 대전 중 미국 육군에 자원했으나 허리디스크로 퇴짜를 맞았다. 그는 맹렬한 허리강화운동을 한 끝에 해군에 입대, 태평양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3년 솔로몬군도 해역에서 어뢰정 선장으로 출전하였는데 일본 구축함의 공격으로 어뢰정이 침몰하자 의식을 잃은 부하들을 구출하고 무인도에 은신해 있다가 탈출한 바 있다. 그의 형인 조셉 F. 케네디는 1944년 8월 해군조종사로서 폭격기를 조종하여 벨기에 전선으로 출격 전사했다.<sup>15)</sup>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Bush)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 파일럿으로 참가하여 폭격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본군의 대공포에 직격탄을 맞아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바 있다. 부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껏 광기의 불꽃을 태우던 1942년 6월 12일 만 18세로서 필립스 군사학교를 졸업했으며 동시에 해군에 입대했다. 1년 뒤 그는 해군에서 가장 나이 어린 파일럿이 되면서 애기(愛機)를 배정받았다. 부시는 미 항공모함 산 자싱토에서 발진하는 뇌격기(Torpedobomber)를 조종하면서 태평양전쟁에 참가했던 것이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7선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몬드는 그 지역에서 많은 존경을 받은 정치인이다. 유권자 신뢰의 가장 뿌리깊은 부분은 조국이 어려울 때 주저 없이 자신의 달콤한 이익을 던지고 전장에 뛰어들었던 그의 경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주 순회판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과감히 휴직원을 내고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그는 제82공정사단의 일원으로 노르망디상륙작전 때 해안으로 돌진했다. 그는 무용(武勇)이 뛰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두 18개의 훈장과 메달 등을 받을 정도였다. 종전 후 47년 그런 그를 주민들은 주지사로 뽑았고, 이후 7선 의원으로 선출함으로써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sup>16)</sup>

#### 나. 한국전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미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6·25전쟁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10여개의 사단과 30여만명의 지상군 병력, 해·공군 병력을 포함하여 연 1,789,000명의 병력이 참가하였다. 한국전쟁 3년 1개월 2일 동안에 미군은 전사 및 실종, 부상 등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미군의 인명손실은 전사자 36,940명, 부상 9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으로 총 137,250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다.<sup>17)</sup> 참전 미군 중에는 미군

주 15) 김강녕, 『현대 군사문제와 남북한』(서울 : 형설출판사, 2001. 8. 30), pp.418~419.

16) 김강녕(2005. 3. 1), pp.138~139.

17)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2000. 12. 1, p.280.

장성들의 아들 142명이 포함되었는데, 이 중 35명(25%)이 전사 또는 부상을 입는 피해를 보았다.<sup>18)</sup>

당시 미국이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투입한 것은 우리로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나,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볼 때 그들의 희생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전쟁 중 미국 지도층이 보여준 자기희생은 정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John Eisenhower) 육군 소령, 미 8군사령관 워커 장군의 아들 샘 워커(Sam Walker) 중위,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의 아들 빈 클라크 대위에 이르기까지 전쟁 지휘부의 아들 중에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의 아들 지미 밴플리트 중위는 B-29 폭격기 조종사로 1952년 4월 4일 중공 및 인민군 폭격에 나갔다가 실종되었다. 당시 밴플리트 장군은 아들을 잃고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부대 지휘에 만전을 기했으며, 장군의 아들에 대한 수색작업도 도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구출작전도 중단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해병 1항공사단장 해리스 장군의 아들 지미 해리스 소령 역시 미 해병 1사단 7연대 3대대를 지휘하여 아버지의 항공지원하에 장진호를 돌파하다 하갈우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sup>19)</sup>

이처럼 그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자식들까지도 최전방에 투입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한국전쟁에 미국 지도층 및 장성의 자제 142명이 참전하였고, 이 중 25%인 35명이 전사를 했거나 중상을 입고 귀환했던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해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졸업생 680명 중에서 365명이 우리나라에 파병되어 참전하였으며, 이 중 104명이 전사했거나 부상을 입었다.

단 한명의 인명과 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미국이 36,940명의 전사자와 137,250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오면서, 또한 미국 내의 거센 반전운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켜냄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고, 한·미간에 피로써 맺어진 혈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권위와 힘은 미국 지도층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 곧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인하여 미국은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주 18) 대한민국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3. 6. p.30.

19) 대한민국 국방부(2003. 6), p.30.

20) 김규만(2005. 5), pp.31~32.



## 다. 미국의 기부문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또 다른 척도가 되는 기부문화가 가장 발전이 되고 또 정착이 된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현재 미국에는 수십만 개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 정부와 관련이 없는 국제민간단체)들과 4만여개의 각종 재단들이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기부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철강왕 카네기, 석유재벌 록펠러, 자동차왕 포드 등과 같이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익사업에 앞장선 훌륭한 모델이 있었기 때문이다.<sup>21)</sup>

이러한 전형은 오늘날 다시 빌 게이츠, 조지 소로우, 워런 버핏 등에 이어지고, 또다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20, 30대 벤처기업가들에게 이어지면서 온 국민에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기업을 지키려는 일종의 자구책일 수도 있지만, 도덕적 의무를 다하려는 이러한 자세는 국민정신을 결집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마이크로 소프트(MS)사 빌 게이츠 회장 부부로 조사되었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에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간 기부금액을 조사한 결과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 멜린다는 100억 8,500만 달러를 기부하여 단연 1위에 올라 있는데, 이는 그의 총 재산 460억 달러의 거의 22%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빌 게이츠는 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재단을 통해 주로 교육분야와 보건분야에 기부를 많이 하였는데, 미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인도 어린이에게 공급할 백신을 구입하는데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인텔의 공동창업자인 고든 무어 부부는 70억 4,600만 달러를 기부해 2위에 올랐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 27억 2,100만 달러로 3위,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23억 100만 달러로 4위, 선아메리카 창업자 엘리 브로드 부부가 14억 6천만 달러로 5위, 아메리칸센트리 창업자 제임스 스토어스가 13억 4,600만 달러로 6위에 랭크되었다. 이 중에서도 고든 무어 부부와 6위인 제임스 스토어스의 기부금은 본인들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기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로, 또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가들은 부의 축적만큼이나 기부에 더 열성을 보이고 있어 ‘기부세대’라는 용어도 생겨나고 있다.

주 21) 김강녕(2005. 3. 1), p.139.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사회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미국인들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도 기인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들 부자들이 사회의 기득권층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거액을 기부하고 있고, 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sup>22)</sup>

### 3. 유럽의 주요국가의 사례

#### 가. 영 국

유럽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영국이다. 귀족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을 '명예혁명'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명예혁명으로 귀족가문의 명맥이 유지되면서 귀족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반대급부의 성격을 갖는 '의무'로 정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sup>23)</sup>

중세시대 이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준 이 나라 귀족들의 숭선수범자세는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버크셔주 이튼(Eton)에 있는 영국을 대표할만한 명문 사립중등학교인 이튼칼리지(Eton College)는 그 역사가 중세 잉글랜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440년 국왕 헨리 6세가 만들었으며 수 세기가 지난 지금도 전통을 유지하면서 첨단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 학교는 5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귀족학교이다. 이 학교는 주로 상류 부유층 자제가 입학하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이나 사관학교 등으로 진학하여 영국의 지도자가 되는 일종의 '귀족양성학교'였다. 이 학교는 영국 상류사회의 전통과 무게를 압축하고 있는 곳이다.<sup>24)</sup>

전쟁사의 미스터리(mystery)라고 말하고 있는 워털루 전투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설명되고 있다. 1815년에 발생한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12만 5천명의 프랑스군을 이끌고 웰링턴 지휘하의 영국군(9만 5천여명), 블뤼허가 지휘하는 프로이센군(12만여명) 등의 연합군과 벨기에 남동쪽 워털루 남방 교외에서 대전하였다. 나폴레옹은 먼저 프로이센군을 격파하였으며, 사기가 충천한 프랑스군은 영국군에게 총 공격을 개시하였다. 당시 사기나 병사들의 전투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프랑스군은 도저히 질 수 없는, 영군

주 22) 김규만(2005. 5), pp.32~33.

23) 최성원, "영국·프랑스의 활발한 기부문화," [http://nanum.kova.or.kr/02/02\\_6.asp](http://nanum.kova.or.kr/02/02_6.asp)(검색일 : 2003. 10. 4).

24) 김강녕(2005. 3. 1), pp.132~133.

군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4만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대패하였다. 이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한 나폴레옹은 돌아오지 못할 귀양지 세인트 헬레나섬으로 영구히 유배되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전력이 열세했던 영국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전사자들의 신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프랑스군의 전사자들 중에는 주로 하층민이 많았지만, 영국군의 전사자들 중에는 이튼칼리지(Eton College) 출신들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들의 자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튼칼리지 학교 출신들, 즉 귀족들의 자제들이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앞장을 서게 되자 서민출신의 군인들도 용감하게 싸워서 각종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전통은 현대에 와서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 중에 이튼칼리지 출신들의 전사자들이 무려 2,000여명에 달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2년 아르헨티나의 무력점령으로 시작된 포클랜드전쟁 때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류 왕자가 참전한 것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 그도 물론 이튼칼리지 출신이다.

75일간 지속된 이 치열한 전쟁에서 영국군은 452명, 아르헨티나군은 630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러한 위험한 전장에 여왕의 아들이 그것도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함으로써 영국군의 사기는 충천하게 되었고, 결국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다.

영국의 귀족들은 이와 같이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하기보다는 도리어 최전방에 나가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명예로운 정체성과 도덕성을 지켜나갔던 것이다.<sup>25)</sup>

## 나. 프랑스

프랑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의 아름다운 사례로 꼽히는 칼레의 시민 이야기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 14세기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백년전쟁에서 발생했다. 전쟁 초기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순조로운 전쟁수행을 자신했으나 프랑스의 북부 항구도시이자 공업도시인 칼레시(市)가 기근에도 불구하고 11개월간 버텨내자 전쟁 계획에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하지만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칼레시는 결국 항복을 하게 되었고 에드워드 3세는 장기간의 저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칼레의 시민 가운데 여섯 명을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선포했다. 이 소식은 곧 파수대 앞에 모인 칼레의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시민들은 끝내

주 25) 김규만(2005, 5), p.34.

항복하게 되었다는 굴욕감과 그럼에도 대다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들 가운데 여섯 명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불안감 등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패자의 운명은 언제나 그렇듯 야속하고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탄식이 계속되는 사이 외스타슈라는 이 도시의 가장 부유한 시민이 먼저 죽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서로 죽기 싫어 제비를 뽑는다든지 희생자를 지명하는 것은 도시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패했지만 적 앞에 당당하게, 후손 앞에 떳떳하게 나섬으로써 도시의 정신과 민족의 혼(魂)만큼은 살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그런 결단에 자극되어 다섯 명의 다른 지도층 시민이 차례로 희생을 자원했다. 이로써 도시는 그 존엄을 지킬 수 있었다.

근대 서양미술사상 최고의 조각가로 꼽히는 로댕의 ‘칼레의 시민’ 동상 작품은 지금도 칼레시 청사 앞에 의연히 서 있다. 칼레의 영광 나아가 프랑스의 영광은 이러한 위대한 조상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켜온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sup>26)</sup>

또한 프랑스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기업이나 성공한 개인의 덕목으로 강조된다는 점에서 영국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혁명으로 전통적인 귀족계급이 몰락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자본가계급이 활발하게 ‘사회환원’ 차원의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이들 기업인 이름을 붙인 공공시설이 유난히 많다.

프랑스에서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기업인의 그것과는 약간 다르다. 바로 청렴성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은 우리로 치면 비리에 연루되어 중도에 하차한 정치인이다. 그는 1997년 프랑스 경제를 되살릴 인물로 기대를 모으며 장관직에 올랐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1999년 11월 “소신껏 일할 수 없다.”며 스스로 물러났다. 그 뒤 그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다. 스트로스칸은 국민들을 위해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자신의 위치에 맞는 책임감과 청렴성을 겸비한 지도자로 거론되곤 한다.<sup>27)</sup>

#### 다. 독 일

오랫동안 분열된 독일을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로 이끄는 데 기여한 프로이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정식 이름은 Otto Eduard Leopold Fürst von Bismarck Graf von

주 26) “칼레의 시민,” <http://blog.naver.com/2liii/20015983996>(검색일 : 2006. 3. 10).

27) 최성원, “영국·프랑스의 활발한 기부문화,” [http://nanum.kova.or.kr/02/02\\_6.asp](http://nanum.kova.or.kr/02/02_6.asp)(검색일 : 2003. 10. 4).

Bismarck - Schönhausen Herzog von Lauenburg)는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 두 아들(큰아들 헤르베르와 작은 아들 빌헬름)을 출정시키곤 했으며 한 전투에서 큰아들 헤르베르는 3발의 총탄을 맞고 분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스마르크 부자의 전쟁참전 일화는 독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구현한 좋은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오늘날 독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은 기부문화에서도 볼 수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부속병원에는 흰색의 단아한 3층 건물이 서 있다. 마치 커다란 유치원 같은 이 건물은 프랑크푸르트에 널리 알려진 이 대학 소아과병동인 '부호만관'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건물은 요셉 부호만의 기부금으로 지어졌다. 1997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예산부족으로 하마터면 완공은커녕 자칫 흉물로 남을 뻔 했으나 부호만이 조건 없이 100만 마르크(약 6억원)를 선뜻 내놓았다. 부호만의 '쾌척' 소식이 알려진 뒤 '프랑크푸르트 어린이돕기재단' 등 여기저기서 기부가 이어졌고, 급기야 프랑크푸르트시 당국도 예산지원에 나서 소아과병동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어린이들은 다른 어떤 도시의 어린이들보다 훌륭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일 총리 슈뢰더(Gerhard Schroder) 집안의 이야기도 독일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는 데 손색이 없다. 슈뢰더는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과 소탈함으로 독일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그의 부인 도리스 슈뢰더는 공식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리 관저를 이용하지 않고 하노버 개인주택에서 자식을 돌보며 보통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sup>29)</sup>

## 라. 이스라엘

총 인구 560만명을 지닌 이스라엘이 1억 8,000만 아랍인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국가를 지탱하고 오히려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총을 들고 싸우기 때문이다. 역대 이스라엘 총리 중 대부분은 전쟁공로자이거나 장교출신이다.

다윗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독립 당시 초대 수상으로 1948년 독립을 이룬 직후부터 5년 동안, 또 1955년 다시 3대 수상으로 추대되어 1963년까지 13년 동안 수상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이스라엘 수상을 퇴임한 이후에도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국민들에 의해 기억되고 있다.

그는 초대 수상을 마친 직후 당시 60대의 몸으로 네게브사막의 기브즈(집단농장)에

주 28) 김강녕(2001. 8. 30), p.52.

29) 김규만(2005. 5), pp.35~36.



들어가 사막을 개척하는 농업에 남은 정열을 쏟았으며, 3대 수상을 마친 이후에도 80대의 노구로 기브츠에 들어가 오직 사막을 개척하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우리는 이미 2,000년을 잃었다. 이제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열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필요한 때다. 만약 국가가 사막을 없애지 않으면 사막이 국가를 없애려 할 것이다.”라고 젊은이들에게 외쳤다. 이렇게 그는 편안한 노후를 뒤로 한 채 오직 애국애족이라는 마음의 재산만을 갖고 사막을 개척하는 데에 숭선수범함으로써 ‘네게브사막의 기적’을 이룩하여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로 남아 추앙을 받고 있다.<sup>30)</sup>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 시대 지배층의 역사적 정통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이스라엘 등의 활발한 사회 기부문화와 특권만큼의 사회봉사 와 기여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상층문화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매우 잘 형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 특권층의 행동은 일반인들로부터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다. 경제적 부와 사회적 위세를 많이 가진 이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만큼 사회를 위해 베풀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누구나 믿고 있기 때문이다.<sup>31)</sup>

#### 4. 중국·일본·몽고의 사례

모택동은 한국전쟁 때 북한을 지원하였으며, 급기야 100여만명의 중공군을 참여시켜 국군과 유엔군에게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저해 하고, 민족의 분단을 가져오게 하였던 주요 장본인 중의 하나지만, 중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좋은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

모택동(마오쩌둥, 毛澤東)의 일가 중 혁명과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희생된 사람은 6명 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첫 아내였던 양개혜는 모택동과 헤어져서 지하활동을 하다가 국민당에 잡혀서 처형되었다. 그밖의 5명은 모(毛)씨의 성을 가진 가까운 일가이다. 모택동 누나뻘 되는 모택건(毛澤健)이 1929년 강 서성에서 희생되었고, 모택동의 조카로 알려진 모초웅(毛楚雄)이 이보다 앞서 1928년 국민당군에 의해 처형되었다. 모택동보다 세살 아래인 동생 모택민(毛澤民)은 1943년 신강(新疆)에서 군벌 성세재(成世才)에게 처형되었고, 그 밑의 동생 모택담(毛澤潭)은 그보다 앞서 1935년 강서성지역에서 유격전을 벌이다가 희생되었다.

모택동의 큰아들 모안영(毛岸英)은 자원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중국인민해방군

주 30) 김강녕(2005. 3. 1), pp.141~142.

31) “시사마당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http://www.seojeon.net/www/scripts/contents/pds/66/sn66\\_15.php](http://www.seojeon.net/www/scripts/contents/pds/66/sn66_15.php)(검색일 : 2003. 10. 4).

총사령관인 팡덕회(팡더화이, 彭德懷)의 비서 겸 러시아어 통역으로 근무하다가 전사하였다. 모안영은 결혼 후 1년이 조금 지난 1950년 10월에 참전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25일 미 공군의 폭격으로 28세의 젊은 나이로 전사하게 된다.

모택동 참모들은 모안영의 시신을 중국으로 가져오자고 건의를 하였으나 모택동은 “북한땅에 묻혀 있는 수만 명의 중공군 시신을 가져와야지 내 아들 시신만 먼저 가져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안영의 시신은 북한(회창지원군 열사능)에 묻혀 있다.

모택동 공산군이 장개석의 국민당군을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시사해주고 있다. 모택동이 바로 이러한 고위직에 있으면서 자기의 직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sup>32)</sup>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가까운 일본 역시 명예와 자기수양,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하층민에 대한 의무와 윤리의식으로 상징되는 사무라이계급의 무사도정신이 근대 이후 공직자들의 청렴성, 기업가 사회와 이웃에 대한 보은정신으로 이어지면서 일본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쓰도 정권을 잡은 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돈이 있는 자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었는데 힘으로 전국을 제패한 사람이었지만 평생동안 먹는 것조차 검소하게 살면서 그 본을 보였다.<sup>33)</sup> 300년 전 도쿠가와(德川)시대의 다이묘(大名)들도 일즙삼채(一汁三菜), 즉 국 한 그릇에 반찬 세 가지로 식사를 하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을 보살피는데 힘써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 지도층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늘 모자라고 배고픈 듯한 ‘하라하치부(腹八分)’의 생활신조가 일본사회 저변에 확산되게 된 것이다.<sup>34)</sup>

대제국을 건설하던 당시의 몽고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몽고 대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은 전쟁터로 출전할 때마다 항상 자신의 네 아들을 선두에 세워 병력을 지휘하도록 했으며, 결과 3차에 걸친 서방원정을 대승으로 장식하고 광대한 몽고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일깨워 주고 있다.<sup>35)</sup>

주 32) 김규만(2005, 5), pp.36~37.

33) [http://www.eland.co.kr/story/column\\_\\_cont005.htm](http://www.eland.co.kr/story/column__cont005.htm)(검색일 : 2003. 10. 11).

34) 김강녕(2003. 3. 1), p.141.

35) 김강녕(2001. 8. 30), p.418.

## IV.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요사례

### 1. 삼국시대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고구려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가 지도층의 권력다툼과 퇴폐향락으로 쇠망했던 것과는 달리 신라는 지도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크게 융성했다. 대부분의 귀족 자제로 구성된 신라의 화랑은 국가를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쳤으며, 평시에 상당한 특권을 누리던 귀족들은 전시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참전함은 물론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을 커다란 명예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국민정신이 바로 신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 당나라 군대를 몰아낸 원동력이었던 것이다.<sup>36)</sup>

서기 660년 백제와의 황산벌전투에서 김유신 장군의 동생이었던 김흠춘(金欽春)은 계백의 결사대 앞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자 아들 반굴(盤屈)에게 “지금 바로 충과 효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며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반굴은 장렬히 전사하게 되었다. 이를 본 품일(品日)은 자신의 아들 관창(官昌)에게 똑같은 행위를 요구했고, 이에 관창도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었다. 두 장수의 아들의 전사는 신라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황산벌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했다.

그러나 김유신 장군의 아들인 원술(元述)은 나당전쟁 때 석문전투에서 패전한 뒤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부모와 가족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이후 은둔생활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 즉 김유신 장군과 태종무열왕의 딸 지소부인(智炤夫人) 슬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672년 당나라와의 석문(石門)전투에서 비장(裨將)으로 출전하여 효천(曉天)·의문(義文) 등 동료는 죽었으나, 패하고 살아 돌아오자 김유신은 왕명을 어기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목을 벨 것을 문무왕에게 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그 후 675년 당나라 매소성 공격시 전장에 나가 공을 세웠으나 용서받지 못하자 이후 원술은 은둔생활로 일생을 마치게 된다.

김유신 장군은 자식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김유신은 누구도 불가능하게 여겼던 평양 식량수송작전에 67세의 노구를 이끌며 참전하게 되며, 김춘추(태종무열왕) 역시 험한 뱃길과 대륙을 마다하지 않고 고구려, 당, 왜국을 돌아다니면서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군사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패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백제는 의자왕과 호족들 사이에 권력투쟁으로 인한 분열로,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죽은 후 아들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전

주 36) 김강녕(2006. 3. 1). p.115.

개되었고, 뒤에 장남 남생이 당나라에 투항하면서 국가의 운명은 다하게 되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의 당시 지배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차이가 세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았음을 잘 알 수가 있다.

신라는 화랑제도를 통한 인재의 선발과 양성으로 심신이 단련된 다수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세속오계(世俗五戒)의 정신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임전 무퇴의 기상을 견지하는 등 당시 지배층의 장년층과 젊은이들은 물론 늙은 원로들까지 고위층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던 것이다.<sup>37)</sup>

## 2.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이 구현된 여러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세종 때에 정승 황희, 맹사성과 같은 청백리가 있어 관리로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 조선이 융성기를 맞이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우리나라가 국난에 처할 때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 헌신한 명장들이 나왔다. 임진왜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한 이순신과 같은 장군과 광재우, 김천일 등과 같은 수많은 의병장, 충성스런 관리들이 있었기에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때 왜장 구로다가 3천 병력으로 해주를 함락하고 연안을 포위해오고 있었을 때 연안부사로 일한 적이 있었던 이정암은 이곳을 지나다 “생사를 같이 할 자만 나를 따르라!” 하고는 최전선에 마른풀을 쌓아 놓고 그 위에 서서 독전을 했다. 만일 패하게 되면 아들 준에게 불을 지르게 하여 타죽을 각오를 했던 것이다. 왜군이 사흘을 공략하다가 사상자가 절반이 넘자 후퇴해 버렸다. 하지만 이정암이 조정에 올린 장계에는 “아무 날 왜적이 성을 포위했다가 어느 날 포위를 풀고 돌아갔습니다.”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적을 패퇴시키기도 어렵지만 공을 자랑하지 않기란 그보다 더 몇 곱절 어려운 일이라 하여 이후 선비들의 정신적인 귀감이 되었다.<sup>38)</sup>

조선시대에도 국가와 사회에 재산과 부를 환원하였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을 가지고 있는 양반계층들도 많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공간에 별도로 뒤주를 만들어 놓고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쌀을 가져가도록 하였던 구례유씨 가문과 대대로 재산을 나라에 환원하였던 경주최씨 가문, 일제하 독립과 자존을 위해 만주별판으로 망명을 결행하

주 37) 김규만(2005, 5), pp.28~29.

38) 국군기무사령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국가희망(2) :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국방일보』, 1999년 7월 20일자 4면 ; 『국방일보』, 1999년 7월 27일자 4면 참조.

고 그 많던 재산과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우당 이회영 집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가진 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조선시대의 양반가문으로는 전남 구례의 운조루(雲鳥樓)<sup>39)</sup>를 근간으로 하는 유씨 집안을 꼽을 수 있다. 운조루는 영조 52년에 삼수부사를 지낸 유이주가 세운 집으로 궁궐 다음 가는 호화로운 저택이었다는 아흔 아홉칸 집으로 집주인의 재력과 권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많이 쇠락했지만 아직도 빛을 발하는 물건이 있는데, 곳간의 쌀 뒤효가 바로 그것이다. 둥근 통나무 속을 파내어 만든 커다란 뒤효는 가족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뒤효로 그 비밀은 밑부분에 있는 조그만 구멍과 그 구멍 마개에 새겨진 글자에 숨어 있다. ‘타인능해(他人能解)’ 곧 ‘다른 사람도 능히 열 수 있다.’는 뜻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필요하면 와서 쌀을 퍼가라는 주인의 배려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덕분에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지리산 일대의 과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쌀을 가져갈 수 있었고 끼니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운조루는 가진 자가 더 삼가야 하는 처신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겸손하게 나누는 삶을 대대로 실천하는 표상이 되었다. 이것이 동학과 여순반란사건, 한국전쟁의 격전지였던 지리산 아래에 자리잡으면서도 운조루가 불타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명백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최씨 가문은 400년 동안 내려오는 가훈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인할 수 있다. 12대 만석꾼과 9대 진사를 배출했다는 경주최씨 집안에서는 “재산은 만석을 넘게 모으지 말라. 흥년에는 다른 사람의 전답을 사들이지 말라. 사방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등의 원칙을 대대로 강조해왔던 것이다.

최부잣집은 재산이 만석을 넘으면 소작료를 낮춰서 주변사람들에게 골고루 이득이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과객들에게 제공한 숙식용으로만 1년에 천 석씩 들었다는 거부였지만 보릿고개가 닥치면 집안 식구들에게 쌀밥을 먹지 못하게 했고, 은수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최씨 가문의 시조인 최진립(催震立)은 임진왜란시 의병장으로 나서 공을 세웠으며, 후손들 역시 애국심과 사회 공헌에 지대한 관심과 실천을 보여주었다. 경주최씨의 마지막 부자였던 최준(催浚)은 독립운동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백산상회를 세워 독립자금을 조달했으며, 일본 총독부의 끈질긴 관직 제의도 거부했다. 또한 최준은 영남대학교

주 39) 운조루(雲鳥樓)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소재하고, 유이주(1726~1797)가 지은 이 집터에서 돌거북이 나왔다는 양택 명당이며, 현재는 중요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되어 유이주의 10대 후손이 관리하고 있다.



의 전신인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세우는데 전 재산을 바치고 일선에서 미련 없이 물러났다. 누구보다 청렴함과 공동체의식을 지니며 나눔을 실천한 경주최씨 가문은 이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시대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상류사회로는 이항복의 후손인 이회영(李會榮) 6형제를 빼놓을 수 없다. 8대를 내리 판서를 배출하고 7명의 재상을 배출한 조선의 명문가였다. 일제는 1910년 한·일합방에 공이 있다는 명목으로 당시 사회 지도층인 양반들에게 작위와 은사금을 내렸는데 남작직위와 함께 5만원, 백작은 10만원, 후작은 15만 원을 주었다. 당시 15만원은 지금 30억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지도층의 양반이었던 6형제는 작위와 은사금을 주겠다는 일제의 회유를 뿌리치고 오히려 전 재산을 팔아 1910년 12월에 만주로 향한다. 당시 이회영 일가의 재산은 지금 돈 2,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한다.

만주에서 이회영 6형제는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독립군양성을 위해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10년 동안 3천여명의 독립군을 길러냈다. 또 서간도라 불리는 조선족 학교를 세워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쳤다.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된 독립군들이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주력으로 맹활약하였으며, 이들 6형제의 아들들도 대부분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니 이회영 집안은 당시 고위층과 부유층으로서는 드물게 양심과 의무를 굳건히 지켰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였던 이회영 6형제 가운데 다섯 켤인 이시영만 해방 후 조국의 땅을 밟았다. 이회영은 밀고로 일제에 붙잡혀 갓 옥고 끝에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형제들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숨져갔다.

이와 같이 가장 귀중한 목숨과 재산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일제하에서 이회영의 형제 가문은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의무를 숭선수범하여 실천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좋은 사례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독립유공자만 29명을 배출한 안동의 의성김씨 가문, 호란 이후부터 매일 유랑민들에게 죽(粥)을 대접한 영양의 재령이씨 가문, 3대가 독립운동에 나선 안동 이만도(李晩燾) 집안 등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0)</sup>

유한양행의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는 1968년 세무사찰을 받은 뒤 세금을 추징당하는 대신 국세청에서 '국세청 선정 모범납부사업체'라고 쓰인 동으로 만든 현판을 받았다. 3년 뒤 타계와 동시에 자신이 소유한 기업 주식 14만주를 사회에 기증한 그가 가족에게 남긴 것은 딸에게 물려준 대지 5,000평과 손녀의 학자금 10,000달러가 전부였다.<sup>41)</sup>

주 40) 김규만(2005, 5), pp.29~31.

41) 허경희, "무형의 인프라 '노블레스 오블리주,'" [http://www.midas.co.kr/docs/magazine/weekly\\_donga/news281/wd281aa040.html](http://www.midas.co.kr/docs/magazine/weekly_donga/news281/wd281aa040.html)(검색일 : 2003. 10. 4.)

## V. 한국의 국가안보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 1. 국가 안보환경

작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은 20세기가 끝나가면서 동서간의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이념대립이 종식되어 세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많이 나왔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테러,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이 줄지 않고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은 21세기 세계질서의 전략적 중심축으로 등장하면서 세계 최대의 군비경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우리에게 비해 이미 절대적인 우위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국의 실리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의 확대와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강조하는가 하면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안보 불안요인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북한의 대남도발도 감소되어온 것도 사실이나 지난 1999년 6월 연평해전과 2002년 6월 서해교전에서 보았듯이, 아직도 호전적이며 적대적인 군사행동을 자행하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을 전술적으로는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sup>42)</sup> 최근 특수전부대와 예비전력 및 북한의 장사정포의 배치가 더욱 증가하였고<sup>43)</sup>, 2,500톤에서 5,000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등 생물무기의 보유도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제네바 핵 합의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여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개발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물론 6자회담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대화를 풀어나가려는 움직임도 있기는 하나, 북한 핵문제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서 우리의 안전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강의 지정학적인 갈등들은 새로운 위기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에 빠져 위기의식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할 수 준인 것이다.

주 42) 김강녕, 『한반도평화안보론』(부산 : 신지서원, 2006. 2. 20), pp.252~253.

43) 『2004 국방백서』에 따르면, 이전보다 특수전 부대는 10만에서 12만으로 2만명이 증가했고, 예비전력은 770만으로 22만명이 증가했으며, 북한의 다련장/방사포는 우리의 200문의 23배인 4,600문으로 급증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2004 국방백서』, 2005. 1. 26, p.39, p.251.

「서울신문」 인터넷자료<sup>44)</sup>에 의하면 북한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36.9%로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43.1%보다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 초등 5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sup>45)</sup>에서는 주변국 중에서 가장 친근한 국가로 26.4%가 북한을 꼽아 미국이 17.8%, 일본이 13.7% 등의 국가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25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는 질문에 54.5%가 북한을 지명했지만 45.5%는 북한이 아닌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지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은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위기상황에 견주어 볼 때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위기상황하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층 인사들이 투철한 애국심과 올바른 안보의식을 견지하여 국민들을 계도하고 지도해 나갈으로써 국민들의 안보의식의 향상은 물론 철저한 비상대비태세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존속·발전과 국가안보의 의식고취 및 역량 확대와 관련해서 국가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sup>46)</sup>

손자는 『손자병법』 ‘구변(九變)’ 편에서 “적이 오지 않으리라고 믿지 말고, 적이 언제 오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대비태세가 있음을 믿어라(無恃其不來 無吾有以恃也).”라고 했으며,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군대는 백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준비는 하루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고 강조한 바 있다. 지도층 인사들이 항상 유념해야 할 명언이 아닐 수 없다.

## 2. 우리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대 로마시대로부터 오늘날의 서구 문명국가, 그리고 삼국시대로부터 최근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국가들이 존재하고 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지도층 인사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자발적인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은 북핵문제와 주변국의 군비증강 등으로 위기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비상대비 및 안보의식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어 국가의 안위와 안보가 적지 않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저하된 다수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향상시키고 민심을 결집하여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고취시켜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더 나아가

주 44) 서울신문, “광복60주년 여론조사,” 『인터넷자료』(2005. 1. 2).

45) 국가보훈처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중·고등 4,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호국·보훈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6월 6일 발표한 바 있다.(『연합뉴스』 게재)

46) 김규만(2005. 5), pp.37~38.

통일한국의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주어진 위치에서 이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기득권층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특권과 혜택과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한 만큼 국가와 사회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귀중한 것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사회 상류층 또는 지도층인사들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화랑정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 국난시 의병장, 수많은 애국지사 등과 같은 우리선조들의 멸사봉공(滅私奉公)정신, 그리고 황희 정승과 같은 청백리(淸白吏)정신, 그리고 조선시대 관리들이 지키도록 요구된 불문율(예컨대, 4不3拒<sup>47)</sup>) 등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운융성기를 점차로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로 인해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이 증대되고 있음은 물론 가진 자에 대한 배척과 정당한 부의 형성까지도 부정하려는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사회에 대한 기부활동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기부활동을 보면 부유층보다는 오히려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상류층인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활동과 봉사활동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경주최씨 가문 최진립과 최준, 유한양행과 유한대학의 창업자이자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 등은 자신이 모은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부활동의 좋은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산 기부, 유산 기증 등 기부활동과 장기 기증,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계층간의 갈등 해소와 부(富)의 사회 환원에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의 중요성 및 비상대비태세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개인에 있어서 '건강' 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정

주 47) 4不이란 ① 재임중에는 부업을 가져서는 안되고, ② 재임중에는 땅을 사면 안되고, ③ 재임중에는 집을 늘려서도 안되며, ④ 재임지에서 명산물을 탐하면 안된다는 것이며, 3拒란 ① 윗사람이나 권력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② 청을 들어주어도 어떤 답례도 거절하며, ③ 재임중 경조사의 부조를 거절한다는 것이다. 김현기, “사불삼거(四不三拒)정신을 되살려야.” 군사저널, 『월간 군사저널』, 2006년 3월호, pp.142~143.

학적인 위치로 인해 주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온 바,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sup>48)</sup>

국가가 있기에 지도층인사가 있고, 사회가 건강하고 굳건하기에 상류층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지도층인사에 있어서 국가안보는 최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이며 사명인 것이다.

‘참여연대’가 밝힌 현 국회의원 자제의 병역면제 비율은 18%로 일반인 자제의 2.5%보다 7배나 높은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면제내용도 일반인 자제의 저학력, 생계곤란 등에 비해 질병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고위층 자제의 병역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을 받고 있다. 병역비리 여부를 떠나 고위층 자제의 병역문제가 거론되고 의심받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병역의무는 사회 지도층인사들의 자제부터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기풍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사회 지도층인사와 상류층인사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식들까지 참전하여 솔선수범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다면 군인들은 물론 국민이 일치단결하게 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누그러뜨리고 진정한 부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자본주의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안정장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sup>49)</sup>

## VI. 결 론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931회의 외침을 받았으며, 최근 100년 동안에만도 청일전쟁을 비롯하여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전쟁 등 다섯 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겪었다. 왜 우리나라는 이토록 엄청난 전쟁의 수난을 반복해서 겪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위정신과 상무정신이 미약했고, 주변강국에 의존하는 사대주의(事大主義)의식에 젖어 스스로 국가를 지킬 힘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우선하여 사회 지도층과 상류층인사들이 신분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48) 김강녕(2001. 8. 30), p.422.

49) 김규만(2005. 5), pp.38~39.



이 말은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층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실천함으로써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완벽한 국가비상대비와 방어태세를 갖추므로써 철통같은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도층의 병역 이행률은 국민의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sup>50)</sup>

국가안보와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가 지도층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의 명운(命運)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이다. 지도층은 일반국민보다 한 발 앞서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추진하며 '나라의 일'을 걱정하고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일은 뒷전으로 돌리고 신변의 잡사에만 관심을 두거나 일신상의 안락만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면 국민들의 자세는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지도층은 일반국민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에의 유혹' 속에서 나라의 일을 걱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도층의 사명은 힘들고 막중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 있다. 일찍이 율곡은 "그 자리만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위태롭게 될 것이요, 그 몸만을 보존하여 살아남고자 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는 교훈을 남겼다. 안중근 의사 역시 "이(利)를 보거든 의(義)를 생각하고, 위험을 만나거든 목숨을 바쳐라(見利思義 見危授命)"는 교훈을 남겼다.<sup>51)</sup> 또한 『주역(周易)』의 계사하전(繫辭下傳) 편에 나오는 "인덕은 갖추지 못하면서 고위층에 있고 지혜가 없이 대사를 치르려고 하거나 힘이 부족하면서 중임을 맡는 자는 화를 면하기란 극히 어렵다(德薄而位尊 知小而謀大 力小而任重 鮮不及矣)"<sup>52)</sup>는 말도 우리 지도층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사회 지도층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또한 국가의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사회의 지도층인사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을 다짐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조국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뿌리내리는 전통을 세워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 50) 국가의 밝은 미래는 노블레스(명예)와 함께 오블리주(의무)가 뒤따를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김강녕(2001. 8. 30), p.419.

51) 국군기무사령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국가희망(끝) : 나라와 군, 그리고 나," 『국방일보』, 1999년 9월 7일자, 4면.

52) 노해준 역해, 『주역』(서울 : 홍신문화사, 1997. 12), pp.243~244.

# 東北工程에 대한 歷史北伐論의 시의적절성에 대한 연구

## 목 차

I. 머리 말

II. 본 문

III. 맺음 말



박 경 민

(작가/역사칼럼니스트)

## I. 머리 말

지금 동북아 삼국은 역사전쟁 중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한국사 말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경화된 역사관으로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 정체성 또는 민족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꼭 두 나라의 역사도발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과 국가가 세계사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중국이 감히 동북공정이라는 한국사 말살 프로젝트를 마음 놓고 추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매일 매일 하루가 다르게 역사날조가 업데이트되는 오늘날의 현실이 안타깝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투철한 국가관도 있을 수 없다. 역사교육이 붕괴된 상태에서 동북공정이 주장하는 억지논리에 심정적으로 부화뇌동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정신적 무장해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군은 국가조직 가운데 가장 애국적이어야 한다. 정신전력은 애국심에서 비롯되며, 그 애국심이란 자신이 수호코자 하는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교육을 받지 못해 도무지 자신이 왜 총을 들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장병들이 늘어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는 먼저 역사 앞에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을 해야 한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다. 역이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대동방국이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아 동북공정에는 과감한 역사복벌로, 일본의 역사도발에는 역사남정(歷史南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것은 학문적 주변성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냉혹한 정치·외교적 현실의 문제이다. 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을 되찾아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역사연구는 관련 전문가의 몫이지만 적어도 식민반도사관으로부터 탈피할 수는 있다. 우리의 역사의식 결여는 저들의 왜곡적 우월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장병들의 역사교육은 사기를 먹고 사는 군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역사왜곡의 명수들에게 포위되어 역사와 혼을 잃어가고 있다.

## II. 본 론

### 1. 딱한 중국의 속사정

중화주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세상의 중심은 오로지 한족이 세운 중화(中華)이며 이민족은 힘이 있어도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뼈 속까지 잠재되어 있는 조상대대의 이데올로기이다.

그래서 중국은 몽골의 원나라, 여진의 금나라, 심지어 오늘날 중국의 광대한 영역을 만들어 준 청나라까지 중국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중국사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몽골과 여진민족은 결코 한족과 융합할 수 없는 오랑캐 집단에 불과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1980년대부터 태도를 바꿔 이민족사(異民族史)를 자국의 역사로 강제편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위대한 조상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우

리의 조상인 동북방 유목민 집단을 사이(四夷)로 나누고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하여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공정(工程)'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저들 스스로 억지주장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상대대의 역사관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 인구 13억, 날로 팽창하는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현대중국은 중화 패권주의, 즉 신중화주의(新中華主義)라는 환상에 빠져 있으며 '동북공정'은 그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 2. 동북공정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1949년 만주국을 접수한 중화인민공화국은 흥분했다. 드넓은 만주 벌판이 자기네 땅이라니 믿어지지 않았다. 한나라 무제 이후 거의 실효지배를 하지 못한 그 땅을 승전국의 입장에서 점령한 것이다.

313년 한나라의 낙랑군 퇴출을 끝으로 고구려와 발해가 요동과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그 후예들이 만주를 지켜왔으며 때로는 중원으로 진출하여 중국을 통치하기도 했다.

옛조선(고조선)이 무제에게 멸망한 이래, 고구려가 다물운동, 즉 옛조선 회복운동을 일으켜 요동과 만주, 한반도 북부를 지배한 이래 발해가 계승했으며 발해의 유민이 나중에 금나라를 세우고 우리와 민족적 코드가 같은 몽골의 원나라, 또 금나라 후손들이 세계적인 대제국을 세웠다. 중국 전통의 화이론적 시각에서 보면 이들은 분명히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청나라를 부정하여 신해혁명을 일으켜 선통제 부의를 폐위시켰다. 그런데 그 황제의 만주국(일본과 같은 패전국의 입장)을 접수하고 보니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단 '동북인민정부'라는 애매모호한 국체를 만들었다.

이듬해 냉전시대의 가장 뜨거운 전쟁이 터졌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진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를 반전시키고 38선을 넘어 북진, 압록강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중국은 긴장하였다.

우선 영토적으로는 통일 한반도에다 민족적 코드를 같이하는 지린(길림) - 헤이룽장(흑룡강) - 라오닝(요령) 동북 3성의 조선족과 만주족들이 범민족 통일론이라도 들고 나온다면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3의 고구려가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당국은 한국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오늘날의 155마일의 휴전선이 만들어졌다.

무언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이른바 동북공정이다. 비록 '東北工程'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중에 생겼어도 더 이상 만주를 자국의 영토로 강제편입하는 일을 미룰 수 없어 동북인민정부를 해체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동북 3성으로 나누어 중국정부로 편입시키고 말았다. 1953년의 일이다.

### 3. 중화인의 위대성(胃大性)

자기모순에 빠진 중국당국은 제2의 건국운동이 필요했다. 이른바 문화혁명이다. 우선 그동안 배척해오던 청나라를 인정해야만 했다. 만주를 삼키기 위해서다. 만주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시키면서도 스스로 청나라의 계승자라 자칭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대중국의 팽창주의는 자국을 위해서 결코 좋을 수 없다. 마치 그리스신화의 에릭식톤의 비참한 최후를 연상케 한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는 저주의 형벌이기에 ‘胃大性’이라 표현했다.

중국은 만주를 이런 식으로 급조된 중국사로 끌어당기면서 이 땅에 대대적인 한족 이주정책을 추진하였다. 사실 청나라 강희제 이후 역대 황제들은 산해관-홍경-압록강 하구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 봉금정책을 썼다. 청나라는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만주에 한족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것이다.(그러나 조선족에 대해서는 입주와 농사를 환영)

중국의 이민족사 말살정책은 청나라가 복속시킨 티베트가 첫 번째 목표였다. 티베트인들이 이에 반발하자 중국 당국은 1959년 병력을 동원하여 10여만 명을 학살하고 말았다. 이렇게 나라를 잃으면 슬퍼할 역사도 없는 법이다. 이제 티베트는 없고 오직 중국의 시짱(西藏) 자치구만 있을 뿐이다.

중국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티베트의 역대 군주와 라마가 중국 왕조의 책봉을 받았고, 대대로 조공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티베트는 소수민족이 세운 변경지방정권이므로 이 지역 통치는 당연하다 강변했다.

저들의 공색한 논리는 고구려가 현재의 중국 땅(사실 중국영토가 아닌 불법점거)에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내몽골 자치구가 자신의 영역에 포함되자, 줄지에 칭기즈칸도 중국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원나라는 분명히 몽골의 역사이다. 중국식 논리라면 몽골제국 전체 영역이 중국 땅이 되겠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란·이라크·아프가니스탄·러시아·폴란드·체코·헝가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한국인은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인은 1백여 년간에 이르는 몽골통치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고구려사 삼키기가 성공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조선왕조 내내 중국에 사대하고 부모의 나라로 섬겼으니 응당 한반도는 중국 영토’라고 말이다. 이것은 정해진 절차다. 이미 1954년에 출판한 『중국근대간사(中國近代簡史)』의 지도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7개 지역(일본은 제외)을 ‘앞으로 회복해야 할 중국의 영토’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동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조상대대의 이데올로기마저 가차 없이 배척해버리는 중화인의 위대성(胃大性)을 보편적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역사왜곡도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옛조선(고조선)과 부여도 중국사이며 한강 이북도 중국이라니 '내 땅도 내 땅이요, 네 땅도 알고 보니 내 땅'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통일한반도 자체를 부정한다. 쉽게 말해서 통일을 해도 북한이 남한으로 가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식이다.

#### 4. 역사북벌론

중국당국은 자기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혁명을 거쳤다.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종전의 주장을 뒤엎는 혁명적 발표였다. 이른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이다.

기존의 중화론은 오직 '한족의, 한족에 의한, 한족을 위한 중화'였다. 한나라 무제 이후 20세기까지 굳건하게 견지해온 논리이건만, 이것이 180도로 바뀐 것이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중국 내의 모든 민족의, 그 모든 민족에 의한, 그 모든 민족을 위한 중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동안 중화인과 오랑캐로 세상을 보다가(華夷論), 갑자기 모든 오랑캐도 중화인(中華人)이라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며 그 오랑캐에 고구려와 발해가 있었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발해사를 왜 지켜야 하며 우리 민족에 주는 역사적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되새겨보아야 한다.

고구려를 흔히 '민족의 방과제' 혹은 '역사의 호수'라 표현한다. 어째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고구려가 한반도 북부와 만주-요동을 지배했으며 수-당 제국의 집요한 침공을 물리쳤다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고구려는 한반도만의 고구려가 아니다. 왜냐하면 668년 나당연합군에 고구려가 망했어도 그 유민이 일으켜 세운 발해에 의해서 계승되었으며 또 그 유민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후금(청)에 의해서 고구려의 땅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우리 민족의 반도사관 탈피의 근거가 되며 동북공정에 대응한 역사 북벌의 논리가 된다. 다시 말해서 고구려는 단순히 한반도만을 수호한 것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만주를 포함한 포괄적인 역사공동체를 지켜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좁디좁은 반도사관적 역사개념에서 탈피할 때가 왔다. 앞으로는 요동과 만주의 형제들과 함께 동북아 역사의 개척자로서 중화족과 투쟁하고 때로는 그들을 지배하면서 요동과 만주벌판을 누비던 강력한 철기기마유목민의 본성을 되찾고 범쥬신<sup>1)</sup>이라는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주 1) 쥬신이란 순 우리말로 '태양의 첫 빛이 비치는 땅'이며 음차어로 朝鮮이라 표기했음. 철과 태양, 새(鳥), 불(火) 등이 한반도와 요동-만주 거주민의 공동 토텐. 만주에서는 肅慎, 珠申, 諸申 등으로 표현함. 삼한, 즉 요동-만주-한반도의 민족적 범칭으로 부각되고 있음.

## 5.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 찾기를 등한시하였다. 우선 교육현실부터 그렇다. 한동안 사대주의의 늪에 빠져 중국적 시각(한족적 시각)에서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러기를 무려 600여 년.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 36년 동안은 일본적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지금은 미국적 시각으로 본다. 두 살배기 아기가 우리말 이전에 영어를 먼저 배우는 상황이다. 입시에서조차 국사는 선택과목이니 누가 공부하겠는가. 이러한 현실을 중국과 일본이 잘 알고 있어 용감하리만큼 역사도발을 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민족적 감정만으로 대응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고작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나 하는 등, 수세에 몰려 방어에만 급급하다. 어찌저 저들의 주장이 틀렸는지 조목조목 파헤치며 공박하고 비록 저들을 설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만큼은 확실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회의는 진정 우리는 평화애호민족으로서 한 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았던 단일민족이 진정한 모습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역사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통일신라<sup>2)</sup>라는 축소지향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926년 고구려의 계승자인 발해가 망하자 그 지역과 주민을 일찌감치 민족사에서 제외시키고 소중화주의에 빠져 민족사의 강역을 반도 내에 가두어 버렸다. 우리와 함께 고조선과 부여·고구려를 구성한 같은 민족을 한족의 이이제이(以夷制夷) 농간에 빠져 오랑캐로 내몬 것이다.

민족적 코드가 같으며 끊임없이 반도를 끌어안으려 했던 원나라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게 만들고, 같은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던 후금을 배척하고, 망해가는 명나라에 연연하다가 전쟁을 자초했다. 소위 '여진'이라는 비칭으로 일컬어졌던 만주족은 엄연한 고구려와 발해의 유민의 자손들이니 당연히 우리 민족이다. 국가 구성원은 배제하면서 '고구려사만 우리 것'이라니 이러한 모순은 없다.

이제는 그동안 반도사관에 함몰되어 같은 민족들을 배척했던 지난날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한국사에 포함시켜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원나라는 몽골공화국이 있으니 몽골사로, 여진의 금나라와 여진의 후손이 세운 만주족의 청나라는 우리 역사이다. 따라서 민족사적 패러다임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심지어 발해를 멸망시킨 야율아보기의 거란족, 중국 북부에 강력한 제국을 세운 북위 효문제의 선비족도 그러하니 이참에 남북조시대의 북조국가들을 모두 민족사의 강역으로 되 돌려 놓아야 한다.

주 2) 현재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는 종전의 '통일신라'라는 말 대신 발해와 신라를 하나의 역사공동체로 보아 '남북국시대'라 기술하고 있음.

기존의 역사관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차라리 고구려사가 중국사에 편입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우리 민족으로, 그들의 역사를 한국사에 포함시켜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데, 우선 고조선과 부여·고구려는 물론, 그 윗대에 해당하는 환웅(한웅)시대부터 민족사의 원류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개념이 필요하다. 즉 요동과 만주, 한반도의 주민을 아우르는 민족의 범칭이 필요한데, 최근 중국의 역사도발을 계기로 점차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쥬신(조선과 만주 지역의 숙신의 어원)'이 앞으로의 민족적 범칭으로 적합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대충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기존 사학계가 추진하는 고구려 지키기가 있는데, 이는 감정적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요동사적 개념으로 한국과 주변사를 바라보자는 움직임과 국사 해체론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요동의 역사를 중국사도 한국사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보려는 것인데, 이는 객관성을 가장한 가장 위험한 논리이다.

셋째, 쥬신(조선과 숙신)을 중심으로 보는 역사관인데,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공격적 개념의 역사북벌이다.

단순히 '고구려사 지키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1400여 년 전에 없어진 나라에 대한 계승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리고 중국이 동북공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공과 책봉 문제도 그렇다. 이 분야는 역사문제이지만 국제외교 논리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뜻있는 분들은 요동사를 제3의 역사로 보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요동은 우리 민족의 주요 근거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요동사를 한국사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고아가 되고 만다.

한국에서 '한'은 '큰' 또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큰(칸)이니 한국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정식국호가 아니더라도 '큰 나라'이며 삼한<sup>3)</sup>은 '세 명의 칸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의미이다. 한반도 전체와 만주와 요동을 삼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고려사를 비롯한 여러 사서에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한반도와 북방계 유목민 전체가 우리 민족사의 큰 흐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만주만이 문제가 아니다. 고려 말 공민왕의 요동정벌이 실패로 돌아간 이래, 요동지역은 우리 민족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요동은 아주 중요한 지역

주 3) 한은 순 우리말이며 '韓'은 단지 음만 빌린 음차어이다. 삼한(삼칸)은 요동-만주-한반도를 지칭하며, 고려사 등 많은 사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도사관적 마한-변한-진한이 아님.

으로 만약 우리 역사에서 배제한다면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민족사의 진원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조선·부여·고구려·백제(남부여) 등은 모두 요동을 근거지로 하거나 주요 세력권으로 한 국가들이다. 특히 백제는 성왕 16년에 아예 남부여(南夫餘)를 표방하고 부여의 후계자임을 밝히고 있으니 이러한 유신(조선)계열의 나라들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이러한 모순이 없을 것이다.

결론은 하나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범민족사적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것뿐이다.

## 6.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 민족은 족보를 중요시한다. 그만큼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조선왕조 때에는 중국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을 이야기했다. 이제는 우리의 참모습을 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색안경을 벗고 민족의 원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교과서에 우리 조상은 예맥(濊貊)이라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숙신(肅愼)은 또 무엇이며 말갈(靺鞨)은 대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민족의 뿌리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니 한편으로는 충격일 것이다. 그동안 소중화주의에 빠져 그들을 상종하지 못할 오랑캐 취급을 해왔는데, 이제는 형제 내지 같은 뿌리로 생각해야 한다니 말이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 그렇고, 인류학적 증거가 그러하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실을 숨긴 왜곡의 역사가 꺾이지, 사실(fact)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한족은 농경민으로서 처음부터 불박이 생활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조상인 떠돌이 북방 유목민보다는 인구변창 속도도 빠르고 문화적 변이 속도도 빨랐다.

우리 조상은 한족에게 발달된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전해주어 황하문명을 열어주었지만 철기기마유목민의 특성상 한군데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역마살 때문에 문명의 달콤한 열매는 고스란히 한족이 거두어들였다. 황하문명을 중국문명으로 돌려놓았던 것이다. 사대주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업적도 고스란히 빼앗기고 만 것이다. 이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

기원전 4000여 년 전 한족은 원래 화중지방, 즉 양쯔강 이북 황하 이남에서 석기로 벼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우리의 조상이 먼 옛날 BC 9000년 전에 알타이 산맥에서 이동을 개시하여 이미 이 시기에는 발달한 청동기로 무장한 철기기마유목민으로 황하이북과 요동에 자리를 잡았다. 즉 황하일대를 유신민족(큰 민족, 한 민족)이 청동기

문화로 스스로 위대하다 주장하는 저들의 조상을 지배하면서 문명의 태동기를 연 셈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원전 2333년 전에 단군왕검이 나라를 처음 열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축소지향적 사관이다. 어찌서 단군이전의 배달나라<sup>4)</sup> 환웅(桓雄, 한웅)시대를 민족사에서 배제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배달민족이라 하는가 말이다.

요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지상과 방송 3사에서 역사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화두가 되고 있는 치우천황은 배달나라 14대 한웅, 자오지천황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배달나라 환웅시대까지 역사를 소급해야 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한족 스스로가 이 점을 실토하고 있다. 상고사에 등장하는 삼황오제 가운데 태호복희씨는 동이족이며 한족 수인씨를 쳐서 영토를 삼았고 역시 동이족인 신농씨는 농경문화와 의학을 증원에 전해주었으며 치우천황은 철기문화의 전수자이며 전쟁의 신으로 한족의 두려움과 숭배대상이었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문명은 우리 배달민족이 주도했다는 말이다. 따라서 <황하문명>은 중국문명이 아니라 쥬신(배달민족)이 주도하고 한족이 이에 따른,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문명이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누가 군주였고 신하였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우리의 억지주장이 아니라 우리 조상을 동쪽 오랑캐(東夷)라 부르며 자신의 문명이 동이족에 의해서 주도되고 형성되었음을 실토하였는데, 비록 그들의 후손인 현대중국은 양심불량이지만 당시에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술한 셈이다.

중화주의 태동기에 기록된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이 점이 더욱 명백해진다. 그동안 황제(黃帝)를 한족의 조상이라 주장해왔으나 이를 뒤집는 구절이 있다.

‘순임금(舜)은 동이(東夷)이다. 창의(昌意)는 [황제헌원씨]의 아들인데, 바로 창의(昌意)로부터 7세가 순(舜)이다.’

정리하자면, 황제헌원씨 - 창의(昌意) - 7대 후손 순임금, 즉 황제헌원씨의 8대 후손이 순임금이며 황제헌원씨와 순임금이 동이(東夷)이고 그 사이에 등장하는 소호금천씨, 전욱고양씨, 제곡고신씨, 요임금이 모두 황제헌원씨의 자손이니 결론적으로 중국인들이 떠받드는 [삼황오제]는 모두 동이(배달민족)라는 결론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기』에서 리동이국(黎東夷國)에 관한 기사에 ‘황제헌원씨(軒轅)는 소전(少典)의 아들’이라는 기록과 ‘구리(九黎)에 천자 치우(天子 蚩尤)가 있었다’는

주 4) 배달의 어원은 ‘밝달’이며 빛산(山)을 뜻함. 빛산은 황금 혹은 철을 머금고 있는 빛나는 ‘붉은 산’이며 알타이 산맥의 부르향산(불함산)을 의미함. 요동과 만주 일대에 赤山, 紅山이라는 지명이 많음. 우리 민족은 한동안 바이칼 호수 일대에 거주.



기록을 보면 모든 것이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저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전(少典)이란 이름이 아니라 관직명이다. 지금의 도지사나 군수 같은 지방관이니, 그를 파견한 나라는 바로 한국(큰 나라)이다. 다시 말해서 중원에서 거대 중국이 생기기 전의 큰 나라가 바로 큰 나라라는 의미의 ‘배달한국’이다.

## 7. 중화민족주의 태동

쉽게 표현해서 주특기는 유목, 병과가 기마병인 우리 배달국 조상들은 점차 화하족(한족)에 밀리기 시작했다. 한족과 우리 민족은 인종부터 다르다. 그들은 같은 동양인이지만 지나족이며 언어적으로는 인도유럽어에 가깝다. 쉽게 말해서 영어를 비롯한 서양어와 어순이 같은데, 이는 대단한 민족문화적 차이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쥬신족은 생활습관을 비롯하여 온돌문화로 상징되는 주거문화와 문화적 바탕이 한족과 너무 이질적이었다.

게다가 쥬신(동이)민족들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사상을 가지고 있어 땅의 족속인 화하족(한족)을 천시하면서 추수 때만 되면 어김없이 세금을 받아갔다.

배달나라 쥬신족으로부터 청동기문화를 전수받은 한족들은 본격적인 농경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어 비약적인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고 이것이 사회 각 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전반적인 산업육성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농경문화는 집단적 근거를 가능케 하여 마을과 도시가 생겨나고 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인구는 바로 국세(國勢)이니 차츰 그들의 발언권이 세어지다가 은혜를 저버리고 쥬신족에 대항하여 투쟁하기 시작했다. 산동반도와 요동에서 서서히 민족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때가 대충 단군왕검 시대이다.

쥬신민족이 한족의 무장투쟁에 밀리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철기기마군단이지만 우선 병력수에서 차이가 난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에도 총인구가 345만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쥬신민족은 옛조선(고조선)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천지를 찾아 동쪽으로 이동하고, 한편으로는 한반도로 남하하여 소수의 남방계 토착민을 정복하고 융합시켰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영역을 넓히다 보니 만주와 요동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원 고향은 어디일까?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바이칼 호수 일대라 추정하고 있다. 알타이 산맥에서 이동한 북몽골에 속하는 먼 옛 조상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였고 조금 더 가까운 조상이 요동과 만주 일대 그리고 한반도까지 내려왔으며 반도로 남하한 조상들은 목축에서 농업으로 주특기를 바꾸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반도에 다른 선주민이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한반도에 살던 남방계를 북방계가 그들을 압도하고 통합한 것이다. 이것은 남방계의 고인돌과 북방계의 적석묘, 그리고 석관묘의 분포로 쉽게 알 수 있으며 여러 고고인류학자들은 “중국과 한국은 문화인류사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중국의 동북공정은 현 중국의 영역 내로 억지로 꿰어 맞추기식의 허무맹랑한 논리인 것이다.

게다가 한족들은 한자(漢字)라는 기록매체가 있어 모든 것을 유리한 쪽으로 몰아붙일 수 있었다. 즉 동아시아의 저널리즘을 독점할 수 있어 사물의 가치기준을 한족중심으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배타적인 의제설정권(Agenda setting power)을 가진 그들은 우리 민족을 자민족 중심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북쪽 오랑캐는 ‘북적’이라 하고 요동과 만주 한반도는 ‘동이’, 서쪽 오랑캐는 ‘서융’, 그리고 남쪽 오랑캐는 남만이라 불렀으니, 중국식 표현대로 동이와 북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민족이 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

## 8. 고전적 중화주의

최근에 들어와 동북공정은 이전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우리 국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이러한 호기를 틈타 한국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책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자(箕子)가 옛조선(고조선)에 들어가 교화시켰으니 마땅히 중국에 속한 하나의 지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우리 사학계에서는 기자(箕子)는 한족이 조작한 전설적 인물이라며 기자조선을 부정하고 있고, 중국은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기자는 그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비록 전설적 인물일 가능성이 높지만) 은 왕조(殷王朝) 말기의 석학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은나라가 과연 중국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중국이 먼저 박물관에 있어야 할 옛 이야기를 근거로 우리에게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코자 함이다.

중화주의 시각으로 쓴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殷曰夷周曰華(은왕이주왕화)’

이 구절은 ‘은나라는 동이의 나라이고 주나라는 화하족의 나라, 즉 자신들의 한족의 나라’라는 뜻이다. 그런데 은나라는 역사적으로 입증되는 중국 최초의 왕조이며 청동기 국가였다. 기원전 1600년~1000년간 존속하였으나 주나라 문왕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왕 때는 은나라 주왕을 폭군으로 몰아붙여 왕조를 교체하였다.

그렇다면 주나라 군주는 원래 은나라에 신하였으나 혁명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했다는 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가 과연 누구에게 신하로 복속했었는지 말이다. 중국 한족은 배달나라 통치를 제외하고도 무려 600여 년 이상 은나라의 통치를 받고 신하로 복종하였으니 중국은 한국의 지방정권이며 중국사는 한국사의 일부라 주장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망해버린 나라의 석학이었던 기자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그는 존왕양이<sup>5)</sup>(尊王攘夷)를 국가이념으로 내세운 주나라에 붙어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자신을 오랑캐라 푸대접할 것이 뻔해 그래도 동쪽의 나라인 조선(옛조선)으로 건너간 것을 두고 그런 말을 한다는 논리구조가 이상하다.

이렇게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주인이 된 주나라는 통치상의 이유로 봉건제도를 도입하여 주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중심형성을 가져다주었다.

이 말은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天子)로서의 주나라 임금과 천자의 나라를 상국의 예로써 섬겨야 하는 제후로 이루어지는 중법질서를 뜻하며 이것이 바로 중화사상(中華思想)으로 발전하였다. 다시 말해서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고 하는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중국의 전통적 사상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처음 약 250여 년 동안은 주 왕조의 화북지배가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그 사이에 주나라의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면서 차츰 국력도 강해지면서 제후국들도 같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나라와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제후국들도 있었다.

여기에 은나라 이래로 중원을 노리는 북방민족들이 주나라 중기가 지나자 야금야금 주나라의 영역을 침범하더니 아예 주나라 관할지역 내에 버젓이 등지를 트니, 춘추전국 시대에는 방위에 따라 그들을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이라 불렀지만 동이와 북적은 구분이 가지 않는 동일한 민족코드를 가지고 있었다.

## 9. 중화주의의 완성

주나라 때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중법질서는 좀 애매모호했다.

한족(漢族)이라는 민족적 실체가 형성되는 기점은 일단 진(秦)나라로 봐야 한다. 중원이라는 소위 고대 중국인이 생각하는 그들의 영역은 너무 협소하여 대국으로서의 중

주 5) 존왕양이(尊王攘夷) : 위로 천자를 섬기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주나라 이래의 중법질서를 뜻하며 이것이 바로 중화사상(中華思想)의 바탕임.

화(中華),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중화를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 넓지도 않은 중원이 이른바 춘추5패(春秋五霸)의 각축장이 되었는데, 춘추5패(春秋五霸)란 제(齊)를 포함하여 진(晉)·초(楚)·오(吳)·월(越)을 일컫는 말이다. 더욱이 초(楚)와 오(吳), 월(越)은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저들의 표현대로 남쪽 오랑캐(南蠻)가 세운 나라이다.

사마천의 『사기(史記)』 「초세가(楚世家)」에 ‘(초나라 왕이) 나는 야만적인 오랑캐(蠻夷)이다. 따라서 중국의 호시(號誼)와 같을 수 없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만큼 당시에는 중화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했다는 말이다.

당시에는 주로 낙양-장안 등에 이르는 지역을 중원(中原), 즉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다. 즉 양쯔강 남쪽이나 황하 이북 지역은 중국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황하 이북은 우리 주신민족의 땅이었다.

이렇게 춘추전국시대에는 서북방에 위치하던 진나라나 양쯔강 유역에 있던 초나라 등을 제외한 황하 유역의 국가들을 중국이라고 불렀으며 북중국과 요동은 분명히 우리 영토였다.

아무튼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라는 무려 550여 년간의 혼란기를 통해 전국통일의 기운이 무르익게 되었고 결국은 진나라에 의해 통일이 되어 일단 중국민족의 1차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때가 중국인 형성의 중요한 기점이다.

그런데 시황제의 진나라는 태생 자체가 한족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다. 북방의 유목민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족들은 진나라의 통일을 중국의 통일로 보지 않았다. 『진기(秦記)』에 ‘진(秦)나라는 중국의 제후들의 회맹(會盟)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랑캐로 간주되었다’는 구절이 있다.

아무튼 진나라 때 이후 축조하기 시작한 만리장성(萬里長城)은 여러 면에서 중국인과 주변 민족들간의 경계가 되었는데, 동북공정의 주장대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면 고구려 영역 내로 만리장성이 통과해야 마땅하다.

『한서(漢書)』 「서역전(西域傳)」에 ‘진시황은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장성(長城)을 쌓아 중국의 경계로 삼았다’는 구절은 오늘날의 만리장성을 그대로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중국이라는 역사적 무대를 지정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므로 동북공정이 주장하는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 함은 분명한 논리적 모순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국 민족 통합은 한(漢)나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중국 당국의 종전의 역사관은 오로지 ‘한족’이 주도해야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황제의 진나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한나라에 의한 통일은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원적인 의미에서 보면 중국민족의 진정한 통합은 이 한나라 때부터라고 보면 된다.

한나라는 ‘한족에 의해 통일’로는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로서 무려 4백여 년 동안 안정을 이룩하고 ‘한족중심’의 찬란한 중국문화를 꽃피웠다. 이러한 한나라의 역사적 의미는 이전까지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해온 문화를 융합하여 중국 고전문화(古典文化)를 완성한 최초의 왕조이다.

한(漢)제국이 건설되고 중국인들이 한족(漢族)이라는 의식을 가진 것이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하자면 이전의 화하족(華夏族) 또는 제하(諸夏)라고 불리던 민족집단이 좀 더 큰 차원에서 단일적이며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즉, 한나라 이전에는 황하 이남이나 장안의 동쪽, 장강의 북쪽 등 작은 지역을 중원(中原)이라고 하여 중국의 본류라고 생각했지만 오랑캐로 생각되던 진나라가 통일하자 생각이 바뀐 것이다.

비록 시황제 자신은 한족들에게 오랑캐라 배척을 당했지만 역설적으로 현대 중국의 관광산업 육성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현대 중국이 시황제가 남긴 여산능의 병마총과 만리장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한몫을 단단히 챙기고 있다.

시황제는 이러한 관광산업 외에도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한족(漢族)에게 지대한 업적을 세웠다.

첫째, 춘추전국이라는 복잡한 중국의 정치상황을 하나의 나라로 교통정리함으로써 통합의 모델이 되었다.

둘째, 최초로 중국이라는 영역을 물리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비로소 중국인이라는 민족적 실체가 서서히 태동하였다.

여기서 한족(漢族)의 탄생과 더불어 중화사상(中華思想)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종전의 존왕양이 사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버전 자체가 다르다. ‘한족에 의한 천하의 지배질서’를 이론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나라 때는 가의(賈誼 : BC 200~168)와 동중서(董仲舒 : BC 179~104)라는 이론가가 등장하여 중화사상을 오로지 한족 중심의 배타적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놓았으며 그들의 이론을 한 무제(漢武帝)가 강력한 국력(國力)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중화사상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의 영역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위·촉·오 삼국시대에는 주신민족의 영역이었던 황하 중·상류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어난 국가도 지칭하게 되었으며 당나라 이후 중국이라는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대 팽창하였다.

## 10. 끝수 중화주의

이번에는 그동안 우리 민족이 가위놀린 중화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중화사상은 기존 개념으로는 오로지 한족이 천명(天命)을 받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고유의 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체계는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이미 존왕양이의 주나라 때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당시 주나라의 영역이 워낙 협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강대국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중화사상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천명사상은 맹자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고 이론화됨으로써 후일 한나라가 중화사상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데, 『논어(論語)』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오랑캐들에게 임금이 있는 것은 제하(諸夏) 여러 나라에 임금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

여기서 제하(諸夏)는 한족을 뜻하며 유신민족을 경멸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여기에 요즘 말로 맹자가 악성 리플을 달았다.

“중국사람[夏]이 오랑캐[夷]를 변화(교화)시켰다는 말을 들었어도 오랑캐가 중국인들을 변화시켰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맹자(孟子)』「滕文公篇」)”

여기에 사대주의자들이 부화뇌동의 소중화(小中華)를 표방하며 고구려와 발해의 후예들을 천한 오랑캐로 내몰고 적대시하다가 전쟁을 자초하였는데, 그 예가 거란과 몽골, 여진 그리고 후금(청)과의 싸움이다.

전한(前漢) 초기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정치가인 동중서(董仲舒)는 『춘추번로(春秋繁露)』에서 자가당착적 말을 하였다.

“하늘[天]은 우주의 주관자이다. 천명을 받아 한나라가 무도한 진나라를 벌한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 황제는 하늘의 뜻을 대리 수행하는 천자(天子)이다”

하지만 한 고조 유방은 말로만 통일을 했다. 실제 그는 흉노(유신의 선민족)의 모두루 대단군에게 엄청난 조공을 하고 평화를 구걸하였는데, 흉노는 모두루 대단군[모돈선우(冒頓單于, BC 209~174)] 시대가 전성기였다.

그는 알타이 주변 초원 지대 대부분을 하나로 묶어 동으로 한반도 북부, 북으로 바이칼호, 서로는 아랄 해, 남으로는 중국의 위수(渭水)와 티베트 고원 등에 이르렀다.

사실 한 고조 유방이 중국을 통일할 당시, 흉노(유신의 선민족)는 한나라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었다. 전국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초(楚)·오(吳)·월(越)을 비롯한 남방 이민족이 중국의 질서 속으로 들어왔고, 서쪽 변방의 진(秦)이 중국을 통일하자 중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문화권’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오(吳)·월(越)보다 가까이 있던 북방민족(유신족 계열)들은 ‘오랑캐’로 배척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기마유목민족 특유의 생활방식과 강한 기질이 농경 문화권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스스로 중국에 편입되지 않았다.

남방의 이민족(남만)들은 중원을 동경하고 선진문화를 부러워하면서 자신들도 그곳에 속하고자 하였으나, 북방민족들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중화편입을 거부하는 그들을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경계의 눈으로 보았고 통일제국이 형성되자 중국과 북방 민족이라는 대립적 구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항우를 물리치고 통일 한제국을 세운 고조 유방의 입장에서 북방민족들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여서 농경사회의 대표자격인 한나라와 북방민족과의 한판승부가 불가피했다. 고조는 북쪽 변방을 침범하는 모돈선우를 치기 위해서 출병했지만 강력한 철기기마군단의 대규모 남하와 유목민 최대 장점인 정보력의 싸움에 저서 패주하고 말았다. 눈엣가시를 빼려다 다래끼가 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조는 별 수 없이 그들과 강화를 맺고 매년 조공을 보내는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여기까지가 무제 이전까지 북방민족과의 관계이다.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신하라면 중국이 바로 우리 쥬신민족의 신하이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의 실질적 통일은 60여 년 뒤의 한 무제(재위 : BC 141~87)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무제는 중국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천하였으며 중화주의는 중국인에 의한 세계 통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통치의 일원성(一元性)을 천명하는 통치이념이 되었고, 여기에 다시 송나라의 성리학(性理學)이 추가되어 곧후 중화주의 단계로까지 발전하여 온갖 시련에도 한족은 민족적 실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치 유대민족의 시오니즘처럼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파고들어 덩달아 소중화를 자처하고 나섰다는데 있는데, 성리학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당나라 현종의 치세는 제국의 클라이막스이자 피날레였다. 안사의 난 이후 당나라는 정권안보를 위해 변방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무장출신의 절도사를 두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통제와 권한이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9세기 말에 시작된 농민반란, 즉 <황소의 난>을 계기로 중국대륙은 다시 5대 10국이 분립하는 혼란에 빠졌다.

주전충의 후량(後梁)을 비롯하여 북방민족이 세운 중원의 다섯 왕조(이를 5대라 함)는 서로 권력을 주고받는 형태였고, 당나라의 절도사 출신(한족)은 지방에서 10국을 세워 세력다툼을 벌였다. 이렇게 쥬신계열의 북방민족은 틈이 있을 때마다 중국을 철저히 유린했던 것이다.

결국 후주(後周)의 조광윤(趙匡胤)이 황제로 추대되어 송나라를 세웠는데, '문치(文治)'를 표방하는 바람에 국방의 위기를 가져와 거란 요나라의 침공을 받고 그들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가 하면, 금나라에게는 수도를 점령당해 나라가 망했으며, 이후 남송을 세워 명맥을 유지하지만 결국 원나라에 멸망했다.

원나라 조정은 한족들을 철저하게 푸대접하여 국가 공직에 나갈 수 없었다.

‘중화주의’라는 자아도취에 빠진 그들로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사람취 급도 하지 않았던 몽골이라는 오랑캐에게 종살이를 하다니 자존심이 상했다. 이때 한족의 의기소침에 용기를 주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성리학의 태동배경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을 조선의 통치이념으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기존의 중화사상은 천명을 받은 중국의 황제(한족 황제)를 중심으로 중화(中華)가 형성되고, 주변국은 중화와의 정치·문화적 군신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성리학이 주장하는 중화사상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주장한다.

천명을 받은 천자(반드시 한족)는 세상의 중심인 한족과 천제를 연결해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천자는 반드시 천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변 제후국을 문화로 감화시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별 국가 자치제의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모름지기 제후국들은 세계의 중심인 한족의 중국 황제를 섬기고 소중화(小中華)의 건설에 견마지로를 다함으로써 세상의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조선시대에는 사대주의, 소중화주의가 만연하고 그러한 사고방식은 모화사상(慕華思想)으로 이어졌다. 즉 또 하나의 중국이 되고자 한 것이다. 이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하는 민족의 뼈아픈 역사이다.

따라서 주변 나라들은 중국에 대한 조공여부를 떠나 원래 중국의 신하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불쌍한 오랑캐일 뿐이다. 비록 어찌다가 천한 것들이 세월을 잘 만나 중국을 지배한다 해도 그저 무도(無道)한 놈의 일시적 해프닝이다. 결국 중화는 승리한다. 한족의 입장에서 주변 민족은 그저 복종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일 뿐이다.

그런 중국이 이제는 은혜를 배풀어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중화(中華)의 문을 활짝 열고 오랑캐도 이제 중국인이라고 한다.

## 11. 골수중화주의와 삼국지 유감

필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동북공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삼국지를 연상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삼국지의 최대 피해국이기 때문인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삼국지 유감’이 아니라, ‘삼국지연의 유감’이다. 정사로서의 진수의 삼국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비록 완독은 하지 않았어도 한번쯤은 읽어 보았을 바로 그 책 말이다.

중국의 4대 기서(奇書) 가운데 첫 순위를 차지하는 대하 전쟁역사소설(戰爭歷史小說)인데, 시대적 무대는 농민들이 중심이 된 민중봉기(황건의 난)가 일어난 서기 184년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현대 중국에서는 황건의 난, 즉 머리에 누런 천을 쓴 비적이 난리를 쳤다는 뜻이 아닌 '황건기의(黃巾起義)'라는 표현을 쓴다. 단순히 그들을 도적이 아닌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혁명세력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원래 광무제 유수로부터 시작되는 후한(後漢)은 처음부터 중앙집권적 정부가 아니라 호족-왕실 연합정권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커버린 지방 호족들은 권력집단으로 성장하여 문벌귀족으로 발전해갔다.

후한 말 역시 전한(前漢)과 마찬가지로 연이은 어린 황제의 즉위는 태후를 비롯한 외척과 환관들이 세상물정을 모르는 황제를 둘러싸고 정치를 농락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친 침체를 가져왔으며 백성들은 수입 격감에 조정의 중과세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배고픔과 탐관오리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인심은 흉흉해지고 도적떼가 들끓어 비적화(匪賊化)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백성들로 하여금 '몽땅 다 바꿔버리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였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많은 반란 중에 특히 농민 반란은 국가의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동학혁명군이 봉기하자 조선 조정은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까지 끌어들이어 결사적으로 진압코자 한 것이다.

당시 중국민중의 눈에 황제라는 존재는 하늘의 위임을 받아 천하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타도의 대상일 뿐이며, 이를 대신하여 새로이 덕이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有道伐無道, 無德讓有德)는 상황논리는 진나라를 멸망으로 몰고 갔던 '진승·오광의 난'처럼 이번에는 후한 멸망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의외로 강적을 만난 후한의 외척들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 반란군 진압에 나섰으며 자체적인 방어능력이 없던 중앙정부는 각 지역에 황명으로 황건적 토벌을 위한 격문을 보내니 호족들은 그것을 구실로 군비를 강화하고 사병조직을 총동원하여 영지방어에 나섰다. 이때 유비도 관우와 장비와 도원의 결의를 맺고 의병을 조직하여 황건적 토벌에 나섰다.

자칭 대현양사(大賢良師) 장각이 죽자 황건의 난을 주도하던 지도자급들은 어느 정도 진압되었으나 혁명적 불길은 삼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방의 호족들이 엉뚱한 생각을 품게 되어 '대업(大業)'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

제후들은 십삼시의 난, 그리고 동탁의 집권을 계기로 천자를 능멸하는 역적을 친다는 명분으로 중원의 패권다툼을 하다가 최후의 승자 조조가 위왕에 오르고 서기 220년 그의 아들 조비(曹丕)가 헌제를 협박하여 선양을 받는 형식으로 황제 위에 오름으로써 기원전 202년부터 시작된 한나라는 문을 닫게 되었다.

한편 유비는 한조(漢朝)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손권과 연합하여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을 대파한 여세를 몰아 서천지방을 중심으로 촉(蜀)을 세우고 후한이 망한 후에 제위

에 올랐으며(221년), 손권(孫權)은 강남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호족들을 규합하여 유비와 함께 조조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여 오(吳)를 세우고 한조가 망하자 위와 촉한에 비해 뒤늦게 황제에 올랐다.(229년)

그런데 중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남송시대 이후부터 원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기간에 거꾸로 가는 역사서술을 하기 시작했다. 흔히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 한다. 하지만 실체도 불분명한 나관중의 『삼국지』는 그와 정반대라는 생각이 든다.

원래 삼국지(三國志)는 삼국시대의 촉(蜀)과 그리고 그 이후 서진(西晉) 조정에서 봉직한 진수(陳壽)가 삼국시대를 정리한 정사(正史)로서 위치·촉지·오지를 총 65권으로 정리한 것인데, 그는 삼국 가운데 유일하게 위치에 본기(本紀)를 넣어 역사서술을 했다. 다시 말해서 승리자인 조조의 위나라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역사서술인 것이다.

사마염이 위를 멸하고 오나라까지 병합하여 삼국을 통일하지만 중국은 다시 대혼란에 빠져든다. 이를 남북조시대라 한다. 이때 송나라(조광윤의 송나라가 아님)의 문제는 배송지에게 진수의 『삼국지』에 해설을 달라는 황명을 내리니 그는 본문보다 엄청나게 방대한 소설체 주석을 달았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은 주신계열의 북방민족이 북조국가들을 세워 한족의 남조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시간과 돈 밖에 없던 남조국가(송-제-양-동진)들은 『삼국지』의 주인공들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고 과장되며 엽기적 내용들을 모아 『세설신어』라는 야담집을 펴냈는데, 이는 배송지의 해설(삼국지주:三國志注)과 더불어 나관중의 조작적 『삼국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이야기꾼, 즉 설화인들이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풀이 죽어 의기소침한 한족들의 사기고양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한족의 사기충천까지는 좋은데 그에 비례하여 우리 민족의 풀이 죽어갔다는 데에 있었다.

왜냐하면 골수 중화주의의 무서운 음모가 『삼국지연의』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후의 승리자 조조의 위나라가 아닌, 유비의 촉한을 정통 중화로 보는 공정(工程)이 진행된 것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과장과 왜곡이 쌓여만 갔다. 제갈량이 화살 십만 개를 만들고 동남풍을 불게 하며 관운장의 혼령 때문에 여몽이 죽고 조조 역시 충격을 받아 죽게 된다.

1400년대 후반에는 『삼국지통속연의(三國志通俗演義)』가 간행되었고 이외에도 명나라 때는 수십 종의 『삼국지』가 쏟아져 나왔다.

모처럼 한족의 국가에 세워졌다. 주원장의 명나라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삼국지』의 보급에 국가차원으로 나섰다.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1328~1398)은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삼국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지긋지긋한 이민족



의 통치에 주눅이 든 한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 가운데 『삼국지』가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은 명에 대해서 사대주의를 표방하고 성리학(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는데, 설상가상으로 무분별한 『삼국지』의 수입과 보급에 조선은 완전 골수 사대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소위 한족 왕조 명나라의 축한공정에 한방 먹은 것이다. 이것도 어찌면 동북공정의 일환이 되겠다.

여기에 주원장의 아들 영락제는 중화주의를 확산시키는 도구로서 『삼국지』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였다. 변치 않은 의리의 화신 관우를 관제(關帝)로 추존하는가 하면, 환관 정화를 남방원정에 보내어 『삼국지』를 동아시아 전체에 퍼지게 하였다.

조정은 물론 민중들까지도 『삼국지』에 흠뻑 빠지고 말았다. 지금으로 따지면 의리의 ‘관(關)사마’, 지략의 ‘제갈(諸葛)사마’, 인덕의 ‘유(劉)사마’, 소위 한류열풍(漢流熱風)이 불어 사대사상이 모화사상(慕華思想)으로 발전하여 ‘관우 신격화 농간’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일개 외국의 장수에 불과한 관우의 사당이 전국 팔도에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국가차원의 제사까지 바쳤다. 임진·정유의 국난극복이 관우의 영험 덕분이니 국가적 차원의 사당을 세우라는 명나라 황제의 명에 따라 서울 한복판에 동묘를 세웠다. 전후복구도 바쁘는데 쓸데없이 예산과 국력을 낭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난극복과 전후복구에 여념이 없는 광해군을 마구 흔들었다. 명나라 황제의 세자 책봉이 없으니 폐세자해야 한다는 논의가 서인을 중심으로 일어나 현실외교를 하고 있는 광해임을 끌어내리고 환란을 불렀다(인조반정과 정묘·병자호란). 부모의 나라 명나라를 돕지 않고 후금(청)과 양다리 외교를 한다는 죄목을 씌워서 말이다. 관우의 의리 앞에 실리외교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뿌리 깊은 사대주의는 서민음악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이며 2003년 11월 7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 다섯 마당에 「적벽가」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중화주의적 사설이 말이다.

## 12.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면

고구려는 엄연한 자주 독립국가이다. 그러나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소수민족이 세운 변경지방정권이라면 중화(中華)는 한낱 허상에 지나지 않으며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얼마나 무능하면 지방정권을 치다가 중앙정부 수나라가 망했으며 당 태종의 집요한 대공세로도 고구려를 복속시키지 못했다.

우선 천자로서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은 통치이념부터 제대로 갖추고 물리력을 비롯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고구려가 중국의 책봉을 받은 지방정권이라면 대체 책봉을 한 당사자가 과연 한족의 국가였던가? 그리고 거란의 요나라(유신계열)가 후진(後晉)의 고조 석경당(石敬瑭)을 황제로 책봉한 사실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중국은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는 불과 36년의 일제 강점기도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번번이 우리 유신계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서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배했으므로 중국사이고 지배를 당했으므로 중국사라니 대체 이런 궤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고구려가 신하로 복속했으며 지방정권이라면 구태여 조공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될 것이다. 소름이 끼친다. 동북공정의 최종 목표가 바로 한 반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평양까지 만리장성이 통과했다고 역사조작을, 아니 아예 역사창작(歷史創作)을 하고 있다.

분명히 고구려는 독립국가였다. 그 증거를 대겠다.

한나라가 통일제국으로 증원을 차지하고 무제 이후에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옛 조선(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였지만, 요동과 만주, 그리고 한반도의 우리 민족은 한나라와 정면충돌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한족(漢族)이라는 민족 정체성은 동북아시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니 그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북방민족들과의 충돌이 많아진다. 즉, 민족적 갈등이 심화된 것인데 북방민족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중화를 거부하였다. 민족의 코드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주변민족들은 전혀 중화의 질서 내에 있다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사건건 내정문제(內政問題)에 간섭을 받게 되었는데, 가장 단적인 예는 한나라가 천손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유신민족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하는 오만함을 보인 것이다.

『예기(禮記)』에 천자는 하늘에 제사하고 제후는 사직에 제사한다(天子祭天地·諸侯祭社稷)고 하였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제후국이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 그런데도 고구려는 개국 이래 내내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천손(天孫)의 자긍심을 새겼다. 그것이 바로 <동맹>이다.

그리고 고구려는 자주독립국가의 상징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강대한 통일제국 수나라 문제가 생트집을 잡자 이를 응징하여 요서를 공격하여 수륙양면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중앙정권이 만만하고 무능하니 지방정권이 본국을 응징한 꼴이다.

그리고 고구려는 중국과 교역을 했지 신하이기 때문에 조공을 바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적극적 외교행위이다. 보통사람들이 집들이를 해도 화장지나 세제 등을 선물한다. 물론 자가당착과 자아도취에 빠진 한족의 입장에서는 조공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668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멸망하기까지 고구려는 무려 700여년이 넘게 장수한 나라이다. 평균수명 30~40년의 중원 왕조에게 뭐가 아쉽다고 조공을 하겠는가. 조공은 그야말로 약소국이 강대국에 보함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 부도가 나서 망할 것이 뻔한 회사에 보함을 든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고구려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나라였다. 왕망이 신(新)을 세우고 흉노를 치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은 벼슬을 내리며 군사를 내라 하였다. 늘 이런 식이다. 그러나 유리왕은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것은 분명히 신하된 자의 태도가 아니다.

왕망이 화가 나서 ‘높을 고(高)자, 고구려(高句麗) 좋아하네! 앞으로 너희 나라를 하구려(下句麗)라고 부르겠다’고 하자 고구려도 배짱 좋게 ‘정히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구려’라 응수하였다. 이때부터 중국 역사서에 고구려를 비하하는 하구려(下句麗)라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新)이 망하고 광무제 유수가 세운 후한이 중원에 등장하였다. 이때 고구려가 후한에 사신을 보냈다. 왕망 대신 외교협상의 대상자가 바뀌자 ‘하구려(下句麗)’라는 비칭을 좀 바꾸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 그걸 중국이 조공이라 우긴다.

고구려는 막강한 후한제국에 대해 결코 끌려가지 않는 당당한 외교자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후한의 영역을 침공하여 중원 깊숙이 어양, 상곡, 타이위안까지 쳐들어갔다. 이것은 분명 신하의 태도가 아니다.

삼국시대에는 위나라가 먼저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물론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질세라, 오나라의 손권도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요청하였다.

고구려는 기회를 보아 요동을 공략하는 적극적인 영토확장에 나섰으며 미천왕 때에는 서안평으로 진격하여 한족의 기세를 꺾어 버리고 313년에는 낙랑군까지 쥬신의 영역에서 퇴출시켰다. 이것은 지방정권이 행할 수 있는 태도는 분명 아니다. 그러므로 조공과 책봉은 외교적인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 Ⅲ. 맺 음 말

**민족의 방과제, 영원한 고구려. 지금이 역사복벌의 적기이다.**

강력했던 고구려는 신라에 대한 고압적인 외교로 당나라와의 야합을 자초하였다. 신

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벼랑 끝 전술로 내몬 것이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출발했고, 그 부여는 백제로 계승되다가 나당연합군의 침공으로 660년에 망하고 8년 후에는 고구려도 망했다.

그러나 정체성이 워낙 강한 유신민족은 당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나라가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세우자 676년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이 합심해서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다. 삼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을 때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원수처럼 싸웠지만, 민족전체에 위기가 닥치자 신라와 더불어 합심해서 싸웠다. 당시 당나라의 속셈은 신라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한반도로 들어와 백제에는 웅진도독부, 더욱이 동맹국 신라까지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여 한반도와 만주일대를 지배하고자 했다.

비록 평양성은 나당연합군에 항복하였지만 요동 11성을 중심으로 고구려 회복운동이 일어났는데, 696년 영주에서 일어난 이진충의 난은 더없는 호기였다. 당시 영주 땅은 한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신민족, 즉 고구려의 유민이 많이 살고 있었기에 당연히 한족에 대한 반발심이 컸다. 더욱이 영주에는 강제 이주된 고구려인 3만여 호가 살고 있었으며 대당 전쟁에 참가한 고구려 동북 지역 사람들도 포로나 노예로 잡혀 있었다.

고구려의 유장 대조영의 영도로 당나라에 대한 무장투쟁이 진행되었고 결국 독립을 쟁취한 발해국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선포하였다. 『속일본기』에는 발해왕이 스스로 고려국왕(高麗國王)이라고 칭한 기사가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유지한다(復高麗之舊居 有夫餘遺俗：續日本紀 권10)”

즉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명백하게 밝혔으며 일본에서도 그를 고려국왕으로 인정하였으니, ‘발해 = 고구려’라고 보는데 하등의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고구려와 발해의 정신은 면면히 이어졌다. 나라는 비록 망했어도 그 백성은 그대로 남아 만주 일대를 한족의 침탈로부터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중원으로 쳐 들어가 한족을 지배하고 내친 김에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래서 금나라와 청나라의 역사를 한국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축소지향적 역사인식 때문에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철저히 약소국으로 변질되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주몽」에 ‘다물’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삼국사기』에 고추모(高雛牟)가 북부여에서 일어나 해모수를 제사하여 일부 새로 편입된 영토를 ‘다물도(多勿都)’라 했다는 기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물’은 고구려어로는 ‘옛 땅을 되찾는다’는 의미다(麗語謂復古舊土).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토(舊土)’는 우리가 앞으로 되찾아야 할 땅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동북공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궤변인지, 그리고 현대중국의 신중화주의(新中華主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처음 고구려사 문제에서 시작된 역사논쟁이 우리의 안이한 대처 때문에 이제는 옛조선(고조선)과 부여, 발해,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역사를 잃어버린 불쌍한 민족이 한반도에 더부살이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중국이 도발한 역사전쟁은 이미 전방위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기왕 이렇게 된 이상, 동북공정에 대응한 역사북벌(歷史北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대명제가 되었다.



## K-1 전차는 과연 교량을 통과할 수 있나?

### 목 차

- I. 머리 말
- II. MLC의 이해
- III. MLC의 적용간 문제점 및 발전방향
- IV. 결 론



소령 문성호      대위 임덕기  
(육군공병학교 교관)

### I. 머리 말

토목공학의 역사는 곧, 인류 문명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정의할 때,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 토목기술은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즉, 전쟁이전에는 상대적인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중에는 신속한 기동력을 보장하기 위한 병참선의 확보를 위해, 그리고 전쟁이후에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전후복구를 위해 생존과 직결되는 화두였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외세로부터의 끊임없는 침탈의 대상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찬란한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토목기술의 수준은 이미 실증된 바 있어 수원화성 등 다수의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그 기술적 정교함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가장 처참했던 시기중 하나로 기억되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역시 전후복구와 조국 근대화의 선봉에 섰던 것도 토목사업이었으며, 나아가 이제 우리의 토목기술은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또한 최근의 평화유지활동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이

나 이라크 등에 파견된 우리나라 공병부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토목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선진화된 우리의 토목기술도 그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저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국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이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및 장비는 현행 도로법상 교량 통과가 불가능한 실정인데, 이는 총중량 약 51톤인 K-1전차는 국내의 어떠한 교량도 통과할 수 없다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예비 보급로 판단의 기초자료로서 수송사령부에서 발간하는 「수송제원집」, 전국의 교량 Database를 축적, 관리하는 지형정보단의 「병참선대장」 등을 포함한 우리 군의 많은 문서들이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은 간과한 채 발간·활용되고 있어, 군사작전간 교량 사용 문제로 해당 지자체와의 잦은 마찰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현행법상의 조항만을 거론하는 그들과의 논리싸움에서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이후, 총중량 40톤 이상 중차량에 대한 도로법상의 교량통과 제한 규정의 적용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미 2사단이 훈련지역(Area-1)으로의 접근을 위한 교량사용에 제한을 받자 주한미군이 SOFA 협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우리 국방부에 위 문제를 해결토록 요구한 바 있다. 또한, '02년 1월에는 미 2사단 전차가 문산의 “통일대교”를 통과하려 하였으나 이는 건교부 기준에 의거 국방부에서 통제하도록 위임된 바, 통일대교 대신 “전진교”를 이용하도록 통보되어 주한미군에서 전차의 교량통과 문제를 LPP(Land Partnership Program: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에 포함토록 육본에 요구, 결국 '02년 제181차 SOFA 합동위원회의 결과로서 **미군전차(MIA2, 63.7톤)에 대하여 한수이북 주요 교량에 대한 통과를 보장토록 합의된** 바 있다. 위의 사례는 모두 미 2사단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외교문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서, 미군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였으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상기 도로법의 조항을 적용받아야만 하는 실정이기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총중량 40톤 이상 차량 및 장비의 교량통과 제한 조항에 반하여 **“전차는 교량을 통과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교량의 구조해석에 관한 문제를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건교부를 상대로 한 향후 우리 군의 추진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교량설계관련 제반 법규를 포함하여 현행 미군 및 우리 군의 교리를 종합 검토하였으며, 본론은 2개의 절로 구분하여, II절에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차 등 군용 중차량의 교량통과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인 MLC(Military Load

Classification, 군용하중급수분류법)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하였고, III절에서는 MLC를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규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II. MLC의 이해

모든 교량은 그 종류 및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과 가능한 차량 또는 장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양호하게 시공된 교량이라면 병력이나 비교적 가벼운 차량의 통과는 가능하겠으나 모든 교량이 전차 등 중차량의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일한 교량에서 50톤의 차륜차량은 통과할 수 있으나 50톤의 궤도차량은 통과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즉, 교량은 그 종류, 형태, 시공의 신뢰도, 노후정도 등에 따라 통과시킬 수 있는 대상목적물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사용한다면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각각의 교량이 가지는 이러한 실제능력<sup>1)</sup>을 판단하는 것은 교량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 차량 및 교량을 대상으로 각 교량의 실제능력을 판단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비단 군사적인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토목공학자들에게도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교량이 가지는 실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말해서 교량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과 가능한 대상 목적물의 중량, 형태, 통과속도 등은 얼마까지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오래전부터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MLC는 이러한 연구 산물들 중 하나로서, 최초 미 공병단(USACE)에서 개발한 개념이며, '68년 개발 이후 현재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및 우리 군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량해석방법(교량의 실제능력(내하력)을 구하는 학문분야) 중 하나이다. 민간교량은 그 설계 및 시공을 위해 「도로교 설계기준」 및 「도로교 표준시방서」를 적용하고, 시공 후에는 「도로법 및 시행령」에 의거 사용 및 유지·관리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MLC라는 개념에 의거 그 사용방법을 이론으로 정립, 교리로서 활용하고 있다. MLC는 공병이 주도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교리로서, 공병 5대 기능 중 하나인 기동지원으로서의 도하장비, 조립교, 교량전차 등을 이용한 간격 극복, 일반공병지원으로서의 병참선 건설 및 유지 등의 분야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개념이며, 기동부대의 기동계획 수립간 적정한 기동로를 선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ML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 1) 가해지는 하중에 견디는(인내하는) 능력이라 하여 “교량의 내하력(耐荷力)”이라고 한다.

문 제 제 기

1. 교량통과여부는 차량의 “무게”로 결정할 수 있나?
2. MLC(Military Load Classification)란 무엇인가?
3. 민간교량의 설계기준은 무엇인가?
4. 민간교량의 “설계하중”의 의미는 무엇인가?
5. 민간교량의 설계/해석과 MLC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6. 정밀급수와 임시급수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7. 교량통과방법이란 무엇인가?

## II-1. 교량통과여부는 차량의 “무게”로 결정할 수 있나?

교량을 통과하고자 하는 대상목적물은 인원, 차량 및 장비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공학적으로는 “차륜차량” 및 “궤도차량”만을 고려한다. “차륜차량”의 경우 타이어와 교량의 상부가 닿는 부분에서 집중하중이 가해지며, “궤도차량”의 경우 궤도의 접지면적에서 등분포하중이 가해지게 된다. 반면, “무게”라는 개념은 단위면적당 가해지는 힘으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무게가 1톤이라는 표현은 1톤의 구(축구공과 같은)가 교량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교량상의 한 점에 1톤의 힘이 가해지는 집중하중을 의미한다. 그러나 차륜차량이 교량을 통과하는 것은 각각 다른 무게를 가지는 여러 개의 축구공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교량을 통과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일정한 접지면적을 가지는 궤도차량의 경우 교량상에서의 거동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같은 크기인 1톤의 하중을 교량에 재하하는 경우 1개의 구를 굴리는 것과 2축 이상의 타이어의 조합으로 구성된 차륜차량이 통과하는 것, 그리고 일정한 접지면적을 유지하며 통과하는 궤도차량의 경우 각각 교량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같은 차륜차량의 경우에서도 차축이 2개인 경우와 3개인 경우, 각 차축의 하중이 서로 상이한 경우, 교량을 통과하는 속도가 상이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교량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교량은 무게 50톤까지 통과가 가능하다”는 식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차륜차량인지 궤도차량인지, 각각의 타이어에 걸리는 하중은 얼마이며 타이어간 간격은 얼마인지, 통과속도는 얼마인지 등에 따라 교량의 통과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량의 유지관리 상태가 완벽하다고 가정하여도 차량의 교량통과 여부는

단순히 “무게”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서, 대상목적물의 종류, 형태, 총중량 및 차축의 수, 축간거리, 타이어 개수, 접지면적(궤도차량의 경우), 통과속도 등에 따라 통과 가능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 II - 2. MLC(Military Load Classification)란 무엇인가?

차량이 교량을 통과함에 있어 해당차량이 교량에 가하는 능력과 교량이 버틸 수 있는 최대 능력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면 통과가 불가하고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차량의 총중량, 즉 “무게”만으로는 차량이 교량에 가하는 능력을 대표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차량 및 교량의 능력들을 나타내며 상호 비교가 가능한 새로운 수치적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급수(Class)”로 정의하게 되었다. 급수는 무게(총중량)의 개념에 축하중, 축간거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단위가 없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차량이 교량에 가하는 능력은 차량급수(Vehicle Class)로, 교량이 가지는 최대 능력은 교량급수(Bridge Class)로 수치화함으로써 차량급수와 교량급수를 비교하여 교량통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차량급수가 50이라는 말은 무게가 50톤임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해당차량이 특정교량에 50이라는 규모의 하중을 재하한다는 의미이고, 교량급수가 50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형태의 차량이든 “차량급수가 50 이하”라면 해당 교량을 통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LC란, 위와 같이 차량과 교량의 급수(Class)를 각각 계산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차량의 교량통과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개념으로, 그 정의는 문헌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LC(Military Load Classification)란 군용하중급수분류법으로서, 교량을 통과하고자 하는 차량 또는 장비의 급수(차량급수)와 해당교량의 급수(교량급수)를 계산하여 비교함으로써, 교량통과 가능성을 판단하고 통과방법<sup>2)</sup>(정상·주의·위험통과)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군용하중급수분류법에 의거 산출된 수치인 군용하중급수(차량급수 및 교량급수)도 MLC로 표시한다.

주 2) 통과방법(정상·주의·위험통과)에 대한 설명은 13쪽 II - 7을 참조할 것.



### II-3. 민간교량의 설계관련 법규문서

MLC를 이해함에 있어 민간교량의 설계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교량의 경우, 교량은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도로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하는 선행조건이 존재하므로 도로와 관련된 법규인 도로법의 범주에서 시공·구축하게 되며, 실무에서는 공학적 준수사항인 **도로교 설계기준** 및 **도로교 표준시방서**를 상위규준으로 하여 이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하위규준을 적용하고 있다.

구분	법 규 명	개정	비 고
법 률	도로법(제5914호)	1999	• 도로관련 최상위법
대 통 령	도로법 시행령	1999	• ‘차량의 운행제한’ 조항 명시 <sup>3)</sup>
	도로구조령(폐지) 도로구조령(폐지)	1965 1979	• D하중, DB하중 및 차선하중 적용(설계기준자동차) • DB하중 및 차선하중 적용(설계기준자동차)
건 교 부 령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폐지)	1990	• 설계기준자동차의 구체적 제원 명시 • 교량설계관련 개정 특이사항 없음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sup>4)</sup>	1999	
건교부 기 준	도로교 설계기준	2005	• 지간 200m 이하 교량의 설계기준 • 교량설계의 대부분이 포함됨
	도로교 표준시방서	2000	• 교량의 시공기준

### II-4. 설 계 하 중

교량설계시 고려하는 하중을 설계하중이라 하며, 교량자체의 고정하중(dead load)과

- 주 3)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3항(차량의 운행제한)에 의거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등은 도로 및 교량상의 운행을 제한받고 있다. 전차의 경우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므로 이 조항에 의해 교량통과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 4) 1965년 대통령령인 「도로구조령」이 제정된 이후 '79년에 1차 개정되었고, '90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꾸어 대폭 개정되었으며, '99년 개정이 보다 용이한 건설교통부령으로 변경하면서 현재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었다.

교량 위를 통과하는 차량의 활하중(live load), 그리고 충격하중(impact load), 풍하중(wind load), 지진하중(seismic load) 등이 있으나, 가교지점의 여러 조건과 구조에 따라 적절한 하중 및 하중의 조합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고정하중이란 구조물 자체의 중량을 말하며, 활하중이란 구조물이 완공된 후 그 위에 작용하는 하중이나 작용력을 말한다.

### 가. 도로교의 고정하중

도로교의 고정하중을 산출할 때에는 아래의 단위중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 료	단위중량(kg/m <sup>3</sup> )	재 료	단위중량(kg/m <sup>3</sup> )
강 재	7,850	콘크리트	2,350
주 철	7,250	시멘트 모르타르	2,150
알 미 늬	2,800	목 재	800
철근콘크리트	2,500	역청재(방수용)	1,100
PS 콘크리트	2,500	아스팔트 포장	2,300

(건교부 2005, 도로교 설계기준 6쪽)

### 나. 도로교의 활하중

단위 :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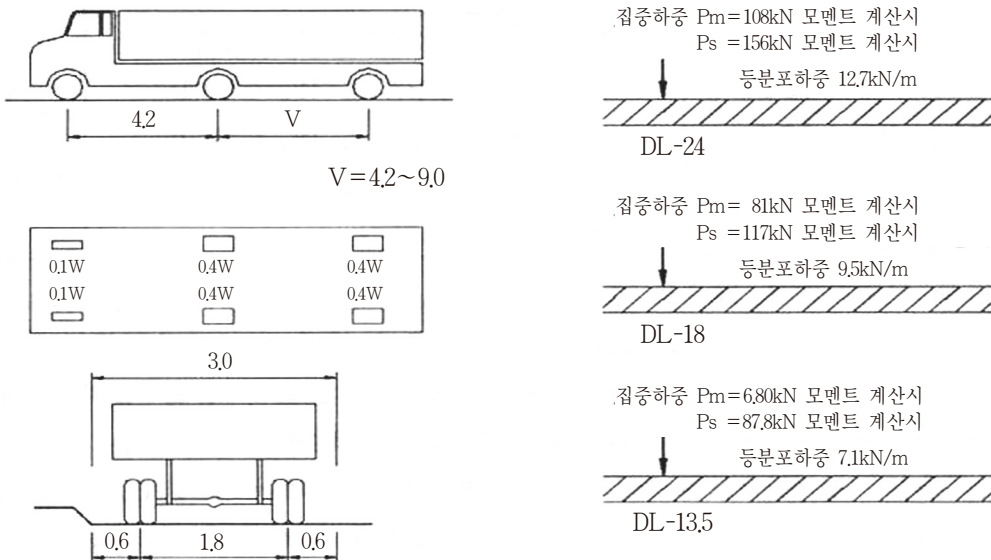


그림 1 : DB 및 DL하중(건교부 2005, 도로교 설계기준 7쪽)

도로교의 활하중은 자동차하중, 즉 표준트럭하중(DB하중) 또는 차로하중(DL하중), 보도 등의 등분포하중 및 궤도의 차량하중으로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DB하중은 그림 1과 같이 3축으로 구성된 설계기준자동차(semi-trailer)<sup>5)</sup> 1대를 의미하며, DL하중은 등분포하중과 집중하중으로 구성된 자동차군을 뜻한다. 또한 보도 등에는  $5 \times 10^{-3}$  MPa의 등분포하중을 재하하며, 궤도에는 궤도의 차량하중과 DB 또는 DL하중 가운데 설계부재에 가장 불리한 응력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재하한다.(건교부 2005, 도로교 설계기준 6-9쪽)

#### 다. DB하중의 적용

교량의 설계하중은 아래와 같이 교량등급에 따라 적용하는 DB하중이 상이하며, 이러한 DB하중은 교량설계의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놓은 설계기준자동차의 재원을 이용하여 교량을 설계하는데 적용된다.

교량등급	하중등급	중 량 W(kN) <sup>6)</sup>	총 하 중 1.8W(kN)	전륜하중 0.1W(kN)	후륜하중 0.4W(kN)
1등급교	DB-24	240	432	24	96
2등급교	DB-18	180	324	18	72
3등급교	DB-13.5	135	243	13.5	54

(건교부 2005, 도로교 설계기준 7쪽)

## II-5. 민간교량의 설계/해석과 MLC와의 차이점

MLC에서의 교량의 급수계산을 위한 해석적인 방법은 본질적으로 교량설계순서의 역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량설계는 요구되는 설계하중 또는 소요급수에 대하여 교량상·하부의 구조형식과 부재의 배치 및 치수를 결정하지만, 교량의 급수계산은 교량의

주 5) 설계기준자동차라 함은 도로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건교부 1999,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3항)를 말하며, 폭, 높이, 길이, 축간거리, 앞·뒤 내민 길이, 최소회전반경 등이 미리 정해진 가상의 차량을 말한다.

6) 기교 5(6)-312 군용교량 구축 및 관리 1-25쪽에는 하중의 단위를 MKS계 단위인 tonf(1 short ton(tonf)=2,000lbf)로 표기하였으나, 2005년 개정된 도로교 설계기준상의 모든 하중 단위는 SI계 단위인 N(newton, 1kN=102kgf=225lbf)을 사용하고 있다.

부재 치수, 사용재료, 공법 등이 이미 주어진 기존 교량의 내하력으로서의 급수를 산정하는 것이다(육군사관학교 1986, 군사구조물 7쪽). 보다 구체적인 비교는 아래와 같다.

구 분	군용하중급수분류법(MLC)	민간교량의 설계/해석
근 거	NATO협약(STANAG 2010/2021)	도로교 설계기준
대상교량	표준 고정교 및 부교	지간 200m 이하의 도로교
단 위	없 음	톤 또는 kN
설계기준 차량	16가지 표준가상차량(차륜/궤도차량)	3가지 설계기준자동차(차륜차량)
설계하중	고정하중, 활하중, 충격하중 등(가장 큰 수치 사용)	
Software	없 음	MIDAS 등 다수의 상용프로그램
내하력 산 출	교량의 제원 이용, 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한 급수 산출	설계하중을 교량 위에 재하(시뮬레이션)한 후, 변형을 측정하여 결정
결과의 표 시	급수번호를 차량 및 교량에 표시	교명판에 설계하중 표시
차 량 분 류	표준가상차량에 대해 미리 급수분류	자체하중 및 적재하중을 자동차 검사증에 기록
통 과 방 법	정상·주의·위험통과	도로의 종류별 설계속도와 일일계획교통량 지정 ※ 주의 및 위험통과관련 조항 없음
통 과 제 한	“차량급수>교량급수”시 정상통과 불가	차량의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시 통과불가

## II-6. 정밀급수와 임시급수의 차이점

MLC는 단위가 없는 수치로서 정수로만 표기하며 차량급수와 교량급수로 나뉜다. 또한 차량급수와 교량급수는 그 계산방법에 따라 각각 정밀급수와 임시급수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차량급수

차량급수는 총중량 3톤 이하인 차량이나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트레일러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각 차량이 교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차량의 총중량, 축간 간격, 축간 하중분포, 교량 통과속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차량의 급수분류를 간략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군용차량의 제원과 특성을 바탕으로 급수 4에서 150까지의 16개의 급수로 분류한 “표준가상차량”이 미리 설정되어 있으며, 각 급수는 급수와 동일한 중량을 갖는 가상궤도차량과 각 급수보다 큰 중량을 갖는 가상차륜차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가상차량의 급수는 해석적인 방법에 의해 산출된 정밀급수이므로 즉각 활용이 가능하며, 표준가상차량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차량(민간차량 또는 노획한 적의 차량 등)은 METT+TC를 고려하여 정밀급수 또는 임시급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 차량의 정밀급수

차량의 정밀급수는 지간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단순보<sup>7)</sup>에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휨모멘트와 최대전단력을 계산하여 표준가상차량의 경우와 비교 및 보간하여 해당 차량의 급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치므로 보다 세부적인 설명 및 예문은 기교 5(6) - 312 군용교량 구축 및 관리('05. 4) 2-13~2-36쪽을 참조한다.

### 2) 차량의 임시급수

미리 정해진 16가지 형태의 차륜 및 궤도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정밀급수가 기 계산되어 즉각 활용이 가능하나, 비표준차량 및 장비 혹은 적으로부터 노획한 차량 등은 그 계산이 복잡하여 야전에서 즉각 활용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시급수가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차륜차량은 총중량의 85%를 차량급수로 사용하며 궤도차량은 차량의 총중량을 차량급수로 사용한다. 이는 실험치에 의한 결과로서 가상차륜차량의 급수는 차량 총중량의 약 85%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차륜차량의 하중이 길이방향으로 길게 분포되기 때문이다.<sup>8)</sup>

$$\begin{aligned} \text{임시급수(차륜차량)} &= 85\% \times W_T (W_T : \text{총중량}) \\ \text{임시급수(궤도차량)} &= 100\% \times W_T (W_T : \text{총중량}) \end{aligned}$$

주 7) 교량 등의 구조물은 보, 기둥, 슬라브 등의 주요 부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보는 단순보와 연속보로 나눌 수 있다. 단순보는 교량의 해석을 위한 구조계산시 그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보의 한 지점은 지반에 견고히 지지되어 있고 다른 한 지점은 로울러 위에 안착되어 수평방향으로의 변형에 적응하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대부분의 교량은 단경간의 단순보, 또는 다경간의 단순보 혹은 연속보의 구조형태를 가지며, 연속보의 해석은 특정 변수를 추가 고려하여 단순보의 해석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8) 육군사관학교 1986, “군사구조물” 2쪽.



이 경우, 궤도차량의 총중량을 알지 못할 경우 궤도차량의 단위면적당 중량을  $0.975\text{kg}/\text{cm}^2$ 로 가정하고 궤도의 접지면적을 사용하여  $W_T$ 를 구할 수 있다.

$$W_T = \frac{A_T W_T}{900}$$

여기서,  $W_T$  : 궤도차량의 총중량(Ton)

$A_T$  : 궤도의 전체 접지면적( $\text{cm}^2$ )

$w_T$  : 단위접지면적당 궤도차량 중량( $\text{kg}/\text{cm}^2$ )

#### 예제) 궤도차량의 임시급수

차량급수가 미분류된 궤도차량의 궤도의 전체 접지면적이  $3.6\text{m}^2(36,000\text{cm}^2)$ 인 경우 임시급수를 구하여라.

풀이) 차량 총중량을 구하면,

단위 면적당 궤도차량의 중량이  $0.975\text{kg}/\text{cm}^2$ 이므로,

$$\text{총중량} = \frac{3.6 \times 10^4 \times 0.975}{900} = 39(\text{Tons})$$

$\therefore$  차량 임시급수 =  $100\% \times W_T = 1 \times 39 = 39$

따라서 급수 미분류 궤도차량의 임시급수는 39로 부여한다.

#### 나. 교량급수

교량급수는 교량의 상가여격과 노폭 제한을 고려한 교량의 내하력으로서 차륜차량과 궤도차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교량급수가 30을 초과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차륜차량과 궤도차량에 대하여 각각 급수를 분류할 수 있다. 교량급수도 정밀급수와 임시급수로 나눌 수 있다.

##### 1) 교량의 정밀급수

교량은 그 구조와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차량급수분류를 위한 표준가상차량과 같은 표준화된 급수분류는 없으며, 정밀급수의 계산은 교량의 구조적,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수를 판단한다.

- 교량 제원 측정/확보
  - ※ 설계자료, 외형치수의 측정, 노후도 및 손상정도, 파손상태 등
- 휨모멘트에 의한 급수 산출

- 전단력에 의한 급수 산출
- 차도폭에 의한 급수 보정
- 상판에 의한 급수 보정
- 최종급수 결정
  - ※ 위의 급수중 가장 작은 수치를 최종급수로 산정

## 2) 교량의 임시급수

교량의 임시급수 계산은 급수분류에 대한 여건이 미비하거나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 잠정적으로 간단한 해석절차에 따라 교량급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정밀급수계산을 위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작전지역 등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급수의 해석적인 계산절차대신 도표를 이용하도록 한 방법이다. 이는 교량의 외형치수에 토대를 두고 잠정적인 급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나, 아쉽게도 우리 군의 현 교리상 교량의 임시급수를 산정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미군 교리상의 임시급수 산정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미군 교리상 교량의 임시급수 산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설계하중을 알고 있는 경우 : 상관관계를 이용한 방법(Correlation Method)

일반 도로교의 내하력이나 설계하중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이를 MLC로 환산하는 상관곡선도표를 이용하면 설계하중으로부터 교량의 임시급수를 결정할 수 있다. 임시급수의 계산과정은 먼저, 그림 2에서와 같이 표준가상차량의 설계하중(미국의 경우 H15, H20, HS15, HS20을 설계하중으로 사용함)과 활하중 모멘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해당 교량의 시간에 작용하는 활하중 모멘트를 구하고, 이를 다시 MLC와 활하중 모멘트의 상관곡선(그림 3)에 대입하여 최종 급수를 산정하게 된다.

### ② 설계하중을 모르는 경우 : 교량정찰카드(GTA 5-7-13)를 이용한 방법

야전에서 즉각 적용가능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미군은 교량정찰카드(GTA : Graphic Training Aids)를 제작, 활용하고 있다. 교량정찰카드는 교량 형태별로 조금씩은 상이하나 크게 교량의 제원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과 임시급수의 계산을 위한 부분, 그리고 최종 급수를 판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4는 여러 가지의 교량 형태 중 아스팔트 포장인 철근콘크리트 T-beam 교량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카드 혹은 정찰보고서를 이용하여 교량의 외부 형태 및 제원을 정찰한 후,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 지면상에서 일련의 계산절차를 따르면 목표 교량의 임시급수를 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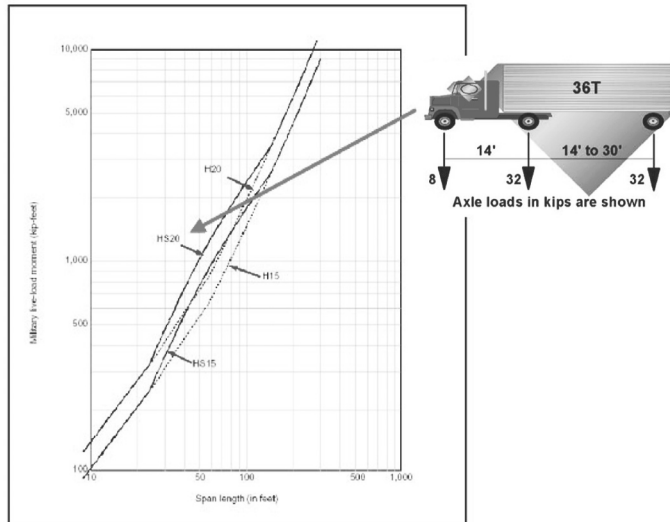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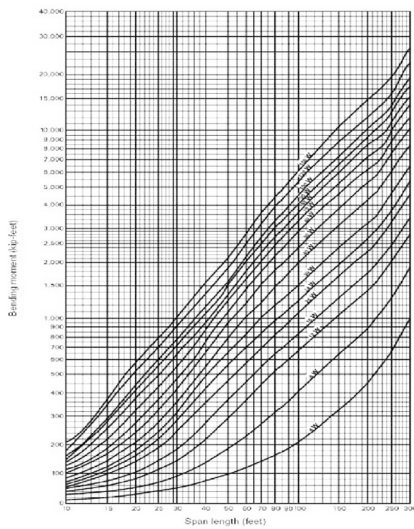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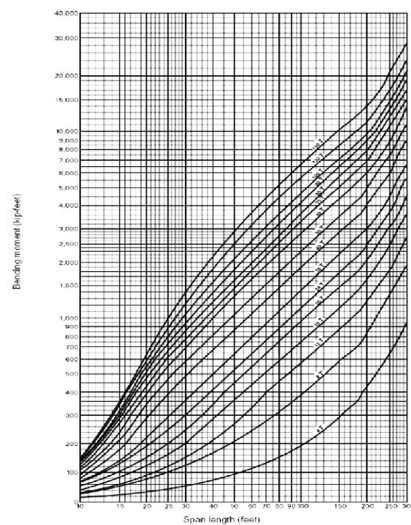


그림 2 : 표준가상차량의 설계하중과 활하중 모멘트의 상관곡선



(A) 차륜차량



(B) 궤도차량

그림 3 : 활하중 모멘트와 균용하중급수의 상관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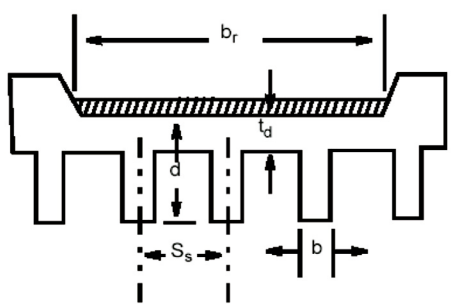
Map sheet Recon officer/NCO	Grid Unit	Date		
<b>Bridge dimensions</b>				
$L$ _____ ft				
$b_r$ _____ ft				
$t_d$ _____ in (Do not include the wearing surface.)				
$N_s$ _____				
$S_s$ _____ in				
				
<b>Stringer dimensions</b>				
$b$ _____ in				
$d$ _____ in				
<b>Procedure</b>				
1. $m$ _____ $0.0116(S_s)(d^2)$	6. $M_{LL1}$ _____ $(N_1)m_{LL}$			
2. $m_{DL}$ _____ $0.00013 L^2[(b)(d) + (t_d)(S_s)]$	7. $M_{LL2}$ _____ (smaller of $N_1$ or $N_2$ ) $m_{LL}$			
3. $m_{LL}$ _____ $\frac{m - m_{DL}}{1.15}$	8. Moment classification (Table 4, page 12): $T_1$ _____ $T_2$ _____ $W_1$ _____ $W_2$ _____			
4. $N_1$ _____ $\frac{60}{S_s} + 1$	9. Width classification (Table 1, page 2): $T_1$ _____ $T_2$ _____ $W_1$ _____ $W_2$ _____			
5. $N_2$ _____ $0.375N_s$ ; calculate only if $b_r \geq 18$ ft				
10. <b>Final classification:</b>				
Moment (Step 8)	$T_1$	$T_2$	$W_1$	$W_2$
Width (Step 9)				
<b>Final</b>				

그림 4 : 교량정찰카드(GTA 5-7-13)

## II-7. 교량 통과 방법

모든 교량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과 및 교량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량 위를 통과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통제가 필요하다. MLC에서는 표준고정교 및

부교를 대상으로 차량간의 간격 및 속도, 교량상의 통과 위치 등을 사전에 규정하였는데, 이를 **교량통과방법**이라 한다. 교량통과방법에는 **정상통과**, **주의통과**, **위험통과**가 있으며, 그 적용범위 및 제한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통과방법	급 수	간 격	속 도	위 치	기 타 제 한	
정 상	교량급수 표지판에 표기된 급수	30m (100ft)	40km/h (25mph)	차선 내	없 음	
특 별	주의	1.25×정상 1방향 급수	50m (150ft)	13km/h (8mph)	교 량 중심선	정지/가속/제동 금지
	위험	비표준교량 : 통과 금지 <sup>9)</sup>	교량상 1 대	5km/h (3mph)	교 량 중심선	정지/가속/제동 금지 각 차량 통과후 기술자 점검

### Ⅲ. MLC의 적용간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MLC는 기 설치된 교량에 대하여 군용차량의 교량통과 가능성을 판단하고 통과방법(정상·주의·위험통과)을 결정하여 지휘관으로 하여금 건전하고 적시 적절한 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언하는 기동지원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 교리를 야전에 적용함에 있어 제도적인 문제점이 상존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야전에서 MLC를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법규적 측면에서 검토, 기술하였다.

#### Ⅲ-1. 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본 차량의 운행제한 조항 (도로법 54조 및 시행령 28조 3항)

교량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인류 최초

주 9) 야교 34-7 일반공병지원('04. 6) 4-25쪽에는 “교량의 내하력<차량급수(25~50% 이내 차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근거가 미흡하여 본 지에서는 기교 5(6)-312 군용교량 구축 및 관리('05. 4)와 미 기교 5-312 Military Fixed Bridges(Dec, '68)상의 내용으로 기록 하였다.



의 네트워크 기술의 구현체이며, 최근 발전하고 있는 교량기술은 과거의 경제적 관점을 벗어나 안전성, 편리성의 가치 지향적인 면에서 모든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접합시켜 새로운 모습의 교량을 만들어 내고 있다.<sup>10)</sup> 그러나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교량은 하천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적보다 먼저 선점하여야 할 고가치 표적으로서 사전에 확보된 교량의 제원 및 특성을 바탕으로 통과가능한 군용 차량 및 장비의 중량을 판단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기동부대의 신속한 교량통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물이며, 필요시 적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괴 및 거부되어야 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교량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설계하중 등 교량설계의 부분보다는 도로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적용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조항(도로법 시행령 28조 3항) 등에서의 같이 교량해석의 결과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군에서는 II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독자적으로 군용차량 및 장비의 교량통과 가능성을 판단하고 통과방법(교량 위를 통과하는 차량 및 장비의 속도, 간격, 차선당 통과차량의 수 등)을 결정하는 교량해석방법 즉 MLC를 발전시켜 왔으며, 우리 군에서도 미군의 영향으로 과거부터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국내의 모든 교량은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도로의 기능을 만족시켜야 하는 선행조건이 존재하므로 평시에는 도로와 관련된 법규인 도로법의 범주에서 시공·유지관리되며, 특히 표 1에서와 같이 도로법 제54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 3항(차량의 운행제한)에 의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및 장비는 도로 및 교량상의 운행에 제한을 받고 있다.

표 1.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

구 분	길 이	너 비	높 이	중 량	
				총 중 량	축 하 중
제한기준	16.7m	2.5m	4.0m	40톤	10톤

(출처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3, 차량의 운행제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K-1 전차의 경우, 총중량은 약 51톤(연합작전시 고려해야 할 미군 전차의 경우 총중량은 약 63.7톤)으로서 DB-24(총중량 43.2톤)로 설계되고 도로법을 근거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1등교를 포함한 국내의 모든 교량에서 이론적·법적으로 통행이 일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차를 포함한

주 10) 박수영 외, 2005, “미래의 교량기술”, 대한토목학회지 Vol. 53, No. 11, p.202.

우리 군이 보유한 중장비들은 현대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장비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평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하는 군의 주어진 임무를 고려할 때, 도로법상 명시된 이러한 운행제한 조항은 우리 군의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Ⅲ-2. 중차량 통과와 관련된 연구 결과

총중량 51톤의 전차가 DB하중으로 설계된 국내의 1등교 혹은 2·3등교 교량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행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서, 현행 법규상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의 운행제한 조항은 군용차량은 물론 민간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동안 군 및 민간부문에서 연구하였던 여러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음 몇 가지의 연구결과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위의 “운행제한 조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축하중이 10톤인 차량이 한 대 지나가면 승용차 약 7만대, 15톤 차량의 경우에는 승용차 약 39만대가 지나간 것과 같아 과적차량의 운행에 의해 도로포장과 교량 등의 수명이 단축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미국 AASHTO<sup>11)</sup>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결과를 적용하여 법제화함에 있어서는 도로 또는 교량의 구조적인 안전성과 운행제한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익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은 국가 SOC 시설물의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적용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조항은 서로 상이하며, 특히 벨기에는 총중량을 44톤, 영국과 네덜란드는 50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의 시험결과를 제시한 미국의 경우에도 중차량 통과에 대한 교통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2차선 이상을 사용하여 통과할 경우 활하중의 횡분배 계수가 감소되고, 교량의 형식 및 통과 차량의 횡방향 차륜간격에 따라 25~45%의 추가 내하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sup>12)</sup> 다시 말해서, 도로법상 차량의 운행제한 조항은 차선당 통과하는 차량의 총중량과 축하중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2차선 이상을 사용하여 1대씩 통과할 경우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도 교

주 11) 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12)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 1995, “교량 통과 하중 결정 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p.39.

美 AASHTO 시험결과

- “축하중”의 증가에 따라 포장에 미치는 영향
  - 영향도 = (실제통과차량 축하중/기준차량 축하중)<sup>4.2</sup>  
= (화물차 정량적재/승용차)<sup>4.2</sup>
  - 축하중 10톤인 경우 승용차 환산 대수 = (10톤/0.7톤)<sup>4.2</sup> = 70,890대
- 과적 차량에 의한 포장 파손도(축하중 15톤의 경우)
  - 파손도 = (축하중 15톤/축하중 10톤)<sup>4.2</sup> = (15/10)<sup>4.2</sup> = 5.5배



교량에 미치는 하중효과

- “축하중” 10톤 차량 1대의 통행 = 일반 승용차 약 7만대
- “축하중” 15톤 차량 1대의 통행 = 일반 승용차 약 39만대
  - ☞ 차량의 “축하중”이 중요한 고려요소임  
(차량의 총중량과 궤도차량의 등분포하중은 미고려)

량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인 우리나라의 운행제한 조항은 위 법이 제정된 1980년대 상황에는 부합된 규정일 수 있으나, 그 후 국내 도로 및 교량의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차량도 중량화되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재 해석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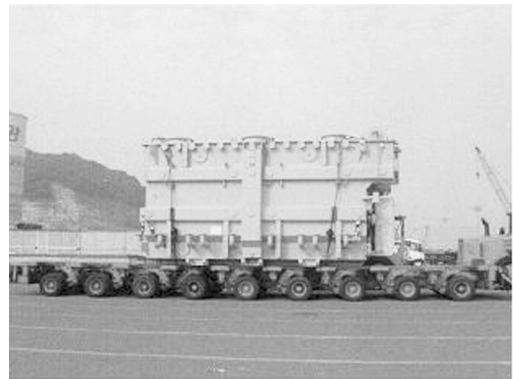


그림 5. 대형 트레일러에 적재된 건설기계들

또 다른 사례로서, 국내의 물류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중기를 포함한 대형 건설기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도로법에는 표 1에서 제시한 운행제한 기준 초과시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운행토록 되어 있다(도로법 제54조 1, 2항). 이때 운행을 희망하는 경로상의 모든 교량에 대하여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당 수천만원의 용역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회사인 대한통운(주)에서 마산시에 제출하기 위하여 용역의뢰한 몇 건의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에 의하면 **총중량 300톤 이상의 대형 트레일러(그림 5)가 DB-18(총중량 32.4톤)의 설계하중을 갖는 2등교 교량을 통과하는데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음이 판명되었다.**<sup>13)</sup>

이러한 운행허가신청 및 허가행위가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국적으로는 아주 많은 수의 교량에서 운행제한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행 도로법상 명시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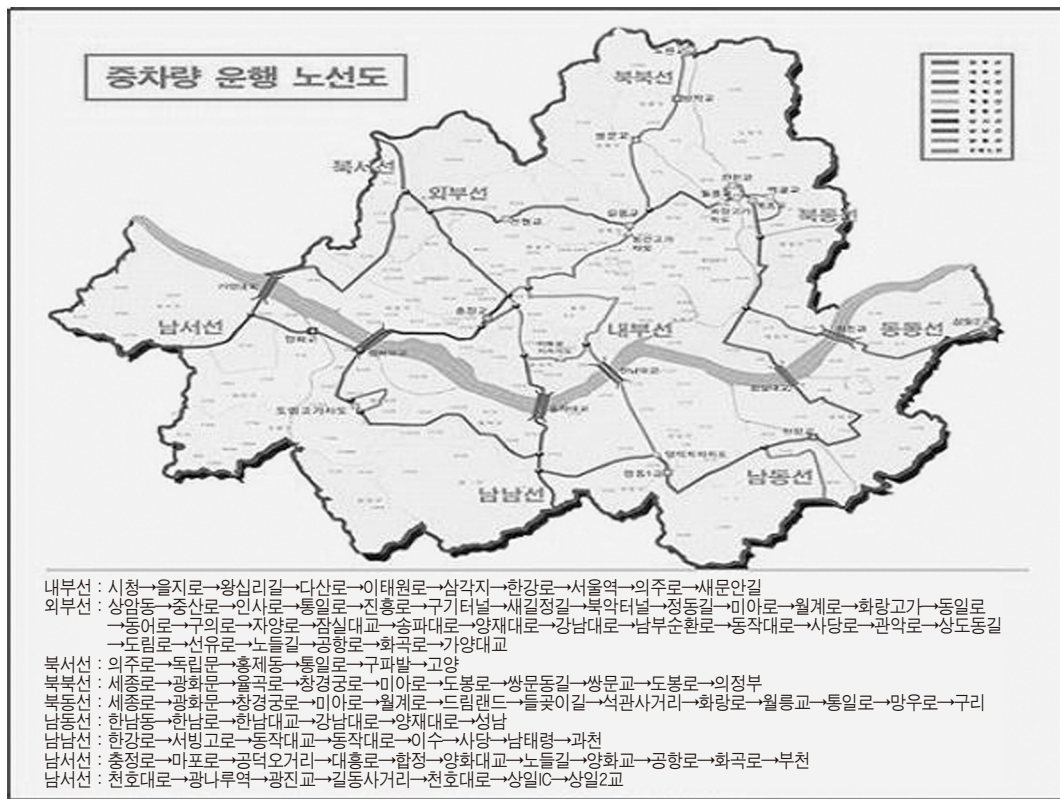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차량 운행노선도

주 13) 대한통운(주)에서 (주)해송엔지니어링과 (주)연엔지니어링에 용역의뢰한 “적현BOX 구조물의 통과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보고서(2003. 9)” 및 “신촌BOX 외 1개 구조물의 통과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고서(2003. 5)”에 의하면, DB-18(32.4톤)으로 설계된 BOX 형 암거식 교량인 적현교와 신촌교를 대상으로 각각 316톤과 307톤의 총중량을 갖는 트레일러의 교량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한통운(주)은 이를 근거로 마산시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았다.

이라는 운행제한 조항상의 수치가 현 시대의 물류시스템을 고려할 때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물론, 이러한 특별차량에 대한 운행허가제도는 도로 및 교량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기본전제 하에서 경제적 효율성까지도 배려한 특수한 경우로서 경제적인 손익문제보다는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중시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운행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인 손해를 고려해 볼 때 과연 이 제도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300톤 이상의 중차량이 통과가 가능한 교량에도 일률적으로 40톤의 중량제한 조항을 적용한 후,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사용자가 입증토록 하는 현행 도로법상 조항이야말로 국가 SOC 시설물에 대한 비효율적 관리를 단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000년도 이후 대형 건설기계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상기 불합리한 법률 조항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는 관할 지역 내 교량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정밀 내하력 평가를 실시한 후 대형 건설기계의 통과가 가능한 **중차량 운행노선 9개소를 지정·운용**하고 있으며(그림 6), 금년부터는 15개 노선이 추가 운용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도 **중차량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노선을 지정**하는 등 도로법상의 무분별한 운행제한 조항에 대한 검토 및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sup>14)</sup>

마지막으로 언급할 연구 결과는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경기 북부지역 시설물에 대한 특수차량 통과 안전성 평가 및 통과지침서 연구」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모두 교량의 설계하중으로서 집중하중을 갖는 DB하중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본 연구는 **경기 북부지역 주요 국도상의 84개 교량을 대상으로 하여, 전차를 포함한 군용 중차량의 통과 가능성 판단을 목적으로 실시한 내하력 평가결과**이며, DB하중(집중하중)과 궤도하중(등분포하중) 모두를 고려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로서 본 연구의 서술 목적에 부합된 자료라 판단된다. 표 2는 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서, 설계하중 43.2톤인 DB-24의 1등급 60개소 중 57개소(95%), DB-18(32.4톤)의 2등급 16개소 중 15개소(93.8%), DB-13.5(24.3톤)의 3등급의 경우 8개소 전 교량(100%)에서 전차의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통과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 4개소의 교량 중 2개소는 1975년에 준공되어 공용연수가 30년 이상 경과한 교량으로서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등 노후화가 심하고 나머지 2개소는 1992년에 준공되었으나 교각두부에 휨 및 전단균열이 심하게 발생되어 교각에 대한

주 14) 관련근거 : 서울시장방침('03. 12. 1), 인천광역시 고시 2004-111호, 건설교통부지시 도로환경과 제1279호



보강공사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교량이었다. 결과적으로 총중량 51톤인 전차의 교량 통과 여부는 설계하중의 종류, 다시 말해서 교량의 등급만을 고려해서는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이보다는 설계 및 시공의 신뢰도와 평시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에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경기북부 주요 교량에 대한 내하력 평가 결과

구분	관련청	대상 교량	평 가 결 과 (개 소)		
			통 과 가 능	보강후 통과가능	통 과 불 가
국도	건설 교통부	84개소	75		
			5		
			4		
			설계 하중	DB-24 : 54 DB-18 : 13 DB-13.5 : 8	DB-24 : 3 DB-18 : 2 DB-13.5 : 없음

### Ⅲ-3. 차량의 운행제한 조항의 본질적인 문제점

위에서 예시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현 도로법상의 차량의 운행제한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안전율이 과다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5년 5월 3일 대한토목학회에서 주관한 제1회 정책토론회<sup>15)</sup>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더욱 강력해진 건설기술자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규정 때문에 설계자는 경제적이고 창의적인 설계보다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려 하고 이는 시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추가하여, 43.2톤의 DB-24를 설계하중으로 시공된 교량에 대해 유지관리 및 운영상의 목적으로 총중량을 다시 40톤으로까지 제한하여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량의 설계·시공·유지관리의 각 단계마다 안전율이 누적 적용되어 결과적으로는 교량이 보유한 능력에 비해 훨씬 비경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 및 제원에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설계기준자동차

주 15) “건설기술자의 처벌규정 :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대한토목학회지 Vol.53, No.5, pp.11~50).



는 1965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도로구조령에서 처음으로 그 제원이 명시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결과, 현재는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 3)에 그 제원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집중하중을 갖는 차륜차량하므로 K-1전차와 같이 등분포하중을 갖는 궤도차량에 대해서는 교량해석간 추가적인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도로법상 차량의 운행제한 조항은, 이러한 변수들은 고려치 않고 **단순하게 차륜차량의 총중량과 축하중만을 고려하여 모든 교량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셋째, **제 법규간의 내용상 일관되지 않은 조항이 모순을 낳고 있다.** 설계기술자들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도로교 설계기준(2005)상에는 고려해야 할 설계하중 중 활하중으로서 DB하중, DL하중, 그리고 보도 등의 등분포하중 및 궤도의 차량하중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전차 등과 같은 궤도차량의 통과를 예상하여 교량을 설계토록 명시되어 있다.**<sup>16)</sup> 총중량 51톤인 전차의 교량통과 여부는 위에서 예시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DB하중만을 설계하중으로서 판단해서는 큰 오차를 낳을 수 있으며, 교량이 시공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어 왔느냐가 더욱 중요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도로법상 차량의 운행제한 조항 역시 이에 부합되도록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마땅하나, 명지대 박영석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 법규 및 기준의 제정/개정 주체의 분권화<sup>17)</sup>에 따른 협조체계상의 문제로 도로법은 아직도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Ⅲ-4. 발전 방향

1950년대 전후복구의 시기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지금, 교량의 구조 및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교량을 사용하는 물류의 요구는 교량의 발전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 SOC 시설물로서의 교량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를 고려한 보다 발전되고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총중량 51톤인 전차의 교량 통과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로법상 차량의 운행제한 조항의 문제점을 언급

주 16) 건교부, 2005, “도로교 설계기준”, pp.6~9.

17) 2005년 3월 19일(토), 대한토목학회 중회의실에서 실시된 “설계기준과 산업 및 기술의 동반 발전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언급된 내용임(대한토목학회지 Vol.53, No.3, pp.25~49).

하였다. 따라서 현행 도로법상 위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발전 방향으로서 저자는 다음의 네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교량의 설계·시공·유지관리간 누적되어 적용되는 안전율을 고려할 때 **교량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안전율의 적용은 각종 오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그 양적인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는 경제성 및 효율성을 바탕으로 신중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는 교량이 시공된 이후 일괄적으로 도로법상 차량의 운행제한 조항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교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량이 시공된 후 정밀 내하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교량별로 각각 상이한 내하력을 기준으로 운행제한 톤수를 교명판에 추가 명시하여 통제하는 등 각각의 교량이 가지는 상이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내하력 평가의 주체는 특정시점에서 해당 교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아니라 교량을 직접 관리하는 건설교통부 및 도로관리청 등 국가 기관이어야 하며, **준공단계에서의 내하력 평가는 발주시 예산에 포함시키고, 그 이후 교량의 지속적인 사용에 따른 요망 내하력의 유지 여부는 관할 기관에서 일정한 주기를 정해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시스템의 전환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예산의 투입 증대를 가져올 것이나, 대형 건설기계의 교량 통과시 지역별, 교량별로 신청하는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작성에 따르는 사용자의 추가비용은 절감될 것이고, 이는 물류비용의 절약, 원가 절약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교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량의 설계간 궤도의 차량하중을 고려토록 도로교 설계기준에 명시된 바, **평시 군사훈련이 예상되는 군사지역내 주요 교량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교량의 위치선정 단계에서부터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군부대의 훈련은 훈련목적상 대부분 그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부대별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교량의 수와 위치도 지역별로 제한되어 있다. **K-1 전차의 통과를 고려하여 설계되고 철저한 내하력 평가를 실시한 교량의 Database는 군의 작전계획 수립간에도 중요하게 쓰일 자료이며, 이러한 Database가 구축되어 군에 제공된다면 무분별하게 교량을 통과하는 전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민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증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전차의 교량통과 문제로 군과 해당 지자체가 갈등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부대별, 지역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교량 Database 구축 및 보수공사간 협조 등이 보다 긴밀하게 유지되어야만 하겠다.

셋째, **현존하는 교량에 대한 군용 중차량의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야 한다. 200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발간된 교량현황조사에 의하면, 국내의 전체 교량 22,159개소 중 1995년 이후에 준공된 교량은 겨우 53.3%인 11,808개소이고 국내 교량의 46.7%는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sup>18)</sup>이며, 따라서 각 교량별 정밀 내하력 평가가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 중차량 운행제도 및 임시운행 허가노선 지정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대형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극히 부분적인 제도적 시행일 뿐 군용 중차량의 통행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으며, 전국의 교량에 대한 내하력 평가 결과는 아직 Database의 구축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군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교량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및 도로관리청에서 현존하는 관할 교량에 대해 자기 예산을 투입하여 Case by Case식 내하력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Database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중차량 운행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군을 포함한 수요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맞는 적절한 운행경로를 지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내 SOC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표 3<sup>19)</sup>에서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SOC 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의 신설만큼이나 기존에 구축된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주요 선진국과의 인프라 격차

구 분	도로 (km/km <sup>2</sup> )	철도 (km/km <sup>2</sup> )	공 항 (천명)	해운/항만 (10점)	발전량 (Gwh/천명)
한 국	0.88(22위)	0.031(20위)	34,331(8위)	6.07(28위)	7.21
미 국	0.65(28위)	0.024(25위)	663,338(1위)	8.29(10위)	13.5
일 본	3.07(4위)	0.053(17위)	109,123(2위)	6.75(22위)	8.7
독 일	1.77(8위)	0.103(6위)	58,661(5위)	8.53(6위)	6.8
영 국	1.62(12위)	0.068(11위)	70,436(3위)	6.73(23위)	6.6
프랑스	1.62(12위)	0.059(14위)	51,883(6위)	7.72(15위)	8.9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2004)

주 18) 박기태, “전국 교량 현황 분석”, 대한토목학회지 Vol.53, No.5, pp.129~134.

19) 이승우, 2005, “국내 SOC 시설물 스톡 및 빅 프로젝트(Big Project) 창출”, 대한토목학회지, Vol.53, No.8, p.156).

넷째, 조금은 다른 시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은 바야흐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부문으로의 토목기술과 관련된 R&D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우리의 토목기술은 세계화의 기반을 닦으려 노력하면서 어느덧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초일류강대국임을 자처하는 미국의 경우, 토목공학은 민간부문은 물론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도 철저히 발전해 왔으며 그 엄청난 파급효과를 알기에 지금도 많은 연구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순수한 Civil Engineering으로서의 개념을 초월한 군사용 GPS의 출현은 이라크의 후세인을 마치 쥐잡듯 무력화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이익실현의 수단이 되었으나, 이에 반해 이라크는 후세인 독재시기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던 또 다른 문제들로 아파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주요 기동로상의 파괴된 교량의 피해정도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신속한 구조해석을 통한 보수소요 판단 및 복구작업으로 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다시 Database화하여 차후작전에 활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모든 연구노력의 결과는 전쟁을 통한 군사작전에서 비롯되었으나 GPS의 등장은 관련 과학기술분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수작업의 규모를 신속하게 판단·조치하는 시스템(Tele-Engineering System)은 재해·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국가 SOC 시설물 관리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서 외국의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의 DB하중을 자국의 HS하중의 함수로 규명하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도로상의 교량에 대한 Database를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sup>20)</sup>, 앞서 소개한 교량해석방법 중 하나인 MLC를 발전시켜 지금은 NATO 회원국의 표준으로 적용토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국가 기반기술의 중심에 서있는 토목공학의 경우, 우리 군 내부에도 많은 토목공학도들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연구개발의 많은 노력이 주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미래의 Needs에 대응하는 사회 기반기술 분야의 과제와 미래기술의 발전방향을 언급한 여러 연구결과에서 공공성·융합성·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로 21세기 통일시대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목공학의 기술적인 세부 영역이나 그 경계는 이미 허물어지고 제 기술의 컨버전스만이 살 길이라고들 한다.<sup>21)</sup> 그러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통일시대를 대비한 토목분야 미래 기술의 발전방향과 그 세부적인 연구결과는 아직도 미흡하기만 하며, 진정한 우리나라의 미래기술의 발전은 군사분야와의 공공성 및 융합성을 전제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는 MLC를 보다 심층깊게 연구하여 미국과 NATO의 신

주 20) US Army Corps of Engineers, 1995, "Analyses of Republic of Korea Expressway Bridges".

21) 고현무, "미래사회의 사회기반기술", 대한토목학회지 Vol.53, No.12, pp.206~214.

교리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지 검증하고, 외국의 하중체계에 대한 연구도 박차를 가해 연합작전 및 평화유지활동간 국가별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러나 우리의 단위체계나 교량해석방법과는 다른 산물로서의 외국 Database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미군의 Tele-Engineering System과 같은 체계의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및 조직구성을 강화하는 등 군사적인 측면으로의 R&D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IV.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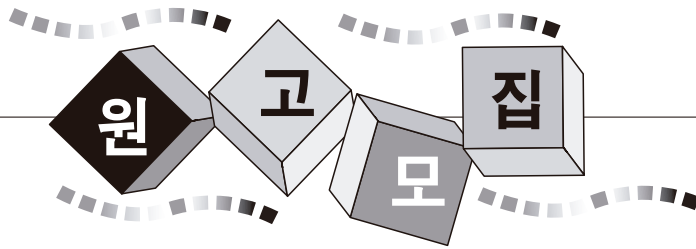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총중량 51톤의 군용 중차량인 전차가 현행법상 국내 교량의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국내·외의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의 현 도로법상 차량의 운행제한 조항을 임의의 교량을 통과하는 K-1 전차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그 원인으로서는 도로교 설계기준과 도로법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였고 마지막에는 안전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국가 SOC 시설물로서의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상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선진국에 비해 국가 SOC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존의 SOC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SOC의 증설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접근은 비단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뿐 아니라 민간분야 토목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짐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1. 건설교통부(1996). “교량관리체계개선(2단계) 중차량 통과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교통부(2000).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대한토목학회.
3. 건설교통부(2004). “경기 북부지역 시설물에 대한 특수차량 통과 안전성 평가 및 통과 지침서 연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4. 건설교통부(2005). “도로교 설계기준”. 한국도로교통협회.
5. 고현무(2005). “미래사회의 사회기반기술”. 대한토목학회지 Vol.53, No.12, pp.206~214.
6. 박기태(2005). “전국 교량 현황 분석”. 대한토목학회지 Vol.53, No.5, pp.129~134.
7. 박수영 외(2005). “미래의 교량기술”. 대한토목학회지 Vol. 53, No.11, pp.202~211.
8. 서울특별시(2003). “중차량 통행 노선 및 시스템 개발”.
9. 서울특별시(2006). “중차량 노선 추가 개발 최종보고서(안)”.
10. 육군사관학교(1986). “군사 구조물”.
11.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1995). “교량 통과 하중 결정 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2. 이승우(2005). “국내 SOC 시설물 스톡 및 빅 프로젝트(Big Project) 창출”. 대한토목학회지, Vol.53, No.8, pp.152~158.
13. 이평수(1998). “방호공학”.
14. (주)연엔지니어링(2003). “신촌 BOX 외 1개 구조물의 통과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고서”.
15. (주)해송엔지니어링(2003). “적현 BOX 구조물의 통과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보고서”.
16. 창원시. “운행제한차량 통행”. 핸드북.
17. US Army Corps of Engineers(1995). “Analyses of Republic of Korea Expressway Bridges”.





『군사연구』는 육군에 근무하는 전 영관급 이상 장교들의 군사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군사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연구논문 투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 **투고대상** : 현역/예비역장교(영관급 이상), 군사전문가, 대학교수/언론인
- **원고내용** : 군사와 관련된 제 분야
- **제출기간** : 연중 전반기 접수(연 1회 12월 종합발간)
- **투고요령**
  - A4 10~20매(200자 원고지 50~100매) 및 내용수록 디스켓 1매
  - 한글전용(중요 낱말에만 한자, 영자 명시)
  - 보안성 검토결과 1부
  - 약력, 사진 1매(2×3cm), 은행 계좌번호(필자명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명시
- **원 고 료** : 투고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 **보 낼 곳** : 우편번호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2호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연구과
- **연 락 처** : (군) 960-3633 (일반) 02) 505-3633  
042) 550-3633

※ 본 지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별도 주기가 없는 한 집필자의 견해 또는 연구조사 결과이며, 육군정책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

---

軍 事 研 究  
(第122輯)

2006년 12월 21일 인쇄  
2006년 12월 26일 발행

편집 : 군 사 연 구 소  
발행 : 육 군 본 부  
인쇄 : 육 군 인쇄 창(06111179)

---

---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1337번으로!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  
국 군 기 무 사 령 부